

# 남북대화 제31호

(1982. 12 ~ 1983. 3)

# < 목 차 >

|  |    |
|--|----|
| 제1부 통일대화의 활로를 열기 위한 지속적 노력 .....             | 3  |
| 1. 전두환대통령,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 개최 재촉구 .....     | 3  |
| 2. 국토통일원장관, 「남북한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 제의 ..... | 10 |
| 3. 각계의 반응 .....                              | 14 |
| 4. 북한측의 반응 .....                             | 26 |
| 제2부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비원과 재회추진 운동 .....             | 29 |
| 1. 「1천만 이산가족재회 추진위원회」 발족 .....               | 29 |

## 제1부 통일대화의 활로를 열기 위한 지속적 노력

### 1. 전두환대통령,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 개최 재촉

전두환대통령은 1983년 1월 18일 제115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새해 국정연설을 통하여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의 필요성을 재천명하고, 동회담에서 협의·해결하여야 할 4개항의 긴요한 당면과제를 제시하면서 북한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거듭 촉구하였다.

전두환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을 통해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이 실현되면 거기에서

—남북한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하며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함으로써 통일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제무대에서 남북한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민족역량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강구하고

—나아가서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여건을 조성하는데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고 확신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북한측에 대하여 이의 조속한 개최에 동의할 것을 촉구하였다.

전두환대통령은 특히 통일문제를 『우리 겨레가 겪고 있는 불행과 고통을 헤쳐나가는 절박한 현실문제인 동시에 겨레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민족의 장래 문제』라고 규정하고 『우리가 만일 가까운 장래에 통일을 향한 민족의 진로를 확고히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은 또다시 세계무대의 변두리로 밀려나 국제정치의 희생물이 되고 과거와 같은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면서 『그러한 치욕의 역사를 우리 후손들이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필코 우리 세대 안에 조국통일의 역사적 과업을 우리 손으로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전두환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실천적인 통일노력을 상기시키면서 남북한 쌍방이 『통일방안을 둘러싸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문제해결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간의 긴장과 대립을 조장하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아무리 좋은 통일방안을 제시한다 해도 말로만 통일을 주장하면서 통일을 위한 대화를 거부한다면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극히 부자연스러운 남북한 관계를 청산하고 역사의 소명과 민족의 여망에 따라 대화와 접촉의 문을 과감히 열어 놓기 위하여 하루속히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전두환대통령의 국정연설 가운데 통일대화 분야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국이 해방된 지 38년째를 맞는 지금 우리는 여전히 남북분단과 군사적 대치 속에서 통일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격동과 혼돈이 지배하는 세계사의 전환점에서 우리가 내외의 도전과 시련을 헤치고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는 길은 무엇보다도 안으로 평화통일을 향한 우리의 자주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밖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민족의 권익을 계속 늘려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지난 1세기 동안 겪어야 했던 국권상실과 국토분단의 뼈아픈 수난을 완전히 극복하고, 또 그러한 치욕의 역사를 우리 후손들이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필코 우리 세대 안에 조국통일의 역사적 과업을 우리 손으로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가까운 장래에 통일을 향한 민족의 진로를 확고히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은 또 다시 세계무대의 변두리로 밀려나 국제정치적 희생물이 되고 과거와 같은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우리 겨레가 겪고 있는 불행과 고통을 헤쳐나가는 절박한 현실문제인 동시에 겨레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민족의 장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통일의 기반과 원동력은 남북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남북이 진정으로 민족의 이익을 우선시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면 사상과 제도의 장벽을 과감히 뛰어넘어 조건없는 대화에 마주앉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해 이 자리를 통하여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내외에 천명하고 북한측에 대하여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여 민족의 현실문제와 장래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할 것을 거듭 촉구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평화통일을 바라는 민족전체의 뜻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측의 주장까지도 적극 포용해서 남북대화의 길을 폭넓게 열어 놓은 제안입니다.

통일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민족통일협의회」의 구성과 통일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평화통일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체결 등을 기본골자로 하고 있는 우리의 통일방안은 문자 그대로 민족화합과 민주통일로 가는 가장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자기가 원하는 통일방안만을 고집하는 자세를 탈피하고, 민족전체의 자유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폭넓은 대화를 통해서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협의함으로써 민족의 진로를 공동으로 개척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통일방안을 둘러싸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문제해결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간의 긴장과 대립을 조장하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통일방안을 제시한다 해도 말로만 통일을 주장하면서 통일을 위한 대화를 거부한다면 모든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본인은 지금과 같은 극히 부자연스러운 남북한 관계를 청산하고 역사의 소명과 민족의 여망에 따라 접촉과 대화의 문을 과감히 열어 놓기 위하여 하루속히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가 만나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로지 겨레 전체의 통일의지를 결집시키고 겨레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공동의 광장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접촉과 대화의 광장을 하루속히 마련해보자는 것이 본인이 강조하고 있는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의 참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이 실현되면 거기에서

—남북한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하며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함으로써 통일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제무대에서 남북한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민족 역량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강구하고

—나아가서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여건을 조성하는데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기회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북한측에 대하여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의 조속한 개최에 동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두환대통령이 이번 국정연설을 통해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의 개최를 재촉구 하면서 동회담에서 협의할 4개항의 긴요한 당면 과제를 제시하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배경과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첫째로 우리는 통일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결코 중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두환 대통령은 통일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1981. 1. 12),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1981. 6.

5),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천명(1982. 1. 22)등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의를 통해 북한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촉구해 왔으며 또한 우리 정부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구현하기 위해 그 실천조치로서 「20개 시범실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과 「남북한 고위대표 회담」을 개최할 것 등을 북한측에 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측은 우리의 성의있는 제의들을 외면하고 아직까지도 긍정적인 호응을 기피한 채 말로는 긴장완화니, 평화통일이니, 「고려연방」이니 운운하면서 현실적으로 긴장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적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행동으로 옮기자는 데에 대해서는 완강히 반대하며 통일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대화까지도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전두환 대통령은 북한측의 이 같은 부정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주적 노력을 중단할 수 없다는 신념과 북한측도 언제까지나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회구하는 내외여론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에 따라 금년 국정연설을 통해서 북한측에 대해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의 개최를 다시 촉구하게 된 것이다.

둘째로 통일과 번영을 향한 민족의 진로 개척의 과제가 바로 우리의 역사적, 시대적 요청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1980년대의 세계는 열강들의 「힘의 우위」 경쟁, 자원민족주의의 팽배, 보호 무역주의의 강화 등 국가 이기주의의 발호와 세계도처에서 벌어지는 군소민족들간의 복잡한 이해 충돌들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길은 기필코 우리 세대 안에 조국통일의 역사적 과업을 달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안으로 평화통일을 향한 우리의 자주적 노력을 더욱 증대하고 밖으로 국제사회에서 민족의 권익을 계속 신장해 나감으로써 분단조국의 통일여건을 내외적으로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은 이번 국정연설을 통해 통일과 번영을 향한 민족의 진로를 기필코 개척해야 한다는 역사적, 시대적 요청을 재확인하고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간의 회담을 성립시켜 분단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길을 모색해 보려고 하는 실천의지를 내외에 표명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국정연설의 통일대화 관련부분은 몇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기본정신을 재확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번 국정연설 가운데서 우리 민족이 40년 가까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분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남북한이 화합과 통일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시대적 당위성을 상기시키고

—민족전체의 자유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폭넓은 대화를 통해서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하며

—통일문제를 비롯한 민족의 진로를 공동으로 개척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남북의 어느 일방이 아무리 좋은 통일방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대화를 거부하고 실천적 노력을 축적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무의미를 지적하고 통일방안을 둘러싼 비생산적인 논쟁을 지양할 것을 촉구하면서 통일문제를 협의하는 대화의 광장에서는 결코 어느 일방의 주장과 요구를 강요할 수 없고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가 아무 조건없이 협의되어야 한다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기본정신을 재확인하였다.

둘째로 전제조건없는 실천적 남북대화를 촉구하였다는 점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번 국정연설을 통해 진정으로 민족의 이익을 우선시켜 평화통일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사상과 제도의 장벽을 과감히 뛰어넘어 조건없는 대화에 마주앉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과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가 만나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아울러 지금과 같은 극히 부자연스러운 남북한 관계를 청산하고 역사의 소명과 민족의 여망에 따라 접촉과 대화의 문을 과감히 열어놓기 위하여 하루속히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이 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우리가 오늘과 같은 남북간의 비정상적인 단절과 대립을 지양, 화합과 통일의 길을 개척하고 국제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서로 아무런 전제조건이 없는 접촉과 대화의 문을 과감히 열어야 하며 따라서 오늘날 북한측이 대한민국의 현존체제 부인, 반공정책의 폐기, 주한미군 철수 등 전제조건을 내세워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부당한 태도는 마땅히 지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째로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에서 토의·협의하려고 하는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북한측에게 동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들을 합의·해결하려고 하는가를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동시에 동회담에 임하는 우리의 진지성을 과시하고 있는 점이다.

전두환대통령이 제시한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의 협의과제는 다음과 같은 4개항이다.

(1) 남북한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문제.

남북한간의 긴장완화 및 전쟁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문제는 남북한간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긴요한 사항이며 이는 쌍방의 통치책임자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므로 쌍방 당국의 최고책임자 회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만약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간의 협의로 남북한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재발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마련하게 된다면 분단으로 인해 누적된 상호 불신관계의 해소는 물론 민족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화합의 분위기가 조성, 확대되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2)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문제.

통일문제는 대화의 광장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회담장 밖에서 이를 논쟁과 시비의 구실로 삼으려는 자세는 원천적으로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어느 일방이 자기의 통일방안만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고집하면서 상대방과는 일체의 타협을 거부한다면 이는 대화자체를 부정하고 평화통일을 거부하는 소행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남북대화에서는 쌍방의 주장이 모두 토의의 대상으로 되어야 하며 어떠한 제한이나 전제조건도 없는 타협적 분위기 속에서 민족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의미에서 이번 국정연설의 기본입장은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에서 우리측이 제의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함께 북한측이 주장하는 「연방제」방안도 협상 「테이블」에 놓고 상호 협의함으로써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자는 것이다.

(3) 국제무대에서 남북한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민족역량의 낭비를 방지하는 문제.

그동안 남북한은 지나친 대결과 경쟁으로 상호 불신과 긴장, 그리고 적대감을 조장하여 왔다. 특히 남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각기 보다 많은 지지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외교경쟁을 벌임으로써 국력의 낭비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우리 민족의 권익과 품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민족자해적 사례가 적지 않았다.

북한의 경우 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 석상에서 회의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선전적 발언이나 대한민국을 중상·비방하는 발언과 행동을 자행함으로써 동회의에 참석한 각국대표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우리 민족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허다하였으며 또한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외채가 30억불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외교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미개발국가나 해외친북단체들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등, 과중부담을 무릅쓰고 대외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가 안으로 평화통일을 향한 자주적 노력을 강화하면서 밖으로 국제사회에서 민족적 권위와 위신을 신장해 나가려면 지금과 같은 남북한간의 불필요한 대결과 경쟁을 우선 국제무대에서부터 종식시키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은 정치적 결단에 의해 이같은 실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될 수 있다.

(4)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문제.

통일문제는 우리 겨레의 생존, 번영과 직결되는 민족적 과제인 동시에 한반도를 에워싼 강대국들의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이므로 평화적 통일의 길을 열어나감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획득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우리 민족이 통일에 유리한 외적환경(外的環境)을 조성하고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협력을 획득하는 길은 남북한간의 갈등과 불화를 극복하려는 의지와 평화통일을 향한 단합된 면모를 온 세계에 뚜렷이 보여줌과 동시에 국제정세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

에 유리한 국제평화질서를 구축하는데 주도적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국정연설을 통해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의 개최를 재촉구한 것은 동회담을 통해서 주변열강들로 하여금 남북한에 대하여 선린 우호적인 관계개선을 추구토록 유도하는 등 통일문제 해결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 2. 국토통일원장관, 「남북한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 제의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은 1983년 2월 1일 대북성명을 발표하고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을 실현하는 문제와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남북한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남북한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자고 북한측에 제의했다.

손재식장관은 아울러 『남북한 쌍방은 이의 실현을 위해 각기 당국대표 2명과 정당대표 3명이 참가하는 실무급 예비회담을 1983년 3월중에 판문점 또는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이어, 손재식장관은 동성명에서 『우리는 개방적이고도 포괄적인 대화를 위해 언제나 북한측에 대하여 문호를 열어 놓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측의 이번 제의에 대하여 북한측이 긍정적으로 회답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손재식장관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단절과 대립이 계속되는 비정상적인 남북관계에 중지부를 찍고 화합과 통일을 위한 폭넓은 대화를 마련하기 위하여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 「20개 시범실천사업」 그리고 「남북한 고위대표회담」 등을 제의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 북한측이 1983년 1월 18일 성명을 통해 주한미군철수 문제만을 토의하기 위한 소위 「남북 제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열자고 주장한 것은 사실상 남북대화를 거부하는 그들의 불성실한 자세를 또 다시 드러낸 것임을 지적했다.

또한 손재식장관은 『북한측이 폭넓고도 실효성있는 대화를 언제나 마다하고 엉뚱한 제안을 남발하여 내외여론을 오도하려고 애써 온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북한측이 그들의 말대로 남북간의 접촉과 대화를 트고 화합과 통일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면 하루속히 모든 부당한 조건과 기만적 구호를 버리고 우리측과 떳떳이 회담장에 마주 앉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손재식장관이 발표한 대북 성명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 정부는 그 동안 단절과 대립이 계속되는 비정상적인 남북관계에 중지부를 찍고 화합과 통일을 위한 폭넓은 대화를 마련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2일 국정연설에서 역사적인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천명하고 남북한의 현실문제와 민족의 장래문제를 포괄적으로 토의 해결해 나갈 것을 제의하는 한편, 이를 위한 접촉과 대화의 문을 과감히 열어놓기 위하여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지난해 2월 1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조치의 일환으로 남북한 사회개방, 교류와 협력, 그리고 긴장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20개 시범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의하고 북한측의 호응을 촉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은 지난해 2월 25일 북한측의 주장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여 쌍방의 당국뿐만 아니라 정당 대표도 참가하는 「남북한 고위대표 회담」을 제의하고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 개최문제를 비롯하여 북한측이 제기하는 문제까지도 아울러 협의할 것을 주장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지난 1년 동안 우리측의 이 같은 모든 합리적인 방안과 성의있는 제의를 외면하고 회담장 밖에서 우리를 중상·비방하는 선전에만 열중할 뿐 대화의 마당에 나서기를 거부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금년도 국정연설에서 다시금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한이 진정으로 민족의 이익을 우선시켜 화합과 통일을 추구한다면 서로 조건없는 대화에 마주 앉지 못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하루속히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을 열어 통일을 향한 민족의 진로를 공동으로 개척해 나갈 것을 호소 하였습니다.

특히 전두환 대통령은 이번 국정연설에서 남북한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문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북한측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함으로써 통일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는 문제 등 4개항의 긴요한 당면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에서 협의 해결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지난 1월 18일 성명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소위 「남북 제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열자는 부당한 제의를 함으로써 사실상 대화를 거부하는 그들의 불성실한 자세를 또 다시 드러냈습니다.

북한측이 폭넓고도 실효성있는 대화를 언제나 마다하고 엉뚱한 제안을 남발하여 내외여론을 오도하려고 애써온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거니와 이번에 내놓은 제의도 그들의 상투적인 수법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합니다.

북한측은 지난해 2월 10일 이른바 「남북 정치인 100인 연합회의」란 것을 들고 나와 우리측 대표 50명의 명단을 그들이 일방적으로 지명, 발표함으로써 내외여론의 조소와 지탄을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또 다시 이번에 그들이 남북한 당국을 제외하고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인 회담에서 미군철수 문제만을 토의하자고 주장한 것은 그 자체가 대화를 통해서 통일문제를 비롯한 남북한간의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겨레가 남북대화 재개를 갈망하고 있는 이 시기에 지난날 우리 민족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북한 폭력주의자들이 아직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적화통일의 망상에 사로잡혀 불순한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측이 그들의 말대로 남북한간의 접촉과 대화를 트고 화합과 통일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면 하루속히 모든 부당한 조건과 기만적 구호를 버리고 우리측과 떳떳이 회담장에 마주 앉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대화가 어느 일방의 선전장이 아니라 반드시 민족전체의 소망과 의지를 집약하는 공동의 광장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남북한 당국을 비롯하여 쌍방의 각계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들이 참가하여 평화적 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폭넓게 협의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같은 개방적이고도 포괄적인 대화를 위해 언제나 북한측에 대하여 문호를 열어 놓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취지에서 오늘 북한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의합니다.

첫째, 남북한 쌍방은 빠른 시일내에 남북한 당국 대표와 정당·사회단체 대표가 참가하는 가칭 「남북한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를 개최한다.

둘째, 남북한 쌍방은 동 회의에서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을 실현하는 문제」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 남북한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한다.

셋째, 남북한 쌍방은 이상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각기 당국 대표 2명과 정당 대표 3명이 참가하는 실무급 예비회담을 오는 3월중에 판문점 또는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한다.

본인은 이상과 같은 우리측의 제의에 대하여 북한측이 긍정적으로 회답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과 같은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의 「남북한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 제의는 한마디로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우리측의 아량과 남북한 관계개선 및 통일문제의 포괄적인 협의 해결을 추구하는 우리측의 실천 의지를 밝힌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북한측은 전두환대통령이 1983년 1월 18일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4개항의 긴요한 당면과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의 조기 실현을 촉구한지 3시간 뒤에 이른바 「정당·사회단체 연합성명」을 통해 『주한미군의 철수문제가 통일축진의 최우선적 과제』라고 말하면서 주한미군철수 문제만을 협의하기 위한 소위 「남북 제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의 소집을 주장한 바 있다.

북한측의 이같은 주장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긴장과 통일의 장애요인이라는 상투적인 논리를 또 다시 들고 나와 내외여론을 오도하는 한편 대화의 목적을 미군철수 문제의 토의만으로 제한시킴으로써 표면상으로는 대화를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생산적인 대화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대화기피 책략에 불과한 것이다.

앞으로의 남북대화는 지난날처럼 어느 일방의 정치선전장이 될 수 없고 반드시 민족전체의 소망과 의지를 집약하는 공동의 광장으로 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것은 남북한 당국을 포함해서 쌍방의 각계 대표들이 폭넓게 참가할 수 있고 또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

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정부는 비록 북한측이 주한미군철수 문제와 같은 특정문제만을 토의하자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대화의 문을 봉쇄하고 있으나 그들의 그 같은 소행에 구애됨이 없이 아량과 포용성으로 북한측을 대화의 광장에 끌어들이기 위해 북한측의 일부 주장을 과감히 받아들여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의 실현문제와 함께 남북한 쌍방이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각기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폭넓게 토의할 것을 제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비회담 대표단의 구성에 있어서도 우리측은 실천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남북한 당국 대표 각 2명과 북한측이 제의한 정당 대표 3명을 포함하여 각 5명씩으로 구성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이는 통일문제 및 남북한간의 주요 현안문제가 쌍방의 책임있는 당국이 주도하는 남북대화를 통해서 실효성있게 해결될 수 있다는 우리측의 일관된 기본입장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북한측의 주장까지도 포용하고 있는 것이다.

### 3. 각계의 반응

전두환대통령이 「1.18 국정연설」을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새로운 결단과 구체적 조치를 밝히고, 뒤이어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이 「남북한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 개최를 제의함에 따라 각계에서는 이를 지지, 환영하는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우선 전대통령의 「1.18 국정연설」에 대하여 도하 주요 일간지들은 『1.18 국정연설에서 특히 부각된 것은 전두환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집념』이라고 전제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을 거듭 촉구하면서 회담이 열릴 경우의 구체적인 협의과제로 4개항을 제시한 것은 통일과 번영을 향한 민족의 진로를 반드시 개척해야 한다는 역사적, 시대적 요청을 거듭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에 제시된 4개항의 협의과제들은 쌍방 통치책임자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로써 『이같은 문제들을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에서 협의하자고 한 것은 전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를 읽을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신문들은 『전대통령이 기회있을 때마다 확고한 통일철학을 바탕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반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측이 진정으로 분단조국의 평화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공영을 바란다면 하루속히 대화의 광장에 나와 남북최고책임자가 허심탄회하게 민족의 장래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북한측의 호응을 촉구했다.

「1.18 국정연설」에 대하여 도하 각 신문들은 이상과 같은 논조의 특집을 게재함과 아울러 아래와 같은 요지의 사설들을 게재하여 전두환대통령의 통일외지와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 통일지향의 민족사적 소명

- 민족자결원칙에 입각, 「조건없는 대화」에 응하라 -

경향신문(1983. 1. 21)

전두환대통령이 올해 국정연설에서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의 필요성을 재천명하고 북한측의 긍정적인 호응있기를 촉구한 것은 통일실천을 위한 민족적 열망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깊은 공감을 느끼게 한다.

전대통령은 특히 우리 민족이 지난 1세기 동안 겪어야 했던 국권상실과 국토분단의 뼈아픈 수난을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필코 우리 세대 안에 조국통일의 역사적 과업을 「우리 손으로」 달성해야 할 것임을 강조, 통일의 당위성과 주체역량의 구축을 역설했다.

전대통령의 이러한 통일실천 의지는 바로 사상과 제도를 초월한 「조건없는 대화」의 논리에서 더욱 선명히 부각되었다.

남북간의 지나친 대결과 경쟁은 상호 불신과 민족역량의 낭비 밖에 가져다 준 것이 없다. 그것

은 또 국제사회에서 번번히 우리 민족의 권위와 위신을 손상시켰던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통해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전대통령의 제의는 크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대통령은 이 회담을 통해 북한측이 주장하는 통일방안까지도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통일을 위한 정부의 일관된 노력과 의지를 재확인했다.

사실 통일방안을 둘러싸고 장외에서 일방적인 주장만을 되풀이 한다면 그것은 문제해결에 접근하기보다 오히려 상호 긴장과 대립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통일문제를 특하면 회담장 밖에서 정치선전의 도구로 삼아온 북한측 태도는 민족적인 공지에도 손상을 주는 자해행위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반민족적 통일 저해자세는 이제 지양돼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또 통일문제를 무력이나 폭력수단으로 해결하려 든다면 결국 동족상간의 비극만 자초하고 이해관계를 갖는 주변국가들을 국제분쟁의 와중에 몰아넣는 불씨가 된다는 사실도 지난날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통일문제는 원천적으로 민족내부의 문제이면서도 국제적인 통일환경을 도외시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 최고책임자회담」을 통해 민족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통일의 국제환경 조성을 주도해야 한다는 전대통령의 탁견은 주변정세의 능동적 대응 내지는 자주적 통일노력을 위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준 것이라 하겠다.

이 점은 전대통령이 「자이레」 지와의 회견에서 밝힌 한반도 통일관과도 일치한다.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극동에 있어서 강대국의 상호 역학관계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주목하고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통일은 이제 한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성취돼야 하며 자주적 통일의 저해요인을 주체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역사의 소명이자 우리 민족 전체에 부하된 사명이기도 하다. 「1.12」 및 「6.5 제의」와 「1.22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이를 실천하기 위한 「20개 시범사업 제의」도 이러한 민족자결을 전제로 한 통일실천 의지의 집약이었다. 민주·자주·평화의 3대원칙을 골간으로 하는 우리의 통일정책은 이렇듯 대결의 극복과 단절해소, 협력관계에로의 전환을 궁극의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측은 분명히 깨닫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소위 「남북한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들고 나와 주한미군철수 문제부터 논의하자는 식의 북한측의 발상은 「조건없는 대화」제의에 대한 회담으로서는 너무도 무성의하고 동문서답격 반응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북한측의 어떤 제의도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음에도 굳이 「연석회의」를 열자는 것은 통일문제를 또 다시 정치선전에 악용해 보려는 저의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그것이 체제의 갈등과 고민을 은폐하고 그들 내부의 곤란한 입장을 호도하려는 속셈이라면 더욱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최고책임자회담에 응할 수 없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실천 가능한 비정치적 접촉과 교류에 성의를 보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남북직통전화, 적십자회담, 스포츠교류를 위한 일련의 회담이 완전 중단상태에 있는 것은 모두가 북한측의 무성의 때문이다.

북한측은 이제라도 조건없이 개방된 「대결없는 대화의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 둔다.

한편 2월 1일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의 대북제의에 대해서도 각계로부터의 환영과 지지가 잇달았다.

민정·민한·국민당 등 각 정당들이 2월 1일 손재식장관의 제의를 환영하는 성명을 각각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김용태민정당 대변인 : 책임있는 당국자를 회의에 참가시키고 의제에 있어서도 평화통일을 위한 포괄적인 모든 문제를 다루자고 한 우리측의 대북제의는 현실성과 책임성있는 합리적인 제안으로 환영한다.

북한측이 만일 이번에도 우리측의 제의를 거부한다면 지난번 주한미군철수를 논의하기 위해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하자고 한 제의가 남침야욕을 위장한 불순한 정치선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 김진배민한당 대변인 : 우리의 제의는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서 북한측이 이것마저 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통일문제 협의에 대해 아무런 성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허심탄회하게 응할 것을 촉구한다.

▲ 이성일국민당 대변인 : 이번 제의는 남북대화를 현실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평가하며 북한측은 이 제의를 지체없이 수락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내의 각 일간지들도 『폭넓은 협의 위한 대화의지』, 『「포괄 수용」의 새 의지』, 『대화의 문 두드리는 평화의지』 등의 표제로 특집 기사를 싣고 『북한은 더 이상 억지 주장을 펼 소지가 없어졌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대북제의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신문들은 특히 『손재식 장관의 이번 제의는 평화통일 구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굳은 의지와 성의의 표현』이라고 평가하면서 『선전만을 노린 북한의 단발제의와는 그 성의와 진지성 및 일관된 논리에 있어서 차원을 달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신문들은 『우리가 그 동안 북한을 어떻게 해서라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 민족의 숙

원인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97 개국이라는 거의 전세계적인 지지를 확보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통일방안에 대한 이러한 국제적 지지는 전대통령의 아세안·아프리카 순방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외교기반 확충으로 더욱 증폭돼가고 있는 반면, 북한측의 외교적 고립이 더욱 가중됨으로써 북한측이 『우리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방안들에 대해 거부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논평했다.

이어 각 신문들은 『그러나 북한측은 발전하는 세계조류에서 폐쇄적인 사회는 결코 오래 존재할 수 없다는 세계발전사의 원리를 인식하여 빨리 북한 사회를 개방하고 통일의 대도로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흔쾌히 이번 제의에 호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각 신문들의 사설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북 당국·정당대표회의

- 신축성보인 새로운 제의에 북의 호응을 -

동아일보(1983. 2. 2)

민정·민한·국민 3당이 북한의 「정당·사회단체 연합성명」에 대해 지난 29일 반박하고 나선 데 이어 우리 정부도 1일 북한측의 1월 18일자 성명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모양의 남북대화 재개 방안을 제안하였다. 손재식국토통일원장관은 대북한성명을 통해 주한미군철수를 토의하기 위해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열자는 불성실한 상투적인 수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우리의 3개 정당들이 며칠 전에 북한측의 미군철수 제안을 일축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면서도 손장관은 빠른 시일내에 남북한 당국 대표와 정당·사회단체 대표가 참가하는 「남북한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를 개최하자고 북한측에 제의하였다. 그리고 회담의 의제로는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실현하는 문제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 남북한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들었다. 이 회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남북한 쌍방은 각기 당국 대표 2명과 정당 대표 3명이 참가하는 실무급 예비회담을 오는 3월중에 판문점 또는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하였다.

정부의 이같은 새로운 제의는 종래 당국간 대화를 요구했던 우리측의 입장을 융통성있게 북한측에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1979년 봄 판문점에서 남북한간에 이른바 변칙대화가 잠깐 벌어졌을 때만 해도 북한측의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중앙위」이름으로 대화에 나설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당국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당국이 직접 나오지 않는다면 평양 당국이 임명한 정당·사회단체라야만 만날 수 있다고 정부는 한계를 분명히 했었다. 또 정부는 작년 2월에도 각료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한 고위대표회담」을 열어 통일에 관한 제반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한 바도 있다.

그러나 1일 정부가 발표한 대북한성명에서는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를 개최하고자 제의함으로써 당국 대표가 참석하게 되면 정당·사회단체 회의에도 충분히 응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였다. 정당·사회단체 회의를 고집하던 북한측 주장과 당국간 대화를 요구하던 서울측 입장을 절충한 타협안으로 볼 수 있다. 당국도 정당·사회단체도 모두 함께 참석하는 신축성있는

대화의 접근이라 평가해마지 않는다.

대립되는 두 당사자의 협상에는 서로 양보와 이해없이 타결점을 찾을 수 없다. 서울측은 이번 에 여유있는 신축성을 평양측에 보임으로써 타결점으로 한 발 다가섰다. 이제 북한측이성의있는 호응만 보인다면 남북대화는 결렬 10년만에 다시 재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사실 평양측은 1979년 봄 남북한 변칙대화 때 쌍방 연락 대표의 명칭을 「정당·사회단체 당국의 연락대표단」으로 하자고 제안한 바 있음을 상기하면 평양측은 당국과 정당·사회단체를 함께 묶어 서울측의 회담제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의제를 정하는 일이다. 북한측은 미군철수문제를 주장하고 서울측은 「남북한 최고책임자회담」을 비롯, 통일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다루자고 제안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북한의 6.25남침으로 진주한 평화유지군임이 명백할진대 그리고 미군이 25만명 썩이나 주둔해 있는 서독과 동독은 서로 대화는 물론 각종 교류를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진대, 북한은 우선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에 즉각 응해야 한다.

북한측은 2·1 제의에 반대할 명분없다

경향신문 (1983. 2. 2)

손재식통일원장관이 1일 대북성명을 통해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를 제의한 것은 어떻게 하든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마련, 평화통일의 길을 앞당기려는 정부의 강력한 통일실천 의지를 대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대북제의는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 실현문제, 평화적 통일을 위해 남북한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실무급 예비회담을 오는 3월중 판문점 또는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하자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번 제의는 북한측의 제의와 같이 특정문제만을 협의하자는 편협된 자세가 아니라 통일문제에 관한한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을 조건없이 대화를 통해 협의하자는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성의를 나타낸 것이다.

예비회담을 위한 대표단 구성에 있어서도 우리측은 대화를 효과있게 추진하기 위해 남북한당국 대표 각 2명과 북한측이 제시한 정당 대표 3명을 포함, 5명씩으로 구성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통일문제나 남북간의 주요 현안문제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백 명이 참가하는 「전민족회의」나 그들이 일방적으로 지명한 일부인사와 정당·사회단체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쌍방의 책임 있는 당국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측이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제의한 것도 이러한 대화의 실효성을 감안한 것이라 하겠다.

남북한 사이에 가로놓인 제반문제는 억지주장이나 허구적인 정치선전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선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그것을 포괄적으로 협의함으로써 합의점을 모색한 뒤에 이를 성실하게 실천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정당한 순서라고 본다.

그러나 북한이 지금까지 주장한 것을 보면 이러한 정상절차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들의 요구만 관철시키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및 회담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른바 「통일촉진대회」 운운하면서 「연공」 노선에 동의하는 인사라면 이들을 상대로 대화를 하겠다고 억지를 부렸고 지난 1. 18 「연합성명」이란 것도 겉으로는 대화 운운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일방적인 조건을 내세워 대화의 문을 더욱 굳게 잠그려는 저의를 보였다. 그들 내부의 심각한 갈등과 고민을 호도하기 위해 속셈이 뻔한 엉뚱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용납 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측이 진정으로 남북대화를 원한다면 지금처럼 실현 불가능한 조건과 구실을 붙여 내외여론을 오도하려 들것이 아니라 무조건 대화의 광장에 나와 허심탄회하게 민족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이번 우리측 제의는 특히 북한측의 어떤 제의도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대표회의에서 토의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북한이 1월 18일 제의한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도 그런 점에서 포용력 있게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북한측이 이 제의마저 거부한다면 지금까지 입버릇처럼 떠벌린 이른바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라는 것은 대화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거부하기 위한 구실로 내건 것이거나 불순한 정치선전 저의에서 나온 것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측이 또 진실로 대화를 원한다면 그들의 상투적 대남군사도발작태도 버려야 마땅하다. 「연합성명」으로 대화를 위장하고 백령도 상공을 침범한 북괴의 대남도발은 입이 열 있어도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버젓이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도 우리측에 항의문을 보냈더니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남북한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대화제이라면 우리의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를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은 없을 것이다. 보다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우리의 통일 실천노력에 대해 북한측의 긍정적인 호응 있기를 촉구한다.

남북대화의 개방적 제의

중앙일보 (1983. 2. 1)

오늘(2월 1일) 국토통일원이 북한에 제의한 「남북한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는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통일대화를 다시 한번 시도했다는 점에서 내외의 평가를 받을만하다.

손재식 통일원장관은 이번 제의에서 빠른 시일 안에 「남북한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를 개최하되 이 회담에서는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실현하는 문제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 남북한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하자고 했다.

또 이 같은 과제를 성사시키기 위해 3월중에 남북한이 각기 당국 대표3명을 참가시키는 실무급 예비회담을 열 것도 아울러 제의했다. 예비회담의 개최장소로는 판문점, 서울, 평양 등 어느 곳이라도 좋다고 했다.

실로 이 같은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제의는 북한측의 형식적이고 비현실적인 제의와는 좋은 대조를 이루며,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의 돌파구를 열려는 우리측의 꾸준하고 성실한 노력을 표출한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1981. 1. 12),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1981. 6. 5),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1982. 1. 22), 20개시범 실천사업(1982. 2. 1), 남북한고위대표회담(1982. 2. 25) 등 일련의 통일대화를 꾸준히 제의해 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같은 제의는 북한측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음은 이미 세계가 아는 일이다. 북한은 「고려연방제」만이 유일한 통일방안이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이를 위해 「대민족회의」같은 성격의 선진적 집회만을 소집하자고 주장해 왔다.

특히 북한이 작년에 제의한 「남북정치인 1백인회의」는 과연 북한이 통일대화를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황당무계한 것이었다. 이때 남북대표도 그들이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소극까지 연출한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전대통령이 지난 1월 18일 국정연설을 통해 다시 한번 북한측의 성의를 촉구한 직후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제의했다.

물론 이것은 의제를 주한미군 철수라는, 한국측에만 모든 책임을 일방적으로 돌리는 「억지」사항으로 사전에 못박은 점,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실천할 능력을 가진 남북한 「당국」이 빠진 점만을 보아도 구름 위에 뜬 제의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우리측의 「2·1제의」는 이 같은 북한측의 주장이라도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

우리는 누차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가 머리를 맞대면 남북이 제기하는 어떤 문제라도 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따라서 이번 제의도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의 개최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바로 합의사항을 실천할 수 있는 최고책임자회담을 구현하기 위한 전 단계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측의 제의와 북한측의 주장을 다같이 수용했다는 데서 이번 제의는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것이며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제의인 것이다. 북한측이 통일대화에 성의가 있다면 이번 제의를 흔쾌히 수락함으로써 그들이 주장하는 어떠한 의제도 한국대표와 토의할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북한측이 왜 주한미군의 존재를 통일의 장애요인이라고 내외에 선전하는지 그 저의는 너무나도 뻔하다. 그들의 「1·18 제의」도 표면상으로는 통일대화를 표방하나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억지논리를 부각시켜 내외의 여론을 오도할 속셈임을 우리는 잘 안다.

그러나 우리는 통일대화의 돌파구를 여는데 어느 때라도 주저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비록 그들의 속셈은 뻔하나 일단 남북간의 현안문제를 토의할 대화를 여는데 있어선 아량과 포용성을 보여왔다.

이번 제의도 이 같은 우리측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과시한 것으로 보아 틀림없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휴전으로 끝난지 올해로 꼭 30년이 된다. 실로 한 세대가 지났다. 이제 북한측은 통일문제를 좀더 성의 있게, 민족적 대화합의 차원에서 생각하길 바란다.

#### 개방적 남북대화의 기회

##### —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 제의 —

조선일보(1983. 2. 2)

##### 1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통일대화 방안이 제기됐다.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은 1일 대북성명을 통해 북한측에 빠른 시일 내에 가칭 「남북한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를 열자고 제의했다.

손장관은 이 남북회의체에서 의제로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실현하는 문제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 남북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하자고 했고, 이와 같은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우선 남북 각기 당국대표 2명과 정당대표 3명이 참가하는 실무급예비회담을 오는 3월 중에 판문점 또는 서울이나 평양에서 개최토록 하자면서 북한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촉구했다.

정부의 이번 제의는 어떻게든 책임 있는 남북 당국간에 대화를 재개하여 신뢰를 회복하고, 신뢰를 통일의 길로 연결할 것을 추구해온 강력한 대화실천 의지의 표출로 보인다. 그것은 이번 제의 내용에 평소의 북한측 주장이 다분히 포용된 것으로 해석되는 데에서도 역연하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 정부는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일련의 건설적이고도 생산적인 대북제의를 해왔다. 1981년 1월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가 상호 방문할 것을 제의했고, 같은 해 6월엔 최고책임자회담을 열어 쌍방의 통일방안을 격의 없이 논의하자 했고, 1982년 1월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내놓으면서 북한측의 대화 호응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1982년 2월 북한측의 주장을 다분히 감안한 정당인사 및 사회단체 인사까지 포함

시킨 「남북한고위대표회담」을 열자했고, 여기에선 북한측이 들고 나온 「남북정치인연합회의」안도 의제로 논의 할 것임을 밝혀 개방성을 보였다.

## 2

이와 같은 제의들에 그러나 북한측은 「두 개 조선을 조성하는 책동」 운운으로 이를 외면하고, 대화장 아닌 대화장 밖에서 비방·중상만을 일삼아 왔다. 이는 그들이 떠들어대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대화거부의 파괴적 자해행위일 뿐이었다.

전대통령은 올해 국정연설에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재 촉구했다. 그러자 북한측은 이에 대응하듯 같은 날 소위 미군철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구성을 위해 남북이 각각 3개정당대표로 예비회담을 갖자고 제의해왔다.

너무나도 명백한 불순한 동기에서 출발한 이 제의는 우리측의 3개 정당에 의해 일축됐거니와, 이번 정부의 대북제의에는 그 동안의 북한측의 주장을 상당히 고려한 흔적을 간취 할 수 있다. 첫째로 회의체의 개방성을 들 수 있다. 정당 「대표」에 사회단체 「대표」까지를 포함시킨 회의체 구성제이는 이번이 처음이며, 가칭 「남북한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란 명칭 등에서도 그것을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예비회담 대표단 구성에 있어, 당국대표 2명외에 정당대표 3명을 포함시켰음도 작금의 북한측 주장을 개방적으로 포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일관된 입장이기는 하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남북한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를 의제로 내놓음으로써 논의의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북한측이 이번 제의에 응하여 「남북한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를 구성함으로써 통일에 관한 그들의 모든 주장을 제기할 수 있고,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은 포용성과 개방성을 지닌 「2·1 제의」에 대한 북한당국의 반응은 그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진의를 확인하는 또 한번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북한측은 그들의 알량한 이른바 「통일전선」 전술 따위가 먹혀들 여지가 없는 대한민국 실정임을 바로 보고, 이번 제의에야말로 민족적 열의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 새 대화 위한 돌파구

### —당국·정·사회의 제의에 불린다—

한국일보(1983. 2. 2)

온 겨레가 갈망하며 국제여론도 뒷받침하는 남북간의 통일대화 재개에 새 돌파구가 마련될는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우수·경칩이면 대동강도 풀린다는데 새봄과 더불어 남북관계에도 관련 해빙은 올 것인지, 기대가 부푼다.

정부는 1일 손재식통일원장관의 대북 성명을 통하여 능동적이며 포용성 있는 대화재개방침을 천명하였다. 새 제의의 골자는 ① 빠른시일내에 「남북한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를 개최할 것 ② 의제는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을 실현하는 문제」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

남북한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하며 ③ 실무급 예비회담을 오는 3월중에 개최하되 각기 당국대표 2명과 정당대표3명을 참가케 하자는 것으로 간추려진다. 손 장관은 또 성명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측이 시기와 장소를 수정제의 해 오면 굳이 반대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대조되는 것은 북한측이 지난 1월 18일에 발표한 「연합성명문」이다. 그 내용은 오직 주한미군철수문제만을 토의하기 위해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열자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주장이었다. 그들은 또 예비회담에 관하여 남과 북이 각기 주요 3당대표 1명씩을 참가시키자고 했었다.

쌍방 제의를 비교할 적에 우선 뚜렷한 것은 우리측 제의의 개방적 포괄성이다. 이는 대표단 구성과 의제에 관하여 고루 명백한 바이다. 북한측 주장을 포용하되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 고찰을 심분 감안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른 한편 북한측이 당국을 소외시키고자 한 것은 상투적인 「통일전선」획책의 저의를 내포한 것이며,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비현실적인 억지임이 명백했다. 정부당국을 제쳐놓고 도대체 무엇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겠는가. 의제의 자의적 국한도 빈축거리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니었다.

에당초 남북대화란 그 동안의 분단 상태로 말미암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동일한 민족이라는 뿌리에 근거하여 서로 다른 견해와 의견을 조정해 나가려는 화합의 구심작용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측 「2·1제의」는 폭넓게 종래의 북한측 주장도 감안한 내용이고 예비회담의 대표단 구성도 당국대표 2명과 북한측이 제의한 각 정당대표 3명을 포함하여 각 5명으로 하자고 하였다.

요컨대 북한측이 마다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보게 된다. 만약에 북한측이 2·1제의마저 거둬 거부한다면 그들 자신의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주장이 처음부터 대화를 위한 것이 아닌 선전적 구실에 불과했음을 자체 폭로하는 꼴로 되고 말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측은 지난 31일 계획적으로 전투기 1대를 우리측 백령도 상공에 침공시켰는데 그같은 도발을 통한 긴장고조 수법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면서 대화거부를 합리화 해보고자 시도한다해도 부질없는 짓에 불과할 것이다.

북한측이 고집하는 일방적 배타성 가지고는 남북대화가 순조로이 이어져가기 어려울 것이다. 또 그러한 자세로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서로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평화통일 접근에 하등 도움될 것이 없다.

다만 우리측이 인내와 성의를 다한 대화재개 노력과 진취적이며 아량 있는 평화통일 접근 자세를 견지하는 까닭에 내외 동포들의 희망이 지탱되는 셈이다. 이미 세계 97개국에 걸쳐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대한 적극적 지지가 확인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북한측이 정녕 국내외 여론의 귀추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지리한 상투적 솟법을 맴돌지 말아야 한다. 지체없이 우리의 포용성 있는 새 대화제외에 대하여 성의 어린 호응을 표시하도록 평양측에 촉구해 마지않는 바이다.

## 통일대화는 민족적 소명

서울신문(1983. 2. 2)

민족의 통일을 앞당기려는 제5공화국의 열의와 그 진지한 구도가 다시 한번 과시됐다. 손재식 통일원장관이 1일 북한에 제의한 「남북한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안이 바로 그 단적인 예이다. 제5공화국 정부는 지난 달 18일 북한이 제기했던 「주한미군철수토의」만을 위한 「남북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안이 지닌 편협성과 기만성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를 재개시켜 민족의 여망에 부응하려는 일념에서 포용성 있는 자세를 보인 것이다.

북한이 제의했던 「남북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안은 사실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선 의제를 일방적으로 단일 고정화시켰기 때문이다. 즉 「주한미군 철수를 촉진시키는 문제」 하나만을 다루자는 것이니, 이러한 비례와 교조적 태도는 협상사에 그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북한이 이러한 비이성적 행태를 취한 저의를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다. 제5공화국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과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제외가 국제적으로 폭 넓은 지지를 확보하게 되자, 북한은 이를 사실상 회피하면서도 겉으로는 남북대화에 성의가 없지 않은 듯이 위장하기 위해, 현재로서는 한반도 평화유지의 주요한 기둥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조속한 철수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베트남」방식의 공산화통일을 꿈꾸고 있는 북한에 주한미군은 항상 눈의 가시이어 왔다. 미군만 물러나면 무력남침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맹신하고 있는 그들은, 따라서 특히 지난 해 3월의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이후 「반미자주화 투쟁」의 구호 밑에 철군을 국내외로 선동해 왔다. 대남선동공세의 초점은 철군과 한·미공동협력체제 약화에 주어져 있고, 국제선전 역시 그 점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대남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은 「철군 토의를 위한 남북한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안을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속셈을 훤히 들여다보면서도, 제5공화국 정부가 통일원장관의 대북성명을 통해 「남북한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를 제의한 까닭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해,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열자는 결의에 차 있기 때문이다. 북한을 어떻게 해서든지 협상테이블로 유도하여, 우리 한민족의 자주적 역량으로 분단체제를 해소시키자는 민족주의적 소명의식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선적으로 당국자간의 대화여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만나지 않고서는, 그 결과에 대해 누구보다도 국민들이 승복하지 않는다. 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협상이 깨어진 것은 그것이 당국자간의 회담이 아니라 정당·사회단체의 집회였기 때문이었음에 비해, 1972년 7월 4일에 남북공동성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위한 회담이 당국자 사이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북한의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당국자의 참석을 추가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북한이 민족적 양심을 되찾아 우리의 폭 넓은 합리적 제의에 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

#### 4. 북한측의 반응

북한측은 전두환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 직후인 1983년 1월 18일 오후5시 평양방송을 통해 「조선노동당」을 비롯한 21개 정당·사회단체의 명의로 연합성명을 발표하고 이 성명 가운데서 이른바 「남북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하자고 주장했다.

북한측은 동 성명에서 『통일도 대화도 철군부터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적절한 수와 비율로 남북의 정당·사회단체대표와 교포대표 및 개별인사들이 참가하는 『남북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의하고 동 「연석회의」의 소집을 위하여 북의 「조선노동당」, 「천도교청우당」, 「조선사회민주당」과 남의 「민주정의당」,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에서 각각 1명씩 참가하는 「예비회담」을 개최하자고 주장하였다.

북한측은 동 성명에서 『미군을 그대로 두고 통일하자는 것은 사실상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른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며, 남북대화·정상회담 운운 또한 그런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대한민국의 통일노력을 터무니없이 왜곡하였다. 그리고 동 성명은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남조선의 누구와도 공통된 통일지향과 애국적 입장에 기초하여 대화를 나눌 것』이며 『남조선의 정당·사회단체들이 미군철수를 주장하여 나선다면 우리는 그들과도 과거를 불문에 붙이고 서로 만나 미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상투적인 대남선전 선동 및 한·미 이간책동을 자행하였다.

이 같은 북한측의 제의는 외형상 대화를 제의한 것처럼 위장하면서 실제로는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을 앞세워 대화를 거부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 동안 북한측이 취해온 대화태도를 보면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비롯한 일련의 대북 제의들을 전면 거부한 채 당국간 대화는 물론 대한민국내의 합법적 정당·단체와의 접촉마저 배제하는 극단적 대화 거부자세로 일관해 왔는데, 금번 제의 역시 그들의 대화거부인상을 불식시키고 내외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진술적 책략의 일환임이 명백하다.

우리의 주요제의 거부사례

| 우리측 제의                                  | 북한측의 거부반응                                   |
|---|---|
|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 상호방문 제의 (1981. 1. 12)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김일성명」 (1981. 1. 19)         |
|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 회담 제의 (1981. 6. 5)           | 「로동신문」 글 (1981. 6. 10)                      |
| 남북한 체육교류 및 국제경기 단일팀 구성 제의 (1981. 6. 19) | 「제정당·사회단체연합성명」의 「통일촉진대회」소집주장 (1981. 8. 6)   |
|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 제의 (1982. 1. 22)           | 부주석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김일성명」 (1982. 1. 26)    |
| 20개 시범실천 사업 제의 (1982. 2. 1)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성명, 「100인 연합회의」소집주장(1982. 2. 10) |
| 남북한 고위대표회담 제의 (1982. 2. 25)             | 「로동신문」 논평 (1982. 3. 30)                     |

따라서 북한측의 이번 제의는

첫째, 우리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제의에 대한 내외적 지지확산 기반을 약화시키려는 기도에서 들고 나온 것이다.

북한측은 이번 제의를 통해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제의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폭넓은 지지(97개국)를 받고 있는데 대하여 주한 미군 철수가 통일문제 해결의 선결조건이라고 부각시켜 통일문제 및 남북한 관계에 대한 내외의 관심을 이에 집중시킴으로써 우리측의 적극적 대화입장을 퇴색화시키는 한편, 남북대화에 대한 그들의 거부태도가 대내외적으로 비판받고 있는데 대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남북회담을 제의함으로써 지금까지 수세적인 대화입장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측은 이번 제의를 통해서 주한미군철수를 촉구하는 내외의 여론을 조작하고 이를 「반미 자주화 투쟁」의 선전구실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6·25남침이란 엄청난 죄악을 저질르고도 일말의 뉘우침도 없이 휴전이후에도 무력도발과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북한 공산집단이 전쟁재발을 억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주한미군 문제를 들고 나오는 작태야말로 가소로운 일이며 마치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다.

북한측은 1970년대까지 반미선동을 지속하면서도 이른바 「민주화투쟁」을 앞세워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여 왔으나 1982년 3월 미문화원 방화사건 이후에는 「반미자주화투쟁」의 구호 밑에 미군철수 문제를 선차적 해결과제로 내세워 미군철수 여론조성과 반미감정 유발에 온갖 선전과 책동을 자행해 왔는바, 이번 북한측 제의도 이 같은 「반미자주화투쟁」을 조장시키기 위한 대남 전략의 일환으로서 그 과녁을 주한 미군철수 여론조성과 한·미공동협력체제 약화에 두어 대남 선전선동공세를 가열화 시켜보려는 데 그 저의가 있다.

셋째, 북한측은 이번 제의를 통해 남북한 통일외교 경쟁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고자 기도하고 있다.

북한측의 이번 제의는 우리 정부의 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북 제의들에 대해서 국제적인 지지기반이 확대되고 전두환대통령의 미국방문(1981. 1), 아세안방문(1981. 6), 아프리카방문(1982. 8), 그리고 한·일정상회담(1983. 1)등으로 통일대화와 관련하여 우리의 국제외교가 성공적으로 진전됨에 따라 이에 제동을 걸어 그들이 처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열세를 만회해보려는 궁색한 술책이다.

특히 북한측은 근래 비동맹국가들이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주장에 소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번 제의로 금년 3월 [뉴델리]에서 열리는 제7차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케 하고자 하는 외교공작적 저의도 함께 갖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측은 2월 1일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의 대북성명을 통해 제의된 「남북한당국 및 정

당·사회단체 대표회의]의 개최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북한측은 우리의 [2·1대북제의]와 관련, 지난 2월 1일 이른바 [통혁당]방송을 통해 우리의 제의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배족행위]라고 헐뜯고, 간접거부 자세를 시사한데 이어, 2월 5일 {여론을 오도하려는 양면술책}제하의 [로동신문]논평을 통해 {지금까지 표방해 오던 당국자 상호방문 논조를 다시 들고 나온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모략하였다.

## 제2부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비원과 재회추진 운동

### 1. 「1천만 이산가족재회 추진위원회」 발족

남북한에 흩어져 살고 있는 1천만 이산가족의 재회를 실현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500만 이산가족 대표 4,500여명은 1983년 2월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 모여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를 결성·발족시켰다.

이북5도민회는 1982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의 역사적인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11주년을 기하여 그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북한에서 월남한 그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흩어진 혈육들과의 재회실현을 위한 사업의 추진을 모색해 왔다.

그리하여 그 동안 이북5도민회 회장단을 중심으로 몇몇 뜻있는 인사들이 모임을 갖고 우선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산가족 재회문제 해결에 관련한 정책건의,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한 연구·조사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 사업 등을 전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리하여 지난해 12월 20일 서울시내 중구 장충동 소재 이북5도민회 회의실에서 발기인 총회를 개최,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의 정관을 채택하고 임원을 선출하였다. 임원으로는 위원장에 조영식 경희대 재단이사장 부위원장에 박인옥, 김연규, 이재운 등 3인을 선임하는 동시에 이사6명, 감사2명을 선출하였다.

1982년 12월 30일에는 사단법인등기를 마침으로써 동 위원회는 1천만이산가족들의 염원을 수렴·대변하는 민간운동기구의 모습을 갖추어 1983년 2월 9일 그 결성대회를 거쳐 공식 발족하게 되었다.

이날 동대회에는 김상협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당국의 인사들과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이산가족들의 재회운동이 성과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거국적인 성원을 보내주시기도 하였다.

이날 동대회는 다음과 같은 조영식위원장의 대회사와 국무총리의 격려사에 이어 대통령, UN사무총장,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메시지 낭독과 재회추진위원들의 결의문 채택이 있었다.

### 대 회 사

오늘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를 결성함에 있어 조국의 평화통일과업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전두환대통령각하와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친히 임석하여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 김상협총리각하 그리고 본위원회에 평소 각별하신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통일원장관님과 내무부장관님에게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추진하는 1천만이산가족재회운동을 성원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귀빈 여러분과 오늘의 이 결성대회에 참석해 주신 제위원 여러분에 대해서도 만강의 사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 민족이 해방된지도 38년이 되고 보니 어느덧 일제강점 36년보다도 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8.15의 감격은 직접 체험한 세대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가히 상상조차 해 보기 힘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시 민족이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동포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산천이 떠나갈 듯이 대한 독립만세라고 목놓아 외치며 눈물을 흘렸던 그날!

이제 다시는 우리 겨레가 타민족에게 지배되지 말고 나라를 빼앗기지도 말자고 굳게 다짐하며 태극기를 높이 들고 3천만겨레 한 덩어리가 되어 애국가로 조국에 충성을 맹서하던 그때 그날의 감격!

여기에는 치자와 피치자의 반목도 없었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대립도 없는 순수한 한 겨레로서의 동포의식만이 작용하는 정겨운 광경 그것이 당시 우리 조국의 참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해 연합군에 의해 그어졌던 38도선은 오늘 민족의 원한이 어린 분단의 38선으로 남아 내 조국을 두 동강으로 끊어놓았고 천추의 한을 남긴 동족상잔 6·25를 빚게 하였으니 이 청천벽력 같은 사실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동안 몽매간에도 혈육의 상봉과 조국의 평화통일을 잇을 날이 없었던 우리에게 바로 10년 전인 1972년 남북조절위원회의 7·4공동성명은 해방에 버금가는 큰 기쁨과 희망을 안겨 주는 듯 하였지만 그렇게 컸던 꿈도 일장춘몽과 같이 사라져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다 주고 말았습니다.

그 회담이 결렬된지도 10년여가 지나는 오늘 우리 앞에는 평화통일에 대한 아무런 밝은 전망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오늘도 대답없는 북녘을 향해 문을 두들기며 애절하게 이산가족의 재회와 민족의 화합으로 자주적 민주평화통일을 이룩하자고 외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정세는 한동안의 테팡트의 기류마저도 몰아내고 동서간은 사상 유례없는 핵무기의 양산과 킬러위성, 레이저광선무기 등의 개발경쟁으로 일대우주전을 예비하고 있는 듯하니 인류에게 과연 내일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아니 생길 수 없습니다. 또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도 경직일로를 치닫고 있는 현실을 몹시 슬프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류는 오늘 어떤 목적을 갖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인류사회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세계의 많은 석학들이 우려하고 있듯이 처음 맞는 지구적 규모의 일대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에 잘 대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이 그대로 인류의 존망에 직결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상황 속에서 국제정치정세의 축소판도이며 세계열강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한반도 위에 사는 우리 배달민족은 어떻게 살아 나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1980년대에 안고 온 국제적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위하여 민족은 한 핏줄을 이어 받아 온 한 조상의 후예요, 같은 역사와 문화를 창조해 온 배달나라의 한 국민이라는 사실을 재 확인하고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우리의 길에 공동대처하는 길만이 조국을 위기에서 구하고 우리의 살길을 개척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민족문제는 어떠한 이념보다도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상도 제도도 우리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을 수는 없으며 또 갈라놓아서도 아니 된다고 봅니다.

그 말은 조국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민족을 분열시켜서도 아니 되며 또 계급의식을 강조하는 나머지 동족을 상잔하는 일을 있게 하여도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동족이라면 이해와 동중익을 닦하지 말고 대동단결하여 조국과 동포를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같은 동포 같은 가족들끼리 누가 잘하고 못했으면 어떻고 또 누가 조금 낮고 못하면 어떻습니까? 잘나도 동포요 못났어도 내 한 동포이기에 서로가 아끼고 이해하며 감싸주는 그 마음이 진정한 동포의식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차원 높은 생각에서 비록 이념과 사상이 달라 지금 당장에 통일을 성취하지 못할 형편에 있다고 해도 그날을 바라보며 앞으로는 더 이상 비방하지 말고 중상하지도 말고 이념과 이해관계마저도 초월하여 현실에 함께 협력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역사적 위기를 도저히 극복해 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길은 오직 하나 뿐입니다. 화합하여 국난을 슬기롭게 헤치고 같이 살아 남아 공동번영의 길을 찾느냐, 아니면 자멸의 길을 택하여 공멸하느냐에 있습니다. 이 민족의 흥망에 관한 관건은 바로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마음 안에 간직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의 6·25사변을 돌이켜 보건대 전국토를 초토화하고 백여만의 사상자를 내게 한 그 전쟁의 산 교훈에서 우리가 무슨 이득을 얻었으며 또 무엇을 배웠습니까? 모두가 허망하고 공멸의 묘혈을 팠다는 사실 이외에 얻은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었는데 또 우리는 오늘 제이의 6·25를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조국통일 앞당기며 민족의 번영을 기약키 위했다던 북으로부터 시작된 그 전쟁은 동족상잔과 내 나라를 폐허로 만들고 승자도 패자도 없는 무의미한 살생과 파괴로 막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한 핏줄의 후손들이 서로 싸워 온갖 재산을 불사르고 부모형제 동포들의 시체를 밟고 일어서서 승리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광의 승리가 아니라 오욕의 역사이며 지옥의 영광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오늘 다시 우려하고 있는 제2의 6·25가 만일 발발하게 되면 지난번 전쟁과는 그 양상이 다른 아주 참혹한 핵전쟁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계열강들의 정치적 군사적 이해관계가 함께 얽혀 있는 한반도의 정세는 자칫하면 우리 국토를 세계열강의 핵대결의 각축장으로 화하게 할 가능성이 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조국 내 강토 위에는 인간들은 고사하고 파괴 한 마리도 남을 수 없는 참혹한 초토가 되어 버릴 것이라는 것을 상정할 때 우리의 역사와 문명도 함께 불사라져 영영 지구상에서 이 민족의 자취조차 찾아 볼 수 없게 되리라는 것도 쉽게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같은 민족끼리 이와 같은 최후의 대결을 해야 하는가를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참한 대결의 길이란 이와 같은 무서운 길이며 또 야만의 길이라는 것을 되짚어 생각해 보면 서 나는 아무리 무의미한 회담도 차라리 전쟁보다는 낫다고 하는 말을 여기에 힘주어 말해 두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번 백번 동족상잔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여 전쟁을 예방하는 길만이 이 민족을 과멸에서 구해 내는 길이며 모두가 승리하는 길이라고 믿는 까닭으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대화만은 절대로 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또 동시에 동북아의 긴장을 해소하고 세계평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세계조류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이산가족의 문제를 여러 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현대사회의 신국제조류는 종래의 국가주의와 국제주의의 교체에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과학기술혁명으로 우리의 세계는 지구에서 우주로 확대됨과 아울러 우리의 생활마저도 시공을 압축시켜 지구마을 인류의식을 갖고 살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이방인들에 대한 적개심은 오늘 인간가족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배타적 국수주의는 지구협동사회를 지향하는 하나의 인류사회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조류의 풍토 속에서는 정복과 제패 같은 구시대의 가치덕목은 용납되지 않을 뿐더러 최악시되게 됨에 따라 이해와 협동인류의 평화와 안정공영만이 새 시대의 가치기준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마을 협동사회를 바라보는 오늘 국가주의는 국제주의와의 조화를 모색하며 새 시대의 시대정신을 창조해 가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지금까지의 우리의 사회체제마저도 크게 변혁시켜 나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즉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자유화 경향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복지화 경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질적인 이 두 사회체제는 점차 채장보단을 위해 상호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각이 변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합니다만 사정이 달라지면 우리의 마음도 함께 변해 갑니다. 오늘의 목표가 그대로 내일의 목표가 될 수 없도록 변해 간다고 할 때 인류가 오늘 서로 이념과 체제가 다르다고 해서 인류의 운명을 걸고 생사를 결판내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민주주의 특유의 장점을 그대로 살려 대결보다는 대화를 택해야 하고, 혁명보다는 개선을 해 나감이 무리와 희생이 없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길인 줄로 압니다.

따라서 이산가족의 문제에 있어서도 정치적 이념적 해석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대국적으로 고려하여 역사적 조류와 시대적 원리를 감안하여 인도적으로 민족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산가족문제를 정치 이전의 문제, 사상 이전 제도·이전의 문제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민족의 공통분모가 되는 동질성 위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도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1976년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국제인도법회의에서 이산가족들이 서로의 소식을 알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가족의 욕구가 아니라 권리라고 규정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정에 있는 동·서독은 1972년부터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년 8백만의 가족들이 자유로이 래왕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경우 이스라엘과 아랍이 이민족간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 일정기간 상호방문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중공의 경우도 교신래왕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까지도 혈전을 계속했던 월남마저도 해외피난민들이 보내오는 선물을 관대하게 모두 받아들여 그 친척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최근 소련과 중공에 있는 교포들의 소식을 서로 전하고 도 비공식이나 제3국을 통하여 오고가며 만날 수 있는 인도적 길을 터주고 있는데 어찌 북한은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인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친혈육과의 사생확인을 할 수 있는 엽서 한 장의 교류마저도 허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을까요.

모든 길은 고향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에는 마지막으로 제가 살던 고향과 한 핏줄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선천적 본성이며 기본요구이기도 합니다.

5천년의 문화민족으로 자처해 온 우리 민족이 위와 같은 인도적 재회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보면 우리의 긍지와 동포의식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는지 참으로 남 부끄럽기만 합니다.

정치란 그 자체가 사리사욕을 떠난 나라 위한 공적 행위이고 보면 정치에 대한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또 바로 그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이라고 할 때 적어도 정치만은 대인답게 멋지게 [페어 플레이]를 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산가족의 재회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헤어진 그 사실이 범죄행위가 아니었다고 하면 어찌 서로 만나지 못함을 슬퍼하며 재회를 위해 외치는 그들의 울부짓음에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친벌보다도 더 무거운 혈육간의 생이별을 영영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이산가족이 서로 만나는 일은 이 민족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길이며 이것을 통하여 방긋이 트이는 인도의 창구는 곧 남북대화의 시원한 대로를 열게 하여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 바로 역사적 그 과업이 성취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난 번 인도에서 열렸던 아세아 올림픽 대회의 중계방송을 본 사람들은 북한선수들이 입장하여 우리 응원석 앞을 통과할 무렵 한국응원단이 돌연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는 광경을 보고 눈시울을 적셨다고 합니다. 그 박수는 너무도 당연한 박수였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고귀하고 값비싼 박수였음을 새삼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 동안 남들이 그렇게 칭찬하는 그와 같은 박수를 보내지 못하였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조용히 그리고 보다 진지하게 우리 민족의 앞날을 같이 내다 볼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6천만동포 여러분! 서기 2천년을 바라보며 변해 가는 국제조류와 새 시대를 향하여 통일조국의 위대한 이상을 대결과 전쟁의 고개를 넘어서서 한 동족으로서 같이 설계해 볼 수는 없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 새 시대를 향한 위대한 선진조국의 건설을 향해 새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거창한 국가목표는 결코 남한만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또 머지 않은 장래에 남북한을 합한 통일조국의 공동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하여 21세기를 바라보며 이 겨레의 이상과 역량을 총집결한 새 역사의 창조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인간을 무엇보다도 존중하는 건실한 민주풍토 위에서 행복하게 사는 문화복지사회를 이루어, 옛날 공자께서 인인지국육거기지-어진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가서 한 번 살아보고 싶다고 했듯이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우리 나라로 와서 살아보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새 나라를 만들어 세계의 살기 좋은 새 모범국을 이루는데 남북이 같이 건설적인 협동을 이루어 볼 수는 없겠습니까?

이와 같은 곳에 이르는 길은 대결의 길이 아니요 대화의 길이며, 전쟁이 아닌 평화협동의 길을 따라 나섬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민족 앞날의 영원한 이상을 바라보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생각하며 이 시기에 이 민족의 가장 아쉽고 절박한 이산가족의 재회문제를 우리 이산가족 자신들이 기다리다 못해 아니 이 이상 더 참을 수 없어 여기에 직접 나서기로 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세계 열강에 의해 묶여진 원한의 38선을 우리는 해방 38년을 맞는 올해에 민족의 화합으로 꼭

풀어내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것이 한 번에 어렵다고 하면 이산가족 재회만이라도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월남·월북한 1세대 동포들은 하나 둘씩 떠나가고 있습니다. 나라 잃었던 일정 36년간을 학대 속에서 살아 온 당사자, 민족해방을 지켜보고 새 나라의 앞날을 부푼 꿈으로 다짐했던 애국의 시민들이 내 나라의 평화통일 못보고 꿈에도 그리던 내 혈육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한 많은 인생을 살다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새는 죽을 때 그 소리가 아름답고 사람은 죽을 때 그 말이 어질다고 합니다 만 그들이 가슴에 안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무언 속의 유언은 조국의 평화통일이요, 혈육간의 재결합입니다.

오늘 우리는 뜻깊은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를 결성함에 즈음하여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민주평화통일의 그 날이여

어서 속히 오라고 외치면서 다음 두 가지의 사항을 실현하는데 북한동포들이 적극 협력하여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산가족의 교신과 생사확인을 민족적 인도적 차원에서 조속히 보장할 것

둘째, 이산가족의 재회를 위한 모든 편리와 기회를 주선하는데 적극 협력하여 줄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위원장 조영식

## 격 려 사

친애하는 1천만이산가족 여러분!

그리고 조영식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

우리 민족의 앞을 내다보는 각계인사들의 진지한 뜻을 하나로 모아 오늘 이 자리에서 마침내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결성대회]를 거행하게 되는데 대하여 본인은 진심으로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을 갈라놓은 인위적 장벽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형제들과 생이별하여 똑같은 하나의 강토 안

에서 서로 생사조차 확인할 길 없이 살아오고 계신 이산가족 여러분들은 국토의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도 뼈아프게 체험해 온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가족끼리 한데 모여 혈육의 정을 나누면서 동고동락의 삶을 영위함은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인간 본연의 생활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1976년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인도법회의에서도 이산가족의 재회를 [가족의 당연한 권리]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진실로 이산가족의 재회를 추진하는 인도적 사업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신성한 활동이라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그 동안 1천만이산가족의 비원을 풀기 위해 남북적십자회담을 추진하는 등 온갖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 사업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북한공산주의집단의 무성의한 자세 때문에 남북적십자회담은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공산주의 집단은 우리가 민족의 화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제시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과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회담]을 거부하고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소집하자는 등 엉뚱한 제안을 들고 나와 고의적으로 남북한간의 대화를 계속 회피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의 관계개선과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최근에는 다시 [남북한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대표회의]개최를 북한측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남북간의 접촉과 대화를 통하여 우리 조국의 현실과 장래문제를 민족적 양심에서 서로 진지하고 실효성 있게 협의하여 그 해결책을 강구하려는 우리의 새로운 정의와 아량을 보여주려는 뜻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산가족 여러분들이 스스로 헤어진 혈육을 찾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나선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 뜻이 이산가족의 재회를 실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분단된 우리 민족의 혈맥을 잇고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국민적 노력으로 승화되고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숭고한 뜻과 여러분의 정당한 길은 아무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세계 인류의 양심이 여러분의 편이며 우리 민족전체의 염원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재회문제를 비롯하여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면 북한측과 어떠한 문제라도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혀두고자 합니다.

우리 겨레의 숙원인 이산가족재회추진 사업이 지금과 같은 남북간의 단절과 대립을 극복하고 화합과 통일의 길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 국민 모두가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앞날에 많은 보람과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83년 2월 9일

국무총리 김 상 협

전두환 대통령 각하에게 보내는 메시지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민족의 번영과 조국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여 헌신하고 계시는 대통령각하께 만강의 경의를 표합니다.

국토분단과 6·25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혈육들과 줄지에 헤어져 생이별을 당한 채 3~40년이란 긴 세월을 살아온 우리들 남북이산가족들은 오늘 1천만이산가족 재회추진위원회의 결성대회를 거행함에 즈음하여 우리들 안타까운 심정과 결의를 모아 이 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우리들은 그 동안 우리 정부의 줄기찬 대화노력을 지켜보면서 이 같은 숭고한 노력으로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끝내는 실현되고 헤어진 혈육을 만나려는 우리의 애절한 염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의 제의로 1천만 남북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사적인 남북적십자회담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들의 이같은 희망은 한껏 부풀어 올랐으며, 헤어진 가족을 만나는 감격적인 순간에 젖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의 희망과 감격은 북한공산집단의 대화중단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긴긴세월 단장의 고통속에서도 한시도 헤어진 혈육의 만남을 포기할 수 없었으며 더우기 북한공산집단의 비인도적인 행동에 짓눌려 천륜으로 맺어진 혈육의 정이 그대로 끊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우리들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남북이산가족 문제를 남북한간의 정치현실을 초월하여 인도적으

로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같은 정부의 노력을 온 국민이 또한 지지성원해 온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각하께서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천명하신것을 비롯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작년 제37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하여 북한을 포함한 공산국가에 거주하는 우리동포들의 자유로운 모국방문 보장을 선언함으로써 이산가족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려는 실천적 노력을 친히 보여주신데 대하여 우리들 이산가족들은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남북이산가족들의 한맺힌 비원을 풀어 주려는 우리 정부의 부단한 노력과 우리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들 이산가족 당사자들은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불행한 처지를 한탄하면서 막연히 혈육을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혈육을 찾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뜻을 보다 조직적으로 펼쳐 나가기 위해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결성대회를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들은 이 기구에 이산가족들의 충의를 모아 우리들의 비극을 종식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사업을 추진해 나갈으로써 남북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기여하고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성원에 미력하나마 보답코자 합니다.

우리들은 남북한간의 인위적 장벽이 아무리 높고 험난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혈육간의 정을 영원히 끊어놓을 수 없다는 당연한 이치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노력이 쌓이고 쌓이면 반드시 그 장벽이 헐리고 말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오늘 우리들 이산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의 결의를 다짐함에 있어 우리들은 꿈에도 잊을 수 없는 혈육간의 재회를 실현시키고 나아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는 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려는 우리들의 노력과 활동에 대하여 대통령각하께서 전폭적으로 지원, 격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북한측에 대해 남북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속히 호응해 나설 것을 재삼 촉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대통령각하의 영도로 우리나라와 민족이 보다 더 융성 발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대통령각하의 건강과 가내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1983년 2월 9일

1천만이산가족 재회추진위원회 위원 일동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메시지

UN사무총장 각하

UN의 기능과 권위를 존중하는 본인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시는 각하에게 한국 1천만이산가족을 대표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국에서는 1945년 국토가 분단되고, 1953년 휴전선이 설치됨에 따라 1천만의 이산가족이 생기고 3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남과 북으로 갈려 서로의 생사조차 모르는 슬픈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년이면 이산일세대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는 시기이기에 한국에서의 이산가족의 재회는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들의 애절한 소망을 풀어주기 위해 그리고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위해 여러 차례 호소한바 있었고, 지금 전두환대통령께서도 동족상잔을 막고 민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우선 이산가족 재회부터 성취시키려고 여러번 대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여지껏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1천만이산가족들은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 직접 나서기로 결의하고 지난 2월 9일 1천만 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결성대회를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정치적 신조나 사회체제를 강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염원하는 바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오로지 이산된 가족의 생사만이라도 알고자 하는 것이며 그리운 혈육의 재회를 통해 평화통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977년의 제네바 제일추가외정서가 「가족의 생사를 알 인간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대해 UN대표가 이산가족의 재회는 이제 인간의 기본권중의 하나로 되었다고 언명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또한 가족의 이산이 있는 중국, 독일, 베트남, 팔레스타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서로 왕래할 수 있고 서신교환은 물론, 선물교환마저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인도주의에 대한 무시가 국제분쟁의 원인이 되고 대전을 유발한 역사적 선례를 보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정세는 중동 및 유럽에 못지않게 세계에 충격을 줄 것이며 한 지역의 불안이 세계로 파급될 수 있음을 생각할 때 한국에 있어서의 이산가족의 재회는 인도적 지상명령일 뿐 아니라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할 것입니다.

우리는 귀하가 한국에 있어서의 이산가족들의 재회를 실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바라며 우선 그들의 생사확인을 위하여 그들과 서신교환이 가능하도록 북한측을 설득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과거 Waldheim 사무총장이 남북한간의 대화나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서울·북경·평양을 왕래하면서 진력한 바 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결실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탁월한 영도력과 웅대한 경륜을 가지신 귀하께서 적극 협력하신다면 문제해결의 실

마리는 기필코 풀리게 될 것임을 우리 1천만이산가족들은 믿어 마지 않는 바입니다.

귀하께서 한국 1천만 이산가족의 은인으로서 한국의 역사에 길이 빛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또한 귀하의 따뜻한 격려의 말씀과 협조를 약속하는 답신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위원장 조영식

### 북한동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북한동포 여러분

조국을 둘로 갈라놓은 인위적 장벽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정든 고향을 빼앗기고 반세기 가까이 한숨속에 살아온 우리들은 오늘도 북녘땅을 향해 소리높이 통일의 노래를 합창하면서 두고온 산하와 혈육을 그리는 마음을 달래봅니다.

인간이 달을 왕복하는 오늘의 우주시대에 우리는 아직도 한 강토안에서 자기 고향땅을 오갈 수 없고, 부모 자식간에 안부편지 한장 띄우지 못하는 불행한 처지야말로 20세기의 과학문명과 인도주의를 등지고 사는 부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통해 한핏줄로 이어 오면서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평화롭게 살고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워온 우리 겨레가 세계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오늘의 단절과 대립의 역사를 언제까지 살아가야 하며 민족의 화합과 통일의 길을 멀리해야 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겨레가 비극적인 골육상쟁과 대결로 민족역량을 허비하는 동안 바깥 세계는 북한동포 여러분이 몰라보게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우리 남한국민들도 이제는 과거의 가난과 낙후의 역사를 말끔히 청산하고 세계속의 한국을 구가하면서 선진조국을 향한 힘찬 전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국제사회는 냉전시대에 쌓아올린 이념과 체제의 장벽을 거두고 서로 개방하고 교류하며 사는 지구 가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민족도 이같은 바깥세계와 시대의 흐름에 역류하지 말고 하루속히 화합과 통일을 위한 대화의 문을 과감히 열어 선진조국 건설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북한동포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남북으로 흩어진 수많은 이산가족들의 절실한 염원을 받들어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헤어진 가족들과의 재회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겨레의 화합과 통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1천만이산가족 재회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이산가족 재회문제는 법률 이전, 정치이전의 인도적 문제로서 어떠한 문제보다도 우선하여 해결되어야 합니다. 남북적십자회담도 바로 이같은 숭고한 정신에서 출발되었으나 북한측이 정치적 조건을 앞세움으로써 유감스럽게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지않아 반드시 남북간에 이같은 인도적 대화가 다시 이어져서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풀어주는 사업이 전개되리라고 확신합니다.

40년 가까운 분단의 세월속에서 1천만 이산가족의 슬픔은 이제 우리민족 모두의 슬픔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천만 이산가족의 재회사업은 곧 6천만 우리 민족의 화합과 통일로 이어지는 훌륭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이나 친척이 서로 편지를 교환하고 또 만날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면 이는 끊어졌던 민족의 숨결을 잇고, 화합과 통일의 튼튼한 디딤돌로 다져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확신에서 우리의 뜻이 열매를 거둘 때까지 꾸준한 노력을 쌓아 나갈 것입니다. 북한동포 여러분도 우리 민족의 화합과 통일에 대한 신념을 잃지말고 상봉의 기쁨을 나누는 그날까지 인내로 모든 고통을 이겨 나가기를 빌면서 남한에 있는 500만 이산가족의 조직인 1천만 이산가족 재회추진위원회의 이름으로 이 글을 보냅니다.

1983년 2월 9일

1천만이산가족 재회추진위원회 위원 일동

### 결 의 문

곧 돌아오마 손짓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고향을 떠난 우리 이산가족들은 남북을 갈라놓은 인위적 장벽을 사이에 두고 어언 반세기 가까이 조국통일의 꿈속에서 가족과 고향을 그리는 우리의 애절한 마음을 달래왔다.

이제 우리는 국토분단의 장벽이 언제 가실지 알 수 없고 덧없는 세월에 나이만 자꾸 늘어나 천추의 한을 품은채 유명을 달리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에 처하여 1천만이산가족 재회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감으로써 조국통일에 기여하려는 우리의 뜻을 내외에 밝히고자 한다.

조국통일은 반드시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이산가족문제는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입각해서 어떠한 조건과 이유에 우선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우리 이산가족들의 굳센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은 단절과 대립으로 점철된 남북간에 민족의 혈맥을 잇고 화합과 통일을 앞당기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이같은 우리들의 뜻이 바로 민족전체의 뜻이며 전인류의 소망임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는 이산가족 재회문제가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넘어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입장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확신하며 인도주의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북한당국의 기도를 강력히 배격한다.

- 우리는 이산가족 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쉬운 방법이 남북간에 사상과 제도를

초월한 인도적 대화를 추진하는 것임을 확신하고 중단된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속히 재개되기를 바란다.

- 우리는 이산가족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민족화합이 선결요건을 확신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정부가 제의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 하루속히 실현되기를 바라며 북한당국은 이에 적극 호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우리가 추진하는 이산가족 재회운동이 조국의 통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며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치 단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1983년 2월 9일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결성대회

# 남북대화 제32호

(1983. 3 ~ 1983. 7)

# < 목 차 >

|  |    |
|--|----|
| 제1부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개최 .....                 | 3  |
| 1. 전두환 대통령 개회사 .....                     | 3  |
| 2. 각계 대표의 정책 토론 .....                    | 9  |
| 3. 각계의 반응 .....                          | 21 |
| 4. 북한측의 반응 .....                         | 27 |
| 제2부 「남북한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 수락 재촉구 ..... | 28 |
| 1. 손재식 국토통일원 장관 성명 내용 .....              | 28 |
| 2. 「민족통일 중앙 협의회」 의장 성명내용 .....           | 31 |
| 3. 각계의 반응 .....                          | 33 |
| 4. 북한측의 반응 .....                         | 40 |

## 제1부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개최

### 1. 전두환 대통령 개회사

-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 수락 재촉구 및 국제의회연맹  
서울총회에 북한대표참가 환영표명 -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의장인 전두환대통령은 1983년 6월 1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제2차 전체 회의에 참석, 개회사를 통하여 『인위적인 분단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족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북한의 이질화책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민족의 단일성을 이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음』을 우려하면서 북한측에 대해 『통일의 주체인 온 겨레앞에 문호를 개방하고 하루속히 남북대화의 광장에 나올 것』을 재촉구했다.

전두환대통령은 동 개회사에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 제의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의 대도를 여는 가장 합리적인 조치』라고 재강조하면서 북한측이 『아직도 우리의 아량과 성의있는 제의를 모두 외면하고 대화의 광장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특히 전두환대통령은 북한측이 『평화통일을 말하면서 평화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또 통일을 위한 그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는 「반평화」, 「반통일」의 모순된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음』을 지적, 『남북한이 진실로 민족을 위하고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면 서로 대화와 교류를 두려워 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고 다시 한번 북한측에 대하여 남북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전두환대통령은 이날 개회사에서 금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70차 IPU(국제의회연맹) 총회와 관련, 『만약 북한의 대표들이 서울을 방문한다면 그들을 같은 형제로서 따듯이 환영할 것이며 그들이 북한으로 돌아갈 때까지 일체의 편의를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전두환대통령은 이번과 같은 뜻깊은 국제적 행사에 북한의 대표들도 많이 참석, 우리민족의 화합된 모습을 온 세계에 보여줄 것을 호소하면서 『이것은 겨레의 염원인 통일을 이룩하는데 매우 귀중한 계기를 만들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두환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개회사 전문은 다음과 같다.

친애하는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과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6천만 동포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국운의 융성과 더불어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불타오르는 겨레의 의지를 모아 조국통일을 향한 힘찬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본인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딘지 2년 동안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길을 앞당기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뜨거운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자문위원 여러분이 그동안 우리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불안요인을 해소시키는데 스스로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착실한 국력신장을 선도함으로써 마침내 통일의 기운이 온누리에 서서히 싹터오르게 한 것은 우리모두 다함께 경하해마지 않을 일이라 하겠습니다.

본인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의장으로서 6천만 겨레의 통일염원과 의지를 결집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엄숙하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근 1세기에 걸친 시련의 민족사를 깨끗이 청산하고 바야흐로 선진된 통일국가를 기약하는 민족저력의 최절항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사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중심 무대에서 당당한 주역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동족상잔과 대립으로 얼룩진 분단의 장벽을 하루속히 극복하는 일이야말로 그 제일의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나라가 해방된지 38년이 되도록 계속되고 있는 동족간의 단절은 민족의 역량을 낭비하고 민족의 안녕을 위협하는 시련과 고통의 근원인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체제내의 모순이 극도에 달한 북한공산집단의 심상치 않은 도태와 그칠줄 모르는 대남도발기도는 언제 또 다시 동족상잔의 참화를 불러 일으킬지 모르는 불안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격동과 혼미가 지배하는 오늘의 국제정세 또한 한반도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상황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스스로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한 형제끼리 만난듯 거리낌없이 서로 만나 진정한 화합과 통일의 길을 시급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민족의 장래와 현실을 똑바로 보고 1980년대에 기필코 민족화합과 민주통일의 전기를 열 수 있도록 튼튼한 주체적 역량을 길러 나가야 하겠습니다.

통일성업은 남이 아닌 우리민족 스스로 주체가 되어 노력해 나가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로서는 통일과업이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온 겨레가 슬기와 힘을 총결집하여 우리를 둘러싼 국제환경까지도 통일대업을 달성하는데 유리하도록 주체적으로 이끌어가야만 비로소 통일의 길은 우리앞에 활짝 열릴 것으로 본인은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동포여러분!

남북이 1300년 이상을 단일국가, 단일민족으로 살아왔다는 역사의 뿌리는 민족통일의 원동력이며 그 기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위적 분단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족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북한의 이질화책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민족의 단일성을 이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참으로 중대한 기로에 서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서 우리가 통일의 실마리를 잡지 못한다면 단일민족으로서의 우리의 뿌리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구한 민족사의 수호를 위하여 우리는 대결의 시대를 대화의 시대로, 그리고 갈등의 시대를 화합의 시대로 이끌어 가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북한공산집단은 입으로는 민족과 통일을 말하고 있으나 행동은 그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통일을 말하면서 평화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또 통일을 위한 그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는 「반평화」, 「반통일」의 모순된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공산집단은 민족의 단결을 입에 올리면서도 실제로는 공공연하게 민족성원간의 갈등을 추구

하여 분열노선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이나 통일문제를 정치선전에 악용하는 태도는 버려야 할 대결시대의 유물입니다.

본인은 제5공화국 출범 이후 민족화합과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하여 적극적이고도 포용적인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습니다.

본인이 이미 밝힌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 제의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의 태도를 여는 가장 합리적인 조치로서 내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우리의 아량과 성의있는 제의를 모두 외면하고 대화의 광장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로 말을 하지 않는 통일」은 통일이 아니며 「서로 오가지 않는 통일」도 통일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대화와 교류를 기피하는 것은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과 마찬가지로 하겠습니까.

남북한이 진실로 민족을 위하고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면 서로 대화와 교류를 두려워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북한측에 대하여 통일의 주제인 온 거래 앞에 문호를 개방하고 하루 속히 남북 대화의 광장에 나오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세계는 이민족끼리도 이념의 장벽을 넘어 서로 개방하고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지구촌 시대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루 빨리 서로 담을 헐고 화합과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여 이러한 개방의 역사적 대세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내외 동포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10월 서울에서는 제70차 국제의회연맹총회가 열립니다.

이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수많은 나라의 대표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 행사에 북한의 대표들도 많이 참석하여 우리 민족의 화합된 모습을 온 세계에 보여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거래의 염원인 통일을 이룩하는데도 매우 귀중한 계기를 만들어 줄 것으로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만약 북한의 대표들이 서울을 방문한다면 그들을 같은 형제로서 따뜻이 환영할 것이며 그들이 서울에 와서 북한으로 돌아갈 때까지 일체의 편의를 제공할 것임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화와 발전 그리고 고난과 시련의 파도가 세차게 몰아치는 세계사의 전환점에서 선진조국의 창조와 통일조국의 구현을 위해 신비에 가까운 민족의 생명력과 저력을 집중하여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다함께 복된 삶을 누리는 번영된 국가를 건설하고 남북한의 6천만 동포가 화합하여 한 울타리 안에서 평화롭게 생활하는 통일조국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이룩하고자 하는 지상의 목표이며 본인의 간절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굳건한 안정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의지와 저력을 한데 모아 나가야만 하겠습니까.

정치·사회적으로 안정이 확보되고 이를 기초로 국력이 힘차게 뻗어나야만 비로소 통일의 기반은 확고하게 구축될 것이며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평화 통일은 꿈이 아닌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정은 아무런 노력 없이 손쉽게 달성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안정이 흔들리기를 고대하고 있는 세력을 우리는 지금 바로 곁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공산집단입니다.

우리의 안정을 흔드는데 혈안이 된 북한공산집단은 우리 사회 내부에 극도의 혼란을 조성하여 우리의 저력을 분산시킬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최근 그들의 대남 흑색 선전기구인 이른바 통혁당 방송을 통하여 우리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는 악의에 찬 허위선전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기도의 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들의 얕은 술책에 현혹될 우리 국민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5공화국의 헌법은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온 국민의 여망을 모아 탄생된 새 시대의 장전입니다.

이 헌법은 과거 우리의 국민적 저력을 분산시켰던 장기집권 시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 단임제를 규정하는 등 조항조항마다 국력신장과 국민화합을 위한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치사에 건강하게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국력이 더욱 더 튼튼해질 것이라는 점을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분명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어떠한 모략을 하건 또 어떤 형태의 도발을 해 오든 우리 국민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안정의 기틀을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한 나라의 발전은 어느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 더욱 튼튼하게 비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언론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모든 국민이 국민 화합을 해치거나 국가 발전에 유해한 일들을 앞장서 삼제하고 안정의 지속적인 확보에 적극 기여할 때 국가 발전의 토대는 한층 굳건하게 다져질 것입니다.

따라서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여러분은 우리의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안정이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평화적인 조국 통일의 지름길임을 명심하고 이를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의장으로서 우리가 나라 안팎의 어려움을 헤치고 국력을 신장시켜 기어코 평화 통일의 성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사회의 안정이 제일 큰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여 만일 이 같은 안정을 해치는 불안 요인이 있다면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단호히 척결해야 할 것임을 특히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 선진조국 창조의 역군으로서, 그리고 조국 통일의 주체로서 빛나는 민족사를 개척하는데 우렁찬 전진을 계속해 나갑시다.

영광의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자문 위원 여러분들의 헌신적 노력을 당부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복된 일이 내내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개회사를 통해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 회담」의 수락을 재 촉구하는 동시에 금년 가을 서울에서의 IPU(국제의회연맹)총회와 관련하여 북한 대표의 참가 환영을 표명한 것은 한 마디로 그 동안 우리 정부가 포용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실천적인 통일노력과 민족화합 정신을 다시 한번 과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지난 1981년 1월 12일 전두환 대통령이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 상호 방문」을 제의한 데 이어 동년 6월 5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 회담」을 제의한 이래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측에 대해 남북한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 회담」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화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측은 우리의 성의있는 통일대화 제의를 계속 외면하고 대화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내용의 부당한 전제조건만을 내세움으로써 실제로는 대화 재개를 가로막는 「반 대화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가 북한측에 대해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 개최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의 시대적 상황과 요청에서 그 정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남북한간의 여러 가지 대화 형태 가운데서도 쌍방의 최고 책임자들이 직접 만나는 것이 남북한간의 현안 문제와 민족의 장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빠르고 실효성 있는 대화 방식이라고 믿고 있다. 정상회담은 우선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인 동·서독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보나 기타 다른 분쟁 국가간에 관계 정상화 교섭 과정에서 그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바 있는 대화 방식인 것이다.

또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그동안의 남북접촉경험과 남북한간에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의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1970년대 초 이후 남북한 간에는 여러 갈래의 실무급 대화와 접촉이 진행된 바 있으나 쌍방은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여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보다는 명분론에 치우친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소극적인 태도에 머물렀다. 따라서 그러한 비생산적인 논쟁이나 명분론의 차원을 떠나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보다 고위급 정치 회담이 불가피한 것이다.

또한 남북한간에 당장 해결해야 할 긴장완화와 전쟁재발 방지문제와 같은 군사적 성격을 띤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결단력과 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쌍방의 최고 책임자들이 하루속히 만나야 됨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은 남북관계개선의 돌파구를 찾고 접촉과 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루 속히 열려야 한다.

그리고 금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IPU(국제회의연맹)총회에 북한 대표들을 초청한 것은 「이데올로기」를 초월해서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화합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로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 남북한간에 교류와 대화를 통해 통일 여건을 조성해 보겠다는 우리의 실천적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오늘날의 남북한 관계는 북한측의 끊임없는 도발로 인하여 긴장이 고조되고 상호불신과 적대감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남북분단의 벽을 더욱 두텁게 하고 있다. 이런 현실 하에서 분단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길은 무엇보다도 먼저 상호 교류와 협력의 문호를 개방하여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IPU총회의 서울 개최야말로 우리 겨레의 자부와 긍지를 드높이는 민족적 행사가 될 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과 유대를 돈독히 하는 역사적 대제전이 될 것이며 이러한 모임에 남북한이 다같이 참가한다면 민족적인 화합과 단결을 모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그동안 IPU총회의 서울 개최를 번복시켜 보고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방해 책동을 일삼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 민족의 긍지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오늘의 세계는 이민족끼리도 이념의 장벽을 넘어 서로 개방하고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지구촌」 시대인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볼 때 동족이 화합하지 못하고 계속 대결의 장으로만 치닫는다면 온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은 더욱 더 요원할 것이다.

따라서 전두환 대통령이 이번 개회사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IPU총회에 북한 대표들도 참가하여 우리 민족의 단합된 모습을 온 세계에 보여 준다면 이것은 겨레의 염원인 통일을 이룩하는데 매우 귀중한 계기를 만들어 줄 것임에 틀림없다.

## 2. 각계 대표의 정책 토론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는 1983년 6월 1일 1만 74명의 국내외 자문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평화통일정책추진에 관하여 활발한 정책 토론을 벌였다.

이날 정책 토론에서 정계, 문화 예술계, 종교계, 노동계, 이북 5도민회, 미주 지역 및 일본 지역의 재외 동포 등 각계 각층을 대표한 자문 위원들은 조국의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지하고도 진취적인 의견을 개진, 정부에 건의하였다.

동 토론에서 노동계를 대표한 김규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남북한 근로자들로 산업 시찰단을 구성, 상호 교류하고 남북의 근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노동자 체육대회와 문화제」를 열자고 제안했으며, 문화 예술계 대표인 신영균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은 남북한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판문점에 「남북문화교류센터」를 남북한 공동으로 건립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정당 대표로 나온 민주한국당의 신영석 통일문제특별위원은 『비판적인 재외 동포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자주 초청하여 우리의 발전상과 평화통일 노력을 직접 보고 느끼도록 하자』고 강조하고 『IPU(국제의회연맹)총회에 참석하는 세계 각국의 정치인들 중 평양 방문이나 북한 관광을 희망하는 대표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판문점 통과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제천명하자』고 주장하였다.

한편 동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온 겨레 앞에 평화통일 의지를 새로이 다짐하고 남북한간의 모든 현안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측이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등 우리측이 제의한 대화에 조속히 호응할 것을 촉구하는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각계 자문위원들이 벌인 정책토론 내용전문과 결의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정계 대표 발언문

(민주한국당 통일문제 특별위원 신영석)

본인은 정계의 일각에 몸을 담고 있는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의 한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통일에 관한 평소의 소견을 피력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찌기 우리 민족은 유구한 민족사의 전개 속에서 단일민족으로서의 빛나는 문화, 평화 애호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왔으며 수많은 외침과 국난속에서도 단일민족국가로서의 단결과 긍지로 이를 연면히 이어 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제2차 대전의 종전처리과정에서 동·서 양극의 작용은 우리 민족의 의사에 반한 국토분단의 비애를 겪게 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8·15당시의 한반도에 있어서 남북분계선이었던 북위 38도선은 6.25동족상잔을 겪으면서 휴전선으로 바뀌었고 마침내는 민족을 둘로 갈라놓은 민족분단선이 되고 말았으니 이는 분명히 우리 민족 자신의 과오에 대한 응보도 아니고,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도 아닌 타의에 의한 민족양단의 비극이었습니다. 더우기 강대국에 의하여, 타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분단의 고통을 우리 민족만이 겪어야 함에 더욱 비애를 느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지상 목표는 조국 통일과 민족의 재결합이며,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은 세계사에 영원히 생존,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5공화국에서는 건국이래 최초로 헌법기관으로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설치하고 정당 초월한 각계각층, 해외 동포의 대표들로 자문회의를 구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민족세력의 결집체로

의 특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 헌법은 우리의 최고 이념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 중흥이며, 대통령은 국민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지는 동시에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평화통일정책 수립, 추진을 위한 자문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정당의 대표를 자문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있음은 우리 나라가 모든 국민이 국가의 정책적 의사형성에 평등하게 참여 하며, 국민의 의사는 정당에 의하여 형성된다는 정당적 민주국가임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통일이 민족적 염원이며 아무리 시급한 과제라 하더라도 이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룩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북쪽의 공산정권도 평화통일을 적어도 말로만은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의 평화통일이란 국토와 민족의 결합이나 민족 전체 구성원의 자유의사에 의한 사회제도의 선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공산혁명을 통해서 적화 통일을 성취하겠다는 것이며, 북에 있어서의 정당이란 일당 독재를 위한 공산당의 존재만 인정될 뿐 그들이 주장하는 기타 정당은 가식적이며 선전적인 의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화 통일은 궁극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논리적으로 2개의 방법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일방이 타방에 무조건 항복을 하고 정권을 이양해 주는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남북 대치 상황과 한반도 주변 정세로 볼 때 이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남북 총선거를 통한 통일의 실현을 들 수 있습니다. 민족성원 전체의 의사를 묻고 이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한 통일이 가장 평화적이며 민주적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의 실현이 당장 어렵다 하더라도 평화 통일의 길은 오직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은 남북한 총선거를 전제로 하는 통일 헌법의 제정을 구상하고 있어 이는 민족성원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적 방안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통일문제가 그의 중요성, 곤난성, 국제성으로 인하여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만 그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은 통일문제해결의 접경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측의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켜 이 회담에 응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본인은 이상의 여러 문제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해외동포들을 비롯해서 비판적인 재외동포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자주 초청하여 우리의 발전상과 평화통일의 노력을 직접 보고 느끼게 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그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민족 화합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수년간 조총련계 동포들에게서 얻은 경험과 이번의 납치 중공여객기의 승객, 승무원에게 보인 우리 정부의 호의와 우리 국민의 태도, 중공대표와의 회담 등은 이 제안의 효용성을 증명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금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의회연맹총회에 참석하는 세계 각국의 정치인들 중 후평양방문이나 북한관광을 희망하는 대표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판문점 통과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재천명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남북교류의 문을 우회적으로 열게 할 수 있는 길이며, 우리의 개방성과 야망성, 그리고 민족적 성숙도를 표시하는 의지임을 각국의 대표 및 북한측에게 입증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본인은 정부에서 책임있는 자리에는 있지 않으나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 또 조국의 평화

적 통일이란 역사적 소명을 안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민족성원의 일원으로서 위대한 한 민족의 역사창조에 매진할 것을 다시 한번 결의를 다져 봅니다.

자연의 계절은 앞서서 기다려도 때가 되면 찾아오지만 역사의 계절은 자연법칙에 의하여 지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의 힘을 합하여 평화통일이란 위대한 역사의 봄을 맞이하도록 전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 종교계 대표 발언문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회 회장 이상은)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오늘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서 조국이 분단된지 40년이 되도록, 아직도 부모, 자식간의 뜨거운 천륜의 정을 가로막고 있는 인위적 장벽을 허물지 못하고, 그리운 형제간의 사랑을 갈라놓은 정치적 분단선을 허물지 못하고 있는, 이 비인도적인 현실 앞에서 참을 수 없는 슬픔과 수모를 함께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6천만 백의민족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통일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민족의 진정한 해방은 성취되는 것이요, 평화통일만이 조국의 완전한 광복을 완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통일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비원을 심장 가득히 담고, 통일에 관한 저의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산주의는 이미 녹슬어 버린 낡은 논리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신과 절대자의 권위를 부정하면서 지구상에 등장할 때, 그들은 무산 대중에 대한 사랑과 그들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미명을 분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에 현존하는 공산주의는 사랑과 인도주의는 모두 퇴색해 없어지고 오직 잔인하고 무자비한 폭력주의만으로 남아 있게 됐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그 좋은 예를 우리는 종교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공산 정권은 종교를 탄압하고 말살시켜 버렸습니다. 사원과 성당과 예배당을 차례로 폐쇄하고 파괴해 버렸습니다.

수많은 성직자들을 단지 성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죄도 없이 감금하고 추방하고 심지어는 살해했습니다. 또 일반 신도들조차, 단지 그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생존권까지도 박탈해 버렸습니다.

모든 인간의 정신적 가치를 부정하고 인간의 존엄성은 물론, 인권과 자유를 여지없이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조된 위장 종교 단체를 만들어 우리와 세계의 이목을 혼란시키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종교가 성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직적이며 계획적으로 파괴해 버린 것은 그들의 공식문서에서도 이미 확인된지 오래입니다.

이 위장 종교단체들은 종교인들이 가지기 쉬운 온정주의와 관용성 그리고 호의를 악용하고 유혹하려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 치졸한 연극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조소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일 북한의 공산 당국자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종교인이 북한을 직접 방문하여

「과연 북한땅에 종교가 살아 있는가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과연 북한동포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를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가?」

「북한에 과연 사원과 성당과 예배당들이 옛날처럼 있는가를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가?」

이 우리의 물음에 북한의 공산당국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직접 해명할 정치도의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이 물음에 회답을 보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저들의 선전이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의장이신 전두환 대통령 각하!

저는 이상의 물음을 우리의 대북한 제의로서 정책화 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북한에 종교가 있고 종교인이 있다면 같은 종교인이 방문하는 것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통일을 기원하는 것은 본래부터 한 형제요 자매였던 우리 겨레가 한 용마루 밑에서 오손도손 정답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통일은 같은 동포끼리의 사랑과 이해로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통일을 위한 남북대화에는 사랑과 이해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평양의 공산집단이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겨레와 동포에 대한 최소한의 사랑마저 저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북한이 하루 빨리 민족의 화합과 사랑을 전제로 하는 평화통일의 대도에 우리와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 문화예술계대표 발언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신영균)

우리 겨레의 비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의 소망과 국론을 결속하여 오신 우리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의장이신 대통령 각하께 깊은 경의를 드리며, 아울러 각하께서 제안 천명하신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 우리 민족의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임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이를 지지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북한당국자들이 주장하는 통일정책이 선 적화 후 통일을 획책하는 것으로서 이는 결과적으로 조국통일의 현실적 가능성을 저버리고 나아가 민족분열의 영속화를 조장하며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부단히 위협하는 책동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모든 문화예술인들은 과거 38년 동안의 남북분단으로 인해 민족문화예술의 이질화가 날로 심화되어 왔음을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시 문화예술은 겨레의 생존과 번영, 연면한 민족정신의 전통과 창조의 표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문화예술이 이데올로기를 표방하여 오직 저들의 호전적, 선전·선동과 세습독재 체제를 날조, 미화하는 도구로 전락하여 유구한 민족문화의 정통성을 파괴하고 이질성을 심화시키고 있음은 참으로 통탄할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국력이 신장하고 우리의 민족문화 역량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1988 년도의 서울올림픽 대회와 함께 문화올림픽을 펼쳐 전 세계에, 고유한 문화전통과 그 우수함을 선양하고자 하는데 반하여 북한의 문화예술기관이 오히려 민족적 긍지와 단합을 비방하고 자해를 일삼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남북한간의 체제와 사회발전의 우열이 뚜렷해진 오늘날, 가일층 자유민주국가를 공고히 수호하고 민족정통의 문화예술을 더욱 힘차게 승화시키므로써 마침내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의 도도한 문화조류에 동참하도록 하는 책임감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비록 동족분열과 조국분단의 비운으로 이 겨레의 회환이 하늘에 사무치고 있습니다만 끝내 동족 재결합은 역사의 필연이며, 그 재결합의 원동력은 반드시 같은 혈맥의 동족애와 민족사가 계승되어 온 문화전통의 뿌리에 있음을 확신하며, 역사는 결코 이와같은 민족 자존의 진리를 거역할 수

없으리라는 신념을 우리들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문화예술인의 사명감으로 삼을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모든 문화예술인은 북한당국이 진심으로 조국통일을 원할진대 참다운 민족화합의 성스러운 과업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의 문화예술인 또한 한결같은 민족적 염원과 인간적 양심으로 돌아와 피땀어린 진통과 영광으로서 진정한 민족문화예술 창조에 동참하기를 외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남북한의 문화예술의 동질성의 회복이야말로 하나의 바람직한 문화적 대화이며 마음과 마음의 화합과 접근으로서 조국통일에 기여하는 민족적 합의 기반의 지름길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인은 남북한 문화교류가 조국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임을 믿으며 이 사업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남북한 사이에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남북한 문화교류에 있어서는 먼저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비이데올로기적인 학술분야에서 자료의 교환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민속·전통예술을 비롯한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는 비정치적, 비이데올로기적 대상을 선별하여 교환공연, 전시, 출판 등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와같은 남북한 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문점에 「남북문화교류센터」를 남북한 공동으로 건립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군사적으로 긴장, 대립하고 있는 관문점에 뜻깊은 문화적 공간을 건립하여 특히 민족적 유서가 깊은 명절과 기념일에 즈음한 문화교류행사를 마련하여 남북한이 한 핏줄기의 동족임을 상기하여, 조상과 친지의 문안을 나눌 수 있는 민족 공감대의 통로가 마련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끝으로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남북한 문화교류의 성과를 통하여 북한의 문화예술이 우리의 창조적 문예활동에 고무받아 점차 각성동참할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앞으로 더욱 우리의 문화예술의 우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배진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동계대표 발언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규벽)

저는 우리나라 8백만 근로자를 대표하여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조국의 평화통일에 관한 우리의 관견을 말씀드리고자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8백만 근로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노동자의 지상천국」이라는 구호가 허구와 기만에 찬 위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로 구성된 공산당이 노동자만을 위해 통치한다는 「폴랜드」에서 근로자들이 왜 공산당 산하의 노조를 거부하고 자유노조를 결성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찾겠다고 피나는 투쟁을 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월남 공산화 이후 월남의 근로자들이 왜 성공률이 2분의 1밖에 안되는 국외탈출을 위해 「보트 피플」이 되는 위험을 전개하였는가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공산주의가 근로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우상이 될 수 없음이 백일하에 폭로됐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내걸었던 꿈과 이상은 박물관의 골동품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근로자들은 비록 오늘이 어렵고 힘들다해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근로자들은 각자의 희망과 보람에 따라 노동하는 것이요 명령에 따라 노동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은 나와 내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노동하는 것이요, 수령과 그 부자를 위해

노동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근로자들은 조국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제2의 도약을 위해 일할지언정 어느 특정한 정당을 위해 일하지는 않습니다.

남북의 근로자 중 어느 쪽의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있는가는 누가 보아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양의 김일성 부자는 저들이 만들어 놓은 공산왕조가 「지상의 낙원」이라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평양의 왕조 집권자에게 몇가지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한이 정말 「지상의 낙원」이라면 우리 대한민국 근로자들이 그 낙원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근로자들도 여기에 와서 한국 근로자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북한의 노동단체의 교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남북한 근로자들로 구성되는 산업시찰단을 만들어 서로 교류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쪽의 근로자들이 더 좋은 노동조건 하에서 일하고 있는가도 저절로 명백해질 것이며 공산주의 명령경제체제와 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어느 것이 더 우수한가가 한 눈에 판가름날 것입니다.

세째로 남북의 근로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노동자 체육대회와 문화제를 열자는 것입니다. 남북의 근로자들은 근로자라는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감쌀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근로자들은 명실공히 통일추진의 핵심세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역시 평화입니다. 우선 산업평화는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옵니다. 동시에 정치적, 사회적 평화가 산업평화를 보장해 주는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움직일 수 없는 진리입니다.

남북한 간의 긴장이 해소되고 군사, 정치적 평화가 보장돼야 근로자들이 잘 살 수 있는 보금자리인 산업평화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긴장을 완화할 남북대화는 시급히 개최되어야 하고, 민족의 화합을 이룩한 다음 민주적으로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김일성 부자에게 북한 근로자들을 기만하는 가면의 탈을 하루빨리 벗고 민족적 양심으로 돌아와 우리의 제의를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 이북5도대표 발언문

(이북5도민회중앙연합회 대표의장 안명연)

본인은 500만 월남 가족의 한 사람인 실향민이 올습니다.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을 찾을 때는 2·8청춘이었는데, 어느새 우리들의 머리에는 백발이 성성해 지고 있습니다. 이 슬한 세월 속에서 북에 두고 온 노부모들은 지금 생존해 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생사조차 모르고 살아야 하는 곳은 오직 이곳 하나뿐일 것입니다.

우리 실향민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절실한 소망은 흩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지극히 인간적이고 간절한 소망은 북한 김일성 집단의 트집과 억지때문에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1972년초에 시작된 남북적십자회담을 김일성집단이 중단시키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우리 실항민들의 소박한 소망은 이루어 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산가족들이 편지를 주고받고 서로 만나 보는 일도 무슨 환경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억지를 내세워 먼저 주한미군이 물러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반공정책이 포기되어야 한다는 등 실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내놓고 회담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들이 헤어진 가족들과 소식을 교환하고 서로 만나는데 주한미군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우리정부에서 이산가족들을 찾아주자고 호소하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무슨 법이 어떻고 정책이 어떻다는 구실을 내세울 이유가 있습니까?

500만 우리 이북5도민은 누구보다도 김일성 공산당의 정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셈은 너무나 뻔합니다.

첫째는 김일성이 6·25에서 참패한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지금도 한국의 적화통일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같은 목적아래 전쟁준비를 위해 피도 눈물도 없이 북한동포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착취하려는 것입니다.

세째로, 그러기 위해 북한동포의 눈과 귀를 막고 숨막히는 폐쇄사회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 자리에서 김일성도당에게 그들이 북한주민들을 철두철미 노예화하고 대남적화통일을 이룩하여 이 땅에 김일성 부자지간의 봉건왕국까지 실현하려는 어리석은 망상에서 하루속히 깨어날 것을 촉구합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우리들은 대한민국에서 반평생의 삶을 살면서, 인간의 참다운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의 야망이 얼마나 우스운 백일몽인가 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북의 망상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진리는 우리편에 서 있습니다. 정의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민족사의 전통성이 우리를 엄호하고 있습니다.

평양의 김일성 부자집단은 지금도 소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서투른 연극을 꾸미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서툰 연극으로는 우리 500만 실항민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땅에서 해방후 민족진영의 조만식선생을 어떻게 회유하려다가 어떻게 숙청했는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같은 공산당 계열이면서도 인맥을 달리했던 조선신민당을 김일성 일파가 박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948년의 남북협상이라는 미명아래 민족진영의 김구선생 등을 어떻게 우롱하고 희롱했는가를 보았습니다.

역사의 실수는 단 한번으로 충분합니다. 두번 다시 실수는 필요없습니다. 북쪽이 아직도 낡은 시대의 수법으로 탈피치 못하고 연방제 운운하는 것은 가소롭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이제 더이상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이 조국전체의 땅이 김일성 부자집단의 의도대로 적화된다면 그것은 3천리 강토 전부가 「특별독재대상구역」이 되고 만다는 것이요, 6천만 민족 전체가 나치스의 「아우슈비츠」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곧 민족과 민족사의 말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김일성 부자가 지금이라도 전죄를 뉘우치고 민족의 양심과 인간의 양심으로 돌아온다면, 굳이 지난날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민족간의 화합이라는 대전제 앞에서 그와 함께 평화적이며 민주적으로 조국을 통일할 방

도를 찾을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김일성 부자는 우리 전두환대통령각하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흔쾌히 응해 나서야 합니다. 그것만이 민족의 공멸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중단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재개하는 데 호응해 나서야 합니다. 우리 실항민들은 이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가족들을 다시 한번 만나보지 못하고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김일성 집단은 1천만 이산가족들의 한 맺힌 염원을 외면하는 민족적 죄를 더이상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이 점을 평양집단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미주지역대표 발언문

(평통와싱턴지역협의회 회장 마종인)

존경하옵는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60만 재미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도 밤마다 조국의 산하를 달리는 꿈을 버리지 못하는, 조국애를 가슴 가득히 안고 달려왔습니다. 이자리에서 평화통일에 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저는 감격과 흥분으로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동포가 조국의 분단으로 말미암아 겪어야하는 고통은 모국동포가 겪고 있는 그것에 결코 못지않게 아프고 쓰라린 데가 있습니다.

「코리아」라는 조국의 대명사는 항상 남쪽이냐, 북쪽이냐는 질문에 부딪쳐 자기조국의 존재를 몇번씩이고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운 아픔은 해외동포의 처지에서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과 행복을 추구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있기에 아픔과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미국땅에 한국인의 이미지를 떳떳하게 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평양의 공산정권의 마수가 미국 땅에까지 뻗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사회가 보장하고 있는 자유로운 활동, 그리고 일부 낭비생활을 하고 있는 동포들을 이용하여 그들이 한인사회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미국관 조총련을 조직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미국사회에서 한국인의 통일적 의사 표명을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론정치의 모범국이라 할 미국사회에서 한인사회가 분열된다면 우리들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제5공화국이 새 시대의 창조를 부르짖으면서 민족화합을 들고 나왔고, 이에 따라, 일부 비판적 인사들까지 폭넓게 조국이 포용하여 평양의 공산집단을 대변하는 사람들의 분열공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재미동포들은 확고부동한 조국관을 확립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국민화합의 연장선상에서 민족화합의 위대한 이상을 바라보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접하게 된 것은 커다란 힘ियो, 희망이었습니다. 특히 재미동포들도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서 조국의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은 크나큰 영광이요 긍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미국사회에서 우리 한인사회가 하나로 단결하고 화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로 보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단결되고 화합된 힘이 곧 통일의 튼튼하고 강력한 추진력이 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동·서간 평화공존과 전쟁예방을 모색하고 있는 세계정세의 흐름

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안은 한반도에 예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일과 중·소 등 4대열강 어느 나라의 이익도 침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받아 드릴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특히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의 제의는 전세계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보면 극한적 정치대립이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확립한 것은 쌍방 최고통치자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의 결과였습니다.

1972년에 미·소 두 나라의 전략무기제한협정이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닉슨」 미국대통령과 「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직접 대좌한 결과였습니다.

동·서독이 1972년에 쌍방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동·서독 기본조약의 체결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도 「브란트」 서독수상과 「슈토프」 동독수상이 직접 대면한 결과였습니다.

네번의 전쟁을 치룬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1979년 평화협정체결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베긴」 이스라엘 수상과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이 직접 협상을 한 결과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국의 뜻을 하나로 묶기 위해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은 조속히 실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평양정권이 어떤 구실을 붙여 거부한다 해도 그것은 전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평양정치집단이 세계의 흐름을 정확히 보고 그 진로를 깨달아야 하며 우리의 통일방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조국의 강토 위에서 대한민국이 성취하고 있는 번영과 확대되는 자율화의 폭을 보면서 커다란 기쁨과 긍지를 느낍니다. 우리들 재미동포는 조국대한민국이 이미 내디딘 자유롭고 풍요로운 선진조국의 창조가 하루속히 성취되기를 바라며 비록 해외에서 거주하지만 선진조국의 금자탑을 쌓아 올리는 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기여토록 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 일본지역대표 발언문

(재일대한민국거류민단 중앙본부단장 장충명)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재일본한국거류민단의 단원으로서 그 심부름을 맡고 있는 장충명입니다.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말석을 차지하고 있는 불초소생의 발언신청을 허락해주신 조국의 따뜻한 호의와 사랑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조국의 평화통일에 관한 저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 것을 더 없는 기쁨과 자랑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일본한국거류민단의 탄생은 우리나라의 부끄러웠던 근대사가 낳아 놓은 민족사적 비극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날에는 조국 강토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남북대결 못지 않게 일본이라는 제3국에서 더 치열한 남북대결, 더 적나라한 남북대립, 그리고 더욱 가열한 극한적 대치가 벌어지고 있는 조국분단의 아프고 쓰린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조국의 통일에 대한 비원과 열망은 누구보다도 강하고 절실하게 가지고 있다고 믿는 바입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재일거류민단은 평양노동당의 산하기관으로서 평양공산집단의 공관 역할을 하고 있는 조총련과 대결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것은 한마디로 전장을 방불케 하는 것입니다.

이같은 치열한 대결은 제3국에 대하여 우리 민족의 주장이 무엇인가를 하나로 묶어 표현하는 것을 매우 곤란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평양노동당의 지시에 의해 완전히 조종되고 있는 조총련의 극성스러운 활동이 제3국에게는 그것이 일부 한국인의 자유스러운 의사와 주장인 것처럼 오해되고 어느 것이 진정한 한국인의 의사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 거류민단으로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었던 것은 대외적으로 우리 민족의 의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틀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1982년 1월 22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의장이신 전두환대통령 각하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접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첫째, 쌍방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대표로 가칭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하여 여기서 통일헌법을 기초하도록 하며,

둘째, 통일조국의 국호, 대내외정책의 기본방향과 정부 형태는 이 통일헌법 기초과정에서 토의, 합의하고

셋째, 북한도 그들이 구상하는 통일헌법 초안을 정정당당하게 들고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같은 획기적인 제안은 북한의 제안까지도 포용하여 함께 토의함으로써 민족의 뜻과 의지를 하나로 묶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주장과 요구를 대외적으로 하나로 묶어 관철할 수 있는 민족적 권리의 회복을 이 제안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평양 김일성 부자집단은 아직도 이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되어 낡을대로 낡은 소위 고려연방제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집단은 여기서 말로는 남북의 현존체제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현정부가 물러나고 용공정권이 들어서야 하며 미군이 철수하여야만 연방제도 실현되는 것이라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한의 의사를 하나로 묶자는 것이 아니라 북쪽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민족이 화합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결하자는 것이며, 통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하자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조국의 분단이 가져오고 있는 긴장을 풀고 평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이른바 혁명을 위한 투쟁과 파괴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쪽의 제안에 찬성할 수 없음은 누가 보아도 명백합니다.

우리 재일거류민단은 이같은 사실을 일본사회에 알리고 조총련성원 가운데서도 아직 민족적 양심이 남아있는 인사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을 스스로의 임무로 알고 이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의 노력이 주효했음인지 일본의 언론들이 북한의 실상을 사실대로 보도하고 우리의 주장을 액면대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꽤 다행한 일입니다.

특히 나까소네 수상이 서울로 전두환 대통령 각하를 방문한 이래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조국의 평화통일 외교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 우리들을 더욱 크게 고무하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또 조총련의 성원들 가운데서도 북한의 부자세습제도에 염증을 느끼고 어려운 경제현실에 실망한 위에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에 점차 이에 관한 관심과 이해가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재일동포들은 국민의 화합과 단결을 토대로 하여 출발한 제5공화국이 자유화와 자율화의 폭을 과감히 넓히면서 정의와 복지가 충만한 이상국가로 지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런 「선진조국」의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조국의 발전과 번영 속도만큼 그 나라에서 지지받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번영되고 영광스러운 조국은 항상 우리들의 꿈이요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욱 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실현을 위해, 아니 민족의 정당한 권리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 결 의 문

우리는 선진조국 창조라는 웅대한 목표를 향하여 온 국민이 전진하고 있는 보람찬 시점에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발족 2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사명을 깊이 되새기면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희구하는 6천만 우리 겨레의 염원을 한데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조국의 통일과 남북한간의 현안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1. 우리는 전두환대통령이 천명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 우리 민족의 현실문제와 장래 문제를 풀어 나가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임을 확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과감하고도 폭넓은 통일대화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 환영한다.
1. 우리는 북한측이 부당한 구실을 앞세워 남북한간의 대화를 거부하는 그릇된 자세를 버리고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과 남북한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에 호응하여 하루 속히 대화의 광장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북한측이 국제사회에서 민족의 권익과 위신을 훼손시키는 행동을 즉각 중지하고 민족화합의 정신에 따라 민족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추구하는 올바른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영광스러운 선진조국의 창조와 조국의 평화통일 실현을 앞당기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1983년 6월 1일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일동

이상과 같이 만 2년만에 재개된 전체회의에서 각계각층 대표들이 새롭고 보다 진취적인 정책의 견을 개진한 것은 한마디로 조국통일을 향한 온 겨레의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아 우리의 통일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뜻에서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과 관련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통일성업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의욕이 더욱 확산되고 심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확인하며 필요한 제반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그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981년 6월 5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발족된 이래 지난 2년동안 자문위원들이 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각기 주어진 분야에서 1) 통일정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활동 2) 민족화합 민주통일 구현을 위한 이론정립 3) 학술세미나 개최 및 연구활동 4) 해외지지기반 조성 5)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 통일기반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은 이미 객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3. 각계의 반응

전두환대통령이 1983년 6월 1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개회사에서 포괄적인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및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의 수락을 북한측에 재촉구한 데 대하여 국내 각계는 {제5공화국의 실천적 평화통일 노력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라는 반응을 나타내는 한편 특히 금년 가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70차 I P U (국제의회연맹)총회에 북한대표가 참가하는 것을 환영한 데 대해서는 {민족화합을 위한 불변의 집념이며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천명하였다}고 환영의 뜻을 표명하였다.

도하 각 신문들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일관된 통일정책과 부단한 평화통일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논평하면서 북한측에 대하여 민족화합과 통일을 위한 대화의 광장에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평통」 제2차 전체회의

동아일보(1983. 6. 1)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제2차 전체회의가 1일 오전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렸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교포들로 구성된 해외자문위원 8백 39명을 포함, 1만 74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한 이날 전체회의는 평화통일을 열망하는 6천만 우리 겨레의 의지로 가득 찼다.

평통자문위원회회의는 평화통일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기 위해 1981년 6월 5일 발족되었다. 2년전 잠실체육관에서 출범한 평통자문회의는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민족통일이 민족구성원의 창의와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민족의 대화합과 복지에 바탕하여 평화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며 일체의 폭력적 수단을 배제한다고 선언하였다.

지난 2년 동안 평통자문회의는 지역협의회의 단위로 여러 형태의 모임을 갖고 평화통일의 의지를 굳히며 통일정책과 추진에 관한 지혜를 모았다. 특히 이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해외자문위원들은 조국의 평화통일에 관해 남달리 관심을 기울여 온 것으로 평가된다.

2년전 평통자문회의가 출범되던 날 전두환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평화통일의 길을 앞당기기 위해 북한의 김일성과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자고 제안함으로써 세계의 이목을 집중케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전대통령은 김일성과 만나면 그동안 남북한 당국이 제의했던 「모든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의논하자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대통령의 이같은 적극적이고도 포괄적인 남북한 최고당국자 회담제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김일성은 등을 돌린 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이 겨레의 합성을 외면하고 있다. 김은 계속해서 우리의 정부당국과는 자리를 함께 할 수 없다고 기피하면서 「정당·사회단체」회의니 「고려민주연방」이니 하며 터무니없는 제안들을 늘어놓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우리의 정부당국을 부정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북한공산체제에 동조하는 세력이 나타나면 그들과 통일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되풀이 한다는 것은 남한을 공산화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이 말하는 통일은 민족화합에 바탕한 통일이 아니요 「혁명전략」에 기초한 적화흡수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목적이 통일에 있지 않고 적화에 있음을 명백히 알면서도 우리는 김일성집단을 상대로 평화통일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민족적 소명이요 숙명으로 받아들인다. 다시는 이 땅에서 6.25와 같이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이 겨레의 지상과제이기 때문이다.

전대통령이 1일 개회사를 통해 밝혔듯이 북한은 통혁당방송을 통해 「우리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는 악의에 찬 허위선전」을 하며 한국의 「안정을 흔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럼에도

도 불구하고 전대통령은 개회사에서 북한이 「온 거래 앞에 문호를 개방하고 하루속히 남북대화의 광장에 나오기를 촉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대통령은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의회연맹 총회에 북한대표들이 참석한다면 「형제로서 따듯이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올려퍼지는 이 거래의 통일염원의 합성을 겸허한 자세로 경청해야 한다. 북한은 주저없이 남북대화에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평통자문회의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1만 74명의 자문위원들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책략을 직시하고 북한이 적화책동에 광분하면 할수록 평화통일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히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평화통일의 필요성이 절실할수록 자문위원들의 지혜와 용기를 우리 거래는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 「평통」은 통일주도의 기수

서울신문(1983. 6. 1)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평통) 제2차회의가 오늘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국내 자문위원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인 전두환대통령의 주재하에 열린다.

이 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먼저 우리는 이번 회의가 한민족의 민족화합과 민주통일을 구현하려는 우리 국민의 의지와 역량을 내외에 높이 선양, 분단조국의 평화적인 통일기반을 보다 공고히 다지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자 한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하는 자문위원들은 이 국민적 여망에 적극 부응하는 회의성과를 어김없이 거둬주길 당부하면서 그러한 노고에 대해 아낌없이 격려를 보내고자 한다.

주지되고 있는 바와 같이 평통은 지난 1981년 6월 5일 「남북한당국 최고 책임자회담」을 열자고 한 전대통령의 「6·5 대북제외」와 때를 같이 해서 출범한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초당적·범국민적 헌법기관이자 정부에 대한 통일정책 자문기관이다. 그 연륜은 2년 밖에 안되지만 그러나 평통이 이제까지 쌓아 온 활동실적은 참으로 눈부신 바 있다.

당초 국내 각계대표 8천 9백여명의 자문위원으로 발족했던 이 기구가 지금은 미주·「유럽」·일본·동남아시아 등 43개국에 거주하는 해외동포 대표들까지 망라하여 자문위원수 1만74명으로 강화되었고, 주어진 기능에 따른 이들의 헌신적인 활동은 국내외 전국민의 통일실천의지와 역량을 착실히 굳혀 왔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해 1백여개 국가가 지지태도를 표명하기에 이르도록 국제여론을 조성해 온 그 과정에는 이들의 눈에 안보이는 기여가 매우 컸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는 5일로써 발족 2돌을 맞는 평통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이같은 그간의 업적을 자랑스럽게 간직하는 가운데 앞으로의 소임 수행에 가일층의 분발과 노력이 있어야 할 줄로 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대통령이 지난달 18일 김정열 수석부의장 등 평통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당부한 바를 자문위원들 모두가 깊이 명심해야 하리라고 믿는다.

즉 전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환경과 여건은 우리 자신이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하고 {통일성업의 완수는 모든 분야, 모든 계층의 공명과 화합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자문위원 여러분의 중추적인 역할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세계정세를 통일에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 나갈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으며, 그러한 국민적 의지와 역량을 굳건히 다져 나갈 선도적 책임은 평통이 맡아야 한다는 당부인 것이다.

확실히 오늘의 세계정세는 거시적으로 볼 때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또 현재는 북한측이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대해 상투적인 거부반응을 고집하고 있으나 장기전망에서 본다면 심화일로에 있는 그들의 내부적 갈등, 날로 벌어지고 있는 남북간 힘의 격차 등으로 말미암아 그 태도에는 멀지않아 반드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야 말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이같은 대세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 일깨워야 할 때를 맞고 있다. 그리고 그 대세는 우리들 자신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앞당겨 성숙시켜야 하며 그러한 노력의 선도적 기수가 다름아닌 평통임을 거듭 강조해 두고자 하는 것이다.

정치·사회의 안정만이 평화통일의 지름길  
- 전대통령, 「평통」 2차회의서 단임정신재확인

경향신문(1983. 6. 1)

분단조국의 통일과 민족통합이라는 역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5공화국의 헌법기관으로 출범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1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갖고 우리의 통일주도역량의 재결집을 다짐했다.

이번 회의는 특히 일부 자문위원의 임기만료를 계기로 1천1백39명의 자문위원을 해촉하고 1천4백98명의 국내외 자문위원을 위촉, 모두 1만74명의 구성원들이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초당적·범국민적으로 통일의지와 역량을 확인한 것이다.

우리는 초당적·범국민적 기반을 갖추고 제2기를 맞이한 통일정책자문회의에서 채택된 5개항의 결의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국민의 순수한 통일여망에 부응하는 국민대외기관으로서의 이 기구가 평화적인 통일정책구현을 주도하는 구심점이 되기를 바란다.

「평통」 2차회의에서는 {조국의 통일과 남북한간의 현안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결의했다.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합리성을 강조하고 북한측이 대화의 광장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재천명한 것은 우리의 일관된 통일정책과 대화의지에 추호의 변화도 없음을 밝힌 것이다.

우리의 통일정책은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추구로 일관되어 왔다. 1972년의 남북공동성명 이래 6·23평화통일선언(1973년), 상호불가침협정제의(1974년), 남북경제협력기구설치제의(1978년)에 이어 3당국회의제의(1979년), 남북한최고책임자 상호방문과 정상회담제의(1981. 1. 12 및 6. 5 제의), 그리고 역사적인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1982. 1. 22)과 20개 시범실천사업제의(1982. 2. 1), 남북한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대표회의제의(1983. 2. 1) 등이 모두 평화통일을 위한 민족적 의지와 대화정신을 반영한 것들이었다.

전두환대통령은 이번 평통 2차회의에서 {1980년대에 기필코 민족화합과 민주통일의 전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튼튼한 주체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은 우리세대가 기필코 성취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며 민족의 지상과제에 속한다.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는 이점에서 전국민의 통일에 대한 결연한 의지와 희망과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통일주도세력으로서의 역능과 책임을 다해야 할 줄 안다.

전대통령은 특히 IPU와 같은 국제행사에 북한의 대표들도 많이 참석하여 민족의 화합된 모습을 온세계에 보여줄 것을 희망하고 북한대표들이 서울을 방문한다면 따듯이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북한을 대화의 광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6천만 민족의 자주 역량을 과시하고 민족적 긍지를 드높이는 길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의 공감을 느끼게 한다.

한편 전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흔드는 데 혈안이 되고 있는 북한공산집단이 최근 통혁당 방송을 통해 우리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는 악의에 찬 허위선전을 하고 있다고 지적, 평화적 정권교체와 단임정신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전대통령은 {제5공화국의 헌법은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모아 탄생된 새시대의 장전이며 대통령의 단임제를 규정하는 등 각

조항마다 국력신장과 국민화합을 위한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강조하고 {모든 국민은 북한의 악의에 찬 허위선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같은 전대통령의 의지 표명은 첫째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 유언비어를 퍼뜨려 우리의 정치·사회적 안정을 해치려는 북한의 술책에 썩기를 막은 것이며, 둘째 극소수 국민이라도 이에 현혹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모든 국민은 북한의 술책에 현혹되어 국민 단합을 해치거나 국가발전에 유해한 일을 해서는 안될 것이며 지속적인 안정 확보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길이 곧 평화적인 조국통일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평통」 제2차 회의에서 거듭 다짐된 통일실천의지가 국민의 단합된 안보결속과 정치·사회적 안정을 공고히 하는 밑거름이 되고 평화통일방안의 국제적 지지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평화통일 정책의 재확인

중앙일보(1983. 6. 2)

평화통일정책 자문회의는 북한측에 또다시 민족대화의 광장에 나올 것을 촉구함으로써 통일을 향한 우리의 부단한 노력을 재삼 확인했다.

1일 1만여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한 평통 2차 전체회의는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 민족의 현실문제와 장래문제를 풀어나갈 가장 합리적인 방안임을 강조하고 북한은 부당한 구실을 앞세워 대화를 거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사실 통일대화문제는 지금까지 북한의 완강한 거부에 부딪쳐 한치의 진전도 없어 왔다. 지난 1월 전두환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가 만일 가까운 장래에 통일을 향한 민족의 진로를 확고히 세우지 못한다면 또다시 「국제정치의 희생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다.

또 통일원도 지난 2월 「남북한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당국·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를 열자고 제의했다.

이같은 일련의 제의는 북한측이 제기하는 문제라도 일단 토의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매우 개방적인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오히려 갖은 모략으로 이를 증상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 뿐인가. 북한측은 계속 강경한 군비만을 고집, 그들의 전쟁준비 상황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최근 귀순용사들의 입을 통해 내외에 폭로되고 있다.

북한측은 우리의 통일방안이 분단을 영구화한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앉아 분단을 영구화하지 않는 방안을 찾으려 할 일이 아니겠는가. 북한측의 어거지 주장이 언제까지 계속될 지 한심한 일이기도 하다.

북한측은 그들의 혁명이론대로 한국사회가 불안정해지는 것이 통일성취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그것이 착각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자유·민주·자본주의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성과 활력을 그들은 자기들의 통제사회에 비추어 불안정으로 해석하는 모양이나 그같은 생각은 우물안 개구리식의 좁은 소견에 불과하다.

거기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는 미묘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중국민항」기의 한국착륙을 둘러싸고 중공이 보인 유연성은 이제 대결의 논리로는 문제가 풀릴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바로 「이민족끼리도 이념의 장벽을 넘어 서로 개방하고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지구촌시대」인 것이다.

이런 때에 동족이 화합하지 못하고 계속 대결의 장으로만 치달는다면 어느새 우리는 열강의 이용물로 전락할지 모르는 일이다. 우리가 계속 남북한의 화합을 모색하는 것도 통일이 우리 민족

스스로의 결단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같은 투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북한도 이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분단의 고통이 더 이상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건설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할 것이다.

북한측이 계속 대결만 고집하는 것은 그들 자신에게도 해롭다. 귀순용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의 궁핍한 생활은 좀처럼 나아질 줄 모르며 이 때문에 통제와 억압에 짓눌린 속에서도 반감과 저항의 싹이 트고 있다.

북한 지도층은 폐쇄사회의 속성대로 「비교의 대상」을 찾을 수 없는 주민들이니까 오로지 북한만을 「낙원」으로 여기고 있겠거니 생각하겠지만 점차 그같은 판단에 금이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라도 북한측은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에 나와 민족공동의 활로를 찾는 길에 동참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다져진 통일의지

#### - 6. 1 평통 자문회의의 의의 -

조선일보(1983. 6. 2)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평통) 제2차 전체회의가 1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려, 극히 의의로운 성과를 거두었다. 발족 2년을 맞은 평통은 통일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자문에 응하는 헌법기관으로 초당적·범국민적 성격으로 구성됐고 이번 회의에는 1만여 해내외(해외 8백 39명) 자문위원이 참석하여 다시한번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졌다.

2년 전 평통 발족 1차 전체회의에서 남·북 최고책임자회담인 「6·5제의」를 내놓은 전대통령은 평통 의장으로서의 개회사에서 「대결의 시대를 대화의 시대」로, 「갈등의 시대를 화합의 시대」로 이끌어 나가야 하며, 북한은 통일주체인 온 겨레 앞에 문호를 개방하고 대화의 광장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전대통령은 10월 서울서 열리는 국제의회연맹(IPU)총회에 북한대표가 참석할 경우 정부는 그들을 같은 형제로서 따듯이 환영할 것이라고 민족화합을 위한 불변한 집념을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시간 현재 평양집단은 한사코 등을 돌려대고 「남조선혁명노선」의 망집을 버리지 못한채 민족분열책동을 일삼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들의 술책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전대통령은, 최근 그들이 흑색선전기구인 「통혁당방송」을 통해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허위선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현혹될 국민은 없을 것이라는 소신을 피력하면서, 대통령단임제를 규정한 헌법정신을 누누이 강조했다.

이번 평통전체회의의 특기할 의의의 하나는 각계 대표들이 대화·통일 정책에 대한 독자적 의견을 개진했다는 사실에 있다. 정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노동계 등을 대표한 자문위원들은, 비판적인 재외동포들에 대한 문호개방, 북한의 종교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종교인 방문, 판문점에 남·북 문화교류센터 건립, 남·북 근로자 산업 시찰단교류 및 남·북 노동자 체육대회와 문화제를 개최할 것 등의 정책의견을 내놓았다.

각계대표가 통일정책에 관하여 공개적이고도 독자적으로 집약된 의견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평통자문회의는 통일정책건의가 하나의 고유직능이기는 하지만, 의의롭고도 활발히 제기된 이와 같은 의견들을 정부는 생산적으로 수용·보완하여 통일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시킬 것을 기대한다. 그럼으로써 통일 작업에 대한 국민적 참여의욕은 더욱 확산되고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회의에 임한 전 자문위원들은 전대통령이 천명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 민족의 현실문제와 장

래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임을 확신하며, 북한측이 그릇된 자세를 버리고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과, 남·북한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에 호응하여 대화의 광장에 나와야 할 것임을 촉구하는 결의를 선언했다.

이는 4천만 국민의 통일여지의 표출이며, 6천만 겨레가 민족재결합의 염원을 푸는 길로 나서는 가장 합당한 지표의 제시이다. 평통자문위원들이 표명한 결의와 열의에 우리도 전폭적인 공감을 보낸다.

#### 단임장전의재확인

-북의 개헌비어 발붙일 곳 없다-

한국일보(1983. 6. 2)

국민화합의 연장선에 민족화합을 내다보는 1980년대 통일의지의 결집체로서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제2차 전체회의가 1일 잠실체육관에서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각계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한 자문위원수는 이번에 1만 74명에 달했거니와 이에 미국·일본·동남아 지역등에서 특별히 참석한 8백 39명의 해외동포 자문위원들도 포함된다.

하나 민족사적 지상과제인 조국의 평화통일 접근노력 앞에는 지금껏 답답한 난관의 중첩이 가쳐지지 않고 있다. 당면한 애로로 들것은 북한의 개인숭배, 권력세습체제가, 아직도 이리저리한 구실을 내세워 남북대화의 광장에 나오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럴수록 우리는 대국적 인내와 불요불굴의 성의로 대화노력을 주도하는 장정에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평통자문회의 의장이기도 한 전두환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의회연맹(IPU)총회와 관련, 북한대표의 참석을 촉구하면서 일체의 편의를 제공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아울러 북한측이 온 겨레 앞에 문호를 개방하고 하루속히 남북대화의 광장에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한 것이다.

전대통령은 또 북한공산집단이 우리사회 내부에 극도의 혼란을 조성해 보고자 집요하게 모략과 도발을 시도하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이른바 「통혁당 방송」을 통해 우리 정부가 마치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양 악의에 찬 허위선전을 늘어놓는 저의도 예리하게 분석했음을 본다.

사실 북한측의 최근 흑색선전은 철면피를 극한 적반하장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 자신이야말로 근 40년 개인숭배·장기집권도 부족했던지 악명높은 권력세습까지 획책하고 있으니 말이다.

반면 우리의 제 5공화국 헌법은 엄연히 대통령단임제를 규정함으로써 장기집권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앴고 사회안정속의 국력신장을 다짐하고 있다. 근거없는 개헌시비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나아가서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각계대표들의 진지하고 생산적인 의견 제시가 진일보한 활기를 관측케 했다. IPU에 참석한 각국대표들이 희망하는 경우 판문점통과의 편의를 제공함이 좋겠다든지, 종교인의 상호방문 제의, 남북문화교류센터의 공동건립, 남북한근로자들의 산업시찰 교류와 노동자체육대회 개최 등 제의는 참신하고 뚜렷하다.

끝으로 전체회의의 결의문은 북한측이 더이상 지체말고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과 남북한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 개최에 긍정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더하여 북한측이 국제사회에서 민족의 권익과 위신을 훼손시키는 행동을 중지하도록 경종을 울린 것이다. 당면문제를 옹이 집약한 내용이다. 초당적·범국민적 헌법기관으로서 평통자문회의가 통일기반의 공고화와 확대에 가일층 분발하도록 격려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 4. 북한측의 반응

북한측은 1983년 6월 1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제2차 전체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추잡한 연극」 제하의 「로동신문」 논평(6. 5)을 통해 『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책동, 반목과 대결을 고취하는 반공소동』 등 상투적인 대남모략비난을 하였다.

북한측은 동 논평을 통해 전두환대통령의 개회사에서 천명한 IPU(국제의회연맹) 서울총회에의 북한대표의 참가환영 및 체재 편의 보장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을 회피하였다.

또한 통일대화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이 「유엔 동시가입·교차승인」의 추진 등 『분열을 국제적으로 인정케 하려고 꾀하고 있다』는 악의에 찬 비방·중상을 하면서 그들의 이른바 「고려연방제」 실현의 전제조건인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한국민의 반정부·반미투쟁을 격렬히 선동하였다.

## 제2부 「남북한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 수락 재촉구

### 1. 손재식 국토통일원 장관 성명 내용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은 1983년 4월 1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2월 1일 우리측이 제의한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대표회의 개최 및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3월중 예비회담 개최등을 북한측에 환기시키면서 비록 회담제의 시기가 지났지만 『북한측이 회담장에 나오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그들과 마주앉아 모든 문제를 기탄없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재식장관은 동 성명에서 『북한측은 우리측의 새로운 대화제의를 있는지 두달이 넘도록 긍정적인 회답을 보내오지 않음으로써 남북대화에 대한 그들의 무성의한 자세를 다시 한번 나타냈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남북한 사이에 화합과 통일을 위한 폭넓은 대화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을 외면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하였다.

손재식장관은 특히 『북한측은 우리의 성의있는 대화제의를 발표된 직후 북한전역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 남북한관계를 오히려 긴장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 가을 서울에서 열기로 결정된 국제의회연맹 총회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방해하려는 반민족적인 책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그들의 그릇된 태도를 지적하였다.

또한 손재식장관은 『우리측의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대표회의 제의는 북한측이 입버릇처럼 주장해 왔던 「남북협상」 형태까지도 수용한 것이므로 그들은 더 이상 다른 조건을 붙이거나 이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고 북한측이 그들의 말대로 평화적인 통일과 민족의 이익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무의미한 말장난을 가지고 내외여론을 기만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대화의 광장에 무조건 나와 각기 의견을 교환하고 떳떳하게 협의하는 자세를 행동으로 실증해야 할 것』이라고 그들의 자세시정을 촉구했다.

이 날 손재식장관이 발표한 대북성명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지난 2월 1일 북한측에 대하여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실현하는 문제」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 남북한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빠른 시일안에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아울러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예비회담을 3월중에 판문점 또는 서울과 평양에서 가질 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우리측의 새로운 대화제의를 나간지 두달이 넘었고 또 우리가 희망했던 예비회담 개최시기가 다 지난 오늘까지 긍정적인 회답을 보내오지 않음으로써 남북대화에 대한 그들의 무성의한 자세를 다시한번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남북한 사이에 화합과 통일을 위한 폭넓은 대화가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온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을 외면한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 북한측은 우리의 성의있는 대화제의를 나간 직후 북한전역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남북한 관계를 오히려 긴장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 가을 서울에서 열기로 결정된 국제의회연맹총회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방해하려는 반민족적인 책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측이 평화와 통일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민족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오직 폭력과 무력을 통해 적화통일의 망상을 실현해 보겠다는 것을 드러낸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속과 겉이 다른 기만적인 북한측의 작태는 국제사회에서 빈축을 사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우리 민족도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우리 겨레의 통일 염원에 부응하여 남북한관계 개선과 통일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보다 포용적인 자세로 일련의 실천적인 제의와 조치를 취하여 왔습니다.

특히 전두환대통령은 올해 국정연설을 통해 다시한번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이 조속히 열려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 회담에서 협의·해결할 당면과제로서 남북한간에 전쟁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문제, 남북한의 통일방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문제, 국제무대에서 지나친 경쟁을 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의 과제들은 남북한 쌍방이 서로 접촉과 대화의 문을 열고 화합과 통일의 길을 함께 개척함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며 또 언제까지나 미루어 둘 수 없는 긴급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전두환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있는 직후 엉뚱하게도 미군철수문제만을 토의하기 위한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소집하자는 제의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책임있는 남북한 당국을 배제하고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의 회담에서 미군철수 문제만을 토의하자고 주장한 것은 그 자체가 대화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대화를 선전에만 이용하려는 제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한간에 접촉과 대화의 길을 뚫어야 하겠다는 일념에서 이번에 다시한번 우리측의 아량과 성의를 다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측이 조금이라도 평화통일에 뜻이 있다면 대화의 광장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북한측의 주장을 적극 포용하여 남북한의 당국대표들 뿐만 아니라 정당·사회단체 대표들도 함께 참가하는 폭넓은 대화의 자리에서 어느 일방의 주장만이 아니라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광범위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지난 2월 1일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를 북한측에 제의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측이 내놓은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가 지금까지 북한측이 입버릇처럼 주장해 왔던 「남북협상」형태까지도 수용한 것이므로 그들은 더이상 다른 조건을 붙이거나 이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최근 북한측이 취하고 있는 대화거부 태도와 일련의 도발적이며 반민족적인 처사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온 겨레의 이름으로 그들의 각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측이 그들의 말대로 평화적인 통일과 민족의 이익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무의미한 말장난을 가지고 내외여론을 기만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대화의 광장에 무조건 나와 각기 의견을 교환하고 떳떳하게 협의하는 자세를 행동으로 실증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대표회의」가 하루라도 빨리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우리측의 동 제의가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측이 희망했던 예비회담 개최시기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북한측이 회담장에 나오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그들과 마주앉아 모든 문제들을 기탄없이 협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측이 우리측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대화제의를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 없을 것이며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측의 제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인내를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의 대북성명의 취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난 2월 1일 우리측이 제의한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에 대하여 북한

측이 계속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속에서 우리가 희망한 3월 중 예비회담 개최시기가 경과하였지만 이에 구애됨이 없이 동 제의가 계속 유효함을 밝히고 북한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재촉구하는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측이 제의한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는 대화형태에 있어서 쌍방의 당국대표 뿐만 아니라 정당·사회단체 대표까지도 망라하고 있으며, 토의의제에 있어서도 「평화통일과 관련하여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로 제의함으로써 북한측의 주장을 사실상 모두 포용한 것이므로 만약 북한측이 대화를 할 의사가 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있다.

따라서 손재식장관의 성명은 북한측이 계속 대화의 광장에 나오지 않고 「주한미군이 통일대화의 장애요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미·반정부선동과 준전시상태선포 등으로 오히려 남북간의 적대적 긴장을 격하시키고 있는데 주목을 돌리고 다시 한번 그들의 반평화적, 반민족적 자세를 지적하는 한편 그들의 부당한 태도의 시정을 촉구한 것이다.

## 2. 「민족통일 중앙 협의회」 의장 성명내용

천관우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의장은 1983년 3월 2일 대북성명을 통해 『북한측은 하루속히 우리측이 제의한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를 수락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을 실현하는 문제 등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천관우의장은 동 성명에서 『우리측의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 제의가 있는지 한달이 지난 이 시각까지도 북한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히고 『북한측이 입버릇처럼 대화기구에 정당·사회단체의 참여를 주장했던 사실을 고려하면 우리의 새 제의에 대해 북한측으로서는 하등의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천관우의장은 이어 『북한측은 우리의 대화제의를 받은 직후 뜻밖에도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나왔다』고 지적하고 『남북한간에 폭넓은 대화를 마련하자는 데 대해 준전시상태선포로 긴장을 조성시키는 것은 통일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온 겨레를 아연실색케 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천관우의장은 동 성명에서 『남북한 쌍방이 진실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면 사상과 제도의 장벽을 뛰어넘어 조건없는 대화의 자리에 마주앉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면서 『「남북한당국 최고 책임자 회담」의 실현이야말로 남북접촉과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한 첩경이며, 경색된 남북한 관계를 타개하여 통일을 향한 민족의 앞길을 개척하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천관우의장의 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40년 가까운 민족분단의 고통속에 살고 있는 우리 겨레는 오늘날 그 어느때 보다도 조국통일에 대한 절실한 염원을 안고 하루속히 남북대화의 문이 열려서 민족화합과 통일을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우리 민족통일중앙협의회는 평화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온 민족의 소망과 의지를 한데 모아 북한측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통일문제는 오랜 세월동안 한 강토 안에서 같은 핏줄, 같은 역사, 같은 문화와 전통을 이어온 하나의 민족이라는 입장에서 출발할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우리가 민족의 생존과 이익과 발전을 앞세우고 통일과업을 성취하려면 민족자결원칙에 따른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 당사자간에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한 쌍방은 서로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이라는 공동의 광장에서 만날 때 비로소 화합과 통일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뜻에서 전두환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국정연설을 통해 북한측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민족의 이익을 우선시키고 남북한간의 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감으로써 화합과 통일의 길을 공동으로 개척해 나갈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아울러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과 이 회담에서 협의·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있다.

이는 오늘날의 냉엄한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 민족의 화합과 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서 대내외적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이에 북한측은 대화거부의 책임을 의식한 나머지 엉뚱하게도 주한미군 철수문제만을 토의하기 위한 이른바 「남북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라는 것을 주장하고 통일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화자체의 필요성을 공공연히 부정하고 나섬으로써 통일대화를 갈망하는 민족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태도를 보였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북한측의 불성실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에 무엇보다도 먼저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여야 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에서 지난 2월 1일에는 종래의 북한측 주장도 포용하여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를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고 이를 위해

남북한 당국대표 2명과 정당대표 3명이 참가하는 실무급 예비회담을 3월중에 판문점 또는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주장하였다.

지난 시기 북한측이 입버릇처럼 대화기구에 남북의 정당·사회단체의 참여를 주장해 왔던 사실을 고려한다면 금번 우리 정부의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 개최제외에 대해 북한측으로서는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마땅히 이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측은 우리의 대화제외가 있는 바로 직후에 뜻밖에도 이른바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나왔다.

남북한간에 폭넓은 대화를 마련하자는데 대해 「준전시 상태」선포로 긴장을 조성시켜 대응한다는 것은 대화를 통한 통일문제의 해결을바라는 온 겨레를 아연실색케 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한 쌍방이 진실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면, 사상과 제도의 장벽을 뛰어넘어 조건없는 대화의 자리에 마주앉지 못할 이유가 없다.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의 실현이야말로 남북의 접촉과 대화의 문을 과감히 열기 위한 첩경이며, 또한 경색된 남북한 관계를 타개하여 통일을 향한 민족의 앞길을 개척하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 제외가 있는지 한달이 지난 이 시각까지도, 북한측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북한측은 하루속히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를 수락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실현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통일을 위해 남북한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해결할 것을 재삼 촉구하는 바이다.』

### 3. 각계의 반응

국내외의 각계는 4월 1일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이 발표한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 수락 재촉구 성명에 대하여 『우리측의 불변한 대화노력 자세를 내외에 다시한번 분명하게 표방한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측의 동 제의가 『북한측을 설득시켜 대화의 광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만큼 인내와 성의를 가지고 남북대화를 추진해 보겠다는 성실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도하 주요 일간지들은 북한측이 『반민족적 자세를 버리고 대화의 광장에 무조건 나와 땀땀하게 협의하는 자세를 행동으로 보일 것』을 촉구하면서 『민족의 공존공영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우리정부의 대화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호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언론계는 3월 2일 천관우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의장의 대북성명에 대해서도 『북한측이 어리석은 망집을 즉각 버리고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수락, 대화의 광장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국내 주요 일간지들의 사설이다.

항상 열려 있는 대화의 문  
- 「4.1대북성명」은 성실·인내의 표현이다.

경향신문(1983. 4. 1)

손재식 통일원장관이 1일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를 개최하자고 북한측에 거듭 촉구한 것은 우리 정부의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통일대화노력을 재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대북성명은 지난 2월 1일 이 회의를 열기 위한 예비회담을 3월중에 개최하자고 제의한 것이 계속 유효하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거듭되는 제의는 북한측을 설득시켜 대화의 광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만큼 인내와 성의를 가지고 남북대화를 추진해 보겠다는 성실성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통일원장관의 대북제의는 이 점에서 남북한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 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은 북한측 성의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경주해 왔다. 1981년 1월에는 대화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제의했고, 같은해 6월엔 최고책임자 회담을 열어 남북한 쌍방의 통일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작년 1월 22일에는 역사적인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제시했는가 하면 곧 이어 북한측의 주장까지 감안한 정당 및 사회단체 인사를 포함한 「남북한 고위대표회담」을 열자고 제의함으로써 북한측이 들고 나온 「남북한 정치인 연합회의」안도 논의할 뜻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18일에는 전두환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에서 협의·해결할 4개항의 당면과제를 제시했고 북한측의 이른바 「정당·사회단체 연합성명」까지 포용한 획기적 제의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대화노력을 분명히 해왔다.

남북한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 개최를 위한 예비회담 대표단의 구성에 있어서도 정부는 남북한 당국 대표 2명과 북한측이 이미 제의한 정당대표 3명을 포함, 각 5명씩으로 구성할 것을 제의, 북한측 주장을 모두 수용하는 아량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러한 우리의 아량과 성의가 담긴 대화제의에 대해 이를 「두 개조선을 조성하는 책동」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그들은 해마다 의례적으로 열리는 「팀스피리트 83」 훈련을 구실삼아 북한 전역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해 놓고 긴장된 동원태세를

갖추면서 전쟁분위기 조성에 혈안이 되고 있다. 지난 3월 14일에는 이른바 「팀스피리트 83 규탄 평양시 군중집회」를 열었는가 하면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을 들먹이며 이를 고무·찬양하는 「보고회」를 여는 등 대남적개심 고취와 반미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측은 오래전부터 남북대화의 재개를 대남적화의 저해요인으로 간주해 왔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측이 도저히 수락할 수 없는 전제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대화단절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북괴가 특하면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의 반공안보태세의 와해를 노리고 남한의 용공정권 수립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저의를 드러낸 것들이다.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북한측 제의는 대화를 하기 위한 제의가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와 대남비방·중상·모략을 목적으로 한 정치선전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기도에 지나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3월 18일 발표된 북괴의 이른바 「조국평화통일위원회」대변인이라는 자의 「담화」를 보더라도 주한미군 철수가 모든 대화의 전제조건이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가득차 있다.

이것은 손통일원장관도 대북성명에서 지적했지만 북한측이 평화와 통일 대화를 추구하는 것처럼 선전해 온 것과는 달리 우리민족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오직 폭력수단을 통해 적화통일을 기도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망상을 드러낸 것에 불과한 것이다. 북한측이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의 공존 공영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우리 정부의 대화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호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북한측이 이제라도 그들이 제의한 「남북한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열고 싶다면 우리 정부의 이번 제의를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 북한은 떳떳하게 임하라

동아일보(1983. 4. 2)

우리 정부가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를 빠른 시일안에 개최하자고 북한측에 제의한지도 2개월이 지났다. 지난 2월 1일 손재식 통일원장관은 남북한이 각기 당국대표 2명과 정당대표 3명이 참가하는 실무급 예비회담을 3월중 『관문점 또는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평양측은 두달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아무런 회답을 하지않고 있다. 도리어 평양측은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의 문이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전역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남북관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서울측은 지난 2월 「조지 슐츠」미 국무장관의 일·중공·한국 순방을 계기로 남북한교차승인 추진의도를 내외에 천명한 바 있다. 남북한간의 긴장과 대결상태를 타결하기 위해 주변정세의 협력을 빌어 보고자 한 서울측의 진정한 노력 표시였음에 틀림없다. 그밖에도 서울측은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비롯, 남북한간의 긴장완화를 위한 모든 창구를 북한측에 열어 놓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서울측의 이같은 접근에도 불구하고 문을 굳게 걸어 잠근채 결코 우리의 제의에 응할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 김일성집단은 문을 닫아버리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게 아니라 최근에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릴 국제의회연맹(IPU) 서울개최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다닌다.

북한은 이미 국제의회연맹의 서울개최를 유산시킬 목적으로 「대한파괴 공작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서울에 소란상태를 야기시킬 것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또한 지난 3월초 「루마니아」의 「부다페스트」에서 공산국들을 선동하여 이들이 국제의회연맹 서울회의를 보이콧 하도록 획책한 바 있다. 「부다페스트」에서 북한의 선동에 귀를 기울인 공산국 의회대표들은 소련, 「불가리아」, 「헝가리」, 「베트남」, 동독, 「쿠바」, 몽고, 「폴란드」, 「루마

니아」 등으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지난달 인도의 「뉴델리」에서 개최된 비동맹정상회의에서 드러냈던 바와 같이 국제회의에서 절차와 순서를 가리지 않고 남한비방에 열을 올렸다. 국제의회연맹의 서울개최를 비롯, 1986년 「아시언게임」과 1988년 올림픽 대회를 방해하기 위해 김일성집단이 혈안되어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제조류는 누가 보아도 서울측의 입장에 유리하게 흐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북한의 왕조적 세습제, 호전성, 대화거부, 폐쇄성 등은 20세기 문명을 거부하는 작태요, 동족의 안녕과 번영을 위협함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를 흔들고 있다. 한국이 그동안 굶직한 국제대회들을 서울에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고 기타 경제적인 면에서도 신뢰를 받고 있으며 평화통일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제조류는 서울편에 서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대화기피를 비롯 무모한 중상·비방행위는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는 것이요, 민족을 배신하는 반민족적 행위로 규탄되어야 한다. 손통일원장관은 1일 대북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이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손장관은 북한이 국제의회연맹회의의 서울개최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같은 반민족적 자세를 버리고 대화의 광장에 『무조건 나와 떳떳하게』 협의하는 자세를 행동으로 보이라고 말했다. 6천만 겨레의 이름으로 북한이 떳떳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시 촉구하는 바이다.

북은 대화의 정도를 택하라.

서울신문(1983. 4. 2)

제5공화국의 통일의지는 다시 한번 폐쇄사회의 문을 두드렸다.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은 1일 대북성명을 발표하고, 우리가 제의한 남북한대표회의안은 아직도 유효하므로 북한은 더 이상 민족의 염원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대화에 응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제5공화국은 그 출범을 전후하여 분단체제를 민족주체적인 역량으로써 해소하기 위한 대단히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방안들을 일관성있게 제의해 왔다. 올해 들어와서도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 개최를 협의하기 위한 예비회담의 개최를 제의한 바 있는데, 그 예정일이 다 지난 오늘날까지 북한은 긍정적 회답을 보내지 않은 것이다.

북한의 이 무반응이 남북대화에 대한 북한의 내부적 고민을 반영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일성-김정일 세습체제가 지니고 있는 내부모순을 은폐하기 위해 긴장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될 북한 으로서는 남북대화에 응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이다. 남북대화가 진척되어 여러 분야에 있어서의 교류가 열리는 경우, 세습체제가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억압과 폐쇄성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사실 이러한 내적 모순과 그에 따른 사회적 긴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있다.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데, 이야말로 적 반하장이다. 『불난집에서 불이야 한다』는 우리 속담처럼, 전쟁준비에 광분하는 그들이 「한반도 위기」 운운하면서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북한주민의 탄압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많은 권위 있는 분석들에 의하면, 김정일에 대한 북한주민의 저항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것 같다. 북한의 언론매체들이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와 같은 사태를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김일성-김정일 세습체제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주민통제의 강화인데,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구실이 바로 있지도 않은 「미제의 북침 위기」인 것이다.

북한은 또한 한국의 IPU(국제의회연맹) 총회개최를 방해하려는 속셈에서 대화를 거부하고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여

IPU 참가를 주저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잔꾀에 넘어갈 나라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북한은 냉정히 깨달아야 한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한국을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정되고 평화로운 여건속에서 번영을 추구하는 이 신흥공업국가의 활력에 쉽게 감명을 받는 터이다. 하물며 IPU회원국가들에 있어서라.

전두환대통령은 민족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겨레임을 강조하고, 통일의 대도를 남북한의 당사자들이 걸어 나가자는 뜻을 여러차례 국내외에 천명한 바 있다. 어느 곳, 어느 시기에서나 만나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제의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전대통령의 이 통일원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달성하는 방법인 것이다. 북한이 민족의 양심을 되찾아 통일의 정도를 걸어 줄 것을 촉구한다.

#### 대화 촉구와 북한

-손통일원장관 4. 1성명을 보고-

조선일보(1983. 4. 2)

#### 1

남북대화는 인내와 관용과 끈기의 길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전화를 막고 관철해야 할 2중부담의 길이기도 하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남북대화예의 접근은 마치 북한의 독단장인 양 비치기도 했다. 그들은 걸핏하면 무슨 협상이니, 무슨 대화니를 열자하고 이른바 평화공세를 일삼았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 이후 남과 북의 위치는 완전히 뒤바뀐 것이 되고 말았다. 우리의 대화 노력에 북한은 계속해서 등을 돌려대고만 있는 것이다.

1일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은 대화에 응해 오도록 거듭해서 북한에 촉구했다. 손장관은 대북성명을 통해 지난 2월 1일 내놓은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 제의가 계속 유효하며 3월중에 갖자고 했던 예비회담 개최시기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북한측이 회담장에 나오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모든 문제를 기탄없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태도 천명은 우리측의 불변한 대화 노력자세를 내외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표방한 것이 된다. 북한은 가부간 그들의 입장을 명백히 해야 할 처지를 면키 어렵게 됐다.

그동안 우리 측은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으로 대화의 길을 트자고 했던 1981년 1. 12제에서 비롯해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열어 쌍방이 제기한 모든 문제를 협의하자고 한 1981년 6. 5제의, 통일헌법을 마련하는 민족통일협회의의 구성등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인 1982년 1. 22제의, 「20개 시범실천사업」을 실현하자고 한 1982년 2. 1제의, 「남북한 고위대표회담」을 열자고 한 1982년 2. 25제의등, 일련의 조건 없고 실질적이며 진취적인 대화방안을 내놓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해 왔다.

#### 2

북한은 이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제안들에 일관해서 거부 반응만을 보여 왔다. 그러다가 금년 1월 18일 북한은 이른바 미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남북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안이란걸 들고 나왔다. 이는 같은날 있었던 국정연설을 통해 전두환 대통령이,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이 실현될 경우 강구할 수 있는 전쟁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등 4개항을 제의한 데 대해 궁한 나머지 내놓은 부정적 반응이었다.

그러나 우리측은 2월 1일 소위 이 「협상안」마저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남북한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의하고, 그 협의를 위한 예비회담을 3월중에 갖도록 하자고 촉구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오늘까지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손장관은 성

명을 통해 이를 재촉구한 것이다.

북한이 노래부르듯 하는 미군철수가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미 1970년대에 남북불가침협정을 체결하면 미군철수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리측은 분명히 한 바 있다. 문제는 미군철수건, 그밖의 어떤 사항이건 간에 책임있는 당사자가 만나서 얘기를 나누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팔을 불어대는 것만으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

우리측은 대화에 그 어떤 제약도 조건도 내걸지 않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어떤 문제든지 논의하자고 전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그럼에도 계속 등을 돌려대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그들의 대화거부를 호도하는 그 어떤 용어도 이젠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대화통로 빨리 터야  
-북한측의 자세시정 거듭 바란다-

한국일보(1983. 4. 2)

아지랭이 피어 오르는 4월로 접어들면서 조국의 자연은 봄소식이 완전하건만, 남북을 가로막는 인공적 장벽은 얼어붙은 그대로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때마침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은 1일 대북성명문을 발표,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의 개최를 평양측에 거듭 촉구하였다. 지난 2월 1일 북한측에 대하여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실현하는 문제」와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한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그같은 대표회의를 개최하되, 우선 3월중에 예비회담을 열자고 제의 했었는데 아무런 회답도 없이 어언 두달이 경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측의 그 제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통일염원에 비추어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이날 천명된 내용이다. 아울러 북한측의 구태의연한 거부 반응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의 개방적이고도 포용적인 대화제의를 멀지않아 햇볕보게 하기 위하여 인내를 갖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한 것이다.

그런데 올들어 지난 3개월간의 남북대화 문제에 관한 공식발표를 대조할 때 북한측의 타의있고 고루한 자세는 명백히 노정되었다고 보게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두환대통령은 1·18국정연설을 통해 전제조건 없는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의 개최를 거듭 촉구한 바 있다. 의제로는 긴장완화와 전쟁방지, 쌍방이 주장하는 모든 통일방안, 과당경쟁으로 인한 민족역량의 낭비방지,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여건조성 등을 모두 다루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측은 그 직후 미군철수만을 토의하는 「남북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열자는 식의 일방적 배타적 제의를 내놓았다. 그래서 우리측은 2월 1일 북한측 주장을 아랑있게 포용하여 당국대표뿐만 아니라 정당·사회단체 대표들도 함께 참석하는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자고 제의 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측은 그 이후 대화호응은 고사하고 「팀스피리트」연습을 트집잡아 북한 전역에 이른바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만 것이다. 이같은 경위로 미루어 대화에 관한 쌍방의 시비곡절은 더 설명이 필요 없겠다.

오늘의 남북관계는 북한측의 의도적인 긴장격화와 전쟁히스테리로 말미암아 일촉즉발의 위기감마저 감돌게 하는 실정이다. 북한의 시대착오적인 개인숭배·권력세습체제에 도사린 독재층은 아직도 무력적화통일의 망상에 집착해 있는 꼴이다. 이른바 「남조선혁명」이라는 미몽을 교조삼아 동족상잔준비에만 골몰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시 우리 겨레가 한결같이 바라는 평화통일은 동족상간의 예방을 기조로 민족적 대가정을 부활시켜 서로 화합하고 어울려 살자는 뜻이다. 그럼에도 북한독재층이 경직화된 배타적 획일성만을

추구한다는 데서 심각한 근본문제를 되짚지 않을 수 없다.

정녕 북한측이 위장선전 아닌 민족적 양심에 입각하여 평화통일을 희망한다면 개방적이고 포용력 있는 방향설정으로 그들의 자세를 전환시켜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시급한 것은 평화의 정착이다. 이를 위한 접촉과 대화에 북한측이 하루속히 무조건 호응해야 할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여 마지 않는다.

#### 통일대화 왜 주저하는가

서울신문(1983. 3. 4)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천관우의장이 2일 발표한 대북성명은 4천만 우리 국민의 실천적인 평화통일 의지를 다시한번 극명하게 천명한 것이라 하겠다. 천의장은 이 성명에서 『북한측은 하루속히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를 수락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실현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통일을 위해 남북한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무엇보다도 이 성명이 『지난날 북한측이 입버릇처럼 대화기구에 정당·사회단체의 참여를 주장해 왔던 사실을 고려한다면 우리 정부의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 개최제외에 대해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 것은 우리측 제의가 있는지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북한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한결같은 힐문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분단조국의 통일문제는 새삼 말할 것도 없이 격동과 혼돈이 지배하는 세계사의 흐름속에서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겨레가 자주적인 노력으로 풀어나가야 할 우리 세대에 안겨진 민족사적 과제이다. 또한 이 문제가 남북한쌍방간 통치권을 행사하는 책임있는 당국이 주도하는 대화와 협상에 의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세계의 모든 협상사례로 미루어 너무나도 당위적인 논리에 속한다.

우리 정부가 지난달 1일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를 제의한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시말해 지난 1월 북한측이 내놓은 소위 「남북한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란 것까지 넓은 아량으로 포용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책임있는 당국이 주도하는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엮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주적 역량으로 선진조국을 기어이 이룩하고자 하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에 대한 공식반응은 보이지 않고 다만 그들 선전매체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의제로 하는, 당국이 소외된 「연석회의」만을 되풀이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그 음흉한 속셈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첫째로 전두환대통령이 제시한 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대한 국제적 지지여론이 압도적으로 일자 자신의 불리한 입장을 위장대화제의로 호도하려는 것이고, 둘째는 한반도통일의 장애요인이 주한미군인양 국제여론을 오도하려는 것이며, 셋째는 한국이 개방사회임을 악용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국론을 분열시켜 대남적화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 그들의 책략인 것이다.

북한측은 그 어리석은 망집을 즉각 버려야 할 것이다. 우리의 당국자간 대화에 의한 평화통일방안이 국제사회에서 절대적인 지지공명을 얻고 있는 사실, 북한이 노리던 소위 「한국조항」의 채택공작이 지금 「뉴델리」 비동맹회의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이번 민통협성명이 보여준 바 우리 국민의 굳게 결집된 실천적인 통일의를 어찌 마냥 오산 하려고 하는가.

분쟁당사자 쌍방간의 최고책임자가 서로 포용적 자세로 대좌하여 분쟁해결의 극적 전기를 마련한 사례를 우리는 동·서독관계, 「이스라엘」 「이집트」 관계등에서 익히 보아온 바 있다. 남북한

관계의 경우 우리측은 제현안의 토의를 위한 실무급 예비회담을 3월중에 열도록 대화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북한측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이달 안으로 이 예비회담에 마땅히 호응해 와야 할 것임을 거듭 강력히 촉구해 두는 바이다

#### 4. 북한측의 반응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의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 수락 재촉구 성명과 관련하여, 북한측은 4월 8일 당기관지인 「로동신문」 논평을 통해 『대화의 너울을 쓰고 통일을 바라는 듯이 여론을 오도하여 분열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여 분열주의적·호전적 정체를 감싸보려는 것』이라고 모략·비난을 하면서 미군철수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이른바 「남북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소집만을 되풀이 주장하였다.

북한측은 동 논평에서 『미군을 남조선에 그대로 두고 대화와 통일에 대해 떠드는 것은 통일문제를 가지고 여론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강변하면서 우리의 정당한 통일노력을 왜곡·비난하였다.

한편 북한측은 3월 2일 천관우 의장의 대북성명에 대해서도 『다시 풀어놓은 낡은 보따리』란 제하의 「로동신문」 논평(3.7)을 통해 『주한미군을 두고서는 통일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만을 상대로 대화하겠다』 등 종전의 대화거부입장을 다시금 드러냈다.

# **남북대화 제33호**

(1983. 7 ~ 1983. 10)

# < 목 차 >

|   |    |
|---|----|
| 제1부 민족화합 민주화합 민주통일에의 꾸준한 전진 .....               | 3  |
| 1. 전두환 대통령, 광복 제38주년 경축사 .....                  | 3  |
| 2. 손재식 국토통일원 장관, 북한측에 대화호응 촉구 .....             | 8  |
| 3.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11주년에 즈음한 남북조절위 서울측 성명 ..... | 11 |
| 4. 국 내 반 응 .....                                | 13 |
| 제2부 남북한 이산가족 재회추진운동의 새 국면 .....                 | 27 |
| 1. 이산가족찾기 운동과 관련한 대한적십자사 총재 담화문 .....           | 27 |
| 2.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                     | 30 |
| 3. 1천만 이산가족 재회 촉진대회 .....                       | 34 |
| 4. 북한의 반응 .....                                 | 38 |

## 제1부 민족화합 민주화합 민주통일로의 꾸준한 전진

### 1. 전두환 대통령, 광복 제38주년 경축사

-평화통일 의지와 자신감 표명-

전두환 대통령은 1983년 8월 15일 제38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충남 천원군 목천면 남화리 독립기념관 건립현장에서 제38회 광복절 경축 및 독립기념관 기공식 치사를 통해 『북한 공산집단의 끊임없는 무력적화야육과 도발회책으로 당장에는 통일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이산과 갈등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분단청산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고 말하고 통일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통일을 향한 국민적 의지와 역량을 다 함께 결집시켜 나갈 것을 호소하였다.

전두환 대통령은 동치사에서 우리는 무수한 외침과 전화 속에서도 수 천년을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저력을 지니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민족적 저력을 바탕으로 조국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면 분단을 통일로 바꾸는, 그것도 평화적으로 바꾸는 신화를 인류역사에 기록하는 민족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다.

아울러 전대통령은 국력의 신장과 더불어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자주적 역량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므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부강하고 번영된 선진조국은 이제 눈앞에 펼쳐지려 하고 있으며, 6천만의 염원인 평화통일의 위업도 멀지않아 우리의 손으로 실현되고 말 것이라는 자신감을 천명했다.

이것은 1983년 2월 24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온 국민이 통일에 대한 결연한 의지와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통일의 길은 열리게 마련이다」라고 지적한 것처럼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과 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불러 일깨워 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동치사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통일은 겨레끼리 얼싸안고 오손 도손 같이 잘 살아 보자는 것이며, 남북한간의 현안문제와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대화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측이 이때까지의 대화 부정적 입장을 버리고 무조건 남북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산가족찾기 운동과 관련하여 전대통령은 「남북이산가족의 아픔은 우리겨레 모두의 아픔이며 그들의 비원을 풀어주는 것은 우리 겨레 모두의 책임임」을 강조하고, 아무리 남북한의 이념과 사상·제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헤어진 혈육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길마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문명사회에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어떠한 명분에 의해서도 남북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더이상 늦추거나 회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이산가족의 아픔과 절규를 직시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심에 의거하여 그들의 소원을 풀어주는 데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전두환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 및 독립기념관 기공식에서 행한 치사 전문은 다음과 같다.

친애하는 국내외 6천만 동포 여러분

나라를 되찾은 광복, 그날의 감격이 조국통일의 열망으로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 뜻깊은 제38회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오늘 이 뜻깊은 날에 호국선열의 애국단심이 살아숨쉬는 이곳 목천 흑성산 기슭에서 자주와 독립의 국민적 의지를 만세에 전하는 전당이 될 독립기념관을 기공하게 된 것을 동포 여러분과 함께 충심으로 경하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오늘은 또한 우리 나라 역사상 최초로 민주정부를 수립한지 서른다섯 돌이 되는 날로서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더욱 깊은 감회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권회복과 민주출범의 신기원을 연 8·15를, 오늘 내외동포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도 밝은 희망과 드높은 자신감 속에서 경축하게 된 것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동포들의 숭고한 헌신의 결과임을 상기하면서 오늘의 영광을 바치는 바입니다.

동포 여러분

8·15 광복의 참다운 의미는 조국통일을 성취하고 번영의 선진국을 건설하는 위대한 새 역사 개척의 소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이 엄연한 소명에 따라 세대를 잇는 창조와 혁신의 헌신과 열정을 내다보는 번영의 의지로써 민족의 저력을 가꾸어 나온 것입니다.

민족사의 단절 36년을 복원하는 광복이 하필이면 누 천년 단일민족을 남북으로 이산시키는 고통의 시발이 되었는가를 생각하면 그것은 분명 통탄스러운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슬프더라도 그대로 주저앉아 옷소매만 적시고 있어서는 그 슬픔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우리 겨레의 위대한 응집력을 역사와 세계에 자랑해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자부하면서 통일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디더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수한 외침과 전화 속에서도 수 천년을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의 생명력은 우리민족이 아니면 도저히 가꿀 수 없는 기적의 힘인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의 힘을 다시 발휘할 때를 우리는 지금 바야흐로 맞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명에 충실할 때 우리는 분단을 통일로 바꾸는, 그것도 평화적으로 바꾸는 신화를 인류역사에 기록하는 민족으로서 세계인의 숭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가 오늘 독립기념관을 세우는 첫 삼질을 하게 된 것은 제이광복의 소명을 구현하는 우리 모두의 투철한 결의와 힘찬 전진의 징표인 것입니다.

새로운 광복의 바탕은 흔들림없는 민족사관의 정립이라는 신념에 따라 우리 국민 모두는 독립기념관 건립운동에 나선지 일년만에 오늘 그 튼튼한 기초를 닦는 역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남녀노소와 재산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우리 겨레는 오직 자주와 독립의 한 뜻으로 뭉쳐 독립기념관에 쓰일 벽돌을 장만하고 그 터를 닦은 것입니다.

지난 이년간의 이 운동은 민족화합의 일대승리이자 민족자존의 위대한 쉼기였을 뿐 아니라, 바로 제이의 광복운동 그것이었다고 본인은 확신하고, 이 운동에 주인으로 참여한 내외동포 여러분에게 뜨거운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만세소리와 윤봉길 의사의 애국충절을 비롯하여 수많은 선열들의 독립의지가 살아 숨쉬고 있으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애국혼이 오늘도 굽어보고 있는 이곳 흑성산 언덕에 멀지않아 국난극복과 자주독립의 위대한 역사를 집대성한 독립기념관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민족의 강인한 독립의지를 국력배양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겨레의 영원한 번영을 상징하는 민족정신의 도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본인은 뜻깊은 이날을 계기로 민족과 민족사를 지키려는 우리 모두의 의지가 불퇴전의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독립기념관을 길이 후손에게 물려줄 위대한 유산으로 가꿀 것을 온 겨레가 함께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이 독립기념관이 그 어떤 풍우에도 흔들림이 없을 튼튼한 건물이 되도록 공정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공사의 유물과 기록 그리고 모든 자료를 갖추는데 거족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역사적인 기공식을 민족저력의 도약대로 하여 굳건한 민족사관과 민족화합을 지켜 국력신장과 조국통일의 새로운 광복을 이룩하는 노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평화적인 조국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여망이 아직도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북한공산집단의 반민족적이고 반평화적이며 반통일적인 자세에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 겨레의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정답게 함께 잘 지내는 것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동포끼리 서로 말을 나누는 것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서로 만나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반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통일은 겨레끼리 얼싸안고 오손도손 같이 잘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만나지 않고서는 결코 얼싸안을 수도, 오손도손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통일을 얘기하면서도 남북대화에는 끝끝내 반대하고 있는 북한공산집단의 태도는 결국 「만나지 않고 얼싸안자는 식」의 어이없는 기만논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들의 평화적인 조국통일에 대해 일말의 의향도 없다는 것을 웅변으로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6천만 동포의 구성비율로 보아 한층의 값어치도 채 안되는 특정과당이나 특정세가의 지속적인 영화를 고수하기 위하여 민족전체의 행복으로 직결되는 현상변경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가운데 통일의 기초가 되는 민족의 동질성마저 심각하게 명들어 가고 있는 현상은 민족사적 입장에서 진실로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동포여러분

지금 내외의 비상한 관심속에 전개되고 있는 이산가족찾기 운동은, 우리는 물론 인류애를 가진 세계인들에게 깊은 감동과 크나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평생에 가깝도록 생사를 모르던 혈육들이 극적으로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모습과 아직도 혈육을 찾지 못해 애태우는 이산가족들의 처절한 모습은 동포 모두에게 뜨거운 감명과 가슴 저미는 아픔을 안겨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산가족찾기 운동은 남쪽에 와 있는 동포들끼리의 상봉밖에 주선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한계를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남쪽에 와서 이산된 가족들보다도 남북으로 이산된 가족들이 훨씬 더 많으며, 그들은 상봉의 기쁨은 커녕 생사의 소식조차 알아볼 길이 막혀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남북이산가족들의 아픔은 우리 겨레 모두의 아픔이며 그들의 비원을 풀어주는 것은 우리 겨레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남북한간의 이념과 제도가 아무리 다르다 하더라도 헤어진 혈육들의 생사 확인마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문명사회에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명분에 의해서도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늦추거나 회피해서는 결코 안될 것

입니다.

인간의 수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더 이상 늦춘다는 것은 결국 이산당사자의 한을 생전에 풀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인류에 반하는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은 이 절실한 이산가족들의 아픔과 피맺힌 절규를 직시하고 같은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양심에 의거하여 그들의 소원을 풀어주는데 성의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본인은 지난해 광복절을 기하여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권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우리 대한민국부터 개방할 것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북한대표들이 참가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인은 남북한간에 접촉과 대화의 문이 열려 모든 동포들이 이상과 이념, 그리고 제도에 관계 없이 조국강토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을 때, 우리 민족의 진정한 화합이 다져지고 제이의 조국광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동포 여러분

북한공산집단의 끊임없는 무력적화야육과 도발책으로 당장에는 통일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이산과 갈등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분단 청산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국권상실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만큼 힘있는 나라로 성장했으며, 국력의 신장과 더불어 통일을 성취하는 실력을 날로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부강하고 번영된 선진조국은 이제 눈앞에 펼쳐지려 하고 있으며, 6천만의 염원인 평화통일의 신화적 위업은 멀지않아 우리의 손으로 실현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기공되는 이 독립기념관은 바로 번영과 통일의 위대한 민족사를 창조하는 온 겨레의 생명력을 개화시키는 영광의 전진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민족자존의 빛나는 전통을 굳건한 초석으로 하여 의지와 긍지로 충만된 민족의 전당을 건립하고, 그러한 의지와 긍지를 원동력으로 삼아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해 나가면 통일된 선진조국을 구현하는 제이광복의 그날은 반드시 우리 앞에 다가오야 말 것입니다.

영원불멸의 영광된 민족사를 위해 우리 모두 조국이 광복되던 그날의 환희와 오늘의 벽찬 결의로 다시 뭉쳐 힘차게 전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두환 대통령은 금번 치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발전과 조국통일에 대한 의욕을 북돋아 주었으며, 또한 이 치사에서 우리는 새 시대의 개방정책과 대화노력으로 온 민족의 염원인 조국통일을 우리 손으로 기필코 실현시키고야 말겠다는 전두환 대통령의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960년대초부터 민족의 저력을 재발견한 우리 국민은 그 동안 「하면 된다」는 신념 속에 굳게 뭉쳐 고귀한 땀을 흘려온 결과, 민족사상 유례없는 국가발전을 이루어 왔다. 특히 1980년대 초의 흑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제5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지난 3년 동안에 안으로는 안정기조의 회복과 더불어 제2도약의 기틀을 착실하게 다져 나가는 한편, 밖으로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우리 민족의 권익을 신장시켜 나감으로써 세계 속의 새 한국의 상을

크게 부각시켰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국가발전을 지속화 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시대에 수 천년을 단일민족으로서 살아온 우리 겨레의 끈질긴 생명력과 슬기로운 창조력이 뜨겁게 분출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다시금 전진의 결의를 가다듬고 화합의 의지를 한데 모아 이 기적의 힘을 발휘함으로써 선진조국의 창조와 더불어 평화적인 자주통일의 길도 앞당기게 될 것이다.

## 2. 손재식 국토통일원 장관, 북한측에 대화호응 촉구

1983년 9월 24일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은 국토통일 고문회의에서 행한 보고에서 「북한측은 남북대화를 여전히 거부한 채 대화의 장 밖에서 그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되풀이함으로써 사실상 통일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북한측이 이제라도 대화에 호응해 온다면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함께 그들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남북대화에는 응하지 않은 채 회담장 밖에서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선전을 일삼고 있는 북한의 그릇된 대화자세의 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북한이 남북대화를 수락하면 그들의 이른바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우리정부의 적극적인 대화자세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손장관의 언급내용은 지난 9월 9일 북한의 김일성이 소위 정권창건 35주년 경축연회연설에서 그들이 내놓은 「고려 연방제」만이 유일한 통일방안이라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연방국가의 통일정부인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를 남북이 공동의장과 공동위원장을 각각 선출하여 윤번제로 운영하자고 주장한데 대하여 논평한 것이었다.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의 논평요지는 다음과 같다.

—지난 9월 9일 김일성은 이른바 정권수립 35주년에 즈음하여 고려연방제안이 유일한 통일 방안이라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연방국가의 수반을 남북이 각각 선출하여 윤번제로 운영하자고 했다.

—우리 정부는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적 여망에 따라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의 개최 등 남북대화의 무조건적인 재개를 여러 차례 북한측에 촉구해 왔으며 남북대화가 열리면 그 자리에서 남북한의 통일방안을 비롯하여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다함께 놓고 협의할 것을 누차 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측은 남북대화를 여전히 거부한 채 대화의 장 밖에서 그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되풀이함으로써 사실상 통일문제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이제라도 북한측이 대화에 호응해 온다면 우리는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함께 그들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할 용의가 있다는 우리의 입장을 다시 밝혀두며, 북한은 더 이상 남북대화를 기피하는 자세를 버리고 무조건 대화의 광장에 나와 통일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북한은 「고려연방제」안에서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로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의 구성만을 제의했을 뿐 연방국가의 구성과 운영의 필수요건의 하나인 연방국가 수반의 선임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그런데 김일성이 이 같은 의문에 대한 그들의 복안을 밝힌 것은,

첫째, 「고려연방제」안의 모순점과 비현실적인 것으로 지적되고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인 연방국가 수반 선임에 대한 그들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려연방제」에 대한 대외적 호소력과 설득력을 높이고자 한 것이고

둘째, 그들의 정권창건 기념 경축연회에 참가한 외국대표단 앞에서 행한 연설이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IPU 서울총회등 국제행사에 참가하는 외국대표들의 우리측 통일방안에 대한 지지를 감소시키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일성의 이번 발언을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고려연방제」만이 유일한 통일방안이라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 한 점이라든가 지금까지 그들이 「고려연방제」의 선결조건으로 주장해온 주한미군철수와 한국의 반공체제 철폐 등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대화에 대한 거부자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북한이 연방국가통일정부로 내놓은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 구성의 발상은 기본적으로 소련의 「최고연방회의」와 그 상설기구인 「간부회의」를 모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소련의 「간부회의」의장이 각료 및 외교사절의 임면, 선전 포고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북한이 주장한 「연방상설위원회」 위원장은 주요 외교권과 군통수권을 지닐 것으로 예상되는바, 동위원장이 오늘날처럼 남북한간에 이념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군사정책 방향이 상이한 상황하에서 운번제로 군대를 통솔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공론에 불과하며, 또한 외국에 파견되는 외교사절에 대한 임면 및 관장 문제에 있어서도 어려운 문제점이 제기될 것이 분명하다. 국가수반격인 「연방상설위원회」 위원장을 운번제로 하자는 것은 결국 위원장직을 북한측이 맡을 때는 공산주의를 하고 남한측이 맡을 때는 민주주의를 번갈아 하자는 식의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주장인 것이다.

또한 북한은 「최고민족연방회의」를 남북한 동수의 대표와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로 구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남북한의 인구분포를 무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방국가 통일정부의 구성문제를 떠나 북한의 「연방제」안이 갖고있는 기본적인 허구성은 민족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총선거에 의한 민주적 통일방식을 배제하고 이른바 공산주의자들의 합작논리에 따라 연공세력만을 통일대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북한의 주장이 부당하고 많은 모순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포용적 자세로 북한이 남북대화에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하면서 대화가 열리면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함께 그들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만 남북한의 현안문제와 아울러 분단조국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입장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밝힌바 있다.

전두환대통령은 1982년 1월 22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천명하는 가운데 「민족통일협의회의」가 남북한간에 구성되면 우리측의 통일헌법초안을 제시할 것임을 다짐하는 한편 북한측이 제시하는 통일헌법초안도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뿐만 아니라 통일조국의 정치이념과 국호, 대내외정책의 기본방향, 정부형태, 국회구성을 위한 총선거의 절차등은 「민족통일협의회의」에서 남북쌍방이 협의·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북한측과 어떠한 통일방안도 토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다. 또한 전두환 대통령은 1983년 1월 18일 국회에서 행한 1983년도 국정연설에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북한측에 촉구하고 동회담에서 협의·해결하여야 할 긴요한 당면과제로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문제」등 4개항을 제시함으로써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이 열리면 북한의 통일방안도 협의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처럼 우리 정부는 평화통일과 남북관계개선에 기여하는 대화가 마련될 수 있다면 북한측과 어떠한 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겠다는 개방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통일문제는 대화의 광

장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회담장 밖에서 논쟁과 시비의 구실로 삼으려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자기의 통일방안만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고집하면서 상대방과는 일체의 타협을 거부하는 대화부정적 자세를 버리고 하루빨리 남북대화에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다.

### 3.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11주년에 즈음한 남북조절위 서울측 성명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민관식공동위원장 대리는 1983년 7월 4일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11주년에 즈음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한 쌍방이 진실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7·4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따라 조건없는 대화의 광장에 마주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관식 공동위원장 대리는 이 성명에서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쌍방이 합의·서명한 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입각, 우리 정부가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제의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및 최고책임자회담, 지난해 국정연설에서 천명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그리고 금년도 2월 1일의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 제의 등을 조속히 수락할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합과 통일의 문은 오직 남북간의 접촉과 대화를 통해서만 열리는 것이며 그밖에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하였다.

그리고 북한측은 더 이상 우리 민족의 화합과 통일에 역행하는 분열의 길을 가지 말고 하루속히 온 겨레의 염원을 받들어 대화의 광장에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 대리의 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11주년에 즈음한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 대리 성명문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온 겨레의 염원을 받들고 남북한당국이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에 합의, 서명한지 오늘로서 11주년이 된다.

남과 북, 그리고 해외의 모든 우리 동포들은 당시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남북공동성명을 한결같이 환영하고 장차 이것이 발판이 되어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다지는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원하였다.

남북한 쌍방은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통일의 원칙, 신뢰분위기 조성, 다방면적 교류와 협력, 남북적십자회담의 추진, 서울과 평양간의 직통전화 설치,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 그리고 이상의 합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 약속 등 7개항에 합의하였다.

이것은 쌍방이 서로 남북한간에 현존하는 체제와 이념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먼저 상호 접촉과 대화의 길을 열고 이를 통해 남북한 관계의 개선과 통일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온 겨레 앞에 다짐한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후 남북한간 제반사태는 7.4남북공동성명에 기대를 모았던 우리 겨레의 염원과 달리 이미 시작된 접촉과 회담마저 중단되고, 이로 인해 상호불신과 긴장이 더욱 심화되는 쪽으로 후퇴함으로써 화합과 통일을 향해 진진하려는 온 겨레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북한측은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적십자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킴으로써 남북공동성명에 명문화되어 있는 합의사항을 깨뜨렸을 뿐 아니라 지금에 와서는 남북한간의 모든 새로운 접촉과 대화마저 거부함으로써 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을 유린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측은 남북한 쌍방이 7.4 공동성명의 기본정신으로 되돌아가서 하루속히 접촉과 대화를 재개하는 것만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고 통일을 실현하는 지름길임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다.

우리 정부는 제 5공화국 출범과 함께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상호방문과 최고책임자회담을 제의

함으로써 남북한 관계개선과 통일문제 해결에 임하는 우리측의 새로운 실천적 결의를 보였다.

전두환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연설에서 포괄적인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내외에 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측에 대해 무조건 대화의 광장에 나올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1일 북한측의 주장까지도 포용한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를 제의함으로써 북한측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그 문호를 넓혀 놓았다.

남북한 쌍방이 진실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쌍방이 합의·서명한 7.4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따라 조건 없는 대화의 광장에 마주 앉아야 한다.

우리 민족의 화합과 통일의 문은 오직 남북한간의 접촉과 대화를 통해서만 열리는 것이며 그밖에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

접촉과 대화는 서로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통해 상호 신뢰를 증진함으로써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우리는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을 조속히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오늘의 비정상적인 남북한 관계를 타개하고 민족의 진로를 공동으로 개척하는 가장 빠른 길이며, 또한 상호 신뢰를 조성하는 바탕이 된다고 믿는다.

우리측은 또한 북한측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여 남북한당국 뿐 아니라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만나 민족의 현실문제와 장래문제를 기탄없이 협의하자는 제안도 내놓고 있다. 이로써 우리측은 사실상 남북대화의 형식에 있어서나 그 내용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과 제한을 두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북한측 대표와 만나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아량과 성의를 다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우리의 입장은 하루속히 남북한간에 대화가 시작되어 평화통일의 실마리가 풀리기를 고대하고 민족전체의 뜻을 진정으로 대변한 것이며, 또한 이는 7.4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도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측이 평화통일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도 대화의 마당에 나서기를 거부하고 대내외적으로 우리를 반대하는 정치선진을 일삼고 있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북한측의 이 같은 태도가 남북한 관계개선과 통일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북한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상호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민족의 화합을 해치고 있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북한측은 더 이상 우리 민족의 화합과 통일에 역행하는 분열의 길을 가지 말고 하루속히 온 겨레의 염원을 받들어 대화의 광장에 나오기를 촉구한다.

#### 4. 국 내 반 응

제38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겸한 독립기념관 기공식에서 행한 전두환대통령의 연설내용에 대하여 국내 언론계에서는 「통일된 독립국가에의 지향」, 「독립정신은 통일과 선진화의 원동력」 그리고 「완전한 광복의 뜻」 등의 표제하에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지지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리고 북한 「정권창건」 35주년 경축연회에서 행한 김일성의 「연방제」 발언에 대한 손재식국토통일원장관의 논평과 관련하여 국내언론계는 김일성의 이번 발언은 「통일을 위한 연방제가 아니고, 오직 적화흡수를 위한 방편임을 또다시 드러낸 작태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민족의 양심을 되찾아 통일대화의 마당에 무조건 나와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한편 민관식공동위원장대리의 「7.4공동성명」 발표 11주년에 즈음한 남북한대화재개 촉구성명에 대해서도 북한당국이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거역함으로써 세계여론의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그리고 1천만 남북이산가족의 고통을 외면함으로써 민족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7.4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본연의 자세를 되찾아 남북대화의 광장에 지체없이 나와야 한다」는 요지의 사실을 게재했다.

도하의 각 신문들이 전두환대통령의 제38주년 광복절 기념식 및 독립기념관 기공식에서 행한 치사와 손재식국토통일원장관의 김일성의 「연방제」에 대한 논평, 그리고 민관식공동위원장대리의 남북대화 재개촉구성명에 대해 게재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통일된 독립국가에의 지향 —광복 38주년에 다지는 새 결의·새 각오—

경향신문(1983. 8. 15)

이번 광복절로 우리나라는 해방된 지 38년, 독립국가로 출범한지 35년을 맞는다. 38년이라는 기간은 한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는 물론 국가의 역사에 있어서는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다. 일제가 이 나라를 지배했던 36년 동안에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정신이 얼마나 극심하게 파괴되었던가를 생각해보면 국가의 역사에 있어서 38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인가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어떤 나라가 독립한 후 순탄한 발전을 하면서 35년 정도를 지나면 그 나라의 국기가 공고해지고 국가발전의 활력이 크게 왕성해진다고 말할 수 있다. 건국 후 35년의 세월이 지나면 국가를 이끌어가는 세대가 두세번 바뀌며, 그같이 지도층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국가 존립에 결정적인 위협이 제기되지 않으면 국가의 존립기반은 어떤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해도 결코 흔들림이 없을 만큼 확고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건국 후 35년 정도의 기간동안 국가발전이 지속되어오면 사회 각분야에서 국가발전 추진력에 관심이 붙어 발전의 활력이 크게 제고되게 마련이다.

요컨대, 정상적인 상황에서 건국 후 35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면, 국가는 한 국가로서의 성숙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꼭 35년이 되는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의 국가 상황을 살펴 볼 때 이 나라가 과연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를 자문자답해 본다. 안타까운 일이지는 하지만, 객관적인 척도를 가지고 우리의 현 국가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이 나라의 나이는, 성숙기에 달했으되 국가의 실질은 아직 성숙의 정도에 이르지 못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건국 후 35년, 뭘했는가

그러면 이 나라는 무엇 때문에 건국 후 3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아직 성숙한 국가가 되지 못하고 있는가.

그 첫째 원인으로서는 우리 민족의 해방이 타력에 의한 분단된 해방이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우리의 분단된 해방은 남의 힘에 의해 이룩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단은 우리 민족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었으며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은 국토의 절반과 민족의 절반만을 가지고 독립할 수 밖에 없었다. 이같이 국토와 민족의 절반만으로 독립했으니 이 나라는 처음부터 국가발전의 저력을 반감당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같은 분단에 따른 남·북한간의 긴장은 우리의 국가발전을 지속적으로 저해하는 명에가 되었다.

둘째 원인으로서는 6.25라는 대참극을 들 수 있다. 남한을 무력으로 적화시키려는 야욕에서 비롯된 북한군의 기습 공격과 그로 인한 3년간에 걸친 전란으로 인해 이 나라의 국가발전기반은 철저히 파괴되었다. 그 결과 우리는 6.25로 인한 파괴를 회복하는 데도 많은 세월과 정력을 소모하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우리의 국가발전은 그만큼 지체될 수 밖에 없었다.

세째 원인으로서는 이 나라의 순탄하지 못했던 정치사를 들 수 있다. 건국 후 우리는 많은 정치적 파란을 겪었고 그러한 파란을 겪는 동안 이 나라의 국가발전 행로는 단절과 우왕좌왕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같은 단절과 우왕좌왕은 이 나라의 국가발전 추진 저력을 헛되이 소모시킴과 동시에 투여된 국가발전 노력에 상응하는 발전효과를 거둘 수 없게 했다.

역사에 있어서 「만약」이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지만 만약 우리의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이상과 같은 원인들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국가발전은 오늘날의 수준과는 현저히 다른 높은 수준에 달했을 것이며 오늘날 이 나라는 성숙한 국가가 되어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국민의 창의성과 근면성, 그리고 우수한 두뇌를 생각할 때 우리는 과거 우리를 처절하게 착취했으며 오늘날에는 선진국이 된 이웃 일본에 결코 뒤지지 않은 국가발전을 이룩했을 것이 분명하다.

#### 민족의 시련 끝낼 시기

까닭이야 어찌되었건 오늘날 우리의 국가발전 수준이 건국 후 35년이라는 상당한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아직 미숙한 수준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혹자는 19세기 후반부터 닦쳐온 우리 민족의 시련기가 끝날 날이 아직도 멀었다고 비탄해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시각을 달리해서 본다면 우리의 국가발전 수준은 결코 비탄할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다. 앞서 열거했던 우리의 국가발전 저해 원인들은 다른 민족이라면 그 중의 하나만으로도 견뎌내지 못했을 심각한 것들이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천연자원의 혜택이나 기술과 경험의 축적없이 그런 심각한 부담과 원인들을 극복하면서 2차대전후에 독립한 개발도상국가들 중에서 가장 선진된 수준의 발전을 이룩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국가발전수준은 비록 선진적 성숙성을 가지지는 못했다 할 지라도 우리 민족의 저력이 매우 크며 우리민족에게 닦쳐왔던 시련기가 끝나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일망정 결코 비탄해할 것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다.

어느 민족에게나 시련의 시기는 다 있게 마련이다. 다만 그 구체적 시기가 다를 뿐이고 그를 극복하는 민족의 저력이 다를 뿐이다. 19세기 후반 우리 민족에게 닦쳐왔던 시련이 결코 유별난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 민족이 당시 그러한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련이 오래 계속되었던 것이다. 만약 조선조 말 이 나라의 지도층이 내부 분열없이 외세에 대해 단결되고 현명한 대응을 했었다라면, 그리고 해방 후 우리 민족의 정치세력들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다라면 우리 민족의 시련기는 보다 짧은 기간에 극복

되었을 것이다.

이같이 볼 때 오늘날 완전히 끝났다고는 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시련기를 보다 이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시련기의 마지막 고비가 좀더 오래 갈 것인지 여부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세대가 시련을 조속히 종결시킬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 발휘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자주의식과 현실관

현재 끝나가고 있는 민족의 시련시기를 보다 앞당겨 종결하고 우리의 국가발전 수준을 더욱 높여 보다 이른 시일 내에 성숙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우리 세대의 국민들이 갖추고 발휘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숙한 국민의식이다.

성숙한 국민의식이란 한마디로 국민들이 갖는 국가주권자로서의 성숙한 「성인」 의식을 말한다. 그런 점에서 성숙한 국민의식에 필요한 요체는 자주의식과 어른스런 현실관이라 할 수 있다.

성숙한 국민의식으로서의 자주의식이란 국가가 당면한 문제들을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외세에 의존함이 없이 국민의 단결된 힘에 의해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식을 말한다.

자기의 문제를 남에게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사람은 결코 성인이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주의식을 갖추고 발휘하지 못하는 국민은 성숙한 국민이라고 말할 수 없다. 과거 우리 국민들 가운데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남의 힘을 빌어서 쉽게 해결해 보려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성숙한 국민의식을 가진 국민은 그러한 미성년적 의타심을 철저히 탈피한 국민을 말한다.

성숙한 국민의식으로서의 어른스런 현실관이란 국가의 현실을 파악함에 있어서 남에게 빌어온 척도나 소아적 이상주의의 기준을 피하고 자기고유의 독자적 척도와 세련된 현실주의적 기준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어른스런 현실관을 가진 국민은 국가의 현실이 남의 나라의 그것에 비해 불만족스럽다 하여 금방 불만을 터뜨리는 조급함을 보이지 않으며 국가적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 난관의 어려움에 지레 질린다거나 한 두 번 노력하여 극복되지 않는다 하여 난관극복 노력을 포기해버리는 것과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 요컨대 어른스런 현실관을 가진 성숙한 국민은 국가의 현실에 대해 자멸함이 없으며 항상 자제와 인내심을 발휘한다.

#### 성숙된 국민의식

우리 국민 모두가 이와 같은 성숙한 국민의식을 갖는다면 이제까지 우리의 국가발전을 저해하여 우리를 아직도 성숙한 국가가 되지 못하게 한 주요원인들 가운데 우리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인 정치적 시행착오가 국가발전 행로의 우왕좌왕을 지양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국가의 당면문제를 외세에 의존함이 없이 우리 국민의 자주적 역량에 의해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의 정치상황에 대한 외부의 영향력은 배제될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정치상황과 국가발전 노력이 외부의 영향에 의해 변동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 국민이 국가의 현실을 자주적인 척도와 현실주의적 기준에서 파악한다면 조급히 정치질서의 변동이나 국가발전노선의 변화를 재촉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정치적 시행착오와 국가발전행로의 우왕좌왕으로 인해 소모되었던 국민의 국가발전추진역량은 국가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모든 국민들이 성숙한 국민의식을 가짐으로 해서 이처럼 정치적 시행착오와 국가발전 노선의 우왕좌왕이 지양된다면 이 나라는 국가발전을 위한 직선 코스를 일관되게 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직선 코스에 따른 국가발전에 우리 민족의 우수한 자질을 바탕으로한 국민의 역량이 제대로 투입된다면 우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기를 공고히하고 국가발전 추진력에 관성이 붙은 성숙

한 국가를 이룩하게 될 것이며 거기서 한걸음만 더 나아가면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선진조국창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선진화한 국가의 힘이 밀받침되면 타의에 의해 분단된 우리의 국토는 우리의 자주적인 노력에 의해 통일되는 기반이 닦아질 것으로 믿는다.

15일에 기공된 독립기념관 건립의 뜻도 통일지향의 자주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약 1세기에 걸친 우리민족의 시련은 그 같은 성숙한 국민의식을 가진 자주적인 국민의 노력에 의해 보다 이른 시일 내에 완전히 끝나고 국운을 제대로 탄 「통일된 독립국가」의 건설이라는 역사적인 대공사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본다.

### 독립정신은 통일과 선진화의 원동력

-독립기념관 기공에 붙여-

경향신문(1983. 8. 16)

15일 기공된 독립기념관은 한마디로 우리민족이 과거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강한 독립정신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물증이 될 것이다. 1986년 8월 15일에 건립공사가 매듭지어지면 이 독립기념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세대의 민족에게 우리민족의 강한 독립정신을 재확인 해 주고 우리 후손에게 우리 민족이 강한 독립정신을 가졌던 민족임을 계속 일깨워주게 될 것이다. 독립정신은 주인의식이요 자주정신이다. 민족이 자기나라와 역사와 주인이라는 의식, 그리고 자기민족의 당면한 문제들은 아무리 어려운 것일지라도 자기민족 스스로가 해결하겠다는 정신이 곧 독립정신이다.

그런 점에서 독립정신은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 있어서나 민족의 당면한 난관을 극복하고 민족 국가의 발전을 추진하는 정신적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좁은 영토에 살고 있는 적은 인구의 민족이라 하더라도 독립정신이 강한 민족은 그 민족에 닥쳐온 난관들을 끈질기게 극복하여 세계무대에서 발전된 지도적 민족이 되고 아무리 광대한 영토와 방대한 인구를 가진 민족이라 하더라도 독립정신이 약한 민족은 쇠퇴와 몰락을 거듭했던 세계의 역사가 그를 잘 말해 주고 있다.

독립정신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개명된 민족과 국가는 자기민족과 국민의 독립정신을 고취, 함양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로 그와 동일한 이유에서 내외 동포들은 지난해 독립기념관 건립안이 제시되자마자 독립기념관 건립 모금운동에 거족적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것이며 새로 건립될 우리민족의 독립기념관이 다른 어느 민족 어느 국가의 독립기념관보다도 훌륭한 것이기를 한 마음으로 기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조선조말의 혹독한 시련과 36년간에 걸친 일본의 악랄한 식민지 지배를 겪는 동안 민족의 독립정신이 크게 손상당하는 쓰라림을 겪었다. 특히 식민지 시대에 일제는 온갖 간교한 술책을 동원하여 식민사관을 우리 민족의 머리 속에 강제로 주입시켰으며 우리 민족이 열등한 민족이며 역사적으로 독립정신이 약한 민족이라는 관념을 식민 잔재의 하나로 이 땅에 남겨 놓았었다.

독립기념관건립은 조선조말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 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당했으며 광복 후에도 일제가 주입한 식민사관의 영향으로 우리민족에 대해 잘못된 관념을 가졌었던 우리 스스로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에 대한 우리 민족의 분노의 표출이며 그 같은 약함과 어리석음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우리 민족의 결의의 표명이며 따라서 우리의 민족적 자존심의 쉼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독립기념관은 우선 우리의 민족적 자존의 전당이며 민족의 독립정신을 재확인하고 고취·함양하는 도장의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독립정신이 민족적 시련의 극복과 발전의 정신적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독립기념관은 우리민족이 당면한 분단이란 난관을 극복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선진국을 건설하기 위한 「제2광복」의 전진기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3년 후면 우리민족의 독립기념관은 그 자랑스런 모습을 6천만동포와 세계 인류 앞에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 3년 동안 건립을 책임맡고 있는 이들은 이 기념관으로 하여금 「전당」·「도장」·「전진기지」로서의 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기념관의 구조에서부터 전시물의 수집과 진열에 이르기까지 전심전력을 다해 주고 또한 모든 국민과 해외동포들도 이 기념관에 진열될 전시물의 수집에 독립기념관 기금모금운동 때와 같은 열의를 갖고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

#### 완전한 광복의 뜻

중앙일보(1983. 8. 15)

광복 38주년을 맞는다. 이날을 맞을 때마다 광복의 감격은 되풀이되지만 그 감격의 강도는 점점 시드는 감이 있다.

그것은 세월이 흐름 속에 묻혀버리는 과거의 기억 같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겠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드는 감격은 결코 세월의 조화만은 아닌 것 같다. 세월의 경과속에 「광복」의 의미에 대해서 차츰 냉정하게 반성하고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광복」이 결코 진정한 민족의 광복이 아니며 그것이 가져온 감격은 결코 값싼 감상의 증거만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8. 15의 광복은 엄밀한 의미에서 한민족 스스로가 쟁취한 민족의 영광이 아니었으며, 그 광복을 수용한 한 민족의 태도도 결코 긍지와 책임이 충만한 정당한 태도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그로써 결과한 남북분단과 대립의 추악한 싸움이 또한 민족적으로 수치와 실망을 가중 시킬만한 것이었다는 등이 차츰 우리의 의식가운데 분명히 되기 시작한 때문이다.

일제하 36년이라는 세월은 반만년 한민족사에 있어 전례없던 주권상실의 절망적 시대였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 절망이며 고난이며 암흑이요 무의 시대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암흑과 무와 절망과 고난을 해소한 광복은 실로 민족에게 감격적인 실체였다. 그 암흑의 시대에 국권회복과 민족 재생의 괴로운 몸부림을 했던 사람들에게겐 그 광복의 의미는 한층 뚜렷한 것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감격을 허식과 분식으로 오염시키며 민족이 아닌 개인의 사욕의 기회로서 포착한 사람들이 있었음도 잊어서는 안되겠다.

우리 스스로가 쟁취한 해방이 아니고 열강이 가져다준 타율적 해방이었다는 엄연한 사실로해서 우리는 민족과 국토의 분단이란 불행을 감수해야 했고 6. 25의 민족전쟁을 겪어야 했으며 민주 복지사회의 이상을 수없이 유보하며 정치권력 투쟁의 회오리 속에서 신음해야 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세월 우리의 고난과 신고는 우리에게 자각과 반성의 한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민족자존에 대한 통렬한 의식이 없이, 민족의 변영과 공동선의 추구라는 대의에 대해 순응하지 않으면서 결코 8. 15광복의 감격을 되뇌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인식도 생긴다.

광복은 결코 민족에게 한갓된 감격만을 주고 있지 않다는 인식이 지금 요구되는 것이다.

일제하의 국권상실시대가 민족의 무능과 불의를 참회할 계기였다면 광복 이후의 지난 세월은 또 다시 우리민족의 미망과 나태를 장치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 점에서 우리가 반토막의 땅덩어리에서 독립을 부지하고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다행스럽고 대견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지언정, 완전한 국토통일과 민족통합의 대의 앞에 경건하게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할 각오를 늘 다짐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현상안주의 실리때문에 분단의 논리를 너무 과장할 필요도 없어야겠다.

삶의 편안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이겠으나 우리가 거기에 연연할 때 우리 후손의 지속적인 불행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어렵더라도 또 괴로운 일이라도 이 시대의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일이라면 즐겨 그것을 맞아 해결해야겠다는 책임의식과 용기도 필요하다.

민족통일, 국토통일의 대의앞에 민족이 자기의 소리를 희생하겠다고 다짐하는 자각의 촉구다.

그 자각을 기반으로 우리는 민족과 국토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간단없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 기공식을 갖는 독립기념관의 의미도 그 점에서 응집되어야 한다.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민족의 독립과 자주를 확인하고 감격한다는 의미에만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날의 해방과 광복이 완전한 민족통일을 가져오지 못했고 오히려 민족의 분열과 대립과 잔학의 역사를 불러온 것이라면 광복 또는 독립 그 자체는 오히려 민족에게 오욕이며 불행이었다는 점을 자각하지 않으면 독립기념관은 무의미한 때문이다.

그것이 호사를 극한 축조물이 되고 민족의 영광을 대변하는 장소가 된다는 것만으론 아무 의미가 없다.

민족의 통일과 국토의 회복을 가져올 민족화합의 상징이며 완전한 민족광복의 실현을 다짐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점에서 이 38주년 광복절은 완전한 민족광복의 무거운 과제를 민족 한사람 한사람이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겠다.

#### 독립기념관을 지니는 영광

서울신문(1983. 8. 16)

우리는 드디어 독립기념관을 지니는 세대가 되었다. 조국이 일제에서 해방된 지 38년만에서 비로소 갖게 되는 이 광복의 도장기공에 깊은 감격을 맛보게 된다. 더우기 이 기공이 뜻깊은 것은 국민 모두가 총참여하여 모금한 국민성금으로의 첫 삽질이기 때문이다.

모금운동이 펼쳐진지 4개월만에 3백 70억원을 달성한 이 기금 속에는 백일잡이 돌잡이의 금붙이도 녹아들어 있고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내놓은 벽돌 한 장 한장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광주리 행상 아주머니의 품속에 꼬깃꼬깃 간수되었던 하루치 수입들도 차곡차곡 담겨 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뜨거운 마음으로 모은 정채만으로 이룩된 3백 70억원 기금을 가지고 처음으로 삽질을 시작한 이 민족의 대역사에 4천만 국민은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전두환대통령도 기공식 치사에서 독립기념관을 세우는 첫삽질이 「제2광복의 소명을 구현하는 우리 모두의 투철한 결의와 힘찬 전진의 징표」라고 강조했다. 번영과 통일의 위대한 민족사를 창조할 영광의 전진기지임을 다짐한 것이다.

『산빛이 아름답고 살기가 없는』 후성산 1백 20만평 벌의 중국에 오는 1986년 8월까지 완공될 기초시설과 부대시설의 규모가 기념관 연건평 1만평에 9천평의 독립광장, 1만여평의 옥외전시장이 되리라니 그 웅자에 대한 기대로 마음이 설렌다.

역사의 진실된 모습을 통해 미래사회의 진로를 찾는 민족의 산 교육장이 되게 한다는 위대한 뜻이 실현될 수 있는 구조물과 시설물이 이룩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기념관 기공과 때를 같이하여 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이곳에 소장할 전시자료수집에도 적극적으로

로 나서고 있다. 전국의 신문 방송의 협조를 얻어 금년말까지 적극적으로 모으게 될 대상은 국난 극복 및 항쟁자료, 조선조말부터 8. 15광복까지의 민족수난의 실상과 독립운동자료, 기타 역사적 사실과 구국운동 자료들이다.

이 같은 유형의 자료들을 속속들이 모아서 한자리에 정리 전시하는 일은 독립기념관을 짓는 일과 맞먹게 중요한 일이다.

그와 함께 무형의 자료들을 유형화하여 전시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을 널리 지혜를 모아 실현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증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잊지 않기 위해서 일제 36년의 핍박이 실증되어야 하고, 동시에 태만했던 해방 후 38년의 반성도 담길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대통령의 뜻인 『독립의지를 국력배양의 원동력으로 승화』 시킬지혜이기도 한 것이다.

해외에 흩어진 자료들을 수집하는 일 또한 긴요한 일이다. 노령이나 중공처럼 막힌 곳은 뒤로 미룬다하더라도 하와이나 미주지역같은 곳의 독립운동의 무대들, 동경 YMCA 회관같은 독립운동과 저항운동의 현장과 발상지들에 대한 보존 그리고 그 현장과 흔적들의 기록화 작업들이 모두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실물과 기록과 영상들이 입체적으로 완성되어 독립기념관에 담겨질 때 비로소 제2광복의 소명은 구현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사업의 추진을 당대에 끝내는 성급함으로가 아니라 차근차근 시행착오를 줄여가며 진행해야 한다. 우리는 독립기념관의 건립을 위해 4천만이 벽돌값을 모으고 그것을 착수한 세대로서 충분히 영광된 세대다. 그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도 졸속의 어리석음만은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옳고 그름, 되밧혀야  
-독립기념관을 짓는 참 뜻-

조선일보(1983. 8. 16)

## 1

독립기념관 건립의 첫 삽을 들었다. 해방 후 그 어느 역사보다도 뜻깊은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 역사는 그러나 굉장한 건물만 덩그렇게 지으려는 것은 아니다. 지나간 날의 일을 단순히 회고만 하자는 것도 아니다. 케케묵은 골동품을 진열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끼 낀 박물관을 지으려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2의 광복운동이요, 역사인식의 왜곡을 시정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현재와 미래를 창출하려는 현실적인 민족운동의 표현이다.

현대 한국의 민족운동은 이웃 중국민족의 선각자가 말했듯이 상미성공 아직 성취하지 못한 이상이다. 우리의 뜻에 반하여 국토가 분단되었고, 우리의 염원에 반하여 통일이 된 민주주의적 민족 국가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이상을 달성하는 것이 즉 제2의 광복운동이라면, 그에 앞서 우리는 퇴색한 역사인식을 되살리고 왜곡된 사안을 교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난 38년 동안 우리는 사회사적으로는 많은 것을 성취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소비하고 입고 먹고 즐기고 여행하는 생활사적 변혁은 눈부시게 수행됐다.

그러나 한 민족으로서의 올바른 자기인식과 좌표설정엔 있어선 뒤죽박죽이 된 점이 하나들이 아니다. 그까짓것 어떻게 살든 먹고 살면 그만이지 역사인식 따위야 아무러면 어떠냐고 반문한다면 더 이상 할말은 없다. 그것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한낱 동물로서 산다는 천박한 이야기 밖엔 안되기 때문이다.

뒤죽박죽으로 전도된것 가운데 가장 심했던 것은, 역사에 있어서의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이 아리송해진 일이다.

누가 뭐라고 교묘한 반론을 제기하든, 근대 한국사에서 가장 옳았던 것은 항일투쟁이요, 가장 못됐던 것은 일제의 주구행위였다. 세상이 아무리 세속화 되었다 해도 이것만은 너무나 명명백백한 진리라고 단정할 수 있고 또 단정해야 하겠다.

그런데 못된 공산당이 남침을 해오는 바람에 행정 기술자들인 친일파들이 유아무야로 숙정을 면하자, 어느덧 항일은 케케묵은 고담 취급을 받게 되었고, 일제때 요령좋아 출세한 수재들이 판을 치게 되었다.

역사인식은 이때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하더니, 도대체 옳고 그른 것이 따로 없다는 식의 극단적인 가치혼돈이 풍미하게 되었다.

이러한 혼돈은 우리 사회에 치명적인 파괴력을 미쳤다. 옳은 일이랍시고 하는 사람은 불우낙척, 처지게 되고, 요령껏 이리붙고 저리붙는 만년 해바라기족들이라야 잘살게 된다는 천박한 처세철학이 풍조화된 것이다.

요즘 우리가 개탄하는 사회윤리의 해이현상은 그 뿌리가 바로 거기에 있다. 정치의 도덕성이나 경제기업풍토의 윤리성, 사회의 정화, 문화의 건전육성등, 모든 과제가 이 원죄적인 가치혼돈을 극복하여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을 다시 밝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일이다.

독립기념관 건립사업은 바로 그 옳고 그름의 대경대도를 바로잡아 우리 현대사의 원죄를 씻고, 민족적인 삶의 원형리정을 되살리자는 운동이어야 한다.

#### 「연방제」 모순의 되풀이

동아일보(1983. 9. 26)

KAL기 격추로 소련의 만행에 온 국민이 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 터에도 북한은 대소 규탄 한마디 없이 외면하고 있었다. 더우기 중공까지도 소련의 무자비한 여객기파괴를 가차없이 질책하고 나섰는데도 북한 김일성은 모르는 체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다가 KAL기 피격 9일만에 북한은 전혀 KAL기 비극과는 관계도 없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이란 것을 또 들고 나왔다. 원래 북한이 1960년부터 심심하면 내놓고 있는 연방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남북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북한의 대남적화를 위한 선전책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제 모를 사람은 없다.

우선 북한은 연방제에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한다고 지적해 놓고서는 한편으로는 연방제 실시를 위해 먼저 남한의 보안법을 철폐하고 기존정권이 물러나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붙임으로써 연방제라는 것이 결코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명백해졌다. 민족화합에 의한 통일이 아니요, 적화연방을 노리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밖에도 연방제라는 것은 모순투성이로 얽혀 있다. 한두가지예로서 연방제에 등장하는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의 의장에 관한 대목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연방 국가의 성격과 방향을 좌우하는 의장의 선출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애매한 상태로 남겨 놓았다. 김일성은 지난 9일 KAL기 피격으로 온 겨레가 비탄에 빠져있는 때에 엉뚱하게도 의장선출에 관해 제의하고 나섰다.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의장은 남북한이 공동의장을 각각 선출해 윤번제로 운영하자는 내용이었다.

국민학교 반장도 아니요, 연방국가의 실질적 장인 의장을 윤번제로 하자는 김일성의 안에 실소

를 금할 수가 없다. 북한측이 의장을 맡을 때는 공산주의를 하고 남한측이 맡을 때는 민주주의를 번갈아 하자는 말인가. 도대체 실행 불가능한 제안으로서 20세기 후반에 중세기의 봉건세습제를 꾸미고 있는 북한같은 체제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진실로 통일을 위한 연방제가 아니요, 오직 적화흡수를 위한 방편임을 또다시 드러낸 작태에 불과하다. 연방제 모순에 대한 또다른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도 24일 남북대화사무국에서 열린 통일 고문회의에서 『남북대화를 여전히 거부한 채 대화의 장밖에서 그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되풀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동시에 손장관은 북한측이 대화에 응해 온다면 서울측의 통일방안과 함께 『그들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도 손장관의 이같은 논평과 제안에 의견을 같이하며 남북 대화가 개최된다면 서울측은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할 용의를 거듭 천명한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북한의 최근 동향으로 보아 우리는 북한이 아직도 어떠한 대화에도 호응할 태세가 안되어 있다는 데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KAL기가 피격된 지 23일만에 비로소 입을 열고는 동족의 비극에 동정을 하기는 커녕 도리어 소련의 만행을 두둔하고 나섰다. 북한은 방송을 통해 한국을 비롯, 서방세계가 『일대 반소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소련을 비호하고 나섰다.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이란 것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새삼 실감케 하는 북한의 최근 동향임에 틀림없다.

#### 북은 통일대화에 호응하라

서울신문(1983. 9. 25)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은 어제 통일원 고문회의에서 『북한측이 대화에 호응해온다면 우리는 우리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과 함께 그들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그동안 누누히 밝혀온 정부의 기본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 발언은 특히 지난 9일 북한의 김일성이 소위 「정권창립 35주년」연설에서 이른바 「고려연방제」안을 거듭 주장한데 대한 반박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평가된다.

김일성은 그의 연설에서 「고려연방제」안이 유일한 통일방안이라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연방국가의 통일정부인 「최고 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를 남북이 공동의장과 공동위원장을 각각 선출하여 윤번제로 운영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그의 이같은 주장은 한마디로 말해 「연방제」안의 비현실성을 입증하는 모순점의 하나로 지적돼온 연방국가 수반신임에 대해 그들 나름의 구상을 새로운 제의인양 내놓음으로써 「연방제」안에 숨겨진 적화통일의 흉계를 호도하고 대외적으로 이 방안의 설득력을 애써 높여보려는 선천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속셈은 이 방안의 선결 조건으로 주장해온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의 반공정책철폐 등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점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북한측의 「연방제」안이 본질적으로 국제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위장평화선전용이고 한국의 내부붕괴를 촉진하기 위한 대남적화전략용이라는 것은 이 같은 「선결조건」이외에도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에서 이미 명백히 드러난지 오래이다.

국제사회에서 통념화돼 있는 연방제는 「연방국가」와 「국가연합」의 두 유형으로 대별되며 이 양자간에는 엄청난 개념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북한측은 「연방제」안을 주장함에 있어 우리말로는 영구적 결합형태의 「연방국가」란 용어를, 외국말로는 남북간 평화공존의 뜻이 함축된 「국가연합」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부터 애매모호하다는 자체가 그들 주장의 허구성을 단적으로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제5공화국 출범을 전후하여 분단체제를 민족주체적인 역량으로 해소하기 위한 매우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방안을 일관성있게 제시해 왔다. 특히 전두환대통령이 내놓은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제시는 통일문제가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고, 통일되기까지 민족의 고통과 불편을 경감해야 하며, 민족자해행위는 절대로 지양하여 같은 민족으로서의 자존과 긍지를 엄격히 지켜 나갈 것을 표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시는 북한측이 주장하는 모든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는 아량과 포용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남북대화를 여전히 거부한 채 대화의 장 밖에서 자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은 통일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최근의 KAL기 피격사건과 관련, 소련의 만행을 공공연히 두둔하고 있는 것은 자주·평화·민족의 대단결 등 지난날 남북한이 합의한 바 통일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족적 작태의 극치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북한당국은 민족의 여망을 집약적으로 대변하는 전대통령의 통일원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민족의 양심을 되찾아 통일대화의 마당에 무조건 지체없이 나올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

#### 「7·4성명」은 살아있다

서울신문(1983. 7. 3)

내일 4일은 지금으로부터 11년전 남북한이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던 날이다. 이 성명은, 주지되고 있는 바와 같이 분단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 당국 쌍방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완전한 의견일치를 본 평화통일 촉진에 관한 문서이다.

남북한은 이 성명에서 자주·평화·민족의 대단결 등 통일의 3원칙, 상호 신뢰의 분위기 조성,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 남북적십자회담의 추진, 서울과 평양간의 직통전화 설치, 남북조절위원회 운영, 이상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등 7개항에 합의했었다. 그리고 이들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해서는 서로 현존하는 체제와 이념을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상호 접촉과 대화를 통해 남북한 관계의 개선과 통일문제의 해결에 공동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것이 겨레 앞에 다짐된 이 성명의 기본정신이였다.

그런데 북한측은 성명발표 후 1년밖에 안된 1973년 8월에 이르러 남북조절위원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온 겨레의 평화통일 염원을 송두리째 짓밟았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우리측이 계속 제시한 새로운, 접촉과 대화마저 모두 거부함으로써 7·4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을 철저히 유린했다.

이에다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7·4성명 정신에 따른 남북한간 접촉과 대화의 재개노력을 인내와 성의를 다해 꾸준히 펴나오고 있다. 특히 전두환대통령이 지난해 내외에 천명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이제까지 제기돼 온 모든 남북간의 관계개선 및 통일접근방안을 총망라하여 체계화한 것으로 북한측의 주장까지도 적극 포용해서 남북대화의 길을 폭넓게 열려는 획기적인 실천적 제안이다.

이 포용적이고도 실천적인 우리측 제안을 북한측이 또 다시 거부하고 허구적이며 배타적인 소위 「연방제 방안」만을 되풀이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간단히 말해 첫째는 그들의 관심이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의 모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무력과 폭력에 의한 적화통일에만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세습체제의 강행 속에서 심화되고 있는 권력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우리

와의 선의의 접촉과 대화를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첫째 이유의 대표적인 실증을 우리는 최근 그들이 IPU(국제의회연맹)총회 서울 개최를 방해하기 위한 일본우회 대남파괴공작에 어느 때보다도 혈안이 되어 있는 사실에서, 그리고 둘째 이유의 구체적인 증거를 우리는 현재 모든 대남파괴공작의 총지휘를 김정일이 직접 행하고 있는 사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측은 거역할 수 없는 오늘의 대세와 배반해선 안될 민족의 여망을 똑바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절대적인 지지공명은 IPU 총회,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등의 서울 유치에 의해 단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민족적 수난의 유산을 청산, 해묵은 고통을 풀어야 한다는 간절한 열망은 서울신문사가 전개했던 「공산권 이산동포 찾아주기」사업과 한국방송공사가 요즘 방영하고 있는 「이산가족을 찾습니다」특별프로 등에 대한 감격적인 호응에서만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 당국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거역함으로써 세계 여론의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그리고 1천만 남북이산가족의 고통을 외면함으로써 민족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7·4 공동성명 정신에 입각한 본연의 자세를 되찾아 남북대화의 마당에 지체없이 나와야 할 것임을 우리는 이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해 둔다.

그 정신으로 돌아가자

- 7·4 공동성명 11주년 -

중앙일보(1983. 7. 4)

요즘 한국방송공사가 며칠째 벌이는 이산가족찾기운동은 우리들 모두의 가슴깊이 응어리져 있던 통환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감격적인 장면을 많이 연출한다.

과거 30년 이상, 생사를 모른채 헤어져 살던 혈육들이 강산이 세 번이나 변할만큼의 세월이 흐른 뒤에 재회하여 기쁨의 눈물바다를 흥건하게 이루는 모습이다. 아직도 찾아야 할 부모형제와 친척이 나타나지를 앓아서 비통에 젖은 사람들의 모습은 분단과 동란으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사적 비극의 한 단면이다.

방송공사의 운동을 통해서 모든 이산가족들에게 재회의 행운이 찾아온 것은 아니다. 특히 남북간에 떨어져 사는 이산가족들이 지난 며칠 사이에 느꼈을 좌절감과 고통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클 것이다. 아직은 꿈같은 얘기지만 남북한 당국의 합의로 양쪽이 텔레비전을 연결하면 남북의 이산가족들도 최소한 화면재회는 가능하다는걸 전파세대의 우리 모두가 잘 알기 때문이다.

1972년 7·4 공동성명이 남북한의 현존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원칙을 밝힌 것도 이산 가족의 재회나 상호 방문을 포함한 실현 가능한 교류와 대화를 축적하여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성취하자는 합의의 문서였다.

그때 7·4 공동성명의 성실한 추진과 성공에 건 기대는 1천만 남북 이산가족들 뿐만 아니라 6천만 한국인들 모두의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바로 다음해에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해버렸다. 7·4 공동성명이 제시한 남북 교류와 통일의 청사진은 그야말로 한 마당의 꿈으로 끝나고 말았다.

남북한 대표들이 판문점을 통해서 서울과 평양을 오가고, 서울과 평양을 잇는 직통전화 가동하고 있던 한해동안 우리는 기대에 넘쳐 있었다. 기대가 컸던만큼 북한에 의한 대화중단에서 느낀 배신감과 충격도 컸다.

그러나 우리는 7·4 공동성명의 정신은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1982년 1월 22일에는 전두환대통령이 통일헌법의 제정을 포함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제안하여 북한에 대한 우리의 문호를 더욱 널리 열었다. 뒤따라서 통일원장관은 서울·평양간 도로 개통, 인천·진남포를 통한 무역, 판문점을 통한 남북한 사람들의 왕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인 이용 등 20개 실천사업을 내어놓았다.

우리측의 이와 같은 제안들은 7·4 공동성명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한국문제의 해결, 민족의 에너지를 턱없이 낭비하는 남북대결의 종식, 평화통일의 정지작업은 하나에서 열까지 남북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의 결과다.

세계 여론이 우리의 제안과 통일을 위한 노력을 광범위하게 지지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우리의 제안들은 6천만 한국인들의 갈망을 대변하는 것이다.

북한이 「고려연방제」라는 연막을 피우고 우리 제안을 반대하고 대안이랍시고 남북한 정치인 연합회의를 열자고 하면서 우리의 통일방안을 오히려 분단의 영구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논리의 파산을 고백하는 것이다.

북한 지도층은 역사의 교훈까지 찾을 것 없이 건전한 상식으로 보아도 북한 사회의 혼란과 심지어는 김일성일가의 비극을 초래할 부자세습체제의 정착을 위해 7·4 공동정신을 외면하는 자세를 돌려 건설적인 대안을 가지고 남북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 7·4 성명 11년

동아일보(1983. 7. 4)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남북한간의 약속문서가 「7·4 공동성명」이다. 1972년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7·4 성명은 남북한간의 상설 직통전화 가설,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운영, 무장도발 포기, 상대방에 대한 중상 비방금지, 자주적 평화통일,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적극 협조 등을 골자로 했다.

이와 같은 7·4 성명에 따라 국토분단 4반세기만에 남북한 양체제간에는 대화가 열렸고 양측 대표들이 서울과 평양을 번갈아 가며 회의를 거듭했다. 서울과 평양에서의 회의는 물론 통일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 동시에 남북한간에 흩어져 생이별하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이들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한 남북한적십자회담도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가며 열렸다.

그러나 인도주의에 기초한 적십자회담과 7·4 성명에 바탕한 조절위원회담은 1973년 8월 28일 북한의 일방적인 대화중지 통고로 봉쇄되고 말았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고 있으나 북한의 김일성 집단은 아직도 서울측의 끊임없는 대화재개 촉구를 외면하고 있다. 작년 7월 4일 7·4 성명 10주년에 즈음하여 민관식 남북조절위 서울측 공동위원장 대리는 7·4 성명의 정신에 입각, 북한측의 남북직통 전화를 회복시키고 하루속히 대화의 광장에 나오도록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전혀 반응이 없다.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통일을 촉진하자고 약속한 7·4 성명을 무시한 채 도리어 무장도발을 일삼고 오해와 불신을 고조시키고 있을 뿐이다. 10여일 전만해도 김일성은 휴전선을 통해서도 무장공비 세 명을 수중으로 침투시켰는가 하면 일본에서는 조총련 내의 대남공작 요원들을 공격형으로 재판하는 등 대남도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일성의 대화 거부와 민족사의 진운을 가로막는 배신행위로 그치지 않고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들의 뼈저린 고통을 더욱 아프게 조여들고 있다는데서 이산가족들의 분노를 사기에 족하다. 우리는 지난 30일 밤과 1일 밤 KBS본관에서 벌어진 눈물겨운 장면들을 목격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의 프로그램에서 이산가족들이 6.25 공산남침 이후 30여 년만에

혈육을 찾는 순간 터뜨리는 통한의 울음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찢었다. 한 세대에 달하는 생이별의 통한은 이산가족들만의 비극만이 아니요, 우리 겨레의 고통이며 눈물이다.

KBS방송을 통해 상봉할 수 있었던 이산가족들은 그래도 이들이 남한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기에 죽기전이라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도 북녘 땅에는 무려 6백여만 명에 달하는 우리의 이산가족들이 살고 있다. 이들의 남한 가족 5백여만을 합치면 나날을 시름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산가족의 수는 무려 1천만명에 달한다. 이 모든 이들은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밤을 지새워 지켜 보면서 확인했듯이 눈물 속에 밤을 설치며 상봉의 날만을 고대하고 있다.

이들에게 상봉의 길을 열어주고 30여 년 맺힌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도 남북대화와 남북적십자회담은 지체없이 열려야 한다. 이산가족의 처절한 상봉절규는 이 겨레의 대화재개의 절규임을 북한은 직시, 즉각 대화에 임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 7·4 성명 열한들의 성찰

한국일보(1983. 7. 5)

오직 인간의 눈 만이 울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인간의 왜곡되지 않은 본 바탕은 동물의 울 줄 모르는 눈에도 비애를 읽을 수 있을만큼 착하다.

더구나 우리 겨레의 핵심적 개성은 본디 온화하고 아담하고 드넓은 민족적 향토의 자연환경 그대로 서로 정답게 터놓고 허물없이 어울려 살려는 화합의 열로 풀이된다. 그런데 누가 또는 어떤 사연이 민족적 심성의 본연을 짓밟고 흩어지게 했으며 마음의 상처 속에 「한」이라고 일컫는 어두운 저류를 거둬 응어리지게 했던가.

이제 우리는 짧은 희망과 기대를 지리한 실망과 환멸로 얼룩지게 한 7·4남북공동성명 열한들을 기념했다기보다는, 되짚어야만 했다. 그런데 이 전야의 며칠 동안 KBS가 마련한 「이산가족 찾기」 캠페인을 예워싸고 비록 남녘 땅에 한정되기는 했으나, 전국의 방방곡곡에 흩어져 생사를 모르던 피붙이들의 감동적인 만남을 차라리 통곡으로 달래야 했던 울음바다가 이루어졌다. 분단과 전쟁이 남긴 애통한 헤어짐 끝에 꿈같은 상봉을 웃음보다 눈물로 부둥켜안고 어찌할바를 모르는 겨레의 모습에 온 겨레의 눈시울이 뜨거웠던 감격의 순간, 순간이었다. 그러나 감격의 눈물보다는 애처로운 한숨 편이 더 많았고, 나아가 이러한 장면을 지켜보던 모든 동포들의 상념의 나래는 북녘을 향하다가 남북을 답답하게 가로막은 그 벽에 안타까이 부딪히지 않을 수 없었다.

눈물은 맑은 시냇물처럼 우리의 가슴을 씻어준다고 한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에 대한 공감은 인간의 심리적, 생리적 울적을 정리하고 깨끗이 해준다는 카타르시스(정화 작용)에 관하여 말하였다. 하나 그러한 일반론만으로 오늘의 한국인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비통한 사연을 사회적으로 풀 수는 없다.

회고하면 우리 조국의 평화통일 접근 노력은 타율적 「분단해방」이라는 세기적 부조리를 자율적인 민족화합으로 시정한다는 지향을 함축한다. 그리고 분단의 아픔과 동족상잔의 깊은 상처를 치료하고 아물게 하는 급선무에 비추어 남북간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을 완화하며 우선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보장해 주자는 것이 7·4 남북공동성명의 취지였음이 상기된다.

그러나 평양 독재층의 일방적 남북대화중단 선언 이후 오늘의 현실은 불신과 긴장의 가일층 심화 속에 그 이전보다도 후퇴를 되짚게 하는 형편이다. 북한 집권층은 안으로 가장 무자비한 「계급노선」을 강행하고 밖으로 폭력적 「적화통일」을 고집하는 실정이다. 한 마디로 그들에게 걸여된 것은 인간성이고 동포애이다.

하나 인류문명의 최근 성찰과 세계사의 새 진운은 권력체제와 이데올로기적 속박으로부터 자유

로운 인간성의 추구를 헤아리게 한다. 동구공산권의 반체제 「자유화」 운동을 보더라도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요구가 으뜸으로 부각되어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현재 노선은 세계사의 진운을 거역하려는 혹독한 반동에 불과하며, 이른바 「권력세습체제」 시도 따위로 지탱될 바 아니다.

오늘의 남북대비에서 본질적인 것은 바로 인간성과 동포애의 보금자리가 그런대로 남녘에 건재한 반면 북녘에서는 그것이 인공적으로 늘려있다는 사실이다. 그럴수록 우리는 화합을 향한 민족적 자아발전, 즉 뿌리찾기 속의 인간성 회복에 더욱 분발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감을 되새기고 실천해 나가야 하리라고 믿는다.

## 제2부 남북한 이산가족 재회추진운동의 새 국면

### 1. 이산가족찾기 운동과 관련한 대한적십자사 총재 담화문

유창순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1983년 7월 6일, 한국방송공사의 이산가족찾기 생방송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발표한 담화문에서 「남북의 1천만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남북적십자 회담을 재개하라」고 북한측에 대해 다시 한번 촉구했다.

유창순총재는 이 담화문에서 「인위적인 국토분단과 동족상잔의 참화로 빚어진 1천만 이산가족들에게 그들의 혈육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을 안겨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상이나 이념, 체제를 초월한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를 실현하는 길이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구실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총재는 『대한적십자사는 이와 같은 인도적 견지에서 그동안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하여 1천만 이산가족들의 생사·소재를 확인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상봉과 재결합에 이르기까지의 문제들을 아무런 조건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실천에 옮길 것을 주장해 왔으며, 우선 시범적으로 「노부모의 생사·소재 확인사업」, 「판문점 면회소 및 우편물교환소 설치」, 「성묘방문단 교환」, 「가족사진 교환」 등의 사업들을 제의하고 이 가운데 어떠한 사업이라도 조속히 실천에 옮길 것을 촉구해 왔다』고 덧붙였다.

유총재는 이어 「그러나 대한적십자사의 이같은 노력은 북한적십자회측의 거부로 인하여 어느 것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적십자회측은 남북적십자간의 인도적 대화의 통로마저 일방적으로 단절시킨채 우리측의 거듭된 대화재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북한의 대화거부 자세를 지적하면서 북한측에 대하여 「남북의 1천만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남북적십자회담을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유창순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담화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이산가족 찾기 운동과 관련한 대한적십자사 총재 담화문

지금 한국방송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이산가족찾기 특집 텔레비전 방송은 우리 국민들에게 재회의 감격과 함께 분단의 비애를 절감케 하고 있습니다.

KBS 텔레비전 화면을 통하여 나타난 이산가족들의 혈육을 찾으려는 간절하고 비통한 절규는 이산가족 재회가 그 어떠한 이유로도 더 이상 지체시킬 수 없는 절박한 인도적 문제임을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국토분단과 동족상잔의 참화로 인하여 빚어진 1천만 이산가족들에게 그들의 혈육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을 안겨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상이나 이념, 체제를 초월한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를 실현하는 길이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구실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와 같은 인도적 견지에서 그동안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북한측에 대하여 1천만 이산가족들의 생사·소재를 확인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상봉과 재결합에 이르기까지의 문제들을 아무런 조건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실천에 옮길 것을 주장해 왔으며, 우선 시범적으로 「노부모의 생사·소재 확인사업」, 「판문점 면회소 및 우편물교환소 설치」, 「성묘방문단 교환」, 「가족사진 교환」 등의 사업들을 제의하고 이 가운데 어떠한 사업이라도 조속히 실천

에 옮길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의 이같은 노력은 북한적십자회측의 거부로 인하여 어느 것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적십자회측은 남북적십자간의 인도적 대화의 통로마저 일방적으로 단절시킨채 우리측의 거듭된 대화재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20개 시범실천사업」 제의에서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북한측에 촉구하였으며 특히 1982년 8월 15일 전두환대통령의 광복절 37주년 경축사를 통하여 북한을 포함한 공산권 거주 동포들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내왕할 수 있는 문호를 과감하게 개방해 놓았습니다. 또한 민간차원에서도 「1천만 이산가족 재회추진위원회」의 발족 등 남북이산가족들의 재회를 실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인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산가족찾기 운동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앞으로 이 운동의 알찬 결실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북한적십자회측에 대하여 남북의 1천만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남북적십자회담을 재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산가족은 유독 우리 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 곳곳에는 자의든 타의든 헤어져 서로 생사를 모르고 있는 혈육도 적지 않으며, 우리 나라처럼 국토분단으로 인해 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동·서독의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이산가족문제는 우리 나라의 경우와 비교할 때 그 역사적 배경과 문제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예컨대 동·서독의 경우 이산가족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었으며 특히 1972년 12월 양독기본조약과 동·서독간 통행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므로써 가족·친척들의 상호 방문과 여행의 편의가 합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의 경우 지난 40년 가까이 굳게 닫힌 남북의 장벽은 어떠한 인적·물적 접촉도 용인되지 않고 있으며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남북으로 갈라져 고통당하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 주려는 우리의 노력은 일찌기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적십자 정신에 입각하여 남북간의 순수한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목적으로 남북 이산가족들의 실태를 확인하고 이들의 소식을 알려주며 면회를 알선하는 가족찾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한다」는 1971년 8월 12일자 최두선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대북 성명은 아직도 우리의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이를 계기로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을 거쳐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열렸던 남북적십자 본회담을 비롯하여 남북조절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국민들은 하루속히 분단의 장벽이 뚫려 남북 접촉과 왕래의 길이 열리기를 고대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대화노력은 북한측의 일방적 거부로 모두 허사로 끝나버렸다. 그로 인해 고향과 부모 형제를 잃은 실향민의 가슴 속에는 더욱 큰 슬픔과 아픔만을 안겨주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 이후에도 우리측은 기회있을 때마다 남북한간의 서신연락, 남북 이산가족 성묘방문단 교류 등 이산가족들의 비원을 풀어 주기 위한 갖가지 방안들을 북한측에 제의하였으나 그들은 어느 것 하나 귀담아 듣지 않음은 물론, 소위 정치적 선행조건을 내걸고 대화를 기피해 왔다. 북한측의 이같은 태도는 우리의 인도적인 이산가족찾기 제의에 처음부터 호응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현재 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범국민적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보고 우리는 모두 깊은 감동과 큰 충격 속에서 분단과 전쟁이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고 쓰라린 것인가를 다시 한번 뼈아프게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인위적 장벽으로 말미암아 남북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상봉의 기쁨은 커녕 서로 생사조차 알 길이 없는 오늘의 현실에 비통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전두환대통령이 제3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적했듯이 「남북한간의 이념과 제도가 아무리 다르다 하더라도 헤어진 혈육들의 생사확인마저 가로 막고 있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문명사회에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 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이제 북한측도 이산가족찾기 운동에 대하여 더 이상 악의에 찬 비방 선전을 늘어 놓지 말고 이산가족들의 비원을 풀어 주기 위한 대화의 광장에 하루 속히 나와야 할 것이다.

## 2.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1983년 8월 12일 「1천만 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는 제2회 「이산가족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500여명의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1971년 8월 12일은 대한적십자사가 남북한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북한측에 제의한 역사적인 날이다.

우리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작년부터 「이산가족의 날」을 제정, 공포한 후 두 번째 기념일을 맞이한 것이다. 남북한 이산가족찾기 운동은 1천만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하루속히 해소해 주려는 범국민적인 노력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이기도 하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유창순 대한적십자회총재는 격려사를 통해 「흩어진 가족들의 소식을 알아내고 서로 만나고자 하는 것은 이산가족들의 감상적 욕구가 아니라 인도적인 권리」라고 지적하고, 국내 이산가족찾기 운동이 한창이던 금년 7월 6일 발표한 담화문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적십자회측의 적십자 본연의 정신으로 돌아 와서 하루속히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해소해 주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개에 응해 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영식위원장의 기념사와 대한적십자사총재의 격려사가 있었다.

### 1천만 이산가족 재회추진위원회 위원장 기념사

오늘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을 거행함에 있어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손재식 국토통일위원장관님, 대한적십자사 유창순총재님, 남북조절위원회 민관식 위원장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북 5도민회 회장님들을 비롯한 본 추진위원회 임원 여러분과 추진위원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 본 행사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조국의 분단과 비극의 6.25 동란으로 인하여, 이 땅에는 1천만에 달하는 남북 이산가족들이 생겨났고, 고향산천과 부모형제로부터 강제로 격리된 이들의 통환은, 30여 성상의 세월이 흐르도록 풀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번 KBS가 시작했던 이산가족찾기 운동은, 역사의 파행성으로 인한 위해의 희생자로서 개개인이 겪어 온 불행과 비극이 얼마나 아프고 심각한 것이었던가를 새삼스레 깨우치게 해 주었습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을 두고 단일민족 문화민족으로 자처하며 살아온 우리 겨레는 반드시 민족의 화합과 조국의 민주평화통일을 이룩해야만 하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가족재회운동이 그 디딤돌이자 시발점이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밝은 일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한 노력과 천지건곤을 감응시킬 정성으로, 이 역사적 소명사업에 합심협력하여 임해야 할 줄 압니다.

그 동안 대한적십자사와 이북 5도민회에서는 이 사업을 진척시키고 달성시키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 왔으며, 특히 지난해 8월 12일에는 이북 5도민회 중앙연합회에서 1971년 대한적십자사의 남북적십자 회담제의를 깊이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이산가족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산가족들의 단합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2회 이산가족의 날 행사를 개최함에 즈음하여, 우리는 지금껏 이 사업을 위해 땀흘려 온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아울러 그 동안의 족적과 성과를 확인하면서, 앞으로 더욱 열과 성을 다하여 1천만 이산가족들의 애절한 갈망이자 6천만 국민의 소원인 이 숙원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일로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산가족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향토애와 통일의를 다지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해보는 뜻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각자가 각오를 새로이 해야 할 줄 압니다.

1972년 남북조절위원회의 7.4 공동성명은, 머잖은 날 민족화합과 조국통일의 웅혼한 함창이 울려 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온 국민과 전국토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으며, 헤어진 가족을 만나고, 두고 온 고향산천을 다시 밟아보겠다는 기대에 부풀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흥분이 채식기도 전에 북쪽의 무성의로 인한 대화의 단절은, 온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으며 그때의 합의사항조차도 사문화되어 다시금 낙심을 금치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실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방송을 통한 가족찾기운동 이후 고조된 이산가족재회의 열의와 국민 상호간의 일체감을 계기로 하여, 국내이산가족의 재회는 물론 해외에 있는 이산가족과, 남북이산가족의 재회를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7일 장충체육관에서 남북 이산가족재회 촉진대회를 개최하고,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및 자유로운 상호방문을 제의했으며, 만일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이것을 당장 실현에 옮기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60세가 넘는 고령의 노부모, 형제자매의 생사확인을 할 수 있도록 봉합편지 아닌 공개엽서라도 좋으니 북한이 이의 교환에 호응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날 촉진대회 석상에서 이루어진 이산가족들의 공감대와 마음으로부터의 합일을 바탕으로, 이념과 사상과 제도를 초월한 인도적 입장과 순수한 동포애에 입각해서, 조국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그날까지 이 일을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줄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북한당국과의 대화재개를 위한 노력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과 유관기관의 협력을 얻어, 기필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산가족들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온 국민들이 우리들의 사업을 성원해 주고 있고 전 세계가 우리들을 주시하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가족찾기 사업이 곧 거래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사업이요 더 나아가 보편적 인류평화를 구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으고 용기와 지혜를 다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향해 정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1983. 8. 12

1천만 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위원장 조영식

대한적십자사 총재 격려사

존경하는 조영식 위원장님!

손재식 국토통일원 장관님과 민관식 남북조절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이산가족 여러분!

지금 이산가족재회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드높고 세계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제2회 ‘이산가족의 날’ 행사를 갖게된 것을 본인은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경하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산가족 여러분!

30여년이란 지나긴 세월동안 헤어진 내 부모, 내 형제, 내 가족을 꿈에라도 만나보고자 하는 통한과 인고의 나날을 보내온 여러분들이기에 그 피맺힌 한을 조금이라고 풀고 망향의 아픔을 달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압니다.

헤어진 가족들의 소식을 알아내고 서로 만나고자 하는 것은 이산가족들의 감상적 욕구가 아니라 인도적인 권리인 것입니다. 신이 부여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부정될 수 없는 것이기에 대한적십자사는 일찍이 지난 1971년 오늘 북한적십자회측에 대해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하였으며, 그 후에도 남북한 우편물교환소와 이산가족 면회소의 설치, 성묘방문단의 교환등 정치적 분단상태하에 서로 쉽게 실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실시하자고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북한측의 무성의한 자세로 말미암아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측은 정치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남북적십자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제안들을 모조리 거부하였습니다. 이산가족의 비극이 얼마나 아프고 쓰라린 것인가를 우리는 이번 한국방송공사에서 벌인 이산가족찾기 방송을 통해서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를 실감했으며, 뼈에 사무친 그리움에 지쳐 죽음으로 '이산의 한'을 푼 비극적 사태까지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망향의 눈물과 실의와 통한만을 되풀이하고 앓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비극적 현실을 의연히 딛고 일어서서 우리 손으로 혈육상봉의 길을 스스로 찾아 개척하여 나가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이신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으로 압니다.

국내 이산가족찾기 운동이 한창이던 금년 7월 6일 본인은 북한적십자회측에 대하여 남북적십자회담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한적십자사가 주한미군의 철수와, 현 한국 정부의 퇴진 등을 요구하여야만 회담에 응할 수 있다는 정치적 선결조건을 또 다시 제시함으로써 남북적십자회담을 재개하자는 우리의 제의를 실질적으로 거부하고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전쟁당사국 사이에서도 인도적인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적십자입니다.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정치적 문제를 들어 1천만 이산가족들의 피맺힌 소원을 외면하는 북한적십자회의 태도는 인류애와 재난의 구호를 위한 봉사를 기본으로 하는 적십자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본인은 대한적십자사가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한지 12주년이 되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북한적십자회측이 적십자 본연의 정신으로 돌아와서 하루속히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해소해주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개에 응해 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산가족 여러분!

이제 이산가족찾기 운동의 불길은 치솟기 시작하였습니다. 더구나 이산가족 여러분들 스스로가 잃어버린 고향과 가족을 찾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지금까지의 고통과 좌절을 희망과 용기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여러분의 슬기가 살아 움직이는 한 우리 민족 모두가 여러분을 성원할 것이며, 전세계 인류의 양심이 여러분을 지원할 것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의 이산가족이 재회의 기쁨을 나눌 그날까지 이산가족찾기 운동이 힘차게 성공적으로 전개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본인과 적십자사도 이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83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유창순

### 3. 1천만 이산가족 재회 촉진대회

1983년 7월 17일 장충체육관에서는 「1천만 이산가족 재회 추진위원회」 주최로 동위원회 추진 위원 및 재경남북이산가족 1만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산가족들의 재회를 촉진하고, 그들의 단합을 도모하는 1천만 이산가족 재회촉진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우리 나라의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내외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범국민적인 이산가족 재회사업을 촉구함으로써 이를 온 민족의 통일의지로 승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날 동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영식 위원장의 대회사에 이어 「1천만 이산가족 재회 촉진대회」의 결의문 채택이 있었다.

#### 대 회 사

오늘 일천만 이산가족 재회촉진대회를 거행함에 있어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대한적십자사 유장순 총재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추진위원회 임원 여러분과 이산가족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 뜻있는 본 대회를 성대히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번 KBS가 벌인 이산가족찾기 운동에서 이산가족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속에 맺혀있는 한이 얼마나 크고 또 깊었던가를 새삼 느꼈습니다.

30년이 지나 40년이란 오랜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재회의 감격과 기쁨을 건디지 못해 울음을 터뜨리며 서로 부둥켜안고 네가 내 아들이냐, 네가 내 딸이냐, 조카냐고 하며 통곡하고 오열하는 그 광경은 눈물없이선 차마 볼 수 없는 기막힌 광경이었습니다.

동란 후 갖은 풍상과 거센 세파에 늘어난 주름살과 백발을 바라보며 서로 부둥켜 안고, 그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던가, 이제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고 목메어 흐느끼며 몸부림치는 그 광경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민족적 비극이었으며 충격적인 감동을 불러 일으킨 인간드라마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그 광경을 지켜본 모든 국민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한마디로 여의도 광장은 조국의 분단과 6.25의 동족상잔이 만들어낸 울음의 바다가 되었고 통곡의 광장과 만남의 광장이 되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산가족들이 진을 치고 앉았던 여의도광장에 나붙은 수많은 벽보와 피켓트가 보여 주듯이, 아니 그것도 성이 차지 않아서 가슴에 써 붙이고 등에 달고 돌아다니며 애타게 가족을 찾는 그들의 모습과 마음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읽고 또 찾아야 합니까?

남에 있는 가족들은 이제 서로 만나 얼싸안고 기쁨을 나눌 수 있지만 북에 가족을 두고 온 사람들은 분단된지 어언 40년이 다 되어 오는데도 언제 만나게 된다는 가망과 기대조차 가질 수 없어 그저 고개만을 떨어뜨리고 한숨지으며 TV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북에 세 자녀를 두고 온 박광실노인은 자녀생각에 못이겨 목메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또 노부모만을 남기고 온 김원요씨는 자책감에 못이겨 약물로 생명을 끊고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번 이산가족찾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온 국민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졌던 때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이번 혈육이 재회하는 그 광경을 함께 지켜보면서 온 국민이 같이 울고 함께 웃었던 것은 한 민족으로서의 동질성, 즉 동포애와 감정의 공감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압니다.

바야흐로 우리 나라에서는 이산가족재회의 열의가 고조될대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을 계기로 국내 이산가족의 재회만을 위해 힘쓸 것이 아니라 멀리 해외에 있는 이산가족들의 재회를 위해서도 힘써야 하겠지만, 특히 가까운 곳에 두고 못 만나는 남북 1천만 이산가족의 재회를 위하여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남북 이산가족의 재회는 단순히 헤어졌던 가족들을 상봉케 한다는 인도적인 차원의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은 동시에 그 동안 남북간의 오해와 불신을 걷는 첫 걸음이 되며 이 구현을 위한 협력은 작은 일에서나마 함께 뜻을 모아 협력한다는 데서 더욱 큰 의의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 길은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 그리고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도 연결되는 길이라고 생각할 때 이 문제야말로 이 거래의 민족적 역사적 지상과업이요, 소명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우리는 한 거래의 핏줄을 이어 받아온 동포요 혈육이라는 생각에서 여의도 광장에서 빚어졌던 민족의 슬픔과 아픔을 북한동포들은 외면하지 말고 아무런 오해나 선입견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여 줌으로써 이 민족의 역사에 새 전기를 함께 마련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이산가족의 재회는 거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단순한 갈망이나 소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이루려면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는 상당한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대한민국은 과거 정부차원에서 또는 적십자사의 활동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던 것으로 압니다만 불행히도 북한측의 성의있는 반응을 얻지 못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이산가족 당사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어 지난 2월 9일에 드디어 재회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조국이 타의에 의하여 분단된지도 어언 40년이 다 되어 오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해방을 맞고 조국의 독립을 바라보며 애국에 몸바치려던 사람들도 이미 60~70대를 넘어 감에 따라 하나둘씩 꿈에도 그리던 통일조국을 끝내 보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산가족 일세대들이 모두 가버리기 전에 우리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이 민족적 과업만은 꼭 우리 손으로 이루어보고야 말겠다는 애국적 신념과 굳은 결의를 가지고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결정하게 된 것이 본 1천만 이산가족재회 추진위원회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는 참으로 부끄럽고도 무의미한, 아니 민족의 동족상잔이라는 천추의 한을 남겼습니다. 골육상쟁을 빚은 이 전쟁에서 누가 누구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것입니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서로가 바꾸어서 내 부모형제에게 총을 쏘았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이 전쟁에서 서로가 동족을 살생하였으며 모든 재산을 파괴하고 폐허로 만들었으니 참으로 천추의 한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일찍이 해결한 이산가족의 재회문제를 반만년의 문화민족임을 자랑하고 배달겨레의 한 핏줄을 이어 받은 단일민족임을 자부하는 우리가 이 이상 숙제로 남겨두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산가족문제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제아무리 인위적 장벽이 두텁게 쌓여져 있다고 해도 혈육간에 사무친 재회의 욕구는 누구도 감히 막지를 못할 것으로 압니다. 또 우리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떠한 주의와 제도도 영속한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또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인간생활의 방편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신도 그렇거니와 특히 우리 동족간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도 대결이 의견조정의 방법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로 결말을 얻도록 하지 않고 대결로 강행하려 할 때에는 역사상 미증유의 민족적 비극과 참사를 저지르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6.25가 보여 주었듯이 대결은 민족의 공감을 자초한다는 값비싼 교훈을 명심하여 그와 같은 일이 결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합심해야 하겠습니다.

또 만일 불행하게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참사가 닥쳐온다고 가정할 때 결코 지난번 6.25와 같은 재래식의 통상전쟁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이 방면의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강대국들이 정치, 경제, 군사 등 각방면으로 깊이 관련된 한반도에 있어서의 새 전쟁은 분명히 강대국들의 핵대결장으로 화하게 될 가능성이 세계 어느 곳보다도 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해서는 상상해 보기조차도 싫은 일입니다만 1980년대의 긴박한 국제적 위기상황 속에서 열강이 낀 핵전쟁이 있는 뒤에 승자도 패자도 있을 수 없음은 물론, 풀 한 포기 개미 한 마리도 남지 못하게 될 것이 뻔하다고 하는 현하,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 공동대처해 나가야 할 길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력통일이 아닌 평화통일을 진정 원한다면 의견이 틀리지 않는 같은 일부터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일이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서로의 이견을 좁혀 나가도록 해야 하며 하루속히 상호간의 오해와 불신을 제거하고 이해를 앞세우며 화합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에서는 지난 7월 4일 북한측에 대하여 남북간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남북대화의 재개를 촉구하였고 또 대한적십자사에서도 지난 7월 6일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들이 재회를 하도록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북한측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들은 모두가 또 한차례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친애하는 6천만 동포 여러분!

우리 남북한의 모든 국민들도 여의도 만남의 광장에서와 같이 「남북 만남의 광장」을 향해 모든 것을 인내하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 재회의 그날을 향해 나갈 것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우리 온 겨레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날은 다음과 같은 날이라고 나는 내다보고 싶습니다.

“어머님 거기가 평양이지요, 여기는 서울입니다.”

“너 내 자식 평화냐?”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하고 네 누이동생 애화하고 모두 죽은 줄만 알고 밤낮을 눈물로 지새웠는데 이게 웬 일이나? 꿈이나? 생시냐?”

“어머님 그 동안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얼마나 어머님을 생각하며 밤이면 눈물로 지새웠는지 아세요? 이제 남북의 이산가족들이 곧 만나게 된다고 하니 제가 애화하고 제1착으로 평양으로 달려가서 어머님을 뵈고 깊이 깊이 사과드릴게요. 어머님, 어머님!” 하며 흐느낀다.

“아니다. 모두가 내 불찰이다. 내 잘못이다. 평화야 나를 용서해다오……” 하며 또 흐느낀다.

TV에 나타난 이와 같은 모자의 영상을 바라보며 모든 국민이 함께 운다. 남북도 같이 울고 산천도 함께 흐느낀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기필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산가족들이 장충체육관에 모여 하루라도 빨리 남북에 흩어진 이산가

죽들이 더 늙고 죽기 전에 꼭 만나게 해보려는 의미에서 재회축구대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회를 개최함에 즈음하여 이산가족의 재회를 촉진하고 다시는 이산가족의 비극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 6천만 민족이 다함께 노력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 1안, 1.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2. 자유로운 상호방문

그러나 만일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이것을 당장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2안, 1. 60세가 넘는 고령의 노부모, 형제자매의 생사확인만이라도 봉합편지가 아닌 공개엽서도 좋으니 교환할 수 있도록 북한이 호응해 올 것을 1천만 이산가족의 이름으로 간곡히 여기에 제의 촉구하는 바입니다.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위원장 조영식

### 결 의 문

우리 이산가족들은 인위적으로 갈라진 장벽을 사이에 두고, 그간 반세기 가까이 가족과 고향을 그리며 비통하고 애절한 마음을 달래면서 살아왔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사상과 이념, 체제의 차이에 구애됨이 없이 헤어진 혈육들의 재회를 보장하는 인도적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대한민국정부는 일찍이 재일 조총련 동포들의 가족 방문과 성묘를 주선해주고 있어 그간 수많은 교포들이 모국을 다녀갔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공과 소련에 있는 교포들의 소식을 서로 전하고 비공식이나 제3국을 통해 교류하는 인도적 길을 터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유독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핏줄이며 한 강토 위에 사는 우리만이 친혈육간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엽서 한 장마저 주고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

그러나 남북간의 인위적 장벽이 아무리 높고 험난하다고 해도 그것이 혈육간 천륜의 정을 영원히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은 엄연한 역사적 진리임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다.

이제 우리는 조국의 통일과 남북간의 현안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오늘 이산가족재회추진대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오로지 우리들의 간절하고 눈물어린 비원을 한 데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북한측이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들의 비원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남북적십자회담 재개에 호응해 나설 것을 요구한다.

1. 우리는 북한측이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및 상봉의 실현에 하루속히 호응할 것을 요구한다.

1. 만약 북한측이 어떠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를 당장 실시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노부모, 형제, 자매에 대한 생사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1983년 7월 17일

1천만 이산가족재회추진대회

#### 4. 북한의 반응

1983년 6월 30일부터 우리의 KBS-TV방송을 통한 이산가족찾기운동이 전개된 이후 북한은 침묵을 지켜오다가 7월 6일 유창순 「한적」 총재의 「남북적십자회담 재개촉구 담화문」이 발표되자 7월 10일 「계획적인 모략극」이란 제하의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이를 왜곡 비난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즉 북한측은 「이산가족찾기운동」은 서울에서 벌리려는 국제행사를 무난히 치뤄 보려는 술책이며, 현 대한민국 정부가 「미리 짜둔 각본에 따라 이야기를 시키는 모략연극」이라고 악의적인 비방을 하였다.

한편 북한적십자회는 7월 6일자 「한적」 총재의 남북적십자회담재개촉구 담화문에 대해 7월 24일 다음과 같은 요지의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남북적십자회담 재개를 거부하는 공식적인 반응을 보였다.

##### <성명요지>

-대한적십자사측의 제안이 숭고한 인도주의와 민족정신에서 나온 것이라면 다행한 일로 간주하고 환영의 뜻을 표시한다.

-1970년대 남북적십자회담은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의 결과였으나 회담의 결렬은 인도적 문제를 두 개의 조선 조작책동을 위한 정치적 목적 실현에 복종시켜 온 미제와 남조선당국의 분열정책과 그에 추종하여 온 대한적십자사에 책임이 있으므로

-만약 대한적십자사가 인도주의와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 주는데 관심이 있다면 1970년대에 있었던 남북적십자회담을 과탄시킨 저들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민족앞에 사죄하여야 한다.

-대한적십자사가 미군철수와 현정권의 퇴진을 요구한다는 것을 공식표명한다면 어느 때라도 협상할 용의가 있다.

북한적십자회가 이처럼 성명을 발표하여 공식반응을 보인 것은 그들이 1978년 3월 20일로 예정되었던 제26차 남북적십자 실무회의의 개최를 하루 앞둔 3월 19일 돌연 동회의를 무기 연기할 것을 일방적으로 방송을 통해 대한적십자사측에 통보해 온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 대한적십자사는 남북한 적십자총재회의의 개최, 중단된 남북적십자회담의 무조건 개최 등을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측에 촉구하여 왔으나 북한측은 「로동신문」 논평이나 「통혁당」 방송을 통해 대한민국을 비방 선전하면서 우리측의 제의를 거부하는 비공식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측이 북한적십자회명의로 공식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은 한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산가족찾기운동이 내외의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고 특히 UN 및 국제적십자 등 국제기구로부터 남북대화 재개압력이 가중되기 때문에 북한측이 더이상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개문제를 외면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그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마치 적십자회담에 성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그들의 비인도적 입장을 호소하고 국제적 비난과 압력으로부터 모면해 보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적십자사가 비정치운동단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추진·해결되어야 할 적십자회담 재개문제에 대해 대한적십자사가 주한미군철수 및 현 대한민국 정부의 퇴진요구 등 「반미·반정부」 입장을 표명해야만 남북적십자회담에 응할 것이라고 하면서 정치적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그들이 실질적으로 남북적십자회담을 거부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겠다.

우리는 현대문명사회에서 전쟁당사국간에도 이산가족문제를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는 사례를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정치문제들을 들고 나와 1천만 이산가족들의 피맺힌 소원을 외면하는 북한적십자회의 태도는 인도주의적 봉사활동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적십자 기본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적십자회측은 이러한 그릇된 태도를 버리고 적십자 본연의 정신으로 돌아와 하루속히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해소해 주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개에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다.

# **남북대화 제34호**

(1983. 10 ~ 1984. 4)

# < 목 차 >

|   |    |
|---|----|
| 제1부 일관된 평화통일예의 집념 재확인 .....               | 3  |
| 1. 전두환 대통령 1984년도 국정연설 .....              | 3  |
| 2. 전두환대통령의 국정연설과 우리 민족의 평화에 대한 신념 .....   | 6  |
| 3. 국내 주요 반응 .....                         | 8  |
| 제2부 남북한 당사자간 대화 촉구 .....                  | 13 |
| 1. 손재식국토통일원장관, 대북성명 발표 .....              | 13 |
| 2. 북한측의 이른바 「3자회담」 제의 .....               | 17 |
| 3. 국내외 주요반응 .....                         | 20 |
| 제3부 국무총리의 대북서한 전달 및 대북성명 발표 .....         | 29 |
| 1. 배경 .....                               | 29 |
| 2. 진의중 국무총리, 북한의 정무원 총리에게 보내는 서한 전달 ..... | 31 |
| 3. 진의중 국무총리, 남북한 직접 대화를 재촉구하는 성명 발표 ..... | 33 |
| 4. 국내 주요반응 .....                          | 38 |

## 제1부 일관된 평화통일로의 집념 재확인

### 1. 전두환 대통령 1984년도 국정연설

#### -폭력에 의하지 않는 민족통일 강조-

전두환대통령은 1984년 1월 17일 제120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올해의 국정지표를 밝히는 연설을 하였다.

동 연설에서, 대통령은 「이제 본인에게 있어 폭력에 대한 증오와 평화에 대한 신념은 그 무엇에도 다음 자리를 양보할 수 없는 지고의 신앙으로 굳어져 있음」을 밝히고, 올해는 「폭력없는 세계 질서의 구축」과 「폭력에 의하지 않는 민족통일의 성취」 그리고 「폭력없는 정치와 사회」를 구현할 것을 제창했다.

이러한 '평화'와 '폭력배제'의 집념에 기초한 올해 국정방침의 분야별 천명에서 전대통령은 남북대화 및 통일정책에 관하여, 평화적이고 '민족자결의 원칙'에 입각한 통일정책이 불변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비록 전 세계의 규탄을 받는 북한 공산집단이기도 하지만 통일성업 성취를 위한 길은 남북대화밖에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들이 대화의 탁자에 나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량군사건이후 우리가 힘으로 응징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힘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며, 또 응징의 수단이 없었기 때문도 아님」을 밝히고, 그것은 「오직 평화의 의지가 너무나 깊고 또 그 집념이 너무나 강인했기 때문임」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이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폭력도발을 계속 자행할 때에는 다시는 그러한 도발을 할 기력이 없도록 재기불능의 응징을 사양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무력적화노선과 남북대화의 거부는 이제 더 이상 어디에도 통할 수 없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북한측이 이제부터라도 폭력노선을 버리고 평화와 민족자결의 원칙에 입각한 우리의 합리적인 통일노선에 호응해 나선다면 1980년대 안에 통일위업 달성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전대통령의 국정연설중 통일 및 남북대화화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작년 아웅산사건에서 본인이 화를 면한 것은 국운의 가호와 국민 모두의 심려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원수로서 불과 몇 분의 거리로 생과 사의 경계를 목도한 본인은, 나라의 일꾼들을 잃은 애통함과 더불어 인류 세계와 인간적 행복의 가장 큰 적이 바로 폭력임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본인의 평화에 대한 신념은 누구보다 못지 않은 것으로 자부해 왔지만, 이제 본인에게 있어 폭력에 대한 증오와 평화에 대한 신념은, 그 무엇에도 다음 자리를 양보할 수 없는 지고의 신앙으로서 굳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같이 듣고 같이 본 사실로서, 국민 여러분과 신념을 함께 하고 계시리라고 본인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평화와 정의는 인류공통의 이상이며, 비단 어느 한 시대 또는 어느 한 민족이나 개인의 염원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많은 세월을 침략의 희생속에 보내면서, 어느 민족보다도 드높은 평화의 의지를 굳게 단련해온 문명민족입니다. 더욱이 36년간의 국권상실과 국토분단, 그리고 동족상잔의 유산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그 고통의 근원인 전쟁에 대한 거부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절실한 소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질곡의 민족사를 청산하고 새 역사를 향해 펼쳐 일어선 제5공화국이야말로 폭력의 배제, 즉 평화와 정의가 그 행동지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조국 창조의 과업은 바로 이러한 민족사적 사명을 완수하려는 실천노력인 것입니다.

지난 1년의 뼈저린 경험을 통하여 평화와 안정은 막연히 입에 올리는 희망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과 살림, 그리고 우리의 오늘과 후세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5공화국 출범 4년째가 되는 올해는 폭력없는 세계질서의 구축, 폭력에 의하지 않는 민족통일의 성취, 그리고 폭력없는 정치와 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의지가 더욱 드높게 발현되기를 본인은 믿어마지 않는 바입니다.(중략)

평화에 대한 신념과 폭력에 대한 거부는 민족적 지상과제인 통일성업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결같이 취해온 자세입니다.

통일은 두말할 것도 없이 민족의 행복과 안녕을 가져오자는 것입니다.

오늘의 분단은 한 핏줄과 한 역사, 그리고 같은 문화를 가진, 같은 민족인 우리 6천만 동포가 다 같이 겪는 불행과 고통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일의 제1조는 평화에 있어야 하며, 동족의 불행과 고통을 필연적으로 낳게 될 폭력의 사용은 그 어느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처럼 민족의 진정한 행복과 안녕을 위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 모두는 스스로 통일성업 완수의 굳건한 주체가 되겠다는 각오를 더욱 투철하게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정신에서 그동안 평화적이고도 민족자결의 원칙에 입각한 통일의 성취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왔습니다. 작년 바로 이 자리에서 본인은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당사자가 대화를 통해서 전쟁방지를 위한 조치와 쌍방이 제기하는 통일방안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할 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공산주의자들은 한사코 평화를 거부하고, 남북대화를 외면하고, 전쟁을 획책하고, 폭력노선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동족살상의 만행을 자행함으로써, 민족의 화합을 해치는 한편, 폐쇄사회의 벽을 더욱 강화하여 북한동포를 민족과의 만남으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킴으로써 민족동질성의 영구분단까지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북한공산주의자들은 「랑군」 사건에 대하여 이 시간까지 단 한마디의 시인이나 사과도 없이 기만과 호도에 급급함으로써,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한심한 작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그들의 회개를 기다려 왔으며, 앞으로도 기다릴 것입니다.

「랑군」 사건만 하더라도 우리가 힘으로 응징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힘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며, 또 응징의 수단이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의 평화의지가 너무나 깊고 또 그 집념이 너무도 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집념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전 세계의 규탄을 받는 북한공산집단이라는 하지만, 통일성업 성취를 위한 길은 남북 대화밖에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들이 대화의 탁자에 나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공산집단은 이러한 우리의 참 뜻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그들의 자멸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는 것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평화이상이 우리의 생존자체를 말살하는 폭력까지를 묵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감행한 무장공비 침투기도는, 우리 국군의 철저한 대처와 우리 국민의 경각심에 의하여 정확하게 적발·저지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폭력도발은 우리의 철통같은 안보태

세에 의해 계속 좌절될 것입니다.

본인은 북한이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폭력도발을 계속 자행할 때는, 다시는 그러한 도발을 할 기력이 없도록 재기불능의 응징을 사양하지 않을 것임을 아울러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그들의 무력적화노선과 남북대화의 거부는, 이제 더이상 어디에고 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평화의지는 더욱 성숙했으며 우리의 통일역량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본인은 북한측이 이제부터라도 폭력노선을 버리고 평화와 민족자결의 원칙에 입각한 우리의 합리적인 통일노선에 호응해 나선다면, 1980년대 안에 통일위업 달성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 2. 전두환대통령의 국정연설과 우리 민족의 평화에 대한 신념

우리 한국인은 외세의 침략과 국권상실 그리고 조국분단과 동족상잔 등 끊임없는 고난의 역사를 거듭하면서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평화를 갈망하고 폭력을 증오하는 민족이 되었다.

특히 우리는 지난해 KAL기 사건과 「버마」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폭력을 배제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의 기본조건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

침략과 예속, 그리고 전쟁의 불운을 겪은 민족만이 평화의 참뜻을 안다. 일찍이 우리 애국선열들은 잔악한 일제 식민통치 밑에서 「3·1운동」과 같은 세계사에 그 유례가 없는 비폭력항쟁을 통해 평화의 행동철학을 실천하였다. 당시 우리 겨레는 「독립선언서」에서 세계평화를 통한 전 인류의 공존공영과 국제정의에 입각한 인도주의의 실현이 「3·1」운동의 궁극적 목표임을 세상에 천명하고 적수공권으로 불의와 폭력에 저항하였다.

「아, 아, 신천지가 안전에 전개되도다. 위력의 시대가 거하고 도의의 시대가 래하도다!」이 「독립선언서」의 장엄한 외침은 「3·1운동」이 단순히 일제에 대한 저항과 독립에만 있지않고 국제적 평화운동과 반폭력운동을 제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흔히 평화를 「전쟁이 없는 상태」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전쟁이 없는 상태」란 어디까지나 잠정적이고 우연한 평화이며 때에 따라서는 「불안한 상태」이기도 하다.

한반도의 경우 남북한간에 전쟁이 끝난 지 30년 이상이 흘렀지만 평화가 아니라 불안한 휴전상태만이 지속되고 있다.

핵무기를 머리 위에 이고 사는 우리 시대의 이같은 불안한 상태를 평화라고 할 수는 없다.

로마교황 바울 6세는 1965년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이와같은 세계평화의 불안상태를 경고하면서 「진정한 평화는 단순히 물질적, 세계적 기반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양심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볼 때 보다 적극적인 평화는 「Kant」의 말과 같이 「모든 적대행위의 종식상태」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항구적 평화는 당사자 상호간의 자주성과 평등, 인격적 존중과 협력속에 정착될 수 있다. 불평등과 굴종, 대결과 불신속에서는 진정한 평화가 존립할 수 없다.

우리는 이와같은 평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를 유엔헌장속에서 읽을 수 있다.

유엔헌장 제1장 제1조 「유엔의 목적」 속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유엔은 (1)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침략행위와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 억지하는 효과적·집단적 조치를 취하며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입각, 평화를 위협하는 제반 국제분쟁과 사태를 평화적 수단으로 조정 해결한다.

(2)모든 나라의 평등권 및 자결권을 존중하는 바탕위에 국가 상호간의 선린관계를 발전시키고 전인류의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인종·성별·언어·종교 등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 신장하고 경제·사회·문화·인도적 분야 등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증진한다....」

이상의 유엔헌장이 표방하는 바와 같이 오늘의 국제사회는 이데올로기와 종교, 인종과 국경 등을 초월하며 전쟁과 폭력을 완전히 포기하고 모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평화를 요구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의 이른바 「계급을 위한 평화」, 「정의의 전쟁」도 이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데 현 국제정세는 동서 이데올로기의 대립, 민족적·국가적 이해충돌, 그리고 종교적 편견

등 여러가지 갈등과 분쟁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도처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국제사회에서 어느 나라든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인류의 운명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밀접히 얽혀있는 오늘의 핵무기시대에서는 모든 나라들이 세계평화와 안전에 공동의 책임을 지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지금 전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인구폭발, 자원고갈이라는 또 하나의 급세기 최대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는 날이 갈수록 만연되고 있는 폭력사태가 언제, 어디에서 가공할 세계대전과 핵전쟁으로 비화될지 모를 불안하고도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정세속에서 오늘날 한반도는 그 역사적, 지정학적 배경으로 보나, 주변국가 및 남북한의 방대한 군사적 대결상황으로 보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과 북한의 「버마」 암살폭발사건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킴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는 사태를 가져왔다.

이와같은 중대한 시점에서 전두환대통령은 금년도 국정연설을 통해 폭력에 대한 거부와 평화에 대한 신념을 한층 강조하고 「폭력없는 세계질서」, 「폭력에 의하지 않는 민족통일」 그리고 「폭력없는 정치·사회」를 지향하는 제5공화국의 정책의지를 천명하였다.

특히 전두환대통령은 「평화에 대한 신념과 폭력에 대한 거부」가 민족적 지상과제인 통일성업을 추구하는데 있어 우리의 기본자세임을 전제하고 남북대화를 통한 민족적 화합만이 평화통일의 첩경임을 강조하였다.

전대통령은 오늘날 폭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나라와 집단들 때문에 세계질서가 날마다 파괴되고 전쟁의 위협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개탄하면서 그 중에서 특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국제질서의 파괴와 동족살상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공산집단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화합과 세계평화를 저해하는 가장 호전적인 반평화집단임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전대통령은 북한의 폭력주의가 끝내는 고립과 자멸밖에는 가져올 것이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그들이 우리의 인내와 평화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하루 속히 회개하여 남북대화의 광장에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였다.

끝으로 전대통령은 「북한측이 이제부터라도 폭력노선을 버리고 평화와 민족자결의 원칙에 입각한 우리의 합리적인 통일노선에 호응해 나선다면 1980년대 안에 통일위업 달성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함으로써 우리의 평화통일 정책을 재확인하였다.

전대통령의 이상의 국정연설은 북한측의 도발과 대화거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중단할 수 없다는 신념에서 북한측에 대하여 우리의 진의를 밝히고 그들이 하루속히 민족통일 성업에 참여하도록 호소한 것이다.

그리고 전대통령은 「평화와 정의로운 세계질서를 외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폭력에 호소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평화에 대한 신념을 거듭 밝히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이 곧 평화로운 세계사를 창조하는 필연적인 한 부분임을 강조한 것이다.

### 3. 국내 주요 반응

제120회 임시국회 본 회의에서 행한 전두환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하여 국내언론계에서는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평화·정의의 실천주체로서 비폭력의 새 질서 주도할 때」, 「폭력없는 정치와 질서로 '평화·정의'의 이념 구현」 등의 제하에, 전대통령이 제시한 「폭력을 배제하는 평화의 질서」 이념의 구현을 위한 「폭력배제」의 철학을 정치철학과 인생관조에 걸친 뚜렷한 전진적 이정표(한국, 1. 18)로서 평가하고, 국내외 정세를 감안할 때 평화와 정의를 집중적으로 역설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경향, 1. 18)고 적극적인 지지를 나타냈다.

또한,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들도 전대통령의 평화통일 달성을 위한 확고한 의지에 공감과 신뢰를 갖는 반응을 나타냈다.

도하 각 신문들이 게재한 사실증 통일 및 남북대화에 관련된 반응은 다음과 같다.

#### 안정의 포장길 이정표

- 전두환 대통령 국정연설을 듣고 -

한국일보(1984. 1. 18)

17일 국회 본 회의에서 베푼 전두환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은 유난히 「폭력에 대한 증오와 평화에 대한 신념」을 부각시킨 가운데 스타일면에서도 예년과 다른 개변을 헤아리게 했다. (중략)

전대통령은 먼저 작년을 회고하면서 폭력과 불의로 얼룩진 대사건들로 하여 우리 나라가 「세계인들의 주시」를 받았던 「다사다난한 한해」였음을 상기시켰다. KAL기 피격사건과 특히 아웅산묘소암살 폭발사건 등의 경우를 들 수 있겠다.

하여튼 이 세계전략의 요충국에 세계의 불안스럽고 걱정어린 이목이 쏠려있는만큼 앞으로 한국이 긍정적 모범을 창조할 때에는 한결 더 국제적 영향력이 줄기찰 것으로 내다볼 수 있다. (중략)

그리하여 제5공화국 출범 4년째가 되는 올해는 「폭력없는 세계 질서」 「폭력에 의하지 않는 민족통일」 「폭력없는 정치와 사회」를 지향하는 의지를 더욱 드높일 것을 다짐하였다.

하나 국제정세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구나 민족적 지상과제인 통일성업의 앞길에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폭력노선」이 가로놓여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전대통령은 외교정책에서의 「개방과 협력」, 북방정책에서의 대화촉구를 강조하였다.

그렇더라도 현실은 직시해야 하므로 북한이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폭력도발을 계속 할 때는 「재기불능의 응징」을 사양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 것이다. 이에겐 국민적 합의의 뒷받침이 있다. (중략)

끝으로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의 선진조국」창조를 위한 단결과 헌신을 호소한 내용이다. 그 고무적인 미래상 구현은 우리 국민의 자각적 분발에 달려있음을 되새긴다.

하기야 주변 정세는 새해에도 복잡미묘할 것이 예상되며 국내적으로도 불확실요인은 적지 않다. 그같은 시련에 처해서도 평화의 지향이 국정의 기조라고 천명된데 대하여 마음든든함을 느낀다.

선철은 「평화로 가는 길은 따로 없으며 평화가 곧 길이다」는 격언을 남겼다. 이는 우리의 민족적, 국제적 책임의식에서 다짐될 바이다. 다른 한편 디즈레일리는 「암살이 세계의 역사를 바꾼 적은 없다」고 갈파하였다. 그 점은 북한공산집단이 크게 뇌우쳐 마땅할 것이다. 폭력이나 억압 등은 우리 겨레의 선진조국 미래상에 전혀 어울리지 않음을 생각한다. 대화도 번영도 정의도 다름아닌 평화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되어야 하리라고 믿는다.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조선일보(1984. 1. 18)

전두환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국제정치와 통일문제, 그리고 우리의 국내정치와 관련해서 폭력의 배제를 역설했다.

화합 평등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전대통령의 희망은 강대국과 강대국, 강대국과 중소국 및 서방세계와 공산세계간의 관계에 다같이 해당되는 개념이다. 이것은 특히 동서를 막론한 모든 나라들과 한국간의 관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오늘의 세계상은 질서라기보다는 차라리 규범의 부재라는 편이 더 맞을 지도 모른다. 정치적으로는 혁명수출, 무력개입, 폭력탄압, 군비경쟁, 학살, 쿠데타, 고문, 테러가 만연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호혜와 협력의 미덕이 도전받고 있다.

평화와 정의의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관건을 쥐고 있는 강대국들은 각자의 권익유지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뿐, 이렇다할 정의의 수범역은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동, 중·남미, 극동에서는 정치적, 사회적 이념적 갈등으로 표출되는 민족문제가 대규모 전란 유발의 불씨를 만들고 있는데도, 그 어느 분쟁 하나도 평화적인 수습의 길은 못찾고 있다. 따라서 이 난마처럼 얽힌 세계적 전국시대에서 인류의 생존과 품위를 보장할 길은, 오직 세계 각국이 대화에 의한 해결의 능력을 복원하는 것 뿐이다.

전대통령의 「평화의 세계 질서」란 호소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우방과, 소원한 나라들에 대해 한국의 선의와 우의를 선명하게 밝힌 것이라 생각된다. (중략)

통일문제에 관해서도 전대통령은 평화적인 해결의 대원칙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아웅산 테러와 같은 폭력도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평화적인 통일의 길은 요원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과 그 동맹국들을 향한 대화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 (후략)

### 폭력없는 정치

중앙일보 (1984. 1. 18)

전두환대통령은 17일 국회 본 회의에서 「반폭력」을 국정의 기조로 한다는 내용의 새해 국정연설을 했다.

전대통령은 폭력배제의 기조를 대외적으론 폭력없는 세계 질서의 구축, 대내적으론 폭력에 의하지 않는 민족통일, 폭력없는 정치, 폭력없는 사회의 구현이라고 제시했다.

국정의 중심개념을 「반폭력」으로 설정한 것이 랭군참사, KAL기 피격사건에서 얻은 뼈저린 경험에서 우리나라의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전대통령의 말대로 이 두 개의 사건은 『폭력에 대한 증오와 평화에 대한 신념을 지고의 신앙으로 굳히고도 남음이 있을』 민족적 시련이며 위기였다.

우리가 직접 겪은 두 가지 사건말고도 지금 세계는 전쟁, 무력개입, 혁명수출, 군비경쟁, 폭력탄압 등으로 열병을 앓고 있다.

중동을 비롯해서 세계 도처에는 전란유발의 불씨가 도사리고 있는데도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강대국들은 겨우 자국의 권익유지에만 급급할 뿐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정세 하에서 랭군테러를 직접 겪은 한국의 국가원수가 폭력배제를 주장, 모든 나라에 대해 과감한 개방과 협력을 선언한 것은 국제적으로 상당한 공감대를 얻을 것으로 평가된다. (중략)

전대통령은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폭력을 배제한 평화적 해결의 대원칙을 재확인했다. 아웅산테러를 저지른 북한이 적화통일의 야망을 포기할 기미는 아직 없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대화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통일이 민족적 지상과제가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전대통령은 북한이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폭력도발을 계속할 때에는 『재기불능의 응징을 사양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평화적인 대화노력은 계속 추구하되 거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후략)

#### 대통령의 국정연설

- 폭력배제의 「각론」과 「실행」이 요구된다 -

동아일보(1984. 1. 18)

전두환대통령은 국회에서의 국정연설을 통해서 「폭력」을 배제하는 평화의 질서를 거듭 강조했다. 「폭력」이라는 단어가 30번 이상이나 쓰여진 것만 보더라도 이번 국정연설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는 명백하다.

물론 대통령이 말하는 폭력의 개념은 폭넓다. 국제정치와 국내정치, 민족통일과 우리 사회에 끼어드는 폭력을 두루 포괄한다. 따라서 그가 제시하는 평화의 목표는 폭력없는 세계 질서의 구축과 폭력에 의하지 않은 민족통일의 성취, 그리고 폭력없는 국내정치와 폭력없는 사회구현 등으로 집약된다.

KAL기 피격사건과 「아웅산」묘의 참극을 비롯, 세계 곳곳에서 발호하는 폭력의 소용돌이를 지켜보아 온 우리는 평화로운 국제질서와 통일의 추구를 거듭 절실하게 소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국제사회가 남의 사회일 수 없으며, 그 불행은 바로 우리 자신의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후략)

#### 폭력없는 정치와 질서로 「평화·정의」의 이념 구현

- 전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담긴 지도노선 -

경향신문(1984. 1. 18)

전두환 대통령은 이번 국정연설의 주제를 「평화와 정의」로 설정하고 국제사회와 국내정치에 있어서 평화와 정의가 구현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그를 위해서 세계 각국과 우리 국민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자신의 차원높은 철학을 설득력있게 피력했다.

미·소간의 긴장고조로 세계핵전쟁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북한의 무분별한 도발행위로 한반도에 긴장의 먹구름이 덮여있는 국제정세, 그리고 민주토착화와 안정된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평화로운 정치·사회분위기의 조성이 긴요한 국내사정을 생각할 때 전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평화와 정의를 집중적으로 역설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생각된다.

세계 평화란 오랜 옛날부터 인류가 염원해온 공통의 숙원이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그 의미가 더욱 절실한 것이 되었다. 엄청난 위력을 가진 대량 파괴무기의 개발과 양산으로 국가간의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곧 인류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어있는 것이 오늘의 세계상황이다. 오늘날 세계 인류는 평화나 인류공감이나 기로에 서있는 셈인데, 여기서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전대통령은 바로 이와 같은 세계 상황의 인식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해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할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며, 그러한 세계 질서의 구축을 위해 세계 각국이 국가이익에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화해하고 협력할 것을 호소한 것이다. 이러한 전대통령의 호소는 비록 우리 나라가 국제정치를 주도하는 강대국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데올로기 때문에 대립하고 있는 동서 양진영의 모든 국가들과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 때문에 대립하고 있는 남과 북의 모든 국가들에 의해 경청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측도 민족분단을 비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어떠한 기도도 우리 한민족 전체의 파멸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올바르게 인식, 민족화합에 의한 평화적 통일의 길을 모색키 위해 대화를 하자는 우리의 제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평화와 정의는 이처럼 국제사회와 남북한간에 있어서 절실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내 정치·사회에 있어서도 매우 절실한 것이다.

우리가 국내적으로 평화와 정의를 구현해야만 국제사회에 있어서 평화롭고 정의로운 질서의 구축을 촉구하는 우리의 호소가 먹혀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평화적 남북통일의 기반이 확고하게 다져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략)

한편 전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평화를 위해서는 국력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힘에 의해 밀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폭력의 도전 앞에 무력한 평화요, 따라서 아침이슬과 같이 덧없는 평화이다. 우리가 바라는 세계 평화와 국내의 평화는 그런 무기력하고 단명한 평화가 아니다. 폭력에 짓밟히지 않는 평화를 이 나라의 주변과 우리 국내에서 실현하려면 우리의 국력을 배양하는 것이 절대 긴요한 것이며, 그런 점에서 국내외적으로 평화와 정의의 질서가 구축될 것을 촉구하면서 국민들에게 국력배양, 즉 경제발전과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화해하고 단합할 것을 호소한 전대통령의 연설은 매우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후략)

#### 평화·정의의 실천주체로서 비폭력의 새 질서 주도할 때

- 전두환 대통령 국정 연설에 담긴 뜻 -

서울신문(1984. 1. 18)

우리의 당면한 국가목표는 선진조국의 창조이며 민주·정의·복지사회의 실현이다. 우리가 내세운 국가목표가 현실로서의 지상선이라면 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과 방법도 이에 부응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산주의나 절대주의를 원치않기 때문이다. 지상선으로서의 목표는 추구되어야 하되 목표에 이르는 과정과 방법은 정의로와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폭력을 배제한 평화와 질서의 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전두환대통령은 17일 국회에서의 1984년 국정연설을 통해 『질곡의 민족사를 청산하고 새 역사를 향해 펼쳐일어선 제5공화국이야말로 폭력의 배제 즉 평화와 정의가 그 행동지표가 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폭력없는 세계 질서의 구축」, 「폭력없는 정치와 사회의 구현」, 「폭력에 의하지 않는 민족통일의 성취」를 제창했다.

우리는 먼저 평화와 정의의 행동지표에 바탕을 둔 「폭력의 배제」가 전대통령의 차원높은 국정운영의 철학이자 내치와 외치의 경륜임을 가슴에 새기고자 한다.

기존질서나 정치적인 상대를 폭력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파괴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정치 목적을 달성하려는 개인 또는 테러집단의 행동은 인간의 가장 사악한 범죄로 규정된지 오래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해 우리의 국가원수가 외국을 친선방문중에 용납될 수 없는 폭력행위에 직면했으며 그것도 동족의 손에 의해 당해야만 했다. 또 비무장의 민간여객기를 한마디의 경고도 없이 무자비하게 격추하는 미증유의 국제폭력을 경험했다. 공교롭게도 그 두 폭력의 가해자는 모두 공산집단이였다.

사실 권력지향형 사고방식이랄까 또는 정치적 필요를 지상의 명제로 절대시하는 행위는 공산주의자들의 경우에 극치를 이룬다.

그러한 공산주의자들과 첨예하게 대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 대결의 현실에서 살아남는 길은 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 평화와 정의의 이름으로 인내를 배웠고 위기와 시련에 처하여 더욱 굳게 뭉쳤으며 용기를 갖고 이를 헤쳐나갔다.

같은 힘을 바탕으로 하지만 정의로운 힘과 폭력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폭력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며 합리적인 대결의 과정과 대화를 통한 해결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힘을 갖되 폭력을 배제하고 평화로운 세계사를 창조하는 주역으로서 역할하려는 것이다.

또한 정치에 있어서의 폭력배제는 그 표현은 다르나 우리가 지향하는 새 시대 정치구현의 강력한 의지이다.

인류문명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위기의 시대에서 우리는 평화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폭력을 배제해야 한다.

확실히 오늘의 세계는 다음 순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시대이다. 폭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라들로 해서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그치지 않고 핵의 위협아래 대전을 향해 치닫고 있는 듯한 현세에 놓여있다.

세계 경제는 어떠한가. 자국의 이익이라면 경쟁의 정도를 넘어 또 하나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 약자는 살아 남을 수조차 없는 형편이다. 이렇듯 세계는 지금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전선도 없고 룰도 없는 전쟁의 와중에 있다. 갈등과 보복의 연속이다. 이해관계를 수반한 갈등과 폭력을 동반한 약육강식이 바야흐로 인류의 생명을 파괴하는 공포의 망령으로서 그 실체를 드리우면서 문명의 위기상황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다. 갈등과 경쟁 속에서나마 세계가 살아남는 방법은 폭력으로부터의 해방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 파국을 피하고 화합과 평등, 그리고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폭력의 배제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레이건 미 대통령도 16일 심각한 국제적 갈등의 해소를 위해 미소의 「평화적 경쟁」을 호소했다. 그는 확고한 전쟁억지력과 평화적 경쟁노선을 취하는 길 이외에는 세계 평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미소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폭력배제의 건설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레이건 대통령의 평화적 경쟁촉구가 소련의 도전에 밀리는 외교노선이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폭력을 배제하고 화해와 질서를 추구하되 언제든지 힘에 바탕한 접근만이 평화를 얻고 전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

따라서 명백한 사실은 우리가 지향하는 폭력배제의 새 질서 구축은 힘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힘이 없고 가난한 국민이 세계사의 주역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튼튼한 국력을 가지는 것은 곧 우리를 폭력으로써 짓밟으려는 기도를 포기시키는 유일한 보장』이라는 전 대통령의 결의를 선진창조의 실천강령으로 다지고자 한다.

## 제2부 남북한 당사자간 대화 촉구

### 1. 손재식국토통일원장관, 대북성명 발표

1984년 1월 11일 손재식 국토통일원 장관은 북한의 이른바 「3자회담」 제의와 관련하여 대북성명을 발표하였다. 손장관은 동 성명에서 북한 당국이 「버마」 사건을 저질러 놓고 이에 대한 시인·사과는 커녕 동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왜곡 선전하면서 대화를 하자는 것은 성실한 대화의 자세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의 여건을 마련하고 민족화합의 터전을 다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 당국이 「버마」 사건에 대해 이를 시인·사과하고 관계자를 처벌함으로써 대화의 성실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장관은 통일은 우리 민족의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북한간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고 우리가 이미 제의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을 개최하고자 거듭 촉구하는 동시에 만일 이것이 당장 어렵다면 「각료급 회담」이라도 열자고 북한측에 촉구했다.

한편 손장관은 「남북대화를 순조롭게 진행시켜 가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보장과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면 한반도 분단과 한국동란에 관계되는 국가들이 참가하는 회담을 개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밝힘으로써 관계국회담의 개최에 대해서도 포용성 있는 입장을 과시했다.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의 대북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 정부는 남북한간에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1981년 1월 12일 「남북한 최고책임자의 상호 방문」을 제의하였고, 같은 해 6월 5일에는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간의 직접 회담을 제의하면서 회담시기와 장소를 북한측에 일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1982년 1월 22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천명하였으며 작년 1월 18일에는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에서 협의·해결하여야 할 4개항의 당면과제를 제시하는 등 한반도 긴장완화와 민족화합을 통한 평화통일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사이에는 북한 당국의 대화거부와 폭력도발로 말미암아 여전히 긴장이 감돌고 있으며 통일을 위한 접촉과 대화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대한 북한 당국의 무모한 도발은 남북한 관계를 극도의 위험한 상태로까지 악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은 북한 당국이 인정한 바와 같이 남북한간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전쟁이 되는 것이며, 이는 곧 핵전쟁이 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북한 당국은 「버마」 암살 폭발사건을 일으키기 하루전인 1983년 10월 8일 이른바 「3자회담」 문제를 제기했으며, 다대포에 무장간첩을 침투시킨 바로 그날인 1983년 12월 3일에도 이를 또 주장하였고 그리고 오늘 아침 다시 이른바 「3자회담」을 공개 제의하였습니다.

북한 당국이 천인공노할 「버마」 사건을 저질러 놓고 이에 대한 시인·사과는 커녕 동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허위선전하고 오히려 긴장격화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시키려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성실한 대화의 자세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의 여건을 마련하고 민족 화합의 터전을 다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

당국이 전 인류가 분노한 「버마」 사건에 대해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이를 시인·사과하고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민족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북한간에 대화를 갖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한이 대화를 갖고 민족의 현안문제와 장래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 민족의 존엄을 지켜나가는 길이라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오늘날의 경색화된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개척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제의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이 개최되어야 하며, 이것이 당장 어렵다면 책임있는 남북한당국 각료급회담이라도 열어야 할 것입니다. 남북한간의 긴장상태 해소와 군비경쟁 중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불가침선언 문제도 이러한 남북대화에서 협의·결정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남북대화를 순조롭게 진행시켜 가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보장과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면 한반도 분단과 한국동란에 직접·간접으로 책임있는 관계국들이 함께 참가하는 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이 진정 민족대열에서 낙오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통일성업에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다면 하루 속히 폭력을 버리고 이러한 폭넓은 대화의 광장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북한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의 주장이 위장평화의 책략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본인은 북한당국이 우리와 함께 긴장완화와 민족화합의 요구에 호응해 나선다면 1980년대 안에 통일문제 해결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1984년 1월 11일  
국토통일원 장관 손재식

손재식 국토통일원 장관이 대북 성명에서 밝힌 우리의 입장은 ◎ 「버마」 사건에 대한 공식 또는 비공식 사과 및 관련자 처벌 요구, ◎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 당사자간의 직접 대화 재개 촉구, ◎ 한반도 분단과 한국 동란 관계국 회담에 대한 입장 천명으로 요약된다.

이하 이를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버마」 사건에 대한 공식 또는 비공식 사과 및 관련자 처벌 요구

북한은 분단이후 끊임없이 무력과 폭력을 통한 대남 무력도발 및 침투를 계속하여 왔으며, 한반도의 긴장이 북한의 무력적화 야욕에 의해 야기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구나 북한이 「버마」 사건과 같은 전대 미문의 폭력 만행을 자행하고도 도리어 이를 우리측이 조작한 자작극이라고 왜곡 선전하면서 대화를 갖자고 제의하는 것은 「테러」를 위장하기 위한 기만전술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먼저 「버마」 사건을 시인·사과하고, 관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한 것은, 그들이 과거의 과오와 결별하고 진정한 대화의사가 있음을 행동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비로소 남북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생산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 「버마」 사건에 대해 비공식적으로라도 이를 시인·사과하라고 요구한 것은 북한측이 이제까지 취해온 적반하장의 태도를 바꾸어 공식 또는 공개적으로 그들의 만행을 시인·

사과하는 것이 대내외적 체면상 어렵다면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화에 대한 성실성을 보이려는 것으로서 이것은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에 대한 집념과 아량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당사자간의 직접대화가 한반도 문제해결의 최선의 방식

민족자결과 남북한 당사자간의 직접대화를 통한 통일문제의 해결주장은 우리 정부가 일관하여 견지해온 통일정책의 기초이며,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정당성과 설득력을 갖는다.

첫째, 한반도 통일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민족 구성원의 행복과 안녕을 가져오는 데 있다.

따라서, 통일문제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문제이며 그 주체는 당연히 우리 민족이 되어야 한다.

물론 한반도 분단이 타율작용에 의해 초래되었고 오늘날 한반도에는 주변국의 이해관계와 영향력 등이 얽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통일의 장애가 기본적으로 남북한간의 정치적 대결과 불신에 있는 만큼 이같은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남북한 당사자간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먼저 해결해 나가는 것이 순리인 것이다.

둘째, 한반도 주변국을 포함한 오늘의 국제 사회는 국가 이기주의의 발호와 민족간의 복잡한 이해충돌로 인하여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길은 우리의 권익을 우리 스스로 개척하고 신장해 나가는 길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지난 1세기 동안의 외세 침략과 국권 상실 그리고 조국 분단과 동족 상잔 등 민족적 시련을 통해 체득하였다.

셋째, 남북한이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의 조국통일 3원칙에 합의한 것도 바로 우리 민족의 자결권과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이 통일문제 해결의 기초가 되어야 함을 뜻한다.

북한측이 통일문제와 관련, 걸핏하면 소위 「외세배격」, 「자주」, 「주체성」이라는 어휘를 남발하면서 한편으로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를 외면하고 「3자회담」운운하는 북한의 행위는 자가당착일 뿐만 아니라 온 거래 앞에 엄숙히 약속한 「7·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정면으로 유린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경색화된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직접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들이 운위하는 「불가침선언」문제도 당연히 그 자리에서 협의·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분단과 한국동란에 직·간접 책임이 있는 관계국 회담도 바람직

우리 민족이 당면한 현실문제와 장래문제는 어디까지나 남북한간의 직접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조치이지만, 그러나 한반도가 주변국의 이해관계와 영향력이 크게 얽혀있음을 고려하여,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보장과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환경조성에 도움이 된다면, 한반도 분단과 한국동란에 직·간접 관계가 있는 관련국들이 참가하는 회담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러한 회담이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기대하는 바대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만 한다면, 남북한간의 직접대화를 통한 통일문제 해결에 유리한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한

국 동란의 직접적인 당사자들간의 접촉으로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및 전쟁재발 방지와 평화정착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회담의 진행 여하에 따라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 보장체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국회담이 개최된다 하더라도 한반도 문제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당사자간의 문제이며, 따라서 그 해결에는 남북한이 주역이 되어야 하고, 관계국들은 보조자의 입장에서 남북대화를 지원·협조하는 역할에 그쳐야 할 것이다.

## 2. 북한측의 이른바 「3자회담」 제의

북한은 지난 1월 10일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 회의」와의 「연합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당국과 미국정부 및 의회에 대해 이른바 「3자회담」을 제의하는 편지를 채택하고 그 편지내용을 1월 11일 그들의 보도매체인 「평양방송」을 통하여 보도하였다.

### 제의의 요지

-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미국과 북한간의 회담에 남한 당국자를 포함시키는 「3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결정했음.
- 「3자회담」에서는 미국과 북한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를 토의하고 남북한간에는 「불가침선언」 채택문제를 토의할 수 있을 것임.
- 「평화협정」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포함시키고 「불가침선언」에서는 상호간의 무력 불행사 그리고 쌍방군대의 감축문제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임.
- 「3자회담」에서 미국과 북한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북한간에 「불가침선언」이 채택된 후에 「3자회담」과는 별도로 남북한간에 「진민족대회」와 같은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하여 「고려연방국가」를 창설하는 문제를 토의할 수 있을 것임.
- 「3자회담」 진행장소로서는 판문점이나 그 밖에 편리하다고 인정하는 제3국도 선택할 수 있음.

### 제의의 기만성

금번 북한의 「3자회담」 제의에서는 대화의 성실성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래의 대화 부정적 태도로부터 하등의 변화를 찾아 볼 수 없다.

첫째, 북한의 제의는 언뜻 보아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미·북한간 회담에 한국을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해야 한다는 종래 주장을 후퇴시킨 인상을 주고 있으나 「3자회담」이 열리면 미·북한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문제가 협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토의에는 사실상 한국을 배제시키고 있다.

이것은 종래 한국을 배제한 가운데 대미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실현시키려던 북한의 입장에 하등의 변화가 없는 것이다. 북한의 「3자회담」은 허명에 불과하며 그들의 주장을 종래의 「미·북한 회담」⇒「평화협정」 체결⇒「미군철수」 논리를 그대로 되풀이한 것으로서 기만적 제의라 하겠다.

둘째, 「3자회담」에서 「평화협정」의 체결문제와 「불가침선언」의 채택문제를 토의하자고 제의하고 있으나, 북한측은 미국과 북한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평화와 통일의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우선 미국과 북한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에야 남북한간에 「불가침선언」 채택문제를 토의할 수 있다는 단계적인 의제토의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이 같은 「선 평화협정」 「후 불가침선언」 입장은 1984년 1월 13일 주중공 북한 대

리대사 김창규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제의한 「3자회담」에서는 무엇보다도 한·미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킬데 대한 문제가 합의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한 데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여기서 노리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철수와 대미직접교섭창구의 개설이며, 미국과 북한간에 먼저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그들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우리측과의 「불가침선언」 토의에 고의적으로 불성실하고 비타협적인 태도로 질질 끌다가 중국에는 우리측에 그 파탄책임을 전가시킬만한 구실을 만들어 토의자체를 결렬시켜 버리려는 속셈이 깔려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미국과 미군 철수를 내용으로 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하면서 「협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반하여 한국과 무력불행사, 군대 및 군비의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협정」을 채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선언」이라고 한 것을 볼 때 북한의 불순한 속셈을 간파할 수 있다고 하겠다.

즉 「협정」이란 국가간 또는 당국자간에 합의를 거쳐 문서로 작성한 조약의 일종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법률적 행위인데 반하여 「선언」은 국가간 또는 당사자간에 합의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행위인 것이다.

북한이 이처럼 불가침 문제를 「선언」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7·4 남북공동성명」의 합의 사항인 남북조절위원회의 존재와 그 기능을 일방적으로 부정했던 것처럼 남북한간의 합의 내용에 대하여 법적 구속을 받음이 없이 자의적으로 파탄시켜 보려는 술책이 숨어 있는 것이다.

세째, 남북한 통일문제는 이 같은 「3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과 「불가침선언」이 체결된 후에 「3자회담」과는 별도로 남북한간에 「전민족대회」와 같은 「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여 「고려연방제」를 토의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는 점으로 보아 주한미군철수와 대미평화협정 주장을 앞세워 대화를 거부하고 통일문제의 논의를 요원한 장래로 미루겠다는 북한의 의도가 명백한 것이다.

이것은 남북한 당사자간의 직접 토의를 반대해 온 그들의 기존의 대화거부태도에 하등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북한이 「버마」 사건을 일으키기 하루전인 1983년 10월 8일 이른바 「3자회담」 문제를 중공을 통해 제기했었고, 다대포에 무장간첩을 침투시킨 바로 그 날인 1983년 12월 3일 이를 또다시 주장하였었고, 「3자회담」을 공개 제의한 1984년 1월 11일 당일에도 「평양방송」을 통해 「남조선 당국과는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대화를 해도 아무런 의의가 없다」는 김일성의 「루마니아」 기자와의 회견 내용을 보도한 것 등은, 6·25 남침 일주일전인 1950년 6월 19일에 소위 「남북한 단일입법기구 구성」을 제의했던 작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른바 「3자회담」을 제의해온 저들의 저의가 무엇인지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 제의의 저의

북한측이 이 「3자회담」을 제의한 저의는,

첫째, 그들이 저지른 「버마」 사건이 몰고 온 외교적인 고립과 일그러진 대외적 체면으로 인한 곤경을 타개해 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그들이 「버마」에서 획책한 전대통령의 암살기도는 반평화·반문명적 야만행위로서, 서방진영은 물론 공산진영 내부에서까지도 거센 반발과 비난의 소리가 높고, 중국에는 북한의 외교적 존립기반 자체가 와해될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그 돌파구를 찾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선택한 궁계가 이른바 「3자회담」 제의라는 위장평화공세인 것이다.

둘째, 시기적으로 미·중공간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주요의제로 부상되어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쏠린 시점을 택하여 공개제의한 점과, 미국 정부가 국회에 제의하는 형식을 취한 점에서 볼 때, 주변 강대국의 한반도 안정노력에 영합하여 그들의 「평화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국제여론을 오도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는 것이다.

또한, 금년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로마교황의 방한, 우리측의 총선 분위기 고조 등으로 대남 교란책동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대남 모략·교란 활동을 강화하려는 한 포석이 기도 하다.

세째, 한국의 완전하고도 동등한 참여가 없는 한 어떤 대화도 거부하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미국을 직접 상대자로 그리고 한국을 관련 상대자로 하여 한국을 끌어들임으로써 미국과의 접촉을 실현시켜 대미직접통로를 확보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공산화 통일의 장애물인 주한미군의 철수를 유도해 보려는 술책인 것이다.

네째, 제5공화국 출범이후 지속되어 온 통일대화 문제에서의 수세적 입장을 타개하기 위해 마치 북한이 대화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북한이 대화를 기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모면해 보려는 속셈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 3. 국내의 주요반응

국내 주요언론들은 북한의 이른바 「3자회담」 제의를 「그들의 대표적인 위장 평화공세」라고 규정하고, 손 국토통일원 장관이 대북 성명에서 밝힌 민족자결과 남북한 당사자간 직접대화의 대 원칙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북한당국은 「버마」 암살폭발사건을 사과하고 「100개의 제 의보다 먼저 평화에 대한 실증을 보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우리 정부와 국민에 대하여 북한의 제의가 「공산월맹이 월남을 적화했던 바로 그 공식을 따르자는 책략」임을 상기시키고, 한반도를 에워싼 주변국의 동향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의 정통성에 대한 투철한 주인의식」이 절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한편 해외 주요 언론들도 손장관의 대북성명과 북한의 이른바 「3자회담」 제의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북한의 제의가 「이론적으로 앞뒤가 맞지않고, 일관성도 없고, 성의도 없음」을 지적하고 그 진실성에 대해 한결같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북한이 그러한 제의를 내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의 외교적 고립의 심화를 저지해 보려는 데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세계의 주의를 「랭군」 암살폭발사건으로부터 떼어내 돌리려』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그 사건에 대해 적절한 해명이 없는 한, 그들의 '평화제창'은 아무런 공감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다음은 국내의 주요신문의 사실과 논평 기사를 모은 것이다.

#### 국내반응

##### 직접대화 왜 기피하는가

- 「3자회담」의 허구성 만천하에 들춰내야 -

경향신문(1984. 1. 12)

북한이 제의한 「3자회담」은 그들의 대표적인 평화위장공세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은 버마 암살 폭파사건을 일으키기 하루전인 지난해 10월 8일 「3자회담」을 제기했다가 다대포에 무장간첩을 침투시킨 날인 지난해 12월 3일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었다. 그리고 미·중공 정상회담에 맞춰 다시 「3자회담」을 공개 제의한 것을 보면 또다시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결국 세번째의 이번 3자회담 제의는 아웅산 사건 후 국제적인 비난을 호도하기 위한 계획된 위장평화공세로밖에 볼 수 없다. 북한 당국자들은 국제적인 호된 비난과 비판을 피하기 위해 「사건 조작설」을 퍼뜨리면서 위장평화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위장평화의 허구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더욱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남북한 당국자들간의 회담을 통해서 보다는 제3의 세력을 개입시켜 결정하려는 저의는 민족 주체성을 저버린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1982년 1월 22일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제의했으며 그해 1월 18일엔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의」를 제의하여 이 회담에서 해결되어야 할 4개항의 당면과제를 제시하는 등 긴장완화와 민족화합을 통한 평화통일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과 진정한 민족통일 방안 제의를 외면한 채 이제 와서 국제적인 고립을 피하기 위해 중공을 업고 3자회담을 들고 나온 것이야말로 세계인들의 양식을 기만하려는 술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기만술책은 1970년대 「적십자회담」을 개최한 후에도 23종의 위장 선전 제의를 했으며 남북한 회담이 열리는 과정에 그들은 대남 무력 침투용 땅굴을 파는 등의 배신행

위를 서슴지 않았던 집단이다. 이들의 성실성 없는 선전에만 급급한 책동이 이번의 「3자회담」 제의로 또다시 둔갑돼서 나타난 것이다.

우리 정부의 발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북한 문제는 민족내부의 문제로서 당사자간의 화합과 대화의 정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3자회담」이나 「4자회담」에 앞서 「남북」의 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한반도 분단에 직·간접으로 관련한 관계국들이 「국제환경조성」에 도움이 된다면 회담을 갖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것보다는 지난 1세기의 역사에서 배운 우리의 경험은 우리 민족문제의 자주적 해결 노력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한반도 문제가 국제회의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보도가 나돌자 일본이 소련과 함께 「6자회담」이 바람직하다고 나선 것에서도 외세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강하게 도사리고 있는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민족의 정통성에 대한 투철한 주인의식이다. 한 민족사의 이단세력인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위장평화와 책동에 맞서고 이를 부수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오늘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나갈 자신감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선전공세와 외교전에도 결코 수세에 몰려서는 안된다. 우리 정부는 확고한 주도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4자회담」 제의와 관련한 외교대응전략과 함께 「3자회담」의 허구성에 대한 대결의식을 강화해 나가야 할 줄 안다.

냉철한 판단력과 멀리 보는 역사안목, 그리고 민족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의 정체를 파헤치고 우리의 평화통일방안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데 모든 외교력을 집중하기 바란다.

## 2자·3자·4자 회담

- 회담형태 선택 위해서도 북은 2자회담부터 -

동아일보(1984.1.12)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은 11일 남북한간의 최고책임자회담을 거듭 촉구하면서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환경조성으로 관계국들의 회담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남북한과 미·중공이 참가하는 4자회담이 3자회담 보다 훨씬 낫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은 작년 10월 9일과 12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미·북한회담에 한국이 참가해도 괜찮다는 3자회담을 들고 나온 바 있었고 10일에도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연합회의라는 것을 통해 3자회담을 되풀이했다.

이제 남북한간에는 2자회담, 3자회담, 4자회담 중 어느 회담을 먼저 열어야 하느냐는 회담형식 문제를 놓고 대결돼 있다. 그러나 2, 3, 4자회담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전쟁이 엇갈리는 중대 문제라는 사실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북한은 작년 10월부터 3자회담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종래 북한은 미국과 단 둘이서 만나자는 이른바 대미평화협정을 제안할 때에는 직접 미국측에 전달했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북한은 직접전달방식을 버리고 중공을 통해 전달했다는 특성을 지닌다. 그밖에도 북한은 1973년 남북조절위원회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다음부터는 남한에 대한 제의나 반응을 애매한 단체를 내세워 처리했었다. 이른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같은 것들을 등장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일에는 북한이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라는 공식적인 조직체를 통해 성명을 발표했다.

물론 1974년 북한이 미국에 평화협정을 제안할 때도 「최고인민회의」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같은 것은 내세우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 제안한 3자회담의 내용은 그동안 들고 나왔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주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산월맹이 월남을 적화했던 바로 그 공식을 따르자는 책략이다. 월맹이 그랬듯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고 그에 따라 미군을 철수시키고는 북한은 중·소의 지지 아래 남한을 월남처럼 적화하자는 공식이 그것이다.

그밖에도 북한의 3자회담이란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남북화합이 아니요, 적화통일이라는 것은 10일의 「중앙인민위원회」의 연합회의 성명에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고려연방국을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란 남한에 민주정부가 물러나고 공산정권이 들어서야 함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남북한의 연방이 아니라 공산흡수를 말한다. 한 마디로 북한의 3자회담 제의는 새로운 내용이 없다. 오직 「버마」의 「아웅산」 묘소암살폭파로 인해 궁지에 몰린 북한의 입장을 호도하려는 사술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한이 남북한간의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정착을 위해 나설 진의가 있다면 남북한 최고 책임자회담에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 남북한 긴장의 원인은 미국이나 중공 또는 소련에 있지 않다. 북한 바로 그 자체요, 해결의 주인공은 남북한 당사자간의 2자회담이 남북한 평화정착의 출발점임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분단 때나 「6·25」남침 중 주변국가들이 깊이 개입되었었다. 한반도평화의 국제적 보장을 위해서는 관련국가들의 참여가 필요치 않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직접 참전했으며 휴전에 서명한 미·중공의 동시적 참여는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북한은 2자회담이나 4자회담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북한은 2자나 3자나 4자나를 가리기 위해서도 우선 남북한간의 회담에 응해야 함을 촉구해 두는 바이다.

#### 북은 대화에 성의 보여라

서울신문(1984.1.12)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남북한간 통일대화의 돌파구를 열고자하는 우리 정부의 인내와 성의를 다한 노력은 지금 이 시각에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11일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이 발표한 새 차원의 남북대화 재개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대북성명이 바로 그것을 대변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손장관은 이 성명에서 경색화된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제의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이 개최되어야 하며 이것이 어렵다면 「책임있는 남북한당국 각료회담」이라도 열어야 할 것이라고 북한에 대해 제의했다.

이어 손장관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보장과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면 한반도 분단과 한국동란에 직접·간접으로 책임있는 관계국들이 함께 참가하는 회담을 개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밝힘으로써 지난 10일 레이건 미국대통령이 조자양 중공수상에게 제의한 것으로 알려진 남북한 및 미·중공 등의 「4자회담」이나 또는 이에 일본·소련이 추가된 「6자회담」에 찬성하는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손장관은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여건을 마련하고 민족화합의 터전을 다지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당국이 전인류가 분노한 버마암살테러만행의 책임을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시인·사과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엄중히 촉구했다.

우리는 이 대북성명이 무엇보다도 최근 북한당국에 의해 여러 차례 제기됐던 소위 「3자회담」 주장과 관련해서 발표된 것임을 중요시하고자 한다. 북한은 버마 만행 하루 전날인 지난해 10월 8일 이같은 제의를 한데 이어 중공의 조수상이 방미길에 오른 지난 6일과 미·중공 정상회담이

열린 10일에도 이를 되풀이 주장한바 있다.

그들의 이 제의는, 이미 본란이 명백히 지적한바 있거니와 우선 국제여론을 향해 위장평화공세를 펴므로써 버마 만행의 엄청난 범죄를 은폐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미접촉의 길을 틔으므로써 한미안보협력체제를 와해시켜 대남무력적화에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려는 새로운 음모의 일환임이 분명하다. 그러한 속셈은 그들이 저지른 버마사건을 한국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아직도 허위선전하고 있는 비열한 행태와 또는 「3자회담」을 제기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를 노골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저간의 동향 등에서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고 하겠다.

한반도문제가 중국적으로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와 합의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현행 휴전협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있을 뿐 아니라 이는 그후 유엔총회와 미·중공간의 「상해성명」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대원칙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한반도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면 이 국제적으로 확립된 대원칙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들이 당사자간 대화에 굳이 미국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면 똑같은 입장에 있는 한반도문제 관련국들의 동시적인 참여에도 마땅히 동의해야 할 것이다. 북한측이 만일 그러한 성의가 있다면 우리 정부의 이번 제의에 무조건 즉각 호응해야 할 것임을 이에 거듭 강력히 촉구해 둔다.

한편 우리는 이 제의가 미·중공정상간의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공동노력 다짐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공당국이 한반도의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면 우리측 제의를 성사시키기 위한 대북한 영향력 행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을 아울러 강조해 두고자 한다.

우선, 남·북한단독회담을  
-중요한 것은 평화의 실증-

조선일보(1984.1.13)

11일 손재식통일원장관은 평양당국에 대해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다시 촉구했다. 그리고 이것이 당장 어렵다면 남북한각료회담이라도 열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했다. 손장관의 이 제의는 평양당국이 같은 날 그들의 대미직접협상에 한국도 참가하는 이른바 「3자회담」을 공식 제기한데 대한 우리 정부측의 대답이다.

우리는 손장관의 그러한 입장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남북한간의 모든 현안문제와 장래문제에 대해 쌍방의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3자회담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북대화를 순조롭게 진행시켜가면서 국제적 환경조성에 도움이 되는 한, 한반도분단과 한국전쟁에 책임이 있는 관계국들의 회담은 바람직하다는 손장관의 주장에도 당연한 이유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러한 한국측 입장을 고려하면서 10일 레이건대통령은 조자양에 대해 남·북한 및 미·중공의 4자회담을 비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조는 4자회담에 냉담을 표시, 평양당국이 제의한 3자회담을 지지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다 돌파구를 뚫고 전쟁의 위기를 평화의 분위기로 바꾸는 일은 우선 남북한간의 대화를 재개하는 것일 수 밖에 없다.

평양당국이 기어이 3자회담을 열자고 한다면, 그것을 토의하기 위해서도 남북대화는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평양당국의 3자회담 제의에는 이미 많은 함정들이 노정되어 있다. 그것을 북경을 통해 미국에 전달했던 첫 번째 제의는 작년 10월 8일의 일이었는데, 이 날은 랑군암살폭파사건 바로 전날이었다. 두 번째로 제의했던 작년 12월 3일은 다대포무장간첩을 침투시킨 바로 그 날이었다.

이 엄청난 범행 직전에 3자회담을 제의한 그들의 음흉한 책략은 정치적 백치가 아닌 한, 간과 못할 사람이란 없다.

랭군사건과 다대포사건에서 세계의 규탄을 받고 외교적 궁지에 몰린 그들은 이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화선전을 시도할 필요가 있었고, 그 평화선전의 출발점을 미·중공정상회담의 개막일로 잡은 것이다.

또한 그들은 3자회담을 제의해서 남북한간의 긴장완화, 군사대결의 종결이다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간의 긴장상태와 통일이 되지 않는 모든 책임이 한·미 양측에 있다고 뒤집어 씌운다. 그리고 긴장해소와 평화의 정착을 위해 자기들이 미국과 갖는 회담에 고맙게도 한국이 「같은 자격으로」 참가해도 좋다는 식이다. 게다가 자기들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다음 한국과는 부수적으로 남북불가침선언을 채택하자는 것이다.

그들의 소위 대미평화협정에는 으레 주한미군의 철수가 절대조건으로 되어있고, 미군이 철수하고 나면 고려연방제의 테두리 안에서 남북을 통일한다고 한다. 통일 후에는 남한에 투하된 외국자본까지 존중, 미국은 국익의 손상 없이 영예롭게 한반도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배려를 해주겠다고 레이건행정부에 편지까지 보내고 있다. 이 어이없는 책략에 대해서는 세삼 논평을 가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평양당국은 지금까지 긴장완화니, 평화니를 수없이 선전하면서 여러 제안을 해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렇게도 평화와 긴장완화·평화통일을 원한다면, 그 무수한 도발, 땅굴, 무장계렬라의 남파, 랭군암살사건을 정직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을 집요하게 계속 하면서는 3자회담을 아무리 열어보아야 이 땅에 평화는 오지 않는다. 위기의 진원인 평양은 백 개의 제의보다 먼저 평화에 대한 실증을 보여야 한다.

#### 유관국의 한반도 논의

중앙일보(1984.1.12)

한반도문제가 국제간에 다시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했다. 현재로서의 초점은 대화기구 문제다. 북한의 3자회담, 미국의 4자회담 제의에 이어 우리 정부의 입장표명이 있었다.

남북을 포함해서 우리 민족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현안문제로서의 평화정착과 장래문제로서의 통일성취다.

이같은 민족전체의 공동의 문제를 논의할 기구로서는 남북한의 책임있는 대표자들로 구성된 우리 겨레간의 직접대화가 최선의 형태다.

이것은 결코 배타적인 쇼비니즘(Chauvinism)이 아니다. 남북간의 문제는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이다. 따라서 민족자결과 주체성의 원칙에서 우리들 스스로의 주도하에 해결돼야 함이 가장 명예롭고 타당한 것이다.

다음은 우리 주변국과 우리 민족간에는 명백한 국가이익·민족이익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것은 국제정치의 기본원리다.

주체성을 상실한 국가·민족문제의 해결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우리는 한말역사나 최근의 월남사태를 통해 재음미 해 볼 필요가 있다.

엄연한 민족국가·주권국가였던 이 땅에서 청일전쟁·노일전쟁이 벌어졌고 미일간에는 한국과 필리핀을 각각 차지하기 위한 「가쓰라-태프트」 협정이 맺어졌다.

월남전은 70년대 초반 남부월남의 이익과 운명이 배제된 채 미국과 중공·월맹 사이에 논의되어 남부정권은 소멸되고 월남은 물론 전체 인지만도가 공산화하고 말았다.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인 미·중·일·소 모두가 현재 우리의 분단된 부진상태로 만족하고 있으

며 통일문제까지는 생각지도 원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은 공인한 현실이다.

통일후의 사태를 예측키도 어려울 뿐 아니라 통일자체가 자국의 이익에 대한 모험이라는 기본 인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남북한 최고지도자의 상호방문과 정상회담 혹은 총리급회담·각료급회담등 직접대화를 최선의 대화방식으로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변사상의 주요 이익이 교차되는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 실제로 이들이 깊숙이 관여돼 있는 국제정치적 상황, 그리고 남북한을 포함한 우리 국력과 역량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우리 문제라고 하여 우리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들의 참여없는 실효성있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 점에 남북한 직접대화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4자회담이니 6자회담이니 하는 유관국회의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한반도 문제를 명예롭고 유효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쌍무회담과 주변 강대국들이 포함되는 다변회담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안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우리 민족의 기본적인 문제들은 남북대표간의 직접대화와 협상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 회담기구에는 정상회담·각료급회담·실무회담 등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유관국회담은 남북 직접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남북회담이 진전되지 않을 때 이를 중재·조정하고, 회담이 끝난 뒤 합의사항의 실천과 준수를 보장하는 외곽에서의 보조역할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유관국회담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회담기구는 기본적으로 이원화가 합리적이라고 본다.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여러 수준의 남북회담과 이를 지원하는 유관국 회담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화의 재개는 남북한 사이에 이미 합의된 사항을 기초로 해야 한다. 그것은 내용이 합리적일 뿐 아니라 민족화합의 좋은 심벌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직통전화의 재개와 조절위·적십자회담등 실무회담도 기능이 부활돼야 한다.

내년이면 분단 40년이다. 40년이 되기 전에 민족의 공존과 화합을 위한 좋은 출발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전체민족 공유의 염원이다.

#### 통일의 자결능력 보일 때

-북은 권모를 버리고 직접대화 응하라-

한국일보(1984.1.13)

정부는 11일 손재식통일원장관의 대북성명 발표를 통하여 최근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끌게 한 북한측의 「3자회담」 제의와 미·중공간의 한반도문제 토의에서 거론된 「4자회담」 안 등에 대한 공식견해를 천명하였다. 나아가서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통일접근 노력에 관련된 정책기조 및 건설적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의 한반도정세는 북한당국의 남북대화 거부와 잇따른 폭력도발로 말미암아 긴장이 몹시 고조되어 있다. 게다가 주변열강 증강과 팽창주의 위협외교에 대처하기 위해 구상된 미·일·중공간의 접근기운 내지 협력체제 모색이 진행되는 가운데 새해 정세는 더욱 복잡 미묘한 느낌이다.

그런데 북한측은 작년 10월 8일, 즉 아웅산묘소암살폭발사건을 도발하기 하루 전부터 중공을 외교적 창구로 이용하면서 미국과 남북한이 자리를 같이 한다는 「3자회담」을 몇 차례 거듭 제의해 왔다. 10일의 경우는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연합회의를 열고 「3자회담」 제의를 공식화 하기도 했다. 그들의 주장은 「무엇보다도 먼저」 미국과 「평화협정」

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이어 남북한간의 「불가침선언」 채택문제를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간추려진다. 북한측은 외교적 「실지회복」을 피하면서 우리를 「들러리」 화하려고 노리는 꼴이다.

한편 레이건 미 대통령은 중공수상 조자양을 위해 베푼 10일자 만찬석상에서 3자회담보다는 남북한과 미·중공이 함께 참석하는 「4자회담 개최가 훨씬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다.

이에 대하여 소련 타스통신은 이러한 동향을 논평없이 보도하는 동시에 오는 2월 1일부터 개막되는 「팀·스피리트 84」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격렬한 비난에 치중하고 있다. 일본의 외무성 고위관리는 11일 장래전망에 붙여 「일본·소련을 포함시킨 6자회담이 가장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는 소식이다.

이같은 착잡한 주변정세동향에 비추어 정부의 11일자 대북성명은 우선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의 여건을 마련하고 민족화합의 터전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는 직접 당사자로서의 도의적 입장과 자주적 정책을 늠름하게 천명했음이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먼저 북한당국이 버마 사건에 대해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이를 시인·사과」해야 한다는 선행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우리의 국가적 체통과 양보할 수 없는 도의적 고지를 다짐한 셈이다. 이어 남북한 당국의 직접대화를 촉구하였다. 북한측이 동족을 헐뜯으며 비루하고 비현실적인 책동을 일삼는 것과 대조되는 자주적 입장의 당연한 강조이다.

그 전제 위에 「국제환경조성에 도움이 된다면 한반도 분단과 한국동란에 직접 간접으로 책임 있는 관계국들이 함께 참가하는 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일단 「4자회담」도 긍정한다고 풀이될 수 있겠다. 하나 한반도의 분단은 소련이 개입했으며 당시 중공은 정권수립 이전이었다. 또 한국동란의 경우 직접 간접의 이해당사국들 중에는 일본도 포함된다. 그러니 전향적으로 「6자회담」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유연성의 진폭을 내다보게 한 것이다.

이번 대북성명에는 정세판단상 유난히 두드러진 대목이 깃들여 있다. 즉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은 북한 당국이 인정한 바와 같이 남북간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전쟁이 되는 것이며 이는 곧 핵전쟁이 될 것이다」고 한 경고이다. 동족상잔의 세계대전유발 가능성을 감안할 적에 우리의 평화정착노력에 부수되는 민족적, 국제적 책임은 지대하다. 북한측은 모험적 도발과 모략을 일삼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하기야 그같은 세계전략적 좌표와 당면한 긴장상태로 미루어 지금 한반도 문제에 관한 국제회담의 규모나 형태를 성급히 역측,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일는지 모른다. 그럴수록 민족의 존엄성을 지키며, 세계 앞에, 다자회담의 성격규정을 위해서도, 우리 겨레의 자결능력과 지혜집중을 다지는 남북한간의 직접대화가 더없이 갈망된다고 할 것이다.

조국 강토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대화·교류·협력의 증진을 통한 상호신뢰와 민족적 동질성의 실감있는 재확인이 필요하다. 나아가서 우리의 통일은 타율작용에 의한 분단해방이라는 세계사적 부조리를 민족의 자율적 노력으로 시정한다는 뜻을 생각해 한다. 북한당국이 더이상 부질없는 권모술수를 놓치지 말고, 대국적인 민족사적 과제에 개안하여 흔쾌히 직접대화에 호응하도록 촉구한다.

#### 해외주요반응

##### <미국반응>

워싱턴발 외신종합(1984.1.11)

레이건대통령은 남북한과 미국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열자는 북한측 제의에 대해 논평하는 자리에서 중공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한반도에 「안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4자회담이 열릴 수 있고 한국과 북한이 「군사적인 대치상태를 중지」시킬 수 있게 되면, 그것은 「아주 놀랄 만하게 훌륭한 일일 것」이라고 논평했다. 또한 미 국무성대변인 휴즈는 「물론 랭군사태에 비추어 우리는 한국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의도에 대해 회의적일 수 밖에 없으나 우리는 기다려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랭군 만행사건으로 더욱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임을 걱정했기 때문에 부득이 새로운 제안을 제시한 것으로 관측통들은 믿고 있다.

한반도 회담에 관한 그동안의 미국측 입장은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간에 해결되어야 하며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회담에는 한국 휴전협정 조인국인 중공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반응>

북한 제안의 참뜻은 무엇인가?

산케이신문(1984.1.13 사설)

북한의 참뜻은 파악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다. 이 제안이 외교상의 선전효과를 노린 단순한 공던지기에 끝나는 것인지, 혹은 남북대화의 실마리가 될 것인지 신중히 지켜보고자 한다. 북한 제안은 이론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고 일관성도 없고 성의도 없다. 미국측에 의해 거부될 것을 알고도 제안하고 대화 불성립의 책임을 서방측에 돌리는 것이 노림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남북대화 실현을 위해서는 국제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그 전제가 되는 것은 북한자신이 국제신용을 회복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일이다.

<홍콩반응>

김일성, 또 의심스러운 제의

The South China Morning Post(1984.1.11 사설)

김일성의 북한공산정권은 과거에 미국을 꺾어 분단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에 참가시키려고 여러 번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북한은 한국의 배후에서 미국과 직접 해결 지을 것을 원했다. 물론 미국은 이런 구상에 반대하고 김일성의 제의를 단호히 거절했다. 김일성은 전두환 대통령의 버마공식 방문 중 랭군에서 고의적으로 한국관리들과 일부 버마인을 죽인 폭탄 폭발사건으로 북한정권이 입은 손상을 상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국제무대에서의 어떤 사태 발전을 이용할 좋은 기회를 절실히 갈망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대화를 열자는 대미 제의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 북한 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작년 10월 중공을 통해 미국에 그 제의를 보낸 후 미국과 한국 두 정부는 북한인민의 불구대천의 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동신문은 또 당원들에게 미국과 한국 지도자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일본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갖고 있는 "타오르는 증오"를 대중에게 주입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김일성의 씩씩한 태도가 의심스러운 것은 당연하다.

<영국반응>

BBC 해외방송(1984.1.11)

현 시점에서 볼 때 이 제안이 외교적 책동으로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 소행으로 밝혀진 랭군폭발사건이후 남북한간의 기상도는 매우 긴장되어 있고 또 북한이 남한의 안정을 깨뜨리려는 시도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지난해 12월 게릴라 5명을 간첩선에 태워 남파, 게릴라 활동을 벌이게 하려다가 격침당했다. 이런 짓은 그들의 선의의 표시일 수가 없다. 그들의 의도가

선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번 제의도 한낱 외교적 책동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독일반응>

북한, 회담제의

Frankfurter Allgemeine(1984. 1. 12)

북한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신호들은 아직도 모순에 가득 차 있다. 11일 아침 평양방송은 한국, 미국, 북한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열자고 제의했다. 전날인 10일 북한 중앙통신은 김일성이 한국과의 회담은 불필요한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은 모두가 순전한 선전이였다.

### 제3부 국무총리의 대북서한 전달 및 대북성명 발표

#### 1. 배경

우리측은 북한의 전 정무원 총리 이종옥(현 부주석)이 북한의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에서 1984년 1월 10일 채택한 소위 「3자 회담」 제의와 관련한 대남편지를 국제우편을 통해 진의중 국무총리 앞으로 우송한 것을 1984년 1월 24일 접수하였다.

이에 대해 진총리는 북한의 정무원 총리에게 보내는 서한을 우리측 연락관을 통해 1984년 2월 14일 오전 10시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북한측에 전달하였다.

우리측은 이미 1984년 1월 11일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의 대북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북한측의 편지를 묵살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적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일관하여 추진해 온 남북한 당사자간 직접 대화의 당위성을 재강조함과 아울러 「버마」 사건 이후에 극도로 악화된 남북한관계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총정에서 대북서한을 보냈던 것이다.

한편 북한측은 진의중 국무총리의 대북서한에 대하여 1984년 3월 7일 그들의 답신을 판문점을 통해 우리측에 보내왔다.

북한측은 동 답신에서 우리측이 일관하여 주장해온 남북한 직접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30년이상 반복해온 주한미군철수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했다.

즉 그들은 한반도통일의 전제조건으로 미군철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한이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세워 남북대화로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변함으로써 남북한 직접 대화의 무용론을 제기하는 한편 종래의 이른바 「3자회담」을 또다시 거론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 책임을 주한미군과 우리측에 전가시킴으로써 「버마」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무력도발책동을 호도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기에 편승하여 다시 한 번 주한미군 문제를 선거쟁점으로 부각시켜 보려는 저의를 드러냈다.

북한측 정무원 총리가 보내온 답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평화통일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미국 사이의 회담에 남조선도 참가하는 「3자 회담」을 열어 우리와 미국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북과 남 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야 한다.
- 미군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고, 미군 사령관이 국군에 대한 통수권을 쥐고 있는 조건에서는 남조선 당국이 우리와 마주 앉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며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군대를 축소하여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우리가 1974년 조·미회담을 제기했을 때 미국측은 처음부터 남조선과 같이 참가해야함을 완강하게 주장하여 왔으며 귀측도 미국이 「3자 회담」안을 제기하였을 때 그것을 찬성하였다.

○ 귀측이 제기한 조선문제에 관계되는 나라들의 회담문제는 미국 이외에 조선문제에 직접 책임 있는 나라가 없는만큼 타당성이 없다.

이러한 북한측의 불성실한 대화자세와 기만적인 대화제의에 대해 진의중 국무총리는 1984년 3월 10일, 북한측이 주장하고 있는 남북한 당사자 회담 거부 논리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북한측이 민족의 염원을 더 이상 거역하지 말고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에 호응해 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남북성명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 2. 진의중 국무총리, 북한의 정무원 총리에게 보내는 서한 전달

진의중 국무총리는 북한의 강성산 정무원 총리에게 보내는 서한을 우리측 연락관을 통해 1984년 2월 14일 오전 10시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북한측에게 전달하였다.

진총리는 동 서한에서 「북한 당국이 우리와 진정으로 대화할 의사가 있다면 「버마」 사건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화합과 통일은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의 문제이므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어떤 나라도 우리 민족을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임을 지적, 북한측은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한이 합의한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남북한간의 직접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또한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를 트고 상호 신뢰를 조성하는 가장 초보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는 「남북한 이산가족을 비롯하여 온 겨레가 편지를 주고 받고 상호 왕래할 수 있는 길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진의중 국무총리의 대북서한 전문은 다음과 같다.

강성산 정무원 총리 앞

나는 귀측이 지난 1월 11일에 발송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측은 이른바 3자회담과 관련한 귀측의 조치에 대해서 같은 날 우리측의 명백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온 겨레의 뜻을 받들어 하루속히 남북한 사이에 접촉과 대화를 터야 한다는 것을 일관성있게 주장하여 왔으며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 당국은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오히려 국내외에서 민족자해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우리 겨레의 평화의지와 통일염원에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버마」 암살폭발사건은 남북한 관계를 극도의 위험한 상태로까지 악화시켜 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귀측 당국이 「버마」 사건에 대한 솔직한 시인이나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커녕 동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선전하면서 이른바 3자 회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은 대화를 하겠다는 자세로 볼 수 없습니다.

귀측 당국이 진정으로 우리와 대화를 할 의사가 있다면 「버마」 사건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귀측의 회담제의를 진실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화합과 통일은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의 문제이므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룩되는 것이며 다른 어떤 나라도 우리 민족을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민족자결 원칙에 합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조성된 내외 정세 속에서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남북한간의 불신과 반목 그리고 긴장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소하고 우리 민족의 화합과 통일의 기초를 다지는 길은 무엇보다도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를 트고 상호 신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남북한 이산가족을 비롯하여 온 겨레가 서로 편지를 주고 받고 상호 왕래할 수 있는 길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측이 주장해온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과 「각료급 회담」 등 일련

의 제의들은 우리 민족이 당면한 현실문제와 장래문제를 상호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치들입니다.

우리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를 순조롭게 진행시켜 가면서 한반도 분단과 한국동란에 직접·간접으로 책임이 있는 관계국들이 함께 참가하는 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상의 모든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귀측이 올바른 자세로 남북한간의 직접 대화에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1984. 2. 10

대한민국 국무총리 진의중

### 3. 진의중 국무총리, 남북한 직접 대화를 재촉구하는 성명 발표

진의중 국무총리는 3월 10일 북한의 정무원 총리의 3월 7일자 답신과 관련한 대북성명을 발표하였다. 진총리는 동 성명에서 「북한은 해외에서까지 우리의 국가원수를 시해할 의도로 야만적 테러행위를 저지르는데 대하여 하루속히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고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에 나와야 한다」고 남북한 직접 대화를 거듭 촉구했다.

진총리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회담이 진행되면 한반도문제와 관련이 있는 관계국들이 참가하는 회담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북한측이 민족의 염원을 더 이상 거역하지 말고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에 호응해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진총리는 동 성명을 통해 북한측이 그들의 회답편지 속에서 이산가족 재회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자는 우리측의 제의를 외면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의 「버마」사건에 대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라는 우리측 요구를 묵살한 사실을 지적하고 이같은 북한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미루어 볼 때 그들이 어떠한 회담제의를 내놓아도 거기에는 신뢰성이 없다고 논박했다.

이 날 오전 11시 삼청동 남북대화사무국 회담장에서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이 대독한 진총리의 대북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북한 정무원총리에게 보낸 2월 10일자 편지에서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과 「각료급 회담」등 남북한 당사자 회담을 열자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지난 3월 7일 보내온 회답에서 우리 민족이 갈망하는 남북한 직접 대화에 등을 돌린 채 주한미군철수 등 30여년 동안 반복해온 낱아빠진 주장들만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측의 답신은 이산가족을 비롯한 남북한 동포들간의 서신교환과 상호 방문을 하루속히 실현시키자는 본인의 제안에 대해서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북한측은 온 민족이 분격하고 전 세계가 규탄하고 있는 「버마」암살폭발 사건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흉악무도한 반민족적 도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은 민족의 화합과 평화통일을 바라는 마음에서 은인자중하면서 북한측에게 「버마」사건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그들의 회담제의에 대한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였습니다. 남북한 당사자 대화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대화를 위한 우리측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외면한 북한측의 불성실한 태도는 북한이 대화를 통한 남북한 관계개선과 통일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전혀 성의가 없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측이 「버마」암살폭발 만행과 때를 맞추어 내놓은 이른바 「3자회담」 제안은 남북한간의 현안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폭력노선을 은폐하려는 위장술책임이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북한측은 이번 서한에서 국군통수권을 시비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면서 남북한 당사자 회담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억지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국가원수가 엄연히 행사하고 있는 국군통수권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에 대한 모독이며 사실을 왜곡한 망발입니다.

북한측은 한반도 긴장조성의 책임이 주한미군과 우리측에게 있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한반도 긴장조성의 근본원인은 「버마」암살폭발 만행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북한측이 대남 적화통일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주한미군으로 말하면 북한의 6·25남침이 없었더라면 1949년에 철수했던 미군이 다시 한반도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북한이 휴전 후에도 재남침 기도를 버리지 않은 채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면서 1968년 1월에는 무장특공대를 침투시켜 청와대습격을 기도했고 남북대화가 진행되던 1970년대 초부터는 휴전선 일대에 남침용 땅굴을 파내려 왔으며, 작년 10월에는 「버마」 암살폭발 만행을 자행하는 등 폭력과 무력도발을 계속해온 것은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일입니다.

주한미군은 이같은 북의 남침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유지할 목적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주둔하고 있는 것이므로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간의 쌍무적 협정사안이며 북한측이 간섭할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북한측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기에 앞서 무력통일의 기도를 포기하고 남북대화에 호응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북한측은 우리측이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없다는 구실을 내세워 남북한 직접 대화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측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원칙에 따라 우리측이 제의한 남북조절위원회 회의와 1971년부터 1977년까지 계속된 남북적십자회담에는 왜 응했으며, 또한 1980년 2월부터 8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남북한 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에는 무슨 목적으로 참석하였었는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와서 북한측이 남북한 당사자 회담을 반대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통일문제에 대한 민족자결과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을 스스로 부인하는 자가당착의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너무나 많이 쌓여 있습니다.

혈육과 헤어진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산가족의 고통, 모든 분야에서의 단절, 날로 심화되고 있는 불신과 반목, 침체화된 군사적 대치상태 등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한 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이마를 맞대고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합니다.

통일문제는 지금과 같은 대결과 불신의 관계 속에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으며, 민족자결과 화합의 바탕 위에서 남북한 당사자가 대화를 갖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회복해 나갈 때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으나 민족자결 정신과 평화에 대한 신념을 갖고 노력한다면 남북한 거래가 스스로 화합하고 통일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측이 평화통일을 말하면서도 남북한이 접촉하는 것조차 거부한다면 그들이 어떠한 대화를 제의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신뢰성이 없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이 한자리에 마주 앉아야 합니다.

북한측은 해외에서까지 우리의 국가원수를 시해할 의도로 야만적 「테러」 행위를 저지른 데 대하여 하루속히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고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당장 어렵다면 「남북한 각료급 회담」에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한 당사자간 회담이 진행되면 한반도 문제와 관련이 있는 관계국들이 참가하는 회담도 개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북한측이 민족의 염원을 더 이상 거역하지 말고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에 호응해 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1984년 3월 10일

진총리의 대북성명의 주요 내용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남북한 당사자 회담의 당위성 강조 및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 수락을 재촉구

진총리는 「북한측이 평화통일을 말하면서도 남북한이 접촉하는 것조차 거부한다면 그들이 어떠한 대화를 제의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신뢰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이 한 자리에 마주 앉아야함을 강조, 하루속히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우리 민족의 최종대사이며, 또 통일은 부강한 조국과 행복한 국민의 장래가 약속되어야 하는 만큼 통일문제는 우리 자신이 해결해야 하며 누구도 이를 대신해서 해결할 수 없다. 또한 평화통일의 방법에 있어서도 남북한의 사상과 체제가 다르고 상호 불신과 적대감이 팽배한 현실에서는 신뢰의 조성과 민족화합이 긴요한만큼 이를 위해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과 남북한 당사자 회담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민족자결의 원칙과 남북한간의 신뢰조성 및 민족화합을 외면한 것이며, 그 배경은 무력과 폭력에 의한 공산화 통일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북한측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을 개최하여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함으로써 남북한 관계개선과 평화통일에 획기적인 돌파구를 열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북한측이 이와 같은 생산적인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에 지금 당장 동의하지 못할 사정이라면 남북한 「각료급 회담」에라도 동의해야 할 것이다.

북한측이 「버마」사건에 대한 납득할만한 조치를 묵살한 점을 반박

북한은 「버마」암살 폭발사건과 같은 반민족적 범죄에 대하여 시인·사과하기는 커녕 도리어 우리측이 조작한 자작극이라고 왜곡·선전하는 적반하장의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같은 북한의 작태로 미루어 보아 그들이 제의한 이른바 「3자회담」은 대화를 통해서 남북한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버마」사건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서 제의한 위장평화 공세에 불과한 것임이 더욱 명백해졌다.

「버마」사건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반민족적 도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민족화합을 통해 통일을 실현하려는 충정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버마」사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그들이 대화자세에 대한 진실성을 보여줄 것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3월 7일자 정무원총리의 서한에서도 이를 일체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종래의 태도에 조금의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북한이 앞으로도 폭력노선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산가족을 비롯한 동포간의 서신교환과 상호방문제의를 외면한 점을 논박

1984년 2월 10일자 국무총리의 대북서한에서 이산가족을 비롯한 남북한동포간의 서신교환과 상

호방문을 제의한 데 대해 북한측이 이번 회신에서 이를 묵살한 것은 국토분단으로 인한 민족고통의 경감과 남북한 관계개선 및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에는 관심이 없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남북한 관계개선에 가장 초보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는 남북한간의 서신교환과 상호왕래 제의에 북한측이 호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 남북한 당사자 회담 거부논리의 부당성 지적

북한측은 이번 대남서한에서 남북한당사자 회담을 거부하는 이유로 첫째, 대한민국 국군통수권 문제를 시비하고 있고 둘째, 주한미군 철수를 남북대화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셋째, 우리 정부가 문제해결의 권한이 없다는 구실로 남북한 직접대화를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넷째, 우리측이 「3당국회담」을 제의했던 사실을 들어 북한측이 제안한 「3자회담」을 수락하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북한측이 남북한 당사자 회담을 거부하는 이유로 국군통수권을 시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권에 대한 모독이며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다.

왜냐하면 국군통수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49조 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엄연히 대한민국 국가원수에게 있음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작전 지휘권은 미국과 소련군 사령관에게 있지만 각국의 군통수권은 그 조약 가맹국가 원수에게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의거, 6·25남침과 같은 북한의 재남침을 막고 대한민국 방위와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목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간의 쌍무적인 문제이며 북한이 간섭할 성격의 것이 아니므로 북한측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기 전에 재남침 기도를 포기하고 전쟁의 위험이 없는 평화적 남북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남북대화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측은 우리 정부가 문제해결의 권한이 없다는 구실로 남북한 직접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것은 북한측이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원칙에 따라 「남북조절위원회」 회의와 1971년부터 1977년까지 계속된 「남북적십자 회담」에 응했으며, 또한 1980년 2월부터 8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남북한 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에도 나왔던 것은 전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남북한 직접대화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를 기피하기 위한 억지 주장인 것이다.

끝으로 우리측이 「3당국회담」을 제의했던 사실을 들어 북한측이 제안한 「3자회담」을 수락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양자간의 본질적 차이를 고의로 왜곡한 형식논리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측이 「3당국회담」을 제의함에 있어 우리는 한·미 공동성명 제12항에 「양국 대통령은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한국민의 평화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남북한의 책임있는 당국간 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문제와 장래문제는 어디까지나 남북한이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제의한 「3자회담」에서는 미군철수를 내용으로 하는 평화협정은 미국과 북한간

에 체결하자고 함으로써 평화협정 체결문제에서는 대한민국을 배제시키고 있다.

이것은 주한미군 철수에 주목적을 두고 미국과 북한이 주역이 되어서 회담을 진행하겠다는 것으로서 그 취지와 목적면에서 우리측이 제의했던 「3당국회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 4. 국내 주요반응

국내주요언론들은 민족자결에 입각한 남북한 직접대화의 촉구를 주내용으로 담은 총리의 대북서한(1984. 2. 10)에 대하여 「한반도 통일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이므로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간의 대화를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리」라고 지적하고 아직도 적화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위장과 허구로 가득 찬 이른바 「3자회의」이라는 제의를 내걸고, 제의와 동시에 예정된 각본대로 맹렬히 대남 비방선전을 벌이고 있는 북한의 작금의 작태를 개탄했다.

또한, 북한 강성산 정무원 총리의 답신(1984. 3. 7)과 이 답신에 대응하여 발표한 진의중국무총리의 대북성명(1984. 3. 10)에 즈음하여 각 언론들은 북한의 답신이 「실로 치졸하고 유치하기 그지 없는 장난」이며, 북한이 지난 10월부터 들고 나온 이른바 「3자회담」의 허구성이 날이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음은 매우 유감」이라고 논평하고, 동 서한이 늘어 놓은 궤변에 대하여 일일이 통박하면서 「북한측은 속히 뻘히 들여다 보이는 말장난을 그만두고 당장 남북한당사자회담제의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다음은 진 국무총리의 대북서한 전달과 대북성명발표에 따른 국내 주요신문의 사설이다.

#### 남북 42개월만의 대면

동아일보(1984. 2. 15)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는 14일 남북한의 연락관들이 42개월만에 만났다. 진의중국무총리가 북한의 강성산 정무원총리앞으로 보내는 답신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측 연락관 2명이 나갔고 북한측에서도 2명이 진총리의 서한을 받아가기 위해 나왔던 것이다.

우선 판문점에서 전달한 서울측의 답신내용이나 북한측의 반응을 따지기에 앞서 우리는 3년반만에 남북한사람들이 서로 만나 악수하고 공문서류를 교환할 수 있었다는데서 호뭇함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9일 KBS 제1라디오를 통해 진총리의 서한을 10일 판문점에서 접수해 가라고 북한측에 요청했었다. 북한은 우리의 요청에 수정을 가해 14일 받아가기로 했던 것이다.

진총리는 북한의 강성산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북한의 3자회담제의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진총리는 북한이 「아웅산」 묘소암살 폭발사건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를 트고 상호신뢰를 조성하자」고 촉구했다. 또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회담을 열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환경을 조성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진총리의 이같은 서신내용은 지난 1월 11일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이 대북성명에서 밝힌 내용과 같은 것으로서 새로운 제안은 없다. 진총리는 「버마」사건에 대한 북한측의 납득할 만한 조치를 거듭 촉구하고 나섬으로써 「버마」폭발과 같은 북한의 암살행위를 결코 그냥 넘겨버릴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실상 남북분단 이래 북한은 지난 40년 가까이 남한적화라는 기본노선아래 호전행위와 위장평화 전술을 번갈아 휘두르며 한국을 괴롭혀 왔다. 「8·15」해방직후 저지른 끔찍한 반란폭도, 남북협상회유, 「6·25」남침감행, 「7·4공동성명」채택, 일방적인 남북대화 중단, 끊임없는 대남무장간첩침투, 「아웅산」묘소 암살폭발 그리고 이제 「3자회담」제의라는 위장평화공세로 북한은 다시 돌아온 것이다.

지난 40년 가까이 북한에 이처럼 속아오기만한 한국정부와 국민이 「버마」암살기도와 함께 내놓은 북한의 3자회담을 회의적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북한은 진정으

로 남한과 대화를 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통일의 기반을 닦을 의사가 있다면 「버마」 사건에 납득할만한 조치를 보여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14일 판문점에서 볼 수 있었던 남북한간의 실무급 접촉이나 대화의 창구는 계속 열려야 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측 연락관들이 북한측에 요구했던 대로 남북한을 잇는 직통전화는 다시 개통되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이 그들의 정무원총리 서한을 의도적으로 판문점을 기피하고 제삼국을 통해 우편으로 보낸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는 남북한간의 모든 접촉이나 연락은 판문점을 통하고 직통전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은 무엇보다 실무급에서 판문점을 기점으로 한 직통전화와 접촉체제를 마련하도록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남북한통일의 지름길은 「워싱턴」이나 북경에 있지 않고 바로 이 나라 이 강토 위에 있음을 직시, 남북한당사자 회담에 즉각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해 두는 바이다.

### 진총리 대북서한의 의미

서울신문(1984. 2. 16)

정부는 지난 14일 진의종 국무총리 명의로 북한의 강성산정무원총리에게 그들이 주장하는 소위 「3자회담」과 관련한 대북서한을 전달했다.

어제 전문이 공개된 이 서한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함에 있어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남북한당사자간 직접 대화의 기본입장을 재천명함과 아울러 특히 버마사건 이후에 극도로 악화된 남북한관계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실천적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첫째로 이 서한은 버마사건에 대한 북한의 반성과 성실한 대화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지되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측은 그들이 저지른 버마사건 하루 전날인 지난해 10월 8일 느닷없이 남북한 및 미국이 참여하는 「3자회담」이란 것을 제의한데 이어 지난 1월 11일 전임정무원총리 이종욱명의로 이를 되풀이 주장하는 편지를 진총리앞으로 국제우편을 통해 발송함과 함께 그 내용을 방송을 통해 대대적으로 선진했었다.

우리 정부의 「1·11국토통일원 장관 대북성명」에서도 지적됐듯이 이같은 일련의 작태 자체가 「3자회담」주장은 참다운 대화제의를 아니라 버마사건으로 인한 자신의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한 위장평화공세에 불과한 것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측이 진심으로 대화에 임하고자 한다면 우선 버마사건에 대해 납득할만한 조치부터 취하는 등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나와야 할 것임은 새삼 말할 것도 없는 일이라 하겠다.

둘째로 진총리는 이 서한에서 민족자결원칙에 따른 남북한당사자간 직접대화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어떤 나라도 우리를 대신해 해결해 줄 수 없는 우리 민족 자신의 문제이므로 당사자인 남북한간의 직접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마땅하며 이는 「7·4남북공동성명」을 통해 남북한당국간에도 이미 합의된 대원칙으로 되어 있다.

이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 정부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과 그것이 어렵다면 당국간의 각료급회담을 개최할 것을 그동안 누누이 촉구해 왔다. 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에도움이 된다면 대화의 주역이 남북한이라는 원칙아래 미국·중공이 참가하는 「4자회담」과 나아가 일본·소련까지 참가하는 「6자회담」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북한측이 이들 합리적인 제의를 모두 외면한 채 영똥하게도 「3자회담」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한국을 단지 업저버로 참여케 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철수를 전제로 한 미·북한간 「평화협정」체

결을 추진하려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은 민족의 주체성과 「7·4공동성명」 정신을 성실히 지키려면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남북한당사자간의 직접대화에 지체없이 호응해 와야 한다.

끝으로 진총리는 북한측에 대해 민족화합과 신뢰회복을 위한 실천적 조치에 협력할 것을 아울러 촉구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남북한 이산가족을 비롯한 온 겨레가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상호 왕래할 수 있는 길을 조속히 마련하자고 제의한 것은 평화통일에 실질적으로 다가서기 위해 대화의 재개에 못지 않게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과제임을 북한측은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야 할 줄로 안다.

우리는 남북한관계 개선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리라 기대되는 이 서한내용에 대해 북한측의 긍정적 호응이 있기를 온 국민의 이름으로 거듭 강력히 촉구해 마지않는다.

#### 판문점-3년반만의 8분

한국일보(1984. 2. 16)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서로 오가는 따스한 인정의 바람에 통한다. 그러나 아직은 땅이 빙판에 덮였으며 강물은 꽁꽁 얼어붙은 채이고 눈길을 들어봐도 앙상한 나뭇가지에는 찬바람이 스치고 간다. 그런데도 이 불사조민족은 조국의 대자연이 달래주는 가르침을 받아들여 봄은 기어오르고야 말 것임을 알고 있다. 보통사람들의 대화 속에 되새겨진 표현 즉 「우수 경칩이면 대동강도 풀린다」는 속담은 우리 겨레의 심정 속에 영원히 이어져 나갈 것이다.

하나 현실은 직시할 수밖에 없다. 언젠가는 반드시 헐릴 「벽」이라 해도 지금은 우리 앞을 답답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14일 상오 모처럼 3년 6개월만에 다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 회의실에서 자리를 같이한 남북한 연락관들의 접촉은 불과 8분만에 끝났다. 어딘지 어색한 여운, 남북 직통전화나마 재개하자는 제의에 조차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저들 태도가 겨울을 느끼게 한다.

이날 정부는 진의중국무총리가 평양의 강성산정무원총리에게 보내는 답신을 북한측에 전달하였다. 앞서 지난 1월 10일 평양의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합동해서 채택한 「3자회담」 서한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진총리의 답신내용은 우선 북한측이 지난해 10월에 저지른 버마암살폭발사건에 대해 한마디의 시인·사과도 없이 「3자회담」 등 선진공세나 일삼는 불성실한 자세를 지적하였다. 정녕 남북한간의 불신과 반목을 풀고 화합과 통일의 기초를 다지려면 일련의 신뢰회복 조치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남북한 당사자간의 직접대화를 선행시키고 나서 관계국들도 참가하는 국제회의를 열 수 있다는 골자로 간추려진다.

북한측의 「3자회담」 제의가 주한미군철수를 노린 대미직접협상 주장의 전술적 변형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 주한미군의 존재는 동족상잔의 남침을 예방하려는 한국의 주권적 의사결정의 결과이다. 그러나 모든 현안은 먼저 남북한 당사자간의 직접대화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민족의 화합과 통일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이다.

이점 북한측이 민족의 존엄성을 모독하고 자주정신을 훼손하면서 결과적으로 외세만 부각시키려고 시도하는 짓은 결코 용납될 바 아니다. 게다가 북한의 세습독재층은 버마사건에서 가장 무자비하고 철면피한 동족학살을 자행하고서도 아무런 뉘우침이 없었고, KAL기피격사건 때도 무고한 동족의 무리죽음을 애도하기는커녕 소련의 만행을 두둔하는데 골몰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북한측에 「성의」부터 앞세워 마땅할 것임을 촉구해 마지않는다. 대동강이 풀릴 때 썸엔, 평양의 권력층도 마음의 해빙을 다짐하면 좋겠다.

### 3자회담이 능사 아니다

-북한은 먼저 남북한직접 대화에 응하라

경향신문(1984. 3. 12)

진의중국무총리는 10일 북한측에 대해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회담을 다시 촉구했다. 이 회담을 당장 열기 어렵다면 남북한 각료급회담이라도 열자는 종래의 입장을 아울러 밝혔다. 진총리의 이 대북성명은 북한측 강성산정무원총리의 지난 7일자 답신에 대한 정부의 공식반응이다.

진총리는 또 이번 대북성명에서 북한측이 계속 3자회담만을 고집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그리고 북한측이 진정으로 남북한간의 현안문제를 대화로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버마사건에 대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총리는 지난달 14일 보낸 서한에서도 이를 북한측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번 북한측 답신은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북한공산집단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그들이 저지른 버마암살만행에 대한 죄책감은 마땅히 표명돼야 한다고 본다.

더구나 북한 정무원총리의 이번 서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3자회담을 합리화 하기 위한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마치 3자회담만이 한반도긴장을 완화하고 남북한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지름길인양 억지주장을 되풀이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번 서한에서도 북한이 미국과 먼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국과는 불가침선언을 채택한 뒤에야 남북한 직접대화에 임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심지어 그들은 미국과 우선적으로 협상하겠다는 논리로서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통수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 우리의 주권까지 모독하는 망언을 늘어 놓았다. 헌법 제 49조 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군통수권은 엄연히 대한민국 국가원수에 있음에도 이를 시비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작전지휘권을 국군 통수권과 혼동한 것 같은 데 작전수행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인 측면에 지나지 않는 유엔군사령관의 작전지휘권도 종래와 다른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남북한 직접당사자회담을 거부하는 이유로 작전지휘권을 거론한다고 해도 그것은 한국과 미국, 유엔의 관계를 잘못 알고 있거나 일부러 그것을 왜곡, 비방하려는 생트집에 지나지 않는다.

휴전협정에 서명한 상대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없다. 1차대전을 끝맺은 휴전협정은 프랑스의 포쉬장군과 독일군사령관 사이에 체결되었다. 하지만 평화조약에는 유럽의 평화에 관계가 있는 모든 나라가 참여했고 심지어는 극동에 있는 일본도 베르사유 평화조약교섭에 참여하지 않았던가. 휴전협정체결 당사자는 명백히 말해 미국이 아니라 유엔이다. 이같은 사실은 북한판 평화협정 논리의 모순성을 잘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또 우리측이 과거에 「3당국회담」을 제의했던 사실을 들어 3자회담을 수락하라고 강변하지만 이것은 양자간의 본질적 차이를 고의로 왜곡한 형식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주한 미군철수를 주목적으로 한 북한의 3자회담과 남북한이 주역이 되는 3당국회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남북한 직접대화는 싫고 3자 회담만 열자는 주장은 의도적으로 한국을 제쳐놓겠다는 속셈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북한측은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말장난을 그만두고 당장 남북한 당사자회담 제의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왜 대화를 피하려만 하나

조선일보(1984. 3. 11)

북의 정무원총리 강성산의 3월 7일자 편지가 도달했다. 그리고 진의중국무총리는 이것을 접수한 후, 3월 10일 대북성명을 발표했다. 강의 편지는 한마디로, 3자회담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남북 당사자회담은 못하겠다는 내용의 것이다. 그 내용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은 물론이다.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 논조는 대한민국에 대한 야유와 모욕과 우롱으로 가득 차 있다. 실로 치졸하고 유치하기 그지없는 장난이다.

나라의 분단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운운하는 자들이 적어도 상대방 총리에 보내는 공한에서 도대체 그런 희롱을 일삼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그 알뜰한 주체사상의 혁명전술이라면 마르크스와 레닌조차 개탄할 일이다. 강의 편지의 장난질은, 남북당사자회담이다 3자회담이다를 논하기 이전의 품위의 문제요, 정치적 협상의 규칙에 관한 문제다. 우리는 전쟁중의 이민족 국가들 사이에 교환되는 공한에서도 그런 무례와 몰상식이 있었다는 전례를 알지 못한다.

강의 편지는 왈, 「<국군>에 대한 통수권을 쥐고 있는 것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 사령관」이라느니, 그런 「조건에서 어떻게 미국의 승인없이 남조선당국 혼자서 우리와 마주앉아」 평화협정 체결·미군철수·불가침선언 채택·감군·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등 제멋대로 의제를 만들어 놓고 지껄이고 있다. 심지어는 한국이 남북 쌍방회담을 하고 싶으면, 이제라도 미국으로부터 국군통수권을 넘겨받고, 미군을 철수시키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권한을 넘겨받으라고 야유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한국은 미국 외에 한반도에서의 「현 긴장상태에 책임이 있는 다른 일방」이기 때문에 3자회담에 끼여 준다는 것이며, 미국이외에는 한반도문제에 직접 책임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한국이 제기한 4자내지 6자회담은 타당성이 없다고 한다. 강의 이러한 주장은 요컨대,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한국뿐이며, 38선이 그어지고, 6·25사변이 일어나고, 휴전선이 생기고, 통일이 안되는 것은 모두 미국의 탓이요, 중·소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식의 망론이다.

한반도의 전후처리 과정과 6·25전쟁의 도발자와 휴전후의 평화교란자가 누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대내외 모략선전의 일환으로 씌어진 강의 편지의 책략성을 쉽게 간파하고 남을 것이다. 그가 철면피하게 떠들고 있는 것의 목표는 주한미군의 철수에 있다. 1949년에 철수했던 미군을 6·25전쟁으로 다시 불러들인 바로 그들이 이제 와서는 나가야 한다고 야단이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소 두 강대국과 군사조약을 체결한 김일성일파로서는 남한에서 미군만 떠나면 소위 「혁명전쟁」을 일으키기에 안성마춤일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 남북한간에 평화가 정착되고 전쟁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한·미간의 군사동맹관계는 단호히 유지될 것이다. 그들이 3자회담의 의제로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하는 평화협정→남북불가침선언→상호감군→연방제 통일→남한 흡수라는 편리한 도식은 환상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그들은 걸핏하면 「미국이 국군 통수권을 쥐고 있다」고 떠들지만 국군통수권은 엄연히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있다. 군사동맹관계에서 일부 작전권의 분담은 하나의 국제적 상식인데, 그들은 그것을 몰라서 떠드는 것이 아니다.

강의 편지는 「평화」니 「긴장 상태의 완화」니를 되풀이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도 평화를 존중한다면, 우선 버마의 암살폭파사건부터 사과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강의 편지는 남북대화를 못하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선언한 것인데, 왜 그들은 대화를 기피하려고만 하는가, 솔직한 대답이 있어야 할 것이다.

평양서 온 편지 한 통이 통일을 염원하는 6천만 우리 겨레를 다시 한번 실망시켰다.

진의중국무총리 앞으로 보내온 강성산의 7일자 서한에선 우리가 제의한 남북한 동포의 서신교환과 상호방문에 대한 반응은 전혀 찾아 볼 길이 없다.

평양측은 민족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자는 우리측의 직접대화를 거부하고 미군철수만을 되풀이 요구하면서 미국을 포함시킨 3자회담을 고집했다.

6·25라는 반민족적 전쟁범죄를 저질러 이미 철수한 미군을 1년만에 다시 들어오게 한 장본인이 이제는 민족의 내부문제 해결에까지 외세를 끌어들이는데 앞장서 있는 것이다.

북한은 미군이 먼저 철수한 다음 남북간의 대화를 진행시키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험논리상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다.

일단 철수한 미군을 다시 끌어들이는 것은 북한이 저지른 전쟁도발이기 때문에 전쟁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선행시킨 뒤에 미군이 철수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무엇보다도 미군의 주둔이나 한미방위조약, 군사지휘체계 등은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의 문제이고 우리 내정에 관한 사항이니 북한이 관여할 일이 못된다.

정치협상이나 외교교섭이란 상호간의 현상과 실정의 인정이 전제돼야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상식이다. 북한 당국자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마치 정복전쟁의 승자인양 내정에 간섭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이다.

평양측이 그렇게 나온다면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조건을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이다. 한 예만 들더라도 6·25 전쟁 책임의 문책과 중공·소련과 맺고 있는 군사동맹의 폐기 등이 거기에 포함될 것이다.

강성산의 편지는 미군이 남한을 「강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군은 분명히 우리 정부의 요구에 따라 이 땅에 진주했고 여러 차례 철수하려다가 우리 정부와 국민의 강경한 만류에 따라 계속 주둔해 있는 것이다.

강점이란 바로 6·25 때처럼 불시에 경계선을 침공하여 파괴, 약탈, 살상을 일삼은 「인민군」의 행위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북한측이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분명히 충고해 두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북경쟁에서 북한이 불리해진다는 사실을 평양 당국자들은 깨달아야 한다.

발전속도의 차이에서 오는 남북간의 힘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질 것이며 과거와 같은 무력이나 테러에 호소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강성산의 서신전달에서 나타난 하나의 발전을 소중하게 평가하고자 한다.

그것은 제3국을 경유하는 국제 우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던 북한의 대남 통신방식이 서울과 평양의 우리말 방송과 판문점에서의 쌍방 실무대표간의 문서수교에 의한 직접방식으로 전환됐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측의 방식을 뒤따라 온 것이긴 하지만 차가운 남북관계에서의 하나의 변화임엔 틀림없다.

이 직접방식이 진전되어 직통전화의 재개와 직접대화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것은 온 겨레의 소망이기도 하다.

# 남북대화 제35호

(1984. 4 ~ 1984. 8)

# < 목 차 >

|                                  |    |
|----------------------------------|----|
| 제1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제1차 지역회의 개최 ..... | 3  |
| 1. 전두환 대통령 치사 .....              | 3  |
| 2. 국내 주요 반응 .....                | 7  |
| 제2부 남북체육회담 .....                 | 11 |
| 1. 남북체육회담의 성립 .....              | 11 |
| 2. 남북체육회담과 우리의 입장 .....          | 14 |
| 3. 남북체육회담의 경과 .....              | 16 |
| 가. 제1차 회담 .....                  | 16 |
| 나. 제2차 회담 .....                  | 19 |
| 다. 제3차 회담 .....                  | 21 |
| 라. 남북체육회담의 전망 .....              | 23 |
| 4. 회담에서 보인 북한측의 태도 .....         | 25 |
| 5. 국내외 반응 .....                  | 27 |
| 제3부 자 료 집 .....                  | 39 |
| 남북체육회담 일지 .....                  | 39 |

## 제1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제1차 지역회의 개최

### 1. 전두환 대통령 치사

- 평화통일의 활로를 열기 위한 지속적 노력 재천명 -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는 1984년 6월 5일 창설 3주년을 맞아 제1차 지역회의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개 시·도와 워싱턴 등 해외 11개 지역별로 개최했다.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의장인 전두환대통령은 이 날 동 회의에 보낸 치사를 통해 「통일은 처음도 평화이며 마지막도 평화여야만 하며, 민족의 주체적인 역량에 의해서만 참다운 결실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측은 폭력과 분열노선을 버리고 하루마삿 민족양심과 주체 의식을 회복하여 남북대화에 융합으로써만 민족적 죄과를 얼마간이라도 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대통령은, 최근의 남북한체육회담에서도 북한측이 체육교류와 올림픽 단일팀구성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회담을 파괴하는 데만 급급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참가문제를 둘러싸고 중주국의 눈치를 살피는 사대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음을 개탄하면서, 「북한측은 하루빨리 주체 의식을 가지고 남북한체육회담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대통령은 북한 당국의 비인도적 폐쇄성으로 말미암아 이산가족들의 안부확인파 재회마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북한 당국이 인도주의 정신에 눈뜨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아울러 중공과 소련 등 우리와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헤어진 가족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관련국들이 협조해 줄 것을 희망했다.

끝으로, 전대통령은 「통일에 대한 체념과 회의는 이제 자신과 희망으로 바뀌었으며,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민족적 역량은 안정과 화합을 토대로 한 국력신장과 더불어 부가된」 지금 「40년의 분단상황에 지쳐 통일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역사와 민족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 모두 화합이 분열을 이기고 대화가 폭력을 이기며 평화가 전쟁을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다함께 통일을 향한 전진의 발걸음을 가속화 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진의중국무총리가 대독(서울 지역회의, 기타 지역회의는 지역부의장이 대독)한 전두환대통령의 치사 전문은 다음과 같다.

친애하는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여러분

본인은 조국통일의 구심체인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오늘 뜻깊은 창설 삼주년에 즈음하여, 겨레의 통일 의지를 내외에 선장하는 지역별회의를 갖게 된 것을 온 국민과 더불어 충심으로 경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성업완수의 선봉으로서 나라 안과 밖에서 통일 의지와 역량을 강화하는 데 봉사와 희생 을 바쳐온 자문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치하를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값진 노력에 힘입어 우리는 단절과 분열의 시대를 청산하고 화합과 통일의 시대를 건설하기 위한 튼튼한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나왔습니다.

그리하여 통일에 대한 체념과 회의는 이제 자신과 희망으로 바뀌었으며,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민족적 역량은 안정과 화합을 토대로 한 국력신장과 더불어 배가 되었습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우리가 민족통일의 지상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명심해야 할 것은, 통일은 처음도 평화이며 마지막도 평화여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폭력이 동족의 화합을 가져올 수 없으며 전쟁이 민족의 행복을 가져올 수 없음을 우리 겨레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통일은 우리 민족의 문제이며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역량에 의해서만 참다운 결실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족의 문제를 남의 힘에 의탁하는 것은 민족자존에 대한 모독일 뿐 아니라 민족주체성을 저버린 사대주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족의 화합을 통한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제의한 것은 우리의 자주적인 힘으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공산집단은 이러한 합리적인 대화제의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동족살상의 폭력만행을 자행함으로써 평화와 통일을 부정하고 전쟁과 분열을 추구하는 반민족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랑군만행에 대한 단 한마디의 시인이나 사과도 없이 기만과 위장술책을 공공연하게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측은 폭력과 분열노선을 버리고 하루빨리 민족양심과 주체의식을 회복하여 성의를 가지고 남북대화에 응함으로써만 민족적 죄과를 얼마간이라도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한간의 체육교류와 각종 국제대회에의 단일팀출전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수차 북한측에 내놓았던 제의였습니다.

우리는 최근의 남북한체육회담을 통하여 다가오는 「로스엔젤레스」 올림픽에 남북한이 단일팀으로 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성실한 자세로 회담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체육교류와 올림픽 단일팀 출전을 성사시키는 데는 관심도 성의도 보이지 않고 회담을 파괴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북한측의 이러한 태도는 처음부터 단일팀을 구성할 의사가 없었음을 드러낸 것이며, 나아가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참가문제를 둘러싸고 종주국의 눈치를 살피는 외세추종의 사대적인 작태라는 비난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측이 자신의 의사를 가진 진정한 주체로서 성의를 가지고 있다면 단일팀구성을 위한 체육인회담을 기피하고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은 남북한간의 체육교류가 성사되어, 「로스엔젤레스」 올림픽은 물론 이년 후로 다가온 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도 민족단일팀을 구성하여 우리 민족의 우애와 화합을 세계에 선보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측은 하루빨리 주체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우리의 정당한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남북한체육인회담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의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또 한가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산가족의 안부확인과의 재회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같은 인간으로서의 기본도리라는 것입니다.

북한당국의 비인도주의적 폐쇄성으로 말미암아 혈육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이산가족들의 비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온 세계인은 매우 안타까와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인도주의 정신에 눈뜨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아울러 중공과 소련 등 우리와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헤어진 가족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관련국

들의 협조가 있기를 본인은 바라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통일은 민족의 소명이며 그 성원인 우리의 의무입니다.

누천년을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가 40년의 분단상황에 지쳐 통일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역사와 민족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업에 정열을 바쳐 나간다면 통일은 멀지않은 장래에 기필코 실현될 것으로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문위원 여러분은 모든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선진조국을 창조하고 우리의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데 견인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 화합이 분열을 이기고 대화가 폭력을 이기며 평화가 전쟁을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다함께 통일을 향한 전진의 발걸음을 가속화시켜 나갈 것을 바라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84년 6월 5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의장

대통령 전두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창설 3주년에 즈음한 전두환대통령의 치사에 담긴 내용은, ◎ 평화통일 원칙의 재확인과 남북한 직접대화의 촉구, ◎ 남북체육회담에 임하는 북한측의 성실성회복 촉구, ◎ 이산가족의 안부확인회와 재회실현을 위한 북한 당국의 인도적 조치 및 중공·소련 등 관련국들의 협조 기대표명 등이다.

#### 평화통일 원칙의 재확인회와 남북한 직접대화의 촉구

「통일은 처음도 평화이며 마지막도 평화」라고 강조한 평화통일 원칙은 1984년 1월 17일 제 120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폭력에 대한 증오와 평화에 대한 신념은 최고의 신앙」이며, 「통일의 제1조는 평화」이어야 한다고 밝힌 바와 같이 최고 통치자의 신념이며, 또한 우리 통일정책의 기초이기도 하다.

전대통령이, 1981년 1월 12일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제의, 동년 6월 5일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제의, 1982년 1월 22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제시 등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제의를 내놓은 것도 이러한 일관된 통일정책의 표현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이러한 합리적인 대화제의에 무성의할 뿐만 아니라 반민족적 폭력노선을 고수함으로써 「버마」사건과 같은 동족살상의 만행을 자행하고, 이러한 만행에 대하여 세계로부터 비난과 규탄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범죄행위를 솔직히 시인·사과하기는 커녕 기만과 호도로써 대남비방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전대통령이 이 기회를 통해서 통일의 실현주체는 남북한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폭력과 분열노선을 버리고 하루빨리 민족양심과 주체의식을 회복하여 성의를 가지고 남북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 것은, 그러한 대화를 통하여 북한의 그릇된 자세를 시정하고 평화통일을 달성하려는 우리의 꾸준한 노력의 표현이라 하겠다.

## 남북한 체육회담에 성실한 대좌측구

북한측이 남북한 체육회담에 임한 것도 단일팀구성이라는 미명 아래 대남화해 제스처를 세계에 보임으로써 테러집단이란 낙인이 찍혀있는 외교적 고립으로부터 헤어나 보자는 속셈과 아울러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 단일팀구성 실패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시킴으로써 그들의 동 대회불참을 정당화시키려는 저의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 소련의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 불참 결정에 동조키로 이미 선언하고서도 체육회담에 나서는 그들의 표리부동한 행동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등 민족최대의 제전을 앞둔 마당에 북한측은 하루빨리 민족적 양심을 회복하여 성실히 대좌함으로써 기필코 민족단일팀을 구성하여 우리 민족의 우애와 화합을 세계에 선보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이산가족 안부확인과 재회를 위한 북한의 인도적 조치촉구와

#### 중·소 등 관련국의 협조 기대표명

이산가족의 안부확인과 재회는 재언할 필요도 없이 이산가족의 한결같은 비원일 뿐만 아니라 이의 실현은 남북한간의 긴장된 상황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와 이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족적 유대를 회복·강화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이를 계속 외면하고 있다.

특히 중공이 우리 이산가족 재회문제에 성의를 보이고, 이의 실현을 위해 협조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북한측은 이 문제에 대하여 미동도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기 마저한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대통령이 북한 당국에 대하여 인도주의 정신에 눈길을 돌릴 것을 촉구하고, 중공과 소련 등에 대하여 그 곳에 거주하는 동포와 국내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희망한 것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진진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대통령의 치사에 이어 정부측의 「통일정책추진과 북한의 동향」 보고가 있었으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각 지역회의별로 결의문 채택이 있었다.

채택된 결의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지지 및 「폭력에 의하지 않는 민족통일」의 재확인
- 폭력혁명노선의 포기과 긴장격화 책동의 즉각 중지 요구
- 「3자회담」 방식 배격
- 「랭군」사건에 대한 시인·사과요구 및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개촉구
- 통일정책의 국민계도와 지역사회발전에의 헌신다짐

## 2. 국내 주요 반응

국내 주요 일간신문들은 「지난 3년 동안 평화자문회의가 지역협회의 단위로 여러 형태의 모임을 갖고 평화통일 의지를 굳히며 통일정책과 이의 추진에 관한 지혜를 모으는 데 주력」한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이번 지역회의는 최근 격동을 거듭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정세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초당적이며 범국민적인 평화통일 의지를 내외에 다시 한 번 높이 선양함에 그 뜻이 있는 것으로 논평했다.

또한, 전대통령이 동 치사에서 재천명한 「평화통일원칙」과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등 남북대화의 재개를 촉구한 데 대하여 적극적 지지를 표명하고, 「이산가족의 안부확인과 재회의 길마저 북한측의 비인도적 폐쇄성으로 인해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고 반문하면서 「우리는 이럴수록 우리의 평화의지를 선양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주체역량을 튼튼히 배양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며, 안정과 화합, 투철한 사상무장으로 안보의지를 더욱 결속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각 신문들이 평화자문회의 제1차 지역회의에 대하여 논평한 글은 다음과 같다.

### 평화갈구하는 통일의지 확산 -안정·화합의 구심역인 평통지역회의-

경향신문(1984. 6. 5)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5일로써 창설 3주년을 맞았다. 평통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지역별로 1차지역회의를 열고 범국민적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 이를 내외에 선양함으로써 우리의 통일과업 완수에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우리는 먼저 이 뜻깊은 날을 맞아 그동안 국내는 물론 해외 곳곳에서 우리의 평화통일 성취를 위한 굳건한 의지를 하나로 결집하는데 기여해온 1만여 자문위원들의 노고에 격려와 성원을 보내고자 한다.

지난 3년동안 평통자문회의는 지역협회의 단위로 여러 형태의 모임을 갖고 평화통일 의지를 굳히며 통일정책과 추진에 관한 지혜를 모으는데 주력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자문위원들이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남달리 헌신해온 눈부신 활동은 통일정책의 국제적 지지기반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러한 자문위원들의 활동은 북한공산집단이 내세우고 있는 통일정책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모순에 찬 것인가를 똑바로 인식할 수 있게 한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민족자결의 원칙과 민족전체의 자유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해 이룩되어야 하며 또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신념이다.

전두환대통령이 평통 3주년에 즈음한 치사에서 『통일은 처음도 평화이며 마지막도 평화여야만 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통일원칙의 재확인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맥락위에서 전대통령은 이미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을 제의했고(1981년 1월 12일) 곧이어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 제의(1981년 6월 5일)와 「민족화합민주 통일방안」(82년 1월 22일)을 제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전대통령의 이같은 적극적이고도 포괄적인 제의에도 불구하고 북한공산집단은 여전히 6천만겨레의 통일염원을 외면하고 있다. 더구나 그들은 우리의 합리적인 대화제의를 거부하는데 그치지않고 버마살상만행과 같은 동족살상의 반민족적 작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이러한 폭력속성을 은폐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합리화하려는 속셈으로 이른바 「3자회담」을 열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우리측이 체육교류와 올림픽 단일팀 출전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 역시 북한측의 고의적인 회담결렬책략으로 유산되고 말았다. 겉으로는 단일팀을 구성, LA올림픽에 참가하자면서 끝내는 소련의 불참결정에 동조, 순수한 스포츠정신을 외면한 것도 그들의 사대주의적인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다. 이산가족의 안부확인회와 재회의 길마저 북한측의 비인도적 폐쇄성으로 인해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럴수록 우리의 평화의지를 선양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주체역량을 튼튼히 배양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안정과 화합, 투철한 사상무장으로 안보의지를 더욱 결속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안정과 화합의 구심역」인 평통자문위원들은 금년도 1차 지역회의를 계기로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적 의지를 확산시키는데 계속적으로 분발하고 정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

### 평통 3돌과 지역회의

서울신문(1984. 6. 5)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평통) 제1차 지역회의가 오늘 서울을 비롯한 국내 13개 시·도 및 미주·유럽·동남아 등 해외 11개지역에서 일제히 개최된다.

평통이 발족 3돌을 맞은 오늘을 기념하여 전세계적 범위에서 처음으로 갖는 이번 지역회의는 최근 격동을 거듭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정세와 관련, 우리 한국민의 하나로 크게 결집된 초당적이며 범국민적인 평화통일 의지를 온 세계에 다시 한 번 높이 선양함에 그 뜻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 점에서 먼저 우리는 이 지역회의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냄과 아울러 이를 계기로 국내의 1만여 평통자문위원들이 평화통일 주도세력으로서의 긍지와 사명의식을 각자의 마음속에 다시금 굳게 가다듬어 주길 충심으로 바라코자 한다.

돌이켜보면 지난 1981년 6월 5일 전두환대통령의 역사적인 「6·5대북제의」 천명과 때를 같이 해서 출범한 평통이 그동안 쌓아온 활동실적은 참으로 눈부신 바 있다. 무엇보다도 각계 직능을 대표하는 자문위원들이 저마다 소속 직능분야에서 화합과 안정과 국력신장을 통한 민간통일역량 구축의 선도적 역할을 꾸준히 해온 업적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침이 없다.

또한 국제학술회의와 통일연수 등 각종 연구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으며 특히 이러한 활동을 토대로 한 대정부 정책자문이 지난 1982년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과 「20개시범실천사업」 등 정부의 중요한 통일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긴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는 사실도 특기할 업적이라 하겠다.

이제 발족 3돌을 맞은 평통은 이같은 그 간의 업적을 자랑스럽게 자부하는 가운데 앞으로의 소임수행을 위해 가일층 비상한 분발과 노력을 다짐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대통령이 지난 1일 평통자문위원 4백여명을 청와대에 초치, 만찬을 베푼 자리에서 당부한 바를 자문위원들 모두가 깊이 명심해야 하리라고 믿는다.

전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주변정세가 혼미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체의식과 자주역량을 더욱 확고하게 가속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모두 북한공산집단과의 정치사상전에 대비, 튼튼한 정신무장을 갖추고 통일과업을 각자의 생활에서 실천하는 통일역군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며 특히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문위원 여러분은 지역과 직능분야에서 통일의 구심점으로서 안정과 화합의 핵심역할을 다하고 계도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는 격동하는 주변정세를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 나갈 시대적 책임이 우리에게 있으며, 그러한 국민적 의지와 역량을 굳건히 다져나갈 막중한 책무가 평통에 맡겨져 있다는 일깨움인 것이다.

평통이 앞으로 이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국내외 모든 국민에게 통일전망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둘째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 공산집단의 위장평화공세를 철저히 분쇄함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정치·경제·사회·군사적 힘이 압도적 우위에 있고, 우리의 평화통일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여론이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대세임을 북한집단이 정확히 깨닫는 그 때에 이르면 통일은 우리앞에 성큼 다가설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의 평통은 바로 그 날을 앞당기는 선도적 기수로서의 소임을 어김없이 완수해주길 거듭 당부해 마지않는다.

자주와 평화와 통일의 길  
-평통지역회의의 다짐을 보고-

조선일보(1984. 6. 6)

통일정책추진구조와 기반이 그동안 괄목하게 달라지고 있다. 1970년대의 통일정책추진은 남북 대화의 실현으로 활기를 띠기는 했으나, 통일정책의 논의-입안과 추진세력이 극히 일부층에만 국한돼 있다는 비난이 없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1980년대의 정책구조는 그와는 대조적으로 넓게 활성화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그 핵심체가 되고있는 것이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평통)이다. 평통은 통일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헌법기관으로, 제5공화국 헌정과 함께 출범한 초당적 -범국민적 통일추진체이다. 올해로 발족 4년째를 맞은 평통은 연륜이 앞음에 비해서, 소임의 본지에 접근하는 활동의 밀도를 성실하게 심화시켜 왔다.

지난해 발족 2주년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통일정책 구조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면서, 각계 대표들이 공개되어 처음으로 통일정책에 관한 독자적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평통의 사명-기능-성격을 부각시켰다. 최근의 남북체육회담에 임해서도 평통의 소관 회의체들은 활발한 건의와 자문으로 우리측 회담운영에 다대하게 기여하여 그 역할의 비중을 돋보여 주기도 했다.

이와같은 성장과 실적을 간직하고 평통은 5일 출범 3주년을 기념하여 제1차 지역회의를 가졌고, 각 시-도별 및 11개 해외지역 회의에 1만 자문위원이 참집, 평화통일을 밀고 나가는 새로운 결의들을 다졌다. 자문위원들은 우리측이 집대성해서 내놓은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논의에 북한 당국자들이 호응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의 위장평화술책인 소위 3차회담 방식을 단호히 배격하고 남북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한 체육-문화-예술분야의 교류-협력실현을 열망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특히 평통의장인 전두환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민족자주와 자결정신 및 평화의 의지와 신념으로 통일의 걸음을 가속화시켜 나가자고, 자문위원들의 사명과 활동을 고무하면서, 남북간에는 물론, 중공과 소련 등 관련국이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자유 왕래 실현에 협조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표명함으로써 우리의 자주평화통일 이념과, 인도주의에 바탕한 주변지역과의 이해증진 조성 등, 우리의 평화이미지를 재천명했다.

이른바 3차회담책략에 연결되고 있는 체육회담을 통해 우리는 최근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노선의 일관된 책동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거니와, 저들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작금의 주변 강대국들의 동태가 한반도문제를 공개 또는 비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심상할 수 없는 조짐으로 돌아가고 있음도 보고 있다.

흔히 오늘 우리가 처해있는 국면을 한말의 그것에 비유하는 지적이 있지만, 이러한 지적이 결코 틀린 것일 수 없는 경각심의 환기를 주변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한말의 비운이 구심점을 상실하고 지표를 갖지 못했던 민족의 자주역량 빈곤이 가져온 쓰라림이었다 한다면, 오늘의 우리

가 주시하고 향해야 할 길은 명백하다. 그 행로의 대열 앞에 서야 할 평통자문위원들의 사명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소이다.

## 제2부 남북체육회담

### 1. 남북체육회담의 성립

「버마」사건등 북한당국이 자행한 일련의 대남도발로 남북한간에 과거 어느 때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측은 1984년 3월 30일, 정주영 대한올림픽 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낸 김유순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제23회 국제올림픽 경기대회와 그후 계속 있게 될 아시아 및 세계선수권대회에 북과 남이 유일팀을 구성하여 출전」할 것을 제의하고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북과 남의 올림픽위원회의 부책임자급을 단장으로 하는 쌍방체육대표단이 관문점에서 회담을 가질 것을 희망」해 왔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북한당국이 버마암살폭발 만행을 자행하고도 이를 시인·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속에서 북한측의 체육회담 제의에 근본적인 의문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 우리측이 「로스엔젤레스」올림픽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경기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해서 출전할 것을 수차례 걸쳐 제의해 왔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다음과 같은 대북서한을 4월 2일 북한측에 전달하고 남북체육회담 개최에 동의하였다.

조선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겸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김유순 귀하

나는 귀하의 3월 30일자 편지를 받았습니다.

작년 10월 9일 우리의 국가원수 시해를 노려 우리의 외교사절을 집단 살해한 「버마」암살폭발 만행에 대해서 이번 귀하의 편지에서도 한마디 언급이 없다는 것을 나는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버마」암살폭발만행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은 물론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요 인류의 평화와 단합을 지향하는 올림픽 정신에 크게 위배된 행위입니다.

비록 체육인 간이라 하더라도 같은 민족을 집단 살해한 이러한 불법적이고 야비한 범죄행위를 범한 데 대하여 사과하는 뜻을 표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버마」암살폭발만행에 대해서 북한당국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해 왔으며 이를 지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측이 남북한 체육인 간의 회담을 제의하고 나선데 대해서는 현안의 모든 문제와는 별도로 순수한 스포츠 정신에 따라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릴 제23회 올림픽대회와 그 후의 각종 세계선수권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자는 것도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촉구했던 것입니다.

1981년 6월 19일 조상호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1984년 「로스엔젤레스」올림픽대회와 1982년 뉴델리 아시아 경기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자고 제안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남북 체육대표회담을 열자고 귀측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로스엔젤레스」올림픽대회를 3년 앞두고 남북한 단일팀을 만들어 공동출전하자고 제안했을 때 북한측이 주저없이 호응해 올 줄로 믿었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1982년 2월 1일 「20개 시범실천사업」을 북한측에 제시하면서 남북한간에 친선 교환경기를 개최하고 각종 국제경기에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할 것과 체육인 간의 상호 친선방문을 실시할 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이같은 모든 제의는 민족화합의 차원에서 제의한 것이며 따라서 귀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귀측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1984년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경기에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자고 했던 이같은 우리 제의에 귀측이 뒤늦게나마 호응해 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개최될 1986년 아시아 경기대회와 1988년 올림픽대회에도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남과 북은 1982년 뉴델리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각기 3위와 4위를 차지했습니다. 비록 종합우승의 영광은 얻지 못했지만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실증한 것입니다.

만약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뉴델리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했었다면 종합우승도 바라볼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서독과 동독이 1950년대에 단일팀을 구성하여 올림픽대회에 출전하는데는 1951년 6월부터 1956년 11월까지 5년여에 걸쳐 200여회의 회담이 개최되어야 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1984년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는 말할 것도 없고 1986년 아시아 경기대회와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를 목표로 하더라도 그 준비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장 4월부터라도 서울과 평양등에서 각종 친선경기를 교환개최하여 단일팀구성을 위한 남북상호의 의지를 대내외에 강력히 표명할 뿐 아니라, 앞으로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대회에 단일팀으로 참가할 선수들의 선발을 조금도 지체없이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체육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회담을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남북간의 직통전화를 개통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의합니다.

첫 회담일시 : 1984년 4월 9일 오전 10시

회담장소 : 관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

대표단 구성 : 남과 북의 체육회 및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각 4명의 대표

- 회담의제 : 1. 1984년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 1986년 아시아 경기대회,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를 비롯한 앞으로 있을 국제체육경기 대회에 참가할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문제  
2. 남북 체육교류를 실시하는 문제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1984년 4월 2일

대한체육회 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정주영

한편 북한측은 4월 6일자 대남서한을 통해 북한올림픽위원회 김득준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박무성 부서기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로 그들의 대표단을 구성하되 첫 회담에는 부단장을 책임자로 한 4명의 대표를 파견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이에 대해 대한올림픽위원회도 4월 7일자 대북서한을 통해 김종규 대한체육회 부회장겸 대한올림픽위원회부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의 대표명단을 발표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제1차 체육회담이 1984년 4월 9일 오전 10시 관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게 되었다.

쌍방 대표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대한체육회 대표단

수석대표 김종규(대한체육회 부회장겸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대 표 김종하(대한핸드볼협회 회장겸 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  
" 이종하(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위원)  
" 임태순(대한축구협회 이사겸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 남정문(대한탁구협회 이사겸 대한체육회 이사)

북한측 대표단

대표단장 김득준(북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부 단 장 박무성(북한올림픽위원회 부서기장)  
대 표 김세진(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겸 북한체육기술지도위원회 부위원장)  
" 서명호(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  
" 석태호(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

## 2. 남북체육회담과 우리의 입장

남북쌍방은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에 단일팀을 구성해서 출전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세차례의 회담을 가졌다.

동 회담은 형식상으로는 지난 3월 30일 북한올림픽위원회 김유순위원장이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남북체육인회담을 제의함으로써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남북대화과 관련하여 남북한이 제기하는 어떠한 문제도 대화를 통해서 협의·해결해 나간다는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기본 입장을 견지해 왔다.

또 이러한 일관된 입장에 입각하여 1981년 6월 19일 조상호 당시 대한올림픽위원회위원장겸 대한체육회장이 대북성명을 통해 「1984년의 제23회 올림픽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것과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라도 1982년의 제9회 아시아 경기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경기대회에 단일팀으로 참가」 할 것을 제의하고, 이를 위해 남북의 체육인대표들이 조속한 협의를 가질 것을 촉구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측에게 이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조상호 전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1981년 7월 27일과 동년 8월 27일 두차례에 걸쳐 대북성명을 발표하고 1982년 뉴델리 아시아 경기대회와 1984년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 및 각종 국제경기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해서 참가할 것을 촉구한 우리측의제에 북한측이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으며, 1982년 2월 1일 국토통일원장관의 대북 「20개 시범실천사업」 제에서도 각종 국제경기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해서 참가할 것을 제의하였다.

따라서 우리측은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를 불과 4개월 앞두고 단일팀 구성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기술상으로는, 시간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을 뿐 아니라 북한당국이 버마사건등 일련의 대남도발을 자행하고도 이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측 제의의 진실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일단 체육회담이 열리면, 거기서 버마사건에 대해 북한측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들이 진실로 체육회담을 추진할 성실한 자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고 체육회담에 나갔다.

이번 남북체육회담에 임하는 우리측의 기본입장은 다음과 같다.

### 국제체육경기대회 단일팀구성 참가

남북한간에 체육회담이 성공리에 추진되어 1984년 「로스엔젤레스」 올림픽경기대회와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 및 1988년 서울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체육경기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해서 참가할 수 있게만 된다면 우리 민족의 단합된 모습을 온 세계에 떨칠수 있게 됨은 물론, 개별적으로 참가할 경우보다 경기력을 월등히 향상시킴으로써 민족의 우수성과 기개를 더 한층 과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남북한은 지난 1982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9회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하였는데 당시 우리측은 28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였으며 북한측은 17개를 획득하였다. 남북쌍방의 금메달 수를 모두 합치면 45개가 되는데 이는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아시아지역경기대회에 출전할 경우에는 종합우승도 가능하리라는 사실을 예견케 해 주고 있다.

### 1986아시아경기대회와 1988서울올림픽경기대회 단일팀구성 참가

앞으로 2년 간격으로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1986년의 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의 서울올림픽

대회는 남북체육인간의 친선과 단합을 이룩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며, 또한 남북한간의 광범위한 교류와 협력의 길을 터놓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이들 두 국제경기대회가 모두 서울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해서 출전하게만 된다면 우리 민족의 기개를 한껏 드높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민족의 경사스러운 대축전을 보다 성의있게 준비하고 보다 훌륭한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하여 출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이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동서독의 단일팀구성 사례를 감안해보더라도 남북한이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에 단일팀을 구성해서 참가하는 문제를 준비하려면 기간이 결코 넉넉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남북체육교류의 실시

또 남북체육교류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할 단일팀의 선수선발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쌍방체육인간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나아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화합을 이룩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세계의 모든 체육인들이 이념과 체제의 장벽을 넘어서 접촉과 교류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남북한 체육인간에는 같은 민족이면서도 아무런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남북한체육인들이 마음놓고 접촉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상호문호를 개방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 3. 남북체육회담의 경과

#### 가. 제1차 회담

제1차 남북체육회담이 1984년 4월 9일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려 2시간 25분간 진행되었다.

이 회담에는 북한측 사정에 의해 남북쌍방에서 각기 4명의 대표들만 참석하였다. 우리측에서는 김종규 수석대표를 비롯하여 김종하, 이종하, 임태순 등 4명의 대표가 참석하였으며(남정문대표 불참), 북한측에서는 단장 김득준이 불참한 가운데 부단장인 박무성과 김세진, 서명호 및 석태호 등 4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첫 회담에서 우리 대표단은 북한당국이 자행한 「버마」 테러사건과 최은희·신상옥 납치사건이 남북한간의 긴장과 대결을 격화시키는 중대한 도발행위이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남북의 체육인들이 마음놓고 접촉하고 협력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북한측이 이에 대해 시인·사과하고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들에 대해 북한당국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은 체육회담에 임하는 북한측의 성실성·신뢰성에 관계될 뿐 아니라 장차 남북한 체육선수들이 국제경기에 공동으로 참가하거나 단일팀 구성을 위한 선수선발을 위해 남북한을 왕래하면서 경기를 갖게 될 때 그들의 신변안전과도 직접 관련되는 문제임을 역설하였다.

우리측은 그간 대한민국이 남북한간의 체육교류와 국제경기에 단일팀을 구성해서 출전하는 문제를 누차에 걸쳐 제의해 온 사실을 상기시킨후 1984년도의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는 말할 것도 없고 1986년의 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를 목표로 하더라도 단일팀구성을 위한 준비기간이 결코 넉넉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4월부터라도 쌍방지역에서 각종 친선경기를 교환·개최하여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상호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상과 같은 기본입장에 입각하여 우리측은 회담의제로써,

첫째, 1984년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를 비롯한 앞으로 있을 국제체육경기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하는 문제와

둘째, 남북체육교류를 실시하는 문제 등 2개항을 제시하고, 우선 의제 1항의 국제경기에 참가할 단일팀 구성과 관련하여 7개항의 구체적 제안을 하였다.

#### 1. 선수 선발 문제

- 가. 선수 선발은 종목별 선발전을 통하여 가장 우수한 선수를 선발한다.
- 나. 선발전은 서울·평양 등 남북한 지역에서 번갈아 개최한다.
- 다. 세부 사항은 분야별로 위원회를 두어 결정한다.

#### 2. 선수 및 임원단 구성문제

IOC현장 등에 준거하여 쌍방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3. 선수 훈련 문제

- 가. 선발된 선수들의 훈련을 위하여 남북의 기존시설을 최대한 이용하되 필요시에는 비무장지대내에 공동경기장 시설을 마련한다.
- 나. 훈련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쌍방 경기단체간의 합의에 따른다.

4. 선수단 경비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5. 단기

오륜표지 밑에 「로마」자 「KOREA」를 표기한다.

6. 단가

「아리랑」으로 한다.

7. 선수단 호칭

호칭표기는 「KOREA」로 하며, 우리말로는 「대한」으로 부르기로 한다.

이날 첫 회담에서의 우리측 수석대표 발언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전체 체육인과 온겨레의 염원을 높이 받들고 그동안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에 참가할 단일팀 구성문제와 남북한 체육교류문제를 누차 제의해 왔습니다. 1981년 6월 19일 우리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1984년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대회와 1982년 「뉴델리」 아시아경기대회에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할 것과 이를 위한 남북 체육회담을 빠른 시일내에 열자고 귀측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1982년 2월 1일 「20개 시범실천사업」을 제시하면서 남북한간에 친선교환경기를 개최하고 각종 국제경기에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할 것과 체육인간의 상호 친선방문을 실시할 것 등을 제의하였습니다.

이같은 우리의 제의에 귀측이 뒤늦게나마 호응해 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한 체육인들이 협의해야 할 문제는 1984년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 뿐만 아니라 1986년 아시아 경기대회, 1988년 서울 올림픽 대회를 비롯한 앞으로 있을 각종 국제체육경기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것입니다.

1986아시아경기대회와 1988서울올림픽대회는 모두 서울에서 열리는 것이므로 우리 민족의 기개를 드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남과 북의 체육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 마당에서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를 비롯하여 1986아시아경기대회와 1988서울올림픽대회에 보낼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하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합의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열리는 1986아시아경기대회와 1988서울올림픽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문제를 무엇보다도 중요시하고 착실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북한 체육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개최되는 올림픽과 국제경기에 출전시킬 단일팀 문제를 협의하는 이 자리에서 하물며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올림픽과 국제경기에 나갈 단일팀 구성문제를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계 모든 체육인들이 이념과 체제의 장벽을 넘어 서로 개방하고 교류하고 있으나 남북한의 체육인들끼리는 같은 민족이면서도 아무런 접촉과 노력도 갖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단절된 남북관계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라도 남북 체육교류를 실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남북 체육교류는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위해서 필요할 뿐 아니라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적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큰 의의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1986년 아시아 경기대회와 1988년 서울 올림픽 대회 준비를 지금부터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84년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대회는 말할 것도 없고 1986년 아시아 경기대회와 1988년 서울 올림픽 대회를 목표로 하더라도 그 준비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4월부터라도 서울과 평양 등에서 각종 친선경기를 교환·개최하여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상호의 의지를 대내외에 강력히 표명할 뿐 아니라, 앞으로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대회에 단일팀으로 참가할 선수들의 선발을 위한 남북한 체육교류를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남북한 단일팀이 구성되기 이전이라도 서울과 평양 등 남과 북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경기 대회에 서로 참가하게 되면 남북한 체육교류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며 단일팀 구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 체육교류를 발전시키고 국제경기에 단일팀을 파견하여 우리 민족의 우수한 기량을 세계에 뽐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수단에 대한 신변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버마」 암살 폭발사건과 최은희·신상옥 양씨의 납치사건은 우리 국민들과 전세계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같은 테러와 납치행위가 장차 우리 체육인들에게까지 그 피해가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측이 진정으로 단일팀 구성과 남북 체육교류를 바란다면 북한당국은 마땅히 이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앞으로 결코 이러한 동족살상과 납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내외에 명백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귀측의 회담에 성의가 있다면 수일내에라도 취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남북한 체육인들은 물론 남북의 온 겨레도 우리의 회담을 신뢰하고 성원하게 될 것입니다.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고 남과 북이 체육교류를 진전시키게 되면 남과 북의 체육인들은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같은 분위기는 남북의 각 분야에 급속히 확산되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39년간 우리 민족이 겪었던 전쟁과 대결의 쓰라린 고통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남과 북은 이런 긴장된 대결상태를 지속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민족화합의 대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하며 이에 우리 체육인들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우리측의 주장에 대해서 북한측은 회담벽두부터 『「버마」 사건은 우리와 관련이 없으며…… 이 문제를 들고 나와 우리와 결부시키는 것은 천만부당하다』, 『유일팀 구성을 논하는 이 마당에서 논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버마」 사건과 같은 정치문제를 개입시키는 것은 체육문제와 맞지 않다』, 『이 사건은 귀측이 날조한 것이다』라고 억지주장으로 일관하면서 우리측을 비방 중상하였다.

이러한 북한측의 무성의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은 끈이어서 회담운영 절차문제를 토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회담장소를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로 할 것에 합의

한 다음 체육회담용 남북 직통전화 개통 문제에 의견을 접근해 오는 기미를 보이다가 돌연 태도를 바꾸어 「버마」 사건과 최은희·신상옥 납치사건에 대한 우리측 발언의 취소를 요구하면서 회담을 방해하다가 일방적으로 회담장을 퇴장하였다. 우리측은 차기 회담일자만이라도 결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회피하였다.

제1차회담에서 북한측이 제안한 의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23차 올림픽경기대회와 그 이후에 진행되는 국제체육경기대회들에 북과 남이 유일팀으로 출전할 데 대하여

둘째, 북과 남이 체육분야에서 합작과 교류를 실시할 데 대하여

한편 이날 회담이 끝난후 우리측은 김종규 수석대표의 기자회견과 정주영 대한체육회 회장의 성명을 통해 첫 회담에서 보인 북한측의 불성실한 회담 자세와 북한측의 일방적인 퇴장으로 회담이 중단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체육회담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우리는 5년만에 모처럼 마련된 남북한 체육회담이 오늘 북한측의 무례한 퇴장으로 말미암아 허무하게 중단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 우리는 하루속히 남북한 체육회담을 재개하여 1984년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대회, 1986년 아시아 경기대회, 1988년 서울 올림픽 대회를 비롯한 앞으로 있을 국제체육경기대회에 참가할 남북단일팀 구성문제와 남북 체육교류를 실시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 본인은 금주중에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두 번째 남북한 체육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의내용은 추후 서한을 통해 전달할 것이다.
- 우리는 앞으로 남북한 체육회담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성의와 인내를 다하여 회담에 임할 것이다.

#### 나. 제2차회담

우리측은 4월 12일자 대북서한을 통해 북한측이 제1차회담에서 보인 불성실한 태도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제2차 남북체육회담을 4월 18일에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4월 14일자 답신에서 우리측 대표의 자격까지 시비하고 「더이상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을 데 대한 담보」를 요구하면서 우리측 제의를 거부했다.

이에 우리측은 4월 17일 재차 서한을 보내 회담에 임하는 북한측 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회담재개를 거듭 촉구함으로써 4월 30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제2차 회담은 쌍방 각기 5명의 대표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려 4시간 37분간이나 진행되었으나 북한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말미암아 의제토의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끝났다.

회담벽두부터 북한측은 제1차회담이 유산된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시키기에 급급하였다. 그들은 「버마」 사건에 대해서도, 시종일관 『조작극』이라고 강변하면서, 그것이 『체육외적 문제』이며 자기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는 틀에 박힌 변명을 되풀이 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의제문제와 관련하여 제1차회담때 그들이 내놓은 제안을 보다 구체화한 8개항의 단일팀 구성방안과 5개항의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단일팀 구성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이의 우선 합의를 주장함으로써 회담에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부각시키려는 데 부심하였다.

#### <단일팀 구성 방안>

- ① 선수선발 원칙과 방법
  - 가장 우수한 선수를 선발
  - 선발경기 장소는 남과 북의 지역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무장지대에서도 가능
  - 종목별로 남과 북의 선수 및 지도원 망라
- ② 선수들의 훈련
  - 남·북의 시설을 번갈아 이용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제3의 장소에서도 실시
- ③ 재정 및 조건 보장
  - 장소를 제공하는 측에서 부담하며 제3의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담
- ④ 선수단원
  - 선수단원수는 IOC현장과 종목별 연맹의 규약 등에 준하되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
- ⑤ 단일팀 명칭
  - 「고려」, 영어로도 「KORYO」로 표기
- ⑥ 단일팀 깃발
  - 흰색 바탕에 토색 한국지도를 그리고 그 밑에 영어로 「KORYO」 표기
- ⑦ 단가
  - 「아리랑」
- ⑧ 「유일팀 공동 사무국」 설치(관문점)
  - 단일팀 구성과 준비 등 실무문제 처리

####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단일팀 구성안>

- ① 참가 종목은 남과 북이 협의하여 결정
- ② 선수 선발은 5월 20일까지 완료
- ③ 선수 선발

- 선발 경기를 원칙
- 예선 경기를 통해 참가 자격을 받게 된 종목은 자격을 받은 팀이 모체가 되고 상대측선수들을 유입
- 기타 종목은 최근 국제, 국내경기 성적과 기록에 의해 쌍방이 추천하여 결정

④ 공동훈련은 6월 1일부터 출발하기 전까지 진행

⑤ 기타 문제들은 단일팀 구성방안과 종목별 대표들간의 협의에 의해 해결

이에 대해 우리측 대표단은 지난 첫회담에서 북측대표단이 일방적으로 퇴장한데 유감을 표시하고 남북체육회담을 중단시키지 않고 진전시키고자하는 일말의 의사라도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회담중단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려는 억지주장을 버리고 스스로 자행한 부당한 처사에 대해 자성하는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하였다. 의제문제에 있어서는 제1차 회담에서 우리측이 제안한 2개항의 의제가 사실상 북한측의 제안까지도 포용하고 있고 또 용어상의 표현도 더 분명한 만큼 우리측 안을 의제로 채택하는데 동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우리측은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대회가 시기적으로 촉박함을 지적하고 『단일팀 구성에 필요한 선수선발을 서울과 평양에서 지체 없이 번갈아 가질 것』과 분야별 위원회를 두어 선수 선발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즉각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우리측의 「버마」 사건과 관련한 요구가 회담의 전제조건인지의 여부를 먼저 답변하라는 등 부당한 발언으로 회담의 진전을 외면하였고, 급기야는 쌍방간에 상대방 내부분제와 체제에 대한 시비와 비판논쟁이 격렬하게 전개되어 회담분위기가 남북회담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제3차회담 개최여부와 회담일자 등에 관해서는 서한을 통해 연락하기로 하였다.

다. 제3차 회담

우리측은 5월 9일 대북서한을 통해 체육회담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하여 제3차회담을 5월 11일에서 14일 사이에 개최할 것을 희망하면서도 구체적인 개최일자는 북한측에 일임하고 회담진행도 북한측 의사를 고려하여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5월 12일자 답신에서 우리측이 「정치발언」을 철회하고 다시는 『회담장을 반공·반공화국 모략선전의 무대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백히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불응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5월 18일 재차 대북서한을 보내고 북측이 부당한 회담자세를 버리고 조속히 회담에 호응하여 쌍방의제를 토의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5월 25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제3차 회담에는 쌍방 5명의 대표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32분간 진행되었으나 북한측이 부당한 전제조건을 계속 고집하고 의제토의를 거부함으로써 1·2차 회담에서와 같이 체육문제 토의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끝났다.

특히 제3차 회담은 북한이 5월 24일 체코의 「프라하」에서 개최된 공산 11개국 체육관계자회담에 참가하여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불참결정에 가담했기 때문에, 회담에서 북측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은 주목의 대상이었다.

우리 대표단은 이 날 회담에서 첫 발언을 통해 「로스엔젤레스」 올림픽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박두하였으며 체육회담이 시작된지 한 달 반이 경과했는데도 회담에 아무런 진전이 없음을 지적하고, 북한측이 체육회담의 본 취지에 합당한 자세를 보일 것을 주장하였다.

이어 우리 대표단은 1, 2차회담에서 제의한 바 있는 2개 항의 의제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이의 토의에 들어갈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회담에서 의제 제2항과 관련하여 우리측이 새로 제시한 7개항의 체육교류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간에 교환경기를 개최한다.

남북쌍방의 체육회가 협의해서 종목을 선정하고 남과 북의 기존 체육시설을 사용해서 번갈아 가면서 경기를 개최한다. 물론 필요하다면 비무장지대내에 공동으로 경기장을 건설할 수도 있다.

둘째, 남북한이 개최하는 국내체육행사에 서로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셋째, 남북 쌍방간에 체육인들이 서로 왕래한다.

넷째, 남북 쌍방간에 체육에 관한 기술과 자료를 교환한다.

다섯째, 남북한 쌍방이 개최하는 체육행사를 포함한 체육활동과 시설 등에 관한 취재를 위해 기자들이 상호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남북 쌍방선수들의 전지훈련을 위해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일곱째, 남북 공동으로 체육강습회를 열고, 공동 부담으로 비무장지대내에 공동 체육시설을 건립한다.

그러나 북한측은 두차례 회담이 공전된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면서 두 개의 전제조건 즉,

첫째, 체육회담에서 정치적 발언으로 난관을 조성하고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 유일팀 출전을 방해한데 대해 인정하고 사죄할 것과

둘째, 앞으로 회담에 정치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고 또한 정치도발을 하지 않을 것을 담보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측의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의제토의를 거부하였다.

북한측의 이러한 태도는 공산국가들에 추종하여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에 불참한다는 방침을 미리 세워놓고 오히려 동 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으로 참가하지 못하게 된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시키고, 또 「버마」사건에 대한 시인·사과 요구가 체육회담에 난관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구실을 앞세워 앞으로 체육회담에서 우리측이 「버마」사건을 더 이상 추궁할 수 없도록 봉쇄하려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라. 남북체육회담의 전망

정주영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1984년 5월 29일 북한측에 전달한 서한에서 제4차 남북체육회담을 6월 1일 상오 10시 30분에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정위원장은 동 서한에서 제3차회담에서 보여준 북한측의 태도는 누가 보아도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단일팀 구성을 참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게한다고 지적하고, 회담에 임하는 북한측의 자세 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북한측은 우리측 제의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다가 뒤늦게 6월 1일 오후 4시에 보내온 편지에서 제3차회담에서 그들이 제기한 두가지 전제조건을 앞세워 제4차회담 개최를 거부했다. 이로써 온 민족의 여망과 회담성사를 위한 우리측의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으로 출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정위원장은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 참가선수 명단제출 마감일인 6월 2일에 즈음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부득이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에 개별참가가 불가피하게 된 상황을 밝혔다. 이어 정위원장은 체육회담의 전망에 대해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 개별참가에도 불구하고 『체육회담을 계속하여 앞으로 열릴 국제체육경기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문제와 체육교류 문제를 실시하는 문제를 협의·해결해 나간다는 지금까지의 우리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천명하고 북한측이 조속히 회담에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올림픽위원회는 6월2일 성명을 발표하고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에의 불참을 공식선언하였다. 북한측은 동 성명에서, 미국에서 반공·반사회주의 책동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는 환경에서는 『선수들의 신변안전이 담보될 수 없으며, 또 올림픽 개별참가가 민족 여망에도 배치된다』는 억지주장으로 그들의 불참을 정당화하려 하였다.

북한측은 또 올림픽대회는 『모든 나라 선수들이 그 어떠한 정치적 압력도 정신적·육체적 구속도 받지 않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는 곳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우리는 이것이 금후 올림픽 운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나서는 매우 절박한 문제라고 인정하면서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나라 민족 올림픽위원회들과 함께 공동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1988서울올림픽대회 방해에 온갖 힘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이로써 북한측은 당초 회담에 나온 그들의 목적이 남북한 단일팀구성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 정주영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 전문

나는 오늘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명단 제출에 즈음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IOC헌장 제30조에 의하면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각국의 선수명단은 대회개최 8주전까지 대회조직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7월 28일에 개막되는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늘까지 선수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한성을 고려하여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문제토의를 이미 오래전에 제의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1981년 6월 19일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를 약 3년 앞두고 동 대회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한 체육회담을 북한측에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그 후 3년동안 일체 침묵을 지켜오다가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를 불과 4개월 앞두고 또 참가선수 명단제출을 2개월 앞둔 지난 3월말에 와서야 우리측의 제의에 호응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같은 북한측 태도의 진실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서도 국제경기에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과시하고 단절된 남북간에 접촉과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일념에서 남북한 체육회담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러한 우리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북한측은 그동안 회담장에서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등 회담의 진전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다가 제3차 회담에서는 부당한 전제조건까지 들고나와 체육문제의 토의를 거부하였습니다.

더우기 북한측은 지난 5월 24일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공산 11개국 체육관계자 회의에서 채택한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불참선언에 가담하고서도, 그 이튿날 개최된 제3차 회담에서는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단일팀 구성문제를 주장하는 표리부동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제4차 회담을 개최하자는 우리측의 제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6월 1일 하오 4시에 보내온 편지를 통해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단일팀 구성이 어렵게 된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고 지난 제3차 회담에서 북한측이 제기한 2가지 전제조건을 고집함으로써 회담의 재개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4차 회담이 언제 열릴지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득이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선수명단을 개별적으로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북한 체육회담을 계속하여 앞으로 열릴 국제체육경기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문제와 체육교류를 실시하는 문제를 협의·해결해 나간다는 지금까지의 우리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2년 간격으로 연속해서 서울에서 개최될 1986년 아시아 경기대회와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를 비롯한 국제체육경기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으로 참가하고 남북체육교류를 실시한다면 남북한 체육인들의 친선과 단합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서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화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념에서 나는 남북한 체육회담이 하루빨리 재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측은 체육회담을 더 이상 불순한 기회로 이용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민족적 양심과 체육인다운 자세를 가지고 성실하게 회담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우리는 남북체육회담의 문호를 항상 개방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각에도 북한측의 성의있는 호응을 기대하면서 북한측이 긍정적인 자세로 회담장에 나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제4차 남북체육회담의 재개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측의 태도에 달려있다 하겠다.

#### 4. 회담에서 보인 북한측의 태도

1984년 4월 9일부터 국내외의 주시를 받으며 열린 남북체육회담은 우리측의 인내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5월 25일 제3차 회담을 마지막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이는 전적으로 북한측의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첫째, 「로스엔젤레스」올림픽대회에 파견할 단일팀을 구성하기에는 너무 촉박한 시기에 북한측이 회담을 제의해 왔다는 점

둘째, 회담진행에 북한측이 불성실·무성의로 일관했다는 점

셋째, 북한측이 의도적으로 난관을 조성하여 회담의 계속을 사실상 기피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 시기적으로 실현가능성 희박

북한측은 「로스엔젤레스」올림픽대회 참가선수 명단제출 마감일이 불과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지난 3월 30일 이른바 「로스엔젤레스」올림픽대회에 파견할 단일팀 구성을 위한 회담을 열자는 내용의 서한을 「제의」형식으로 보내왔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3년 전인 1981년 6월 19일 조상호 당시 대한체육회 회장의 성명을 통해 1982년 아시아경기대회와 1984년 「로스엔젤레스」올림픽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으로 출전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체육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의 금번 제의는 사실상 우리측 제의에 뒤늦게 동의해 온데 불과하다.

국제체육경기대회에 파견할 단일팀 구성은 바람직하고 또 당연한 것이기는 하나,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할 숏한 난관이 있으며 긴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한 때 단일팀 구성에 성공한 동·서독의 경우가 잘 입증해 주고 있다. 즉, 동·서독이 단일팀 구성을 위한 합의에 도달하는 데에는 5년 반이라는 긴 세월이 소요되었으며 그동안 가진 회담 횟수만도 200여회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는 이미 3년전에 이를 제안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이를 계속 외면해 오다가 대회가 임박해서, 단일팀 구성이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운 시점에 돌연 이를 역 제의하고 나섰다.

이러한 북한측 태도의 진실성에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우리측이 이에 응한 것은 「로스엔젤레스」올림픽대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열릴 「국제체육경기대회에의 남북한 단일팀 참가」와 「남북한간의 체육교류」를 실현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과시하고 단절된 남북간에 접촉과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일념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기대는 회담진행 과정에서 북한측의 불성실한 회담자세로 인하여 여지없이 무산되고 말았다.

#### 불성실한 회담자세로 일관

북한측은 회담장 내에서도 시종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였다.4월 9일의 첫회담에서는, 북한당국에 의하여 자행된 사실이 국제적으로 명백히 입증된 「버마」사건과 최은희·신상옥 납치사건이 「체육외적문제」라느니, 「자작극」이라느니 하는 적반하장의 망언을 서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분제에 대한 중상·비방을 거듭하다가, 급기야는 일방적으로 퇴장해 버리는 무례하고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은 북한의 오랜 상투적 수법이다.

○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124군 부대」 소속 31인조 무장특공대가 서울에 침입하여 청와대를 습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채 심멸된 도발에 대해서도 북한당국은 한동안 이를 시인·사과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를 대한민국 내부에서 일어난 이른바 「인민봉기」라고 강변했다.

○ 남북적십자회담이 시작된 직후인 1971년 9월, 북한최고당국자가 내린 이른바 「9·25교시」에 따라 남침용 땅굴을 파기 시작함으로써 대화를 무력기습 남침을 위한 속임수로 이용하려했고 끝내는 남북대화까지 중단시켜 그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려 했다.

우리측의 거듭된 회담재개촉구(4월 17일 재개 재촉구서한)에 마지못해 제2차 회담에 나온 북한측은 우리측 내부분제에 대하여 터무니 없는 중상·비방만을 거듭하고, 심지어 우리측 대표가 발언하는 도중에 성냥갑을 던지고 북한기자들까지 합세하여 기물로 책상을 두드리고 욕설을 퍼붓는 등 회담 분위기를 고의로 긴장시키고 살벌하게 만듦으로써 회담진행을 사실상 어렵게 하였다.

또 5월 25일에 열린 3차회담에서는 그 전날인 5월 24일에 이미 공산권에 동조하여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 불참하기로 결정하고 나온 북한측은 단일팀구성 문제와 체육교류문제를 토의하자면 우리측의 거듭된 제의를 외면하고 처음부터 우리측에 대하여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방해한 사실을 시인·사과할 것과 체육회담을 정치화하지 않을 것을 먼저 약속하라는 등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우리측이 받아들이라고 고집함으로써 체육회담을 고의적으로 결렬시켜 그들의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 불참을 정당화시키려는 저의를 분명히 하였다.

#### 회담의 기피·난관조성

북한측은 세차례의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 극히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였으며 끝내는 회담에 중대한 난관을 조성함으로써 모처럼 마련된 남북체육회담을 교착상태로 몰고 갔다.

그들은 제1차회담에서 우리측이 「버마」 사건과 최·신 납치사건에 대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체육회담에 성실한 자세를 보일 것을 요구한 데 대하여 정치적 도발이라고 트집 잡아 이를 취소치 않으면 회담을 계속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회담진전을 방해했고, 또한 제2차회담의 개최를 촉구한 우리측의 서한에 대한 북한측의 회신에서 적반하장격으로 우리측의 태도를 시정하고 정치적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백히 「담보」해야 회담을하겠다고 억지를 쓰고, 심지어 우리대표의 자격까지 시비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북한측이 우리측 대표의 자격을 시비한 것 역시 그간 남북대화 과정에서 북한측이 써온 상투적 수법의 하나이며, 1982년 2월 10일 이른바 「남북정치인연합회의」 제의시에는 우리측 대표단의 명단까지 일방적으로 지명하기도 하였다.

북한측은 제3차 체육회담에서도 부당한 두개의 전제조건을 고집하면서, 우리측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제토의를 거부하였으며 4차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 우리측 제의에 대해서도 여전히 전제조건을 관철을 고집하고 이에 불응함으로써 사실상 회담재개를 거부하고 있다.

## 5. 국내의 반응

대부분의 국내언론들은 북한측이 돌연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와 앞으로 있을 국제경기에 남북한이 단일팀으로 출전할 것을 제의해온데 대해 동 제의가 시기적으로 촉박할 뿐 아니라 북한측의 도발로 남북한 관계가 긴장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회담을 제의한 북측자세의 성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순수한 스포츠 정신에 따라 민족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 하면서 이를 환영하였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해외주요언론들도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에 단일팀으로 출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무리』 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해의 「버마」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제의를 흔쾌히 수락』 한 것을 우선 높이 평가하고, 『스포츠문제를 위요한 남북교류가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을 희망』 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이 세차례 회담에서 시종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다가 중국에는 회담결렬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면서 회담을 파국으로 몰고가자, 국내언론들은 평양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실패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측의 저의를 규탄하고 북한측이 민족화합의 정신에 입각하여 남북체육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남북체육회담에 대한 국내주요신문의 사실과 해외반응은 다음과 같다.

### 국내반응

#### 단일팀과 체육교류 -북한측의 진지성 있어야-

조선일보(1984. 4. 4)

최근 몇 년 사이에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우리에게 한 일들을 생각한다면 그들과는 어떤 종류의 대화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화해시켜보려는 우리의 노력은 포기되어 본 적이 없다.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민족사의 내일을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대한 올림픽 위원회 정주영위원장은 2일에도 남-북 단일팀 구성문제와 체육교류 문제를 다루기 위해 4월 9일에 회담을 열자고 제의했다. (중략)

평화와 통일의 문제는 정치-군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정서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체육교류야말로 상호간에 아무런 위험부담없이, 얼어붙었던 마음의 빙벽을 녹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일 수 있을 것이다.(중략)

남-북의 평화정착과 통일추구는 바로 이 시대의 역사적인 사명이며, 그 실천의 주도적인 역할을 우리는 기꺼이 담당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측이 이와같은 우리의 노력에 허심탄회하게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후략)

#### 남북 스포츠 교류

중앙일보(1984. 4. 3)

...(전략)...KOC제의대로 일이 풀려나간다면 남과 북은 앞으로 개최될 각종 올림픽과 국제대회에 출전할 한민족단일대표 구성을 위한 체육인회의가 9일부터 판문점에서 열리고 이 달안에 남북한 교환경기가 열리게 된다.

이것은 우리 겨레의 오랜 소망중의 하나다.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온 겨레가 목말라 기다려왔고 그것은 빠를수록 그만큼 더 좋은 현상이다.(중략)

우리는 북한측 자세에 대해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음을 솔직히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최근 제의해온대로 그들이 1984년 LA올림픽에 남북한 단일팀구성을 진실로 원한다면 왜 이제사 그같은 문제를 제기했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수년전부터 우리측이 그토록 열심히, 제의해온 것이 아닌가.

단일팀 출전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2개월안에 출전선수 명단을 제출해야 하기때문에 기일이 그리 넉넉하지는 못하다. 그러나 이것도 북한이 성의만 갖는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체육경기라 해도 그것은 최소한의 분위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아웅산 테러를 포함하여 북한의 무력도발이 계속됐고 이에 대해 평양측이 사후 수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특히 올림픽은 평화와 화합을 기본정신으로 하고있다. 올림픽 참가에 앞서 참전하는 모든 국가, 모든 인류는 이 두개의 정신을 존중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겸허한 자세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과연 북한이 그런 세계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평화와 화합의 자세가 되어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상의 두가지 문제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우리는 주시하고자 한다. 그런 접근방식은 북한의 저의를 읽는데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의 남북한관계 전망에도 주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후략)

당당한 「단일팀구성」 회신  
-정치적 흥정거리로 악용해선 안된다-

경향신문(1984. 4. 3)

남북단일팀구성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흥정거리로 악용될 수 없다. 그런 대전제 위에서 남북쌍방은 이 문제를 토의하는 자리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순수 스포츠 정신을 바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옳다. 만일 남북간에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모든 국제대회에 남북단일팀이 파견될 수만 있다면 스포츠적 성과는 말할 것도 없고, 한민족을 보는 세계인의 눈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희망적 관측위에서 우리는 지난 달 30일 북한측이 김유순 북한올림픽위원장 명의로 보내온 서신과 이에 대해 대한올림픽위원회(KOC)가 보인 발전적인 제의를 높이 평가한다.(중략)

따지고 보면 북한측의 이번 서신제의를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측이 누차 제의한바 있는 남북단일팀 구성제 의와 그 맥락을 같이하므로 우리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논리적으로는 북한측이 우리의 제의에 호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측은 1981년 6월 당시 조상호 KOC위원장이 1982년의 뉴델리 아시안게임때부터 모든 국제대회에 남북단일팀을 구성해서 참가토록 하자고 제의했고, 뒤이어 1982년 2월에는 통일무드조성의 방편으로 실현가능한 20개 시범실천사업을 북한측에 제시한바 있다. (중략)

북한측의 이번 제의는 LA올림픽을 불과 1달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하다는 느낌이 든다. 그나마 엔트리까지는 두달밖에 남아있지 않아 이 기간에 남북이 이 문제를 충분히 협의해 팀구성까지 끝낼 수 있을까는 지극히 의문이다.

그런 현실적인 핸디캡과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로지 민족화해라는 국민적 여망과 스포츠맨십의 순수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번 대좌에 흔쾌히 임하려는 것이다.(후략)

북의 성의가 문제다  
-우리의 단일팀 회담 제의에 붙여-

한국일보(1984. 4. 3)

...(전략)...남북한단일팀 구성을 위한 우리의 집념은 최근만 하더라도 지난 1981년 6월 당시의 조상호KOC위원장이 1982년의 뉴델리아시아경기대회부터 1984년의 LA올림픽등 모든 국제적 체육행사에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케 하자는 제의를 한바 있고, 이어서 1982년 2월에는 남북통일을 바라보면서 먼저 실현 가능한 20개시범 실천사업을 북쪽에 제시한 가운데에도 같은 내용으로 거듭 제의하였던 것이다. 그와 같은 우리의 제의에 대하여 북쪽에서는 이제까지 아무런 메아리도 없다가 이제야 단일팀 구성에 관한 우리의 거듭된 제의에 반응을 보인 것이다.(중략)

북쪽이 이렇듯 시한이 촉박한 이 시기에 단일팀구성에 응하겠다고 나온 것은 건전한 사고과정에서는 과연 그들이 단일팀구성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것인가를 헤아리기 어렵게 한다. 그것은 단일팀을 위한 최초의 남북관계자회담이 지난 날 수년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듭하고도 열매를 맺지 못한 쓰라린 역사가 생생하기 때문이다.(중략)

대한체육회와 KOC가 시간을 다투어 4월 9일에 남북체육교류를 실시하는 문제를 토의하자고 촉구한 것은 장가지풍을 과시한 적절한 제의라고 할 것이다.(중략)

이와 같은 아량있는 태도에 북쪽이 얼마나 진지한 자세로 회담제의에 응하는가를 우리는 지켜보고자하며, 우리의 체육관계자들은 유종지미를 기하는 회의진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격려한다.

#### 남북의 스포츠회담

서울신문(1984. 4. 3)

...(전략)...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북한측의 제의를 접수했을 때 북한측의 저의가 무엇인가하는 경계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북한측의 평화적인 대화제의 진후에는 번번이 예상치 못한 불상사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3자회담」을 제의해 놓은 직후에 세계를 충격속에 몰아넣었던 버마암살사건을 일으킨 북한측의 소행은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중략)

이번 북한측의 제의는 세계에서 외면을 당할만큼 실추된 그들의 국제적인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외교공세라고 세계의 여론이 논평하고 있거니와 우리들 역시 그러한 우려를 지니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뒤늦게나마 북한측이 제의해온 단일팀구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버마사건에 대한 깊은 상처를 결코 잊었기 때문은 아니다. 그 아픈 상처보다는 민족의 화합을 더욱 빠르게 바라기 때문인 것이다. 스포츠를 위해서 마주앉는 남북의 만남이 실마리가 되어 직통전화 가 다시 뚫리고 스포츠선수와 문화인이 오가며 남북으로 헤어져 사는 이산가족이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기 때문인 것이다.(중략)

정체육회장의 제안대로 당장 이달부터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경기가 열려 남북이 한핏줄을 이어 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세계에 뚜렷이 심어주게 되기를 열망한다.

그리하여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때도, 1988년 서울올림픽때도 한 조상을 모신 진한 사랑으로 북쪽에서 오는 「우리의 선수」들을 위해서 환영의 깃발을 흔들고자 한다. 목메이는 기쁨으로 아리랑을 함께 부르고자 한다.

남북의 힘과 사랑이 한 덩어리를 이루어 세계의 잔치를 치르게 될 날을 기다린다.

#### 판문점 스포츠회담

-남북단일팀구성 체육인교류등의 문 열도록-

동아일보(1984. 4. 3)

...(전략)...북한의 「체육지도위원회위원장겸 조선올림픽위원회위원장」 김유순 앞으로 보낸 정회장의 편지는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체육인의 염원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정회장의 편

지는 「버마」 암살폭파만행에 대해서 북한이 아직까지도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도 스포츠를 통한 민족화합의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략)

북한은 1979년 4월 평양에서 열렸던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2개월 앞두고 갑자기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제의하고 나섰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과 네차례의 회담을 관문점에서 연다음 단일팀 구성이 실패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한국팀의 평양대회참가를 봉쇄한 바 있었다.

그렇지만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단일팀 구성에 관해서는 서울측이 이미 3년전에 평양에 제안한 바 있었다. 뒤늦게나마 평양측이 그와같은 단일팀 구성제안을 받아들여 관문점회담을 제안하고 나섰으므로 서울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중략)

북한이 서울측의 제안을 모두 외면하고 있다가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4개월을 남겨놓고 갑자기 단일팀을 구성하여 출전하자고 제안한 저의를 헤아리기 어렵다. 그런면에서도 우리는 남북한의 대화밖에 없음을 감안, 이번 관문점 스포츠회담이 민족화합의 기틀이 되기 바란다. 남북한의 단일팀구성은 물론이려니와 남북친선경기 교환과 체육인교류등의 문이 하루속히 열려야 함을 촉구하는 바이다.

역시 북의 성의가 문제다  
-남북스포츠회담의 어이없는 결렬-

한국일보(1984. 4. 10)

북쪽의 성의를 문제시하면서도 로스엔젤레스(LA)올림픽단일팀구성을 위한 남북회담을 찬성하였던 우리는 9일 상오에 첫 대면한 이 회담의 결렬을 슬픈 일로 받아들인다. (중략)

정회장의 2일자 서한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버마암살폭발만행에 대해서 북한당국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해 왔으며 이를 지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쪽의 단일팀회담편지에 대해서는 현안의 모든 문제와는 별도로 순수한 스포츠정신에 따라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 인용한 정회장의 서한은 9일의 남북한 첫대면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었다. 따라서 김종규수석대표의 랭군사건 등 언급은 9일회담에 응한 평양측이 사전에 당연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로서는 의당 짚고 넘어갈 대목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측이 회의진행에 관한 기본법칙을 무시하면서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억지주장을 펴고는 일방적으로 퇴장함으로써 모처럼의 회담은 끝장을 본 것이다. 이에 비추어보면 평양측은 정주영회장의 9일 회담제의에는 표면상 응하는 형식을 갖추고 정회장의 제의에 분명히 표시된 바 회의진행의 첫순서에서 탈선함으로써 그들은 출발할때부터 『결렬』이라는 예정표를 짜고 회의장에 참석한 것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중략)

북쪽은 한 시 바빠 냉정을 되찾고 한민족이 단합한다는 하나의 상징이 될 것이 분명한 단일팀 회담의 장에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한 우리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

드러난 북측 「단일팀」 계약

서울신문(1984. 4. 10)

...(전략)...우리측이 이 회담의 개최를 제의한 것은 순수한 스포츠평화정신에 따른 민족화합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여망에 부흥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우리측의 기본입장은 이 날 회담에서 김종규수석대표(KOC부위원장)가 단일팀 구성에 관

한 7개항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음과 함께 북한측이 진심으로 단일팀의 구성을 바라고 있다면 온겨레의 분노를 자아낸 버마테러사건과 최은희·신상옥사건의 잘못을 인정하고 납치해간 두사람을 즉시 돌려보내야 할 것임을 강조한데서 명백히 밝혀졌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에 대해 소란과 일방퇴장으로 응답함으로써 처음부터 의심스러웠던 그들의 마각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다시말해 그들이 우리측의 단일팀구성 제의에 뒤늦게 동의하는체 하는 태도로 나온 것은 다음과 같은 음흉한 계략이 깔린 것이었음이 이제 분명해졌다고 하겠다.

첫째로 국제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 그것이다. 시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북한측이 로스엔젤레스 올림픽에 단일팀을 구성해 참가할 용의가 있다고 나선것은 국제사회에서 테러집단이란 낙인이 찍혀있는 자신의 외교적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한편 한미안보협력체제의 와해를 겨냥해 현재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3자회담」 제의에 타의가 없는 것처럼 선전하려는 정치적 위장평화공세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둘째로는 우리 한국팀의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참가를 저지하려는 데에도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측은 지난 1979년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때 불과 두달을 앞두고, 또 1980년의 제22차 모스크바 올림픽때도 대회를 반년밖에 남기지 않고 남북한 단일팀으로 참가하기 위한 회의를 열자고 제의해 옴으로써 결국은 우리 선수단의 대회참가를 불가능하게 했다.

이번의 「단일팀」 계략이 이와 똑같은 정략적 방정식에서 나온 것임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것이다.

우리는 국제사회를 기만하려다 오히려 자신의 과멸을 재촉할 뿐인 북한측의 이같은 태도가 시정될 것을 인내를 가지고 다시한번 기대해 보고자 한다. 그들이 제아무리 버마사건은 한국의 자작극이다, 최·신사건은 자진입북이다 등등의 거짓주장으로 국제여론을 오도하려 해도 모든 정보에 개방돼있는 국제사회는 절대로 속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처럼 실현된 남북체육회담을 계속 이어나가려면 북한측은 두사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서둘러 취함으로써 거래의 여망과 국제사회의 평화애호정신에 화답하는 성실한 태도를 의당 보여야 할 것임을 이에 재차 엄중히 촉구해 두는 바이다.

#### 남북단일팀의 꿈 무산

-체육회담에서의 북한측 퇴장을 보고-

조선일보(1984. 4. 10)

...(전략)...북한측은 무엇 때문에 회담을 결렬시켰을 것인가. 그 표면적인 이유는, 한국측 수석대표 김종규씨가 회담에서 한 기조연설이 못마땅하다는 데 있었다. 김대표는 자기의 연설에서 단일팀구성의 의의를 강조하는 한편, 4월부터의 서울평양간의 교환경기, 로스엔젤레스대회에 출전할 경우 단일팀의 단기, 단가 등 호칭까지 7개항을 제안했다. 여기서 김대표는 대화에 있어서의 북한측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촉구하면서, 버마의 암살테러사건과 최근의 최·신 두 영화인의 납북사건을 지적했다.

북한측이 회담결렬의 구실로 삼은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대목, 즉 버마테러사건과 두 영화인의 납북사건이다. 그것은, 그들이 그 어떤 말로도 도저히 해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흉악무도한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체육회담을 북한측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측은 이 사건들의 거론은 보류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보류하기에는 국민과 세계의 충격은 너무나 컸고, 특히 우리 국민들의 격분은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북한의 선전기구가 계속 랭군테러만행은 남쪽의 「자작극」으로 떠들고, 최·신의 납북에 대해

서는 함구무언하고 있는 뻔뻔스러운 작태 앞에서 우리 김대표가 그들이 사죄할것과 동족살상과 납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명백히 할것을 요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건들을 매듭짓지 않고 어물어물 넘어가는 한, 김대표의 말대로 단일팀이 구성 될 경우 우리선수들의 북한내에서의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김대표의 요구에 대해, 북한측은 여전히 랭군테러사건과 두 영화인의 납북은 해명못하고 우리측이 체육외적인 사안을 체육회담에 끌어들이려 한다고 우리측을 비방하면서, 우리측이 그런 요구를 「철회」하는 동시에 그런 요구를 한 데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면 회담을 할 수 없다고 회담장을 일방적으로 박차고 나가버렸다.

이로써 남북체육회담은 국민의 희망과 국제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게 깨어지고 말았다.<후략>

#### 남북스포츠회담의 중단

-북한측 일방적 퇴장 추태거두고 다시 나와야-

동아일보(1984. 4. 10)

...(전략)...판문점회담의 결렬과 살벌했던 회담장 분위기가 북한 대표들의 도발적 작태에서 빚어 졌다는데 우리는 더더욱 실망치 않을 수 없다. 서울측의 김종규수석대표가 『우리측 입장을 지금 부터 이야기하겠다』고 발언을 시작했는데도 북한측의 박무성대표는 더 큰 목소리로 자기측 기조 연설을 늘어놓기 시작함으로써 회의장을 수라장으로 몰아넣기 시작했다.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에 관한 한 최소한의 회담규칙이나 예의같은 것조차 지킬 필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드러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북한측대표는 「버마」 「아웅산」 묘소 암살폭발만행에 대해서 「북한이 하지않은 일이라는 것은 세살먹은 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니냐」며 「남쪽정부의 반대자들이 저지른 행동」이라고 생떼를 쓰기도 했다.(중략)

북한측은 결국 체육외적인 문제인 「버마」 사태등에 대한 발언을 취소하지 않는 한 다시 회의를 할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리며 일방적으로 퇴장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북한은 남북한단일팀구성을 위해 남북체육회담을 하자고 제의, 남한대표들을 불러놓고 그들이 일방적으로 퇴장해 버리는 추태를 연출했다.(중략)

남북체육회담이 성공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남북이 대결돼있으면 있을수록 남북의 접촉과 대화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다. 이런 의미에서 정주영대한체육회장이 내주중에 판문점에서 제2차 회담을 열자고 제안한 것은 민족화해의 차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북한측은 추태를 거두고 민족화합의 한마당에 즉각 나서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 약점있는 측이 일방퇴장한다

-남북체육회담 결렬은 북괴의 예정된 각본-

경향신문(1984. 4. 10)

한가닥 희망을 걸고 혹시 대화의 문이 열리지 않나하고 기대했던 남북체육회담이 불명예스럽게 끝나고 말았다. 이번 회담의 결렬은 전적으로 북한측의 예정된 각본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우리측 발언을 채 듣지도 않고 퇴장해 버린 북한측 대표들은 처음부터 진지한 자세로 나올 생각이 없었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어디까지나 순수스포츠정신을 바탕으로 체육회담에 임해야 함에도 상대방 발언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퇴장해 버린다는 것은 스스로의 약점을 노출시킨 것이며 무례하기 짝이 없는 대화자세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번 회담에 임하는 우리측 자세는 이런 북한측 태도와는 달리 매우 당당했다. 처음부터 선수 선발 문제를 비롯, 선수 및 임원 구성과 선수 관리, 경비, 단기, 단가 등 매우 구체성 있는 제안을 한 것만 보더라도 이 회담을 통해 오랫동안 막혀 있던 남북 대화의 길을 터보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북한측이 제의해온 대로 올림픽 위원회 부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파견한 것이라든지, 당장 단일 팀 선발을 위한 경기를 갖자고 제의한 것 역시 그러한 적극성을 대변한 것이다.

이런 우리측 태도에 반해 북한측은 어떠한가. 수석대표도 아닌 차석대표를 보냈는가 하면 단일 팀 구성을 제의해 놓고도 뒤에서 LA 올림픽 단독 참가를 교섭해온 것은 대화의 진실성을 처음부터 외면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북한측이 뒤늦게, 남북한 단일 팀 구성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부터 그 저의를 의심했다. 이렇다할 이유도 없이 우리측 제의를 묵살했던 그들이 돌연 남북한 체육 회담에 나섰다가 다시 일방적으로 회담을 결렬시킨 것은 내외 문제로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북괴 정권의 정서적 불안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중략)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은 체육 교류처럼 손쉬운 분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령 당장에 단일 팀이 구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한 자세로 체육 회담을 계속한다는 것은 긴장 완화와 민족 화합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임에는 틀림없다. 이번 체육 회담의 결렬이 북한측 불성실 때문이었지만 내주중에 다시 체육 회담을 열자고 제의한 대한 체육 회장의 대북성명은 우리측의 인내와 성의에 변함이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후략)

#### 체육 회담에 나오지 못할 약점

- 줄속한 「단일 팀 구성」 제의로 자승자박한 북한 -

경향신문 (1984. 4. 17)

... (전략) ... 북한측은 2차 회담을 갖자는 우리 측 제의에 대해 『정치적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백히 해야 회담장에 나가겠다』는 내용의 답신을 지난 14일 보내왔다고 정주영 대한 체육 회장 겸 대한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이 밝혔다.

북한측이 감히 입에 올린 「정치적 도발」이란 우리측이 9일의 1차 회담에서 랭군 테러 사건 및 최은희·신상옥 납치 사건을 들어 단일 팀 구성 시 우리 선수들의 신변 안전 보장 문제에 대해 언급한 대목을 가리킨다.

이 너무도 당연한 우리측의 문제제기와 신변 보장 요구를 「정치적 도발」로 몰아 붙이고 그것을 트집으로 회담 재개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나 다름이 없다. (중략)

우리가 랭군 사건 등을 거론하는 것은 북한의 위험한 테러 속성이 우리 선수들의 신변 안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선수들의 신변 문제는 곧 「체육적인 문제」로 귀결된다는 논리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이번 회담 재개를 거부하는 회신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 왜 남북 단일 팀 구성을 위한 체육 회담을 제의했는가 하는 저의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다.

LA 올림픽 엔트리 마감을 불과 2개월 앞두고 그런 제의를 해온데 우리가 강한 의념을 품었듯이 북한은 남북 단일 팀 구성에는 애당초 마음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단일 팀 구성이란 미명 아래 북의 대남 화해 체스처를 세계에 보임으로써 테러 집단이란 낙인이 찍혀 있는 외교적 고립으로부터 헤어나 보자는 속셈에서 출발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중략)

아무리 회담이 결렬된 책임을 우리 쪽에 덮어씌우려 해도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퇴장해 버림으로써 회담이 깨어졌고, 우리측의 재개 노력에도 불응 했으므로 체육 회담 결렬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측에 있다는 사실을 냉철히 반성해야 할 것이다. (후략)

## LA올림픽 불참하는 북한

서울신문(1984. 5. 29)

...(전략)...우리측이 이미 3년전에 제의한 단일팀 구성문제에 대해 계속 외면해오던 북한측이 LA 올림픽을 불과 4개월 앞두고 뒤늦게 호응하고 나선 것은 다음과 같은 그들 나름의 정략적 속셈에서였다. 즉 올림픽참가 단일팀 구성을 명분으로 남북접촉을 실현시켜 버마 사건으로 인한 자신의 국제적 고립을 타개하는 한편 적당한 시기에 이를 결렬시킴으로써 남북직접 접촉이 비현실적이며 소위 「3자회담」만이 한반도문제 해결의 최선의 방안 인양 분위기를 몰고 가려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 이 속셈이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도 없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다음은 북한측이 김일성의 방소와 때를 같이하여 LA올림픽에 대한 불참 태도를 밝힌 사실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걸핏하면 내세우기 좋아하는 이른바 「자주노선」이란 것이 얼마나 허구적이며 기실 「사대의부주의」의 대명사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주지되고 있는 바와 같이 김일성의 이번 방소는 부자 세습체제에 대한 소련의 공식인정을 받아냄과 아울러 대남 폭력노선의 강행을 위한 소련의 보다 적극적인 군사·경제지원을 얻어 내려는데 목적을 둔 구걸행각이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그들은 소련의 LA올림픽 불참방침에 동조함에 조금도 서슴지 않았다. 또 지난 해 대다수 공산국가들마저도 격노를 금치 못한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에 대해 극력 비호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중주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동족의 희생은 아랑곳도 하지 않은 것이 그들의 「자주노선」임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중략)

우리측은 동족의 아랑으로서 체육회담의 문호를 계속 개방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LA올림픽에의 단일팀 참가는 좌절되었지만 앞으로 있을 국제대회에 대비한 단일팀 구성과 남북한 체육교류의 실현을 위해 북한측은 더이상 거래의 여망과 국제여론을 기만하려 하지 말고 다음 할 체육회담에 성실한 자세로 참여해야 할 것임을 이에 재차 강력히 촉구해 둔다. (후략)

## 올림픽을 악용하는 술수

-단일팀 구성하자면서 「오류불참」은 자가당착-

경향신문 (1984. 5. 28)

북한도 소련에 동조하여 LA올림픽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공산11개국 스포츠 관계자회의가 채택한 LA올림픽 보이콧성명에 북한측도 가담했다.

북한측이 직접 불참선언을 하지 않고 타스통신을 빌어 간접적으로 불참에 동조한 것은 북한 스스로가 소련의 위성국임을 자인한 셈이다.

이러한 북한측 태도는 그들이 말로는 「주체」나 「자주노선」이니 하면서 실제행동은 그와 정반대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북한의 LA올림픽 보이콧은 그들이 지난 3월 30일 LA올림픽 참가를 위해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뒤늦게 제의한 저의가 무엇인지를 짐작케 하고도 남는다. 그것은 단일팀 구성이란 미명 아래 우리의 LA올림픽 참가를 방해하려는 속셈으로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중략)

금년들어 체육회담에 임하면서 그들이 노린 속셈도 마치 남북한 화해분위기를 원하는체 위장하면서 버마암살 만행으로 야기된 외교적 고립을 모면하려는 데 있었다. 소위 「3자회담」을 들고나와 미국과 협상하겠다고던 그들이 미국에서 개최되는 LA올림픽에는 불참하겠다고 자가당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중략)

북한측이 소련의 강요에 못이겨 LA올림픽에 불참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스스로 제의한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에 대해서만은 우선 랭군사건을 시인, 사과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나와야 할 것이다.(후략)

#### 북한 오륜 불참과 체육회담

동아일보 (1984. 5. 26)

...(전략)...소련이 강요하는 올림픽 보이콧 책동에 북한이 끌려 들어감으로써 북한의 이른바 「자주노선」 이란게 얼마나 허구인가를 새삼 확인케 한다. 소련의 「로스엔젤레스」 불참동기는 소련 선수들에 대한 미국의 차별대우 문제로서 어디까지나 미국과 소련 두 당사자의 감정대결이다. 그래서 같은 공산국가 이면서도 「루마니아」 같은 자주노선의 국가는 소련의 압력에 불복, 올림픽 참가를 선언했다. (중략)

북한의 붉은 책략은 25일까지 3차에 걸쳐 벌어졌던 남북체육회담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고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불참선언으로 더더욱 확실해졌다. 북한은 올림픽 개최 4개월반밖에 남겨 놓지않고 단일팀 구성을 들고 나오으로써 본래 북한의 단일팀 구성목적이 단일팀 실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체육회담을 다른 데 이용하려함이 처음부터 드러났다.

북한측 대표들은 판문점 회담장에 나와 「버마」 「아웅산」 묘소 암살폭발 사건이 남한의 「자작극」 이라고 생떼를 쓰는 등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기본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노출시켰다.

북한이 단일팀 구성을 들고 나왔던 것은 단일팀 출전을 내걸어 한국팀의 일방적 출전을 막기 위한데 있었다. 또 단일팀 구성을 이유로 한국과 공산국가들과의 체육교류를 막으려는 술책이었다. (후략)

#### 체육회담 결렬과 올림픽

- 북한의 붉은 저의 드러나 단독 참가 길밖에-

동아일보 (1984. 6. 2)

「북과 남이 유일팀으로 출전할 데 대한 거래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오늘 우리는 응당 지난 날의 대결관념에서 벗어나 이 적절한 민족적 여망에 화답해 나설 용단을 내려야할 것」 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 올림픽 위원회는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같은 3월 30일자 북한의 단일팀 구성제안 내용만 보면 북한이 마치 그들의 말대로 「절절한 민족적 여망에 화답」 해 올 진실한 자세가 정립돼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한다. 그러나 북한은 바로 이러한 편지를 서울에 보내 놓고는 단일팀을 위한 남북 체육회담에서 「버마」 암살폭파사건을 「자작극」 이라고 생떼를 쓰며 단일팀 구성을 방해하는 책략을 썼다. 결국 북한은 6월 1일 열자고 제안한 4차 남북회담을 일방적으로 보이콧 함으로써 북한 스스로가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절절한 민족적 여망」 을 배신하였음을 내외에 실증했다. (중략)

북한이 지난 세차례의 남북 체육회담을 통해 드러낸 추태로 보거나 이번 4차회담 불응을 통해 재확인된 거로 보거나 북한은 남북단일팀 구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만적인 단어를 늘어 놓으면서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을 열자고 제의했던 저의는 역시 국내의 여론을 기만하려는데 있었음이 명백하다.

김일성은 「버마」 암살폭과 만행으로 국제여론상 궁지에 몰렸다. 김은 쉽게 잊혀지지 않고 계속될 수 밖에 없는 규탄의 함성을 잠재우기 위한 술책으로 남북단일팀 구성을 제안했다. 단일팀 구성을 위해 남북한이 화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세계에 풍김으로써 「버마」 만행을 잊어버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였다. 그밖에도 또 한가지 노리는 것이 있었다면 남북 단일팀 구성문제를 내세워 한국 스포츠팀의 공산국 체육대회 참가를 방해하자는 데 있었다. (후략)

## 남북 체육회담 결렬

중앙일보 (1984. 6. 2)

북한은 우리측이 1일 열자고 제안한 제4차 남북한 체육회담에 아무런 연락없이 불참함으로써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거래의 소망을 또 한번 배반했다.

이로써 2일로 참가 신청이 마감되는 LA 올림픽에 단일팀을 출전시키려던 우리의 기대도 꺾이고 말았다.(중략)

그러나 「대화를 통해 남북의 협력과 상호발전을 이룩하고 이를 토대로 통일이 달성되기를 염원하는 우리는 이번 4차 회담의 유산이 결코 체육회담의 완전 결렬이 아니기를 기대한다.(중략)

3월말 북한의 체육회담 제의가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조속히 판문점으로 나와야 한다.

지금 세계는 우리의 민족적 역량을 테스트하고 있음을 평양측은 깨달아야 한다. 아울러 북한 자신의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성이 시험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북한이 꾸며온 헛된 정치선전과 호전적인 테러행위, 국제법 위반사항등 모든 죄과는 북한이 남북한 대화를 통해 성실성과 평화지향적 태도를 입증하지 않으면 씻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서울에서 개최될 86아시아게임과 88올림픽에 대해 방해 공작을 삼가고 이에 참여할 것을 당부한다. (후략)

## LA 단일팀의 좌절

-이제는 1986·1988년을 향해 노력해야-

한국일보(1984. 6. 3)

남북한체육회담은 1일 재개 제의가 북한측 불응으로 유산된 데다가 3일(한국시간)은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출전선수단 참가 신청 (엔트리) 마감날이다. 결국 단일팀 구성은 이번에도 어설픈 감회 속에 좌절되고 말았다.(중략)

에당초 이번 체육회담은 북한측의 성실치 못한 별개 차원의 전략적 타산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생산적일 수 없었던 것이다. 정녕 북한측이 LA올림픽에 출전할 단일팀 구성에 타의가 없었던들 일찌기 우리측이 1981년 6월 그 문제협의를 제의 했을 적에 호응해 마땅했다. 그러나 평양측은 3년동안이나 우리측 제의를 외면해 오다가 LA대회 개최를 불과 4개월 앞두고 기술적으로도 단일팀 구성이 의문시되는 시각에 당돌히 회담을 제의해 왔던 것이다. 이어 그동안의 판문점 대좌를 보더라도 북한측 자세는 퇴장·지연·책임전가등에 골몰하는 것이 예사였다.(중략)

처음부터 단일팀 구성으로 참가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그 문제 협의를 제의해온 「전략적」 저의는 어떻게 분석될 것인가. 시기성과 회의장의 발언내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조짐으로 미루어 버마 만행에 대한 국제여론의 비난을 둔화시키며 3자회담을 유도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등 국제 정치적 포석을 노린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1986아시아 경기와 1988올림픽의 서울개최를 우회적으로 방해하는 술책을 모색한 것 같다. (중략)

남북체육회담은 다른 모든 수준의 대화와 마찬가지로 당위이기에 포기될 바 아니라고 믿는다. 서울에서 열리는 1986및 1988대회를 앞두고 단일팀 구성문제는 지금부터 진지하게 협의해도 성급할 바 없다. 국제적 체육행사를 차치하고라도 남북간의 체육교류 구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남북체육회담은 인내와 성의로 지속되어야 하며 또 우리측이 다짐하는 것은 자율과 개방뿐이다. 체육인의 징표이기도 한 개방적 심성을 살려 북한측이 긍정적 호응을 보여주기 바란다.

## 결렬된 남북 체육회담

서울신문 (1984. 6. 3)

...(전략)...정주영 대한체육회장겸 대한올림픽 위원회(KOC) 위원장은 제4차 남북체육회담을 LA 올림픽 참가신청 마감일자를 하루 앞둔 6월 1일 판문점에서 열자고 제의했었으나 북한측이 이날 회의에 나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리측 제의를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옴으로써 이번 올림픽을 위한 단일팀의 구성은 결국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중략)

동시에 우리는 남북체육회담을 끝내 결렬에 이르게 한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측에 있으며, 이는 단일팀 구성을 계기로 민족화합의 전기가 이룩되기를 염원했던 온 겨레의 소망을 여지없이 짓밟은 중대한 민족적 배신행위임을 엄숙히 가려두고자 한다.

거듭 지적하거나와 우리측이 이미 3년전에 제의한 단일팀 구성문제에 대해 묵묵부답이던 북한측이 LA올림픽 4개월을 앞두고 느닷없이 호응자세를 보인것은 그들 나름의 정략적 속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버마 사건으로 인한 자신의 국제적 고립상태를 타개하고, 소위 「3자회담」의 실현을 위한 대미접촉의 길을 트며,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LA올림픽 참가를 저지한다는 복합적인 목표를 추구하려는데 그 저의가 있었다. (중략)

더우기 북한측이 지난달 24일 프라하에서 열린 공산권 11개국 체육회의에서 LA올림픽 보이콧 선언에 정식으로 가담하고 이튿날인 25일 3차회담에 나와 우리측에게 LA올림픽 단독 출전을 안한다는 약속을 하라고 요구한 것은 실로 표리부동한 행동의 극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중략)

그러나 정KOC위원장이 분명히 한 바와도 같이 비록 LA올림픽 단일팀 참가는 좌절됐지만 앞으로 있을 국제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문제와 체육교류를 실시하는 문제를 남북한간에 계속 협의한다는 우리측의 기본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따라서 북한측은 진정 평화를 존중하고 민족의 화합을 도모하려는 양심을 다만 한가닥이라도 갖고 있다면 최근 또다시 기도하고 있는 1986아시안 게임 및 1988서울올림픽 파괴책동을 즉각 중지하고 남북체육회담의 속개에 성실한 자세로 지체없이 참여해야 할 것임을 이에 강력히 촉구해 둔다.

해외주요반응

< 일 본 >

- '아베'외상 참의원 외교위원회 답변(1984. 3. 31)
  - 현 한반도 정세로 미루어 남북한이 이번 「로스엔젤레스」 올림픽에 단일팀을 구성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 북한제의가 언뜻 보기에 매우 훌륭하나 실현되기에는 문제가 많은 것이다.
- 외무성 (1984. 4. 3)
  - 대한올림픽 위원회가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단일팀 구성문제 협의를 개시하자고 북한측에 회답한 것과 관련 '한국의 적극적 자세를 높이 평가한다'고 환영하면서 스포츠 문제를 둘러싼 남북교류가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남북단일팀 구성은 「선수선발 기준등 난제가 많기 때문에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때까지 성공하기엔 시간적으로 무리」라는 견해를 밝혔다.
- 아사히 신문 사설 및 논평(1984. 4.1)

- 「로스엔젤레스」에서의 단일팀이 시간이 지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뒤에 이어지는 아시아 대회나 서울올림픽을 향해 남북의 스포츠 접촉은 반드시 심화시켜야 할 것이다.
- 작년 10월의 랑군에서의 한국요인폭파사건으로 남북관계는 지금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다. 저만한 큰 사건을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없던 것으로 하자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을 것이다.
- 한국이 이번 북한의 단일팀 구성제안을 정면으로 거부하지 않고 예상외로 유연한 자세로 응한 것은 1986년 아시아경기, 1988년 서울올림픽등에 되도록이면 많은 국가를 초청해 성공시키려는 배려가 작용한 것 같다.

○ 매일신문 논평(1984. 5.1)

- 북한측은 이번 체육회담의 진전을 통해 통일팀의 구성에까지 도달한다면 「랑군」 사건에 대한 국제적 비난과 경계심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 한국측은 「랑군」 사건등에 대한 북한의 시인, 사과가 없는 한 실질적인 회담에는 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 국>

○ 국무성 아·태지역 담당관(1984. 4.3)

- 대한올림픽위원회가 2일 북한의 단일팀 구성 제의에 관해 관문점에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자고 응답한 것은 남북한간의 접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미국은 이같은 조치를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 한국정부가 지난해의 랑군 암살폭발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인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조직위원장(1984. 4. 3)

- 남북한의 올림픽 단일팀 구성 움직임을 환영한다.
-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하게 된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홍 콩>

○ 「아시아 월 스트리트저널」 지 (1984. 4. 10)

- 북한측이 남북체육회담을 제의한 것은 랑군 사건 등에 대한 비난을 막아 보려는 일련의 화해 제스처로 미국·한국·북한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제의한데 이어 체육회담을 제의하게 된 것이다.

<스위스>

○ IOC대변인 (1984. 4. 3)

-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개막 4개월전에 남북한 단일팀 구성이 이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것만은 확실하다」고 논평했다.

### 제3부 자 료 집

#### 남북체육회담 일지

1981. 6. 19 조상호 대한체육회장겸 대한올림픽위원장 성명 발표  
○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한 체육인 회담 제의
7. 27 대한올림픽위원장,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인회담 재촉 구
8. 27 대한올림픽위원장, 아축의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 단일팀 구성 제의에 북축이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
1984. 3. 28 북한올림픽위원회,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한 체육회담 개최와 관련한 서한 전달 예고
3. 30 북한올림픽위원회, 남북한 체육회담 제의 서한전달  
○ 「로스엔젤레스」 올림픽과 아시아 및 세계선수권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으로 구성, 출전할 것을 제의  
○ 남북한 올림픽위원회 부책임자급을 단장으로 하는 쌍방 체육대표단 회담 개최 제의
4. 2 대한체육회장겸 대한올림픽위원장의 답신전달
- <남북체육회담 개최제의>  
○ 일시 : 4월 9일 상오 10시  
○ 장소 :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  
○ 대표단 구성 : 남북한의 체육회 및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각 5명의 대표  
○ 의제 :  
- 1984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 1986아시아경기대회, 1988서울올림픽대회를 비롯한 국제체육경기대회에 참가할 남북단일팀 구성문제  
- 남북체육교류실시 문제
1984. 4. 6 북한측, 북한올림픽위 부위원장 김득준을 단장으로 한 5명의 대표 구성을 서한으로 전달  
○ 제1차 회담에서는 부단장 박무성을 책임자로 한 대표 4명만 참석시킬 것을 통고
4. 7 대한체육회장겸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남북한 체육회담에 파견할 대표명단 통보

- 수석대표 : 김종규
- 대 표 : 김종하
- 대 표 : 이종하
- 대 표 : 임태순
- 대 표 : 남정문

4. 8 북한측, 대표단 명단 전통통보

- 대표단장 : 김득준
- 부 단 장 : 박무성
- 대 표 : 서명호
- 대 표 : 석태호
- 대 표 : 김세진

1984. 4. 9 제1차 남북한 체육회담 개최

- 10:00~12:25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 회의실
- 북한측의 일방적인 퇴장으로 중단
- 회담중단 직후, 김종규 수석대표 성명 발표
  - 북한측의 일방적인 퇴장으로 회담이 중단되었으나 양식과 이성을 찾아 회담장에 돌아올 것을 기대
- 대한체육회장겸 대한올림픽위원장의 성명발표
  - 내주중에 판문점에서 제2차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
  - 구체적인 것은 추후 서한을 통해 전달

4.12 대한체육회장겸 대한올림픽위원장, 제2차 남북한 체육회담 개최제의 서한전달

- 일시 및 장소 : 4.18 10:00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 회의실
- 단장 김득준을 비롯한 5명의 대표단 전원이 회담에 참석할 것을 요구

4.14 북한측, 제2차 남북한 체육회담 개최거부 서한전달

4.17 대한체육회장겸 대한올림픽위원장, 제2차 남북한 체육회담 개최 재촉구 서한전달

4.20 북한측, 제2차 남북한 체육회담 개최일자 제의 서한전달

- 개최일시 : 4. 26. 10:00
- 장 소 :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 회의실

4.24 대한체육회장겸 대한올림픽위원장, 제2차 회담 개최일자 수정 제의 서한전달

- 일시 및 장소 : 4. 30. 10:00 중립국 감독위 회의실
- 5명의 대표전원 파견 촉구

1984. 4.28 북한측, 아측의 2차 회담일자 수정제의 수락(전통)

4.30 제2차 남북한 체육회담 개최

- 10:00-14:37,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 회의실
- 회담종료후, 김종규 수석대표 성명
  - 북한측은 '버마사건', 최·신 납치사건에 대한 발언을 취소하라는 전제조건을 주장하면서 회담장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들어 회담을 계속 기피하였음.
  - 앞으로 회담재개 문제는 북한측 태도 여하에 달려 있음.

5. 9 대한체육회장겸 대한올림픽위원장, 제3차 남북한 체육회담제의 서한전달

- 개최일자를 북한측에 일임.
- 가능하면 5월 11일이나 5월 14일 10:00에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 회의실에서 개최할 것을 희망

5.12 북측, 제3차 남북한 체육회담 개최 거부 서한전달

5.18 대한체육회장겸 대한올림픽위원장, 제3차 체육회담 속개 재촉구 서한전달

- 일시 및 장소 : 5.23. 10:00,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 회의실
- 비공개 개최 희망

5.23 북한측, 제3차회담 개최를 수정제의하는 회신

- 일시 : 5.25. 10:00
- 장소 :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

5.25 제3차 남북한 체육회담 개최

- 개최일시 : 5.25. 10:00-12:31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 회의실
- 경 과 : 북측이 우리측에 대해 LA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방해한 사실을 시인·사과하고 남북회담을 정치화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전제조건을 고집함으로써 의제 토의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유산
- 회담종료후, 김종규 수석대표 기자회견
  - 남북한 체육회담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북한측 태도에 실망표시
  - 북한측이 하루속히 민족적 양심과 체육인다운 자세를 가지고 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

1984. 5.29 대한체육회장겸 대한올림픽위원장, 제4차 회담 개최촉구 및 일자 제의 서한전달

- 개최일시 : 6.1. 10:30
- 장 소 :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 회의실

6. 1 북한측, 제4차 회담 개최 거부 서한전달

6. 2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 참가선수 명단제출과 관련한 기자회견

- IOC헌장 제30조에 의거, LA올림픽(7.28 개막)에 출전키 위해서는 6.2까지 참가선수

단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 개최 불과 4개월 앞두고 우리측 제의에 호응해 온 북한은 회담의 진전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부당한 전제조건까지 들고 나와 체육문제 토의를 거부하였음.
- 앞으로 개최될 국제체육경기대회에 남북한 단일팀 참가 및 체육교류 실시문제를 협의·해결해 나간다는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음.

# 남북대화 제36호

(1984. 8 ~ 1984. 11)

# < 목 차 >

## 제1부 민족화합과 공동번영의 길 3

1. 전두환 대통령 「8. 20」 기자회견 ..... 3
2. 국내 주요 반응 ..... 8
3. 북한측의 반응 ..... 13

## 제2부 수재물자 인도·인수와 관련한 남북 적십자실무 접촉 ..... 14

1.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의 성립 ..... 14
2. 남북적십자 실무접촉과 대한적십자사의 입장 ..... 16
3. 남북적십자 실무접촉과 그 이후의 경과 ..... 18
4. 국내외 반응 ..... 20

## 제3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 27

1. 남북경제회담 제의 ..... 27
2. 남북적십자회담 재개 제의 ..... 38
3. 제4차 남북 체육회담 개최 제의 ..... 41
4.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12주년에 즈음한 성명발표 ..... 43

## 제1부 민족화합과 공동번영의 길

### 1. 전두환 대통령 「8. 20」 기자회견

#### -남북한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제외-

전두환 대통령은 1984년 8월 20일 『남북한이 같은 민족으로서 화합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교역과 경제협력을 실시하자』고 제의하고, 『북한측이 동의한다면 북한동포들의 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물자를 무상으로 제공할 용의도 있다』고 천명했다.

전대통령은 이 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가진 하계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제의하면서 『우리는 질이 좋은 생활용품이나 의약품과 자동차·기계류 등을 많이 생산하고, 북한은 우리에게 부족한 석탄·철광석과 같은 자원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남북한이 각각 제3국과도 교역을 하고 경제협력을 하면서 동족간에 교역과 협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고 북한측이 민족화합과 통일을 위한 이같은 남북한 경제교류 노력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전대통령은 또 『북한측은 하루 속히 생산적인 남북대화에 호응하고 이산가족 재회와 경제교류 등 실질적인 남북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화합과 통일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86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올림픽에서는 우리 민족이 하나의 깃발아래 뭉쳐 단일팀으로 출전할 수 있도록 남북체육회담이 개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한반도 안보정세」와 「남북한 관계개선」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한반도 안보정세에 관한 부분

내가 그동안 국제정세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기회있을 때마다 지적해온 것은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오늘의 세계는 그러한 격동과 혼미의 양상이 더욱 가속화되어 바야흐로 동서남북에서 분쟁과 마찰이 계속되는 위기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초강대국의 대립과 동서간의 군비경쟁이 심화되는 「새로운 냉전」의 긴장이 전개되고 있고, 이란·이라크전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 두 나라들의 전쟁이 지역전쟁으로 확산될 위험이 커지는가하면, 세계도처에서 폭력주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이기주의가 더욱 악착스러워져서 보호무역의 강화추세가 계속되고 있고, 잘 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 사이에 이른바 「남북국가」간의 갈등 또한 깊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무기체계는 유효반경과 파괴력이 대륙과 대륙 사이는 물론이고 지구전체로 확대되어 있고,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고 경제적인 상호 의존성이 깊어져서,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지역의 멀고 가까움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으로 바로 연결되고 있다는 데에서 긴장의 확산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강대국의 이해가 교차되고 있는 동북아지역은 불안과 긴장의 대표적인 지역이며, 따라서 세계평화에 있어 하나의 관건이 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강대국의 개입은 피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이 지역은 물론

세계를 대전의 소용돌이로 몰아 넣을 것은 예측하기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한반도의 적화망상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공산집단이 언제 무슨 일을 어떻게 저지를 지 모른다는 것은 그들 자신이 이미 전세계인들에게 행동으로 웅변해 온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그러한 폭력전쟁노선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명백한 요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오늘의 동북아는 물론 세계평화의 요체로서,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국민들이 투철하게 인식하고 실현해야 할 과제라는 것을 이 기회에 강조하고자 합니다.

작금 동북아정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소련이 극동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여 이 지역의 세력균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중공이 현대화노선과 그에 따른 개방정책을 정착시키면서 미국 및 일본과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도 새로운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동북아에서의 심상치 않은 기류가 북한의 폭력전쟁노선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한반도의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첩경은 남북한 군사력의 균형을 이룩하고 그들에게 오해의 여지를 단 1%라도 주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매우 신중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친북한 동맹국이 북한을 맹목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서방측이 그들에게 성급한 접근자세를 보인 다든지 하는 것은 북한의 오해를 조장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지역의 관계열강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특히 주변국가들이 보다 건설적이고도 이성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이념과 체제를 따지지 않고 호혜평등의 협력관계를 추구하는 개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남북한 관계개선에 관한 부분

광복 39돌이 며칠전에 지나갔습니다만, 남북한간에는 아직까지도 대결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분단의 상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나는 재임기간 중에 기필코 건설적인 남북대화를 열어 평화와 통일의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민족분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왔습니다. 내가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 방문과 회담을 제의하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은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온 겨레가 번영의 대로를 함께 달려가야 하겠다는 충정에서 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측은 시대착오적인 폭력노선을 고수하면서 남북한의 단절과 긴장, 그리고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대적이고 또 비정상적인 남북한관계가 계속되는 것은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남북한의 갈등과 대결은 분단을 영속화하고 민족역량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는 하루속히 지양되어야 하며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한간에 교류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북한측은 하루속히 생산적인 남북대화에 호응하고, 이

산가족 재회와 경제교류 등 실질적인 남북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민족화합과 통일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질이 좋은 생활용품이나 의약품과 자동차, 그리고 기계류 등을 많이 생산해서 국내에서 쓰고 또 국제시장에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우리에게서 부족한 석탄이라든지 철광석 같은 자원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각각 제3국과도 교역을 하고 경제협력을 하면서 동족간에 교역과 협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더욱이 오늘날 주변국가들이 벌이고 있는 발전경쟁의 환경 속에서 우리 민족이 낙후되지 않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선진민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에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선진민족으로서의 화합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고자 하는 일념에서 남북간의 교역과 경제협력을 실시할 용의가 있으며, 북한측이 동의한다면 북한동포들의 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물자를 무상으로 제공할 용의도 있음을 이 기회를 통해 밝혀 두는 바입니다.

민족화합과 통일을 위한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에 북한측이 참여할 것을 나는 충심으로 기대합니다.

덧붙여서 지난번 로스엔젤레스 올림픽에 출전할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이 북한측의 LA올림픽 불참결정으로 유산된 바 있지만 우리땅에서 열리는 86아시아 게임과 88올림픽에서는 우리 민족이 하나의 깃발아래 뭉쳐 단일팀으로 출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앞으로 그를 위한 남북체육회담이 개최되기를 나는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이번 하계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대북제의의 주요 내용은 ◎남북한간의 교역 및 경제협력, ◎기술 및 물자의 무상 제공 등이다.

#### 제의의 배경

전대통령이 동 기자회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그동안에도 남북한의 경제교류가 상호신뢰를 회복, 통일기반 구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측에 이를 여러번 제의해 왔었다. 특히 1982년 1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남북한 협력방안의 일환으로 교역실시를 촉구했었고, 이어 그 해 2월에는 「20개 시범 실천사업제의」를 통해 일용생산물교역, 기술자교류 등 다방면에 걸친 경제교류·협력방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북한측이 이를 계속 외면함으로써 조국분단이 이미 한세대가 지나 40년이 가까운 지금까지도 남북한이 단절과 대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불행한 상황에 있다.

이러한 남북한 대결구조의 지속은 우리의 통일염원과 민족적 긍지에 비취볼 때 시급히 종식되어야 한다.

더욱이 오늘날 세계정세는 자원민족주의의 대두와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추세 등 국가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자기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동북아 지역도 예외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낙후되지 않고 남북관계의 비정상에서 연유되는 민족에너지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교류가 하루속히 실현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호교류와 협력은 남북간의 신뢰를 축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통일의 기반인 민족화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제의의 취지

전대통령은 현 시점을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의 시대」로 규정하면서 우리 민족이 「공동번영」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민족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반도는 분단이전에는 자연적·지리적 여건면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면에서도 이상적인 보완관계를 유지해 왔었다.

당시 상황에서 보면 중공업 시설의 90%가 북한지역에 편중되고 지하자원도 남한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에 비해 경제성장 여건 면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대외개방적 공업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선진공업화의 단계에 들어선 반면 북한은 이른바 자력갱생 방침에 따라 폐쇄경제 체제를 고수하면서 대남적화 통일목표 달성을 위해 GNP의 24%나 되는 과도한 군사비를 투입해 온 결과 「5대경제난」으로 집약되는 만성적인 식량난, 에너지부족, 수송난후, 외채상환능력 상실, 기술난에 직면해 있다.

남북한간의 주요 경제지표를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국의 경제력, 즉 경제활동 규모의 크기를 가늠하는 데 있어 가장 포괄적인 지표인 GNP는 1983년 현재 한국이 753억불, 북한이 145억불로 5.2:1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민생활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1인당 GNP는 한국이 1,884불, 북한이 765불로서 2.5:1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산업화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발전설비 용량도 한국이 1,312만kW 인데 비해 북한은 574만 kW에 불과하며, 일국 기간산업의 소재(반제품) 생산능력을 나타내는 조강능력도 한국이 1,372만톤, 북한이 430만톤으로 3.2:1의 격차를 보이는 등 일부 지하자원의 생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한국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남북한 주요 경제지표 비교

| 구 분           | 단 위          | 한국           | 북한           | 남북대비               |
|---------------|--------------|--------------|--------------|--------------------|
| 인 구           | 만 명          | 3,995        | 1,890        | 2.1: 1             |
| G N P         | 억 불          | 753          | 145          | 5.2: 1             |
| 1인당 GNP       | 불            | 1,884        | 765          | 2.5: 1             |
| 수 출 액         | 억 불          | 242          | 14           | 17.3: 1            |
| 수 입 액         | 억 불          | 262          | 15           | 17.5: 1            |
| 농 경 지         | 만정보          | 218          | 213          | 1: 1               |
| 곡물 생산량<br>(쌀) | 만 톤<br>(만 톤) | 713<br>(540) | 520<br>(212) | 1.4: 1<br>(2.5: 1) |
| 발전설비용량        | 만 kW         | 1,312        | 574          | 2.3: 1             |
| 조 강 능 력       | 만 톤          | 1,372        | 430          | 3.2: 1             |
| 시멘트생산능력       | 만 톤          | 2,345        | 860          | 2.7: 1             |
| 석 탄 생 산 량     | 만 톤          | 1,986        | 3,500        | 1: 1.7             |

이러한 남북한간의 경제적 불균형은 동포애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평화통일의 실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대통령이 표명한 기술 및 물자제공 제의는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만성적인 경제침체와 이로 인해 같은 동포인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민생고의 해결뿐만 아니라 6천만민족이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제의의 실현가능성

이번 제의한 남북한간의 교역과 경제협력은 생활용품, 의약품, 자동차, 기계류, 자연자원 등의 교역과 남북한 경제인, 기술자의 상호 왕래와 기술협력 및 공동사업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북한의 무역고는 1982년 현재 33억 달러로서 수출 15억 달러, 수입 18억 달러이며 주요 수출품은 철광석, 석탄, 연, 아연 등이고 수입품은 기계설비류, 코크스, 섬유, 면화, 소맥 등이다.

또 지난 1980년 현재 북한측 무역거래의 지역별 분포는 공산권이 52.9% 서방권이 47.1%로 나타났는데 대서방권 교역은 점증추세이며 일본, 서독,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주요교역 대상국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북한측이 현재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트럭·화차 등의 운송차량과 TV, 섬유제품 등 생활용품은 우리측에서 담당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석탄이나 철광석 등의 자원은 북한에서 충당할 수 있는 것들이다.

지난해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3억 2천 7백만 달러 어치의 기계류, 섬유제품, 화학품, 철강제품의 상당 부분은 우리측에서 대체수입이 가능한 품목이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기술협력 및 합작으로까지 발전한다면 경제적 효율성의 창출은 물론이고 상호 이해와 신뢰의 회복 등 긍정적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크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제의는 전두환 대통령이 제창한 「남북한 협력시대」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결단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북한의 자세이다.

이번 제의가 담고 있는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 남북한이 각각 제3국과는 교역을 하면서 같은 민족간에는 교역과 협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당위성, 그리고 동서독 관계의 예에 비추어 북한이 이번 제의마저 거부한다면 그들 스스로의 모순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이다.

## 2. 국내 주요 반응

국내 각 신문들은 전두환 대통령의 하계기자회견에서 밝힌 북한측에 대한 물자 교역 및 기술 공여 제의에 대해 『이번 회견중 가장 구체적이고도 획기적인 부분』이라고 논평하고, 만약 남북한의 이러한 교류가 실천에 옮겨만 진다면 『민족화합과 공영의 토대 마련은 물론 상호 이해와 신뢰를 급속히 회복시켜 우리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제안들이 과거 한결같이 북한측에 의해 거부되어 왔음』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측이 추구하는 시대착오적 폭력혁명노선으로 말미암은 남북관계의 단절과 긴장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길은 험난하더라도 생산적인 남북대화, 1천만 이산가족의 재회, 경제협력 등을 통한 '교류와 협력의 시대' 개막은 피치 못할 민족사적 소명이며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우리 겨레의 긍정적 진로』라고 단정했다.

아울러 북한측에 대하여 『남북이 각각 제3국하고도 교역과 경제협력을 하면서도 같은 민족끼리 그것을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냐는 전대통령의 호소에 북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대통령의 대북제외와 관련한 국내 주요 신문들의 사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운도약의 결실기 지향하는 전두환 대통령의 통치철학

-하계기자회견에 투영된 자신감과 개혁의지-

(경향신문 1984. 8. 21)

전두환 대통령은 20일 가진 하계기자 회견에서 제5공화국 출범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3년반 동안의 국정전반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하고,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피력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1980년대 중엽 선진조국 창조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희망과 신념을 갖게 했다. (중략)

그러나 이러한 1980년대 중엽의 선진조국 달성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며, 그것은 국민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전대통령은 그러한 장애중 최대의 것은 북한공산집단의 무모한 전쟁도발기도이며, 선진조국 달성의 최대 관건은 국민의 화합·단결에 의한 에너지의 집중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부터 1988년까지의 4~5년이 선진조국의 달성과 관련하여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후략)

### 전대통령의 기자회견

-「8. 20」 제의에 북은 즉각 호응하라-

(동아일보 1984. 8. 21)

전두환대통령은 해마다 이맘때면 한차례씩 여름철 기자회견을 연다. (중략)

전대통령의 이번 회견중 가장 구체적이고도 획기적인 부분은 역시 기술과 물자의 무상 제공을 포함한 남북한 교역 및 경제협력 실시용의를 천명한 대목이다. 우리측은 1980년대 들어 「6·5」 「1. 22」 등 잇단 제의 때마다 평화통일기반 조성의 전단계로서 남북사회개방과 경제교류 등을 강력히 북에 촉구해 오긴 했으나 이번 「8·20」 제의는 그 시기로나 내용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단안으로서 북한이 생각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실현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한의 이러한 교류가 실천에 옮겨만 진다면 민족화합과 공영의 토대 마련은 물론 상호 이해와 신뢰를 급속히 회복시켜 우리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어느모로 보나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남북이 각각 제삼국하고도 교역과 경제협력을 하면서도 같은 민족끼리 그것을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전대통령의 호소에 북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은 북한 스스로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계속적인 교류확대 속에 동질성을 회복해 가고 있는 독일 민족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 민족이라고 그걸 못할 이유는 없다. 북한은 우리의 이번 제의를 서슴없이 받아들여 민족화합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선진창조」의 결실 앞두고 통일로 가는 의미와 노력

-전두환 대통령 기자회견의 의미-

(서울신문 1984. 8. 22)

전두환 대통령은 22일 국내 기자회견을 통해 재임 3년반여 기간동안 펼쳐온 폭넓은 통치경험과 아울러 국정전반, 남북문제에 관한 소신과 의견을 밝혔다. (중략)

특히 이번 회견에서 전대통령이 제의한 남북간의 교역과 경험, 그리고 대북한기술 및 물자제공 용의표명은 「남북한 협력시대의 개막」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중략)

먼저 남북문제를 살펴본다. 민족의식 면에서 볼 때 우리에게 있어 남북문제는 각기 다른 두 개의 개념이 아닌 한 개의 명제이다. 한반도의 남과 북은 언젠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할 민족적 당위로서의 명제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전대통령의 남북문제 인식과 해결 방안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본다.

사실 남북교류 제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통일을 위한 우리측의 제의가 그것이 어느 분야의 제의이건 그때마다 북측에 의해 거부돼 왔다는 데에 있다.

조국분단의 시기가 이미 한 세대가 지난 40년 가까이 되는 지금까지도 남북한이 단절과 대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나아가 이러한 남북한 대결구조의 지속은 사실 우리 민족의 양식과 긍지로 볼 때 더 이상 허용될 수 없으며, 지금 이 시기야 말로 비정상적인 남북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더욱이 한반도는 분단이전 통합된 하나의 경제단위였고 자연적·지리적 여건 면에서 남북이 서로 보완 관계를 갖고 있다. 또한 오늘날 세계 각국은 자원민족주의의 대두와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추세 등 이른바 국제이기주의를 내세워 각축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동북아 지역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주변국가들이 벌이고 있는 발전 경쟁 속에서 낙후되지 않고 선진민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에 경제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남북한이 각기 제 3국과도 교역 및 경험을 유지하면서 같은 민족간에 이를 못할 이유도 없다. 또한 남북한 경제교류는 남북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단절된 남북한간의 연계작용을 할 뿐 아니라 상호 이해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 평화통일 기반조성의 일환으로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물론 오늘날 북한이 경제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일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이 제의가 같은 민족으로서의 이해와 관용에서 나온 것이며 통일을 열망하는 전 민족의 의지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 호의적으로 수락해야 할 줄 안다. 동서독은 분단 직후부터 지금까지 활발한 경제교류 및 협력을 통해 상호 유대와 민족동질성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중략)

국운도약의 개척기로서 지난 3년 반의 시기가 무척 값진 것이었듯이 앞으로 4~5년이 갖는 의미도 또한 매우 각별하다.

오늘의 국내적 현실과 안팎의 정세를 냉정히 따져볼 때 앞으로 4~5년은 국가의 발전과 안보 면에서 중요한 시기이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의 정치적 안정을 토대로 경제성장이 지속돼야 하고 정의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배가돼야 한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최근의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현실을 직시하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달려 있다.

북한은 경제력에 있어 우리에게 5대 1의 열세인 것과는 달리 군사력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비해 얼마간의 우세를 유지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남북간에 군사력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한이 과거행적에 비추어 전쟁도발의 노선을 바꾸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군사력 면에서 북한을 능가할 시기, 다시 말해 북한의 군사력 우위가 계속될 수 있는 기간을 앞으로 4~5년이라고 보면 올해부터 서울올림픽이 열리는 1988년 사이를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로 보게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 기간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선진조국 창조라는 목표를 실현시켜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참으로 중요한 역사의 큰 고비에 해당된다고 본다 (후략)

####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

-전대통령의 새로운 제의에 접하여-

(조선일보 1984. 8. 22)

널리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전두환 대통령은 지난 20일 하계특별 기자회견을 가졌다.(중략) 이번 기자회견에서 특별히 내외의 주목을 끄는 것은 대북경제 협력에 관한 전대통령의 새로운 제의가 아닌가 한다.

여기 담긴 내용도 물론 대통령이 처음 피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가고 있고 미·소·중공·일 등 우리 주변국들의 동향이 그 어느때 보다도 미묘하고 민감한 시기라 대통령의 대북제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남북관계가 격변하는 주변정세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 위험하고 지리한 냉전 속에서 침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 빙벽과 경색에다 돌파구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이란 전쟁이나 민족적 화합이나의 둘 중 하나 밖에 있을 수가 없다.

우리 국민이나 정부가 남북간의 어떤 전쟁의 재발에도 반대하고 민족적 출구를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통일의 모색에서 찾아 왔다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다. 그리하여 우리는 최근년에도 계속하여 남북대화를 제안했고, 교류와 협력을 호소해 왔던 것이다.

이번 전대통령의 제의는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다. 대통령은 우선 현재의 남북관계가 비정상적이란 점을 분명히 규정하고 쌍방간에는 교류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 놓아야 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그 첫째 방법으로 전대통령이 제안한 것은 남북간의 교역과 경제협력이다.

즉 남은 질 좋은 생활용품, 의약품, 자동차, 기계류 등을 다량으로 생산하여 국내에서도 소비하고 세계시장에도 수출한다.

한편 북은 우리에게 부족한 석탄, 철광석 등의 자원을 해외에 수출한다. 남북한이 이렇게 제3국과 교역을 하고 경제 협력을 하면서 동족간에는 그것을 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는 것이 전대통령의 생각이다. 우리는 북한측이 이런 교류제안을 거부해야 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본다.

또한 전대통령은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우리 민족이 뒤떨어지지 않고 선진민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에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소신을 명백히 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남북간의 교역과 경제협력을 실시할 용의가 있음도 주저 없이 제

안했다. 그위에 북한측이 동의한다면 그곳 동포들의 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물자를 무상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음도 아울러 밝혔다. 이 제안을 북은 한낱 빈말로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둘째 방법으로 전대통령은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의 개최를 촉구했다. 남북한체육회담의 개최는 일전 대한체육회 회장의 이름으로 제의한바 있지만 북으로부터는 아직 회답이 없다. 1986년에는 서울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1988년에는 또 올림픽이 열린다. 2년 내지 4년은 결코 긴 세월이 아니다. 만일 북한측이 우리와 단일팀을 조직, 이에 참가할 의사가 있다면 곧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쌍방간의 체육회담은 그간 모두 유산되고 말았지만, 의사만 있으면 성사시킬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내 놓은 전대통령의 이상 두가지 대북 제의는 물론 그것만에 그치는 목표가 아니다. 이것은 남북간의 대립관계를 화해로 돌리고 동결을 해빙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남북의 평화적 통일이란 장기적 전망에서 당장에도 가능한 가장 실현성 있는, 누구도 납득할 수 있는 제안이다.

동일한 내용의 제안들이 과거 한결같이 북한측에 거부되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 북한측은 태도를 바꿔야 할 객관적 상황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남북간의 계속 고조되는 군사적 긴장과 정치적 대립은 설사 같은 민족이 아니라도 서로 이성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하고 위험한 상태에 도달해 있다.

전쟁, 그것은 민족의 절멸과 국토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결과밖에 가져올 다른 것이 없다.

「혁명전쟁」이건 국지전쟁이건 그것은 자기 멸망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도발할 수 없는 자살행위다. 남북이 살길은 오직 하나 평화 속의 공영뿐이다.

전대통령의 이번 제의를 북한측이 수락하고 안 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다. 서로간의 비정치적인 교류도 협력도 접촉도 할 수 없다면, 전쟁외의 또다른 무슨 묘책이 있는가.

남북한이 과멸적인 동족 상잔을 피하려면 싫든 좋든 남북은 서로 만나고, 교류하고, 협력해야 할 운명에 있다. 한통의 편지도 한푼의 교역도 한사람의 왕래도 없이 남북간의 절벽을 그대로 두고서 평화통일을 하자는 것은 하나의 유치한 장난에 불과하다 북한측의 유연한 사고를 기대코자 한다.

#### 전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

(중앙일보 1984. 8. 21)

전두환 대통령의 금년 하계 특별회견은 시기적으로 총선과 일본 공식 방문을 앞두고 있어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중략)

이번 회견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북한에 대해 기술물자를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한데 있다. 전대통령이 「남북한 협력시대의 개막」을 강조하면서 경제교역과 협력을 제의한 것은 우리가 이룩한 경제력을 민족의 공존공영과 통일기반 조성에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물자와 기술의 무상 제공을 제의한 것은 민족의 화합과 동질성 회복을 위한 중대한 결단의 표시이다.

대통령이 특히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는 현재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대남도발과 폭력노선을 포기케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반도는 원래 하나의 통합된 경제단위였고 남북의 모든 여건은 상호보완 관계로 결합돼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경제원칙에 입각해 보더라도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일이다.

더구나 지금은 세계의 각국이 자국민·자민족 중심의 국가이기주의를 강력히 추구하고 있고 그것이 자원민족주의·보호무역주의로 나타나고 있으며 당장 우리 자신이 그 피해자가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남북한에 똑같이 이익이 되고 민족의 화합도 이루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일여건도 그만큼 성숙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전대통령은 북한이 아직도 군사노선을 포기치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산동맹국들이 북한을 맹목적으로 지원하거나 서방측이 성급한 접근 자세를 보인다면 그것은 북한의 오판을 조장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 주변 강대국들에 건설적이고도 이성적인 역할을 통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은 또 1988년 올림픽까지의 앞으로 4~5년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이 가장 높은 때라고 지적했으나 그때까지는 남북한 군사력이 대등해 질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함부로 도발치 못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중략)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우리와 후손들의 번영을 다짐하는 엄숙한 시점에 우리는 와있는 것이다.

#### 국민화합과 민족화합

-대통령 기자회견이 확인하는 명제-

(한국일보 1984. 8. 22)

올해 전두환 대통령의 하계특별 기자회견의 내용은 국정 전반에 걸쳐 유난히 자신감과 낙관주의를 부각시킨 점이 특징적이다. (중략)

그리고 북한의 전쟁도발을 방지하는 첩경은 남북한 군사력의 균형을 이룩하는 외에 주변국들이 북한의 오판을 조장하지 말아야 할 것을 힘주어 말하였다. 대공산권 외교에서는 호혜평등의 개방정책을 천명하였는데 이는 국민적 합의에 입각한 것이다. 부언한다면 북한의 오판 요인중에는 우리의 국내정치와 국민화합에 관한 그들의 아전인수적, 교조적 망상도 개재하게 되므로 국민적 경각성이 요망되는 점이다.

나아가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는 「금년부터 서울 올림픽이 열리는 1988년 사이」라고 전대통령은 관측하였다. (중략)

남북관계 개선의 구상에 관해서는 이번에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경륜이 천명되었다. 「북한측이 동의한다면 북한 동포들의 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물자를 무상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사실 북한측이 추구하는 시대착오적 폭력혁명노선으로 말미암은 남북관계의 단절과 긴장과 불신은 무한정 꼬리를 끝바 아닌 것이다. 이 경우 대국적 아량과 동포애의 이니셔티브는 국민화합의 연장선에 민족화합을 내다보는 우리측에 있음이 명백하다.

길은 험난하더라도 생산적인 남북대화, 1천만 이산가족의 재회, 경제협력 등을 통한 「교류와 협력의 시대」 개막은 피치 못할 민족사적 소명이며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우리 거래의 긍정적 진로이다.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의 추진도 북한측만 옹고집을 버린다면 어려울 바 아니라고 생각된다 (후략)

### 3. 북한측의 반응

북한측은 전대통령이 제시한 교역 및 경제협력 제의에 대하여 그 5일 후인 8월 25일 그들의 「노동신문」 논평을 통하여 이를 공식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그들은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을 실현시킬 전제조건으로서 ◎사대매국 행위를 하지 말 것, ◎반공대결정책을 포기할 것, ◎긴장격화책동을 중지할 것 등 악의적이고 상투적인 비방을 나열하고, 남북한 관계 개선과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외세의존정책의 포기, ◎주한미군의 철수, ◎팻쇼와 매국, 분열과 반공, 전쟁소동의 중지, ◎3자 회담 제의의 수락 등을 요구함으로써 구태의연한 자세를 또다시 드러냈다.

## 제2부 수재물자 인도·인수와 관련한 남북 적십자실무 접촉

### 1.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의 성립

북한이 전두환대통령의 「8·20」 남북경제협력체의를 악의에 찬 비방과 함께 거부함으로써, 여전히 남북한관계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적십자회는 돌연 1984년 9월 8일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보낸 방송통지문을 통해 북한적십자회가 남한지역의 수재민에게 「쌀 5만 석, 천 50만 미터, 시멘트 10만 톤, 기타 의약품」을 보내기로 결정한 사실을 밝히고 이러한 물자를 수재민에게 「시급히 전달하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8월의 폭우로 인적·물적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힘과 따뜻한 온정으로 단기간 내에 구호와 복구작업이 마무리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계적십자연맹(LRCS)의 원조 제의마저 거부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도, 금번 북적의 제의를 수락함으로써 남북한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는 일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한적총재 성명을 발표하고 인수절차 협의를 위한 쌍방적십자실무접촉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되기를 희망하였다.

#### 대한적십자사 총재 성명

전두환대통령은 지난 8월 20일 기자회견에서 남북한경제교류 및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북한주민들의 생활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과 물자를 북한측에 무상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내외에 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측이 북한주민들에게 생활물자를 제공하겠다고 제의한 것은 가정용품, 의약품 등과 같은 생활용품들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수요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순수한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이같은 우리의 인도적 제의에 대해 북한측이 부정적 태도를 보여 오던 중 지난 9월 8일 북한적십자회측은 방송을 통해 최근의 우리측 수해와 관련하여 이재민들을 위하여 쌀 5만 석, 천 50만 미터, 시멘트 10만 톤, 기타 의약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서울과 지방에서 폭우로 인하여 이재민을 낳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으나 국민 모두의 단합된 힘과 노력으로 단기간내에 완전히 복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피해복구를 끝마치기는 하였으나 북한적십자회측이 우리의 수해에 관심을 보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8월 20일 전두환대통령의 인도주의적 제의에 적극 부응하여 이번 북한적십자회측의 제의를 받아들이는 바이며, 이달중에 북한측이 제시한 물자가 우리측에 모두 인도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북한적십자회가 배에 물품을 싣고 인천 또는 부산항에 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계적십자사연맹이 지난 9월 3일 수재민을 위한 원조를 제의해왔을때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중히 사양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의 제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동족간에 인도적인 문제에서부터 진정한 상부상조의 길을 트고 나아가서 남북한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데 그 참뜻이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측에서도 재해가 발생하면 우리는 인도적 차원에서 물자제공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남북한의 두 적십자사간에 이루어질 새로운 접촉과 교류를 계기로 남북한 사이에 화합과 상부상조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이같은 인도적 차원의 교류가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북한적십자회측이 제의한 물자의 인수절차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쌍방 적십자사의 실무자 접촉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948년 9월 14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유 창 순

한편 북적측은 9월 14일 방송을 통해 한적의 실무접촉 제의에 동의하여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한웅식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를 1984년 9월 18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파견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이에 대해 한적은 9월 15일자 방송통지문을 통해 이영덕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를 수석대표로 하는 5명의 대표명단을 발표함으로써, 남북적십자사간의 실무접촉이 열리게 되었다.

쌍방 대표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대한적십자사 대표단

|      |                       |
|------|-----------------------|
| 수석대표 | 이영덕(대한적십자사 부총재)       |
| 대 표  | 조철화(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
| 대 표  | 송영대(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협의회위원) |
| 대 표  | 최은범(대한적십자사 구호봉사부장)    |
| 대 표  | 이준희(대한적십자사 사회사업자문위원)  |

북한적십자회 대표단

|      |                         |
|------|-------------------------|
| 대표단장 | 한웅식(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
| 대 표  | 최원석(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
| 대 표  | 최기봉(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장)    |
| 대 표  | 백영호(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서기장)  |
| 대 표  | 리남인(북한적십자회 남포시위원회 부위원장) |

## 2. 남북적십자 실무접촉과 대한적십자사의 입장

남북쌍방적십자 대표들은 북한적십자사의 남한지역 수재민에 대한 물자제공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한 차례의 실무접촉을 가졌다.

동 접촉은 형식상으로는 북한적십자사의 물자제공 제의를 대한 적십자사가 수락함으로써 성립된 것이다.

신속한 사후조치로 이미 수재민 구호·복구작업을 마무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북한당국의 거부로 실현을 보지는 못했지만 북한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기술과 물자의 무상제공까지도 제의한 바 있는 우리로서는 북측의 수재물자 그 자체가 당장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적십자회의의 물자제공제의를 수락한 것은 북측 제의를 거부할 경우에 반복될 남북한간의 제의·거부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이를 계기로 남북한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아보겠다는 대승적인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번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 임한 대한적십자사의 기본입장은 다음과 같다.

### 「8.20」 제의의 인도주의적 정신을 구현

전두환 대통령은 1984년 8월 20일 기자회견에서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북한측이 동의한다면 북한주민들의 생활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자를 무상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이는 현실적으로 북한주민들이 가정용품 및 의약품과 같은 일용생활품에 대해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을 덜어줌으로써 실질생활을 향상시켜 주려는 순수한 인도주의의 정신에서 나온 조치였다.

이번에 대한적십자사가 북측이 제시한 물자를 받겠다고 한 것은 이와 같은 전두환대통령의 인도주의적 정신을 폭넓게 구현시켜 남북한간의 상부상조, 그리고 교류와 협력시대를 열어보려는 실천의지의 적극적인 표현인 것이다.

###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화합의 계기마련

지난 8월의 폭우로 서울을 비롯한 일부 남한지역에서 인적 물적 재해가 발생했으나 국민의 단합된 힘과 따뜻한 온정으로 단기간내에 구호와 복구작업을 완료했으며,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9월 1일자 세계적십자연맹의 원조제의 마저 사양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적십자회측의 제의를 수용한 것은 지난 8.20 전두환대통령이 밝힌 북한주민들에 대한 생활물자 무상제공제의를 인도주의적 입장에 따른 민족화합의 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한 동포들간에 상부상조의 길을 트고 물자교류의 바탕을 마련하는 한편 나아가서는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은 물론 남북한 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과 각계의 여론에 부응한 조치라고 하겠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북한측 제의를 받아들이는 획기적 선례를 만들어 놓는다면 앞으로 북한지역에 재해 또는 기타 인도적 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우리가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할 경우, 북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제의를 할 때마다 북한측이 무조건 거부를 해왔는데 우리도 북한측의 제의를 이처럼 거부한다면 남북한 관계개선은 요원하며 악순환만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 제의를

수락한 것은 북한의 물자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 남북한 관계를 개선해 보겠다는 염원에서 출발한 것이다.

### 대북 국력우위의 자신감 과시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물자제공을 제의해 온 것은 접촉과정에서도 더욱 분명한 바와 같이, 명분상으로 동포애와 인도주의를 표방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버마사건으로 인한 폭력집단의 이미지를 씻고 한국내에서 반공의식을 이완시켜 보려는 선전적인 책략과 함께 북한내에 대남원조 선전을 통해 북한주민 통제를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측이 이를 과감히 수용한 것은 북한측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결코 아니며 정치·경제 등 제분야에서의 압도적인 대북국력우위를 바탕으로 한 자신감의 표현인 것이다.

남북간의 주민생활을 두고 말한다면 우리측이 북한동포를 다방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에 있으며 그같은 사실은 남북한간의 경제력 격차를 감안해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남북한 쌀, 천, 시멘트, 의약품 생산량 비교 (1983년도기준)

| 구 분 | 한국      | 북한      | 대비    |
|-----|---------|---------|-------|
| 쌀   | 540만톤   | 212만톤   | 2.5:1 |
| 천   | 56억미터   | 6억미터    | 9.3:1 |
| 시멘트 | 2,345만톤 | 860만톤   | 2.7:1 |
| 의약품 | 7,000여종 | 1,200여종 | 5.8:1 |

### 3. 남북적십자 실무접촉과 그 이후의 경과

#### 가.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 쌍방 각기 5명의 대표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1984년 9월 18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려, 무려 6시간 35분간 진행되었다.

이날 접촉에서 남북쌍방은 수재물자의 인도·인수장소로 해상수송의 경우에는 인천항과 북평항으로 합의를 보았으나 육로수송의 경우에는, 한적이 판문점을 주장한데 대해 북한측이 서울을 고집하다가 일방적으로 퇴장함으로써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대한적십자사측은 실무접촉에서 북한적십자사회측이 최근 우리측의 수해에 관심을 보이고, 또 우리측 수재민을 위한 물자제공까지 제의한 사실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물자인도·인수방법에 관한 기본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물자를 인도·인수하는 주체는 남북한의 두 적십자사가 된다.

둘째, 물자의 인도·인수는 9월 중에 완료한다.

셋째, 물자의 운반은 배로 한다.

네째, 물자의 인도·인수 장소는 운반거리 등을 감안하여 인천항으로 한다.

다섯째, 물자는 전량 일괄하여 인도·인수한다.

여섯째, 물자의 인도·인수와 관련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남북직통전화선을 운영한다.』

또한 이영덕 한적수석대표는 수재물자의 인도는, 인수하는 측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세계적십자연맹의 규약과 일반관례임을 상기시키면서, 물자수송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하려면 북한의 남포항과 최단거리에 있는 인천항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입장을 부연 설명하였다.

한편 북적측은 물자는 육로와 해상을 이용하여 수송할 것과 서울, 속초항, 인천항 및 부산항 등을 물자전달장소로 제시하였다.

특히, 물자전달방법과 관련하여 북적측은 북측선원과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에서 인수·인계의식을 거행하고 또 이들이 직접 수해지역을 방문하여 수재민을 위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접촉에서 인도·인수장소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쌍방은 한적측이 당초 해상만을 이용하자던 입장에서 자동차 수송을 위해 이미 물자를 개성에 집결시켜 놓았다는 북한측 사정을 받아들임으로써 해상과 육로를 통해 물자를 수송하는데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해상수송의 경우에도, 한적측이 북측이 주장한 속초대신 항만 능력이 더 좋은 북평항을 이용자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북측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인천항과 북평항을 이용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그러나 육상수송의 경우에는, 한적측이 인도·인수장소로 판문점 남측지역을 주장한데 반해 북한측은 굳이 서울까지 직접 수송을 고집함으로써 전혀 의견의 접근을 보지 못했으며, 급기야 북한측은 한적측의 거듭된 합의촉구를 묵살한 채 차기 접촉을 9월 21일에 개최하자는 말만 남기고 일방적으로 퇴장함으로써 1977년 12월 제25차 남북적십자 실무회담 이래 7년만에 열린 쌍방적십자사간의 접촉도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 나. 그 이후의 경과

실무접촉이 끝난 뒤 대한적십자사는 이영덕 수석대표와 유창순 총재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수재물자 인도·인도를 위한 절차문제 토의가 북한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말미암아 합의를 보지 못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유총재는 또 『북한측이 진심으로 물자를 줄 의사를 갖고 있다면 다른 조건을 고집하지 말고 이달 중에 인천, 북평, 판문점까지 그들의 물자를 배와 자동차로 신고 올 것』과 『9월 중에 물자를 완전히 인도할 구체적인 운반계획을 미리 우리측에 연락해 준다면 가장 신속하고도 간편한 방법으로 물자인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유창순 대한적십자사총재의 성명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오늘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은 우리측이 금일중에 모든 문제를 타결하기 위하여 협의를 계속하자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이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퇴장함으로써 끝나고 말았다.

오늘 남북한 적십자사간의 실무접촉은 북한적십자회측이 우리측 수재민에게 주겠다고 한 물자를 대한적십자사측에 인도하는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측은 처음부터 국제적십자 활동의 원칙과 관례를 무시하고 엉뚱하게도 그들의 물자를 자동차에 신고 전국의 수재민을 직접 찾아가 그들을 위로 하겠다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고집하였다.

우리측은 받는 쪽이 물자 인도 장소를 지정하는 적십자관례에 따라 북한측의 물자를 가장 신속하고도 편리한 방법으로 인수하기 위하여 인천항을 물자의 인도 장소로 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우리측은 북측의 희망을 받아들여 물자의 인수 장소로 인천항 이외에도 북평과 판문점을 추가하는 등 양보와 성의를 다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인천, 북평, 판문점을 물자인도장소로 합의하고 다른 절차문제 논의로 넘어가자는 우리측의 성의있는 노력을 외면하고 끝까지 서울까지 와서 물자를 인도하겠다고 고집함으로써 그들의 물자제공 제의가 순수한 인도주의와 동포애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보여 주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북한측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남북적십자사간의 접촉이 더 계속되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오늘 하루의 접촉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절차문제가 북한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말미암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북한측이 진심으로 물자를 줄 의사를 갖고 있다면 다른 조건을 고집하지 말고 이달중에 인천, 북평, 판문점까지 그들의 물자를 배와 자동차에 신고 오면 될 것이다.

우리는 북한측이 9월중에 물자를 완전히 인도할 구체적인 물자운반 계획을 미리 우리측에 연락해 준다면 가장 신속하고도 간편한 방법으로 물자인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둔다.

한편 북한측은 실무접촉에서 그들이 보여준 부당한 고집과 일방적인 퇴장으로 내외여론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9월 19일 돌연 태도를 돌변하여 실무접촉 대표단장 성명을 통해 그들의 물자를 일단 한적이 요구한 인천, 북평, 판문점으로 신고 오겠다고 밝혔다.

북측의 이러한 태도변화에 따른 물자제공제의를 한적이 수락함으로써, 남북적십자간에 수재물자 인도·인수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쌍방 적십자사는 물자 전달 방식, 북측인원에 대한 편의 및 신변안전보장 등 물자 인도·인수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9월 29일부터 10월 4일간에 걸쳐 수재물자 인도·인수작업을 완료하였다.

특히 물자 인도·인수 과정에서 북측이 한적이 거둬들인 요청에 뒤늦게나마 호응, 남북간에 직통 전화를 운용하게 된 것은 동사업이 낳은 또 하나의 성과라고 하겠다.

#### 4. 국내의 반응

북한측의 수재물자 제공제의를 받아들일겠다는 대한적십자사총재의 9월 14일자 성명발표에 대하여 국내언론들은 『역사적인 결단』이며, 『남북한간의 상부상조, 그리고 교류와 협력의 시대를 열려는 강력한 실천의지를 다시한번 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수재물자의 인도·인수 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열린 남북한 실무접촉이 북한측의 적십자정신을 벗어난 전제조건 요구로 성과없이 끝나자 『북한측의 저와 같은 터무니없는 전제조건들은 세계적십자연맹 재해구호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남북접촉을 목마르게 바라보던 우리는 이로써 또 한번 실망을 금치못하며 슬퍼한다』고 논평했다.

대내외 여론의 빈축을 산 북한측은 태도를 바꾸어 그들의 요구조건을 철회하고 수재물자를 인도하게 되자 『북한의 저의가 무엇이든 이번의 물자수수는 얼어붙은 남북관계에서 하나의 긍정적인 선례가 됐다는 점에서 그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이번 쌍방적십자간의 물자교환이 따스한 봄을 예고하는 '제비떼'가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표명했다.

해외언론들도 북한측의 수재물자 제공제의를 수락한 우리측의 결단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대한 한국정부의 계속된 공약을 과시한 긍정적 반응』(미국무성 「엘런·롭버그」 부대변인)이라고 평가했다.

수재물자 인도·인수를 계기로 조성된 한반도의 화해 분위기에 대하여 『이번 물자교류는 좀더 실질적인 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추측을 낳게 하고 있으나 당장 정치적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금물』(뉴욕 타임즈)이라고 경고했다.

주요 국내외 언론들의 논평은 다음과 같다.

#### 국내반응

##### 「교류」의 돌파구 마련되길 -한적의 결단과 강력한 대화의지-

(경향신문 1984. 9. 14)

남북한 경제교류가 실현되려면 무엇을 얼마만큼 서로 주고 받느냐하는 타산보다는 비록 작은 분야에서나마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용단과 결심이 앞서야 한다.

대한적십자사가 한국의 수재민에게 물자를 제공하겠다는 북한측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그런 뜻에서 역사적인 결단이 아닐 수 없다. (중략)

우리는 특히 이번 북한측 제의가 북한에 대해 물자와 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전두환 대통령의 「8·20 경제협력」 제의뒤에 나왔다는 점에 주목한다.(중략)

우리는 북한적십자회의 이번 제의가 순수성과 진실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속단하고 싶지 않다. 다만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물자제공을 제의한 북한측 저의는 명분을 가장한 정치적동기에서 나왔을 공산이 큰 것으로 본다.

그것은 한국내에서의 반공의식을 이완시켜 보려는 선진적인 책략이거나 북한내에서의 대남원조 선전을 통해 북한주민 통제를 합리화하려는 속셈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측 제의를 과감히 수용한 것은 북한측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남북간의 경제현실을 놓고 볼 때도 우리측이 북한동포를 다방면으로 도울 수 있는 입장에 있다. GNP(국민총생산)면에서 북한을 5배이상 압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곡물 생산량은 1983년말 현재 우리가 1.4대 1로 북한을 능가하고 있다. 쌀의 경우는

2.5대 1로 우리가 북한보다 많은 생산량을 나타냈고 시멘트는 2.7대 1의 격차로 우리가 앞서 있다.

이와 같은 비교에서 볼때 한적측의 이번 결단은 우리의 자신감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한적측이 북한적십자회의 결정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인 대담한 용단을 다시한번 평가하면서 북한이 진정 순수인도적 동기에서 그런 제의를 했다면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말고 그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와같은 물자교류를 극적인 전기로 삼아 북한측은 막혔던 남북의 장벽을 허무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다.(후략)

#### 북은 「인도」의 본질 지켜야

서울신문(1984. 9. 16)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적십자회측의 수재민을 위한 물자제공 제의를 수락하면서 물자인수 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한 데 대한 북적의 반응이 14일 하오 북한방송을 통해 나타났다. 북적은 18일 상오 판문점에서 남북적십자회를 갖자고 대답한 것이다. 한적은 15일 대표단 구성 등을 매듭지음으로써, 이제 남북적십자회 접촉이 다시 열리게 되었다.

제5공화국의 수립 이후 우리측은 남북문제에 대해 항상 대국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지엽말단에 매이지 않고 비록 우리가 양보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통일의 대도를 닦는 일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면 민족문제에 너그럽게 대처한다는 자세를 보여왔다. 비록 이러한 취지에서, 한적은 이번에 북적의 제의를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였던 것이다.

우리의 이같은 자세에 대해 북적역시 성실하게 대응할 것이 요청된다. 직설적으로 말해, 북한은 모처럼 이룩될 남북적십자회 접촉을 자신의 선전장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중략)

돌이켜보건대, 지난 날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남북대화가 깨어진 원인은 북한의 불성실에 있었다. 이산가족의 재회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못했던 까닭은 순수한 인도주의에 입각해야 할 이 회담을 김일성 「주체사상」의 선전무대로 전환시키려고 했던 북적의 정치적 저의에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전철이 이번에는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백히 지적해 두고자 한다.(중략)

우리는 남북대화의 재개야말로 민족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고 확신한다. 바로 이러한 확신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제의를 수락한 것이고 또 그에 앞서서 북한에 여러 가지 합리적이며구체적인 제안들을 내놓아 왔던 것이다. (중략)

북한은 순수한 민족적 양심을 버리지말고 허심탄회하게 이번의 남북적십자회 접촉에 임하기 바란다.

#### 북적의 예상됐던 트집

—선전극 그만하고 적십자 정신으로 나오라—

동아일보 (1984. 9. 19)

수재물자 인수절차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한적십자 실무회담이 18일 판문점에서 열렸으나 북한적십자회측의 적십자정신을 벗어난 전제조건 요구로 결렬되고 말았다. (중략)

북적측의 저와 같은 터무니없는 전제조건들은 세계 적십자연맹 재해구호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재해 구호 편람 제1장 4절 27조에 따르면 재해국 적십자에 보내는 「물자는 직접 그 적십자사에 보내거나 연맹의 중개를 통하든지 항상 적십자경로를 통해 보내도록」 되어 있다. (중략)

에당초 북적의 수재물자 제공제의를 한적이 수락키로 했을 때부터 우리는 본란을 통해 북적측의

북은 저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대한적화 책동만을 상기해도 북한이 북적의 이름으로 인도적인 수재물자를 동포애의 기초위에 보낼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데서 그렇다.(중략)

우리는 북의 북은 계략을 다 알고 있다. 북적은 인도주의로 돌아가 수재물자를 우리 한적측에 인도하기 바란다.

그들의 본심은 무엇인가  
—수재물자 적십자회담결렬 슬프다—

한국일보(1984. 9. 19)

남북적십자실무회담 1차회의의 내용을 대하는 우리는 우리의 순수한 수락의도가 북적측에 의하여 곡해·오용된 사실을 크게 개탄한다.

그들이 인천항외에 서울, 속초, 부산항을 인도장소로 제안하다가 인천·북평 및 서울을 끝까지 고집한 끝에 일방적으로 퇴장함으로써 이 회담은 결렬된 것이다.

이들이 수재물자를 직접 이재민을 상대로 위로와 함께 교부하겠다고 고집한 것은 그들의 북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드러낸 점에서 실로 실망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의 이와 같은 정치선전 목적을 이룩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로서 관계자와 기자들의 안전보장을 요구한 것은 필요없는 직접 전달을 전제로 하고 내세운 요구라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들의 수재물자 제공제외는 수재물자 제공이 목적이 아니라 이를 핑계삼아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억지 주장을 위한 정략에 찬 방편이라고 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심지어 그들은 비행기까지 띄워 수재물자를 이재민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고집한 것이다. 그들은 국제적십자가 정하여 세계적으로 통하는 보편적 제공방법과 절차를 도외시하고 흡사 무인지경을 유린하듯한 자세로 대한민국 안에서 무소불위의 횡포를 부리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중략)

남북접촉을 목마르게 바라보던 우리는 이로써 또 한번 실망을 금치못하며 슬퍼하는 것이다.

수재물자는 「제비」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조선일보 1984. 10. 2)

...(전략)...이 국제적 이목을 집중시킨 쌍방 적십자간의 이례적인 물자교환이 남북간의 해빙과 봄의 도래를 예고하는 한 마리의 제비일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회의가 엇갈린 심정에서 조심스레 지켜보고 있다. 한 예로 프랑스의 유력한 일간 「르 몽드」지는 한적측이 북적측의 수재물자 제공의 제의를 받아들인 데 첫 번째로 놀랐다고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양측이 물자전달 방법에 관한 한적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데 놀랐다는 것이다. 그리고 적절하게도 다음과 같이 썼다- 「한 마리의 제비가 왔다고 해서 봄이 온 것은 아니다. 남북한의 데탕트 신호는 여전히 신중을 기해야 할 조심스러운 상태에 있다」 고.

우리도 마찬가지로의 생각에서 이번 일을 바라보고 있다. 지금까지 남북한간에는 71년 이후 일련의 대소회담이 열렸으나 결과적으로는 다투면서 갈라지기 위한 모임이었다. 그런데 이번 한적측이 오로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북적측 제의를 태연히 받아들이고, 북적측은 어떤 생각에서든 한적측 요구조건을 그대로 따라 일이 성사된 것은 실로 다행한 일이다. 그리고 북적측이 우리가 그들의 대표·수송 요원·기자들에게 전달한 34대의 트럭분 8백 48개의 선물가방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가지고 돌아간 것도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로써 수재물자의 전달과 인수는 사실상 다 끝난 것과 다름이 없다.

물론 우리는 이 물자를 모든 수재민에게 골고루 분배할 것이다. 그러나 일이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이렇다 할 의미가 없다. 앞으로 북한에 어떤 천재나 불행한 일이 있어 우리가 도움을 제의할 경우 북한측이 우리가 한 것처럼 쾌히 수락하게 될 때 남북간의 적십자사업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업은 수재물자를 주고받는 일의 몇 천 몇 만의 절실한 의미를 지니는 남북한 이산가족찾기운동에로까지 진전될 때 그 당면한 인도주의적 임무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할 것이다.(중략)

정치적책략, 냉전, 상대방에 대한 외교적 고립화, 무장간첩침투, 내부교란, 테러 또는 전쟁으로서는 한반도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비상한 결단으로 우선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시켜야만 이 거래는 민족적 생존과 번영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쌍방 적십자간의 물자교환이 따스한 봄을 예고하는 한 마리 아닌 「제비떼」가 되기를, 비록 망상이 될지라도 우리는 신중한 태도로 기대해 보고자 한다.

#### 「북적물자 인수」 이후

중앙일보(1984. 10. 2)

남북적십자간의 수재물자 인수 작업이 사고나 차질없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을 다행하게 생각한다. (중략)

북한의 저의가 무엇이든 이번의 물자수수는 얼어붙은 남북관계에서 하나의 긍정적인 선례가 됐다는 점에서 그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 (중략)

이번을 계기로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간의 인도주의 사업이 심화되고, 대화가 재개되어 경제·문화·체육 등 제분야의 교류로 확산될 때 그것은 진정한 민족사적 의미를 갖는다.(중략)

수재물자의 수수 과정을 지켜본 내외의 여론은 모두들 의외였다는 표정과 함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제의를 우리가 수락하는 것이나, 경제적으로 빈곤한 북한이 실제로 물자를 보낸다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예상될 수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남북관계가 세인의 예상이나 의도를 벗어나서 급진전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이번 일과 같이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라면 더없이 바람직한 것이지만 부정적인 일이라면 위협과 불안을 수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외국에선 이번 경험이 남북관계개선에 도움이 될지는 의심스럽다고 분석하고 있다.(중략)

문제는 평양측에 있다. 호전적인 과격파가 우세를 누리는 한 남북관계는 비관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중공이 모험적인 혁명노선에서 오늘의 개방적인 실용주의로 전환하기까지는 4인방의 제거라는 권력구조의 개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선 실용주의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김정일 일파의 군사적 모험주의자들이 실권을 장악, 대남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가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면서도 쉽게 낙관하거나 경계태세를 늦출 수 없는 것은 그 때문이다.

## 해외 주요 반응

### <미국>

미국무성 「엘런·툼버그」 부대변인 브리핑(1984. 9. 14)

-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대한 한국정부의 계속된 공약을 과시한 긍정적 반응이라고 생각함.

Washington Times(1984. 9. 14)

- 옵서버들은 한국이 북한의 제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서울측은 북한측이 허세를 부리다가 약속한대로 물자를 보내지 못할 경우, 일대홍보적 승리를 거둘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측이 물자를 제대로 보낼 경우라도 서울측은 1979년말 대화가 단절된 이래 한국측이 노력해오던 바 북한을 어떤 형태로든 대화로 이끌어내는데 성공하게 될 것임.

UPI 통신(1984. 9. 14)

- 한국은 한국의 수해이재민을 돕기 위해 구호품을 보내겠다는 북한의 제의를 14일 놀랍게도 수락하고 이 결정은 남북한간의 긴장된 관계를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 한국은 이 북한제안을 수락하면서 앞으로 북한에서 재난이 있을 때에는 한국도 물자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음.

AP 통신(1984. 9. 14)

- 한국은 14일 북한으로부터 이 수해이재민 구호제의를 수락하고 이 분단된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시키는 하나의 조치로서 즉시 회담을 열자고 촉구했음.
- 한국적십자사 성명내용으로 보아 한국관리들이 이 수해이재민 구호제의를 남북한 교류를 시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받아들이고 있음은 분명함.

뉴욕 TIMES(1984. 10. 1)

- 이번 물자교류는 좀더 실질적인 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추측을 낳게 하고 있으나 서방외교관들은 당장 정치적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경고했음.

### <일본>

일본외무성 당국자 논평(1984. 9. 13)

- 한국이 북한측의 제의를 수락하면 환영함. 만일 한국측이 수락한다면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이며, 남북간의 평화적 접촉을 위한 실마리를 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얼마전 대통령각하의 경제교류 및 협력, 무상원조제의를 북한이 거절한 점과 대조적으로 한국측이 수락할 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미지」가 향상될 것이며, 대화를 위한 한국의 성실성을 과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

NHK 방송(1984. 9. 14)

-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큰 곤경을 겪고 있는 북한이 과연 당초 제의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지가 관심의 대상이 됨.

「아사히」신문(1984. 9. 14)

-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측의 제의를 수락한 배경에는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찾아보자는 한국측의 염원이 크게 작용한 것임.

「아사히」신문(1984. 9. 19)

- 남북대화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일념에서 그다지 필요하지도 않은 물자를 받아들이기로 한 한국측으로서는 그것이 정치선전에 활용당하는 것은 견딜 수 없다는 입장임.

「상깨이」신문(1984. 9. 19)

- 북한이 물자제공 제의를 하면서 인도주의를 표방하고 있어도 그것이 정치선전과 뗄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새삼 입증한 것이 이번 수재물자 인도·인수를 위한 실무접촉이었음.

「요미우리」신문(1984. 10. 1)

- 경제적으로 크게 우위에 있는 한국측이 북적의 물자제제의제안을 수락한 것은 인도적인 차원의 교류가 남북한의 대화 및 앞으로의 폭넓은 교류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함.

일본 경제신문(1984. 10. 2)

- 동일민족이 싸웠던 6·25 동란 이후 처음있는 남북간의 물자교류 실현이며 획기적인 일임. 이것이 한꺼번에 남북간의 대립을 해소하게 된다고 낙관은 할 수 없으나 남북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한반도의 영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연결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함.

「마이니찌」신문(1984. 10. 2)

- 남북한간의 수해물품교류가 실현된 그 자체가 남북대화의 착실한 진진이며 이번 교류로 남북간의 화해와 상호부조의 기반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영국>

REUTER 통신(1984. 9. 14)

- 한국은 북한의 제의를 수락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놀라운 사실은 대한적십자사 성명을 통해 발표되었음.
- 이러한 결정은 한국측이 수차례에 걸쳐 시도되어 온 북한과의 대화노력실패 이후에 발표된 것으로 한국측의 동 제의 수락은 북한측에 당혹감을 줄 것으로 보임.

REUTER 통신 (1984. 9. 18)

- 북한이 수재물자를 직접 서울까지 운반하겠다는 당초의 입장을 철회하고 국제적십자의 원칙과 관례에 따라 구호물자를 전달기로 결정한 것은 1년전의 랭군폭탄사건으로 손상을 입은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해보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 분명함.

THE TIMES(1984. 9. 18)

- 표면상 모든 조건은 고무적이나 남북한회담의 진전상황을 주시해온 사람들은 회의적임. 서방 외교관들은 이번 일이 성사되기에는 북한측 제의에 너무나 많은 함정이 숨어 있으며 북한측이 정치적 선전효과를 노릴 가능성이 있음.

<캐나다>

CBS 방송(1984. 9. 14)

- 북한이 선전효과를 노리기 위해 이 같은 제의를 했으나, 한국은 경제력이 훨씬 앞서있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없이 이를 수락한 것으로 생각함.

<프랑스>

AFP통신(1984. 9. 14)

- 한국은 북한의 제의를 동족간의 인도적 문제에서부터 상부상조의 길을 트고 남북한간 관계 개선을 위한 견지에서 수락한 것임.

<국제적십자사연맹>

「한스 회그」 사무국장 논평(1984. 9. 14)

- 최근 남북한이 다같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국제적십자사의 제2차 세계평화회의가 열린데 이어 이같은 조치가 한국측에 의해 취해진 것은 매우 만족스러운 일임.

### 제3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 1. 남북경제회담 제의

신병현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984년 10월 12일 남북한 물자교역과 경제협력의 실현을 위한 남북경제회담 개최를 제의하는 서한을 북한측 정무원 부총리 최영림에게 보냈다.

신부총리는 이 서한에서 『최근 우리 정부는 귀측에 대하여 남북한 교역과 경제협력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제의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의 관계개선과 공동번영을 추구해 나갈 것을 강조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고, 『날마다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적 경쟁 속에서 우리 민족의 생존과 권익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더 이상 반목과 대결로 민족의 역량을 낭비하지 말고 이념과 제도를 초월하여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남북한의 물자교역과 경제협력이 실현될 수만 있다면 이는 동포들의 생활에 직접 보탬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장차 모든 분야에서 남북한의 균형발전과 공동번영, 그리고 민족화합을 이루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는 우리측 경제인과 기업들이 남북한 교역과 경제협력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다짐했다.

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남북한간의 교역과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상설기구로서 쌍방당국과 경제계 대표들로 구성되는 남북한 경제협력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이상과 같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정부의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남북한 경제당국 및 민간 경제단체 대표들이 참가하는』 남북 경제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신병현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북한측 정무원 부총리 최영림에게 보낸 서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북한 정무원 부총리 최영림 귀하

최근 우리 정부는 귀측에 대하여 남북한 교역과 경제협력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제의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의 관계개선과 공동번영을 추구해 나갈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측의 이 같은 조치는 근 40년동안 서로 담을 쌓고 살아온 남북한 동포들 사이에 경제분야에서 상부상조하는 길을 트고 이를 계기로 온 겨레가 염원하는 조국통일을 조금이라도 앞당겨 보자는데 그 참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한의 물자교역과 경제협력이 실현될 수만 있다면 이는 당장 남북한 동포들의 생활에 직접 보탬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장차 모든 분야에서 남북한의 균형발전과 공동번영, 그리고 민족화합을 이룩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날마다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적 경제경쟁 속에서 우리 민족의 생존과 권익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더 이상 반목과 대결로 민족의 역량을 낭비하지 말고 이념과 제도를 초월하여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최근 우리 정부가 제의한 남북한간의 물자교역과 경제협력이 하루속히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근에 와서 귀측이 외부와의 경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조치를 모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그같은 조치가 앞으로 남북한의 경제교류와 협력의 길을 열어 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측 경제인과 기업들이 남북한 교역과 경제협력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남북한 당국의 경제분야 대표들과 민간경제단체 대표들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남북한간의 교역과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상설기구로서 쌍방 당국과 경제계 대표들로 구성되는 남북한 경제협력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정부의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남북한 경제당국 및 민간경제단체 대표들이 함께 참가하는 남북경제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남북한간의 이러한 회담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그 개최일시와 장소의 결정을 귀측에 일임하는 바입니다.

귀하의 긍정적인 회답을 기대합니다.

1984년 10월 10일

대한민국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신병현

남북한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제외의 배경

우리는 지난 1982년 1월 22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천명한 이후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로서 그 해 2월 1일 「20개 시범실천사업」을 제의하고 거기서 남북한간의 일용생산품의 교역과 자연자원의 공동개발 및 공동이용 등 경제협력을 북한측에 제의한 바 있다.

(경제분야 대북제의 연표)

| 일시          | 내용   |
|-------------|--|
| 1977. 1. 12 | ○대북식량무상원조제의  |
| 1978. 6. 23 | ○남북간교역, 자본의협력추진을위한민간경제협력기구구성<br>○필요시각료회담개최   |
| 1982. 1. 22 | ○남북한기본관계감정협정체결로민족화합실현<br>○상호교류·협력을통한사회개방추진   |
| 1982. 2. 1  | ○「20개시범실천사업」제외<br>—철약산금강산지역자유관광공동지역으로개발<br>—남북자유공동어로지역설정<br>—민족경제의번영을위하여자연자원의공동개발이용등 |
| 1984. 8. 20 | ○경제교류협력및물자·기술무상제공제의  |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거둬들인 공업화정책의 실패와 군사비의 과다지출 등으로 만성적인 경제침체와 심각한 민생고에 직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경제적 침체를 극복코자 1980년대 이래 선진기술과 설비도입을 위해 외국과의 합작투자유치를 시도하는 등 새로운 경제협력 방식을 추구하고 있으나 북한자체가 안고 있는 투자여건의 미비와 체제상의 제약요인으로 인해 성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따라서 남북한간의 경제력과 국민생활의 복지수준은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상황을 감안하고 남북한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0일 전두환 대통령은 남북간에 교역과 경제협력을 실시할 것과 북한측이 동의한다면 북한동포들의 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물자를 무상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한 바 있다.

우리가 최근에 북한측의 수재물자를 받아들인 것도 물자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인도적 측면에서

남북한간에 상부상조의 선례를 마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관계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는 염원에서 비롯된 조치의 일환인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의해 모처럼 조성된 화해분위기를 충분히 활용하여 보다 폭넓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추구해 나가야 할 시점에 있으며, 이번 신부총리의 대북 경제협력 제의도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한 남북관계 개선과 공동번영 모색의 주도적 노력인 것이다.

#### 남북한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제의의 의의

첫째, 전두환 대통령이 천명한 「8·20」 제의의 실천적 조치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지난 8월 20일 우리 민족이 40년 가까이 겪고 있는 분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남북한이 화합과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요청임을 지적하고 북한측에게 남북한간에 교역과 경제협력을 실시하여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이룩하자고 촉구한 바 있다.

이번 부총리의 대북서한은 이같은 정신에 입각하여 남북한 경제당국과 민간경제 단체간에 대화를 통해 남북한 교역과 경제협력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이다.

둘째,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한 공동이익과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일관된 노력의 일환이다.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기본정신은 우리 민족이 화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절차에 의해 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 정신에 입각하여 남북한 관계 개선과 민족화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우리가 북한측에 대해 중단된 남북체육회담과 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개를 촉구한데 이어 남북경제회담을 제의한 것도 바로 이러한 남북한 관계개선과 민족화합을 위한 일관된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금번 남북경제회담 제의의 큰 뜻은 근 40년간 담을 쌓고 살아온 남북한 동포간에 경제분야에서 상부상조의 길을 트고, 모든 분야에서의 공동이익과 공동번영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평화통일의 디딤돌을 마련해 보려는 데 있다 할 것이다.

셋째, 남북한 경제회담에 남북한 경제당국 뿐만 아니라 민간경제단체 대표도 참가시킴으로써 경제협력의 실현을 위해 진일보한 구체적인 실천적 조치이다.

물론 이번 제의도 당국주도하에 남북한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우리의 통일대화 정책의 일관된 기초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경제회담에 경제당국 대표 뿐만 아니라 민간경제단체 대표들을 포함시키고 우리 경제인과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것을 다짐한 것은 남북한교역과 경제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 뿐만 아니라 남북한 교역과 합작 투자의 주요 주체가 될 민간경제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는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치인 것이다.

넷째, 남북한 경제협력기구를 상설화함으로써 경제협력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물자교역과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르는 기술적, 실무적 문제에 대한 협의와 조정이 간단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전담할 상설기구의 설치는 필요불가결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번 부총리의 대북제의에서 남북한간의 교역과 경제협력을 추진할 쌍방 당국과 경제계 대표로 구성되는 상설 경제협력 기구의 설치를 제의한 것은 단순한 명분의 차원을 뛰어 넘은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경제협력을 성취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라 할 것이다.

한편 민간경제 4단체장(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정주영, 한국무역협회회장 남덕우, 대한상공회의

사회장 정수창,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유기정)들은 1984년 10월 1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병현 부총리의 대북 경제회담개최제의를 환영하며 남북한 교역과 경제협력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밝히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경제 4단체장들은 이 합동성명에서 『남북한이 서로 문을 열고 경제협력을 활발히 추진해 나간다면 쌍방에게 모두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남북한 관계개선에도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 『우리는 호혜적 입장에서 남북한간에 먼저 물자교역을 활발히 진행시키고 나아가서 각 분야별로 합작투자에도 참가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히고 『북한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촉구했다.

경제 4단체장들이 발표한 합동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신병현 부총리는 10월 12일 북한측에 보낸 서한에서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한간의 회담을 북한측에 제의하고 우리측 경제인과 기업들이 북한과의 교역 및 경제협력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제의가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의 공동번영과 남북한 관계개선을 도모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길을 개척해 보려는 실천의지의 발로라는 점에서 이를 환영하면서 남북한 교역과 경제협력에 적극 참여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오늘날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만이 반목과 대결을 지속함으로써 민족의 역량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동족의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북한은 분단 이전에 하나의 경제단위였고 자원면에서도 상호보완관계에 있었습니다.

남북한이 서로 문을 열고 경제협력을 활발히 추진해 나간다면 쌍방에게 모두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남북한관계개선에도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경제인들은 남북한이 각기 외국하고도 교역과 경제협력을 하면서 하물며 같은 동포끼리 아무런 접촉과 협력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이제야 말로 남북한 경제인들이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의 공동번영과 화합을 위한 민족경제발전에 힘을 모아 앞장서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호혜적 입장에서 남북한간에 먼저 물자교역을 활발히 진행시키고 나아가서 각 분야별로 합작투자에도 참가할 것을 희망합니다.

우리는 물자교역에 있어 북한으로부터 무연탄, 철광석, 마그네사이트, 연괴 등 광산물과 대구알, 천연향료 등 농수산물을 사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우리물자 가운데 북한측이 사가기를 희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기꺼이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물자교역이 활발히 진전된다면 탄광 및 광산개발, 가전제품생산, 농약 및 의약품 생산, 해운회사 및 관광회사 설립과 운영 등에 서로 합작투자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남북한 물자교역 및 합작투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의한 남북 경제회담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북한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1984년 10월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정주영

한국무역협회회장 남덕우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정수창

국내 주요 반응

국내 언론들은 신병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의 대북제의에 대하여 『이 제의는 지난 8월 20일 전두환 대통령이 남북간의 오랜 대결구조에 중지부를 찍고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을 위해 상호 교류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야겠다는 충정에서 천명한 바 「남북한 교역 및 경제협력과 기술 및 물자의 무상제공」 제의를 쌍방 경제당국과 민간경제인들의 동참아래 제도적으로 구체화하려는 실천적조치』라고 평가하고, 『남북한의 물자교역과 경제협력이 실현되기만 한다면 이는 남북한 동포의 복리증진과 민생안정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접촉과 교류를 증대시키는 데도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전망하면서, 『이번 신부총리의 대북제의는 국제적 추세에도 부응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제의』라고 논평했다.

또한 현시점이 남북한간의 『사상 이념 체제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역량의 소모경쟁이 아닌 공영의 길을 걸어야 할 때』라고 규정하고, 『문제는 북측의 정치적 결단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북은 다시 한번 민족 양심의 시험대 앞에 서 있음』을 명백히 인식하고 『역사의 흐름과 시대적 조류를 외면하지 않는 순수한 자세로 북한측이 남북경제회담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국내 주요 언론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남북경제회담제의에 반대할 이유없다

(경향신문 1984. 10. 12)

신병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북한측 정무원 부총리 최영림에게 서한을 보내고 「남북경제회담개최」를 정식으로 제의했다. 신부총리는 이 서한에서 남북한 당국의 경제분야 대표들과 민간경제단체 대표들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남북한간의 교역과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상설기구로서 쌍방 당국과 경제계 대표들로 구성되는 「남북한 경제협력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신부총리는 특히 이 남북경제회담에 정부의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남북한 경제당국 및 민간단체 대표들이 함께 참가할 것을 제의했다. 이는 정부당국과 민간이 공동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남북관계를 보다 폭넓게 개선해 보겠다는 일관된 대화의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한 관계는 최근 전두환 대통령의 「8·20 경제협력제의」와 「수재물자」 수수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성숙된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 중단된 남북체육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개를 촉구한 데 이어 남북경제회담을 제의한 것은 이러한 대화성숙의 분위기를 깨지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대표들이 서로 얼굴을 맞댈 수 있는 기회를 만듦으로써 화해분위기를 조성해 보자는 데 참뜻이 있는 것이다.

남북한의 물자교역과 경제협력이 실현되기만 한다면 이는 남북한 동포의 복리증진과 민생안정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접촉과 교류를 증대시키는 데도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남북한 교역은 또한 수송비가 적게 들고 서로 특성있는 생산품을 교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 비해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인 교역대상 품목들은 북한측이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여 「쌍방당국과 경제계 대표들로 구성되는 남북한 경제협력기구」가 구성되면 그 곳에서 진지하게 논의 결정되겠지만 그 종류는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손꼽히는 교역품으로는 우리의 직물류, 신발류, 전자제

품, 의약품, 석유제품, 기계, 자동차 등 공산품과 북한의 무연탄, 철광석, 아연 등의 광산물을 들 수 있다.

기술협력이나 자본협력도 가능할 것이다. 세계수준에 도달한 우리의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여 북한동포의 생활향상에 도움이 되는 공장을 세우고 상품을 만들어 낸다든지, 자연자원의 공동개발과 이용면에 협력의 폭을 넓힐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우리는 북한측에 차관을 제공하는 문제도 고려할 수 있을 줄 안다.

우리는 이미 「6·23선언」 이래 대외적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우리와 이념을 달리하는 공산권과도 교역의 길을 트고 있다. 북한측도 일본이나 기타 자본주의 국가들과 교역하거나 기술도입, 자본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른바 「합영법」을 제정, 서방자본까지 수용하겠다는 마당에 한뼘줄 동포끼리 교역하고 협력하지 못할 까닭은 없다고 본다.

오늘의 국제사회는 정치이념이나 체제를 초월하여 실질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상호교류와 협력의 길을 넓혀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되어있다. 이번 신부총리의 대북 제의는 이와 같은 국제적 추세에도 부응하는 것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제의라 하겠다. 북한측이 진심으로 남북화해를 원한다면 우리측이 「수재물자」를 대국적인 견지에서 받아들인 이상 이번의 「경제회담제」를 거부해서는 안될 것이다.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의에 북한당국의 성의있는 회답을 촉구하는 바이다.

#### 남북한 경제회담 제의

-세계사의 시각에 새로운 장을 열자-

(동아일보, 1984.10.12.)

남북한 간에 경제회담을 열자고 제의하는 신병현 부총리의 서한이 12일 북한측 최영립 정무원 부총리 앞으로 전달되었다.

우리는 바로 얼마전 수해물자와 이에 답하는 선물의 형식으로 근 40년만에 서로 물자를 순순히 주고 받았다. 그것이 비록 경제적인 필요에서 이루어진 교역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이것을 의미 깊고 획기적인 일로 주시했다.

이미 이만한 선례가 만들어진 마당에 무엇을 더 이상 주저할 것인가. 이것을 계기로 삼고 그 경험을 토대 삼아 남북간에 서로 필요한 물자를 교역하고 더 나아가 자본과 기술협력을 실현해 간다면 그것은 민족의 행복이 될 것이다.

어느쪽이 제의에서 선수를 치고 정치적인 계산 끝에 마지 못해 응하는 차원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 역사의 흐름과 시대적 조류를 외면하지 않는 순수한 자세로 북한측이 남북경제회담에 응해줄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 왜 경제회담 뿐이겠는가. 남북 체육회담과 이산가족의 재회를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을 포함하여 여러 갈래의 대화를 허심탄회한 자세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바라는 것은 그것이 민족의 장래와 통일을 위해 언젠가는 꼭 이루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 나타날 현실적 효과도 남북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다. 북한의 광물자원과 남한의 생활용품을 구상무역의 형태로라도 교역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일반무역의 형태로 발전시키며 자본과 기술협력으로 이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북한 주민의 생활향상과 경제개발을 위해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이미 북한은 서방의 투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합영법을 마련하지 않았는가. 말과 생각이 다르고 기술 수준의 격차도 심한 서방 선진국의 투자보다는 남한의 시설재와 기술을 받아 들인다면 북의 경제발전을 빠르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또한 남한에도 이익을 준다.

우리와 같은 분단국인 서독과 동독의 경우에는 이미 1950년대에 경제교류를 시작했다. 해마다

교역량이 크게 늘어 지난해엔 56억달러어치의 물자를 교역했다. 그 내용도 농산물과 생활 필수품의 교류에서 시작하여 점차 기술품의 교류으로 확대되고 자본의 교류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우리 남북한이 교훈삼을 만한 좋은 선례다.

세계는 개방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중공도 이미 개방 경제체제를 실현중이다. 그런 속에서도 어느 때보다 민족주의와 국가주의가 팽배하고 실리가 우선적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무엇을 주저할 것인가. 문을 닫아걸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으며 기왕 문을 열 것이라면 민족끼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실리도 크다. 경제 교류와 대화가 진전되고 그것이 신뢰와 평화를 다져 남북이 국방비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민족의 큰 복이 될 것이다.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우리가 앞서서 세계사에 획을 긋겠다는 자부심도 가져보자.

북한측의 주저없는 수락을 믿고 싶다.

#### 남북경제회담을 열자

(서울신문, 1984.10.13)

정부는 12일 신병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이 북한의 정무원 부총리 최영림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남북한교역과 경제협력을 위한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남북한 경제 당국과 경제계대표들이 함께 참가하는 「남북경제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북한측에 제의했다.

이 제의는 지난 근 40년 동안 서로 담을 쌓고 살아온 남북한 동포간에 현실적이고도 실천이 용이한 경제분야에서 상부상조하고 공동 이익과 공동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을 틔으로써 온 겨레가 염원하는 평화 통일의 디딤돌을 확고히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점에 그 획기적인 뜻이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이 제의는 지난 8월 20일 전두환 대통령이 남북간의 오랜 대결 구조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 화합과 평화통일을 위해 상호 교류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야겠다는 충정에서 천명한 바 「남북한 교역 및 경제 협력과 기술 및 물자의 무상제공」 제의를 쌍방 경제당국과 민간경제인들의 동참 아래 제도적으로 구체화하려는 실천적 조치로서의 뜻도 담고 있다. 이점에서 우리는 북한 당국이 이 제의에 허심탄회하게 호응해 올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우리 정부는 이보다 앞서 지난 1982년 1월 22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천명한 후 이를 구현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서 그 해 2월 1일 「20개 시범 실천사업」 제의를 통해 남북한간의 일용생산품 교역과 자연자원 공동개발 및 공동이용 등 경제협력을 북한측에 촉구한 바도 있다. 그런데 북한측은 이에 대해 그동안 줄곧 거부반응만 보여왔다.

그들이 이 제의에 선뜻 호응해 나설 수 없었던 것은 남북한간에 경제교류가 실시될 경우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한의 경제사정이 노출되어 그것이 자신의 체제유지에 부정적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는 약점이 있었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그것은 좁은 소견이다.

오늘날 국제사회에 있어서 크고 작은 모든 분쟁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특히 이념이나 체제의 장벽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상호 교류와 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일은 일반적인 추세로 되어 있다. 미국과 중공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인 동서독간의 활발한 상호교류와 협력이 그 좋은 본보기가 아닌가.

한반도는 원래 분단 이전에 하나의 경제단위였고 자원이나 산업·기능면에서 서로 긴밀한 보완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분단 이후에는 그것이 불가능해 짐으로써 경제적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대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소위 「5대경제난」이라 불리는 에너지 부족·기술 후진·식량난·수송난·외채 상환능력의 상실 등은 그 근원을 따져보면 모두가 여기에 기인하고 있다.

최근 북한당국은 이같은 경제난을 해소해 보고자 외국자본 및 기술의 유치를 위한 이른바 「합작 투자 운영법」이라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대다수 서방 국가들은 이를 의문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북한측이 그같은 처지에서 동족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지난번 남북한간에 순조롭게 이루어진 수재물자의 인도·인수에서 그 가능성이 실증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북한당국은 진정 거래의 화합과 공영을 바란다면 이번의 우리측 제의에 아무런 조건을 달지 말고 마땅히 호응해야 할 것이다.

#### 민족양심의 시험대

- 「경제회담」 등에서의 북측 답을 지켜보며-

(조선일보, 1984.10.13)

남·북한 관계에 과연 새로운 전기는 마련될 것인가? 하는 것이 작금 범상찮은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하지만 분단 39년에 처음으로 물자교환이 실현된 마당에서도, 이와 같은 국민적 관심도가 결코 냉철성을 결여하고 있지는 않다. 그 까닭을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1년전의 아웅산 테러만행 사건이 아직도 우리 가슴에 현실로 생생히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1970년대의 대화를 땅굴로 응수하는 등의 저들의 배덕행위를 줄곧 겪어온 우리이다.

그러나 일면 대비에, 일면 길을 뚫으려는 민족 숙원을 단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리하여 이른바 수재물자라는 걸 받아들이고 선물을 들려서 보냈다. 이를 계기로 대화의 문을 다시 트려고 체육회담 재개와, 이산가족 찾기의 적십자간 접촉 회복을 제의하고 촉구했다.

이러한 일련의 성의와 노력에 대한 북측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는 중에, 12일 신병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또하나 대화와 접촉통로 개설을 북측에 제의했다. 신부총리 제의 내용은, 남·북한 당국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민간 경제단체 대표들도 참가하는 당국·민간 혼성 「남북 경제회담」을 개최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이 제의의 기초는 꼭 새로운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1978년 남·북간 교역과 자본협력 촉진을 위한 경제 협력기구 구성과 관련, 각료회담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1982년 들어 남·북한 기본관계 잠정협정 체결로 교류·협력·사회개방을 하고, 「20개항의 시범 실천사업」을 공동으로 벌이자고 제의하기도 했다. 수재물자와 선물교환으로 불완전하나마 일시적 실현을 보았다고 할 인천항·진남포항의 개방, 설악산·금강산 지역관광 공동개발, 남·북 공동 어로 지역설정, 서울·평양간 도로연결, 자연자원 공동개발 등등이 그 내용이다.

이런 우리측 제안들을 묶어 재강조한 것이 지난 8월 20일, 전두환 대통령의 남·북한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추진 제창이었다. 이에 북은 일면 거부반응을 보이면서 일면 이른바 수재물자 제공을 제의해 왔다. 그렇게 해서 최초로 남·북한 물자교환이 실현됐고, 그로하여 새로운 남·북한 동향조짐이 국민적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신부총리의 「10·10 남북 경제회담」 제의는 「8·20제의」의 구현·실무화를 재촉한 것이고, 그 실현 장치로서 남·북한 경제 협력기구를 상설토록 하자는 구체적 방안을 담고 있다. 북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들은 이제 공개 제기한 우리의 3가지 물음과 촉구에 답해야 한다. 체육회담, 적십자 회담, 경제 회담 그 어느 것 하나도 외면할 구실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민족적 상식이다.

더구나 북은 최근 「합영법」 인가 하는 것으로 서방측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코자 하는 제스처를 보였다. 그것이 제스처 아닌 그들의 절실한 현실적 필요 과제라면, 같은 땅 같은 민족간의 경제 협력을 거부할 이유는 더더군다나 찾기 어렵다 할 것이다.

신부총리도 강조했듯이, 사상·이념·체제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역량의 소모 경쟁 아닌, 공영의 길을 열어야 할 때다. 그것이 호혜·협력·교류의 문호개방으로, 남·북이 다가설 것을 기다려 온 우리의 기대이다. 북은 다시 한번 민족양심의 시험대 앞에 섰다. 그 답을 기다려 본다.

#### 남북 경제회담 제의

(중앙일보, 1984.10.12)

신병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2일 북한의 정무원(내각) 부총리 최영립에게 서한을 보내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방안을 제의했다.

그 내용은 남북간의 교류와 경제협력을 위해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남북경제회담을 개최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두 개의 남북 공동기구는 남북한 당국과 민간경제 대표들로 구성하고 경제회담의 경우는 차관급을 수석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이로써 우리측은 최근 결렬된 체육회담의 재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에 이어 세 번째로 남북간 양자간의 직접 대화를 북한에 제의했다.

그러나 평양측은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체육회담이나 적십자회담과 마찬가지로 경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상설 기구나 남북 경제회담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굳이 이 자리에서 부연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당연한 것이다.

이번 제의는 1982년 2월 우리정부의 「20개 시범 실천사업」이나 1984년 8월 전두환 대통령의 「남북간의 교역과 경제협력 실시」 및 「북한에 대한 기술·물자의 무상제공」에 관한 제의를 한층 구체화한 것이다.

지금 북한이 근래의 경제적 난관을 타개키 위해 중공식 근대화 방법을 도입하여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경제정책 위원회라는 기구를 새로 만들고 중공의 합변법을 본떠 합영법을 만들어 서방기업에 참여의 문을 열어 놓은 것은 그 같은 정책의 실천을 위한 준비작업임이 분명하다.

이번 신병현 부총리의 제의는 그같은 북한의 근대화 사업에 우리가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참여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제의의 근본목적은 다른 외국의 기업처럼 이윤을 얻는 것보다는 남북으로 갈려있는 우리 민족의 공동번영과 화합을 이룩하고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앞당겨보자는 보다 높은 민족주의적 차원에 있다.

같은 분단민족국가인 동서독의 경우는 1951년의 「양독 교역 베를린 협정」 이후 33년째 경제협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1983년의 경우 서독은 동독에 77억마르크(29.3억달러)를 수출하고 동독은 76억마르크(28.9억달러)를 서독에 수출했다.

이것은 서독 대외 무역 규모의 1.5%에 불과하지만 동독에는 16%의 규모가 된다.

서독은 1983년의 10억마르크에 이어 1984년에 다시 9억마르크의 재정차관을 동독에 제공했다.

서독은 또 서독의 대기업인 폴크스바겐과 지멘스와의 합작회사를 동독에 건립, 합작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양독간의 경제교류는 외국간의 교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세나 각종 과징금을 서로 징수하지 않고 수입을 「구입」, 수출은 「공급」이라는 용어로 대신하고 있다.

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성숙된 동족간의 협력 관계인가. 그들은 결코 없으면서 있는 체 하거나 정치적인 선전을 위해 제스처를 남발하지는 않고 있다.

그것은 정치·경제발전이 앞서 있는 서독의 외교적 주도권을 아무런 열등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르만 민족주의가 동독에 성숙돼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최근 계속된 우리의 제의들을 평양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국민족주의가 북한에 성숙돼있기를 기대하면서 북한의 반응을 주시코자 한다.

강대 열강 사이에 끼여 있는 우리 민족의 살길은 남북간의 경쟁이 아니고 남북협력을 통한 주변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기 때문이다.

#### 남북교류 빠를수록 좋다

(한국일보, 1984.10.13)

요즈음 한반도의 남북 관계와 주변정세에 「새로운 시험」의 기운이 움트기 시작했다고 감측된다. 여러 가지 조짐으로 미루어 만약에 남북간의 자주적인 직접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변국들에 의한 「분위기조성」이니 종용 또는 충고가 잇따르게 될는지 모른다. 특히 북한측이 선입견의 고집보다도 정세변화를 직시할 필요가 있겠다.

때마침 12일 신병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북한의 정무원 부총리 최영림 앞으로 남북경제 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의한 서한을 보냈다. 주요 골자는 남북한간의 물자교역과 경제협력을 실시함으로써 주민 생활개선은 물론, 양 지역의 균형발전과 공동번영 그리고 민족화합에 이바지하자는 취지이고, 그 경제회담에는 남북한 당국의 경제분야 대표들과 민간경제단체 대표들을 참가시키자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남북한 경제협력 기구의 설치도 좋을 것이라고 제의했다.

우리는 신부총리의 새 제의가 민족의 역량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고 국제경제의 추세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면서 점차 남북협력의 폭을 실질적으로 넓혀나갈 수 있는 경제인다운 차분한 구상을 담았다고 보는데서 주저없이 찬동한다. 북한경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위협담이 없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최근에 들려오는 경제난 해소에 크게 도움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문제는 북측의 정치적 결단뿐인데, 내외정세의 변화와 수요를 감안하는데서 긍정적 호응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측이 북한측이 보내온 수재물자를 원활하게 인수한 것은 무엇보다도 남북간에 상부상조하는 교류의 선례를 확인하고 나아가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되었던 것이다.

그후의 사태 진행만 보더라도 한적의 유창순 총재는 6일자로 수재물자 인도·인수를 좋은 계기로 삼아 남북 이산가족찾기 회담을 10월중에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노태우 대한체육회장은 남북체육회담을 빨리 재개할 것을 제의했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82년 1월 전두환 대통령이 밝힌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그해 2월 손 국토통일원장관이 20개 시범 사업을 제의했음이 상기된다.

어차피 북한측은 어느 분야부터 선행시키건 우리측의 합리적 제의를 받아들여야 하며 거래의 원인과 국제적 환경을 고루 염두에 둘 적에 더 이상의 주저는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우리는 북한의 최근 동향이 아웅산사건 이후의 고립 탈피를 위한 미봉적 미소 외교거나 또는 위장 평화공세 등 진부한 처사가 아니기를 바란다. 슬기롭지 못한 독선적 아집으로 외세의 목소리의 비중만 높여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평양측이 남북한 직접 대화에 뒤늦지 않게 호응하도록 거듭 촉구해 마지 않는다.

북한측 반응

북한측은 1984년 10월 16일 상오 10시 관문점을 통해 우리측의 경제회담 제의에 호응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북한측 정무원 부총리 김환 명의로 우리측 신병현 부총리에게 보내온 이 서한은 우리측 제의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이에 부연하여 ◎ 대표단은 정부 차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로 구성하고, ◎ 회담장소는 관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로 하며, ◎ 회담일시는 11월 15일 상오 10시에 열고, ◎ 회담 준비와 관련된 기타 사항은 현재 운영중인 남북 직통전화를 이용해서 처리할 것을 제의하는 내용의 것이었다.

우리의 남북한 경제회담 제의에 대하여 북한측이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이 역사적 회담이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의 여부는 북한측의 자세가 얼마나 진실하며 진지한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 2. 남북적십자회담 재개 제의

유창순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1984년 10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적십자사간에 수재물자 인도·인수가 무사히 끝난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지난 10월 4일 북한측 물자 인도 책임자 중 한 사람이며 적십자 실무접촉 북한측 대표단장인 한웅식을 통해 남북이산가족찾기 회담을 개최하자는 내용의 서한을 북한적십자회에 송부한 사실을 내외에 밝혔다.

유총재는 이날 회견에서, 대한적십자사가 국제적십자사연맹의 구호제의를 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수재물자 제공 제의를 수락한 것은 「남북한 간의 격폐상태를 직시하고 혈육의 정이나마 나눌 수 있는 길을 터보려는 숭고한 충정」에서 비롯된 조치였다고 밝히고 『남과 북이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인도적 분야에서 관계를 넓혀가는데는 아무런 장애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또 『남북의 적십자간에는 이미 인도적인 물자를 주고 받는 좋은 선례를 남겼으며... 이러한 환경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간절한 소망이 되고 있는 1천만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에 남북적십자인들이 다함께 성의와 노력을 발휘해야 할 가장 적절한 때』라고 강조하고 동 제의에 대해 북한측이 긍정적으로 호응해 올 것을 기대하였다.

유창순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손성필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손성필 위원장 귀하

나는 최근 남북적십자간에 우리 수재민을 위한 물자의 인도·인수를 성공적으로 끝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귀측이 적지 않은 인원과 수송수단을 동원하여 물자를 보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은 물자는 이미 수재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번 남북적십자간에 물자를 주고 받은 것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분단의 장벽을 뛰어넘은 역사적 사건이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이번에 우리가 이룩한 인도주의적 사업이 오늘의 단절된 남북한 사이에 새로운 접촉과 교류의 길을 넓히는 훌륭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의 온 겨레는 이번 수재물자 교류가 단순히 서로 물자를 주고 받는 일로 끝나지 말고 장차 남북으로 흩어진 수많은 가족들과 친척들이 재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폭넓은 인도적 사업으로 발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가 1천만 이산가족들의 재회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적십자회담을 시작한지도 만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흩어진 혈육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에는 커녕 중단된 남북적십자회담을 재개하는 문제에서도 아직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서로 왕래하고 교류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혈육을 지적에 두고서도 생사 확인과 서신 왕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남북한간의 현실은 참으로 불행하고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북 이산가족들간에 소식을 주고 받고 재회의 길을 트는 것은 이산가족을 비롯한 우리 겨레 전체의 간절한 염원인 동시에 우리 남북적십자인들이 수행해야 할 엄숙한 사명으로서,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이번에 모처럼 마련된 남북적십자간의 접촉이 기필코 이산가족 재회문제를 실현하는 회담으로 이어져야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북적십자회담을 하루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우리측의 주장에 대하여 귀측도 원칙적으로 동의하리라고 믿으면서 가능하면 이달 중에 회담이 열리기를 희망합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회담을 기대합니다.

1984년 10월 4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유창순

#### 적십자회담이재개되어야 할 당위성

남북간에는 쌍방 적십자사간의 수재물자 인도·인수를 계기로 인도적 분야에서 물자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선례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선례는 결코 한차례의 물자수수에서 그쳐서는 안되고 앞으로 남북의 이산가족들을 찾아 주는 인도주의사업으로 확대·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측의 수재물자 제공이 진실로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에 기초한 것이라면 적십자회담재개제의에 호응하여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남북적십자회담이 중단된 이후, 대한적십자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북한측에 촉구해 왔으나, 북한측이 이를 외면함으로써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 남북한간에 인도적 입장에서 접촉과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이상,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민족에게 가장 절박한 이산가족찾기부터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남북적십자회담은 무조건 재개되어야 한다.

#### 대한적십자사의 기본입장

전두환 대통령은 1982년 8월 15일 광복절 37주년 경축사를 통해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권에 거주하는 모든 동포들이 자유로이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놓았으며 이 조치에 따라 이미 공산권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상당수가 모국을 자유롭게 방문하고 있다.

체코에 거주하는 동포가 혈육을 찾아 모국을 방문했으며, 중공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이산가족 찾기에 호응하고 나서 모국의 혈육들과 서로 소식을 전하는가 하면 직접 모국을 다녀가는 사례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해외 동포들 특히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공산권 국가에서도 모국 방문이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는데 유독 남북한의 혈육들만이 서로 소식도 모르고 왕래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민족의 고통인 것이다.

대한적십자사의 기본입장은 이산가족 문제가 정치체제와 이념을 초월한 인도적 차원에서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대한적십자회측의 책임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동포들이 언제든지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미 제반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지난 1983년 6월 이래 국내외 이산 가족찾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바 있으며, 북한을 제외한 세계 도처에서 이에 전폭적으로 호응해 옴으로써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따라서 북한측이 호응만 한다면 이 문제는 내일이라도 당장 실천에 옮길 수 있다고 하겠다.

북한측은 10월 29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이러한 한적측의 제의에 호응하여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재개를 위한 예비접촉을 11월 20일 상오 10시 관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질 것을 제의해 왔다.

그들의 수재물자 제공이 정치선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순수한 인도적 정신에 입각한 조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측은 앞으로의 접촉에서 1천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 3. 제4차 남북 체육회담 개최 제의

한편, 대한올림픽위원회 정주영 위원장의 사퇴에 따라 제28대 대한체육회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 새로이 취임한 노태우 위원장은 그간 중단되어 온 남북체육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1984년 10월 4일 제4차 남북체육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하는 내용의 서한을 북한측에 전달하였다.

노위원장은 동 서한에서 우리측이 북한측의 9월8일자 수재물자 제공제의를 수락한 것은 『남북한간에 끊겨져 있는 대화를 다시 잇고 온 민족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남북한 사이의 교류가 실현되기를 희망하는 진실된 염원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상기시키고 우리 체육인들도 『체육인 본연의 자세에서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기필코 해결해 보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1986아시아 경기대회와 1988서울올림픽경기 등 국제경기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으로 출전하기 위해서라도 그 준비를 서두르고 체육교류를 지체없이 실천에 옮겨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노태우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의 대북 서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북한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겸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김유순 귀하

나는 제4차 남북한 체육회담을 8월 30일에 개최할 것을 촉구한 우리측의 8월17일자 편지에 대하여 귀측이 이를 거부하는 회답을 보내온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으로 참가하지 못하였고 또한 남북한 체육회담도 오랫동안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지난날의 잘 잘못을 가리기에 앞서 중단 상태에 빠진 남북한 체육회담을 하루 빨리 재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같은 체육인의 입장에 서서 이해의 폭을 넓히려고 노력한다면 남북한 체육회담을 재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9월 1일자 세계적십자연맹의 수재구호제의를 사양하면서도 9월 8일자 북한적십자회의의 수재물자 제공 제의는 받아들였던 것도 오로지 이를 계기로 하여 남북한간에 끊겨져 있는 대화를 다시 잇고 온 민족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남북한 사이의 교류가 실현되기를 회구하는 진실된 염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남북적십자간의 접촉을 통하여 남과 북이 가슴을 열고 공통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논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6천만 민족의 한결 같은 소망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체육인도 체육인 본연의 자세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기필코 해결해 보겠다는 적극적 자세로 임한다면 남북한 단일팀 구성이나 체육교류의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귀측도 아는 바와 같이 내년에도 서울과 평양에서 여러 국제체육경기대회가 열리게 되며, 특히 우리는 1986서울아시아 경기대회와 1988서울올림픽 경기대회와 같은 큰 국제경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체육경기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을 내보내려면 체육회담을 열어 지금부터 그 준비를 서둘러야 하며, 교환경기를 비롯한 체육교류를 지체없이 실천에 옮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쌍방이 좀 더 장래를 내다보는 진진적 자세에서 아무런 조건없이 회담장에 마주 앉아야 합니다.

이같은 입장에서 나는 귀측이 하루속히 남북한 체육회담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제4차 남북한 체육회담이 빠른 시일내에 열리기를 희망하면서 회담개최일자의 결정을 귀측

에 일임하는 바입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1984년 10월 4일

대한체육회 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노태우

노태우 위원장의 금번 제의는 제4차 남북체육회담을 8월 30일에 개최할 것을 촉구한 정주영 전 위원장의 지난 8월 17일자 대북제의를 북한측이 거부해온 것과 관련하여 이를 재촉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대한체육회의 제의에 대해 북한측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수재물자 인도·인수 과정에서 북적 손성필 위원장이 발표한 담화와 남북 경제회담 제의에 동의해 온 10월 16일자 부총리 김환의 답신에서 동회담에 호응해 올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바 있다.

#### 4.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12주년에 즈음한 성명발표

-민관식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 대리-

한편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민관식 공동위원장 대리는 1984년 7월 4일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12주년에 즈음해서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민관식 공동위원장 대리는 이 성명에서 『북한측의 불순한 동기와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모처럼 시작된 남북접촉이 모두 중단』되어 있는 현실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북한측은 『남북한의 상이한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여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민족적 신뢰와 화합 및 조국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7·4 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우리측이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 제의,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 개최 제의 등 남북대화의 문호를 폭넓게 열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이를 외면하고 버마사건과 같은 야만적인 폭력도발을 자행함으로써 남북공동성명 정신을 정면으로 유린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이른바 「3자회담」이 한반도 문제해결의 유일한 방안인 것처럼 내외 여론을 기만하고 있는데 대해 민관식 공동위원장 대리는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어, 『남북한 당사자간의 직접 대화야말로 남북한 관계를 정상화하고 통일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측이 진실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추구한다면 버마사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고, 쌍방이 온 겨레 앞에 약속한 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으로 돌아와 모든 문제를 남북한당사자간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성실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 대리의 성명전문은 다음과 같다.

#### 7·4남북공동성명발표 12주년에 즈음한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 대리 성명문

우리는 오늘 남북한 당국이 온 겨레의 통일염원을 높이 받들고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에 서명 합의한지 열두돌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으로부터 12년전 남북한 쌍방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상호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에 합의하고 이를 온 겨레와 세계앞에 엄숙히 약속하였다.

7·4 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은 쌍방이 남북한의 상이한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여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민족적 신뢰와 화합 그리고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는데 있다.

이와 같은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북한 당국은 남북조절위원회를 상설대화기구로 설치하였으며 서울과 평양 사이에 직통전화까지 가설·운영한 바 있다.

당시 남북공동성명발표와 남북조절위원회의 발족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남북한 사이에 인적교류를 가능케 하였으며 특히 1천만 이산가족들의 재회를 실현할 목적으로 진행된 남북적십자회담은 온 겨레의 커다란 기대를 모으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1970년대의 남북대화 과정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못하였으며 북한측의 불순한 동기와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모처럼 시작된 남북접촉은 모두 중단되고 말았다.

우리는 하루속히 동족간의 단절과 대결을 청산하고 민족통일의 새 시대를 개척하는 대화의 광장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1980년대에 기필코 남북관계에 새로운 국면을 타개하고 나아가 우리세대안에 조국통일을 완수한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제의하였으며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천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함으로써 폭넓은 남북대화의 문호를 열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지난해 버마사건에서 보듯이 우리에게 대화가 아니라 야만적인 폭력도발로 응수해 옴으로써 다시 한 번 남북공동성명정신을 유린하고 우리 겨레의 통일염원을 배반했다.

특히 우리는 최근 북한측이 계속 남북대화를 외면하면서 그들이 내세운 이른바 「3자회담」만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안인 것 처럼 내외여론을 기만하고 있는 데 대해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북한측이 진실로 우리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추구한다면 버마사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고 쌍방이 온 겨레 앞에 약속한 남북공동성명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와 모든 문제를 남북한 당사자간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성실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우리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직접대화야말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통일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과 「각료급 회담」등을 조속히 개최하는 것이 남북한이 당면한 문제와 통일문제를 상호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치들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7·4남북공동성명발표 12주년을 맞이하면서 북한측이 더 이상 온겨레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남북대화에 호응해 올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1984년 7월 4일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 대리 민관식

#### 국내 주요 반응

7·4 공동성명발표 12주년에 즈음하여, 국내 주요 언론들은 성명발표 이후 12년을 조감하면서, 우리 민족의 흥분과 기대와 감격속에 발표된 「합의」와는 달리 북한측은 남북조절위원회 회의 초반부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다가 공동성명이 발표된지 1년여 만인 1973년 8월 28일 일방적으로 대화중단을 선언하고, 긴장격화 책동을 일삼음으로써 『남북한간의 긴장상태는 위험수위를 넘긴지 오래』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이 다같이 민족적으로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선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그 안에서 화해하며, 정력을 평화적으로 쏟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7·4 성명에서 제시된 가장 중요한 정신의 하나가 민족 자결의 원칙』임을 상기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우리의 남북한당사자회담 제의를 거부하고 외세를 포함시킨 3자회담만을 고집, 대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측에 대하여 『7·4 공동성명이 비록 정지상태에 있으나 그것이 민족적 합의라는 소중한 가치임을 명심하고 계속 이를 존중하면서, 하루속히 「7·4 공동성명」정신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7·4 공동성명발표 12주년에 즈음한 국내 주요신문들의 사설은 다음과 같다.

「대화재개」 정말 불가능한가  
-7·4 남북공동성명 정신의 행방을 찾아서-

(경향신문 1984. 7. 4)

7·4 남북공동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지 열두돌이 되었다. (중략)

우리는 먼저 이 역사적인 7·4 공동성명 발표의 날을 맞으면서 남북한이 모두 다시 한번 7·4 성명의 정신을 되찾을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7·4 공동성명은 김일성도 여기에 동의한 바와 같이 남북한 서로가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 조국통일을 촉진시키자》는 남북공동의 약속이다.(중략)

이 성명은 특히 조국통일의 원칙으로서 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을 강조한데 이어 상대방에 대한 중상비방과 무장도발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남북적십자회담의 성공적 결실, 남북직통전화의 상설운영, 남북조절위원회 개최 등도 이 때 다짐한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7·4 성명의 기본정신과 합의 내용을 무시하고 북한측이 1973년 8월 이후 두 개의 대화 통로인 조절위와 남북적십자회담을 모조리 중단시키고 직통전화까지 끊어버린 처사는 어떻게 설명돼야 할 것인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 북한측이 우리 6천만 겨레의 간절한 통일 염원을 일방적으로 외면한 반민족적 배신 행위라는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측은 여전히 대남 파괴공작에 광분하면서 갖가지 중상비방 모략 선동을 일삼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남북 직접회담을 「분열주의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한반도 문제해결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이른바 「3자회담」에 의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교조적인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휴전선 일대의 총격도발과 남침용 땅굴을 파는데 급급했고 버마암살 만행과 같은 단말마적 폭력까지 서슴없이 자행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근에 미장성 70%가 북괴의 남침을 우려하고 있다는 뉴스위크지 보도는 더욱 대공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게 하고 있다. (중략)

북한측이 이처럼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결렬시킨 것은 그들이 남북대화를 단지 통일전선 및 정치심리전의 도구로, 즉 공산화 혁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평화통일이 민족지상과업인 이상 북한측도 언젠가는 대화의 광장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측이 진정 이 땅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대북제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7·4 성명」 12년

(동아일보 1984. 7. 4)

...(전략)...7·4 성명 이후 우리는 북한 공산주의자들과의 약속이 얼마나 허무했던가를 새삼 절감할 수 있었고 북한의 통일 목적이 민족의 화합에 있는 것이 아니요, 적화혁명에 있다는 사실을 목격할 수 있었다.

7·4 성명은 통일의 자주적 해결, 평화원칙, 무력도발 포기, 상대방 중상비방 금지, 다방면적 교류실시, 적십자회담 추진협조, 긴장완화에 남북한이 합의했다는 사실을 내외에 천명한 문서였다. 끝으로 이 성명은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선언했던 것이다. (중략)

지금 남북한은 7·4 성명 이후 그 어느때 보다는도 긴장돼 있다. 남북한 최고 당국자회담 제의도 북한은 반대하고 있으며 각료급 접촉도,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적십자회담도 외면하고 있다. 북한은 그대신 3자회담을 밀어대고 있을 뿐이다.

서울 평양간의 긴장고조는 어느 쪽에도 득이 될 수 없다. 오직 민족 에너지의 소모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므로 7·4 성명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때마침 민관식 남북조절위 서울측 공동위원장 대리는 북한이 더 이상 온 겨레의 염원을 외면치 말고 즉각 대화에 호응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이 겨레의 통일 의지를 담은 7·4 성명을 북한측은 다시 한번 정중히 읽어 주기 바란다.

#### 「7·4 정신」과 남북대화

(서울신문 1984. 7. 5)

오늘 4일은 남북한 당국이 지금으로부터 12년전 온 겨레의 통일염원에 부응하여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다던 날이다.

남북한 당국 쌍방은 이 성명에서 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 등 통일의 3대원칙과 상호 신뢰의 분위기 조성,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 남북적십자회담의 추진, 서울과 평양 사이의 직통전화 개설, 남북조절위원회의 설치운영, 이상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등 7개항에 합의하고 정식 서명했다. (중략)

또한 이 성명의 발표에 뒤이어 진행된 남북조절위원회 회담과 남북적십자 회담은 1천만 남북이 산가족의 재결합과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곧 실현하게 되리라는 내외의 커다란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대남적화전전략의 일환으로 이 대화에 호응했던 북한측은 한국의 반공정책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등이 의제토의에 선행돼야 한다고 고집하면서 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시종 방해하다가 저들의 속셈이 관철될 수 없음을 알아 차리자

1973년 8월 28일 일방적인 대화중단을 선언함으로써 겨레의 염원을 하루아침에 무산시켰다.

그렇다고 우리의 평화통일 의지가 좌절된 것은 아니다. 1980년대에 접어들어 우리 정부는 남북한 관계에 새 국면을 타개하고 이 연대안에 통일을 기필코 성취하고자 그간 제의 돼온 모든 통일 방안을 총망라 실천적으로 체제화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천명함과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한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을 제의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20개 시범실천사업」 「남북한 당국 각료회담」 「남북한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 등을 잇따라 제의함으로써 7·4 공동성명 정신에 따른 남북대화의 문호를 폭넓게 열어놓고 있다.

이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우리의 인내와 성의를 다한 대화재개 제의를 외면한 채 마냥 폭력 노선만을 고집하고 있음은 실로 개탄할 일이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저들이 저지른 버마 사건은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전쟁도발 행위였다. 또 최근 대외적으로 떠들어대고 있는 이른바 「3자회담」 주장은 자신의 국제적 고립상태 타개와 한미 안보결속의 와해를 겨냥한 위장 평화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 당국은 그같은 책동이 스스로 파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짓임을 어찌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북한 당국은 온 겨레의 통일염원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외면함으로써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버마사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짐과 함께 7·4 성명 정신 본연의 자세를 서둘러 되찾아야 할 것임을 이날에 즈음하여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해 둔다.

#### 우선 남북의 긴장완화를

-7·4 공동 성명 후 어언 12년-

(조선일보 1984. 7. 5)

지금 남북한간의 긴장상태는 위협수위를 넘은지 이미 오래다. (중략)

우리가 누누이 특징 지어온 대로 지금 한반도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기묘한 상태에 있다. 6·25 남침 전쟁의 포화가 멎은지는 바로 만 31년이 지나갔지만 그렇다고 남북간에 평화가 정착된 것은 결코 아니다. 혁명전쟁을 광신하는 북의 좌경 맹동분자들에 의해 언제 어디서 전쟁이 다시 터질는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의 한반도의 위급한 현실이다.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언 7·4 남북공동성명 12주년을 맞이한 것이다.

1972년 성명이 극적으로 발표되었을 때 그래도 우리는 구원을 잇고 김일성 일파를 믿어보려 했고, 평화와 민족적 화해 속에서 조국 통일의 위업을 이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지고 싶어했다. (중략)

그들은 성명이 발표된 직후에도 계속 남침용 땅굴을 팠고, 간첩을 투입했으며, 재북 「통일혁명당의 목소리」 방송을 통해 대남비방을 일삼았다. 그리고 자기들의 함정에 남이 빠져들지 않자,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버렸다. (중략)

1980년대는 1950년대가 아니다. 그러므로 남북이 다같이 민족적으로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선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그 안에서 화해하며, 정력을 평화적 건설에 쏟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이 수락할 수 있는 조건에서 대화를 재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7·4 성명」 정신 어디로 갔나

(중앙일보 1984. 7. 4)

「7·4 공동성명」 12주년을 맞았다. (중략)

12년전 이날 남북한 당국은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 통일원칙을 포함하여 상호 도발의 방지, 다방면의 상호 교류, 남북적회담의 성사, 남북상설 직통전화 개설, 남북조절위 구성등에 대한 합의문서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발표했다. (중략)

7·4 성명에서 제시된 가장 중요한 정신의 하나는 남북이 직접 문제 해결에 임한다는 민족자결주의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의 남북 양자 직접회담을 거부하고 외세를 포함시킨 3자회담만 고집, 대화를 방해하고 있다.

7·4 성명이 비록 정지상태에 있으나 우리는 그것을 민족적 합의라는 소중한 가치임을 명심하고 계속 이를 존중하면서 북한도 하루 속히 「7·4 성명」 정신에 복귀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 남북대화 제37호

(1984. 11 ~ 1985. 3)

# < 목 차 >

|                                      |    |
|--------------------------------------|----|
| 제1부 남북한 관계개선의 전기 마련을 위한 지속적 노력 ..... | 3  |
| 1. 전두환 대통령 1985년도 국정연설 .....         | 3  |
| 2. 국내 주요 반응 .....                    | 7  |
| 제2부 남북경제회담과 남북적십자 본 회담 예비접촉 .....    | 10 |
| 1. 회담성립의 배경 .....                    | 10 |
| 2. 회담의 경과 .....                      | 11 |
| 가. 제1차 남북경제회담 .....                  | 11 |
| 나. 남북적십자 본회담 예비접촉 .....              | 25 |
| 제3부 북한측의 일방적 회담연기 .....              | 36 |
| 1. 북한측의 회담연기 통보 .....                | 36 |
| 2. 북한측 태도의 부당성 .....                 | 38 |
| 3. 우리의 대화재개 노력 .....                 | 40 |
| 4. 국내외 주요 반응 .....                   | 44 |

## 제1부 남북한 관계개선의 전기 마련을 위한 지속적 노력

### 1. 전두환 대통령 1985년도 국정연설

#### -남북한 정상회담 재촉구-

전두환 대통령은 1985년 1월 9일 124회 임시국회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북한측에 대하여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재촉구하고 서울과 평양에 「상설연락대표부」를 설치할 것도 아울러 제의했다.

전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남북한관계에 관하여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체제대결과 군사적 대치 속에서 지낸 40년의 세월은 민족적 참화와 정력의 낭비, 그리고 상호 불신을 가중시켜왔다」고 회고하고, 「금세기의 비극이 새로운 세기로 이어지는 일은 결단코 막아야 하며, 우리는 민족분단의 역사를 청산하고 이 땅에 통일과 번영의 새 역사를 창조함으로써 세계사에 한민족의 위업을 기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대결의 시대로부터 민족화합의 새 시대로 용기있는 일대전환을 결행할 것」을 제창하고 「남북한간에 민족적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통일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 방문과 회담」을 개최할 것과 「남북한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관계를 개선하며 다각적인 대화와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에 연락대표부를 상설적으로 설치할 것」을 제의했다.

끝으로, 전대통령은 「평화와 통일의 새 장을 1980년대 안에 기필코 열어야 한다는 신념아래 인내를 가지고 북한을 대화로 포용해 나갈 것」임을 결연히 표명하고 북한측의 호응을 촉구했다.

전두환 대통령의 1985년도 국정연설중 통일대화분야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일대화분야 관련 내용

다음은 조국통일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로서 만 40년이 되는 우리 민족의 분단은 비단 이 땅의 불행일 뿐 아니라 세계사의 한 오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세기의 비극이 새로운 세기로 이어지는 일은 결단코 막아야 하며, 우리는 민족분단의 역사를 청산하고 이 땅에 통일과 번영의 새 역사를 창조함으로써 세계사에 한민족의 위업을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와 통일의 역사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먼저 청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지난 40년간 지속해 온 대결의 상황이라고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체제대결과 군사적 대치 속에서 지낸 40년의 세월은 민족적 참화와 정력의 낭비, 그리고 상호 불신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6천만 겨레를 파멸로 이끌 전쟁재발의 위험은 오히려 높아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남북한은 더 이상 서로 담을 쌓고 대립과 반목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를 열고 상부상조하며 화합하는 새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화해와 신뢰의 기초 위에서 민족일체감을 가꾸

어 나간다면 평화와 통일의 민족적 염원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인은 남북대결의 시대로부터 민족화합의 새 시대로 용기있는 일대전환을 결행할 것을 제창하는 바입니다.

본인이 지난 1982년 1월 22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내외에 천명하고 온 겨레가 평화와 통일의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을 호소한 것도 민족자해적이며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청산하자는데 그 기초를 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은 남북한간에 민족적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통일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 방문과 회담을 북한측에 제의한 바 있습니다.

남북대화는 대결청산의 토대 위에 평화와 통일을 건설할 수 있는 터전으로서 민족사의 장래를 위하여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대화자세가 비록 성실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남북대화는 어떤 것이든 평화와 화합의 광장으로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수재물자를 인수하고 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 그리고 체육회담을 제의한 데 이어 북한이 이에 호응해 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회담이 진전되어 남북한간에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 짐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평화통일의 초석이 되고 우리 겨레의 자존과 성숙을 세계에 보여주게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통일의 결정적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인과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이 가급적 빨리 실현되기를 북한측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3국 지도자와도 수시로 빈번한 상호 방문을 실현하고 있는 터에 남북한당국의 최고책임자가 회담을 못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민족의 평화통일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서로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한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관계를 개선하며 다각적인 대화와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에 연락대표부를 상설적으로 설치할 것을 본인은 아울러 제의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평화와 통일의 새 장을 1980년대 안에 기필코 열어야 한다는 신념아래 인내를 가지고 북한을 대화로 포용해 나갈 것이며, 북한측이 이러한 제의에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이번 국정연설에서 제시한 대북제의의 주요 내용은 ◎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 촉구, ◎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 설치 제의 등이다.

#### 제의의 배경과 의의

우리 민족은 올해로서 조국분단 40년의 역사를 기록하게 된다. 체제대결과 군사적 대치상황 속에서 지낸 남북분단 40년의 세월은 민족적 참화와 정력의 낭비, 그리고 상호 불신만을 가중시켜왔을 뿐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이러한 대립과 반목의 비극적 상황에 종지부를 찍고 남북한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여 왔다.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상호 방문」(1981. 1. 12) 및 회담 개최(1981. 6. 5) 제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1981. 1. 22) 천명,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에서 협의·해결할 당면과제 제시(1983. 1. 18), 남북한간 교역 및 경제협력 제의(1984. 8. 20) 등은 이러한 노력의 집적인 것이다.

또한 우리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조치의 하나로서 「20개 시범실천사업」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의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체육, 인도, 경제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제회담도 제의한 바 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말로는 대화를 표방하면서도 소위 「고려연방제」와 「3자회담」만을 일방적으로 고집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대화를 외면해 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랭군암살만행」등 도발을 일삼아 한반도 긴장격화를 획책해 왔다.

북한측의 도발과 대화거부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대통령은 민족분단의 역사를 청산하고 이 땅에 통일과 번영의 새 역사를 창조함으로써 세계사에 한민족의 위업을 기록해야 하겠다는 역사의식과 사명감에 입각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결정적 계기를 조성하기 위한 「남북한정상회담」의 개최와 아울러 남북한간의 상호 관계를 개선하며 다각적인 대화와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에 연락대표부를 상설적으로 설치할 것을 다시금 촉구한 것이다.

### 주요 특징

이번 전두환 대통령 국정연설의 주요 특징은,

첫째, 「남북대결의 시대」로부터 「민족화합의 시대」에로의 일대 전환을 제창한 점이다.

남과 북은 지난 40년 동안 심한 단절 속에서 증오와 갈등이 야기되어왔고, 이로 인한 민족역량의 낭비는 막대하였으며, 이는 결국 상호 불신과 민족이질감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6천만 겨레를 파멸로 이끌 전쟁재발의 위험은 오히려 높아가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더우기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우리 민족만이 냉전의 유물인 대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는 민족적 수치요, 역사의 후퇴를 가져오는 일이 되기 때문에, 민족의 자존과 번영을 위해서도 하루속히 남북대결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화합시대의 막을 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당위성에 호응하여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화해와 신뢰의 축적을 통하여 민족일체감을 가꾸어 나감으로써 평화와 통일의 민족적 염원을 반드시 성취해야겠다는 신념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남북대결의 시대로부터 민족화합의 새 시대로 용기있는 일대 전환을 결행할 것을 제창한 것이다.

둘째, 「남북한 정상회담」의 조속한 실현을 재촉한 점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1년 6월 5일 제1차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개최사를 통하여 북한측에 대해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

언제, 어디서나,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가 만나 통일논의를 포함한 남북한간의 모든 현안문제를 제한없이 허심탄회하게 토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동 제의는 종래 핵심의 변두리만을 맴돌았던 통일논의를 극복, 가장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진지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이를 통하여 남북한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통일에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의지와 목적은 전두환 대통령이 1983년도 국정연설에서 남북한 정상회담의 개최를 다시금 촉구하면서 제시한 동 회담에서 협의·해결해야 할 당면과제 4개항에 잘 집약되어 있다. 즉,

-남북한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문제

-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문제
- 국제무대에서 남북한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민족역량의 낭비를 방지하는 문제
-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문제 등이다.

이상의 당면과제는 오늘날 한반도의 현실을 볼 때 평화와 통일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과 동시에 쌍방 통치책임자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므로 정상회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세째, 서울·평양에 「연락대표부 설치」를 제의한 점이다.

우리 정부는 1982년 1월 22일 천명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통해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잠정조치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한 바 있으며, 동 잠정협정안 제7항에서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를 설치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서울과 평양에 「연락대표부」를 상설적으로 설치·운영한다면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기타 영역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쌍방간에 제기되는 문제에 관해 상대측 당국과의 긴밀한 교섭과 협의를 매개함으로써 남북한간에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관계 개선에 크나큰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비록 북측의 일방적인 연기통보로 일시적인 교착상태에 빠져있기는 하나 남북경제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이 반드시 재개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밖에 체육·문화 분야 등 남북한간에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의 길도 열어 놓아야 하므로 서울·평양의 쌍방 「연락대표부」설치는 매우 바람직하다. 때문에 북한측은 이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다.

## 2. 국내 주요 반응

도하 주요 언론들은 전두환 대통령이 평화와 통일의 주도적 노력을 역설하고 민족화합 시대로의 일대전환을 제창한데 대해 「남북화합의 결연한 선언」이며 「조국통일 문제에 관하여 진지하고 획기적인 구상의 발전」이라고 논평했다.

또한, 「남북한 정상회담」의 개최와 서울과 평양에 「상설연락대표부」를 설치하자는 전대통령의 제의에 대해 「우리 거래의 자존과 성숙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도 남북한 정상회담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상설연락대표부와 같은 공존체제의 제도화만이 피를 흘리지 않고 통일에 이르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라고 강조하고, 「북한이 그들의 선전대로 진실로 남북대화를 원한다면 이같은 우리측 제의에 서슴없이 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내 주요 신문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 대평양시대 이끌 주체외교

-국민이 총참여해야 할 외교시대에 접어들었다-

경향신문(1985. 1. 10)

오늘날 우리의 외교와 국방만큼 민족의 운명을 규정짓는 예민한 과제도 없을 것이다. 전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안보와 외교의 근간은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주체적 역량을 튼튼히 하는 한편 갈등의 매듭을 푸는 평화주의의 정신적 유산을 행동지표로 실현해 나가는데 있다」고 밝힌 것은 우리의 외교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지금까지 피동적으로 받아온 생존과 평화의 조건을 능동적으로 장악하려는 국민적 의지와 열망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또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주체적인 입장표명인 동시에 분단질서가 갖는 만성적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한 민족역량의 결집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목표에 접근하고 도달하는 과정에는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힘」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환기시켰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21세기를 향한 세계사의 한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려는 원대한 포부가 담겨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무엇보다도 상호의존주의적인 국제관계 심화 속에서도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내용으로 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은 민족과 국가의 힘을 배양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으며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는 외교는 한반도의 역사적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힘없는 국제관계는 피동적일 수 밖에 없으며 심지어 우방과의 관계발전에서도 「튼튼한 국력」은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말하자면 피동적인 역사의식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한반도를 주체적으로 경영하기위해선 제3세계제국과 우방, 그리고 비적성공산국들에게까지 문호를 연 우리의 개방외교정책이 과감하게 펼쳐져야 한다는 것을 자신 있게 밝힘으로써 전대통령은 우리 외교의 행동반경을 한층 넓히려는 의욕을 나타냈다.

이는 또한 우리의 평화주의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며 소·중공 등 공산국들에 대한 우리의 개방정책이 갖는 평화의지를 다짐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와 같은 우리의 외교정책은 궁극적으로 폐쇄공산집단인 북한으로 하여금 세계조류에 순응케 하고 문호개방 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발전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우리의 평화애호주의에도 불구하고 평화여정에 장애가 되는 갖가지 요소들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발휘할 수 있는 저력

이며 또 지혜로운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 경제인이나 문화인 체 육인 그리고 외국관광객을 안내하는 요원들」에 이르기까지 국민외교를 펼치는 역군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해야만 전환기의 역사를 슬기롭게 꾸려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총력외교의 역군으로서 우리 모두가 오늘의 시대적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의 외교·국방의 힘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믿는다. 특히 태평양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총력외교 시대에 부응하는 외교전략의 마련과 함께 모든 국민의 외교참여를 고무시킬 수 있는 정치·사회안정에의 기여도 재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 전대통령의 국정연설

조선일보(1985. 1. 10)

전두환 대통령의 1985년도 연두 국정연설은 21세기를 조망한 미래지향적 기초를 선명히 제시했다.(중략)

전대통령의 국정연설은 또한 김일성과의 회담을 재차 촉구했다. 이점은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라는 언명에 의해 그 논리적인 모태가 부여되고 있다. 서울과 평양에 연락대표부를 상설적으로 설치하자는 제의는, 그러한 상호인정의 행정적·법률적 귀결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공존체제의 제도화만이 피 흘리지 않고 통일에 이르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라고 믿는다.(하략)

### 역사창조의 주역이 된다는 굳건한 주인의식 확립하자

-전두환 대통령 국정연설에 담긴 뜻-

서울신문(1985. 1. 10)

세계사의 일원으로서 또 민족사의 주체로서 비약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민족의 단합된 힘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분단민족으로서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과 북은 지난 40년 동안 심한 단절 속에서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체제 대결과 군사적 대치를 계속해 왔다.

그래서 민족역량을 낭비하고 상호 불신과 민족적 이질감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한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 6천만 겨레를 파멸로 이끌 전쟁재발의 위험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교류협력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우리 민족만이 냉전의 유물인 대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는 민족으로서도 수치요 역사의 후퇴를 가져오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속히 남북대결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화합시대의 막을 열어야 한다. 전대통령이 평화와 통일의 주도적 노력을 역설하고 민족화합시대로의 일대전환을 제창한 것도 조국분단의 비극이 새로운 세기로 이어지는 일은 결단코 막아야 하며 이는 곧 우리 세대의 엄숙한 사명이라는 남북화합의 결연한 선언이며 의지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이제라도 늦지 않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남북회담과 병행하여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에 응해야 할 것이다.

### 21세기를 생각하는 국정

중앙일보(1985. 1. 10)

전두환 대통령이 9일 국회본회의에서 행한 연두국정연설은 올해의 시정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서보다는 21세기를 내다본 「한국의 미래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어느 해와는 다른 각별한

뜻을 지니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는 평화통일에 대한 정부의 집념과 의지가 한층 강조됐다.

전대통령은 금세기의 민족분단의 비극이 다음 세기로 이월되는 것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고 강조, 앞으로 15년 이내에 조국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대통령은 지난 분단 40년의 역사는 민족의 참화와 정력의 낭비, 상호불신의 가중만 가져왔다고 개탄하고, 이제부터는 남북대결의 시대에서 민족화합의 시대로 전환할 것을 제창했다.

그는 북한의 대화자세가 성실치 못하더라도 남북대화를 계속 추진하여 평화와 화합의 광장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그들의 선전대로 진실로 남북대화를 원한다면 이같은 우리측의 제의에 서슴없이 응해 나와야 할 것이다.

우리측 제의가 당장 실현된다 해도 우리의 남북관계는 아직도 동서독의 교류·협력관계에 훨씬 미달한다는 사실을 북한측은 명심하고 이를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 21세기 고도선진의 구도

-전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을 듣고-

한국일보(1985. 1. 10)

이번에 특히 전대통령은 조국통일 문제에 관하여 진지하고 획기적인 구상의 발전을 보여 주었다. 구시대적 「대결의 상황」을 지양할 결의를 밝히면서 남북대화로 하여금 「평화와 화합의 광장으로 활용해 나갈 것」을 다짐한 것이다.

전대통령의 지적대로 「우리 겨레의 자존과 성숙」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도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의 조속한 실현과 서울 및 평양에 걸친 연락대표부 상설이 촉구된다.

## 제2부 남북경제회담과 남북적십자 본 회담 예비접촉

### 1. 회담성립의 배경

우리 정부는 1981년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과 회담을 제의한 이래, 1982년 1월에는 통일의 대장전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천명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조치의 하나로서 「20개 시범실천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1984년 8월에는 남북간에 물자교역과 경제협력을 실시함으로써 민족의 공동번영을 모색해 나갈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간의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해 체육회담과 적십자회담의 개최를 기회 있을 때마다 제의하고 북한측이 이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해 왔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남한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수재와 관련하여, 북한측의 수재물자제공제의를 수락한 것도 이를 계기로 남북한관계를 개선해 보겠다는 일관된 염원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수해로 다소 피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신속한 사후 조치로 구호·복구작업을 마무리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향상을 위해 기술과 물자의 무상공여까지 제의한 바 있는 우리로서는 북측의 수재물자 그 자체가 당장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락한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나마 남북간에 상부상조의 길을 트고 물자교류의 바탕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은 물론 남북한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보려는 충정에서 취한 조치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수재물자 인도·인수를 계기로 이를 보다 폭넓은 교류·협력의 관계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수재물자 인도·인수가 끝난 1984년 10월 4일 유창순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북한 적십자회에 서한을 보내 남북적십자회담을 10월중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한편 신병현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도 1984년 10월 12일 북한측에 남북경제회담의 개최를 제의하고 동 회담의 개최일자 및 장소의 결정을 북한측에 일임하였다.

북한측은 이러한 우리측의 집요한 대화재개노력과 대내외 여론을 의식, 더 이상 우리의 제의를 외면할 수 없게 되자 마지못해 이에 호응해 나왔다. 북한측은 김환 부총리 명의의 1984년 10월 16일자 서한에서 우리측의 경제회담 개최제이에 호응하면서 제1차 회담을 11월 15일에 개최할 것과 대표단구성은 정부차관급을 단장으로 할 것 등을 알려왔으며, 북적 손성필 위원장도 10월 29일자 전화통지문에서 한적의 제이에 호응하여 제8차 남북적십자 본 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접촉을 11월 20일에 갖자고 제의해 왔다. 이로써 남북한간에 경제분야에서는 분단 40년만에 처음으로 교역과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의 공동 이익과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광장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인도적 분야에서도 이산가족의 재회추진을 위한 적십자 본회담의 재개문제를 놓고 남북의 적십자인들이 7년만에 다시금 대좌하게 되었다.

## 2. 회담의 경과

### 가. 제1차 남북경제회담

#### 대표단 구성

1984년 10월 16일 북한측은 우리측 신병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의 10월 10일자 남북경제회담 개최제의에 호응하여, 제1차 회담을 11월 15일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할 것과 대표단은 정부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의 대표로 구성할 것 등을 제의하여 왔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11월 2일, 재차 신 부총리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북한측에 보내고, 북한측이 우리측 제안에 호응, 경제회담이 열릴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하는 한편, 회담대표단 구성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밝혔다.

신 부총리는 동 통지문에서 남북간에 교역과 경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표단에 정부당국 대표와 함께 여러 분야의 경제단체대표가 참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대표단을 각기 7명으로 구성하자고 수정 제의하였다.

이러한 우리측의 수정제의에 북한측이 동의해 옴으로써 제1차 남북경제회담이 1984년 11월 15일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게 되었다.

직통전화를 통해 각기 통보한 쌍방 대표단명단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대표단

|      |                       |
|------|-----------------------|
| 수석대표 | 김기환(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 단장)   |
| 대 표  | 차상필(상공부 제2차관보)        |
| 대 표  | 구본태(국토통일원 연구부장)       |
| 대 표  | 김인준(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     |
| 대 표  | 신봉식(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이사)    |
| 대 표  | 노진식(대한무역협회 전무이사)      |
| 대 표  | 임병석(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임이사) |

#### 북한측 대표단

|     |                        |
|-----|------------------------|
| 단 장 | 리성록(무역부 부부장)           |
| 대 표 | 계형명(채취공업위원회 참사)        |
| 대 표 | 백준혁(조선국제무역 촉진위원회 상무위원) |
| 대 표 | 허항찬(조선대외경제협조 총회사 부사장)  |
| 대 표 | 리진식(금속공업부 국장)          |
| 대 표 | 손종철(무역경제연구소 부소장)       |
| 대 표 | 김해룡(조선광명연합회사 부사장)      |

#### 경 과

제1차 남북경제회담이 쌍방 각기 7명의 대표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1984년 11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5분까지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려 남북간에 교역과 경제협력을 실

시하는 문제를 협의하였다.

이날 회담에서 남북한 대표단은 쌍방제안을 토대로 협의를 진행하여 운영절차와 일부 교역품목에 사실상 합의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의제에도 상당한 정도의 의견 접근을 보여 일견 회담의 순조로운 전조를 예고하였다.

우리측 대표단은 첫 발언을 통해 남북경제회담이 잘 진행되어 남북간에 교역과 경제협력이 실현될 수만 있다면, 이는 남과 북의 동포들의 생활에 직접 보탬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신뢰조성 그리고 민족화합을 도모하는 데에도 적지 않게 기여하리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쌍방이 이를 위해 성의와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남북간에 물자교역을 활발히 추진시키면서 이와 함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자본 및 기술의 합작투자 등 경제협력도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회담의제로써, 첫째, 남북간에 교역을 실시하는 문제

둘째, 남북간에 경제협력을 실시하는 문제 등 2개항을 제시하고, 우선 의제1항의 물자교역 실시와 관련하여 교역품목, 교역량, 거래방식, 결제통화 등 10개항의 구체적 제안을 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 관계당국간에 교역협정과 세부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우리 대표단은 남북간의 물자교역을 추진하면서 무연탄, 철광석 등 자원개발,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 음향기기 등 가전제품 생산, 폴리에스텔사 등 섬유류 생산, 의약품 및 화장품 생산, 그리고 관광 및 해운사업 및 서비스분야에 대한 합작투자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남북간의 교역 및 경제협력을 원활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쌍방의 관계당국 및 경제단체 인사들로 구성되는 가칭 「남북협력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아울러 북한측에 제의하였다.

이날 회담에서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측 대표단이 제시한 구체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 (물자교역문제)

##### ① 교역품목

###### o 우리측 구입희망품목

무연탄, 철광석, 선철, 연괴, 아연괴, 규사, 고철 등과 명태, 누에고치, 팥, 옥수수, 피마자 등 농수산물, 기타 한약재

###### o 우리측 판매가능 품목

철강 및 제품, 동 및 제품, 알루미늄 제품 등, 가정용 및 공업용 봉제기, 경운기, 승용차, 2륜 자동차 등 기계류, 시계,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 음향기기 등 전기·전자제품, 섬유사, 섬유원료, 섬유직물, 담요 등 섬유류, 기타 고무벨트, 피아노, 황산가리, 정제그리세린 및 의약품 등.

##### ② 교역량

o 쌍방의 대내수급 사정과 대외무역규모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정함.

##### ③ 가 격

o 원칙적으로 객관적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교역 당사자간의 상담을 통해 결정함.

##### ④ 거래 당사자

- o 교역주체는 쌍방당국이 지정하는 특정교역기관 또는 상사로 하고, 가급적 거래창구를 일원화하되 점차 다원화함.

⑤ 거래 방식

- o 원칙적으로 제3국 은행발행 L/C에 의한 거래방식이 가장 합리적임.
- o 교역 초기단계에는 구상무역 형태도 무방함.
- o 교역이 확대될 경우 청산협정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⑥ 결제업무의 취급

- o 제3국 은행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진전에 따라 양측의 외국환은행을 창구로 고려할 수 있음.

⑦ 결제 통화

- o 남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국제교환성 통화(US\$, DM, ¥, £ 등) 중에서 선정하여 사용함.
- o 장차 남북간의 결제에만 통용되는 새로운 결제단위 창출을 고려함.

⑧ 관 세

- o 외국간의 무역이 아니므로 관세부과는 불필요함.

⑨ 수 송

- o 대량 화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입 측 선박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함.
- o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철도수송이 가능토록 남북간 철도연결 작업도 추진함.
- o 소량 화물은 자동차를 이용하며 이를 위해 판문점에 공동하역장을 설치함.

⑩ 기타 문제

- o 물자교역에 수반되는 통관, 검사, 통신문제, 사고처리 및 이 건조정문제 등 구체적 사항은 쌍방 협의로 결정함.
- o 이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지속적이고 원활한 남북간 교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 관계당국간에 교역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수반되는 관련 제반세부 약정을 체결함.

(경제협력 및 합작투자문제)

① 공동사업

- o 우리는 이미 20개 시범실천사업을 통해 남북간에 자연자원의 공동개발 및 공동이용, 남북어민들을 위한 공동어로구역설정 추진 등을 제의한 바 있음.

② 합작투자 및 기술협력

- o 남북간 물자교역을 추진하면서 무연탄, 철광석 등 자원개발,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 음향기기 등 가전제품생산, 폴리에스텔사 등 섬유류 생산, 의약품 및 화장품생산, 기타 관광 및 해운사업 등 서비스분야에 대한 합작투자도 가능함.
- o 광범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자본·기술 및 인적교류가 필요함.

(경제협력기구 설치문제)

- 남북의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문제를 협의하며, 동 문제를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쌍방의 관계당국 및 경제 단체인사들로 구성되는 가칭 「남북경제협력위원회」 설치를 제의함.

한편 북한측도 회담의 의제를 「북과 남 사이의 경제분야에서 합작과 교류를 실현할 데 대하여」로 할 것을 주장하고, 교역품목, 거래방식 및 수송문제 등 물자교류방안과 경제협력 실시방안을 제시해왔다.

의제문제토의에 있어 남북쌍방은 북한측이 회담의제로 「북과 남 사이의 경제분야에서 합작과 교류를 실현할 데 대하여」로 할 것을 고집하여 처음에는 이건을 보였으나 우리측이 절충안으로서 「남북간에 물자교역과 경제협력을 실시하는 문제」로 제시하자 북한측도 「합작」을 「협력」으로 수정하는 등 우리측 제의에 접근해 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측이 그 후 갑자기 다음 회담 때 이를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을 표시함으로써 이날 회의에서 의제합의는 보지 못하였다.

특히 물자교역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측이 대내수급사정과 대외무역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교역량을 결정하자고 제의한 반면, 북한측은 구매 희망종목으로서 철강재, 중석광, 납사, 섬유 등 원자재와 중간재만을 제시하고 일용품과 공업완제품은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자재는 원자재끼리, 완제품은 완제품끼리, 농산물은 농산물끼리 교류하자는 제한적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쌍방간에 상당한 입장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 쌍방이 제안한 내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

① 교역 품목

- 우리측 구입 희망품목 : 무연탄, 철광석, 마그네싸크링카, 옥수수, 명태.
- 우리측 판매 희망품목 : 철강재, 섬유.

② 자연자원의 개발

③ 남북공동 어로구역의 설정

④ 남북한 철도연결(경의선)

⑤ 남북경제협력위원회 설치

한편, 이 날 회담에서의 북한측 제안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자교류문제)

① 교류 상품

- 판매희망품목 : 철광석, 석탄, 마그네싸크링카, 일반공작기계, 채취설비 등 공업상품과 명태, 쌀, 강냉이 등 농수산물.

o 구입희망품목 : 철강재, 중석광, 납사, 섬유 등 공업상품과 남해어족, 소금, 감귤 등 농수산물.

② 거래 방식

물자교류는 원자재, 완제품과 농산물을 유무상통하되, 원자재는 원자재끼리, 완제품은 완제품끼리, 농산물은 농산물끼리 교류하는 것이 합리적임.

③ 수 송

철도, 항만이용이 효율적이며, 이를 위해 경의선을 연결하고 북측의 남포항, 원산항과 남측의 인천, 포항을 개방, 이용토록 함.

(경제합작문제)

- o 지하자원 공동개발과 이용문제 : 쌍방이 자기의 노력과 설비를 가지고 상대방지역의 광산과 암석을 개발.
- o 어업분야의 합작문제 : 남북이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고, 어장을 공동개발, 이용하며, 수산합영회사를 설립.
- o 농업분야 합작문제 : 남한의 간척지를 공동개발하거나 군사분계선에 의해 끊어진 관개망을 다시 연결시켜 이용.
- o 공동협력기구로 「남북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

북한측은 이와 함께 회담직전의 환담과 회담종료 직전의 발언 등 두차례에 걸쳐 우리측 신병현 부총리와 북한의 김환 부총리간의 접촉을 제의하고 이를 신병현 부총리에게 전달할 것을 요청하여 왔다.

이날 회담에서 우리측은 회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다음 회담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 그리고 쌍방간에 업무연락과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이미 가설되어 있는 남북직통전화 회선중에서 별도 경제회담용 회선을 지정, 이용할 것 등을 제의하였으며 북한측은 이에 동의하였다.

제2차 경제회담은 1984년 12월 5일,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쌍방간에 합의하였다.

국내 반응

「경제회담」 수락의 의미  
-성패여부는 북한측성의에 달려있다-

경향신문 (1984.10.18)

「수재물자」 이후 우리측이 계속 제의한 적십자회담, 체육회담, 경제회담 가운데 북한측이 남북한 경제회담 제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은 우선 반가운 일이다. 정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한 경제회담이 오는 11월 15일 판문점에서 열린다면 이는 남북한 교역과 경제협력을 위한 최초의 남북한 당국자간 접촉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아직 성급하게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수재물자」 인수 이후 남북한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특히 남북한 동포간의 당장 현실적으로 실천이 가능한 경제분야에서 상부상조의 길을 트고 민족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정부의 일관된 대화 의지의 결실로 받아들여진다.

남북한 관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오랜 대결구조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을 위해 교류와 협력의 새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다.

전두환 대통령이 8·20 특별회견에서 「남북한 교역 및 경제협력과 기술 물자의 무상 제공」을 제의한 것도 이러한 기본 입장의 천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수재물자」가 필요치 않았음에도 북적제의를 받아들인 점과 경제4단체의 남북한 교역물자 제시 등도 우리가 앞장서 경제협력의 길을 터보겠다는 구체적인 실천의지를 나타낸 것이었다. 북한측이 앞으로 이런 우리의 제의를 얼마만큼 액면 그대로 수용할지는 속단할 수 없으나 일단 경제회담을 수락한 이상 이 역사적 회담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성실한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미리 촉구해 두고 싶다.

북한측이 우리의 경제회담 제의를 받아들인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점은 북한의 폐쇄경제가 한계점에 와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수재물자」제공이 다분히 전략적인 계산에서 나온 것임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최근의 북한측 동향으로 미루어 그들의 대남접촉시도도 나름대로의 손익계산을 감안한데 따른 것으로 보아진다.

북한의 정무원 총리 강성산은 얼마전 중공을 방문하고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월에는 「최고인민회의」가 자본주의국가들과의 경제교류확대를 선언한 바 있고 최근에 소위 「합영법」을 만들어 서방의 자본을 유치하겠다고 나선 것도 북한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그들은 랭군만행 이후 계속 외교적 고립을 면치 못했고 날이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남북한 경제력 격차로 초조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금년말로 끝나는 제2차 경제 7개년 계획은 사실상 실패로 끝나가고 있다. 김일성은 또 일·북한 민간 어업협정을 다시 체결하기 위해 일본대표단의 평양방문까지 종용하고 있다. 이같은 북한측 태도 변화는 일본의 대북한 제재 조치를 완화시켜 보겠다는 미소전략의 일환일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볼 때 북한측이 우리의 경제회담을 수락한 저의가 분명해진다. 북한이 경제회담을 수락했다고 해서 그들의 일관된 폭력혁명노선을 포기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와 같은 사실은 남북회담과 3자회담제의 직후에 그들이 취했던 행동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서방측은 남북한 경제회담의 개최만을 보고 북한과의 협력분위기가 성숙된 것으로 오인해선 안되리라 생각한다. 어떤 남북대화에도 성급한 기대나 환상은 금물이다. 남북경제회담에 임하는 대응전략에 빈틈없기를 당부한다.

#### 남북한 경제회담의 향방

-북은 행동으로 「민주적 유대회복」기해야-

동아일보 (1984.10.18)

북한의 정무원 부총리 김환은 서울측이 제의한 남북한 경제회담에 응하기로 했다는 서한을 16일 보내왔다. 「대한민국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신병현 귀하」로 된 김환의 응답에서는 11월 15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만나자고 했으며 회담대표단은 차관급을 단장으로 하며 5명으로 구성하자고 했다.

이제 남북한간에는 경제교류를 위한 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신병현 부총리가 지난 10일 평양측에 제의한 내용대로 남북한 경제회담이 발전돼간다면 「남북한 경제협력기구」도 설치될 수 있다. 「남북한 동포들 사이에 경제 분야에서 상부상조하는 길을 트고 이를 계기로 온 겨레가 염원하는 조국통일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남북한경제회담이 양측 주민들의 경제이익 증진과 통일기반구축에 기여하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서도 한편 얼마나 그런쪽으로 진전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확신이 덜하다. 지난 12년

동안 열렸다간 닫히고만 여러 차례의 남북회담 경험을 상기치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 바탕한 남북조절위원회 회담은 1년 1개월만에 북한의 일방적인 중단선언으로 끝나버렸다. 같은 시기에 열렸던 남북적십자회담도 같은 모양으로 북측측에 의해 중단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밖에도 1979년 재개되었던 남북조절위 회담도 북한측이 조절위 대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란걸 들고 나와 걸돌다 끝났다. 같은해 북한측의 제안으로 열렸던 남북한 탁구팀 단일화회담도 결렬된 바 있다.

이어 1980년에는 북한이 총리회담을 열자고 제안해 놓고는 그들 스스로 중단시켜 버렸는가 하면 지난 봄에 제의한 남북한 체육회담 또한 결실을 보지 못한채 끝나버렸다. 지난날의 저와같은 남북한 회담기록으로 보아 내달의 경제회담이 급히 어떤 좋은 「합의」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대한적십자사 유창순 총재가 지난 6일 제의한 남북적십자회담과 대한체육회가 4일 내놓은 남북체육회담에 관해서도 북한은 아직 응해 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남북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자는 절박한 인도적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북한이다. 경제 얘기만 잘 풀려 가리라는 기대는 성급하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떤 형태고간에 남북한 간에는 접촉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서 그리고 가능한 얘기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데서 경제회담에 기대를 걸어보려 한다. 북한은 그들의 말대로 「하루빨리 민족적 유대를 회복하며 여러 분야에서 합작과 교류를 실현할데 대한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로만 할게 아니라 이번 회담에서는 행동으로 실증해주기를 촉구해마지 않는다.

#### 남북 경제회담의 논리

한국일보 (1984.10.18)

마침내 첫 남북경제회담이 오는 11월 15일 관문점에서 각기 정부 차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들이 자리를 같이하는 가운데 열리게 되었다. 우리측 신병현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의 10일자 제의를 북한측이 16일자 정무원 부총리 김환 명의로 수락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그동안 우리측은 남북경제회담 제의에 앞서 지난 4일 체육회담을 제의했었고 6일에는 이산가족 찾기 회담을 제의한 바 있었다. 이번에 북한측이 우선 경제회담부터 선행시켜 긍정적 호응을 보인 점이 눈길을 끌게 한다.

순서야 어떻든 남북한 당국간의 직접 대화를 소통시키고 그동안 경색되었던 분위기를 완화, 개선하면서 경제·기술 분야의 교류·협력을 내다보는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동일민족의 유대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아 환영할만한 사태진행이라고 평가된다. 우리측이 최근 북한이 보내온 수재물자를 슬기롭게 인수한 연장선에서 어떤 형태건 신국면 개척이 예측되기도 했던 것이다. 주변국들의 반응역시 고무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거니와 우리 거래의 자치능력을 과시하는 의미에서도 과거처럼 용두사미의 재연이 안 되도록 모처럼 조성된 새 계기를 생산적으로 활용해 나가고 싶다. 그러자면 북한측이 「땀 저의」 없이 남북경제회담 수락을 우선 경제논리에 따른 합리적 선택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의 경제난국은 지금 매우 심각하다. 그곳 제2차 7개년 계획은 금년말이 시한인데도 현시점에서 목표 달성은 절반정도에 그쳤고 한편 중공의 실용주의문화개방정책에 관련된 자국이 적지 않다. 그리하여 지난 1월 그곳 최고인민회의는 자본주의국가들과의 경제교류 확대를 결의했으며 이어 9월에는 선진국들의 자본·기술 도입을 위한합영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그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이번 남북경제회담 수락이 「가까운 곳부터 관계를 개선해야 먼 곳의

관계도 개선된다」(근자설·원자래)고 하는 발상의 구체화인지 모른다.

하나 북한측이 정녕 노리는 바가 남북경제교류 자체보다도 그들이 저지른 랭군사건이 자초한 서방제국의 제재조치를 우물쭈물 해제시키려 한다든지 또는 속다르고 겉다른 「유연한 자세」의 선전으로 파급효과를 노리거나 심지어 위장 평화공세의 일환으로 삼는다면 모처럼 햇볕보게 된 직접 대화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질 수 밖에 없겠다.

우리는 남북경제회담의 밝은 진전을 위해서도 북한측이 구시대적인 낡은 작태를 뉘우치고 경제의 현실논리에 눈뜨면서 순수한 동일민족 의식을 가다듬도록 촉구하며 또한 기대해 보고자 한다.

과연 경의선철도 연결될 것인가  
-남북경제회담의 순조로운 출발을 지켜보면서-

경향신문 (1984.11.16)

15일 판문점에서 열린 첫 남북경제회담은 양측대표의 기초연설에서부터 몇가지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등 예상외의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양측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것으로는 물자교역과 경제협력의 필요성, 「남북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물자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한 남북간 철도(경의선)의 연결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끊어진 경의선을 연결하자는 양측 제의는 경제적 실리의 차원을 넘어 민족분단의 아픔을 해소해 보겠다는 민족적 염원이 공통적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밖에 합의된 것은 판문점 지역 안에 있는 양측 시설물을 교대로 이용하고 여건이 조성되면 서울, 문산과 평양, 개성을 오가며 회담을 열기로 한 것 등이다. 경제회담을 위한 남북간 전용통신시설을 설치키로 합의한 점이라든지 양측이 상식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교역가능 품목들을 제시한 것도 회담에 임하는 서로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할만하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 대표가 밝힌 물자교역에 대한 기본입장 10개항은 구체성 있는 복안을 가지고 성실하게 회담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한 관계당국간에 교역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수반되는 세부약정이 체결되기를 희망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설득력있는 제안이라 하겠다.

남북한 경제협력은 어디까지나 우선적으로 손쉬운 물자교역부터 시작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등 합작투자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순서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측이 「남북간의 물자교역과 여타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실시하는 문제」를 이번 회담의 의제로 제시한 것은 적절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 경제회담의 의제로 「합작」과 「교류」를 내세움으로써 다소간의 이견을 나타냈다. 북한측이 흔히 사용하는 「합작과 교류」라는 것은 중국의 국공합작에서와 같은 정치성을 띤 용어라는 점에서 이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용어 속에 깔린 고도의 정치적 속셈과 전략적 목적은 소위 「통일전선」술책이나 「고려연방제」론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러한 정치선진적인 주장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북한이 제의했다는 「수산합영회사」도 남북의 어민이 자유로이 고기를 잡자는 취지는 좋으나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근로인민」 위주의 합작사업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면 여기에도 복선은 깔려있을 것이다.

경제이론적으로 볼 때 상품의 교역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남북한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은 희망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한반도가 하나의 통합된 경제권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면 남북한은 막강한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현재보다 훨씬 더 능률적인 성장과 번영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한편 랭군만행사건 1년만에 갑자기 풀어지기 시작한 남북간의 해빙무드에 다소간의 경계심을 풀 수 없으면서도 이유야 어떻든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이를 외면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번 경제회담의 부드러운 분위기가 앞으로 열릴 남북적십자회담에 그대로 반영되고 그 밖의 체육·문화 회담 등을 여는데 촉매제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 남북한 경제교류의 순서

동아일보 (1984.11.16)

15일 판문점에서 가까운 남북정부당국자들간의 첫 경제회담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고 한다. 우리측 수석대표도 회담을 마치고 북한이 종래와는 달리 회담에 임하는 자세에서 유연성을 보인 것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체제가 다른 국가간의 교류에 있어 정경분리라는 큰 외교원칙만 일단 합의하면 경제교류는 어렵지 않았던 예를 동서고급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다만 분단국가간의 정경분리라는 외교원칙의 합의는 바로 관련국가의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15일 회담에서의 유연성이 정경분리원칙 표현의 첫 신호인지 아니면 북한의 일관된 대남적화통일 또는 「합작」 전략의 전술적 표현인지를 지켜 볼 수 밖에 없다. 흔히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남북간의 협상은 지리한 과거가 그랬듯이 시작은 조심스러운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첫 경제당국자회담에서 보인 의제의 이견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우리측이 교역과 협력을 제의한데 비하여 북한은 합작과 교류를 제의했다. 우리가 상품의 거래를 시작으로 한 협력의 심화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북한은 체제문제가 직결된 합작에 중점을 두는 방향인 것을 알 수 있다.

본래적인 의미에 있어 합작이란 국교가 먼저 트여야 되는 것이다. 국교가 없이는 투자위험에 대한 국가의 보장제도가 발동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겨우 지난 9월에야 「합작투자운영법」의 제정을 발표하였다. 이 모법이 실제로 외국투자자들이 수용할 수 있기 위하여는 구체적 시행령과 세칙이 나와야 한다. 이리기에 적어도 2년은 걸릴 것이다.

중공이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제정한 것이 1979년 7월이었으며 실시조례가 완비된 것이 1983년 9월이었다. 물론 그 전에 주요 투자도입대상국인 미국과 일본과의 국교가 회복되었다. 또 1949년부터 4개 연합군점령하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1백 50억마르크(50억달러)에 이르고 있는 동서독간의 무역에 있어서도 합작투자는 금년에서야 처음 「폴크스바겐」의 동독공장진출로 시작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전에 양독간의 외교적 승인이 있었고 「유엔」에 동시가입도 이루어졌다.

이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질의 체제간에는 물론 같은 체제간에서도 합작이라는 경제거래는 국교정상화 이후의 일이며 경제거래의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 단계의 결실인 것이다. 합작이란 물건과 돈과 사람이 동시에 투입되는 성숙된 거래형태이기 때문이다.

남북의 경제와 산업간에는 실로 많은 보완관계를 갖고 있다. 초보적 상품교역에서 서로 실익을 볼 수 있는 분야는 이미 우리측 대표의 15일 기조연설에서도 또 10월 13일의 우리 경제 4단체장의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제시됐다. 현재의 필요에서 출발하는 것이 미래의 이상을 먼저 꾸미는 것보다 더 의미있는 시작이 된다. 상품 돈 사람이 한꺼번에 영킨 복잡한 틀의 교류보다 가격이 분명한 상품 거래부터 시작하는 것이 성사의 순서이다.

경제의 거래는 경제의 순서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모처럼의 순조로운 경제회담의 출발이 착실히 전진하기 위하여는 거래의 순서가 확실해져야 한다.

이점 북한에 태도의 유연성과 더불어 경제거래 원칙에 대한 이해를 촉구한다.

## 첫 남북경제회담을 보고

서울신문 (1984.11.17)

지난 15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1차 남북경제회담이 대체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또 쌍방이 2차 회담을 새달 5일에 갖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이 회담이 일단 순조롭게 출발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평가된다.

우리측의 제의와 북한측의 호응으로 이루어진 이 회담은 남과 북이 경제분야에서 상부상조하는 민족적 화합의 길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며 나아가서는 온 겨레가 염원하는 조국통일을 앞당겨 보자는 데 그 참뜻이 있다. 지금 국제사회가 이 회담에 쏟고 있는 한결같은 관심과 기대도 바로 이 점에 있다고 믿는다.

제1차 회담에서 남북한 대표간에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을 추진한다는 원칙과 회담절차문제 등에 관해 합의를 본 것은 우선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회담의 핵심부분인 의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쌍방은 의견이 엇갈려 합의를 못이룬 채 다음 회담에 미루기로 했다.

의제토의에 있어 우리측은 남북간의 물자교역과 여타 분야의 경제협력을 실시하는 문제들의제로 하자고 했다. 이는 실제로 물자교역과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가자면 서로의 제도와 정책의 차이에서 야기되는 복잡한 문제가 많을 것이므로 그러한 문제점들을 쌍방간의 협의에 의해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실시가능한 교류와 협력부터 단계적으로 해나가자는, 누가 보아도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주장이다. 우리측이 내놓은 10개항의 제의내용에서 그것은 충분히 설명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측은 남북간의 경제분야에 있어 「합작」과 교류를 동시에 실시하는 문제를 의제로 하자고 들고 나왔다. 이는 남북간 제도와 정책의 차이를 완전히 도외시한, 오랜 경제교류의 실적을 토대로 마지막 단계에 가서야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의 경제협력을 당장에 실시하자는 본말이 뒤바뀐 주장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1970년대초의 대화경험을 다시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남북조절위원회의 회담에서 우리측이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상호 사회개방」과 「상호 교류·협력」의 실시를 제의하자 북한측은 한국의 「반공정책 철폐」등 소위 「전제조건」과 함께 「정치적 합작」과 「군사적 합작」이 다른 분야의 교류·협력에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다가 끝내는 대화자체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말았다.

북한측이 비록 이번 회담에서 「합작」이란 표현을 「협력」으로 수정할 수도 있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는 했지만, 원래 그들이 사용하는 「합작」의 개념에는 대남적화를 위한 전술적 방도로서의 뜻이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그들이 모든 군사력을 갑작스럽게 전진배치함으로써 휴전선의 긴장을 어느때보다도 고조시키고 있는 사실이 또한 대화의 뒷전에서 남침땅굴을 파내려오던 1970년대초의 상황을 상기하게 한다.

우리는 우리 정부와 경제계가 북한의 이같은 대화자세를 철저히 경계하는 가운데 모처럼 마련된 경제회담을 생산적인 대화로 이끌어나가줄 것을 당부한다. 한편 북한측은 경제회담에 걸려있는 내외적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려면 그 부질없는 군사적 긴장조성 책동을 즉각 중지함과 동시에 앞으로 있을 회담에선 보다 성실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해 둔다.

## 실현된 남·북경제회담

- 「합작」 우선론을 음미해야 할 지난 경험에서 -

조선일보 (1984.11.16)

지난 9월의 남·북한간 수재물자·선물 교환을 보고 「제비한마리가 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

다」라고 서양 속담을 인용한 외부의 한반도 정세관이 있었지만, 제비가 더 오게될 것인지 아니면 왔던 한마리마저 되돌아가고 말것인지를 짐쳐 볼 수 있는 기회를 남·북한은 가졌다.

15일의 남·북당국간 경제회담은 분단 39년사에 초유의 일이다. 우리측은 8월 20일 남·북 교역과 경제협력 문호개방을 촉구했고 10월에 이를 구체화한 당국간 경제회담을 제의했다. 얼마간의 곡절은 있었지만, 북측의 호응으로 열린 이번 판문점경제회담은 표면상 일단 순조로운 발진을 예고하고 있는듯이도 보인다.

회담장에서의 보도도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속에 대화가 진행됐다고 전하고 있다. 쌍방은 12월 5일 회담을 속개할 것에 합의하고 회담장소로 우리측 「평화의집」과 북측 「판문각」을 번갈아 사용하고, 여건이 익으면 문산과 개성, 서울과 평양 간을 왕래하면서 열자는데, 또 경제회담 전용전화선을 설치하자는데도 합의를 보았다.

1차회담의 경과만으로는 무엇인가 생산성있는 앞날을 예감케하는 조짐을 보이기도 한 것이다. 합의 사항 이외에 쌍방은 회담의 핵심인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내놓았다.

보도와의 중복을 피하거나와 의견차로 의제합의를 2차회담으로 미룬것과 함께, 구체적 방안의 어느 하나라도 세부사항까지 의견일치를 보아야 비로소 경제협력 시동을 보게될 것이므로, 기대를 유보하고 아직은 냉철히 전도를 지켜볼 입장이다.

당장 우리의 신경에 걸리는 것은 「쉬운 것부터」라는 합리적이고도 당연한 사리에서의 우리측 「물자교역」 우선실현 제의에 대해, 북측이 이른바 「남북합작」론을 앞세웠다는 사실이다. 「합작」을 「협력」으로 수정하는 등 태도의 변화를 다소 보였다고는 하지만, 남북대화에서 용어의 일방적 해석이 어떤 결과를 빚는가를, 우리는 1970년대에 실컷 경험했다.

대표적인 것이 7·4 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이다. 북은 외세에의 의존없이 「자주적」으로 하자고 했으니, 당연히 미군을 먼저 철수시켜야 한다고 우겼다. 3살 어린이가 들어도 북을 믿을 수 없는 주장을 내내고집하다가, 그것의 무망으로 북은 대화를 파탄시켰다.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안겨준 북이었던 탓으로 꽤 우호적이었다는 제1차 경제회담 분위기였음에도 우리는 성급한 기대를 유보하는 것이다. 북측의 경제회담 호응 진위에 대해 여러가지 시각의 진단이 거론되고 있음이 우리의 실정이다. 소위 「체제연명의 적응」에서인가, 그 밖의 또다른 어떤 저의에선 가는, 회담이 거듭됨에 따라 결국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또다시 「땅굴」위를 가고 오면서까지 대화를 이어보려고 애쓴 어리석음을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남·북 경제회담은 경제협력 논의에 앞서는 1980년대 남·북만남의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그것은 더 큰 길로 이어지는 더 큰 일의 시작이기도 해야 한다. 북측이 요청한 남·북 부총리 접촉론도 그런 평가에서만 또한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측 수석대표가 강조한 바, 남·북 경제협력 실현이 긴장완화, 신뢰조성, 그리고 민족의 화합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성실성을 평양이 간직하고 있고, 실제 행동으로 보일 것인가가, 모처럼 만남의 성패를 가름하는 관건임을 내외의 시선이 익히 알고 있고 주시하고 있다.

#### 남북 경제회담의 의미

중앙일보 (1984.11.15)

서로 대치관계에 있는 자유세계요 공산세계, 한국과 북한의 체제상 차이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경제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자유세계가 채택하고 있는 자본주의가 사유재산제와 경제활동·영리추구의 자유, 시장경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면, 공산세계가 채택한 사회주의내지 공산주의는 그와 반대로 공유(국유) 재산제와 경제활동·가격기구의 엄격한 중앙통제를 특징으로 한다.

같은 논리에서 한국이 자본주의 제도하에 개방체제를 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공산국가 중에서도 가장 교조적인 공산주의적 통제경제와 폐쇄체제를 추구해 왔다.

15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한 경제회담은 이같이 남북이 가장 양극화된 분야의 대표회담이라는 데 특별한 뜻이 있다.

더구나 이날의 회담은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간 협력을 위한 경제회담일 뿐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있는 양측의 고위관리를 수석 대표로 하는 공식회담이라는 데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경제분야는 두 체제의 가장 대립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가장 협력이 쉬울 수도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가령 스포츠의 경우만 하더라도 상호교류가 이루어졌을 때 그 결과는 숙명적으로 어느 일방의 승리 아니면 패배이다. 즉 이해가 완전히 대립되는 양자간의 제로섬(zero-sum) 관계에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은 남북한 쌍방에 모두 이익이 되는 논 제로 섬(non-zero-sum) 관계가 가능한 것이다.

이번 남북한 경제회담에 걸고 있는 내외의 기대가 특히 큰것도 그 때문이다. 외국의 여론도 이번 회담은 어느 정도 결실을 볼것이라는 데 대체로 일치돼 있다.

경제회담은 앞으로 전개될 남북간의 대화나 교류·협력에 있어서 선도적인 패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더욱 주시하는 바이다.

경제문제엔 항상 가장 합리적인 계산이 전제되고 가시적인 결과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40년간 정반대의 상극적인 체제로 굳어져온 남북간의 관계는 이제 어떤 감상이나 명분 또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해결되기는 어렵게 돼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계산위에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상호의존, 상호보완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 이것이 다른 기능적 분야로 확산되어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곧 통일의 기반이며 그 자체가 통일을 향한 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민족임을 잠시도 망각해서는 안된다. 그런 점에서 경제력의 5배인 우리가 너무 타산에 집념하기 보다는 궁핍한 북한경제를 도와준다는 기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은 헛된 정치적 의도나 아집을 버리고 순수한 동족애로 나와야 한다.

이번 경제회담은 우리의 민족역량이 세계적으로 시험받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공존·협력 가능성을 실험하는 또 하나의 케이스라는 의미를 남북의 당사자들은 깊이 명심하여 반드시 성공시키기를 기대한다.

해외반응

<미 국>

○ 뉴욕 타임즈(1984.11.17)

남북한관리들은 양국간의 경제협력과 교역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5일 판문점에서 처음으로 회합했음.

2시간 반동안의 회담에서 협상자들은 기본목표의 윤곽을 정한 후 앞으로 3주일간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음.

그러나 회담을 다시 열기로 한 양쪽의 열의 자체가 의미심장함.

이번 경제회담은 1970년대초 이래 계속되어온 관계긴밀화를 위한 끈질긴 노력이 결실된 또하나

의 예임.

이날 회담은 또한 전두환 대통령이 1980년 한국대통령이 된 이래 열리는 첫 정부급 직접접촉이기도 함.

중전 회담들은 기술상 정부의 일부가 아닌 적십자사와 체육계의 관계자들의 회담이었음.

각기 7명씩의 쌍방협상자들은 31년전 휴전협정이 조인된 이 무인촌의 단층 건물회담장에서 마주 보고 앉았음.

회담분위기는 상호 비난속에서 회담이 결렬되고 했던 지난날과는 달리 우호적이고 정중했음.

경제전문가인 한국측 수석대표 김기환씨는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족전체의 이익을 위해 남북한간의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민족적 유대를 어떻게 재확립하느냐에 있다』고 말했으며 북한측 단장인 무역부 부부장 이성록도 『우리는 한 민족이다』라고 말했음.

이날의 경제회담은 한국이 지난 9일 북한의 수재물자제공 제의를 놀랍게도 수락한 데 이어 한국측 제의로 이루어진 것임.

최근 북한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합영법을 발표했으며 이는 종전의 주체노선으로부터 크게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일 본>

##### ○ 조일신문 사설(1984.11.16)

한국과 북한의 경제회담이 열려 쌍방이 경제교류에 관한 제안을 하고 다음 회담을 약속했음.

북측은 남북 부총리회담을 제안하는 등 예상을 넘는 태도를 보였음.

한국과 북한의 제안을 비교해보면 앞으로의 교섭에 합의가 기대되는 점이 적지 않음.

그러나 몇가지의 문제점은 있음.

지하자원개발, 어업의 경제합작을 선행하려는 북한에 대해 한국은 물자교역에 중점을 두고 있음.

경제회담이 시작된데 불과한 단계에서 북측이 부수상회담의 제안까지 끄집어 낸 것은 좀 성급하다는 감도 있음.

그러나 그것도 지금의 기회를 놓쳐서는 남북화해의 기회가 멀어진다는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해는 됨.

대화와 교류를 요구하려는 남북한의 움직임은 그 자체가 아시아의 평화에 유익할 뿐 아니라 세계의 긴장완화에도 직접 연결되는 움직임이라는 것을 직시해주기 바람.

##### ○ 동경신문 해설(1984.11.17)

제1차 남북경제회담이 개최된 15일은 돌이켜보면 역사적인 날이 될지도 모름.

한국과 북한 쌍방의 내부사정과 국제환경을 볼 것 같으면 동 회담은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으면서도 상당한 진전이 전망되기 때문임.

(남북대화추진의 내부요인)

한국은 88년 서울올림픽을 선진국에의 도약대로 보고 있음.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한국으로서는 올림픽개최에 적합하게, 평화롭고 각국이 안심하고 참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또 남북직접대화를 주장하는 한국으로서는 이 회담에서 일정의 성과를 거둬으로써 당사자간에서 남북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내외에 과시할 수 있을 것임.

한편, 북한은 한국과의 격차가 커지기만 하는 경제재건을 지향해, 개방 경제체제로 내디뎠음.

남북이 대립하고, 동족간의 교류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외국, 특히 서방측으로부터의 기술협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임.

남북교류는 개방체제구축의 시금석으로 될 것임.

쌍방이 모두 긴장완화에의 욕구가 저류에 흐르고 있는 것임.

또 북한에서는 올해로 제2차 7개년계획이 끝나는데 많은 부문에서 목표미달이며 이대로 간다면 1985년부터의 제3차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함.

이런 이유에서도 개방경제의 추진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것임.

한국으로서도 1986년 아시아대회, 1988년 올림픽 등의 이유때문에 이데오르기 논쟁만을 하고 있을 수는 없음.

이런 것들도 회담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임.

#### (국제환경)

지금 세계에서는 미·소간의 대화부활의 징후등 재차 데탕트예의 모색이 시작되고 있음.

더욱 현재, 한국과 미·일관계는 물론, 북한과 중소관계도 비교적 안정되고 있음.

미·중관계는 긴밀화하고 한국과 중공의 「접촉」은 최근 한층 진전되고 있음.

그리고 주변제국은 모두 긴장완화를 향해 남북쌍방의 노력을 직접, 간접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국제환경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음.

(한 계) 남북분단 이래 근 40년 한국은 「반공」, 북한은 「쇄국」을 정권 유지의 기둥으로 유지했었음.

그러나 남북교류는 그에 반대되는 것임.

한국정부고관은 「대화가 진전되었을 때 반공교육을 어떻게 해야할지 머리가 아프다」라며 솔직히 인정하고 있음.

한편 북한은 외국, 특히 서방측에 창을 막고, 자립경제를 계속해 왔었음.

그러나 한국이 가난하다고 가르쳐온 북한이 한국의 전기제품과 자동차 등을 수입할 경우, 반한교육의 허구가 무너져 북한의 생활 수준의 낮음을 주민에게 알리는 것으로 될 것임.

나아가서는 김일성·정일 부자세습체제에 대한 신뢰성에도 관련되는 것임.

따라서 쌍방이 다같이 정권유지기반에 금이 가지않는 범위의 교류, 여기가 큰 한계가 될 것 같음.

#### <기 타>

##### ○ 중공, 인민일보 사설(1984.11.17)

이 회담에서 얻어진 건설적인 결과들은 남북조선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좋은 시작이며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것임.

북조선은 원자재가 풍부하고 어느 정도의 공업기반을 갖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어느 정도의 과학기술수준은 갖고 있지만 원자재가 부족함.

만일 남·북조선간 경제협력이 실현될 수 있다면 그것은 상호이해와 민족적 일체감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보충하여 남·북한의 두 경제상태에 이익을 줄 것임.

남·북조선간의 의견차이는 하루아침 사이에 해소될 수는 없지만 더 접촉을 하고 더 논의를 한다면 오해와 불신이 서서히 제거되면서 서로간의 이해가 점점 나아질 것임.

우리는 남·북조선간에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이 협력을 통해 조선민족의 자유적 결정과 평화 통일이 점점 촉진될 수 있기를 희망함.

#### 나. 남북적십자 본회담 예비접촉

##### 성립

유창순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1984년 10월 4일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손성필 위원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고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개를 촉구한데 대해 10월 29일, 북적측은 이에 호응하는 내용의 답신을 보내왔다.

북적 손성필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에서, 북한측은 11년간 중단된 남북적십자 본회담 재개에 따른 실무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적십자대표들 간의 예비접촉을 개최하자고 제의하면서, 11월 20일 오전 10시 관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 3명의 대표를 파견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이에 대해 한적은 11월 14일자 전화통지문을 통해 조철화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3명의 대표명단을 통보하고, 북적측도 이틀 후에 대표명단을 알려줌으로써 남북적십자 사간의 예비접촉이 열리게 되었다.

쌍방 대표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 대한적십자사 대표단

수석대표 조철화(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대 표 송영대(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협의회 위원)  
대 표 최은범(대한적십자사 구호봉사부장)

##### 대한적십자회 대표단

대표단장 서성철(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대 표 박영수(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부장)  
대 표 박동춘(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과장)

##### 경과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접촉이 1984년 11월 20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분까지 관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접촉의 안건은 1971-1972년의 남북적십자 예비접촉에서 쌍방이 기합의 한 사항들을 토대로 제8차 본회담 개최에 따른 의제, 장소, 대표단 구성 등 제반 운영 절차를 재확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몇가지 사안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쉽게 타결될 수 있었다.

대한적십자사측 조철화 수석대표는 북적측이 한적의 제의에 호응해줌으로써 본회담 재개문제를 협의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본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쌍방이 본회담 운영을 위해 이미 합의한 바 있는 실무문제를 재확인하고, 아울러 추가로 협의할 문제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갈것을 촉구하였다.

조 수석대표는 이상과 같은 입장에 입각하여 이날 접촉의 토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의 장소문제

본회담의 장소는 1971년 10월 6일 제3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에서 쌍방이 서울과 평양을 번갈아 가면서 개최하기로 한 바에 따라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은 서울에서 개최한다.

둘째, 남북적십자 본회담 의제문제

남북적십자 본회담의 의제는 1972년 6월 16일 제20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에서 쌍방이 합의한 대로

- (1)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
- (2)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에 자유로운 방문과 자유로운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
- (3)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서신거래를 실시하는 문제
- (4)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문제
- (5)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

이상 5개항으로 한다.

세째, 남북적십자 본회담 대표단 구성문제

본회담 대표단은 쌍방이 합의한 대로 수석대표는 쌍방 적십자사 부총재급으로 하고 대표 각 7명, 자문위원 각 7명, 수행원 각 20명, 보도진 각 25명으로 한다.

네째, 상설 회담연락사무소 운영문제

상설 회담연락사무소는 1971년 9월 29일 제2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의 합의사항에 따라 그 기능을 정상화하고 판문점 「자유집」과 「판문각」 사이의 직통전화로 재개통·운영한다.

다섯째, 본회담 기타 운영절차문제

신변보장, 왕래절차, 체류기간과 회담일정, 표지, 장비및 소지품, 교통, 통신, 회담장외의 활동, 회담장 시설, 회의기록, 회의공개여부, 보도진, 회담운영 형식, 합의문건 작성 및 발표, 편의제공에 관한 문제는 1972년 8월 11일 제25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의 합의사항대로 한다.

여섯째,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일자 문제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은 본 예비접촉이 종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북적측은 한적의 이러한 주장에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면서도, 회담이 중단된지 오래이며 또 그동안 객관적 정세가 변했다는 이유를 들어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조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대표단 구성문제에서 북적측은 그간 출판·보도기구가 증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출판기재의 다양화에 따라 종사자의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쌍방보도진을 각기 종전의 25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대신 수행원을 20명에서 15명으로 줄일 것을 제의해 왔다.

이에 대해 한적측은 수행원수는 종전대로 20명으로 하되 기자수는 북측 제안대로 50명으로 할

것에 동의함으로써 보도진과 수행원을 쌍방 각기 50명과 20명으로 구성하는데 합의를 보았다.

또 북측측은 본회담이 11년이상 중단되었다가 재개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서울에서 열릴 제 8차 회담과 평양에서 열릴 제9차 회담은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기 위해 쌍방 예술인들의 교환공연을 가지자고 고집함으로써 회담에 호응해 나온 그들의 진의가 과연 본회담의 실질적인 진전을 통해 이산가족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려는 데 있는 것이었는지를 의심케 하였다.

북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적측은 그러한 축제행사는 적십자회담 본연의 임무와 일천만이산 가족들의 염원에 부합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과거의 관례대로 주최측이 예술공연을담당하자는 주장으로 이를 일축하였다.

한편 제8차 본회담 일자문제 토의에서 북적 측은, 처음에는 주최측인 한적에 일임한다고 했다가 한적이 1984년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로 하자고 제의하자, 돌연 태도를 바꾸어 과거 본회담이 12월과 1월에는 개최된 적이 없다고 하면서 1985년 1월 23일에 열 것을 주장하여 합의를 보지 못했으며, 추후 직통전화를 통해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날 접촉에서 쌍방이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회담 장소문제

제8차 회담은 서울에서, 제9차 회담은 평양에서 한다.

(2) 본회담 의제문제

1972년 6월 16일 제20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에서 쌍방이 기합의한 5개항을 의제로 한다.

-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
-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에 자유로운 방문과 자유로운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
-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서신거래를 실시하는 문제
-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문제
-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

(3) 본회담 대표단 구성문제

- 대 표 7명
- 자문위원 7명
- 수 행 원 20명
- 기 자 50명

(4) 상설연락사무소 운영문제

관문점 상설연락사무소의 기능 및 직통전화를 즉시 재개한다.

(5) 본회담 공개여부 문제

8, 9차 본회담은 공개로 하며, 그후 회담부터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쌍방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 있다.

(6) 본회담 기타 운영절차 문제

신변보장, 왕래절차, 표지, 장비 및 소지품, 교통, 통신, 회담장외의 활동, 회담장 시설, 편의 제공 등에 대해서는 1972년 8월 11일 제25차 예비회담, 1972년 10월 25일 제3차 본회담의 추가 합의

사항대로 한다.

국내반응

「이산」 문제 이번엔 꼭 풀자  
-재개될 남북적십자회담과 우리의 기대-

경향신문(1984. 10. 30)

현재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아픔 중의 하나는 이산가족의 고통이다. 이러한 고통은 정치와 이념을 초월한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이산가족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때 남북간에 끊어진 혈맥은 다시 이어질 수 있고 차차 대화의 길도 트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랜 단절로 인해 심화된 상호불신과 적대감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으로 흩어진 1천만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인도적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자」는 한적측 제의는 이점에서 6천만 거래의 간절한 비원을 대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적측의 수재물자제공 제의를 우리가 받아들인 것도 순수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민족적 화해와 교류의 길을 트려는 소망에서였다. 국제적십자 연맹의 구호마저 사양한 우리가 필요하지도 않은 북적 물자를 받아들인 것은 이를 계기로 단절된 남북 관계에 새로운 접촉과 교통의 길을 넓히겠다는 대화 의지의 발현이었던 것이다. 한적 총재가 북적 물자를 인수하자마자 빠르면 10월중에 이산가족찾기 회담을 열자고 다시 제의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설득력이 있었다.

이러한 한적측 제의에 대해 북한적십자회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은 다행한 일이다. 북한적십자회는 오는 11월 20일 상오 10시 판문점에서 남북적십자 본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접촉을 갖자고 우리측에 회신을 보내왔다고 한다. 우리는 우선 거래의 염원과 국제여론을 거역하지 않고 적십자회담 재개제의를 받아들인 북한측 자세 전환이 순수한 인도적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기를 바라며 이를 환영하고자 한다.

돌이켜 보면 우리가 1천만 이산가족들의 재회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 적십자회담을 시작한 지도만 13년의 세월이 경과했다. 1971년 8월 12일 한적측 제의로 시작된 남북간의 인도적 접촉은 그해 9월 20일 판문점에서의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으로 발전했고 1973년 7월까지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며 도합 7차례에 걸친 남북적십자 본회담을 연 바 있다. 그런데도 이 회담이 결렬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 까닭은 전적으로 북한측의 무성의 때문이었고 남북적십자회담을 정치선전장으로 몰고 가려는 북적측의 불순한 태도 때문이었다.

이른바 「선행조건」을 주장하면서 이산가족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보다는 대한민국의 반공법 철폐 등 엉뚱한 정치적 주장만을 고집했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재개될 남북적십자회담의 성공여부도 이같은 북한측 자세가 얼마만큼 순수인도주의적으로 전환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적십자 회담은 정치·군사·경제·문화 등의 문제를 다루는 자리가 아니다.

남북적십자회담을 다시 여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1천만 이산가족들의 재회를 인도적으로 실현하려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 이념이나 체제 또는 선행조건도 「인도」보다 우선할 수는 없어야 한다. 정치·군사적인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 마땅히 남북조절위원회를 정상화시켜 그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토의해야 할 것이다.

뒤늦게나마 적십자회담 재개에 긍정적인 호응을 보인 북적측은 끝까지 순수 인도주의적 자세로 남북적십자회담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실무접촉에 와서 반드시 명심해 주기 바란다.

## 남북적 7년만의 회담

-이산가족 만남 적십자 정신으로 길 터야-

동아일보 (1984. 10. 30)

남북한으로 갈라진 혈육을 찾아주기 위한 남북회담이 11월 20일 판문점에서 열린다. 지난 6월 유창순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수재물자 인도·인수를 계기로 남북이산가족 찾기 회담을 10월중에 개최하자고 북한 적십자회측에 제안한 바 있었다. 북적위원장 손성필이 29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유총재의 제의를 수락, 열기로 한 것이다.

한적측의 요구대로 남북 적십자 회담을 10월중에 열지 않고 11월로 미룬 북적측의 연기에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남북적 실무회담이 지난 1977년 12월 9일을 마지막으로 7년동안 막혀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내달이라도 열리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원래 1971년 8월 12일 최두선 한적 총재의 제안으로 문이 열리기 시작한 남북회담은 1977년까지 25차례의 실무회의와 일곱 번의 본회담을 거쳤다. 본회담은 서울과 평양을 번갈아 오가며 열렸으므로 한 때 통일의 부푼 꿈까지 안겨준 일도 있었다.

그러나 북한 측이 그 동안 한국의 반공관계법 철폐를 비롯 터무니없는 정치 구호를 내걸어 남북회담을 기피해 왔음을 상기할 때 북적의 이번 호응에도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 북한이 인도주의 문제인 이산가족 찾기 운동마저도 그들의 대남적화 전략전술의 연장선으로 접근한다는 데서 그렇다.

그러면서도 최근 북한의 대내외 접근 태도가 적어도 겉모양으로는 조금 달라져 보인다는 데서 우리는 북적측의 동태를 앞으로 주시코자 한다. 우선 북적은 수재 물자를 한 적에 제공한 바 있다. 남북한의 긴장관계로 미루어 보아 물자를 제공하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용기와 관용을 요구한다고 할 때 북적의 수재물자를 한적이 받아들였다는 것은 우리의 성숙한 대북 자세를 반영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수재물자를 남으로 내려보냈다는 것은 전에 없던 일임에는 분명하다. 또 북한은 서울측이 제의한 남북한경제회담도 11월 15일 열기로 호응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결의를 통해 자본주의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선언했고 9월에는 「합영법」을 발표, 서방자본과의 합작 가능성을 열었다. 거기에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가들은 그들대로 긴장 완화의 길로 기울고 있다.

물론 북한의 저와 같은 새로운 움직임은 대남적화 전략전술의 약화로 해석하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태도가 겉으로나마 변하고 있다는 것은 주시할 대상이다. 11월 20일 열릴 남북적예비회담에서 북적측은 또 정치선전으로 일관할게 아니라 적십자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 이산가족의 아픔을 하루 빨리 풀어주는 데 협력할 것을 촉구해 두는 바이다.

## 북적의 성실성을 기대한다

서울신문 (1984. 10. 31)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남북적십자회담을 열자는 대한적십자사의 제의에 북한적십자회가 호응해 왔다. 한적은 지난 4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남북회담을 열 것을 제의했었는데, 북적이 29일 뒤늦게나마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오는 11월 20일 판문점에서 남북적 대표들 사이에 예비 접촉이 열리게 되었다.

남북 이산가족의 재회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쌍방 적십자 사이의 본회담은 지난 1972년 8월 30일부터 1973년 7월 13일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서울과 평양에서 열렸었다. 이 때만 해도 남북회담에 대한 민족적 기대는 엄청나게 컸었다. 이 회담이 원만히 진행되어 이산가족의 재회가 이루

어제 6·25 동란의 상처가 치유되고 남북한 사이에 신뢰가 회복되어 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될 것을 갈망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1973년 8월 28일 이른바 김영주 성명을 발표해 이 회담을 중단시켜 버렸다. 인도주의 문제에 엉뚱하게 한국의 내정문제를 혼합시켜 민족적 여망과는 어긋나게 적십자대화를 파탄시켰던 것이다. 그러므로 오는 11월의 남북적회담은 결국 11년 3개월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우리는 이 회담의 성공을 빌어마지 않는다. 남북의 대화로써만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켜 마침내는 갈라진 민족의 재결합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달에 이루어진 남북물자교류에 대해서도 찬성했으며 11월 15일에 열릴 남북 경제회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여러 수준, 여러 부문에서 남북의 접촉과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땅에 결코 전쟁이 일어날 수 없으며 평화통일의 큰 길이 열리게 될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남북한의 접촉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가장 긴급하게 요청되는 것은 북한의 성실성이다. 오랫동안 대화를 거부해왔던 북한이 이제나마 우리의 제의들에 호응해 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민족적 양심을 되찾아 진지한 자세를 가져 줄 것이 요청되는 것이다. 남북적 회담에 국한 시켜 말한다면, 북한은 다른 생각들을 버리고 오직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들의 마음의 한을 풀어줌으로써 분단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이 현실점에서 적십자 회담이 지닌 민족적 사명임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굳이 말하는 까닭은 북한이 여전히 다른 정치적 술수를 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랭군폭탄테러 사건으로 국제적 위신이 크게 실추된 북한이 위장평화공세의 하나로 대화에 응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지난달 물자교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그것을 「연방제」 선전과 연관지었던 전례가 북한의 속셈을 말해준다.

그러나 1970년대의 경험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인도주의 문제에 정치 문제가 개입될 때 남북적 회담은 아무런 진전을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북적은 이 교훈을 되살려야 한다. 즉 북적은 인도주의 정신 그 하나만에 입각하여 남북적 회담에 임할 것이 요청된다. 북적이 그러한 태도를 보일 때 민족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는 하나씩 풀려 나갈 것이다.

「이변」을 작심했는가

-평양의 적십자회담 재개 호응을 보고-

조선일보 (1984. 10. 31)

1984년 들어 한반도 남·북간에 표면상 부산스런 움직임이 일고 있는 듯이 보인다. 중단 상태에 머문 채지만 4월에 체육회담이 열렸고, 9월에는 북의 수재물자를 수용하고 선물을 보냄으로써 최초의 공식물자 교류를 기록했다. 인천항과 북평항에 북의 선박이 입항하고, 육로로는 휴전선을 넘어오는 교통로의 일시적 개방이 이에 수반했다.

이러한 동향을 두고 한반도에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는 외부의 시각도 있으나, 긴장과 대치가 「정상」이고 접촉과 교류가 이변이라면 그와 같은 이변은 얼마든지 더 있어야 할 한반도 상황이고 「이변」이 된다. 물자 교류에 이어 서울은 10월 4~6일 평양에 체육 회담 재개와 이산가족찾기 적십자회담 재개를 촉구했다.

10월 10일에는 남북 경제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평양은 11월 15일 판문점서 경제회담을 갖자고 반응해 왔다. 29일에는 적십자회담 재개를 위한 예비접촉을 11월 20일 갖도록 하자고 호응해 오기도 했다. 마치 1971~1972년 사이 갑자기 남·북간에 벌어졌던 「이변」과 같은 변화상황 조짐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중이다. 10여 년만의 남·북관계 변화 조짐이라고 일단 볼 수 있

다.

그러나 우리는 전철의 경험에서 극히 냉철한 시선으로 이 움직임의 흐름을 응시하고 있다. 적십자회담의 경우만을 상기해도 경험 반추는 충분하다. 왜 1970년대 적십자회담이 한치의 진전도 보지 못했으며, 평양은 그나마의 접촉·교류마저 일방적 자의로 끊어버렸던가.

평양은 적십자외적 정치문제를 벽두부터 들고 나와 선결 과제라고 우기고 그 관철을 고집했다.

정치차원의 조절위 대화기구가 병행했음에도 그들은 그랬고, 우리의 소위 「법률적 사회적 조건 환경개선」을 강요했다. 반공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반공단체 반공기관을 해산하고, 그들이 파괴할 3만 6천여명의 「요해 해설인원」에 대해 모든 활동 자유를 보장하라고 때를 썼다. 그로 해서 1970년대 적십자회담은 한치 진전도 보지 못했고, 결국 그나마 그들이 끊어버리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통일에 기여한다고 서울과 평양 사이를 애써 왕래했던 우리 대표단은 그들이 파괴 있는 땅굴 위를 가고 왔다. 그 이상의 민족배덕 행위를 우리는 이미 6·25로 겪을 대로 겪었다. 그리고도 그들은 붓과 입이 모자라는 간교한 배신행위를 대화를 가리개로 또 다시 감행하려 했던 것이다.

평양은 이번 11월 적십자접촉에서 속개회담의 날짜, 대표단 구성, 의제의 재확인, 속개절차 등을 협의하자고 했다. 생생한 전례가 있는데다, 겉보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사항들은 아니다. 예비회담 1주년을 끌어 타결을 보았던 의제만 해도 명백하게 주지돼 있다. ①이산가족의 주소·생사 확인, ② 상호방문, ③ 서신거래, ④ 재결합, ⑤ 기타 인도적 문제가 남·북적십자가 서로 협력해서 해결하기로 한 의제들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도를 낙관할 수 없다. 적십자 접촉에 5일 앞서 경제회담 접촉이 선행한다. 이나 저나 또 평양은 어떤 난제들을 들고 나올 것인지 최근 미묘해지고 있는 평양의 대외 동향과 연관지어 요량하면서, 그들의 한반도에 진정 「이번」을 가져오기로 작심했는지의 진의를 예의 지켜볼 수밖에 없다.

#### 남북적의 만남 조건 없어야

조선일보 (1984. 10. 31)

우선 조건 없이 마주 앉아야 한다. 그것이 대화에 임하는 전향적 자세이다. 지난날처럼 장황한 서론을 맴도는 불모의 입씨름으로 하여 본론이 행방불명되는 좌절의 기억을 누증시켜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이점 29일자 북한적십자회의 전화 통지문에 보는 호응자세는 일단 종전과 다른 약간의 변화의 기미를 감촉케 하는 바도 있다.

마침내 오는 11월 20일 남북적 「예비접촉」이 판문점에서 열리게 됐다. 앞서 4일자로 대한적십자사 유창순 총재가 11년간 중단됐던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개를 촉구했던 바,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장 손성필 명의로 된 호응을 보게 된 것이다. 북적의 통지문은 예비접촉에서 제8차 본회담의 시일과 대표단 구성, 의제의 재확인, 기타 절차문제 등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환영만한 새로운 사태발전이라고 생각된다. 선행사태로 들 것은 월초에 북적측이 보내온 수재물자의 원활한 인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남북적간의 본회담은 1972년 8월 30일부터 1973년 7월 13일까지 7차에 걸쳐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열렸던 것인데, 의제의 제1항은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였다. 그러나 북한 측의 일방적인 8·28 중단 성명 때문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8차 본회담은 햇볕을 보지 못했다. 그 대신 한적측의 재개 노력으로 1977년 12월까지 25회의 실무회의가 진행되었으나 북적측의 기피로 말미암아 그것마저 무기 연기되었음이 상기된다. 당시 한적은 남북 이산가족찾기운동의 본령에 비추어 적십자 본연의 인도주의

로 투철하려고 했으나, 이에 대해 북측측은 법률적 조건과 사회적 환경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선행조건을 들고 나왔었다.

하나 새 「예비접촉」을 눈 앞에 둔 시점에서 우리는 더이상 과거에 집착하려 하지 않는다. 일부 인사들은 「과연 본회담 개최까지 갈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지만, 북한 측이 정치색만 자제한다면 비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나아가서 국내외 일부 관측통들은 북한 측이 겨냥하는 바가 위장 평화 공세이고 지난 16일자 남북경제회담 호응이 「랭군사건 유야무야화」를 노린 것이라면 이번 29일자 호응은 「디딤돌 작전」의 일환임을 지적하기도 한다. 어차피 우리는 원칙을 앞세우는 정도를 걸어야 하며 아울러 경각심도 저버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부연한다면 국제 환경과 북한내정상황에도 변화의 싹은 없지 않다.

겨레의 기대와 세계의 환시를 의식하는 데서 북측 측도 이번만큼은 동포애와 인도주의를 외면하지 말도록 거듭 촉구하여야 하지 않는 바이다.

남북적 접촉에 기대한다.  
-체육회담도 조속히 재개하자-

서울신문 (1984. 11. 20)

지난 15일 첫 남북경제회담이 있는데 이어 오늘은 11년전 중단된 남북적십자 본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쌍방 적십자간의 예비 접촉이 열린다.

우리는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9월 북한적십자회의 수재물자제공제의를 인도적 교류의 실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인 것이 계기가 되어 이루어진 이 예비접촉에 온 국민과 함께 기대를 건다. 아울러 이번의 예비접촉이 본회담으로 순조롭게 이어져 1천만 남북한 이산가족의 재회가 실현되기를 충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예비접촉에 임하는 북측 측은 우리의 이같은 기대가 오늘날 국제사회 전반의 공통된 관심사이기도 하다는 점을 우선 확실히 인식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제8차 본회담의 준비를 위한 이번 접촉은 이미 지난 1972년 쌍방이 본회담 의제로 합의한 바 이산가족 주소 확인 및 생사확인, 자유방문 및 상봉 실현, 서신교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기타 인도적 문제 등을 재확인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예비접촉 자체를 굳이 오래 거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곧 있을 본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관건은 전적으로 북측측의 성실성 여하에 달려있음을 거듭 강조해 두고자 한다.

지난 1972~1973년의 7차례에 걸친 본회담에서 우리측은 이산가족의 재회사업을 순전히 인도적 문제에 국한해서 쉬운 일부부터 단계적으로 실천하자고 제의한데 대해 북측측은 사업실시에 앞서 한국의 반공정책 철폐와 주한 미군 철수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소위 「조건·환경」 주장을 들고 나오으로써 끝내는 회담을 일방적으로 결렬시켰다.

새삼 말할 것도 없이 남북적십자회담의 민족적 사명은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초월해 이산가족들의 한 맺힌 인간적 고통을 풀어주는 데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 회담에 오직 인도주의 정신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만약 북측측이 또 다시 그 엉뚱한 내정간섭적인 정치적 주장을 들고 나온다면 회담의 성공이 기대될 수 없음은 물론 수재물자의 제공도 동포애와 인도주의의 탈을 쓴 대남적화 술책의 일환이었음을 스스로 폭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이다.

한편 우리는 그 동안 우리측이 누차 제의한 바 남북 체육회담의 재개에도 북한 측이 조속히 호

응해야 할 것임을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다시금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로 남북 체육회담을 다시 열어 남북한간의 체육교류를 실시한다는 것은 이산가족의 재회문제와 마찬가지로 정치문제를 초월해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고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는 가장 손쉬운 길이다. 둘째로 오늘날 우리의 스포츠가 공산권 모든 지역에 진출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남북한 사이에만 스포츠 교류의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은 시대 역행적 현상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스포츠의 공산권 진출은 지난 1973년의 모스크바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비롯해 최근에는 상해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 여자 농구선수권대회 때 우리 팀이 당당히 1위를 차지하는 등 이미 11년전부터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북한은 이 대세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그 부질없는 폐쇄의 문을 과감히 열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민족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는 비로소 풀려 나갈 것이다.

#### 확인해야 할 성실성 여부

-적십자 서울회담까지 유보하는 기대-

조선일보 (1984. 11. 21)

지난 15일의 남북 경제회담에서 5일 간격을 두고 20일 판문점서 열린, 본회담 재개를 위한 남북 적십자 예비접촉은 일단 순조로운 진행을 보인 듯 하다. 본회담을 위한 남북적 접촉은 1977년 12월 제25차 실무회의 이후 7년만의 일이다. 쌍방은 1973년 7월 평양 7차회담 후 중단된 8차 본회담을 장소 윤번제 합의 원칙에 따라 서울서 열고, 이어 9차 회담을 평양서 가질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서울 속개 회담 날짜는 직통 전화를 통해 절충기로 했지만, 빠르면 연내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열릴 것으로 내다보인다. 11년전 본회담 중단 이후 우리측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재개를 촉구해왔다. 그럴 때마다 마이동풍이었던 북측이 이번에서 호응해온 데에는 당연히 그들로서의 그 어떤 까닭이 있어서일 것이다.

우리가 같은 핏줄끼리의 이산가족을 찾아주자는 순수한 인도적 회담에 호응해온 북측을 놓고 이와 같이 천착하는 것은 1970년대 대화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안겨준 교훈 때문이다.

7·4공동 성명에 이어 1972년 8월 제1차 적십자 본회담을 갖기 위해 우리 대표단이 처음으로 휴전선을 넘었을 때를 회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산가족은 말할 것 없고, 온 국민이 얼마나 뜨거운 기대를 걸었던가. 그것은 끔찍한 6·25의 체험사를 간직했으면서도 북을 애써 믿어보고자 하는 한 거래로서의 충정과 함께 한 기대였다. 그러나 뜨거운 기대는 너무나 허망한 실망으로 곤두박질했다. 평양은 우리를 향해 법률적·사회적 무장해제를 하라고 강요했다. 그것이 이산가족찾기에 앞서서 선결조건이라고 우겼다. 그러는 한편으로 「땅굴」을 팠고, 끝내 회담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말았다.

10여년 만에 본회담 속개에 합의를 보았다는 소식에 접하면서도, 우리는 이 쓰디쓴 교훈으로 해서 그 전도를 기대보다는 쉽게 털어버릴 수 없는 회의의 심정으로 바라보게도 됨을 어찌 할 수 없다. 더구나 속개 서울회담과 평양회담의 무슨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호 가무단 파견 공연을 갖도록 하자고 한 북측제의를 발상에 우리는 또 다른 의아심을 가지게도 된다.

이제 한 달이면 분단 40년이다. 헤아릴 수 없는 노부모가 서로 남과 북의 하늘을 쳐다보면서 감기지 않은 눈을 감고 얼마나 저승길로 떠난 세월인가. 그리고 바로 이 시각, 이 순간에도 노부모들은 이성을 떠나가고 있다. 이 처절한 인간고, 민족의 아픔을 정녕 함께 하고 있다면, 무슨 축제 분위기며 무슨 가무단 공연을 앞세우자 할 수 있다는 것인가.

하루라도 한시라도 서둘러 ① 생사와 주소를 알리고, ② 상호 방문·상봉을 실현시키고, ③ 자유로운 서신거래를 보장하고, ④ 재결합까지 이룩해 주고, ⑤그밖의 인도적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존각을 다투어 해결하고 풀어주기를, 6천만 겨레가 일각여삼추로 목을 늘어뜨려고대하는 아픔을 알고나 말하는 발상이라 할 것인가.

모름지기 북적의 성실성 여부는 서울 속개 회담에서 드러날 것이다. 모처럼 속개되는 적십자 회담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쓰라리지만 그때까지 유보하지 않을 수 없음을, 지난날 북측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음을 재언해 둔다.

#### 남북적의 접촉 재개

중앙일보(1984.11.20)

남북한의 1천만 이산동포 재회를 주선키 위한 남북적 접촉이 20일 판문점에서 재개됐다. 3명씩의 양측 대표들이 만나 본회담의 개최 일시 및 장소, 대표단구성, 의제 확인 등을 협의할 것이라 한다. 따라서 그 성격은 어디까지나 예비접촉에 불과할 뿐 본회담은 아니다.

우리는 남북대화를 재개하는데 있어서는 시간과 경비와 노력의 절약이 절대로 필요하다.

적십자회담은 이미 1971년에 시작되어 5차례의 예비접촉과 25차례의 예비회담, 7차례의 본 회담을 거쳐 대표단의 구성과 회의방식 및 의제에 관해 완전한 합의에 도달했고, 어느 정도 구체적인 문제의 토의에까지 접근했었다.

그밖에도 「7·4공동성명」과 남북조절위 회담을 통해서 남북문제에 관한 몇가지 중요사항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것들은 우리 민족이 분단으로 인한 여러가지 장애 요인을 극복하고, 많은 시간과 경비·노력을 들여 이룩한 소중한 성과다.

따라서 1973년 북한의 「8·28성명」으로 그 때까지의 남북대화가 모두 일방적으로 중단되긴 했지만 그 합의된 성과만은 계속 유효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적십자회담 재개를 위해 다시 부질없는 실무접촉·예비회담을 32회나 벌였지만 아무런 결실없이 오늘에 이르러 또 예비접촉을 갖게 된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대표단 구성과 회의방식 의제는 이미 합의된 것이므로 다시 원점으로 후퇴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곧바로 본회담에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에서 제8차 본회담을 속개하고, 1973년 평양에서의 제7차 회담에서 논의되던 문제를 계속 협의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

본 회담을 지연시키면 또다시 헛된 낭비만을 거듭하는 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적십자회담은 경제·체육회담과는 달리 혈육문제를 다루는 인도주의 사항이고, 이산동포들이 헤어진지 벌써 40년이 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한 사람이라도 더 생존해 있을 때 상봉과 재결합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더욱 절박하고 중요하다. 따라서 정치적 이해를 초월한 민족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지난번 북한의 수재물자 제공이 진실로 동포애와 인도주의에서 나온 것이라면 평양측은 더욱 성실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이번 적십자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혈육의 이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1천만 동포가 남과 북에 엄연히 존재함에도 『우리에게겐 이산가족이 없다』고 생떼를 쓰던 과거와 같은 억지 태도를 평양은 반복치 말아야 한다.

지난 15일 개막된 경제회담은 순조롭게 테이프를 끊었다. 적십자 회담도 순항하여 이산동포의 자유로운 상봉과 상호방문·서신왕래·재결합을 보는 것이 온 겨레의 간절한 소망이다.

아울러 결렬된 체육회담도 빠른 시일 안에 속개되어 단일팀 구성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우리가 비록 40년간 상급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문화·혈연적으로 우리처럼 동질성이 뚜렷한 민족도 없다.

민족의 평화와 공동번영이 남북의 우리 모두가 당면한 오늘의 최대 과제임을 다같이 명심하라.

### 제3부 북한측의 일방적 회담연기

#### 1. 북한측의 회담연기 통보

제2차 남북경제회담을 12일 앞둔 1984년 11월 23일 판문점 유엔군측 경비구역내에서 유엔군측 경비병과 북한측 경비병들 간에 총격전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한 소련인 청년의 망명을 저지하기 위해 수십 명의 북한측 경비병이 군사분계선을 불법으로 월선, 총격을 가해온데서 발단된 것으로 이는 북한측에 의한 명백한 휴전협정 위반이자 제2의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11월 27일, 판문점 사건에 대한 「책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등 동 사건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면서 이미 제1차 경제회담에서 12월 5일에 개최하기로 합의된 제2차 경제회담을 무기 연기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이에 대해 우리측 김기환 남북경제회담 수석대표는 북측 단장 이성록에게 다음과 같은 전화통지문을 보내 「11월 23일의 판문점 사건」은 북측 경비병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측 구역에 들어와 먼저 총격을 가함으로써 발단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쌍방간에 합의한 회담일자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북측의 사정으로 12월 5일에 회담을 열 수 없다면 1985년 1월 17일에 제2차 경제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남북경제회담 북측 단장 이성록 귀하

나는 귀하가 11월 27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판문점 총격사건이 마치 우리측 도발에 의해서 발생된 것처럼 왜곡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구실로 12월 5일에 열리기로 된 제2차 남북경제회담을 내년으로 넘기자고 한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3일의 판문점 사건은 귀측 경비병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측 구역에 들어와 먼저 총격을 가함으로써 발단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귀측이 이번 판문점 사건을 확대시켜 남북경제회담마저 연기시키는 것은 이 회담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6천만 온 겨레의 뜨거운 염원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귀측이 모처럼 열린 남북경제회담을 진정으로 성공시킬 의사가 있다면 마땅히 쌍방간에 합의한 회담일자를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번 판문점 사건이 남북경제회담의 순조로운 진행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귀측 사정으로 12월 5일에 회담을 열 수 없다면 1985년 1월 17일에 제2차 남북경제회담을 열 것을 제의합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회담을 기대합니다.

1984년 11월 28일

남북경제회담 남측 수석대표 김기환

한편 1984년 11월 20일의 남북적십자 예비접촉에서 제8차 본회담일자를 추후 직통 전화를 통하여 서로 협의·결정키로 한데에 따라 우리측 조철화 남북적십자회담 수석대표는 동년 11월 22일 북측 서성철 단장에게 다음과 같은 전화 통지문을 보내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개최일정을 1985년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4일)로 할 것을 제의했다.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서성철 단장 귀하

나는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개최일시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20일 예비접촉에서 밝힌 귀측의 의견을 고려하여 제8차 본회담을 1985년 1월 23일 오전 10시에 서울에서 개최하고, 회담일정을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4일)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귀측의 조속한 회답을 기대합니다.

1984년 11월 22일

대한적십자사 수석대표 조철화

이 두 제의에 북한측이 1984년 12월 14일 직통전화를 통해 모두 동의해 줌으로써 제2차 경제회담은 1985년 1월 17일 상오 10시부터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은 1985년 1월 22일부터 1월 25일까지 3박 4일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북한측은 1월 9일 상오, 북측 부총리 김환과 북적 중앙위 손성필 위원장 명의로 우리측 신병현 부총리와 유창순 한적총재 앞으로 각기 보내온 전화통지문을 통해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팀·스피리트 85」 연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도발행위」라고 비난하면서 1월 17일 판문점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제2차 남북경제회담과 1월 23일부터 서울에서 열기로 한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겠다고 다시 통보해 왔다.

아울러 북측 김환 부총리의 통지문에서는 「팀·스피리트 85」 합동군사훈련으로 말미암아 『경제회담 앞에 난관이 조성되었다』고 전제하면서 『이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토의를 위해 제2차 경제회담 예정일인 1월 27일을 전후로 하여 쌍방 부총리간 접촉을 가지자』고 제의하여 왔다.

## 2. 북한측 태도의 부당성

1984년 11월 23일 판문점에서 북측 경비병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측 구역을 침범하여 먼저 총격을 가하는 도발행위를 자행하고서 적반하장격으로 그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면서 제2차 남북경제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시킨 바 있는 북한측이 이번에 또다시 부당한 구실을 내세워 회담 일자까지 쌍방간에 합의한 남북경제회담과 남북적십자 본회담을 연기시키는 무성의한 전철을 되풀이 한 것은 북측이 참으로 남북대화를 할 의사가 있는지마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처사라 할 것이다.

특히 「팀·스피리트 85」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트집잡아, 『경제회담 앞에 난관조성』 운운하면서 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쌍방 부총리간의 접촉을 제의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설득력이 없는 강변에 불과한 것이다.

### 관례적 군사훈련 시비

북한측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경제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시킨 것은 생트집에 지나지 않는다.

어느 나라든 자기영토를 지키기 위한 군사훈련을 통상 실시하고 있다. 더욱이 「팀·스피리트」 훈련은 방어 목적으로 1976년 이래 연례적으로 공개리에 실시해온 평화유지 훈련이며, 우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훈련계획을 북한측에 사전 통보하고 그들이 동 훈련에 참관토록 수차에 걸쳐 초청한 바도 있다.

또한, 북한측도 매년 11월에서 3월 사이에 1-2개월간 대규모의 군사력을 동원하여 연례적으로 육·해·공군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우리측은 남북대화과 관련하여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한 사실이 없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경우 각기 연례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군사훈련과는 관계없이 동·서 양진영간에 군비축소를 위한 회담이 병행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측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회담진행의 「난관」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특히 과거 남북대화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팀·스피리트」 훈련 기간 중에도 이에 관계없이 여러 차례 대화가 진행된 사실이 있고 최근에도 「팀·스피리트 84」 훈련기간 중인 1984년 4월초에 북한측이 남북체육회담에 호응하여 남북 쌍방간에 회담이 열렸던 점에서 이번 북한측의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한 회담연기 통보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주장이다.

[훈련기간중 남북대화 개최 사례]

| 훈련시기               | 남북 대화 개최 사례   |
|--------------------|---|
| 1979. 3. 1 ~ 3. 17 | ○ 남북 탁구 회담<br>- 제2차 회담(1979. 3. 5)<br>- 제3차 회담(1979. 3. 9)<br>- 제4차 회담(1979. 3. 12)<br>○ 남북 조절위 서울측 대표와 북한측 「조국전선」 대표간의 접촉<br>- 제2차 접촉(1979. 3. 7)<br>- 제3차 접촉(1979. 3. 14) |
| 1980. 3. 1 ~ 4.20  | ○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 -제3차 접촉(1980. 3. 4)<br>- 제4차 접촉(1980. 3. 18)<br>- 제5차 접촉(1980. 4. 1)<br>- 제6차 접촉(1980. 4. 19)  |
| 1984. 2. 1 ~ 4월중순  | ○ 제1차 남북체육회담 개최(1984.4.9)   |

더우기 남북쌍방간에 제2차 남북경제회담과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의 개최일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당시에 이미 동 훈련실시가 예견되었던 것일 뿐만 아니라, 양 회담이 개최되는 1월은 훈련기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더욱 자명해진다.

불성실한 대화자세

북한측이 남북 쌍방간에 이미 개최일자까지 합의한 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일방적으로 무기연기하면서 영똥하게도 쌍방 부총리간의 접촉을 갖자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북한측이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지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쌍방 부총리간의 접촉을 갖자고 제의해 온 것은 그들의 현재 진행중인 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는 대내외 여론의 비판을 호도하려는 계략에 불과한 것으로 그들의 대화자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측이 입으로는 대화와 평화통일을 운위하면서도 이렇게 쌍방간의 합의사항 조차 존중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들의 진의가 대화를 통해 통일문제를 해결해 보려는데 있다기 보다, 대화를 빙자하여 다른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려는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회담기피의 저의

회담연기의 이유로 「팀·스피리트」 훈련을 트집잡고 있음은 주한미군과 「팀·스피리트」 훈련을 한반도 긴장의 주요원인으로 대내외에 부각시켜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미군철수를 위한 미국과 북한간의 직접 접촉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들의 「삼자회담」 논리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국제여론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갈 것을 기대하고, 동시에 한반도에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는 것처럼 국제사회에 부각시킴으로써 「86 아시안 게임」 과 「88올림픽」 의 서울 개최를 방해해온 그들의 입장을 합리화 시키려는 저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 3. 우리의 대화재개 노력

북한측이 부당한 이유를 앞세워 거듭 회담을 연기하는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우리측 신병현 부총리는 1985년 1월 10일 하오, 북측의 김환 부총리 앞으로 다음과 같은 전화통지문을 보내 「북한측이 진정으로 남북대화를 성의있게 진행할 의사가 있다면 최소한 쌍방간에 합의된 사항만이라도 잘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제2차 남북경제회담을 쌍방이 이미 합의한 1월 17일에 개최할 것을 촉구하였다.

북한 정무원 부총리 김환 귀하

나는 귀하가 1월 9일 본인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우리측의 관례적인 군사연습을 비난하는 한편 그것을 구실 삼아 이달 17일로 예정된 남북경제회담에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 실망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남북의 온 겨레는 모처럼 시작된 남북대화를 매우 호뭇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이달 중에 열리기로 된 두 갈래의 남북회담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측이 해마다 공개리에 방어적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우리측의 군사연습을 트집잡아 일주일 앞으로 다가선 제2차 남북경제 회담을 일방적으로 무기 연기시키려는 것은 이 회담의 순조로운 진행을 염원하는 내외의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입니다.

군사연습으로 말하면 귀측이야 말로 해마다 대규모 군사력을 동원하여 최전선 부근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우리측의 관례적인 군사연습에 대해 시비하면서 예정된 회담을 거부하는 것은 실로 억지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북 쌍방은 과거 우리측 군사연습이 실시되는 기간 중에도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접촉 등 여러 차례의 남북회담을 가진 바 있으며, 가까운 예로는 팀스피리트 훈련이 진행중인 지난해 4월초 남북체육회담을 시작할 때에도 귀측은 이를 회담과 관련시켜 시비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 쌍방이 제2차 남북경제회담 일자를 합의할 때에 이미 우리측의 군사연습은 예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이번에 새삼스럽게 이를 회담과 관련시켜 문제를 삼는데 대해 우리측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측은 지난해 11월 23일 판문점에서 귀측 경비병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측 구역을 침범하여 먼저 총격을 가하는 도발행위를 자행하고서도 적반하장격으로 그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면서 제2차 남북경제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도 귀측이 이번에 또다시 부당한 구실을 내세워 회담을 연기시키려는 무성의한 전철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귀측이 참으로 남북대화를 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측이 진정으로 남북대화를 성의있게 진행할 의사를 갖고 있다면 다른 것은 그만두고라도 쌍방간에 합의된 사항은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귀측이 이번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2차 남북경제회담을 예정된 날짜에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다른 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누가 그같은 귀측의 말을 성실한 것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비단 남북경제회담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남북간의 다각적인 접촉과 교류의 발판을 확고히 마련하기 위해서도 이번 제2차 남북경제회담은 반드시 약속된 날짜에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제2차 남북경제회담이 예정대로 열리고 또 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면 귀하와 직접 만나는 문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나는 이미 쌍방이 합의하고 온 거래와 세계 평화애호인들 앞에 약속한 제2차 남북경제회담을 예정대로 오는 1월 1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1985년 1월 10일

대한민국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신병현

또한 유창순 대한적십자사 총재도 같은 날인 1985년 1월 10일 북적 손성필 위원장 앞으로 다음과 같은 전화통지문을 보내 1월 23일부터 서울에서 열리기로 된 제8차 남북적십자 본 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성필 귀하

오는 1월 23일 서울에서 열리게 될 제8차 남북적십자 회담을 앞두고 귀하가 돌연히 동 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시키겠다고 한 것은 정녕 놀랍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국토분단의 인위적 장벽 앞에 통곡하던 1천만 이산가족들이 그 한에 어린 울음을 잠시 멈춘 채 조심스레 부푼 기대를 안고 남북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는 너무나 인간적인 정경을 바라볼 때, 민족의 대사에 임하는 귀측의 무성의한 태도와 냉혹한 정치적 술수에 실망과 슬픔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측의 「팀스피리트」 훈련은 오직 방어를 목적으로 한 평화유지 훈련이며 과거 여러해 동안에 걸쳐 실시해 온 년례적인 것으로서 올해에도 있을 것임은 제8차 서울회담에 대한 남북적십자사 사이의 합의가 성립될 때에도 이미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우리측 군사연습을 트집잡아 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8차 남북적십자 본 회담을 연기시키려고 하는 것은 적십자회담에 임하는 귀측의 성실성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남북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순수해야 할 남북적십자 회담이 비적십자적 계약과 타산에 의해 방해받거나 굴절되었던 불행한 과거가 다시 되풀이됨으로써 남북이산가족들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쌍방 적십자의 노력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간에 신의가 있어야 하고 또 쌍방간의 합의사항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합의된 날짜에 회담을 여는 것은 신의와 봉사를 귀중히 여겨야 할 우리 적십자인들의 책무이며, 지켜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의 개최측으로서, 또한 귀측에 대한 초청자의 입장에서, 회담의 원만한 개최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고 귀측을 맞을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측은 귀측 대표단이 서울에 오게되면, 동포애로써 따듯이 맞이할 것이며, 3박 4일간 머무는 동안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성의와 친절을 다할 것입니다.

귀측이 진실로 인도주의정신에 충실하고 쌍방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남북적십자회담을 진전시키 나갈 의사가 있다면, 회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문제를 가지고 시비할 것이 아니라 약속한 1월 23일의 서울회담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귀측 대표단이 예정대로 서울에 옴으로써 모처럼 마련된 소중한 기회가 우리 거래의 손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1985년 1월 10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유창순

이러한 우리측의 노력과 간곡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이에 대해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제2차 경제회담(1985년 1월 17일)과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1985년 1월 22일~1월 25일)은 결국 유산되고 말았다.

이에 제2차 남북경제회담이 개최될 예정일인 1985년 1월 17일 남북경제회담 우리측 김기환 수석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북한측이 제2차 남북경제회담에 하루빨리 나올 것을 촉구했다.

#### 제2차 남북경제회담 유산과 관련한 김기환 수석대표 논평전문

나는 1월 17일에 열기로 예정되었던 제2차 남북경제회담이 북한측의 일방적 연기로 유산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측은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지하지 않으면 남북경제회담을 열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것은 회담연기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팀·스피리트」 훈련은 년례적인 것이며 더욱이 제2차 남북경제회담 날짜를 쌍방이 합의할 때 북한측도 오는 2월경부터 이 훈련이 실시될 것을 예견했을 것입니다.

우리측은 지난 1월 10일 북한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제2차 남북경제회담을 연기하려는 그들의 주장이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 회담을 예정된 대로 개최할 것을 간곡하게 촉구했으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회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측이 합의된 날짜의 회담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경제회담 앞에 억지 난관을 조성해 놓고 그 난관을 타개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남북부총리 접촉을 갖자고 제의한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북한측이 예정된 제2차 남북경제회담 개최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고의적으로 회담 앞에 난관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보며, 지금 그밖에 다른 난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부총리 접촉은 남북경제회담의 진전에 따라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는 우리측의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측이 당치않은 이유로 쌍방간의 합의사항을 어기고 제2차 남북경제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시킨 것은 회담에 대한 그들의 불성실성을 드러내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회구하는 6천만 겨레와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입니다.

북한측은 남북경제회담에 대한 내외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여 제2차 남북경제회담에 하루빨리 나오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유창순 대한적십자사 총재도 1985년 1월 23일로 예정되었던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이 유산되자 이날 담화문을 발표하고 「북한측이 내외의 염원과 쌍방간의 합의 사항을 저버리고 끝내 제8차 본 회담을 유산시킨 처사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통박하였다.

유창순 동 담화문에서 「대한적십자사는 제8차 본회담의 주최측으로서 회담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모든 준비를 끝냈으며 언제든지 북한측 대표단을 맞이할 채비를 해놓고 있다」고 밝히고

「1천만 이산가족들의 재회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고대하는 내외의 염원에 부응하여 제8차 본회담에 북한측이 하루라도 빨리 호응해 오기를 거듭 촉구」했다.

이러한 우리측의 거듭된 대화재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아직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 4. 국내의 주요 반응

북한측의 일방적인 연기통보로 제2차 남북경제 회담과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이 유산되게 되자 국내 언론들은 「1970년대 대화 경험으로 해서 애시당초 성급한 기대를 가질 수 없었던 1980년대 대화와 접촉의 개시였지만 이렇게도 느닷없이 저들의 태도가 표변할 줄까지는 정녕 미처 몰랐다」고 경악을 표시하고 「그 같은 일방적인 처사로 하여 북한측은 무례한 약속 위반을 저질렀고 특히 온 겨레가 대망하는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며 따라서 「나라 안팎 동포들의 준열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논평했다.

이러한 북한측의 통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두 회담은 예정대로 열려야 하며 경제회담이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때 부총리 회담은 언제든지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매우 당연하고 의연한 것」이라고 논평하고 「북측이 진정으로 남북대화 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이미 합의된 사항을 지켜 가능한 협력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예정된 두 회담에 조속히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해외주요언론들도 「회담연기 조치는 북한이 남북대화를 결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논평하고, 그 저의가 「한미 합동연습과 미군의 존재 그 자체를 세계에 드러내어 그 중지와 철수를 위한 국제 여론을 조성하려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팀·스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대화를 연기하는 것은 예정되었던 행동』이며 「아직 남북 대화 교류의 급속한 진전에 따르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벌기 위한 지연작전」일 것으로 관측하고 「쉽게 낙관하거나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지만 남북대화의 계속을 위해 쌍방이 신뢰감을 쌓고 끈기있게 이를 복돋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외 주요언론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 국내 반응

##### 본색 드러낸 적반하장

- 남북경제회담 일방 연기통고의 속셈 -

경향신문(1984. 11. 28)

경제회담·적십자회담 등으로 모처럼 조성되어가고 있던 남북대화 분위기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오는 12월 5일 속개하기로 했던 남북경제회담이 북한측의 일방적인 통고로 갑자기 내년으로 무기한 연기된 것이다.

북한측의 태도 표변으로 보아 적십자회담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추측된다. 그들이 저지른 판문점 총격사건을 내세워 우리측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런 분위기에서는 대표들의 신변보장에 문제가 있고 회담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하니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 소련인의 망명사건으로 인한 판문점 총격사건이 일어났을 때 국내외의 시선은 『이번 총격사건이 남북회담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하는 데로 집중되었다. 그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북한측은 우선 소련인 망명사건이 그들의 대소관계 악화를 초래할는지 모른다는데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지금 한 소련의 고위관리가 평양을 방문중에 있으며, 그가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일어난 망명사건이야말로 김일성 부자와 북한공산집단의 체면을 여지없이 깎은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상전들의 눈앞에서 저지른 실책과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망명사건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방편으로 예정됐던 남북한 경제 회담의 일방적인 무기연기 조치를 취한 것이다.

망명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정부는 북한측의 휴전협정에 의한 판문점 공동관리지역내 분담책임 규정위반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또 불법적인 총격사건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함으로써 남북대화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는 기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들이 항용 내세우는 상투적인 선전문구인 회담장소의 신변안전 보장에 대한 불안감을 들어 경제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다고 통고해 온 것은 근본적으로 평양측의 회담성의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공산측과의 대화에서 뭇보다도 요구되는 것이 끈질긴 인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때문에 1970년대 초 남북조절위라든지 남북적십자회담결렬을 경험했음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인내를 갖고 남북대화 재개를 조심스럽게 주도했다.

북한측이 이번 일련의 남북회담재개를 대내외적인 전략전술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알팍한 수작을 간파하면서도 긴장완화와 민족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종류의 대화와 접촉도 불사한다는 방침하에 경제회담 등을 제의했던 것이다. 더욱이 1차 경제회담에서 남북철도의 재결합 등을 제의하면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성실한 자세를 보였다.

그러한 경제회담을 우발적인 사건발생과 그것의 처리과정에서 빚어진 그들의 과오를 음폐하기 위해 무기한 연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북한측이 남북대화의 근본정신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갖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회담에 임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북한측에게 판문점총격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한 사과와 함께 남북대화의 광장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 남북 경제회담 연기 통고

- 북한은 구실보다 성의 앞세우는 자세여야 -

동아일보(1984. 11. 28)

북한측은 12월 5일 개최키로 되어있는 남북경제회담을 내년에 열자고 연기해버렸다. 연기 이유로서 북한측은 회담할 「분위기」가 못된다고 또 생트집을 잡고 나섰다.

평양측이 주장하는 「분위기」란 23일의 판문점 총격사건을 말한다. 판문점총격은 소련인 「바실리 야코블레비치 마트조크」의 망명을 계기로 북한측 경비병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들어와 먼저 「유엔」군측에 총질을 한데서 야기되었던 것이다.

판문점 총격사건 그 자체만을 따진다면 남북경제회담 분위기를 흐렸다고 트집잡고 나서야 할 측은 한국쪽이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군사분계선을 불법으로 월경한 것은 북한측이요, 총격을 가하고 덤빈 것도 북한경비병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진의 문공장관의 성명을 발표 북한경비병들의 총격행위가 중대한 군사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북한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보증을 촉구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는 북한이 성실한 자세로 남북대화에 호응해올 것을 촉구했던 것이다. 「유엔」군측도 판문점에서 24일 열린 군사정전위원회 제474차 비서장 회의를 통해 북한측의 총격도발을 엄중히 항의한 바 있다.

따라서 판문점 총격사건을 놓고 남북회담 분위기 문제를 들고 나서야 할 측은 북한이 아니요, 한국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엉뚱하게도 총격사건을 회담연기의 이유로 삼고 나섰다는 것은 생트집임에 틀림없다.

북한이 그렇게 생트집을 부린데는 또한 노리는 바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우선 북한은 한국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망명객을 잃고 당황할 소련의 비위를 맞추

려는 제스처의 일환일 수도 있다. 또는 자신의 도발로 3명이나 사살 당하고서도 남북대화에 나오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소제스처나 대내적 배려는 회담연기 행위의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없다. 문제는 북한측이 남북대화에 성실한 자세로 나올 태세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는데 있다.

북한은 고질적 경제침체를 벗어나고 김정일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난 9월부터 남북대화에 호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대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론 남북 접촉으로 인한 체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남북경제회담을 연기하고 나섰다는 것은 남북대화를 놓고 그들 내부에 분열이 일고 있음을 시사한다. 남북긴장 완화와 통일기반조성에 정의껏 뛰어들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는 북한의 회담연기를 접하고 남북긴장 완화와 어려움을 다시금 통감한다. 인내와 성의로 임해야 함을 거듭 지적해 두는 바이다.

### 경제회담과 북한의 진의

서울신문(1984. 11. 29)

오는 12월 5일로 예정됐던 제2차 남북경제회담이 얼마전의 판문점 총격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북한측은 27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판문점 사건이 마치 우리측에 의해 도발된 것처럼 왜곡하면서 회담을 할 분위기가 못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회담을 내년으로 연기하자고 일방적으로 우리측에 통보해 온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28일 북한측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판문점 총격사건의 진상을 왜곡, 이를 구실로 예정된 회담을 연기한 처사는 유감이라고 밝힘과 아울러 제2차 남북경제회담을 내년 1월 17일에 열 것을 다시 제의했다. 우리는 북한측이 이 제의를 마땅히 즉각 수락해야 할 것임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 강조해 두고자 한다.

첫째로 우발적 성격의 판문점 사건을 구실로 내외의 지대한 기대가 걸려있는 남북경제회담을 연기시킨다는 것은 도시 본말이 전도된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23일의 판문점 사건이 한 소련인 청년의 망명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측 경비병들이 우리측 경계선을 넘어와 먼저 총격을 가해 일어난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사건은 유엔군사와 북한간의 문제이고, 또 사건 자체도 이미 일단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저지른 불법적인 총격사건의 책임을 적반하장격으로 우리측에 전가시켜 회담을 연기한다는 것은 문제의 사건이 우발적이 아니라 고의적이었다는 의심을 낳게 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로, 소련의 눈치를 지나치게 살필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판문점 사건이 때마침 소외무차관의 평양방문중에 일어났고 또 망명한 청년이 소련인이기 때문에 북한당국의 입장이 난처하리라는 것을 우리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망명자의 처리는 국제관행의 일반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될 것이다. 지난 1981년 체코병사가 판문점에서 망명해 왔을 때도 우리 정부는 국제관례에 입각하여 정당하게 처리했으며, 그 당시 그러한 처리결과로 인해 북한과 체코간에 어떠한 마찰도 생긴 일이 없었다. 이 전례로 미루어 만일 북한이 소련의 입장을 의식하는 나머지 냉각기를 갖고 남북경제회담을 연기시켰다면 북한의 「주체성」이 사실상 소련을 종주국으로 하는 것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우거일 따름이다.

셋째로는 회담을 연기하면 할수록 북한측의 입장이 불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최근 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 등 일련의 남북한간 직접 대화에 선선히 호응하고 나선 진의는 물론 다른 곳에도 있으리라고 짐작되지만 우선은 지난해의 랭군사건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대서방접근의 길을 터 경제난을 타개할 심산으로 저들도 한반도 긴장완화에 성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해 보려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분석된다.

이러한 처지에서 북한측이 자신이 불법적으로 도발한 판문점 사건을 이유로 남북경제회담을 무기한 연기하려 한다면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는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 한발 더 양보해 북한측의 회담연기 통보사유가 준비기간을 가지려는데 있다면 그것은 내년 1월까지로 충분하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북한측은 남과 북이 경제분야에서 상부상조하는 길을 마련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진정 성의를 가지고 있다면 2차 경제회담의 내년 1월 개최제외에 허심탄회하게 호응해야 할 것임을 이에 재차 촉구해 두는 바이다.

### 경제회담 연기한 북한

중앙일보(1984. 11. 28)

북한이 23일 판문점에서 일어난 소련청년의 망명과 이를 계기로 한 남북간의 총격사건 등을 이유로 12월 5일로 예정된 경제회담을 내년으로 미룬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소련의 민간인 1명의 탈출로 우리 거래의 오랜 숙원인 민족사업이 방해되어야 한단 말인가.

또 북한경비병들이 그 외국인간인 1명의 망명을 저지하기 위해 월선이 금지된 판문점 중앙분계선을 침범하고 공격적인 발포가 금지된 구역에서 총격을 가한 것 등은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지난 26일의 4백26차 군사정전위 본회의에서 이미 낙착 되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더구나 북한측이 우리측의 도발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왜곡하면서 회담할 분위기가 안 된다고 경제회담을 미룬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북한측의 불법만행에도 불구하고 문화교류를 제의, 대화의 확대를 요구했는데도 북한은 오히려 이미 열려있는 대화의 창구마저 막아 버리려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평양에선 아직도 김정일 일파의 좌익강경파가 우세하여 대화를 추진하려는 온건파를 압도하고 있고, 김일성은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망명사건직후 우리가 강조한 바와 같이 민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남북한의 공동노력이 하찮은 외국인 사건으로 지연되거나 저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민족주체성의 관점으로 보나 우리 세대의 역사적 사명의식으로 보나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망명사건의 악영향이 적십자회담에까지 과급되는 사태는 결코 없어야 한다. 지금 남북간에는 기능이 중단된 남북조절위원회의 활동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회담·적십자회담이 열리고 있고, 곧 체육회담도 재개될 단계이며 문화교류회담도 그렇게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처럼 여러 갈래로 갈라져 진행되는 남북대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해 두가지 원칙을 제안코자 한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남북회담들은 비정치적인 기능분야의 대화다. 따라서 각기 그 자체의 필요성과 독자성을 갖고 있고 또 가져야 한다.

그 때문에 이들 회담이나 다른 외부의 사태가 그 밖의 다른 회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즉 남북대화에 있어서는 연계작용(linkage)이 엄격히 배제돼야 한다.

또 이 여러 갈래의 회담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저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보다 높은 차원의 구조, 즉 과거의 남북조절위가 빨리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연계작용의 배제와 조절위기능의 회복은 현재의 회담을 성공으로 유도하고 앞으로 열릴 더 많은 남북회담을 성공시키는데 절대로 필요한 조건임을 확신하며, 따라서 이것이 남북의 회담당국에 의해 조속히 합의·채택되기를 기대한다.

남북대화 미룰 까닭 없다  
—북은 경제회담 재개제외에 응해야—

한국일보 (1984. 11. 29)

에당초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은 불가피시 되기도 했으나, 모처럼 열린 남북대화의 출범신호가 울려 퍼진지 엇그제 같은데 너무 빨리 암초에 부딪친 느낌이어서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27일 남북경제회담 북한측 대표단은 우리측에 보내온 전화통지문을 통해 오는 12월 5일 열기로 합의했던 제2차 회담을 내년으로 연기할 것을 통보해 왔다고 한다. 그 「이유」인즉 지난 23일 소련청년 망명을 에워싸고 발생한 판문점 총격사건 등으로 하여 「대화를 위한 분위기가 마련될 수 없다」는 억지 구실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경우 북한측은 그 사건이 마치 우리측의 「납치」와 「사격」에 의하여 「도발」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면서 책임전가를 시도했다는 소식이다.

그리고 북한측 경제회담대표의 전화통지문에 하루 앞서 평양의 「중앙통신성명」이 우리측을 가리켜 「관계개선을 가로막고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려 한다」고 비난했음이 상기된다. 게다가 북한측은 이번 사건을 전후하여 「각계반응」이라는 표방아래 대남 적개심 고취에 매우 분망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최근의 북한동향을 종합해볼 적에 회담연기의 동기는 꽤 복합적인 것 같다. 총격사건으로 말미암은 사상자 발생 못지 않게, 소련외무차관 카피차가 지난 12일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중이며 국경회담타결에 이어 김일성 및 김정일과 만난 시점에서 모스크바의 체면을 세워줘야 했을 것은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다. 그곳 제2차 7개년 계획의 파탄과 관련 북한주민들의 주의 외전을 노렸으며 또 경제회담준비에 시간을 벌어야 할 필요성이 통감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한편 중공당 총서기 호요방이 지난 26일 남북경제회담이 진척되면 한국과 중공간의 경제교류도 가능하리라고 내다보았던 사정도 개제되었을 것 같다.

하나 북한측의 대내외사정이 여하히 얽혀있던 간에 결코 6천만의 기대와 국제적 환시 그리고 북한경제의 수요를 외면할 수는 없으리라고 내다보인다. 연기는 하되 중단시켜서는 안되며, 또 그럴 수도 없으리라고 관측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북한측이 더 이상 그 사건의 파장을 확대하지 말아야 하며 또 진상과 책임에 걸친, 왜곡되고 비생산적인 평행선적 말씨름을 일삼아도 안 될 것임을 강조한다. 경제회담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하며, 더구나 별개의 인도적차원에서 열리고 있는 적십자회담에의 영향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행히 우리측 경제회담 대표단은 28일 꽤 유연하고 여유 있는 대응을 보여주었다. 북한측 사정을 고려하면서 제2차 남북경제회담을 내년 1월 17일에 열자고 평양에 제의했다는 것이다.

모처럼 햇볕 본 남북대화는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하며 쌍방간의 합의사항은 존중되어 마땅하다. 「연기」라는 냉각기간은 짧을수록 좋다는 생각으로 북한이 우리측 회의재개 제의에 응하기를 바라며, 그 이전에 협의·개최하기로 한 이산가족회담이 순조롭게 열릴 것을 기대한다.

갑작스런 북한측의 변신  
—「남북대화」 지연시킬 이유 추호도 없다—

경향신문 (1985. 1. 11)

연초 들어 북한은 갑자기 남북대화의 진전을 바라는 온 겨레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돌연 오는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팀스피리트 85」 훈련을 트집잡아 남북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연기하고 대신 부총리의 회담을 열자는 엉뚱한 제의를 해 온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두 회담을 예정대로 열고 부총리 회담은 경제회담의 성과를 보아 언제든지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

남북대화는 상호신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우선 합의사항의 실천을 촉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매우 당연하고 의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회담스케줄을 일방적으로 변경 요청한 북의 태도에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당초 우려했던 대로 그들은 남북대화를 다른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북측의 두 회담연기의 배경에 대해 최근 북한에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소련의 압력 때문이라든지, 남북대화가 김정일 세습체제 구축에 불리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북의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등의 여러가지 분석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그 배경이 어떻든간에 북측은 애당초 남북간의 교류나 협력을 통한 긴장해소와 신뢰회복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두 회담의 연기 이유로 내세운 팀 스피리트 훈련은 생트집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훈련은 다 아는 바와 같이 공산측의 침공에 대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서 76년부터 매년 비슷한 시기에 실시해 왔으며 최근에는 사전에 북측에 훈련계획을 통고하고 훈련참관을 초청하기도 했었다. 그들이 이러한 훈련계획을 사전에 모르고 두 회담을 1월에 여는데 합의했을 리도 없으며, 79년엔 남북탁구회담을, 80년엔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가진 바 있고 작년엔 남북체육회담을 팀 스피리트 훈련기간 중에 개최했다는 사실을 잊었을리 없을 것이다.

과거에도 늘 그랬듯이 유리하면 옹하고 불리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대화를 중단하는 것이 그들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 또 다시 태도를 표변할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존재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그들의 동향으로 보아 두 회담의 중단책임을 팀 스피리트 훈련에 전가하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와 대미 직접 접촉을 겨냥한 3자회담을 실현하려는 저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일성은 신년사에서 3자회담을 다시 들고 나왔고 고위급 정치회담으로의 발전 운운함으로써 그와 같은 속셈을 암시했다. 그들은 이어 대규모 군중집회를 열고 3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주장하여 남북간의 실질적인 교류를 트는 두 회담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고 오직 그들의 적화통일 방식인 「합작」 실현을 위한 정치회담으로 남북대화를 변질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접촉은 40년간의 분단상황이 초래한 상호 적대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바탕이 마련되어야만 진정한 진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신뢰의 회복은 쉬운 분야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감으로써만이 가능한 것이며, 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은 가장 기본적으로 밟아야 할 과정인 것이다.

북측이 진정으로 남북대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이미 합의된 사항을 지켜 가능한 협력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예정된 두 회담에 조속히 나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의 잦은 변덕

동아일보 (1985. 1. 11)

북한은 17일 개최 예정이던 제2차 남북경제회담과 23일의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을 돌연 연기

한다고 9일 통보, 또다시 우리 겨레의 남북대화 기대를 깨뜨려버렸다. 북한의 회담연기 이유는 상투적이다. 2월 1일부터 시작될 「팀 스피리트 85」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도발행위」요, 그로 인해 남북 「경제회담 앞에 난관이 조성」되었다는 것이 그 트집이었다.

한미 두 나라가 1976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팀 스피리트」 연합훈련은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1월 17일과 23일로 예정되어 있는 남북경제 및 적십자 본회담 시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뿐만 아니라 「팀 스피리트」 훈련은 북한의 6·25남침과 같은 재침을 억제키 위한 순수방어훈련이므로 북한측 주장대로 「도발행위」가 아니다.

「팀 스피리트 85」 훈련이 도발행위가 아니요, 방어용임을 북한측에 실증해주기 위해 한국정부는 지난 4일 북한측에 「팀 스피리트」 훈련 참관을 제의하기까지 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간에 쌓인 불신과 긴장을 풀기 위한 서울측의 진실된 자세표명이었음에 틀림없다.

오래 전부터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체제가 대결되면서 양측은 군사훈련을 집단적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왔다. 서「유럽」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나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상대편을 가상적 적군으로 삼아 연례적 군사훈련을 수십 년간 실시해 왔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미소를 비롯한 서「유럽」과 동「유럽」은 정치·경제·문화회담의 속개는 물론이려니와 서로 인적·물적 교류를 활발히 추진시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천둥에 개 뛰어들듯이 별안간 남북회담을 연기하고 나섰다는 것은 북한의 김정일 체제가 집권능력을 상실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남북한은 북한의 제의로 「팀 스피리트 80」 훈련이 한창이던 80년 3월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을 개최한 바 있다. 또 북한측의 제의로 「팀 스피리트 84」 훈련이 진행중이던 84년 4월에도 남북체육회담을 연 바 있다. 물론 80년 북한이 총리회담을 제의했던 것은 「10·26 사태」 후 한국 내정혼란을 악용하려는데 있었으며 84년 남북체육회담제의 또한 한국팀의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출전을 방해할 구실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었음을 잘 알고 있다.

80, 84년 각각 열렸던 남북회담은 북한이 「팀 스피리트」 훈련중에도 그들의 대남적화 전략전술에 들어맞는다고 하면 개의치 않고 남북접촉을 스스로 제의하고 나섰음을 실증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지난해 11월 판문점 총격 도발사건의 책임을 한국측에 전가하면서 이미 합의되었던 제2차 남북경제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시킨 바 있었다. 뒤를 이어 북한은 연기했다가 열기로 합의했던 2차 경제회담을 또다시 연기하는 변덕을 연출했다.

우리는 북한의 되풀이되는 변덕 속에 북한의 김정일 집권능력이 아직도 어린아이 장난하듯 미숙해 있음을 확인한다. 그렇게 종잡을 수 없고 예기치 못할 것이 공산체제의 생리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김정일의 변덕이 더더욱 심함을 직감한다. 「아웅산」묘소 암살폭파 만행도 그러한 김정일의 성향을 대표한다. 어쨌든 북한은 투정부리는 망나니처럼 행동하지 말고 민족의 소명 앞에 자제, 예정되었던 대로 남북경제회담과 적십자본회담에 나오도록 촉구한다.

허심탄회하게 대화에 응하라

서울신문 (1985. 1. 11)

남북회담이 또다시 연기되었다.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인 팀 스피리트 85를 트집 삼아 북한이 회담의 무기연기를 통고해 온 것이다.

작년 12월 5일 열릴 예정이던 제2차 남북경제회담은 예기치 않았던 판문점에서의 소련청년 망명사건 때문에 유산되었었다.

이미 지난 70년대에 그들과의 대화에 쓰라린 경험을 한 일이 있는 우리는 그들의 돌연한 태도

변화에 그리 놀라지 않는다. 그러나 금년만은 남북관계에 어떤 진전을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줄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달중에 열기로 합의했던 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을 팀 스피리트 85를 구실로 보이코트한 것은 어떻게 봐도 설득력이 없다. 한미연합 합동군사훈련인 「팀 스피리트 85」는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연례적으로 해오던 행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오히려 모처럼 재개된 남북회담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이번 「팀 스피리트 85」에는 북한측에서도 참관해 줄 것을 직접 초청하기도 했었다.

우리는 무익한 남북대립을 극복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기를 바라는 남북 6천만 겨레의 소망을 염두에 둔다면, 북한이 조속히 허심탄회한 자세로 돌아오길 촉구해 마지않는다.

전두환 대통령은 지난 9일 국회에서 행한 새해 국정연설에서 『평화와 통일의 역사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먼저 청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지난 40년간 지속해온 대결의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80년대 초에 제안한 바 있는 김일성과의 남북한 최고책임자 회담과 서울·평양 상주연락대표부 설치를 거듭 촉구했다.

우리는 북한의 김일성 자신도 신년사에서 남북대화가 잘 진행된다면 남과 북의 고위급 정치회담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팀 스피리트 85」가 남북대화를 중단시켜야 할만큼 중대한 장애요인이라고 보지 않는다. 동서독의 접근과 협력에 서독주둔 미군은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성취하려는 양측의 진지한 자세와 의지이다.

우리는 남북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 궁극적으로 남북한 최고책임자 회담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지난 70년대의 대화가 비록 실패로 끝나긴 했으나 남북대표들이 각기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회담도 하고 남북 최고책임자를 만났던 일은 아직도 깊은 감동으로 남아있다.

전대통령도 강조한 바와 같이 끝없는 체제대결은 민족적 에너지를 쓸데없이 낭비하는 일일뿐이다. 민족의 잠재력을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돌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에 남북은 각기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 되풀이되는 북의 간교

#### —신뢰조성 거부하는 대화연기 책동—

조선일보 (1985. 1. 12)

북의 집단이 또 망나니짓을 부려 민족적 수치를 세계 앞에 드러냈다. 우리 겨레가 가장 소중히 여겨온 생활규범의 하나가 신의를 지키는 일이었고, 주변들이 우리를 예의 나라라고 일컬어온 까닭도 그에 연유했다.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의 이질화를 심히 걱정하고 있지만, 식은 죽 먹듯이 약속과 신의를 저버리기를 일쭤로 삼는 북쪽 통치집단배의 형태는, 이제 배신배리의 상습성에 인이 박힌 듯, 겨레의 고유한 미덕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잡배무리들에 그치고 있음을 통감케만 한다.

우리가 76년이래 연례적으로 공개리에 실시하고 저들의 참관까지를 초청해 온 팀 스피리트 군사훈련을 트집잡아, 저들은 17일의 경제회담도 23일의 적십자회담도 예정대로 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고해 왔다. 70년대 대화경험으로 해서 애시당초 성급한 기대를 가질 수 없었던 80년대 대화와 접촉개시였지만, 이렇게도 느닷없이 저들의 태도가 표변할 줄까지는 정녕 미처 몰랐다.

공개리에 참관 초청까지 하면서 실시한 팀 스피리트 훈련이 올해 처음 비롯된 것인가. 그보다도 팀 스피리트 훈련기간 중인데도 79년도에 5차례, 80년에 4차례, 그리고 작년인 84년 4월에도 남·북 체육회담에 성의라도 있는 듯 응해왔던 사실을 저들은 까마득히 까먹어버렸단 말인가.

북한집단의 간교—세교—생트집 등에 이제 우리도 익숙해질대로 익숙해져 있다. 저들은 분단 40년 동안 저들의 정체를 속속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실한 반면 교사노릇을 해 온 것이 특기해야 할 그 이력이다.

50년 봄에서 초여름에 걸쳐, 무슨 평화통일 선언문이란 걸 보내는가 하면, 김삼룡·이주하와 조만식 선생을 바꾸자는 등 교언영색을 떨다가 일요일을 택해 6·25민족 도륙전을 감행했다. 70년대에는 적십자회담이다, 조절위다 대화 양동놀음의 그늘에서, 은밀히 휴전선에 땅굴을 파내려 왔다.

10·26 후에는 우리의 혼란에 편승해서 전례 없이 대한민국 국호를 써가면서 총리회담을 거론하고, 소위 개별적 정치인사들과의 이른바 남북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라는 걸 갖자고 들고 나오기도 했다.

그런 간교한 잔재간에 넘어가기에는 우리의 분단 40년의 대북 경험이 너무나도 심각한 교훈적인 것으로만 차있다. 이번 대화 일방적 연기통고도 그 속셈을 간파할 대로 간파할 수 있다. 2월의 우리 총선거가 저들 책략계산의 제1항목일 것이다. 3월 개학이후의 학원동정이 그 다음 항목으로 당연히 꼽히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양의 책사들이 아무리 세밀한 계산을 했다해도, 그것은 오산으로 그칠 것이다. 86 아시안게임, 88 서울 올림픽 방해책동도 계산항목에 포함돼 있겠지만, 군사적 긴장상태를 강박하는 것이 어느 쪽인가는 이제 세계 안목의 상식이 돼 버린지 오랜 일이다.

저들은 입만 열면 미군 철수를 떠벌려대지만 나갔던 미군을 다시 불러들인 것이 바로 저들이었고, 그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이 4개 기갑군단의 전진배치에, 휴전선 근접 동·서 양해안에 새로운 전투비행장을 건설하고 있는, 바로 저들의 군사동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도 팀 스피리트 훈련은 더욱 대대적으로 필요하게 돼 있다.

이 적대적 위기를 푸는 길이 명백히 있다. 이미 합의 본 남북대화를 순리적으로 진행시키면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가 회동하여 민족적 양심에서 동족간 평화를 확약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해 가는 것이 그 유일한 길이 된다.

#### 북한측의 「대화」 거부

중앙일보 (1985. 1. 11)

북한이 한미 합동 「팀 스피리트 85」 훈련을 구실 삼아 이미 일정까지 합의된 남북 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일방적으로 무기 연기한 것은 백보를 양보해도 납득되지 않는다.

평양의 부총리 김환은 9일 신병현 부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팀 스피리트」를 『남북회담 앞에 난관을 조성하는 도발행위이며 우리측에 대한 모독행위』라고 비난하고 북적위원장 손성필은 유창순총재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표단의 안전과 회담 자체를 위협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라고 하면서 각기 회담을 열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분명히 말해 두거니와 「팀 스피리트」는 결코 공격적이거나 도발적인 훈련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방지·격퇴하기 위한 방어훈련이다.

그것은 또 이미 76년이래 10년째 계속돼온 연례적인 행사이며 과거에는 이 같은 훈련이 계속되는 기간에도 북한이 여러 차례 우리와의 대화테이블에 나왔었다는 사실을 평양은 애써모르는체 하지 말아야 한다.

굳이 예를 들자면 79년도의 「팀 스피리트」 훈련 기간엔 5차례, 80년엔 4차례 남북회담이 있었고 작년 4월 9일 판문점에서 제1차 남북체육회담이 열릴 때도 「팀 스피리트 84」가 사전에 발표될 때도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그것을 핑계로 회담을 거부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일이다.

북한도 매년 군사훈련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도 우리처럼 공개적으로 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참관토록 초청한 바도 없다.

김작전대 북한은 회담연기를 통해 주한미군의 철수를 선전하고 우리 총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 같으나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임을 자각해야 한다.

남북대화는 그같은 어느 일방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수 없는 존엄한 민족사업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우리는 평소 남북대화의 각분야 회담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점과 각 회담을 통합적으로 조정·통제해 나갈 보다 상위의 조절위원회 재구성 내지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우리의 주장은 이번의 북한측 조치로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다.

북한은 군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적십자회담이나 경제회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오히려 휴전협정에 의해 이미 구성·운영되고 있는 군사정전회담에서 다룰 문제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팀 스피리트」에 대해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풀기 위해 우리가 제의한 대로 이 훈련의 참관에 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훈련일정을 발표하고 북한군장교단의 참관을 공식 초청한바 있다.

남북의 장교단들이 서로 상대방의 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참관할 수 있다면 그 훈련의 공격성도 적어질 것이고 군인들 상호간의 교분과 이해도 깊어져 한반도의 긴장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북한측이 「팀 스피리트」 훈련중지를 협의키 위해 부총리회담을 제의한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군이 있는 한 훈련은 불가피한 것일 뿐 아니라 그런 문제는 경제담당 부총리들이 다룰 성질이 아닌 것이다. 북한은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말고 예정된 회담에 임하도록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동족간 약속도 못 지킨다면  
—연례행사 트집잡는 북한 속셈은 ...—

한국일보 (1985. 1. 11)

기대와 실망의 어설픈 순환은 언제까지 되풀이 될 것인가. 남북대화에 임하는 북한집권층의 타의있는 전략적 생리가 하루아침에 개변되리라고 낙관하기도 어려우니 말이다. 성과 이전에 대화 자체를 인내로 이어나가는 일이 「장정」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측은 9일 그곳 정무원부총리 김환, 적십자회중앙위 위원장 손성필명의로 된 전화통지문을 통해 우리측의 관례적인 군사훈련 「팀 스피리트 85」를 트집잡아, 오는 17일 열기로 합의했던 제2차 남북경제회담과 23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제8차 남북적십자 본 회담을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알려왔다. 동시에 「난관」 타개대책 협의차 17일을 전후해서 판문점에서 부총리끼리 직접 만나자고 제의해왔다는 소식이다.

이에 대해 우리측 신병현 부총리와 유창순 적십자사 총재는 10일자 대북 통지문에서 각기 예정대로 약속대로 북한측이 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북한측이 연기를 통보해 오면서도 동시에 부총리회담을 제의한 것은 그 실현성보다도 일방적 대

화중단이라는 내외비판을 모면해 보려는 복선임을 관측케 한다. 여러가지 조짐으로 미루어 북한측은 전면 중단 아닌 무기 연기를 택한 꼴인데, 최소한 팀 스피리트 훈련이 끝나는 4월중순 이전에는 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같은 일방적 처사로 하여 북한측은 무례한 약속 위반을 저질렀고 특히 온 겨레가 대망하는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이 경우에 문제되는 것은 그러한 마이너스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따로 계산했을 전략적 저의의 분석이다.

그 점은 최근에 평양 당국자들이 몹시 분망하게 벌여온 외교적 행각과 선전적 언동에 비추어 관측하기에 어렵지 않다. 애당초 팀 스피리트에 대한 비방공세는 표면상의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그 훈련은 76년 이래의 연례적, 공개적인 행사이며, 북한측도 매년 「기동훈련」을 실시해 온 사실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게다가 과거에도 팀 스피리트와는 무관하게 여러 차례 남북간에 대화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북한측은 금년 들어 벽두부터 소란스럽게 떠들어온 주한미군 철수 요구와 3자회담 제의를 「합리화」해보고자 남북대화를 차요적인 것으로 격하시키려고 획책했음을 짐작케 한다. 또 그들은 「긴장 고조」를 국제적으로 부각시키면서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서울 올림픽을 방해해 보려는 셈이다.

요컨대 북한측의 남북대화 「연기」계략은 겨레의 여망보다도 대외적인 포석과 타산을 우선시킨 저의로 하여 나라안팎 동포들의 준열한 비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하기야 그들도 오늘의 내외정세와 여론이 73년 8월과는 판이함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므로 조만간 다시 남북회담에 호응해 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화에는 상대가 있으니 우여곡절은 불가피시 된다. 다만 북한측은 약속을 어겼다는 신의 면에서 중대한 뉘우침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럴수록 대화 재개를 주도할 입장에 선 우리측의 인내성 있는 개방적 자세가 계속 의연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 해외 반응

### 미 국무성 대변인(1985.1.10)

-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은 매년 같은 시기에 실시되는 정기적인 군사훈련이며 그것은 도발적인 성격을 띤 것이 아님.
- 북한이 자신의 입장을 재고하여 예정대로 남북한 회담이 계속되기를 바람.

### 로이타(1985.1.11)

- 북한의 회담연기는 남북대화의 심각한 후퇴를 의미하는 것임.
- 회담연기 조치는 북한이 남북대화를 결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음을 입증해 주는 것인지도 모름.
- 소련부외상 미하일 카피짜가 작년 11월 2주일씩이나 북한을 방문한 일이 있는 후 북한의 한국에 대한 태도가 다시 경화되었다는 것은 소련이 남북대화를 적극 지지하는 중공의 입장에 대항하여 북한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건지도 모름.

### 동경신문 사설(1985.1.10)

-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대한 북한의 태도 경화로 남북대화가 다시 연기되었음은 유감임. 한반

도의 긴장완화의 촉진을 위해 시급히 대화를 재개하도록 간절히 바랍.

- 작년 말의 판문점 총격사건에 이어 대화가 다시 연기된 것은 정말 유감스런 일이며, 겨우 궤도에 올라온 남북대화를 지금 여기에서 중단한다면 중요한 대화의 무드가 없어지게 됨.

[산케이]신문(1985.1.10)

-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강한 거부반응을 나타낸 것은 작년부터 남북대화에 전향적인 대응을 보여 왔다고는 하나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촉구하기 위한 3자 회담의 실현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북한으로서는 남북대화의 저해요인으로써, 한미 합동연습과 미군의 존재 그 자체를 세계에 드러내어 그 중지와 철수를 위한 국제여론을 조성하려한 것으로 보여짐.

[요미우리]사설(1985.1.11)

- 팀·스피리트가 금년에도 실시된다는 것은 이달에 예정된 남북대화의 일정이 결정된 작년 말부터 북한측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임. 그것을 이유로 대화를 연기하는 것은 예정된 행동으로 보임.
- 팀·스피리트 규탄은 주한미군의 존재를 전세계에 [어필]하는 좋은 기회라고 북한측은 생각할 지도 모름.
- 북한측이 합영법 제정 등 문호개방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아직 남북대화 교류의 급속한 진전에 따르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는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벌기 위한 지연작전이라는 느낌이 강함.

[아사히]신문 사설(1985.1.11)

- 남북당국자가 각각 그 뜻하는 바가 다르고 정치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실현 가능한 분야, 즉 이산가족 찾기 운동, 물자의 왕래, 스포츠 교류 등 비정치적인 것에서부터 대화를 계속해 나가야 함.

[마이니찌]신문 사설(1985.1.12)

- 남북한간의 대립과 증오는 간단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대화의 진전이 곡절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이해할 수 있음. 그러나 모처럼 맺어진 대화의 실마리를 끊지 않기를 바랍.
- 남북대화를 진정으로 결실있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호 인내와 노력이 필요함.

[닛케이]신문 사설(1985.1.15)

-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정치적, 군사적으로 대립해온 남북 쌍방이 단기간에 화해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은 곤란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음. 그러나 남북 쌍방이 언제까지 적대시하는 것은 국민생활의 안정, 향상을 방해할 뿐 아니라 극동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님.
- 남북대화에는 전망은 아직 열려있지 않으나 대화의 계속은 통일에의 기대를 이어지게 하는 것임.
- 남북대화의 계속을 위해 쌍방이 신뢰감을 쌓고 끈기 있게 이를 북돋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쉽게 낙관하거나 기대하는 것은 금물임.

Japan Times(1985.1.15)

-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훈련 때문에 남북한 대화를 취소했다고 말하지만 이는 설득력 있는 이유는 되지 못함.
- 북한의 비타협적인 태도는 일시적인 탈선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 남북대화 제38호

(1985. 3 ~ 1985. 8)

# < 목 차 >

|  |    |
|--|----|
| 제1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제3차 전체회의 .....              | 3  |
| 1. 전두환 대통령,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수락 재촉구 .....   | 3  |
| 2. 국내 주요 반응 .....                          | 10 |
| 제2부 이세기 국토통일원장관, 「제2의 남북대화시대」 주도를 제창 ..... | 15 |
| 제3부 남북대화의 진행 .....                         | 19 |
| 1. 남북경제회담 .....                            | 19 |
| 2.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                     | 34 |
| 3. 남북국회회담 관련 동향 .....                      | 53 |

## 제1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제3차 전체회의

### 1. 전두환 대통령,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수락 재촉구

####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제3차 전체회의 개회사-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는 1985년 6월 5일 상오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국내외 자문위원 10,6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동 자문회의 의장인 전두환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북한측에 대해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의 조속한 실현을 재촉구하면서 [남과 북이 전쟁과 대결로 얼룩진 분단의 40년사를 하루빨리 청산하고 이 강토에 평화와 통일의 터전을 다지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전제, 이를 위해 [민족자해적인 상호 비방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과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에 조속히 호응할 것도 아울러 촉구했다.

또한 전대통령은 최근에 개최되고 있는 [남북경제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에 관하여 [북한측은 지금 의견상으로나마 남북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대화에 임하는 그들의 자세가 어떠하든, 우리는 모처럼 마련된 이 회담이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해소하고 남북한 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평화통일로 다가서는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진정을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함으로써 남북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끝으로 전대통령은 한반도 통일문제의 [주체적인 해결 노력은 다극화 시대로 변천하고 있는 국제정세의 추이를 직시하면서, 주변국가들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건설적으로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함과 아울러 제3세계 국가와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자문위원들에게 [국민화합을 남과 북의 민족화합으로 승화시키고, 나라의 안정을 튼튼하게 정착시키며, 겨레의 힘을 국력신장의 한 곳으로 이끄는 데 비상한 분발과 헌신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당부했다.

전두환 대통령의 제3차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개회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애하는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여러분과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육천만 동포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용솨음치는 조국통일의 열망과 온 겨레의 드높은 자신감을 모아 성업완수의 발걸음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본인은 먼저 겨레의 통일의지를 높이 받들어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발족된 지 4년 동안, 통일을 향한 확고한 전진을 선도해 왔음을 여러분과 함께 자부하면서, 전진의 기수로서 땀흘려 온 자문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통일의 신념을 실천하여 안정과 성장 속에서 국력신장을 이룩한 것은 통일의 힘을 크게 강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은 제한적이고, 또 그 진의가 분명치 않다 하더라도 북한이 직접대화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국력신장과 국민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가 주도적인 대화노력을 기울여 온데 힘입은 것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분단과 분열의 금세기를 청산하고 통일과 화합의 새 세기를 건설하는 데 매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인은 온 겨레의 간절한 염원에 더욱 힘껏 부응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복잡한 내외 환경 속에서 이천년대를 위한 민족적 예비를 더욱 단단히 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본인은 이 중대한 역사의 길목에서 남과 북이 전쟁과 대결로 얼룩진 분단의 사십년사를 하루 빨리 청산하고 이 강토에 평화와 통일의 터전을 다지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를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간의 대결과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더욱 심화된다면 그것은 민족의 역량을 낭비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물론, 전쟁과 파괴를 초래하여 종국적으로는 민족자멸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극히 위험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남과 북의 겨레가 함께 살고 함께 번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실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신뢰와 화합을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른 남과 북의 대화만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해 나가는 최선의 길이라는 일념으로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 방문과 회담을 북한에 대하여 제의했던 것입니다.

남북한간의 전반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협의 해결하기 위한 이러한 만남을 마다할 이유는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양식 있는 모든 사람의 판단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남북한간에 가로놓인 모든 현안문제를 총괄해서 다루고, 그리고 보다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회담이 올해 안에 실현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조국광복 사십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민족사에 평화와 통일의 신기원을 여는 뜻깊은 한 해를 가꿀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본인은 국제사회에서 남과 북이 민족의 자존을 드높이고 민족의 동질성과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생산적인 노력을 폭넓게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족자해적인 상호비방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1986년의 아시안게임과 1988년의 서울올림픽에 북한측이 참가할 것을 희망하며, 참가인원의 신변안전과 모든 편의를 우리측이 완벽하게 보장할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 양대 제전에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한다면 지난해 LA올림픽 때보다도 월등한 성적으로 우리 민족의 우수한 재질과 위대한 저력을 전 세계인에게 과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일팀을 구성하자면 선수선발과 훈련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지금부터 그 준비를 서둘러 나가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북한측은 우리가 제의하고 있는 남북한체육회담에 조속히 호응함으로써 단일팀 구성과 체육교류의 실현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북한측은 지금 외견상으로나마 남북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화에 임하는 그들의 자세가 어떠하든, 우리는 모처럼 마련된 이 회담이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해소하고 남북한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평화통일로 다가서는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진정을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당사자간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가 주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주체적인 해결노력은 다극화시대로 변천하고 있는 국제정세의 추이를 직시하면서, 국제

환경을 통일대업 성취에 유리하게 이끌어 가는 차원으로 전개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와 같은 판단 아래 주변국가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건설적으로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함과 아울러, 제3세계 국가와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본인은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모든 공산권 국가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의 원칙 아래 우호협력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키는 문호개방정책을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펴나갈 방침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최근 북한은 그들 내부의 곤경을 타개하기 위하여 서방국가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북한 사회를 남의 동포에게는 물론 온 세계인에게 솔직하게 개방하여 폐쇄사회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행동의 음모성과 위장성을 불식시켜 주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금세기에 빛어진 분단의 비극은 적어도 새 세기까지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민족적 염원에 비추어 볼 때, 2천년대까지 앞으로 남은 15년간은 우리 민족사에 있어 실로 중대한 역사적인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스스로가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국민적 단합과 나라의 안보를 더욱 굳건하게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안정과 국민적 단합을 깨뜨리는 행위는 바로 국력의 분산으로 이어져 통일과 번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자문위원 여러분은 그 동안의 자랑스러운 업적을 토대로, 국민화합을 남과 북의 민족화합으로 승화시키고 나라의 안정을 튼튼하게 정착시키며 겨레의 힘을 국력신장의 한 곳으로 이끄는 데 비상한 분발과 헌신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통일의 주체로서 그리고 선진의 역군으로서 노력한다면, 멀지않아 통일의 새 역사는 반드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임을 본인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세대에 번영된 통일조국을 기필코 건설할 것을 다 함께 다짐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85년 6월 5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장

대통령 전두환

개회식을 마친 후 속계된 회의에서 이세기 국토통일원장관의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이 통일원장관은 동 보고에서 북한측의 수재물자 인도·인수를 계기로 시작된 두 차례에 걸친 [남북경제회담]과 서울에서의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개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1985년 6월 20일로 예정된 [제3차 남북경제회담], 1985년 8월 27일로 예정된 [제9차 남북적십자본회담], 1985년 7월 15일의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문제를 협의하게 될 판문점 [실무대표 접촉] 그리고 [남북국회회담]에 임하는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세기 통일원장관의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보고]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여러분!

먼저 우리 민족적 숙원인 조국통일의 길을 개척하고 앞당기기 위하여 그 동안 국내외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자문위원 여러분들에게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올해는 조국광복 40주년의 기쁨과 함께 국토분단 40년이라는 민족적 비애가 교차되는 역사적 전환기로서 남북대화와 통일문제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남북대화의 경위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추진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국이 분단되어 이미 한 세대가 지나고 40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남북한이 단절과 대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민족사의 비극이며, 이러한 남북한 대결구조는 우리의 평화염원과 민족적 긍지에 비추어 볼 때 시급히 종식되어야 할 지상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구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왔으며 특히 지난 1년은 통일을 향한 우리의 적극적 의지가 실천적으로 표출되고 그에 따라 통일의 밑거름이 되는 남북대화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진전이 이루어진 보람찬 한 해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는 지난해 8월 20일 하계 기자회견에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시대의 개막을 강조하시면서 북한측에게 남북한간의 교역과 경제협력을 실시할 것과 그들이 동의한다면 기술과 물자를 무상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천명하시었습니다.

이 새로운 제의는 그 동안 우리가 땀흘려 이룩한 국력신장과 전반적인 국민의식수준의 선진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굳건한 자신감 속에 남북한간의 경제협력과 상부상조의 길을 틔우로서 민족의 화합과 공동번영을 이룩하자는 민족적 대의의 발현이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세계 많은 나라들이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 발전경쟁의 환경 속에서 우리 민족도 세계사의 진군과 발맞추어 온 겨레가 발전역량을 한데 모아 공동의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일념에서 나온 뜻깊은 제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각하께서는 금년 1월 9일 국정연설을 통해 "금세기의 비극이 새로운 세기로 이어지는 일은 결단코 막아야 하며, 우리는 민족분단의 역사를 청산하고 이 땅에 통일과 번영의 새 역사를 창조함으로써 세계사에 한 민족의 위업을 기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신 말씀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세대의 시대정신을 분명하게 밝혔음은 물론 통일대장정의 강력한 실현명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북한간에 민족적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통일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개최할 것과 다각적인 대화, 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를 설치할 것"을 제의하심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통일의 실천방도를 제시하여 대화의 분위기를 더욱 고양시킨 바 있습니다.

이것은 1980년대 안에 기필코 평화와 통일의 새 장을 열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그 출발점이 되는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고 남북교류·협력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제반교류·협력업무를 원활히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9월 북한측이 수재물자의 제공을 제의해 왔을 때 우리가 이를 수락한 것은 그에 앞서 8월 20일 대통령각하께서 밝힌 대북 경제협력 제의정신에 입각하여 남북한간에 상부상조의 길을 트고, 물자교류의 선례를 만들어 남북한 관계개선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남북경제회담의 개최를 제의하고 중단된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개를 아울러 북한측에 촉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북한측이 이에 호응해 옴으로써 지난해 11월 15일과 금년 5월 17일 두 차례의 남북경제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으며, 또한 지난해 11월 20일 판문점에서의 예비접촉을 거쳐 지난 5월 28

일에는 제8차 남북적십자 본 회담이 12년만에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제1차 남북경제회담에서 쌍방은 물자교역과 경제협력에 대한 많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동 제의에서 쌍방은 교역품목과 경제협력방안에서 공통점도 많이 있었으나, 실시방법상의 견해차이도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중요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무연탄, 철광석, 철강재, 섬유, 옥수수, 명태 등의 교역품목, 남북간에 경의선철도 연결문제, 경제협력기구 설치문제에서 의견이 접근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남북경제회담에서 우리측이 제1차 회담 때 합의하지 못한 의제를 확정된 다음 남북간의 물자교역과 경제협력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장하면서 북한측으로부터 삼십만톤의 무연탄을 당장 구입할 용의를 표명하는 등 실질문제 토의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북한측은 일차회담에서 남북 쌍방이 제시하였던 의제문제, 교역품목, 경제협력방안에 대한 토의를 거부한 채, [남북경제협조공동위원회]구성만을 주장함으로써 실질문제 토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쌍방이 이와 같은 기본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3차 경제회담을 오는 6월 20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은 쌍방이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회담목적에 재확인하고 제9차 본회담을 오는 8월 27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의 결과에서 우리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점은 오는 8월 15일 광복 40주년을 전후해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에 합의하고 그 절차와 방법 등을 협의하기 위해 7월 15일 판문점에서 실무대표접촉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7월 15일 실무대표접촉에서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1970년대 초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남북한간에 처음으로 거둔 구체적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이산가족들이 분단의 장벽을 넘어 고향과 혈육을 찾을 수 있는 최초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 국회는 남북국회회담을 제의한 지난 4월 9일자 [최고인민회의]의 편지에 대해 그 동안 초당적 입장에서 이를 진지하게 검토·협의한 끝에 지난 6월 3일 우리측의 회신을 북한측에 보냈습니다.

우리 국회가 이번 회신에서 통일헌법 제정을 위한 협의기구의 구성문제와 기타 통일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국회회담을 제의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평화통일을 향한 영도자의 굳은 의지와 온 민족의 한결같은 성원 속에 제2의 남북대화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남북대화가 지난날의 교훈을 거울 삼아 우리 민족의 통일염원과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는 역사적 발전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통일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 앞에 제기되는 시급한 당면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문제라고 하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업들은 기본적으로 쌍방 통치책임자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므로 남북정상회담에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의 결정적 계기가 될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

이 하루속히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의 실현을 위해 북한측을 꾸준히 설득하는 등 제반 여건조성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진행중인 남북경제회담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물자교역과 경제협력의 길이 트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아울러 남북적십자회담의 성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함으로써 이산가족들의 재회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남북체육회담도 조속히 재개되어 남북한의 체육인들이 서로 교류와 친선을 도모하고 각종 국제경기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우수한 기량과 단합된 모습을 세계에 과시함은 물론 인류의 제전인 88 서울올림픽이 명실공히 온 겨레의 축전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조국광복 40주년을 맞는 올해가 온 겨레에게 민족적 화합과 단결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어 우리 민족의 분단극복사에 빛나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의 통일대화 태세를 갖추어 나아갈 것입니다.

자문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계속적인 자문과 참여를 기대하면서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85년 6월 5일

국토통일위원장관 이세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제3차 회의는 끝으로 ◎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 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의 실현에 북한측의 긍정적 동참촉구, ◎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제회담」, 「남북체육회담」 에의 북한당국의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촉구, ◎ 평화지향적 의지의 범세계적 확산, ◎ 통일대도를 향한 민족진운에 즈음한 선도적 역할 다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의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시점은 지난 40년 동안 겪어야 했던 불행한 남북대결의 시대를 민족화합의 시대로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야 할 때다.

이에 우리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열망하는 6천만 온 겨레의 간절한 염원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민족의 통일은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하며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 제의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 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의 실현에 북한당국이 긍정적으로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1.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으로 조성된 대화분위기를 발전적으로 승화시켜 1천만 이산가족의 재회는 물론, 「경제회담」, 「체육회담」 등의 성공적 결실을 기하고 이를 평화통일의 길로 연장시켜 나가기 위하여 북한당국은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한반도의 평화정책은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반드시 이룩되어야 하고, 분단된 조국을 하루속히 통일하여 민족의 번영과 인류 공영에 기여하려는 평화지향적인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범세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
1. 영광된 선진 통일 조국을 창조하기 위하여 국민의 통일실천 의지를 성실히 수행하는 중추역군

으로서 의지와 보람을 가지고 민족화합의 새 시대를 개척하고 통일대도를 향한 민족진운에 선도적 역할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1985년 6월 5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 일동

## 2. 국내 주요 반응

국내 주요 신문들은 「1980년대 종반을 가면서 남북간 전개에 새로운 역사계절 조짐이 일고 있다」고 전제하고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제3차 전체회의 개최에 대하여 「남북적십자 회담을 비롯하여 경제회담, 국회회담 등 남북대화가 외견상이나마 희망을 보이고 있는 때여서 평통자문위원들의 모임은 그 의의가 더욱 깊다」고 평가했다.

또한 개회사를 통해 전두환 대통령이 제의한 「민족자해적인 상호비방행위의 즉각 중지」와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 개최의 재촉구에 대하여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이 성사될 경우 그것은 어떤 방법보다도 분단의 벽을 허는 강력한 촉진제가 될 것」이며 상호 비방행위의 중지는 「분단에 의해 조성된 상호 불신과 증오를 불식하고 통일의 기반인 사랑과 믿음의 분위기 조성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라고 논평하고 따라서 북한측은 이 제의들에 「지체없이 호응해야 할 것」이며 중단상태에 있는 「남북체육회담」도 조속히 재개되어 「남북한 단일팀 구성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하 주요일간지의 논평은 다음과 같다.

### 통일기반조성의 선도역할 - 평화자문회의의 4돌을 맞으며 -

경향신문(1985. 6. 5)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발족 4돌을 맞아 국내외 1만여 자문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의 통일 의지 실천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새롭게 다짐했다.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단 교환에 합의한 적십자회담을 비롯하여 경제회담, 국회회담 등 남북 대화가 외견상이나마 희망을 보이고 있는 때여서 평통자문 위원들의 모임은 그 의의가 더욱 깊게 느껴진다. 사실 남북 대화는 아직 북의 성실성을 믿을 수 없다 하더라도 내외의 상황과 우리의 통일주도 노력에 힘입어 이제 중요한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 그러한 시기인만큼 평통에 맡겨진 막중한 책임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크게 강조된다.

평통은 평화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확인하고 범국민적 통일 의지와 역량을 집결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 기관이다. 지난 4년 동안 국내외에서 알게 모르게 그와 같은 역할 수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높이 평가한다. 그들의 건의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등 우리의 통일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했고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제반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역할과 소임은 지금까지의 그것에 비할 수 없을만큼 크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도 이번 회의의 의미를 더욱 높여주는 것이라고 믿는다.

전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하고 이 회담이 올해 안에 실현되기를 희망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처한 상황을 명백히 인식하고 국민적 단합과 나라의 안보를 더욱 굳건하게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대통령은 또 『안정과 국민 단합을 깨뜨리는 행위는 바로 국력의 분산으로 이어져 통일과 번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분단 40년의 장벽을 하루바삐 허물고 민족 화합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남북 대화에 있어 갖추어야 할 가장 시급한 국민적 태세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앞으로도 북측의 저의가 어떻든 간에 남북의 민족 자해적인 대결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민족 재결합이 이루어지도록 대화노력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 북측이 이른바 「남조선 해방」의 망상을 버리고 진지하고 성실한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도록 국

민단합과 안정·국력배양에 더 한층 힘쓰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남북문제는 1, 2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후 세대들에 대한 정확한 남북인식과 올바른 통일관을 갖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사실 북의 6·25 남침으로 인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에게는 자칫 북한 공산주의의 피상적인 관념론이 크게 비취질 수 있고 북의 통일방안의 허구성을 기성세대만큼 절감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평통자문위원들은 그러한 과제 수행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욱이 평통은 현재 여러 갈래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 대화가 한층 확대되고 높은 차원으로 전개될 때 통일추진의 기반세력의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문위원들은 그러한 점에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통일에 대한 자신감 고취와 국민적 합의를 튼튼히 다지는데 더 한층 분발해주시기 바란다.

### 올해 평화통일의 신기원을

서울신문 (1985. 6. 6)

전두환 대통령은 어제 열린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제3차 전체회의 개최사에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을 광복 40주년인 올해 안에 열자고 다시 촉구했다.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 제의는 이미 4년 전인 1981년 6월 5일 평통 제1차 전체회의 때 전대통령이 한 것으로 이번에는 구체적인 시한을 명시해서 다시 제기했다는 데 뜻이 있다.

금년은 광복 4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지만 분단 40년이 되는 해이다. 앞으로 이런 상태가 10년을 더하면 우리의 분단은 반세기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우리의 분단은 누구나 잘 알다시피 전혀 우리의 뜻이 아니었다. 제2차대전 전후처리를 둘러싼 강대국끼리의 흥정의 비극적 산물이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면서 우리는 분단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는가. 3년간 계속되었던 6·25의 참화는 아직도 우리에게 깊은 상흔을 남겨 놓고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 분단의 죄사슬을 스스로 풀고 민족화합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전대통령이 거듭 촉구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이 성사될 경우 그것은 어떤 방법보다도 분단의 벽을 허는 가장 강력한 촉진제가 될 것이다.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어떤 종류의 남북회담보다도 정치적 성격이 짙은 회담이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남북회담이 있을 때마다 북한측은 자주 정치회담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그러면서도 북한측이 이 회담을 받아들인데 주저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전대통령은 또 어제 연설에서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를 희망하면서 이 두 제전에 출전할 남북한 단일팀 구성에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남북한은 지난해 여름 LA 올림픽에 단일팀을 파견하는 문제를 갖고 몇 차례 회담을 가졌으나 의견의 접근을 보지 못했다. 동서독의 화해과정을 보면 국제경기에 단일팀을 구성 파견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시발이 되고 있다.

우리가 1964년 동경올림픽 때부터 몇 차례 단일팀 구성을 위한 회담을 가져왔으나 한번도 성공하지 못한 것은 아직도 화해의 길이 멀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다행히도 12년 동안 중단되었던 남북적십자 본 회담이 재개되어 지난 달 북한적십자 대표단 일행 84명이 서울을 다녀갔다. 남북한 간에는 다시 화해의 기운이 찾아든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적십자 회담에서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과 예술단을 교환키로 합의한다면,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에 보낼 단일팀 구성에 합의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북한측이 이번 전대통령의 제의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전대통령의 연설은 남북한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국민적 합의와 향도

- 제3기 평통자문회의의 당부 -

조선일보 (1985. 6. 6)

1980년대 중반을 가면서 남북간 전개에 새로운 역사계절 조짐이 일고 있음을 본다. 물론 우리가 손땀고 앉아서 이런 계절을 맞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전개 움직임은 지난해 9월 수재물자 인수와 이에 답한 우리측 선물 보내기가 실제적 남북간 물자교류를 성립시킨데서 비롯됐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북이 일방적으로 중단·외면해 온 적십자 회담 재개를 촉구했고, 그에 앞서 8월에 남북경제협력 방안을 내 놓았다. 남북간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이와 같은 노력이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 우선 2차례의 남북경제회담이고, 5월 하순 서울서 열린 남북적십자회담이다. 북이 순조롭게 호응해 온다면 불원해서 남북 국회간에도 만남의 기회를 가질 전망에 있다.

이러한 조심스러우면서도 고무적 분위기 속에, 5일 제3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평통) 전체회의가 의장인 전두환 대통령 임석하에 열렸다. 해내-외 1만여 자문위원이 참집한 가운데 전대통령은 남북대화를 진정으로 이끌어 나갈 결의를 표명하면서, 통일문제는 남북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자결원칙을 재천명했다.

전대통령은 특히 남북간 모든 현안문제를 총괄해서 다루고, 책임있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의 조속한 실현을 역설하면서 북에 대해 1981년 6·5 제의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환기 촉구해 왔음을 상기시켰다. 지난 5일 우리 국회가 북의 최고인민회의에 보낸 남북 국회회담과 관련한 서한은 국회의사로 이를 언급도 했다.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의 긴요성에 대해서는, 여야의 구별이나 국민간 이견이 없는 우리 사회의 한결같은 의사임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민적 합의를 창출해 내는데 향도적 역할을 해온 것이,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노력인 것으로 평가할만하다.

발족 5년으로 들어서는 평통은 통일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자문에 응하는 헌법기관으로, 초당적, 범국민적 평화통일 운동추진 핵심체라는 사명을 지고 있다. 각계 각지역의 지도적 인사로 구성된 평통은 지난 4년 동안, 통일이념과 통일논의의 국민화, 그리고 그것의 심화기여에 선도적 기능을 수행해 왔고, 통일정책 입안에 실질적 공헌을 해왔다.

그리하여 통일정책 구현에 국민적 호응과 지지를 고무해온 평통은, 제3기 출발을 계기하여 더 한층의 결속으로, 평화통일을 지향한 장정에 향도가 될 것임을 다짐했다. 남북 평화공존에 이은 조국 평화통일의 그 어떤 정책도 국민의 의사에 반하고는 결코 제대로 이룩될 수 없다. 이 말은 통일정책은 일부의 전유물이거나 독점물이 될 수 없다는 역사의 민족적 소명임을 뜻한다.

우리의 통일지표인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추진과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 실현도, 국민적 뒷받침이 없고는 공허한 구호로 공전할 것이라는 사리가 된다.

국민적 결속을 올바로, 그리고 굳게 다져감에 있어 1만여 평통자문위원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며, 우리는 그 노력을 성원하면서 고무코자 한다.

#### 민족자해비방의 중단

- 민족 우수성 드높일 때 -

중앙일보 (1985. 6. 6)

5일 열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에서 남북최고책임자회담의 연내 개최를 거듭 제의한 전대통령

은 국제사회에서 남과 북이 민족의 자존을 드높이고 민족의 동질과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민족자해적인 상호 비방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제 얼굴에 침뱉는 민족자해적인 상호 비방이 얼마나 민족에너지의 낭비인가는 말할 것도 없고 만 나라 사람들이 속으로 비웃고 있을 일을 생각하면 새삼 얼굴이 뜨거워진다.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세계에서든 우수성을 과시하는 민족임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단일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끈질기게 이어왔고 문화민족으로서 다른 어느 민족에도 손색이 없다고 자부해 왔다.

그럼에도 지난 40년의 분단이 빚은 이질체제의 강압적·기계적 논리가 우리 자신의 동일성과 민족의 자존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몰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겠다.

그같은 부자연하고 부조리한 논리로 해서 우리는 남과 북간 서로 상대방을 헐뜯고 때로는 헤치면서 적대감을 조장해 온 것이다.

이제 우리는 민족자해적인 비방과 민족성 파괴행동이 우리 한민족의 미래에 무슨 보탬이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가 되었다.

민족의 동질성과 자존의 기반 위에서 서로가 현재의 부조리한 상황을 걱정하면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대화 노력을 폭넓게 추구해야 하는 것은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다. 민족자해비방의 중단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민족의 우수성을 자손만대와 세계만방을 향해 더 드높이는 일에 남과 북이 허심탄회하게 협조해야 한다.

사실 우리 민족이 게으르고 협동심·단결심이 없으며, 당파싸움이나 일삼는 민족이라 헐뜯고 그런 인상을 온 세계에 퍼뜨린 것은 바로 일제식민통치의 소산이다.

그러나 한국의 근세사를 마치 당파싸움이나 일삼아 온 것처럼 왜곡한 일본의 과당싸움도 곰곰 들여다보면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민족이 게으르고 협동심이 없다는 비방 또한 그동안의 경제발전을 통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했다.

외국 사람들이 인정하고 부러워하기까지 하는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스스로 비하하는 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다.

지금까지 분단에 의해 조성된 상호 불신과 증오를 불식하고 통일의 기반인 사랑과 믿음의 분위기 조성을 촉진할 여지도 생길 것이다.

그런 노력으로써 지금 추진되는 남북적십자 회담과 경제교류 회담은 고무적인 미래를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과 함께 우리 민족의 우수한 기능과 재질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 올림픽에 함께 참여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의 실현 노력도 촉진해야겠다.

남북간의 상호 신뢰와 민족화합의 대의에 부합하는 어떤 일이라도 남북이 결코 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다.

남북이 통일과 화합의 길을 추구하는 것은 역사의 요구이자 민족대의의 지시다.

그 어느 쪽도 그같은 민족의 지상명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는 없다.

#### 분단을 넘어 화합의 시대로

#### - 제3차 평통회의의 진취적 통일외지 -

한국일보 (1985. 6. 6)

광복과 분단의 40주년을 되돌아보는 시점에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제3차 전체회의가 5일 국내외 1만여 명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그 의장이기도 한 전두환 대통령의 개회사에 이어 실무진의 보고를 청취한 후 대정부건의와 특히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전대통령의 개회사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전쟁과 대결로 얼룩진 분단의 40년사를 하루 빨리 청산하고 이 강토에 평화와 통일의 터전을 다지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자면 「진실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신뢰와 화합」을 이룩해 나가야 하는데, 그 중요한 이정표로서 「남북한간의 전반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협의 해결」하기 위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 개최가 촉구되는 것은 사리의 당위라고 생각된다.

하기야 이에 앞서 올들어 남북적십자 본 회담과 경제회담이 다시 햇볕보게 되기는 했으나, 북한측은 아직도 우리측이 제의한 체육회담에의 호응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와 관련, 전대통령은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에 북한측이 참가하도록 희망하면서, 아울러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만큼 조속히 체육회담이 열려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관측컨대 중공과 소련, 동구권이 서울을 바라보는 최근 동향에 견주어 보더라도 지체없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한편 평통자문위원 일동의 명의로 채택된 결의문은 「남북대결의 시대를 민족화합의 시대로 전환」시킬 전향적 자세를 천명하면서 ①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대한 북한측의 긍정적 동참을 촉구하였고 ② 대화분위기의 발전적 승화 ③ 평화지향적 의지의 범세계적 확산 ④ 통일대도를 향한 민족진운에 즈음한 선도적 역할을 다짐하였다. 대국을 헤아리는 진취성의 표명임을 평가하게 한다.

지금껏 우리의 평화통일 접근 노력은 민족사적 「장정」임을 되씹게 한다. 하나 광복 40주년의 시점에서 저간에 이룩한 긍정적 발전기운도 뚜렷하다. 예컨대 남북대화가 본 궤도에 진입한 것 같았던 1972년의 상황은 어떤 당국자의 표현을 빌자면 「대화있는 대결」이라고 불리기도 했음이 회상된다. 그것이 현재에 와서는 「민족화합의 시대로의 전환」이 사회통념화하고 있다.

우리는 또 남북간의 직접 대화 통로의 다원화가 겨레의 여망과 국제환경의 양면에 비추어 이미 불퇴전의 것으로 자리잡히기 시작했다고 관측한다. 문제는 그 다원화의 내실화에 있다.

그렇수록 외세의 비중을 동족간의 신뢰보다도 우선 시키려는 「3자회담」 추진이니, 또는 국제사회에서 벌이는 민족자해적인 상호 비방행위 등은 점차 누우칠 때가 된 것 같다. 북한측의 상응한 반성있기를 바라고 싶다. 분단의 시련을 헛되게 하지 않는 민족적 자존의식과 국사 앞에 가다듬을 사명감을 생각한다.

## 제2부 이세기 국토통일원장관, 「제2의 남북대화시대」 주도를 제창

### - 크리스찬 아카데미 주최 국제심포지움 연설 -

이세기 국토통일원장관은 1985년 6월 14일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주최한 「남북간의 민족화합을 위한 국제심포지움」에 초청연사로 참석, 국내외 학자 및 종교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통일의 전망과 우리의 자세-대화시대의 통일논리 정립을 위하여」라는 제하의 연설을 했다.

이 장관은 12년만에 재개된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과 제3차 「경제회담」, 그리고 「국회회담」 개최문제와 「체육회담」 재개문제 등 일련의 남북대화 추진과 관련, 『지난해 8월 대통령각하의 대북물자제공 용의 및 경제협력 제의와 우리측의 북측 수재물자 인수를 계기로 「제2의 남북대화시대」를 열고 있다』고 말하고, 「새롭게 전개된 제2의 남북대화시대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통일의지와 대화노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전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한 「통일논의는 어디까지나 민족적 염원의 달성이라는 차원에서 민족과 역사 앞에 책임지는 자세로 각계 각층의 건전한 통일논의를 광범하게 수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정치적 의도를 가진 무분별한 통일 논의와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끝으로 「제2의 남북대화시대 전개와 더불어 전국민적 차원의 통일문화 창조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통일문화의 창조는 국민 모두가 통일 문제를 자기 생활의 중요한 일부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또 통일은 기필코 이룩할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통일 지향적인 민족공동체의식을 함양해 나갈 때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이와같이 전 국민적 차원에서 통일문화를 창조해 나갈 때 민족화합에 기초한 평화통일의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질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대화진전이 조금 있었다고 성급한 기대를 한다거나, 또는 대화가 진전 안된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신중과 인내로 대화를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기 통일원장관의 연설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통일의 전망과 우리의 자세 "대화시대의 통일논리정립을 위하여"

#### 통일 문제를 보는 시각의 재정립 필요성

분단 40년의 세월이 가까워 온 지금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통일의 가능성과 확신에 대해서는 회의적, 비관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체로 북한의 대남전략노선의 불변성, 민족 이질화의 심화현상 및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 등이 그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땅위에만 서서 땅을 보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듯이, 현실에만 너무 집착하면서 우리의 통일문제에 접근해 오지 않았는가 성찰해야 한다.

역사의 발전, 변화라는 큰 흐름을 의식하면서 시각을 넓히고, 미시적인 관점을 거시적으로 바꾸고, 현실 분석만을 하기보다는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해서 문제를 보게될 때 통일문제에 대한 생각과 시각이 달라질 것이며, 그 전망도 바뀌게 될 것이다.

거시적 관점, 변화의 시각에서 본 통일 저해요인의 해소 가능성

●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

북한의 권력승계는 우여곡절을 겪을 것으로 보이나 일단 김정일이 승계한다고 상정하고 분석해 볼 때, 김정일은 권력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정치적 상징조작과 권력의 정통성 강화라는 면에서 특유의 정치스타일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남조선해방」이라는 김일성의 허구적 명제 속에 유지되어 온 경직된 동원체제에 염증을 느껴 온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호소력이 있는 것은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대한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는 예로는 1970년대 말부터 방직공업, 식품공업, 주택건설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독려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상의 변화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북한 사회 상층부에서도 당성이나 「이데올로기」성 못지 않게 합리성과 효율성을 함께 중시하는 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볼 때, 「자력갱생노선」과 사상 자극적인 노력동원 일변도를 탈피하고 대외경제협조와 물질 자극적인 생산성 제고방식도 병행케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는 「북한식 공산주의」라는 본질의 근본적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외형적 변화는 그 개연성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예상해 볼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이 고수해 온 남한관, 대남전략, 대화자세의 변화를 예상케 한다.

● 민족이질화 극복과 동질화 가능성

장구한 우리 민족 통일사의 연장노선에서 보면 지금의 분단사는 사실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문화사적으로 볼 때, 대립되는 문화적 요소는 보다 역사성이 있고 보편성이 있는 문화적 요소에 흡수되거나 수렴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문화가 민족사적으로 보다 역사성이 있고, 인류학적으로 보다 보편성이 있다고만 할 것 같으면 남북한간의 이질화는 결국 극복될 수 있으며, 북한 주민들이 우리 민족 고유의 가치관, 행동양식, 사고방식을 되찾을 수 있다.

우리가 전통적인 것으로부터는 상당히 멀어졌으면서도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끼리는 공감대가 있고, 동류의식이 있고, 사고방식도 같고, 행동양식도 비슷해진다. 시대성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인데 시대성이라는 것은 사회, 경제적 발전단계와 함수관계를 가진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이 분단 시점으로 되돌아가자는 복고적 통일이 아니라, 세계사의 진운과 궤를 같이 하면서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민족이 재결합하자는 뜻의 미래지향적 통일을 창조하는 것이라면 민족 이질화 현상을 타하기보다는 민족 동질화의 가능성과 시대 발전에 따른 인류적 보편성의 가치체계를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그 방안을 강구하는 데 눈을 돌려야 한다.

북한의 세뇌교육과 인위적인 이질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적대감, 불신, 반목은 어느 정도 공존의 시간이 지나면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허구적이고, 표피적인 현상일 뿐 내면적인 민족감정은 크게 손상되지 않고 있다고 볼 때, 정신적, 내면적인 차원에서 남북한의 통일이 어렵다고 하는 비관론은 펼쳐 버려야 할 것이다.

● 국제정치질서의 구조와 한반도 통일환경의 변화

한마디로 국제정치의 세계에서 강대국중심 지배질서는 이론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면에서도 허물어져 가고 있다.

미·소도 이러한 추세를 역류시킬 수는 없고 주변국의 자주성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세력균형을 추구하든지 데탕트를 모색하든지 해야할 형편이다.

1980년대로 넘어오면서 1970년대보다 다극화된 국제정치 질서를 반영이라도 하는 듯이 주변 국가들이 모두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한 목소리로 남북한간의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동북아시아 국가들끼리의 교역접촉, 교역교류가 빈번해 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현상유지 또는 분단고정화」의 분열주의 노선으로 매도하기 보다는 「분단현실」을 과감히 인정,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 나가는 통일의 과정으로 인식함으로써 남북의 민족이 통일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예지를 키워나간다면 주변국을 설득하고 주변국가끼리의 힘의 변화관계를 슬기롭게 활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평화 통일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 요인과 그 발전전망

통일은 그것을 저해하는 요인이 해소된다고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단순한 것은 아니다. 통일을 촉진하는 여건과 요인이 동시에 발전되어야 한다. 통일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과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 ● 남북한 관계 변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촉진요인

북한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몇 가지 눈에 띄는 조치들은 남북한 관계를 변화시켜줄 조짐으로서 간과하지 말고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생활필수품 증산을 독려, 주민들에 대한 통제의 부분적 완화, 가정기능의 회복조짐 등 일련의 정책적 조치들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요구하도록 할 것이다.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산업화가 불가피한데, 산업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은 사회의 성격을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것으로부터 타협적이고 유화적인 것으로 변환케 될 것이다.

사회적 성격이 바뀌고 사회심리가 바뀌고 나면 지금과 같은 북한의 대남 전략은 설 땅이 없어질 것이다. 「남조선 해방」이 허구적 환상이라는 점을 북한주민 모두가 알게 되고, 대화에 임하는 자세부터 달라지고, 교류, 협력도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게 될 때 평화적인 공존까지 가능한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평화적인 공존시대」, 「생산적인 남북대화의 시대」가 열린다면 평화통일은 민족의 통일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가, 그 통일의를 수렴하여 정치력으로 승화할 수 있는 민족 내부의 역량이 있는가 하는 문제로 집약케 될 것이다.

#### ● 평화통일 의지와 역량

인류 역사의 발전과 변화는 우연의 소산이라기 보다는, 그러한 발전과 변화를 지향하는 인간의지의 결실이며, 특히 역사의식을 지닌 지도자와 사회 엘리트들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그 촉매작용을 해 왔다고 볼 때, 남북한 관계를 호전시키고 그것을 평화통일로까지 발전시키는 문제도 결국은 민족 성원들의 가슴속에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하게 자리잡고 있느냐 하는데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우리의 자세 : 통일문화 창조를 통한 통일준비의 필요성

통일은 그것을 소멸시하거나 당위적인 것으로 여기고 열망한다고 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통일은 어디엔가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통일 의지를 한데 모두

어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하는 창조적 산물이다.

통일의 가능성을 스스로 조성해 나가고,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국민 모두의 민족의식, 역사의식이 더욱 제고되어야 한다.

국민 모두가 통일문제를 자기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할 때 통일 지향적인 민족공동체 의식이 더욱 튼튼해 질 것이고, 통일의 추진력은 그만큼 튼튼해 질 것이며, 평화통일 여건은 더욱 빨리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문화라는 말속에는 통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뜻과 함께 통일된 상태까지도 대비한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즉 민족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자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말이다.

「제2의 남북대화시대」를 눈앞에 두고 전민족적 차원에서 통일문화를 창조해 나갈 때 우리의 통일정책은 그만큼 큰 힘을 얻게 되며, 민족화합에 기초한 평화통일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 제3부 남북대화의 진행

#### 1. 남북경제회담

##### 가. 회담의 재개

북한측의 두 차례에 걸친 일방적 연기 통보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경제회담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경제회담 우리측 김기환 수석대표는 3월 25일 북한측에 제2차 경제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냈다.

김 수석대표는 동 서한에서 북한측의 일방적 연기통보로 말미암아 지난해 12월 5일과 금년 1월 17일로 예정되었던 제2차 회담이 두 번에 걸쳐 유산된 데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남북경제회담이 하루속히 재개되어 남북간에 교류와 협력의 길이」 열리고 이것이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에도 이바지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2차 남북 경제회담을 4월 18일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김기환 수석대표가 북측단장 리성록에게 보낸 회담재개 촉구서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남북경제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 리성록 귀하

우리는 지난해 11월 15일에 열렸던 제1차 남북 경제회담 이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2차 회담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귀측의 일방적 연기통보로 말미암아 지난해 12월 5일과 금년 1월 17일로 예정되었던 제2차 회담이 두 번에 걸쳐 유산된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겨레는 남북 경제회담이 하루속히 재개되어 남북간에 교류와 협력의 길이 열리고 이것이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에도 이바지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1차 회담에서 남북 쌍방이 각기 내놓은 물자교역과 경제협력 방안은 서로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점도 있지만 공통점도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서로 공통점을 넓혀 나가도록 성의있는 노력을 다한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온 이 시점에서 남북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위한 우리 회담도 꽃이 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기대를 가지면서 제2차 남북경제회담을 오는 4월 18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갖기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귀하의 긍정적인 회담을 바랍니다.

1985년 3월 25일

남북경제회담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김기환

한편 북한측은 이성록 대표단장 명의의 4월 4일자 대남 서한을 통해 우리측의 경제회담 재개 제의에 동의하고, 제2차 회담 개최일자는 5월 17일로 하자고 수정제의해 왔다.

이러한 북한측의 수정제의를 우리측이 수락함으로써 제2차 남북경제회담이 5월 17일 판문점에서 열리게 되었다.

##### 나. 경과

## ① 제2차 회담

남북간의 교역과 경제협력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2차 남북경제회담이 제1차 회담이 개최된 지 6개월 만인 1985년 5월 17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려 2시간 3분간 진행되었다.

이날 회담에는 남북한 쌍방에서 1명씩의 대표가 교체된 가운데(우리측에서는 차상필 대표가 임연택 신임상공부 제2차관보로 교체되었으며, 북측에서는 백준혁 대표가 한영읍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상무위원으로 교체되어 참가)각기 7명의 대표 전원이 참가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이 제1차 회담에서 쌍방간에 거의 의견이 접근되었던 의제문제의 토의마저 회피한 채 쌍방 부총리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조공동위원회」 설치안을 새로이 제시하고 이 기구의 설치문제만을 협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제3차 회담 개최일자에 합의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날 첫 발언에서 우리측 김기환 수석대표는 제2차 회담이 두 차례나 연기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는 또다시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김수석대표는 의제문제를 결정하고 사업토의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임을 지적하고 회담의제는 제1차 회담에서 쌍방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보인바 있는 「남북간의 교역과 경제협력을 실시하는 문제」로 합의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우리 대표단은 회담의 효율적인 운영과 좋은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 제1차 회담에서 쌍방이 제시한 내용 중 공통되는 사항을 재확인하고 진지한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교역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남북 쌍방간에 의견이 합치된 철광석, 무연탄, 마그네샤크링카, 옥수수, 명태, 철강재, 섬유 등 공통 교역품목을 중심으로 우선 교역을 실시할 것을 제의하고 올해 안에 남북교역이 시작되기를 희망하면서 교역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북한측이 판매하기를 희망하고 또 우리측이 구입하기를 희망했던 품목 가운데 하나인 무연탄 30만 톤을 당장 북한측으로부터 구입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아울러 우리 대표단은 제1차 회담에서 쌍방이 다같이 제기함으로써 사실상 합의한 것이나 다른 이 없는 경의선 철도 연결문제에 대해서도 올해안에 경의선 철도가 연결되기를 희망하면서 철도 연결에 따르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쌍방 철도 실무자간의 접촉을 1개월 이내에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이날 회담에서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대표단이 제시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지난번 1차 회담 때에 쌍방이 내놓은 제안 중에서 오늘 우선적으로 토의할 필요가 있는 문제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미 쌍방의 의견이 합치된 교역품목에 대해서는 당장 교역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측은 올해 안에 남북교역이 시작되기를 희망하면서 교역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당장 귀측으로부터 30만 톤의 무연탄을 구입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쌍방이 서로 의견을 조정하면 이미 의견이 합치된 교역물자 이외에도 교역품목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앞으로 우리측은 귀측이 구입하기를 희망한 품목 중 김, 미역, 굴, 멸치 등 남해수산물, 소금, 감귤 등 특산물과 각종 공산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귀측도 우리측에게 판매하기를 희망하는 원자재와 농수산물 등을 추가로 더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교역방식에 대해서 우리측의 생각을 말하고자 합니다.

나는 귀측이 제시한 교역방식 즉 원자재는 원자재끼리, 완제품은 완제품끼리, 그리고 농수산물  
은 농수산물끼리 교류하자는 방안이 절대적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교역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측의 생각으로는 귀측이 말한 교역방식으로 물자교역을 실시할 경우, 거기에는 교역품목이  
매우 제한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교역을 확대하여 나가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  
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원자재나 완제품이나 농수산물이나 구별할 것이 아니라 여러 품목을 포괄하는 구상무역을 실시  
하고 교역확대에 따라 차차 청산협정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나는 우리측이 제의한 10개항의 물자교역 방안을 토대로 남북교역 협정  
을 체결하여 물자교역을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귀측의 의견을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쌍방이 다같이 제기한 철도 연결 문제는 사실상 합의한 것이나 다툼이 없으므로 남북간 물자교  
역실현과 때를 맞추어 철도 수송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측은 올해 안에 경의선 철도가 연결되기를 희망하며 철도 연결에 따르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쌍방 철도 실무자간의 접촉을 1개월 이내에 가질 것을 제의합니  
다.

그리고 항구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물자교역 개시와 더불어 우리는 인천항과 포항항을 귀측에  
개방하고, 귀측은 남포항과 원산항을 우리측에게 개방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적 및 양하에 있어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적항은 판매자가, 양하항은 구입자가  
그때 그때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서로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합의하면 4개 항구 이외의 다  
른 항구도 개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이미 쌍방간에 그 필요성을 인정한 두 가지 경제협력분야에 대해서 다소 의견조정이 필요  
하며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귀측은 지난 회담 때에 "쌍방이 자기의 노력과 설비로 상대측 광산과 탄광을 이용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귀측의 철광석 광산과 탄광을 우리측에 제공하고, 우리측이 중석광산과 몰리브덴 광  
산을 귀측에 제공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귀측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중석은 오히려 귀측에 매장량이 더 많고 우리측의 몰리브덴  
광산은 그 매장량이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귀측과 공동으로 개발할 만큼 충분하지가 못합니  
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그 대신 세계적으로 그 품질이 우수하고 매장량도 귀측과 나누어 쓸 수  
있을 만큼 풍부한 고령토와 규석광산을 귀측에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귀측이 우리측의 이 대안을 받아들인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합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의 어민들을 위해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쌍방이 구체적인방  
안을 내놓고 협의를 진행하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  
지 기술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쌍방의 실무자간 접촉을 통하여 협의하는 것도 좋을 것입  
니다.

세째, 남북경제협력위원회 설치문제는 쌍방이 각각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이를 토대  
로 의견을 조정해 나가면 이것도 원만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나는 지난번 회담 때 귀측이 제의한 「서해안 간석지 공동개발」 문제와 「관개망연결」  
문제에 대하여 우리측의 입장을 말하고자 합니다.

나는 간석지 개발사업과 관개망 연결사업 같은 것은 우리측의 기술 수준, 그리고 공사 경험 등

을 고려해 볼 때 남북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만한 것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측은 국내외에서 간석지 개발실적이 많을 뿐 아니라 국제수준의 훈련된 우수한 전문 기술자와 장비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간석지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귀측에서도 알고 있듯이 우리측은 싱가포르에서 바다 매립 공사를 하고 있고, 중동, 리비아 등에서 대규모 관개공사를 하는 등 해외 여러나라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그 기술과 능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 분계선에 의해 끊어진 관개망 연결문제는 우리의 관개공사로 농업용수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회의를 시작되자마자 돌연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근본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변하면서 남북간의 「경제협작과 교류문제」를 협의,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쌍방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조공동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면서 제1차 회담에서 쌍방간에 거의 의견이 접근되었던 의제 문제의 토의마저 회피하였다.

특히 우리 대표단이 북한측의 「남북경제협조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의에 대해서는 이를 검토하여 다음 회담에서 우리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이날 회담에서는 의제 문제를 비롯하여 쌍방이 이미 내놓은 제안을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그들의 주장만을 계속 고집함으로써 이날 회담을 진전시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제2차 회담에서 북한측이 제시한 「남북경제협조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성 및 조직

- 위원장(부총리) 및 부위원장(장관급) 각 1명, 위원 7명(장관 또는 차관급)과 사무장 1명(차관급)
- 7개 분과위원회(각 5명씩 구성) 설치: 자원개발, 공업·기술, 농업, 수산, 상품교류, 운수·통신, 금융·재정

○ 기능

- 남북간 경제협력과 교류의 대상 및 규모를 협의 결정하고 동협력과 교류의 기본형식과 방법을 결정하며, 협력과 교류에 관련된 통일적인 기획을 협의.
- 쌍방 합의사항과 토의 결정된 사항을 보장하고, 쌍방간에 제기된 분쟁을 협의 조정.
- 분과위원회를 지도하고 기타 문제를 협의 결정.

○ 운영

- 공동위는 분기별 한번씩 평양, 서울에서 개최하며, 분과위는 쌍방 합의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되, 공동위 제1차 회의는 9월 평양에서 개최.
- 공동위원회 운영세칙은 별도 협의하여 제정.

제3차 회담은 1985년 6월 20일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제3차 회담

제3차 남북경제회담은 1985년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1

시간 37분간 공개리에 진행되었다.

우리측 김기환 수석대표는 첫 발언을 통해 지난 제 1. 2차 회담에서의 쌍방 제안 중에는 공통점과 의견이 일치된 사항이 많았음을 상기시키고, 이날 회담에서는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쌍방의 이러한 공통점을 종합 정리하고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키자는 취지에서 「남북간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추진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하고 북한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촉구하였다.

동 제안에서 우리 대표단은 1. 2차 회담에서의 쌍방 제안을 토대로 남북간의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적 사항을 집약하였으며, 「경제협력공동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구구성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쌍방 부총리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장관급 부위원장 1명, 당국 및 경제계 인사로 구성되는 위원 5명 등 도합 7명의 위원으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고 이 「공동위원회」에는 회담의 당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물자교역분과위원회」와 「경제협력분과위원회」를 두고 필요시에는 특별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함으로써 앞으로의 사업추진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을 뿐 아니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동위원회 산하에 실무 문제를 관장하는 공동사무국을 설치하는 방안도 아울러 제의하였다.

우리측의 이러한 제의는 남북간에 모처럼 마련된 경제회담을 성과적으로 마무리 짓고, 동시에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발족시켜 사실상 진행중인 「경제회담」에 대체시킬 것을 주장한 제2차 회담에서의 북한측 입장도 전적으로 수용한 것이었다.

우리측의 이러한 제의에 대해 북한측은 그들이 이미 제2차 회담에서 내놓았던 「남북경제협조공동위원회」 설치 방안을 합의서 형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제2차 회담에서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였다.

결국 이 날 회담에서 보인 쌍방 입장의 차이는, 우리측이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쌍방제안의 공통점과 공동위원회 설치문제를 묶어서 합의하자고 제의한데 반해 북한측은 기구문제만을 합의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측은 그들의 입장이 소극적이고 불합리하다는 것이 내외 여론에 비칠 것을 우려하여 우리측 제의에 호응, 「남북간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추진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는 데 동의해 왔다.

남북 쌍방은 쌍방이 기 제시한 합의서(안)을 연구하여 제4차 회담에서 이 문제에 관해 구체적인 협의를 갖기로 하였다.

이날 우리 대표단이 제시한 「남북간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추진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합의서(안)」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남북간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추진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합의서(안)

쌍방은 호혜와 평등을 바탕으로 상호간에 직접적인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을 희망하고,

쌍방간의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의 추진이 우리 민족의 번영과 복지의 증진과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며,

신의와 성실로 상호간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할 것을 다짐하면서,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과 경제협력공동위원회의 설치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상호간의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지원조치를 취한다.
2. 물자교역 또는 경제협력사업의 당사자는 품목별 또는 사업별로 쌍방이 각각 지정하는 교역기관, 법인, 단체 또는 당국으로 한다.
3. 쌍방간의 교역은 쌍방이 따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되, 다음과 같은 방침에 따라 실시한다.
  - 가. 교역대상품목은 우선 다음 품목으로 시작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수 있다.
    - 1) 남측이 판매한 품목: 철강재, 섬유, 소금, 감귤, 남해수산물(김, 미역, 굴, 멸치 등)
    - 2) 북측이 판매할 품목: 무연탄, 철강석, 마그네슘크링카, 명태, 옥수수
  - 나. 교역량은 쌍방의 수급 사정을 감안하여 교역당사자간 상담을 통해 결정한다.
  - 다. 교역물품의 가격은 국제시장 가격을 고려하여 교역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 라. 교역방식은 제3국 은행을 발행인으로 하는 쌍방 동시개설조건부신용장 방식으로 하되, 쌍방간의 교역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구상교역을 위한 무환거래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 마. 결제업무는 쌍방이 합의하는 제3국 은행이 담당하도록 한다.
  - 바. 결제통화는 영국 파운드화와 스위스 프랑화로 한다.
  - 사. 쌍방은 상호간의 물자교역에 대하여 물자의 대외거래시 부과되는 관세와 이와 유사한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아. 쌍방은 타방으로부터 구매하는 물품에 대한 통관, 검사, 사고처리 등에 있어 일방이 대외 거래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4. 쌍방은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따른 물자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의선 철도를 연결하기로 한다.
5. 쌍방간의 교역물품의 수송방법은 교역물품의 특성, 중량, 운송비 등을 감안하여 교역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해상운송의 경우에 교역물품을 수송하는 선박의 입항, 정박, 하역 및 출항 등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며, 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보장한다.
6. 쌍방은 쌍방 주민의 공동번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그 대상사업은 우선 다음 사업으로 시작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다.
  - 가. 공동 어로구역 설정 사업
  - 나. 지하자원 공동 개발 사업
7. 경제협력사업의 규모, 실시방법 및 조건, 실시시기 등에 관하여는 경제협력사업의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8. 쌍방은 타방의 경제협력사업의 당사자가 자기 지역 내에서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쌍방이 합의할 경우에는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관세 및 기타 조세부담을 감면할 수 있다.
9. 쌍방은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에 따른 해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남측은 인천항과 포항항, 북측은 남포항과 원산항을 각각 개방하고, 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이 진전됨에 따라 다른 무역항도 개방하도록 한다.
10.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에 필요한 통신시설은 신설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확장한다.
11. 쌍방은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의 타방 당사자가 구매예정물품의 검사 또는 협력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하여 자기 지역 또는 해역을 방문하여 검사 또는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2. 쌍방은 타방의 물자교역 또는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된 인사의 왕래 및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교통, 통신, 숙식, 의료 등에 관하여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13. 쌍방은 타방의 물자교역 또는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된 인사가 자기지역 또는 해역에서 입은 신체상의 위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타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14. 쌍방은 이상과 같은 쌍방간의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남북간의 물자교역 및 경제 협력 사업을 협의, 결정하며, 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합의서 서명 후 30일 이내에 쌍방의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5.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가. 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부총리급 공동위원장 1명, 장관(부장)급 부위원장 1명, 당국 및 경제계 인사로 구성되는 위원 5명, 도합 각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장·차관(부장·부부장)급으로 한다.
  - 나. 공동위원회 안에 물자교역분과위원회와 경제협력분과위원회를 두고 필요시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특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공동위원회 또는 각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다.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쌍방 각각 5명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쌍방 공동 위원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하고, 위원은 국장급으로 한다.
  - 라. 공동위원회 산하에 실무 문제를 관장하는 공동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장은 공동위원장이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지명하며, 사무국에는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사무원을 두고 동 사무국의 위치는 판문점으로 한다.
16.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가. 남북간의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관한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나. 남북간의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의 확대, 발전방안을 협의, 결정하며 그 이행을 보장하고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다.
- 다. 남북간의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에 관한 합의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 조정한다.
- 라. 남북간의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역물품의 안전 수송 및 관계자의 자유 왕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 마. 남북간의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한 상호 인사 왕래, 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 정보 및 자료 교환 등을 촉진하고 장려한다.
- 바. 기타 남북간의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7.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 또는 위임된 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협의, 결정하고 그 이행을 보장한다.
- 나.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약정안을 작성하여 공동위원회에 제출한다.
- 다. 소관분야에서 제기된 문제를 협의, 해결하고 필요시 이를 공동위원회에 제기한다.

18. 공동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가.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소집, 회의장소와 안건준비, 회의 진행, 기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 나.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된 견본, 자료 및 서신의 교환을 위하여 공동물품교환소를 설치·운영한다.
- 다. 기타 쌍방간 교역물자 수송, 인적왕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연락업무의 수행과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19.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가.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판문점에서 가지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서울과 평양에서도 가질 수 있다.
- 나. 공동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매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열며 분과위원회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열 수 있다.
- 다.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며 필요시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공개로 할 수 있다.
- 라.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쌍방의 교역 당사자, 경제협력사업 당사자 및 공동사무국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참가시킬 수 있다.
- 마. 기타 공동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협의하여 정한다.

20. 공동사무국의 설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공동 사무국은 이 합의서 서명 후 30일 이내에 설치한다.
- 나. 공동 사무국은 공동 사무국 전용 건물을 판문점 내에 건설할 때까지 평화의 집과 판문각을 각각 임시 사무실로 사용한다.

다. 공동 사무국 전용 사무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한다.

21.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22. 이 합의서는 발효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일방이 타방에 대해 이 합의서의 폐기의사를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1년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간씩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연장된다.

23.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때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이상의 증거로 다음 서명자는 각자의 최고당국자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합의문서에 서명하였다.

1985년 월 일 판문점에서 동등히 정본인 원본 2부를 작성, 교환하였다.

대한민국  
남북 경제 회담 대표단  
수석 대표 김기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북 경제 회담 대표단  
단장 리성록

한편 우리측이 제2차 회담 때에 제의한 북한의 무연탄 30만톤 구입 문제 및 경의선 철도연결공사를 위한 실무회의 개최문제에 대한 북측의 회담을 요구한데 대해, 북한측은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합의된 것이므로 앞으로 공동위원회의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하면 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사업의 조속한 실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쌍방은 제4차 회담을 오는 9월 18일 10시에 갖기로 합의하였다.

다. 국내외 주요반응

1985년 5월 17일에 열린 제2차 경제회담에 대하여 국내 주요 신문들은 회담 개최에 앞서 「남북 관계에 무엇인가 돌파구를 여는 생산적인 회담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논지의 사실을 이해적으로 신고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북측의 돌변한 태도로 실질적인 성과가 없어 제3차 회담 일자만을 합의한 채 끝나자 「북한측의 비약된 주장과 고집이 우리의 기대를 상대적으로 허무하게 만들었음이 크게 유감」이라고 논평하고, 북한측의 태도 변화가 「현행의 실무적인 회담을 격하시키고 유명무실케 하려는 저의에서 나온 것」이라는 강력한 의구심을 표명하였다.

또한 「북한측의 태도 변화는 남북대화를 둘러싸고 평양에서 찬성과반대파간에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관측하고 「평양의 입장이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큰 진전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대화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며 「우리 당국도 평양의 개방론자들이 약세에 몰리지 않도록 배려하고 도와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85년 6월 20일 개최된 제3차 회담에서 우리측이 제시한 「남북간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촉진과 남북 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합의서(안)」에 대하여 「북한측의 제안까지 포괄 수용한 우리측의 도량과 금도」라고 평가하고 북한측이 이에 동의한 것은 「일단 남북 대화에 또 하

나의 진전」이라고 논평했다.

해외 언론들도 「남북 경제회담」의 개최에 대해 「남북한이 경제회담과 교류를 시작하게 되고, 또 이를 통일 촉진의 출발점으로 삼게 되기를 바란다」고 논평하고 특히 3차 회담에서 우리측이 제2차 회담에서의 북한측 제의를 포괄적으로 수용한 「남북한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추진과 남북 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한데 대해 「남북한의 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설치 수락은 북한을 놀라게 한 것이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국내외 주요 언론들의 제2, 3차 경제회담 관련 논평은 다음과 같다.

## 국내반응

### 남북 회담과 인내

동아일보 (1985. 5. 17)

제2차 남북경제 회담이 17일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작년 11월 15일 1차 회담 이후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두 차례나 회담날짜를 연기 통보한 후 6개월만에 개최된 남북경제 전문가들의 만남이다.

더욱이 금년은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지 꼭 40년이 되는 해라는 데서 판문점 남북 경제 회담을 지켜보는 우리의 심경은 착잡하다. 둘로 갈라진지 40년이 되도록 남북한간에는 운동화 한켠레도 서로 교환해 쓰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멀리 「아프리카」 구석구석까지도 찾아다니며 한국의 상품을 팔고 사들이지만 바로 휴전선 넘어 우리 거래들과는 한 봉지의 과자조차 교역할 길이 없다.

우리 나라와 같은 시기에 분단된 동서독의 경우 연간 60억 달러 가까이 교역을 실시하고 있다. 두 지역간의 교역은 수송비를 비롯, 여러 비용을 절감해 양측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두 체제간의 불신과 증오를 해소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시켜 통일의 길을 단축시켜 가고 있다. 동서독은 지난 40년간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절반쯤은 통일을 달성한 셈이다.

17일 판문점서 열린 제2차 남한경제 회담이 동서독에 비해 40년 뒤늦은 감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두 지역간 경제교류의 길이 열릴 것이라 믿는다. 작년 11월의 1차 회담때 남북한은 서로 상대방이 제안한 내용에서 공통점을 몇 개 찾을 수 있었다. 무연탄, 철광석, 명태, 옥수수, 섬유 등이 그런 교류 품목이었으며 남북 철도 연결, 공동 어로구역 설정, 경제협력 위원회 설치 등이 그것이다.

앞으로 남은 일은 이러한 상호 공통제안점들을 찾아내 이견이 없는 것부터 추진해가야 한다. 남북한의 경제 구조 특성으로 보거나 6천만 인구 규모만을 감안해도 두 지역은 상당한 양의 교역을 실시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교역을 천명한 바 있으며 「합영법」을 채택, 자본주의 체제와의 경제교류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1970년대 이후 고질적인 경제 침체속에 허덕이는 북한은 파산을 면키 위해서도 서방의 자본 기술 상품이 요청되고 있다. 북한은 바다 건너 남의 나라에 손을 벌리기보다는 휴전선 넘어 동족과 협력의 길을 찾는 것이 순서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북한의 체제적 특성으로 보아 남북경제 교류가 급진전되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지난 40년의 비극적인 남북관계를 상기할 때 그렇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관계를 일희일비하지 않고 민족사의 긴 안목에서 인내로 지켜보고자 한다. 북한의 성의를 거듭 촉구한다.

### 남북 숭통 트일까

한국일보 (1985.5.17)

오늘 제2차 남북경제 회담이 약 6개월의 우여곡절과 두 차례 무기 연기 등 시련을 거쳐 판문점에서 열린다. 그동안 진통이 컸기에 생산적인 보람에 거는 대망 또한 크다.

이번 경제회담은 그 자체의 목적 설정도 중요하거니와 우선 시기성에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게 한다.

즉 오는 27일에는 제8차 남북적십자 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북한측이 지난 4월 9일자로 제의한 남북 국회회담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갖 제12대 국회의원의 구성을 마친 시점이므로 멀지않아 초당적인 대북회한이 전달될 것이다. 휴전선이라는 분단의 장벽을 넘나드는 대화의 숨통이 울들어 처음으로 트이기 시작한 셈이다.

다행히 작년 11월 15일에 열렸던 첫 경제회담은 상당히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으며, 몇 가지 고무적인 「견해일치」와 「의견접근」을 보여주었다. 쌍방이 물자교역과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으며 상호교역 가능 품목의 제시에서도 폭넓은 이해 성립을 관측할 수 있었다. 또 전용통신 회선 지정, 철도 연결, 경제협력위 설치, 공동 어로구역 설정, 자연자원 공동개발 등에 관한 원칙적 견해 접근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하기야 미묘한 함축을 담은 의제 문제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 이상으로 이번 경제회담에 선행된 북한측의 몇가지 동정에서 석연찮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가령 평양의 선전 매체들은 국회회담 제의 이후 경제회담이나 적십자회담이 마치 뒷전으로 밀리거나 격하된 것 같은 인상을 퍼뜨린 점이 유감스러웠다. 게다가 북한측 일부 고위당국자는 그 국회회담까지 「3자회담」 유도용임을 외신 기자들에게 시사했다니 말이 아니다. 북한측의 군사적 동향도 심상치는 않다.

하나 우리는 조국광복 40주년에 접어든 마당에서 민족의 자치능력 증명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명심한다. 그 정도는 분단 고통의 경감 내지 해소와 평화통일로의 착실한 접근을 위한 남북한 직접대화의 알맹이 있는 적립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점 북한측은 깊은 성찰이 있어 마땅하다.

바깥 세계의 눈도 의식함이 좋겠다. 예컨대 15일 동경에서 폐막된 「아시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하여」라는 주제하의 5개국 학술심포지엄의 견해일치를 들게 된다. 한·일·미·소·중공 등 권위있는 대표들이 참가한 그 회합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대한 한결같은 희망을 표명하면서 남북한간의 직접대화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북경제회담·적십자회담을 비롯, 남북간 당국자 및 민간인들의 교류확대에 기대」한다는 것이 그 합의 내용이다.

우리는 줄기찬 거래의 흥망과 국제환경의 진운을 아울러 감안하면서 북한측 역시 광복 40주년의 남북회담에 심기일전한 성의와 진지성을 증명하도록 촉구해 마지 않는다.

#### 경제회담 기피하는 북한

중앙일보 (1985.5.18)

북한측 사정으로 두차례 연기됐던 제2차 경제회담이 6개월만에 17일 재개됐으나 아무런 진전을 못본채 끝났다.

문제는 북한측이 1차 회담의 합의대로 회담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거부한데 있다.

작년 11월 20일의 첫 회담에서 북한은 스스로 판매가능 품목과 구입희망품목 및 그 수송수단으로서 철도연결·항구개항 문제 및 결제방식까지 제시, 상당한 합의에 도달했었다. 또 2차 회담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구체화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태도를 돌변, 실질적인 토의의 계속에 불응하고 그대신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조공동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그것은 현행의 실무적인 경제회담을 격하시키고 유명무실케 하려는 저의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다. 북한은 적어도 현재로는 더 이상 경제회담을 진전시키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같은 북한의 의도는 온당치 못한 이유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두 차례나 회담을 연기한 사실과 남북국회회담을 제의한데서도 이미 노출됐다.

북한은 실무급 회담보다는 실권을 가진 높은 급의 권위있는 회담을 갖는 것이 통일을 위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생산적 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총리급 경제위원회와 국회회담을 제의했다.

이같은 수법은 남북대화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북한의 상투적인 논법이었다. 그들은 지난 몇 차례의 적십자회담과 체육회담에서도 궁지에 몰리거나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으려 할 때는 그같은 하향적이고 일괄적인 접근방법을 들고 나왔다.

그같은 방식은 복잡하고 어려운 통일문제는 기능적인 세부 문제를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상향적이고 점진적인 우리 방식과 충돌, 대화는 좌초되고 말았다.

만일 북한이 진실로 남북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제의한 남북정상회담에 먼저 응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북한측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아직 없다는데 있다. 1차 회담때만 해도 북한측은 진지하고 성의있어 보였다.

북한의 태도변화는 남북대화를 둘러싸고 평양에서 찬성과 반대파 간에 아직 화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당초 우세를 보였던 개방적이고 온건한 찬성파가 약화되어 지금은 폐쇄적이고 강경한 반대파가 우세하거나 아니면 양파가 팽팽한 균형을 이루어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김일성이 아직 확고한 소신이 없거나 아니면 단독적인 결정권을 못 갖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대화반대파의 입장이 강화된 것은 북한이 아직 우리와 교류할 태세나 자신이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평양측이 합영법을 만들어 서방의 자본을 끌어들이려 하면서도 중공식의 경제특구 건설이나 우리와의 경제교류를 거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아직은 우월한 자유세계로부터 물결을 흡수·감당할 힘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회담이 중단되지 않고 6월에 3차 회담을 갖기로 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평양의 입장이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큰 진전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대화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대화가 진전되려면 우선 평양의 개방론자들이 약세에 몰리지 않아야 한다. 이 점은 우리 당국도 항상 배려하고 도와줘야 할 일이다.

#### 남북경제회담을 보는 눈

경향신문 (1985.5.21)

20일의 남북경제 회담에서 우리측이 남북간의 물자교역과 경제협력을 협의 결정하고 그 이행을 담당하는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역 제의한데 대해 북한측이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한 것은 일단 남북대화에 또 하나의 진전으로 평가할만한 일이다.

이번에 우리측이 내놓은 제안 가운데는 1차 회의에서 양측이 제시한 교역 대상물자와 2차 회의에서 북한측이 제시한 남북한 경제협조 공동위원회 설치안이 모두 포용된 것으로서 북한측이 이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었다. 현실적으로 남북한 사이에는 지난 달에 있었던 적십자회담과

앞으로 열리게 될 남북국회회담, 그리고 8월 15일 전후로 예정된 남북한 상호방문단과 예술단의 교류 등 여러 개의 창구가 열려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서로간의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거나 이미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이에 대해 다소간의 불만을 느끼고 있다. 가장 실질적인 문제가 합의될 것으로 기대했던 경제회담조차 뚜렷한 명분없이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로 시간을 끌고 있으며 더우기 다음 회의를 3개월 후인 9월로 넘긴 점에 대해서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측은 대승적인 입장에서 지난 2차 회담에서 북한측이 엉뚱하게 내놓았던 「쌍방의 부총리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협의·이행기구로서의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구성안」을 받아들이는 형식의 합의서안을 이번 회담에서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 1·2차 회담에서 우리측이 제의했던 교역품목·교역량·가격·거래당사자·거래방식·결제업무방식·결제통화·관세·수송 문제 등 물자교역에 관한 문제들도 아울러 제시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경제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지연시킬 여지를 없애게 한 것이다.

북한측이 경제회담을 비롯한 각종 회담에 임하고 있는 것은 남북교류를 위한 실질문제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국제적으로 실추될대로 실추된 위신을 회복하고 대서방접근의 한 방편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는 그와 같이 뻔한 그들의 속셈을 들여다 보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형식이건간에 남북간의 「대화」는 긴장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과 구체적으로 실익이 없더라도 대화를 계속함으로써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넓혀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갖고 끈기있게 대화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회담에서 뿐만 아니라 지난번 적십자회담에서도 「예술단 교환」이라는 엉뚱하기 이를데 없는 제안까지도 받아들이는 포용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의 포용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북한측은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과 관계당국에서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대화의 기회를 증대시켜가면서도 그들의 잔꾀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고 세심한 경계와 배려를 잊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한다.

#### 남북 경제회담 스통 트이나

한국일보 (1985.6.21)

20일 상오의 제3차 판문점 남북경제 회담은 비록 형식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같은 문제에 합의한 사실은 특기할 만한 일로 이를 환영한다.

즉 우리측은 남북간의 물자교역과 경제협력을 협의 결정하고 그 이행을 담당하는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의한데 대하여 북한측은 원칙적으로 이에 합의한 것이다. 쌍방은 또 다음 회의는 9월 18일에 같은 곳에서 열자는 데도 합의한 것이다.

제1차 회의에서 양측이 제시한 교역 대상물자와 제2차 회의에서 북측이 불쑥 내민 남북경제협조 공동위원회 제안은 이번의 우리측 제안 속에 죄다 발전적으로 흡수된 셈이다. 우리는 어른스러운 우리측의 그와 같은 금도 표시가 남북경제회담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인식하고 흡족하게 생각한다. 이번의 우리측 제안은 작년의 수재물자 제의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조성한 남북간의 긴장완화 및 화해지향적인 우리측 도량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도량과 금도는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통일을 향한 한국의 간절한 바람을 행동으로 표시하는 확실한 징표인 것이다.

한 세대를 넘는 기나긴 세월동안 뽕뽕 얼어붙었던 남북간의 철벽과도 같은 냉기를 녹이자면 앞으로 수없이 많은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그 앞길은 험난하고 요원하다. 그러므로 경제관

계에서 남북이 이제 겨우 협력위원회 설치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하여 성급한 기대를 거는 것은 금물이고 인내심을 가지고 조심스레 그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천리길도 첫 걸음에서 비롯한다는 속담대로 이번의 약간의 합의가 남북긴장 완화와 평화통일의 대장정 도정에 보탬을 할 것임에는 틀림없다. 우리는 이것을 값진 성과로 평가하면서 석달쯤 뒤에 열릴 제4차 회담에서는 더욱 더한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이 기회에 북쪽의 동포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유구한 민족적 역사의 흐름을 정상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우리와 동참 협력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이다. 경제회담 외에 이산가족 재회와 결합을 위한 적십자회담에서, 남북국회회담에서 그리고 중단된 체육회담의 재개 노력에서 그렇게만 된다면 민족의 진정한 해방과 통일을 향한 대업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룩할 것임을 의심치 아니하는 것이다.

#### 해외반응

##### [미국]

Washington Post (1985.5.18)

- 남북한측이 공히 교역과 합작개발 사업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정치적 의견 대립에 관한 토의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의견 대립은 경제회담을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
- 한국측으로서는 북한과의 교역은 한국의 대단한 경제성장을 북한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 [영국]

Financial Times (1985.6.21)

- 남북한은 쌍방 교역, 경제협력에 한발 더 다가섰으며, 남한의 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설치 수락은 북한을 놀라게 한 것이 분명하다.

##### [일본]

마이니찌 신문 (1985.6.21)

- 남북경제 회담에서의 합의는 한국측의 양보에 의해 실현을 보았으나 세부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쌍방의 입장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한국측의 대화 계속 방침이 관철되는 한 남북대화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동경신문 (1985.6.22)

- 남북이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를 궤도에 올려 구체적 진전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유연한 자세가 보임은 밝은 징조이며, 이것이 지속된다면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이루어짐은 확실한 것이다.

##### [홍콩]

Asian Wall Street Journal (1985.5.20)

- 남북한은 최소한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도 넘어야 할 엄청난 장애에 직면해 있다. 쌍방은 서로 너무나 거리가 먼 제안을 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교류를 감독할 복잡한 위원회

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나선데 대해 한국은 실제적인 입장을 취해 구체적 품목의 교역을 제안했다.

- 남북한이 교역에 합의할 경우 한국이 현재의 정치적 여건하에서는 불가능한 중공과의 공개적인 무역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북한으로서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 북한 경제에 필요한 서방 기술의 도입, 미국과의 관계 개선 등 그동안 북한이 모색해 온 여러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중공]

신화사 통신 (1985.5.18)

- 남북한 경제회담은 「긴장완화를 향한 새로운 일보」라 할 수 있다.
- 남북한이 경제회담과 교류를 시작하게 되고 또 이를 통일축진의 출발점으로 삼게 되기를 바란다. 그것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의 보장을 위해서도 유익한 일이다.

[말레이시아]

성주일보 (1985.5.17)

- 남북한이 교역과 합작사업을 시작하면 그것이 서로간의 오랜 불화, 오해 및 불신을 제거하는데 어느 정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 사실이다. 이는 또 남북한이 보다 큰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 남북한간의 화해는 한민족에게는 확실히 하나의 축복이며, 동시에 그것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요인들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상호협력이 실현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진지하게 모색하게 되기를 바란다.

## 2.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 가. 성립배경

북한 적십자회측이 우리측의 연례적인 「팀 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1985년 1월 22일부터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한적측의 거듭된 대화 재개 촉구 불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한적십자사 유창순 총재는 1985년 3월 25일, 북적 중앙위 손성필 위원장 앞으로 재차 전화 통지문을 보내고 북적측의 일방적 연기통보와 불참으로 유산된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였다.

유 총재는 동 통지문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은 그 어떠한 이유나 변명으로도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제8차 남북 적십자 본회담을 5월 15일 10시에 서울에서 개최하고, 회담 일정을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로 할 것을 제의했다.

유창순 한적 총재가 북적 중앙위 손성필 위원장 앞으로 보낸 전화통지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성필 귀하

나는 지난 1월 23일 서울에서 열기로 쌍방간에 합의한 제8차 남북적십자 회담이 귀측의 일방적 연기 통보와 불참으로 말미암아 유산된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온 겨레는 12년만에 모처럼 재개하기로 된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연기되고 있는데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을 찾아주고 그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적십자인들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일입니다.

따라서 남북 적십자 회담은 그 어떠한 이유나 변명으로도 더 이상 연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나는 제8차 남북 적십자 회담을 1985년 5월 15일 10시에 서울에서 개최하고 회담일정을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로 할 것을 귀측에 제의하는 바입니다.

나는 우리측이 제8차 남북 적십자 회담의 주최측으로서 귀측 대표단의 숙소 등 회담 개최에 따른 제반사항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회담 일정에 대한 귀측의 의견을 회담 개최 1개월 전까지 회신해 주기 바랍니다.

1985년 3월 25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유창순

한편 북한 적십자회측은 한적의 이같은 집요한 대화 재개 노력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자, 1985년 4월 4일 손성필 위원장 명의의 전화 통지문을 보내와 한적의 회담개최 제의에 동의하면서, 회담일자는 5월 28일로 하자고 수정 제의해 왔다.

이에 대해 한적도 같은날 북측의 수정제의에 동의하는 회신을 보냄으로써,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이 5월 27일부터 5월 30일 (3박 4일간)에 걸쳐 서울에서 열리게 되었다.

이어 쌍방 적십자사는 세차례 (5월 20일, 5월 23일 및 5월 25일)에 걸쳐 사전 연락관 접촉을 갖고 본회담의 일정 및 기타 실무문제를 협의하고, 회담에 참가할 대표단명단을 교환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한적십자사 대표단

(대표)

- 수석대표 : 이영덕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 대 표 : 조철화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 대 표 : 송영대 (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협의위원회)
- 대 표 : 이병호 (대한적십자사 홍보자문위원)
- 대 표 : 정용석 (대한적십자사 청소년자문위원)
- 대 표 : 이준희 (대한적십자사 사회사업자문위원)
- 대 표 : 이병웅 (대한적십자사 총무부장)

(자문위원)

- 자문위원 : 조덕송 (조선일보 논설위원)
- 자문위원 : 김동환 (일천만 이산가족 재회추진위원회 이사·변호사)
- 자문위원 : 이경숙 (숙명여대 교수)
- 자문위원 : 정시성 (대한적십자사 회담운영위원)
- 자문위원 : 안병준 (연세대 교수)
- 자문위원 : 이상우 (서강대 교수)
- 자문위원 : 한승주 (고려대 교수)

북한적십자회 대표단

(대표)

- 단 장 : 이종률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부위원장)
- 부단장 : 서성철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상무위원)
- 대 표 : 한연수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상무위원)
- 대 표 : 박영수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동포사업부장)
- 대 표 : 김완수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문화선전부장)
- 대 표 : 박동춘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국제부 부부장)
- 대 표 : 김창현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조직계획부 부부장)

(자문위원)

- 자문위원 : 강석승(노동당 중앙위 위원·부장)
- 자문위원 : 김석준(사회민주당 중앙위 부위원장)
- 자문위원 : 최희준(천도교 청우당 중앙위 부위원장)
- 자문위원 : 임춘길(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자문위원 : 김영남(직업총동맹 부위원장)
- 자문위원 : 김창룡(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중앙위 부위원장)
- 자문위원 : 박재로(조총련 중앙상임위 부의장)

이에 앞서 우리 정부는 5월 18일, 정석모 내무부장관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제8차 회담에 참

가할 북측 대표단, 수행원 및 취재 기자들이 남북을 왕래하고 우리측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신변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쌍방간의 사전접촉과 협의를 거쳐 1985년 5월 27일 정오 북측 대표단 84명이 판문점을 경유, 서울에 도착함으로써 남북적십자 본회담이 중단 12년만에 다시 열리게 되었다.

## 나. 경과

### ㉠ 제1일 회의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제1일 회의가 1985년 5월 28일 오전 10시 쌍방 대표단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쉐라톤」 호텔 「컨벤션」 센터 1층 회의실에서 개막되어 1시간 35분간 공개리에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적십자사 이영덕 수석대표의 개회선언과 인사로 시작, 북한적십자회 이종률 단장의 인사, 북측 자문위원 강석승 및 한적 조덕공 자문위원의 축하인사에 이어 쌍방 수석대표의 기초연설이 있었다.

한적 이영덕 수석대표는 기초연설을 통해, 남북적십자 회담의 목적은 「하루빨리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재회의 길을 열어주고 이를 통해서 남북간에 민족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궁극적으로 조국의 평화통일에도 이바지」 하는데 있음을 강조하고 동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쌍방이 본회담과 예비접촉을 통해 이미 합의·확인한 바 있는 회담의 의제, 의제토의에 적용할 원칙 및 사업추진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재확인하였다.

#### (1) 5개항의 회담의제

-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
-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방문과 자유로운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
-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서신거래를 실시하는 문제
-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문제
-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

#### (2) 의제토의의 원칙

- 7·4공동성명 정신(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적십자원칙에 기초하여 이산거리의 고통을 풀어주고 통일의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
- 의제 해결에 있어서 민주주의 원칙과 자유로운 원칙, 남북공동성명 정신과 동포애, 그리고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철저히 구현

#### (3) 사업추진기구

-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와 「남북적십자 판문점 공동사업소」 설치

또한 이 수석대표는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는 의제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토의·해결」 하고 「합의된 사업을 하루 빨리 실현」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입장에서 5개항의 의제토의와 관련한 한적측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국제적십자의 이산가족찾기 사업의 관례에 따라 쌍방 적십자가 이산가족 찾기 의뢰서와 회보서를 주고 받음으로써 이산가족들의 생사와 주소를 알아내고 알려주는 사업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방문과 자유로운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방문과 상봉의 기간, 장소, 회수 등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방문의 경우에는 초기에 많은 희망자가 한꺼번에 몰릴 것이 예상되므로 대규모의 단체방문단을 상호 교환하도록 하고, 상당한 수의 보도 인원들이 수행하여 취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봉의 경우에는 관문점에 면회소를 설치하여 상봉하거나 또는 본인들이 원하는 편리한 장소에서 상봉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째,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서신거래를 실시하는 문제」입니다.

서신거래는 편지·엽서 등 본인이 편리한대로 하며 전화·전보 등의 통신수단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통신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며 배달업무는 원활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미 제4차 본회담에서 합의한 바 있는 「남북적십자 관문점 공동사무소」가 설치되면 거기에서 남북의 우편물 교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네째,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문제」입니다.

우리는 통일이 되기 이전이라도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이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가족들과 재결합하여 함께 살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의제 제5항에는 의제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에 포함되지 않은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된 인도적 사업들을 쌍방이 협의해서 더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돌아가신 분들의 귀품과 귀골의 송환, 분묘의 이장 등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된 인도적 사업을 예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 이영덕 수석대표는 이상과 같은 입장에 따라 5개항 의제의 실천방안을 조속히 협의, 해결할 것과 늦어도 8월 15일까지는 제4차 회담에서 사업실행 기구로 합의한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와 「남북적십자 관문점 공동사무소」를 발족, 이산가족 찾기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아울러 5개항 의제의 실천방안이 모두 합의되기 이전이라도 이산가족 찾기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8월 15일을 기해 일정규모의 제1차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을 구성하여 상호교환할 것도 아울러 제의하였다.

한편 북적측은 첫 발언을 통해 이산가족, 친척들의 고통을 한시바빠 덜어주기 위해서는 「과거의 진부한 방식을 버리고 참신한 새로운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쌍방이 이미 합의한 바 있는 5개항의 의제를 통털어 일괄 토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북적측은 자유내왕을 하기만 하면 기타 인도적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하면서 5개항의 의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선결적이고 중핵적인 문제」인 이산가족, 친척들의 자유내왕 문제를 우선 토의할 것을 주장하고 이와 관련한 절차, 범위, 편의 및 안전보장 등의 구체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북적측은 남북적십자 회담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해방 40돐을 맞이하는 금년 8월을 기해 쌍방 적십자사 총재들이 각기 적십자 회원들로 구성된 100명 정도의 예술단을 대동하고 상호 방문하여 전통적인 민속 가무를 기본으로 하는 축하공연을 가질 것도 아울러 제의하였다.

이날 제1일 회의는 한적측이 이산가족 찾기 사업과 관련하여 그간 쌍방이 합의한 사업원칙 등을 토대로 의제 문제를 하나하나 토의·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데 반해, 북측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자유왕래가 실현되면 다른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주장하면서 의제의 일괄토의와 자유왕래 문제의 선결을 고집하였다.

이같은 북측의 주장은 의제 5개항을 사실상 없애고 자유왕래를 새로운 의제로 합의하자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었다.

이날 제1일 회의는 이같이 상반된 서로의 입장만을 피력한 채 실질 토의없이 종료되었다.

한편, 자유 왕래와 관련, 북측이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자유내왕 절차

- 내왕자는 쌍방 적십자 단체 발행 신임장 제출
- 내왕자는 출발 1개월 전 대상자와 행선지 통지
- 내왕자의 행선지는 헤어진 때의 가족, 친척이 살던 곳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변경가능
- 내왕자의 체류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시 연장가능
- 내왕자의 군사분계선 통과지점은 판문점, 철원으로 하고 합의에 따라 늘일 수 있음

#### (2) 내왕자 범위

- 가족은 흩어질 당시의 가족과 출생자녀
- 친척은 방계에서 8촌, 처·외가는 4촌까지.
- 그밖에 요구하는 친척도 포함.

#### (3) 편의 및 안전보장

- 판문점 및 철원 공동사업소 및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 설치
- 숙식, 교통, 통신 등 편의는 상대측 적십자 단체가 보장
- 긴급구제, 의료상 방조 필요시는 상대측 적십자 단체가 무상 봉사
- 안전보장은 적십자 단체들의 중개하에 쌍방당국이 대책 수립
- 구체적 토의는 별도로 함

### ② 제2일 회의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제2일 회의가 제1일 회의에 이어 5월 29일 오전 10시부터 12시10분까지 같은 장소에서 속개되었다.

이날 회의는 한적측 이영덕 수석대표의 개회 선언에 이어 첫날회의에서 의제 토의 및 사업실시 방법과 관련하여 쌍방이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질토의에 들어갔다.

이영덕 수석대표는 첫 발언을 통해 제1일 회의에서 쌍방이 내놓은 제안 속에 견해의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공통점도 많았다고 지적하고 먼저 북측이 제기한 자유왕래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의제 제2항으로 쌍방이 이미 합의한 사항이며, 기 합의한 문제에 대해서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북측이 자유 왕래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가장 선결적이고 중핵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과거 제3차 본회담에서 이른바 법률적 조건과 사회적 환경의 개선이 의제 토의의 선결문제라고 한 귀측의 주장을 다시 연상시켜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거와 같

은 정치적 전제조건을 제기하거나 우리측의 내부 문제를 시비하기 위해 자유왕래를 또 다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문제는 언제든지 합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북측의 솔직한 답변을 촉구하였다.

또한 대한적십자사측은 첫날 회의에서 북측이 제안한 예술공연단 교환방문 제의를 수용, 금년 8월 15일을 기해 이산가족의 고향방문단 교환과 함께 예술공연단을 교환할 것과 이와 아울러 일 정규규모의 쌍방기자들이 수행할 것을 제의하고 북측이 동의한다면 7월 15일 판문점에서 실무자 접촉을 갖자고 제의하였다.

이영덕 수석대표의 첫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쌍방은 어제 첫날 회담에서 각기 인사말과 기초발언을 통해 하루빨리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재회의 길을 열어주고 이를 밑거름으로 하여 민족적 신뢰와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궁극적으로 조국의 평화통일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새로운 결의를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쌍방은 의제토의 문제와 사업의 실시방법에 관해서 각기 구체적인 제안들을 내놓았습니다.

나는 쌍방이 내놓은 제안 속에 아직도 견해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회담 진행 상황을 보도를 통해서 지켜본 이산 가족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남북의 온 겨레들도 회담 진전을 대체로 만족스럽게 평가하리라고 믿습니다.

우선 기초발언을 중심으로 쌍방의 입장과 제안 내용 중에서 일반적 공통점을 정리해 본다면,

첫째, 5개항의 의제 토의 방법에서 쌍방은 여러 관련 사업을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일괄해 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우리는 의제 토의에 일정한 격식과 제한을 두지 말고, 자유롭게 토의를 진행하여 8·15광복절 이전에 모든 사업이 타결되기를 희망합니다.

둘째, 쌍방은 모든 이산가족 찾기 사업에서 본인의 자유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사업의 실시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제공을 보장하는 문제에도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모든 이산가족 찾기 사업은 남과 북의 두 적십자사가 해당지역에서 책임을 지고 주관하며, 쌍방 당국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 적십자사의 중개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귀측이 주장한 자유왕래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이것은 1970년대 초 남북적십자 예비 회담 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문제이며 오랜기간 쌍방간에 진지한 협의를 거쳐 5개항의 의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쌍방의 의견을 그 속에 충분히 수렴 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이 의제 2항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자유로운 상봉」을 실시하는 문제입니다.

귀측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의제 2항의 합의된 사실은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이 서로 방문하거나 상봉을 희망할 경우, 남과 북의 두 적십자사는 그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겠다는 것을 사실상 서로 약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는 것은 쌍방이 합의한 당연한 문제를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조차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에 귀측의 제의에서 주목하는 것은 귀측이 「자유왕래」 문제가 의제 전체에 공통적으로 관계되고, 이산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서 가장 선결적이고 중핵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귀측의 이같은 주장은 과거 제3차 본회담에서 이른바 「법률적 조건과 사회적 환경의 개선」이 의제 토의의 선결적 문제라고 한 귀측의 주장을 다시 연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측이 인도주의 사업에서 과거와 같은 정치적 전제 조건을 제거하거나 우리측의 내부 문제를 시비하기 위해 자유 왕래 문제를 또다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문제는 언제든지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한 귀측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나는 어제 첫날 회의에서 의제 5개항의 실천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 해결함으로써 늦어도 금년 8월 15일까지는 실제로 이산 가족 찾기 사업에 착수할 것을 바라는 우리측 입장을 밝히면서 금년 8월 15일을 기하여, 제1차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을 상호교환할 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측이 내놓은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의 상호교환 제의는 5개항 의제의 실천방안이 모두 합의되기 이전이라도 이산 가족 찾기 사업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사업을 더욱 촉진시켜 나가자는데 참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측은 어제 첫날 회의에서 의제 5개항과 관련한 발언을 통해 남북의 이산 가족들간에 『자유 왕래를 하기만 하면 인도적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금년 8월에 쌍방 적십자총재가 100명 정도의 예술단을 대동하고 상대측 지역을 상호 방문하여 축하 공연을 하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귀측의 취지를 고려하여 우리측이 제의한 남북한 이산가족의 고향방문단 교환과 함께 예술공연단의 교환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 일정규모의 쌍방 기자가 수행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며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귀측이 동의한다면 오는 7월 15일 판문점에서 실무자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합니다.”

한편 북적 이종률 단장은 가족·친척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기 위해서는 5개항의 의제를 일괄 토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5가지 의제들에 공통적으로 관계되고,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서 가장 선결적이고 중핵적인 방도는 자유왕래」임을 내세워 이 문제에 대해서만 합의할 것을 되풀이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이영덕 수석대표는 자유 왕래는 의제 5개항의 사업 실현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정신임에 틀림없으나 자유 왕래만이 인도주의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선결적이고 중핵적인 조건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북측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는다면 자유왕래 문제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임을 거듭 밝혔다.

이어 한적측은 과거 북측이 우리의 「법률적 조건·사회적 환경」이 『자유왕래』를 저해한다고 시비함으로써 의제 토의가 교착되었고 12년간 회담이 중단되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우리측의 내부 문제를 이유로 인도주의 사업을 회피해 온 과거의 북측의 무성의한 자세가 또 다시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한데 대해, 북측은 1970년대 초에 동 문제를 거론한 그들의 입장이 합리적이었다는데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변하였다.

또한 북적측은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단을 함께 실시하자는 한적측의 제의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예술공연단과 고향방문단은 별개의 문제이며 자유왕래만 실현되면 고향방문단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하면서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돌연 태도를 바꾸어 동 제안

에 동의하면서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쌍방실무대표 접촉을 이날 중으로 가질 것을 제의해 왔다.

이에 한적 대표단은 북측의 태도로 미루어 의제 5개항의 전반적인 사업실시에 대한 토의를 더 진행하더라도 생산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9차 회담에서 계속 토의하기로 하고, 쌍방간에 의견일치를 본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 교환방문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난후 별도 실무접촉을 갖고 절차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고 2일간의 회담을 모두 끝마쳤다.

제9차 본회담은 1985년 8월 27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③ 실무접촉

쌍방 대표단은 제2일 회의의 합의에 따라 5월 29일 저녁과 5월 30일 아침에 두 차례의 실무접촉을 가졌다.

각기 2명씩의 대표가 참석, 비공개리에 진행된 동 접촉에서 쌍방은 금년 8월 15일을 기해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을 실시하는데 합의하고, 구체적인 절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대표 접촉을 7월 15일에 판문점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적측 송영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실무접촉의 합의사정은 다음과 같다.

- (1) 쌍방은 금년 8월 15일 광복절 40주년을 전후해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그 왕래 절차, 방문단 규모, 체재 일정 등 구체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오는 7월 15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쌍방 실무대표들의 접촉을 갖기로 한다.
- (2) 실무대표 접촉에서 쌍방의 대표 각 3명과 수행원 각 3명이 참가하기로 한다.
- (3) 동 실무 접촉에서는 제10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일자를 함께 협의하기로 하였다.
- (4) 쌍방 실무 대표 접촉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다. 성과

#### ● 12년만의 이산가족 찾기 회담 재개

1985년 5월 27일부터 5월 30일(3박4일)사이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본회담은 1973년 7월 평양에서의 제7차 본회담 이후 12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이산가족 찾기 회담이 다시 열렸다는 사실 자체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도적 차원에서나마 사상과 이념, 체제의 차이를 뛰어넘어 남북으로 흩어진 1천만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남북적십자 본회담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열리게 된 것은 남북간의 분단과 대치상황을 극복하고 민족적 신뢰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시발점의 하나란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 ● 남북간의 인적 교류재개

북한측은 작년 이래 남북체육회담, 수재물자 인도·인수를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남북경제 회담, 남북적십자 본회담 재개를 위한 예비접촉 등 관문점에서의 회담에 호응해 나왔으나 84명의 대표단과 기자단이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면서 진행되는 적십자 본회담이 재개된 것은 그것 자체가 제한적 범위에서나마 인적 교류를 의미하는 것이다.

●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에 합의

우리측은 과거 이산가족 찾기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서 남북한의 방문단 상호 교환, 노부모 문제의 우선적 해결 등을 제의한 바 있지만, 12년만에 열린 이번 제8차 본회담에 대한 이산 가족들의 기대가 새로운 만큼 보다 포괄적인 이산 가족 고향 방문단을 오는 8월 15일을 전후하여 교환 방문할 것을 새로이 제의했다.

이에 대해 북한측이 제의한 쌍방 예술공연단의 상호 교환 문제가 이산 가족 찾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은 북한측의 주장을 수용하여 예술공연단 상호교환 문제를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상호교환 문제와 함께 추진할 것을 제의하고 남북 쌍방이 이에 합의함으로써 분단 40년만에 처음으로 이산 가족이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을 터 놓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 적십자회담은 12년의 중단 끝에 이제 겨우 새출발을 한 것이며, 지난날의 회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제8차 회담에서의 북한측 태도만으로 이산 가족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과연 풀릴 수 있을 것인지는 속단할 수 없으며, 회담진전을 위해 성실한 노력을 하면서 그들의 태도를 좀더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국내외 주요 반응

중단 12년만에 재개되는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에 즈음하여 도하 각 신문들은 한결같이 이산 가족 문제의 심각성과 적십자회담 본연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지난 1970년대 초의 「실망과 좌절에 빠졌던 기억」을 불식시키고 「순수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40년 동안 피맺힌 이산 가족들의 마음을 풀고 웃을 수 있는 재회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남북적회담이 성과있기를 기대한다는 논지의 사실을 실었다.

그러나 1985년 5월 28일, 29일 양일간 회담이 한적측의 점진적·현실적 실현 방식의 제의에 대해 북한측이 급진적·총괄적 방식을 고집함으로써 한적측이 보여준 신축적·수용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북적측의 무성의로 아무런 실질적 결실을 맺지 못하고 끝난데 대해 「잔치」, 「전시·홍보용」이라는 등의 혹평을 하면서도 회담 막바지에서 금년 8월 15일 양측이 예술단을 포함한 고향 방문단의 상호 교류를 추진할 것을 합의한 사실에 대하여 「하나의 커다란 진전」, 「민족 동질성 회복의 중요한 모티브」, 「천금같은 합의」 등으로 평가하고 「남북 대화의 환경을 개선할 것」이며 「회담을 더욱 촉진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지나친 기대나 낙관만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표현하고 「공허한 말, 들뜬 잔치보다도, 엄숙한 사명감에 치밀하고 실속있는 실무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 주요 언론들도 제8차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에 대하여 「북한 대표가 서울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획기적인 사건」이며 「오랜 긴장, 대결에 의미심장한 해빙」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대화 진전의 가장 큰 장애로 지적되어 온 상호 불신에 대해 「불신의 늪」이 너무 깊지만 「한국의 민족주의가 사상과 정치체제의 차이로 굴복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북한측의 대화 자세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의문스러운 제안」을 내놓고 「이산가족 재

회문제 자체를 타결시키려는 성의보다는 대외적인 이미지 구축 및 국회회담 유도 등의 목적에 이를 이용하려 한다」고 지적하면서, 8·15 상호방문단 교류 합의는 「이번 회담의 최대 수확」이지만 과거의 불행한 전례로 보아 금후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북한측 자세 여하에 달려 있다」고 결론지었다.

제8차 남북 적십자회담을 전후로 한 국내외 주요 언론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 국내반응

### 북적대표단을 맞이하며

경향신문(1985. 5. 27)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을 갖기 위해 북적대표단 등 일행 84명이 27일 서울에 왔다.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이번 회담이 열리게 된 것은 1천만 이산가족의 한과 6천만 겨레의 열망이 응결된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12년만에 북적대표들을 다시 맞이하는 우리의 감회는 깊다. 우리가 그들을 각별히 친절하게 맞이하며 그들의 손을 한층 힘주어 잡는 것은 이번만은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남북간에 인도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염원 때문이다.

지난 1972~1973년 우리는 풍선처럼 부풀었던 기대를 걸고 있다가 하루 아침에 실망과 좌절에 빠졌던 기억을 지울 수가 없다. 당시의 신문 지면을 들추어 보면 당장 세상이 변하여 남북에 흩어져 있는 이산 가족들이 금방이라도 만나게 될 것 같은 느낌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때 북적대표들이 서울에 와서 남기고 간 말들도 날날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당시 김태희 단장은 「분단의 벽」을 실감하는 듯 『7·4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민족적 단결과 화해가 급선무』라고 역설했다. 또 이번 부단장으로 내려 온 서성철은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사명과 책임을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주장준은 『사상과 이념, 제도를 초월한 민족의 대단결』을 주장했으며 궁상호는 「핏줄이 만난 감격」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것은 한결같이 민족의 동질성을 발견한 실토였으며 분단의 아픔을 통감하는 절규로 들렸다. 우리는 그때 그 사람들의 말을 다시금 되새기고 싶다.

그것은 또한 적십자 정신의 적나라한 표현이기도 하다. 「박애」와 「인도」정신은 인간의 본성인 것이다. 따라서 남북적십자 회담이야 말로 이념과 체제의 장벽은 물론, 수십년 동안에 쌓여온 적대감정을 초월해서 이루어진 값진 대화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 이번 회담의 의제가 이산가족들간의 생사 확인 문제를 비롯해서 상호 방문과 상봉, 서신 왕래, 재결합, 기타 인도적인 문제 등 5개항으로서 지난 7차 회담때까지 상호 합의된 내용들을 그대로 다루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지난번 남북경제 회담이 그러했거니와 대부분 전례에 비추어 의제가 엉뚱하게 변질된다거나 다른 전제조건이 붙게 되면 대화는 공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적십자 조약에서도 심인사업 조항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니와 현재 남북한 사이에 가로놓인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다름 아닌 이산가족의 문제다. 민족분단의 비극도 따지고 보면 원천적으로 이산 가족에 있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민족 통일의 길도 어렵지 않게 열릴 수 있으리라 믿는다.

따라서 이미 합의된 문제들을 논의하는데는 어떤 이론이나 전제조건이 붙을 수 없다. 경제회담에 서와 같은 정치성이 개입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이번에만은 끈질긴 인내로 기다려 온 겨레의 염원이 헛되지 않기를 빈다.

## 남북적회담 재개

동아일보(1985. 5. 27)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본회담 북한측대표 7명을 비롯, 자문위원, 수행원, 보도요원 등 84명이 27일 판문점을 거쳐 서울에 들어왔다. 제7차 남북적회담이 1973년 7월 평양 「대동강 회관」에서 열린 지 12년만의 만남이다. 북한측은 제7차 회담이 개최된 지 한달만인 1973년 8월 남한의 정치문제를 트집잡아 당시 진행중이던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한다고 선언하고 돌아섰었다.

지난 12년 동안 남북적회담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면 남북한간에는 1천만 이산가족들이 서로 생사와 주소를 확인하고 재결합의 결실을 보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제1차 남북적회담이 1972년 8월 평양에서 개최된 지 13년이 지나도록 양쪽으로 흩어진 이산가족들은 한 사람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민족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남북적십자 당국은 일곱차례의 본회담, 25회의 실무회의, 25회의 예비회담 등 70여차례의 접촉을 가졌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5개항의 회의의제를 확정지었고 합의되는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와 「남북적십자 판문점 공동사업소」를 설치키로 합의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이번 서울회담은 12년 또는 13년 전 양측이 합의한 의제들을 중심으로 토의한다. 새로 시작하는거나 다름이 없는 회담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남북적회담이 본회담 의제를 포함, 몇 개의 기구 설치에 합의할 수 있었으며 12년만에나마 제8차 본회담이 서울에서 열릴 수 있다는데서 남북적회담에 새로운 기대를 걸고자 한다. 우선 서울회담에 참가할 북측측 대표들은 남북적회담이 순수한 인도주의 정신에 바탕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4년간의 회담일지는 남북적회담이 북한측에 의해 정치적으로 희생돼 왔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남북적회담 중 느닷없이 한국의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의 철폐나 반공활동 중지 등 적십자 정신이나 활동과는 관계없는 요구조건을 내걸고 나왔던 기록이 그것이다.

저와 같은 북측측의 성실치 못했던 과거의 회담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남북적회담은 남북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혈육의 아픔을 치유해주려는 인도주의적 사업이다. 거기에는 이데올로기도 제도도 방해가 될 수 없다. 오직 남북으로 헤어진 부모형제 친척들이 하루바삐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외에는 어떤 불순물도 끼어들어서는 안된다.

올해는 조국이 분단된지 꼭 40년이 된다. 분단 40주년의 해에 40년 동안 피맺힌 이산 가족들의 마음을 풀고 웃을 수 있는 재회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남북적회담의 성과를 기대한다.

## 적십자회담 실질 진전있기를

서울신문 (1985. 5. 28)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이 12년만에 서울에서 다시 열리게 되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진전을 가져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적십자회담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로 회담의 명칭이 시사하고 있듯이 회담 자체의 목적에 충실하고 가급적 정치성을 배제하는 일이다. 지난 1970년대의 적십자회담이 실패로 끝난 것은 회담 자체의 목적에서 벗어나 정치적 논쟁을 끌어들이기 때문이었다.

3차 회담 때부터 북한측은 남북 왕래를 원만히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조성이 선결문제라며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철폐를 줄곧 주장했다. 그러다가 끝내는 김대중 납치사건을 이유로 회담 자체를 중단시켜 버렸다.

남북 적십자 회담은 애당초 남북한간의 정치적 제도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서서 1천만 이산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자는 순수한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에서 비롯되었었다. 그러한 회담에 정치적 문제를 끌어넣은 것은 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고의로 가로막는 것과 다름없었다.

이번에 재개된 회담은 과거와 같은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적십자 회담은 적십자 회담답게 철저하게 적십자의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적십자 회담이 결렬된 후 한국은 조총련 소속 재일교포들에게 추석성묘를 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아 자유롭게 고국을 다녀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의 모국 방문에 국가 보안법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고 있다. 남북한 이산 가족의 왕래와 교류에 한국의 국가보안법 등이 장애가 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

현재 남북한간에는 적십자 회담과 경제회담 두 갈래의 대화 창구가 개설되어 있고 국회회담이 성사될 경우 그 접촉의 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대화의 확대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궁극적인 평화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으려면, 그 개별적인 회담 자체가 각각 성공을 거두어 남북한간에 신뢰를 쌓는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대화의 창구만 여러 갈래 벌여놓고 회담에 아무런 진전이 없을 경우 그것은 오히려 평화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만 6천만 겨레에게 안겨줄 뿐이다.

작년 11월 남북경제 회담이 처음 열렸을 때 남북 쌍방은 경의선철도를 연결하자는 흥분을 자아 내기에 충분한 제안을 내 놓았다. 그것이 6개월만에 열린 지난 제2차 회담에서 아무런 구체적 진전없이 끝나자 커다란 실망만 남겨주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재개하는 적십자 회담은 종전처럼 입씨름만 되풀이하는 공허한 회담이 아니라 당초의 출발 정신으로 되돌아가 생산적인 회담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남북의 1천만 이산 가족이 적십자 회담의 성공적인 진전을 누구보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 서울 남북적회담 이후

-서로 이해의 폭 넓혀 해결의 실마리를-

동아일보 (1985. 5. 30)

잔치는 끝나고 북에서 온 손님들은 돌아갔다.

6천만 민족의 염원과 기대 속에서 12년만에 재개된 남북적십자 회담을 「잔치」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북한 대표단 일행이 서울에 머문 3박 4일 동안 공식 회담보다는 오찬 만찬으로 이어지는 파티가 국민들의 시선을 끌었던 것도 사실이고 보면 잔치 속에 치러진 회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실 외교 회담이란 협상테이블에서 마주 앉아있는 시간보다 파티장과 막후접촉에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법이다.

어쨌거나 이번 남북적 회담은 실질적인 소득이 별로 없이 끝났다. 다만 다음 잔칫날을 석달 후인 8월 27일 평양에서 다시 갖기로 한 합의가 소득의 거의 전부다. 그동안 결렬과 연기를 되풀이 해온 남북대화의 곡절을 지켜 보아온 우리로서는 그나마 회담이 깨지지 않고 다음에 만날 장소와 날짜나마 정한 것은 성과라고 보고 싶다.

일일여삼추로 친족의 상봉을 고대하고 있는 이산가족의 심정으로는 회담이 진전없이 원점에서 맴도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이산가족의 재회가 멀고도 험난한 「장정의 첫 걸음」임을 생각하고 인내로 참고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일이 아닌가.

우리는 남북회담이 재개될 때 성급한 기대보다는 차분하고 알맹이있는 접근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어찌보면 남북대화의 진전이란 민주화의 길처럼 멀고도 험난한 도정인지도 모른

다. 하지만 그 길은 어렵지만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다.

이번 서울 회담을 통해 양쪽의 제의와 주장 사이에는 「건너지 못할 깊은 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측의 「고향방문단」 교환방문과 판문점 공동사업소 설치 제의는 매우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북한측이 일괄토의를 고집하면서 내놓은 「자유 왕래」와 「가무단」의 교환방문 제의는 진지하고 유연스럽기보다 어딘지 「인도」에 맞지 않는 함정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자유 왕래 제안 뒤에는 훈련된 특수요원을 침투시키려는 꿩꿩이속이 숨겨져 있지 않은가, 또 가무단을 보내 공산권 특유의 집체예술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민심 동요를 꾀하자는 의도는 없을까 하는 의구심이 없지 않았다. 이밖에 다음 회담 날짜를 종전과는 달리 석달 간격을 둔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이와 같은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면서도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간에는 이견의 폭이 많이 좁혀지고 서로의 주장 사이에 어떤 공통점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이종률 북적단장이 서울에서 「지울수 없는 과거」를 찾은 것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서로 이해의 바탕을 넓혀갈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사실 지금보다 더 많은 세월이 흐른다면 그나마 이어져 오는 혈연이나 동창관계 등 「인연의 끈」이 마모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인내를 갖고 접근하되 무한정 늦출 수는 없는 것이 남북 이산 가족의 재회문제다. 분단 40년을 넘기고도 문제해결의 실마리 하나 풀어내지 못한다면 후손에게 낯을 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 앞에 우리 민족의 자율 자치능력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일이 될 뿐이다.

#### 회담터울이 왜 그리 긴가

중앙일보(1985. 5. 30)

1973년 중단 이래 처음 열린 남북적 본회담(8차)의 이틀간 회의가 모두 끝나고 북녘 대표들이 평양으로 돌아갔다.

회담결과에 대해서는 기대가 컸던만큼 아쉬운 감도 없지 않으나 양측은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진지하게 토의하여 상당한 접근도 이루어졌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은 북한의 제안을 많이 받아들였다. 일괄토의 방식, 자유왕래문제, 8·15 예술단교류, 회의일자 결정 등이 그것이다.

그중엔 우리의 제안 내용과 일치되는 것이 있고 조건부로 수락한 것도 없지 않지만 우리측의 양보입엔 틀림없다.

그 양보는 회담을 진전시켜 이산의 고통과 비극을 하루라도 빨리 청산하려는 한적의 성의와 신축성있는 자세에서 나온 결과다.

그러나 북한측은 아무런 양보나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북측이 제의한 예술단 교류를 받아들이면서 한적은 8·15 고향방문단 교류와 보도진 수행을 함께 실시하자고 요구했으나 북적은 이를 끝내 외면했다.

북적이 다음번 회담을 3개월 후로 제의할 때 우리는 이를 앞당기자고 요구했으나 그것마저 거부했다.

8·15 예술단 교류를 제안해 놓고 다음 회담을 8월 27일에 열자고 고집하는 북적의 태도는 뭔지 모르겠다.

우리측은 8월 15일에 방문단과 예술단을 상호 교류하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7월 15일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의했으나 북한은 이것마저 주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만은 북적이 명분에 물린 나머지 응해야 할 것이며 또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해 본다.

회담의 인터벌을 3개월로 하는 것은 너무나 길다. 더우기 토의할 의제도 지금은 모두 확정돼 있지 않은가. 할 일이 많고 급한데 그렇게 한가하게 모여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가. 토의는 서두르지 않고 진지해야 하지만 그 대신 회의는 자주 열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 대해 우리는 결코 실망하거나 비관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큰 기대를 걸고 앞으로의 회담을 주시하고자 한다.

이번 회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가적 성과도 컸다.

우선 화기에애하게 시종한 양측의 접촉은 남북대화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종률 북적단장을 중심으로 한 중앙고보와 세브란스의전 스토리는 분단의 아픔과 재회의 필요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강조해 주었다.

북적대표단과 보도진은 우리의 많은 것을 보고 확인해 갔다. 남북이 서로를 충분히 알고 이해할 때 이질감과 적대감도 그만큼 완화되리라 믿는다.

방자하게 서두르다 패배한 토끼의 방식보다는 쉬지않고 성실하게 달려 좋은 성과를 올린 거북이의 자세가 남북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더 유익한 교훈이 될 것이다.

지나친 낙관과 방심은 금물  
-남북대화와 안보태세강화는 병행해야-

경향신문 (1985. 5. 31)

서울서 열린 남북적십자 회담에서 양측이 예술단을 포함한 고향방문단의 상호 교류 추진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이산 가족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듯하다. 그러한 합의가 중간에 변질되지 않고 액면 그대로 실현되기만 한다면 그것은 분단 40년만에 처음으로 맞는 감격적이고 역사적인 「민간교류」가 될 것이고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인 남북의 화해와 통일의 대업성취로 확대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뜻에서 오는 7월 15일로 예정된 실무접촉이 잘 이루어져 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이산 가족이 분단 장벽을 넘어 고향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나친 기대나 낙관만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다. 남북 대치40년간에 쌓인 적대감이나 불신, 그리고 이질적 요소가 하루아침에 해소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늘의 상황도 결코 방심을 허용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서울에 왔던 북쪽 대표들이 과거와는 달리 비교적 유연한 자세를 보였고 우리의 수정제외에 선뜻 응한 것을 보고 북한이 대남 무력도발의 흥계를 포기한 것으로 속단하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른다.

지나친 낙관론은 당장에라도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 안보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켜 성급한 통일 논의와 무책임한 행동을 유혹할 소지를 안고 있다. 국제 정치면에서는 남북 대화의 진전속도를 앞질러 한반도 주변의 세력균형을 깨뜨리는 안보여건의 일방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근간의 북쪽군사 동향이나 내부사정은 그러한 지나친 기대나 방심이 매우 위험한 일임을 말해 주고 있다.

북한이 최근 공세적 병력의 전진 배치를 끝낸데 이어 소제 최신무기를 계속 도입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더우기 요즘 대남방송을 통해 일부 과격 학생들의 극렬시위를 고무 선동하는 등 모략선전을 일삼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그들의 대북 전략에는 기본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내외의 전문가들도 북적이 예술단의 교환을 주장하고 우리측의 절충안에 동의한 이

면에는 12대 총선 이후의 정치·사회 상황을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우리의 내부 결속을 흔들어 보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6.25남침 직전에 대규모의 평화공세를 벌였으며, 1970년대 초반 남북회담 진행 중에 땅굴을 뚫던 지난날의 경험에 비취 그들이 또 어떤 목적을 숨기고 있는지 짐작할 수 없다. 또한 언제 어떠한 핑계로 현재의 경제 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중단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남북 분단 비극의 해소를 위한 노력은 근본적으로 북한이 종전의 적화통일 전략으로는 분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러한 전략을 포기할 때에만 실질적인 진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무력이나 폭력 선동으로 남쪽을 교란시켜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이산가족의 문제도 우리 사회의 혼란과 안보태세의 이완을 노리는 수단으로 밖에 이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번 남북적 회담에서 이루어진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그 귀추를 조심스럽게 지켜보면 서도 우리 나라가 처해 있는 내외 상황과 북한측의 속셈을 충분히 감안하여 지나친 낙관이나 방심으로 우리 내부의 허점을 드러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북대화를 끈질긴 인내심을 갖고 추진하면서 안보태세도 그에 정비례해서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 고향방문단 교환 꼭 실현되길

서울신문(1985.5.31)

남북적십자 대표단은 3박 4일간의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공식 일정을 끝내기에 앞서 실무접촉을 통해 제1차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을 오는 8월 15일을 전후해서 추진키로 극적 타결을 보았다. 고향방문단 속에는 북적측이 제의한 예술단도 포함시키기로 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인원 규모 등은 오는 7월 15일 판문점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추후 협의키로 했다.

이같은 합의는 적십자 회담에 있어 그동안 술한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하나의 커다란 진전을 이룩한 것임에 틀림없으며 그 성공적인 실현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산 가족 고향방문단 교환이 양측의 합의대로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본회담 진행과는 별도로 이산 가족의 부분적인 재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남북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솔직히 말해 이 같은 양측의 의견 접근을 보고 다소 의외라는 느낌도 없지 않다. 지난 1970년대 초부터 대화를 시작한 이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경험해 왔기 때문이다. 12년 동안 중단된 적십자 회담을 재개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해놓고도 회담을 여는데는 6개월이나 걸렸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회담에서 그들이 취한 태도에는 어떤 계산된 의도가 깔려져 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회담결과에 지나치게 성급한 과잉 기대를 해서도 안될 것으로 보인다.

누누이 강조해 왔지만 적십자 회담이 진정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전 민족의 기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회담이 되려면 회담의 목적인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에 철저히 설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회담은 이 같은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많은 실망과 불신만을 남겨 주었다.

이번에 합의한 고향방문단 교환은 그동안 실망에 빠져 있던 많은 이산 가족들에게 다시 커다란 희망과 기대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 이번만은 진실로 그러한 희망이 실현되길 기대하면서 회담의 진전을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다. 이번 재개한 회담도 실패할 경우 앞으로 남북 회담에 대해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다.

고향방문단 교환은 1천만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좋은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적십자 회담 5개항의 의제에 관해 우선 합의를 하고 그런 토대 위에서 고향방문

단을 교환하는 것이 자연스러울지는 모르나 반드시 그런 순서를 밟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런 상징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남북간에 화해 분위기를 먼저 조성하는 것이 회담을 더욱 촉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에 제개한 적십자 회담은 우리의 남북 문제를 평화적인 대화로 해결할 자세와 용의가 있는지 서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회담이 또다시 실패할 경우 상대방에 대한 상호 불신을 더욱 깊게 할 따름이다.

#### 천금같은 합의에

-생나무를 빼간 이산의 아픔을 위해-

조선일보(1985.5.31)

사랑하는 남녀를 억지로 갈라놓는 일을 생나무를 빼개 놓는 것으로도 비유한다. 멀쩡히 살아 있는 생나무를 세워 놓은 채 빼개버리는 일은 비록 그것이 식물이라 하더라도 잔인한 일이다. 1천만 그루의 나무를 것처럼 인위적으로 빼개 놓았다면 숲은 쓸밭이 되고, 그 잔인한 행위는 인도적으로도 지탄을 받을 것이다.

1천만으로 통칭되는 남북 이산가족의 현실은 그런 것이다. 그 아픔, 그 슬픔, 그 쓰라림은 그런 것이다. 남녀간의 애정은 변할 수도 있지만, 혈육은 변할 수 없는 천륜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빼개진 생나무의 충격은 더욱 커진다.

1천만의 이산 가족은 40년을 그 아픔, 그 슬픔, 그 쓰라림을 안고 생나무가 빼개진 상태로 살아왔고 새로 태어났고 혹은 그대로 죽어갔다.

그런 1천만 이산 가족을 가운데 두고 6천만 온 민족이 사흘간의 남북적십자 서울 본회담에 대한 주시와 어려운 기대를 걸어온 것은, 이제는 제발 그 비극적인 현실이 더 이상 길어지지 않고 풀려야겠다는 공통된 염원에서였다.

그리고 일정 마지막날, 『쌍방은 금년 8월 15일 광복절 40주년을 전후해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교환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대변인 발표)는 성과를 우리에게 주었다. 당초에 북적쪽은 8·15를 계기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예술공연단」만을 먼저 교환하자고 주장했으나,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까지 함께 하자는 한적쪽의 절충 제의가 받아들여져 천금같은 합의를 본 것이다.

주인인 이산 가족을 젖혀놓은 손님격인 예술공연단만의 상호 방문은, 생나무가 빼개진 것처럼 생이별로 울고 있는 남녀를 젖혀두고, 흔레없는 혼인축하 잔치부터 베푸는 일과도 같은 것이다.

이산 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 상호 방문의 천금같은 합의를 본 30일 아침, 북적의 이종률 단장은, 출발 인사를 하며 예술단의 규모가 「1백여명」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다. 손님격인 예술단의 규모는 그나마 거론은 됐으나 주인인 이산 가족 방문단에 대한 것은 아직 감감하다.

남북간, 누가, 얼마나, 어떻게 가서 얼마동안 어디를 방문하고 돌아오느냐는, 인원, 체류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는 오는 7월 15일 판문점에서의 쌍방 실무대표들의 접촉을 통해서 협의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교환 방문하게 될 이산 가족은 서로 주소와 생사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두보의 시에서 안톤 슈낙의 수필에 이르기까지, 그렇지 않아도 하도 오래간만에 찾아간 고향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천금처럼 별려 찾아간 고향 땅에 이미 죽은 혈육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살았어도 거기 그들이 없다면 찾아간 사람의 슬픔이 또한 더 커서 빼개진 생나무에 다시 칼질을 받는 격이 될지도 모른다. 이산가족을 위한 남북 교섭은 그런 생나무의 빼개진 상처를 어루만지고 어루만져 치유

하는 정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허한 말, 들뜬 잔치보다도, 엄숙한 사명감에, 치밀하고 실속있는 실무가 뒤따라야 한다. 어렵게 이루어진 천금의 합의가 판문점의 실무 접촉에서 천금같은 열매를 맺기를 6천만 민족의 이름으로 당부한다.

#### 고향방문단의 교류

중앙일보(1985.5.31)

실로 남북관계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만한 소중한 합의다.

오는 8월 15일 광복 40주년을 맞아 남북의 실향민들이 40년만에 고향을 찾아가 흠어져 애태우던 가족·친척과 친우를 만날 수 있게 된다.

양측의 예술단이 서울과 평양을 상호 방문하여 8·15경축 예술제전도 별인다.

특히 이 예술단은 적십자총재(북측 위원장)가 인솔하게 되고 어찌면 그들이 상대방의 8·15기념식전에도 참석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뜻이 있다.

8·15 상호교류는 민간교류의 서막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다. 지금까지 공식기구의 교류와 접촉만이 있어온 남북 관계가 저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남북 민간인의 상호 접촉이 지난 40년간 인위적으로 차단·변질돼 온 우리의 민족동질성의 회복에 중요한 모티브가 될 것은 틀림없다.

남북적십자는 고향방문단과 예술단의 상호 방문을 위한 절차와 방식을 협의키 위해 7월 15일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갖는다.

문제가 단순하지는 않지만 양측이 성의만 있다면 결코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밖으로는 독일의 선례가 있고 우리는 조총련계 제일동포에게 고국방문을 알선한 경험이 있다.

북한도 비록 이데올로기 차이는 없지만 자본주의 체제하에 살고 있는 제일조총련계 동포들에게 고향을 방문케 한 관례를 쌓았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한다면 절차나 방식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닥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북한이 진심으로 남북교류에 응할 뜻이 있는지 우리에게 아직도 명확치 않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번 서울 회담에 임하면서 대표의 기초연설을 뒤로 미루자는 등 지연전술을 보였고 한적의 8·15고향방문단 제의를 거부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받아들인 점 등으로 그들의 속셈을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러나 8·15교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사시켜야 할 우리의 민족적 당위요, 과제다.

그것은 이산가족 문제해결의 모델일 뿐 아니라 분단문제 전체를 평화적·호혜적으로 풀어나가는 대전제이고 환경 조성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이산인 자유방문은 같은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것은 적십자 회담의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를 거뜬히 해결해 주는 결과가 된다.

이산인의 상호 방문이 이루어지면 남과 북은 더 이상 상대방에 대해 사실 이상으로 과장하여 전시하거나 감출 것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 환경에서는 경제회담을 비롯한 나머지 남북대화도 훨씬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

남북관계 발전은 이제 거역할 수 없는 대세가 돼 가고 있다. 우리의 주변 정세가 그렇고 남북의 내부사정이 또한 그렇다.

이같은 대세를 민족대업의 해결로 연결시키는 것은 남북지도자 공통의 과제다. 이제 남과 북은 경쟁과 대결에서 협력의 자세로 전환해 나가야 할 때다.

남북적 막바지 숨통 텃다  
-상호방문단 남은 고비도 잘 넘기길-

한국일보 (1985.5.31)

마지막 고비의 쌍방 실무접촉에서 괄목할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북한적십자 대표단 일행 84명은 30일 서울을 떠나 북녘으로 휴전선을 넘어갔다. 오는 8·15광복절 40주년을 전후하여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 방문을 추진키로 한 것이 그 막바지 합의 내용이다. 우선 답답하게 가로막힌 분단의 벽에 하나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이다.

교환방문단의 규모와 체류 일정, 왕래 절차 등 구체적인 문제는 오는 7월 15일 판문점에서 갖기로 한 실무대표 접촉에서 협의할 것이라고 한다. 두 차례의 본회의 자체는 비록 분위기는 과거에 비해 좋아졌으나 이렇다할 실질적 합의에 접근하지 못했고 다분히 전시·홍보용이라는 인상마저 면치 못했다. 얼핏 보아 기본 입장의 새로운 수사적 표현 정도를 맴돌다시피 했던 것이다.

하나 이제 회담 말미의 극적인 합의는 확실히 획기적이다. 아직은 약간의 불확실 요인이 감축되기도 하지만 그런대로 남과 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들의 상당수가 고향을 찾을 수 있는 최초의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또 5개항 의제의 구체적 협의에도 유익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서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교류발전을 통한 민족화합에의 밝은 기여라는 미래상을 그려보게 한다.

모처럼 합의된 그 방문단 교류는 내외 동포와 국제사회가 두루 지켜보는 가운데 기필코 성사되어야 한다. 부수적이고 구차스러운 문제 제기 등으로 본말을 전도하거나 우유부단 때문에 천연될바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또 그 교환방문단의 규모는 클수록 좋다고 믿는다. 애당초 북한측은 예술공연단 교류를 제외하면서 그 규모를 1백명 정도라고 했거늘 우리측이 제외한 고향방문단의 규모는 적십자 회담의 본령에 비추어보더라도 당연히 수백명 내지 천명 단위를 넘어서 점차 대규모화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산가족들의 생사와 주소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점 쌍방 적십자 활동의 주야를 불문한 경이적 분발을 격려하고 싶다. 이번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자면 앞으로도 여러 고비의 협의를 있어야 함과, 방문·예술단의 왕래 자체는 이산가족 문제의 본질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는 것이다.

여하간 이번 합의를 보면서 우리는 거대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실감한다. 그 변화로 하여금 남북의 개방화와 민족화합이라는 방향 설정을 갖게 해야 할 것이다.

해외반응

[미국]

뉴욕타임즈(1985.5.28)

○ 북한 대표가 서울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다.

뉴욕타임즈(1985.5.29)

○ 여러 면에서 북적측의 제안들은 한적측 제안들보다 대담한 것으로 보였으나 북적측 제안들은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 북적측이 제안한 자유 왕래에는 많은 제한이 포함되어 있었다.

The Times (1985.5.28)

- 북한에 대한 한국측 자신감은 크게 증대한 것이 분명하다.

[일본]

아시히 신문(1985.5.31)

- 고향방문단의 상호 교환 합의는 한국 국민에게 큰 기쁨과 기대를 주고 있다. 이같은 합의에 이른 제1 이유는 대한적십자 대표의 유연한 자세였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상호 방문이 실현되기 까지에는 많은 곡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1985.5.31)

- 원칙론에서는 상호교류 추진에 일치한다 해도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소극성이 눈에 띈다.
- 북의 자세는 얼핏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보이나 한국측이 주장한 주소, 생사의 확인도 하지 않고 왕래한다 해서 이산 가족 찾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지 의문이다.

상계이 신문(1985.5.31)

- 북의 태도에는 여전히 정치 색채가 짙게 반영되어 있었으며, 적극적인 자세는 볼 수 없었는데 이는 북이 아직도 이산 가족 상호 방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서 있지 않고 시간을 끌려고 한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기타]

South China Morning Post(1985.5.30; 홍콩)

- 금번 회담은 확실히 고무적이었지만 과거의 불행한 전례로 보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징조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오늘의 정세는 과거 30여년간의 어느 때보다도 남북한 접근에 유리하다.

메르데카(1985.5.30; 인도네시아)

- 이번 회담 결과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었다.
- 한국의 민족주의가 사상과 정치 체제의 차이로 굴복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 어떤 세계 강국도 통일을 위한 한국민의 움직임을 저지하지 못한다.

### 3. 남북국회회담 관련 동향

#### 가. 경과

##### ● 북측의 제의

북한측은 1985년 4월 9일, 제2차 남북경제회담과 제8차 남북적십자 본 회담을 눈 앞에 둔 시점에서 돌연 남북국회회담을 제의해 왔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7기 4차 회의에서 이른바 「대한민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채택되어 이날 오후 관문점을 통해 우리측 채문식 국회의장 앞으로 보내는 동 제안에서, 북한측은 남북간의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국회회담을 개최할 것과,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예비접촉을 5월초 관문점에서 가질 것도 함께 제의하였다.

아울러 북한측은 채문식 의장에게 동 서한의 사본을 민정당·신민당·국민당 등 3당 총재들에게 전달해 줄 것도 요청해 왔다.

동 서한에서 북한측은 3자회담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회회담이야말로 남북간의 「전쟁위험을 가시고 전쟁상태를 완화하는 실천적 조치를 위한 대책」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적십자 회담이나 경제 회담으로서는 긴장완화와 같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국회회담이 열리게 되면 경제, 적십자 회담에도 고무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북측 서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우리는 40년간의 분열과 대결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지난해 「3자회담」을 가질 것을 남한과 미국에 제기하였으나 오늘날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는 나라의 조성된 전쟁위험을 가시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남북한 국회회담을 제의함.
- 국회회담에서는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 데 대한 문제를 협의할 것임.
- 국회회담이 잘 되면 고위급 정치회담의 조건과 환경이 조성되게 될 것임.
- 국회회담의 형식은 쌍방 국회 연석회의를 하든지 또는 국회 대표단을 구성하여 대표회담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함.
- 국회대표회담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단 구성을 각기 의장 또는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고 각 정당 출신의원들을 망라하여 적당한 수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 국회회담과 관련한 사전 협의를 위해 쌍방 의장들이 임명하는 실무대표들로서, 예비접촉을 5월초에 관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바랍.
- 이 제의를 개원되는 국회에서 신중히 토의하여 긍정적인 회담을 보내주기를 기대함.

##### ● 경위

이에 대해 채문식 국회의장은 4월 10일 국회의장실로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 이민우 신민당 총재, 이만섭 국민당 총재 등을 초치, 북한측이 보내온 서한을 각각 전달하고 북측 제의의 내용과 배경을 검토하고 국회 및 정당의 대응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하였다.

이날 모임에서 3당 대표들이 합의,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남북대화 문제는 통일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앞으로도 정파의 이해 관계를 떠나 초 당적으로 긴밀하게 협의 대처함으로써 평화통일 과업을 앞당기는데 각 정당이 적극적으로 기여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 (2) 우리측은 꾸준하고 성실한 남북대화를 통해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에 접근한다는 일관된 방침에 따라 국회와 정당이 함께 논의하여 북측에 조속히 성의 있는 회답을 통보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른 국회의 대응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
- (3) 남북교섭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는 남북대화 추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대화의 효율적인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국회와 정당은 통일문제관계당국의 방침에 호응,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 (4) 이번 남북국회회담 제의와 관련된 국회와 정당의 연락업무, 회의주선, 발표 등은 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국회사무총장이 담당하기로 했다.

또한 이진우 국회사무총장은 우리 국회의 개원이 지연됨에 따라 북한측이 당초 5월초로 제의한 국회회담 예비접촉이 어렵게 되자, 5월초에 개최되지 못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예비접촉이 개최되기를 희망해 온 4월 30일자 북측 전화통지문과 관련하여, 5월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사무장 김봉주 앞으로 회신을 보내고 국회가 개원되는 대로 북측제의를 논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답을 보낼 것이라는 우리측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한편 국회 측은 12대 국회가 개원되자 5월 16일, 의장단·3당 교섭단체 대표위원 연석회의를 갖고 대북 회신문안이 담긴 결의문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는 남북국회회담 회신 문안 기초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소위에서 기초한 결의안을 채택, 6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제125회 임시국회 제15차 본회의에서는 남북국회회담에 관한 대북회신 문안이 담긴 동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이를 북한측에 전달하였다.

#### ● 우리측의 회신 내용

이재형 국회의장이 6월 3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양형섭 앞으로 전달한 서한에서, 통일헌법 제정을 위한 남북간의 협의기구 구성에 따른 제반문제와 기타 통일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토의하기 위해 남북국회회담의 개최를 환영하면서, 국회회담 개최에 관한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쌍방 국회의원 각 5명이 참가하는 예비접촉을 7월중에 판문점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동 서한에서는 그간 우리측이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 쌍방의 책임 있는 당국간의 협의에 의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당면 과제를 강조하고 북측이 이를 받아들일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음」을 상기시키면서, 「불가침선언 문제도 그것을 실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남북한 정부 당국의 회담을 통해서 협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하였다.

또 우리측은 「입법기관의 고유 기능은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당국이 체결한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를 동의」하는 것이라고 전제, 「현 시점에서 남북의 입법기관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민족적 과업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통일헌법의 제정문제를 협의하는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우리 국회가 북한측에 보낸 서한 전문은 다음과 같다.

####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보내는 서한

대한민국 국회는 귀 최고인민회의가 보내온 서신을 접수하고 각 정당간의 충분한 협의와 의원들의 진지한 토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써 회신을 보냅니다.

우리는 조국 광복 40주년을 맞는 올해야말로 민족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위대한 조국 건설을 위해 남과 북이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적인 신뢰와 화합을 도모함으로써 평화와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 역사적 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0년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더할 수 없는 시련과 통한의 세월이었으며 상호 불신과 대결로 점철된 역사였습니다.

한 피를 나눈 같은 민족으로서 동포애를 발휘하여 단합된 힘으로 분단의 역사에 중지부를 찍고 온 겨레의 열망인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는 상호 불신이며 이 같은 상호 불신은 대화와 교류의 단절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능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대화를 갖자는 것도 바로 여기에 그 참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해 새로운 남북 접촉이 재개되고 특히 남북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이 열리고 있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또한 중단된 남북체육회담도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겨레는 남북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하루속히 남북간에 물자교역과 경제협력이 실현되고 흩어진 가족·친척들이 자유롭게 고향을 찾고 자기 혈육을 만나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으나, 이것이 나아가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측은 오래 전부터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책이 쌍방의 책임 있는 당국간의 협의에 의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당면과제임을 강조하고 귀측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는 귀측에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의 실현과 이 회담에서 다룰 우선 과제로서 긴장완화와 전쟁재발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문제를 제시하였으며, 긴장완화와 민족화합을 위한 실천적 조치로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도 아울러 제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침선언 문제도 그것을 실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남북한 정부당국의 회담을 통해서 협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가침선언 문제를 비롯하여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평화보장 문제를 우리측과 진지하게 협의하고 이를 통해 민족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귀 최고인민회의가 귀측 관계당국으로 하여금 우리측이 주장하는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 등 남북한 정부 당국간의 회담에 동의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측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입법기관의 고유기능은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 당국이 체결한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를 동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현 시점에서 남북의 입법기관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민족적 과업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통일헌법의 제정문제를 협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 과업이야말로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열망인 동시에 남북 국회에 거는 으뜸가는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북의 국회는 이러한 민족적 과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한 진지한 대화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전제로 한 통일헌법 제정사업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쌍방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표들로 협의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전 민족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남북의 국회는 바로 이러한 통일헌법 제정사업을 추진하는데 주저해서는 안되며 이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민족사적 사명임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귀 최고인민회의와 더불어 통일헌법 제정을 위한 남북간의 협의 기구 구성에 따른 제반문제와 기타 통일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토의하기 위해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남북 국회회담이 남북간의 긴장완화 및 신뢰회복과 나아가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국회회담 개최에 관한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쌍방 국회의원 각 5명이 참가하는 예비접촉을 오는 7월중에 판문점에서 갖기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제의에 대한 귀 최고인민회의의 회답을 기대합니다.

1985 년 6월 1일  
대한민국 국회

한편 북한측은 6월 14일 직통전화를 통해 우리측의 제의에 동의하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5명으로 구성되는 대표단을 1985년 7월 9일 10시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 보낼 것이라고 통보해 왔다.

#### 나. 남북 국회회담과 우리의 입장

우리 정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측에 대해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전쟁재발 방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과, 아울러 정치인을 비롯, 경제인·문화인·체육인 등 각계 인사와의 접촉과 교류를 가질 것을 제의하는 등 꾸준하고도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북한측은 우리의 이러한 노력을 외면해 왔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측의 집요한 대화 노력의 결과, 가까스로 합의를 본 경제, 적십자 회담의 개최를 앞두고 돌연 남북 국회회담을 제의하고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문제를 협의할 것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북한측의 금번 제의는, 회담의 목적, 제의시기, 의제 등에서도 보여주듯이 누가 보더라도 동 회담을 제의해 온 그들의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북간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민족화합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정치인들간의 대화기회도 소중히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일념에서, 금번 성의 있는 회신을 북

한측에 보내게 된 것이다.

남북국회회담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통일헌법 제정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입법기관의 고유기능은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포함하여 행정부가 체결한 각종 조약과 협정에 동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남북국회회담의 주요 과업은 통일헌법제정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문제이며, 그 외에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제반문제들을 협의하는 일이다.

우리는 1982년 1월 22일 천명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서 민주통일의 방식으로 쌍방의 민의를 대변하는 남북대표로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하여 통일헌법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6천만 민족 전체 성원의 자유로운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금번 우리 국회는 남북국회회담을 갖고, 양 지역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표들로 통일헌법 초안작성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 북한측과 협의할 것을 제의한 것이다.

●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문제는 정부당국간에 협의·해결

남북 불가침문제를 비롯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문제는 기본적으로 쌍방 정부당국의 권한과 책임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정부 당국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측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 쌍방의 책임 있는 당국간에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당면과제임을 강조하고 북한측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1982년 1월 22일에 천명한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에서 우리는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한데 이어 1983년 1월 18일에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토의, 해결할 4개 당면과제의 하나로써 「남북한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문제」를 제시하였으며, 또한 1982년 2월 1일, 북한측에 제의한 「20개 시범 실천 사업」에서도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신뢰증진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는 문제를 우리측과 진지하게 협의하고, 이를 통해 민족통일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면 먼저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우리측이 주장하는 남북한 정부당국간의 회담에 응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 정치인들간의 교류와 협력 도모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는 상호불신이며 이 같은 상호 불신은 대화와 교류의 단절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간의 폭넓은 접촉과 교류는 상호 신뢰를 조성하고 남북한 관계개선과 민족화합에 기여하게 되리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남북 경제회담, 적십자회담, 체육회담 뿐 아니라 남북 정치인·문화인 등의 접촉과 교류를 북한측에 제의하고 상호 사회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 경제·적십자회담의 성공적 진행과 체육회담 재개 촉구

현재 남북간에는 남북경제 회담과 적십자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측은 지난 4월 9일 남북 국회회담을 제의한 이래 국회회담만이 남북간의 현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최선의 방안이라고 강변하면서, 이 회담 여하에 따라 경제, 적십자 회담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는 식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산가족 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부터 5월 30일에 걸쳐 12년만에 서울에서 재개된 남북적십자 회담에서는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 교환에 남북한이 합의함으로써 분단 40년만에 남북한 동포간의 인적교류의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경제회담에서는 남북간에 입장을 달리하는 것이 많지만 공통점도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북한측이 성실한 자세로 임하기만 한다면 물자교역이 쉽게 실시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측은 거래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 양회담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남북간의 인적·물적교류의 길을 조속히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또 남북간에는 지난해 3차례의 체육회담을 진행한 바 있으나, 북한측의 일방적 중단으로 아직 재개되지 않고 있다.

내년에는 아시안게임이 서울에서 열리고 '88년에는 서울에서 올림픽대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 바, 남북한의 체육인들이 서로 교류와 친선을 도모하고 동 대회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민족적 단합을 과시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남북체육인들이 대화를 갖고 체육교류와 단일팀 구성문제를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다. 국내 주요반응

지난 1985년 4월 9일 북한측이 「남북국회회담」을 제의해 온데 대해 국내 주요 언론들은 「지난 1948년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 정치 협상 이후 5차례에 걸쳐 제의한 바 있던 것과 같은 유형」이며 「반미·반정부 통일전선전략에 입각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오늘의 우리 정치상황을 이용하여 여야간의 논쟁을 유발하고 국론분열을 통해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야기해보려는 속셈」, 「남북적 회담과 경제회담을 또 연기하려는 구실로 삼으려는 전술이 아닌가 의심」 등의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이와 아울러 「마냥 일을 벌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북한측이 남북한 긴장완화를 진실로 바라고 있다면 이미 날자까지 정해진 남북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부터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고 신뢰를 쌓아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1985년 6월 1일, 통일헌법제정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문제를 협의할 것을 내용으로 한 우리측의 대북 회신에 대하여 「우리 국회는 남북 국회회담을 통해 양측 국회가 기여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아낸 것」이라고 논평하고 「불가침선언에 관한 것은 불가침 보장의 실질적 당사자인 양측의 책임당국에 맡겨야」하며 「국회의 입법기능으로 보아 남북 국회회담은 당연히 통일헌법 제정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측의 「남북국회회담」 제의 및 우리측의 회신과 관련한 국내 주요 신문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남북국회회담」의 저의  
- 경제·적십자회담부터 성사시켜야 -

경향신문 (1985. 4. 11)

북한측이 갑작스럽게 남북국회회담을 제의하고 나왔다.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남북경제 회담과 남북적십자 회담을 5월중에 열기로 합의하고 양측이 모두 두 회담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기에 느닷없이 이와 같은 제의를 해온 데 대해 우선 의아심을 갖게 된다. 그들이 제의해

은 회담 내용을 보면 지난 40년간 줄기차게 주장해 온 이른바 정치회담의 형태를 약간 변형시켜 다시 들고 나온 것에 불과하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이 우리측에 보낸 서신 내용을 보면 그들의 상투적인 주장인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3자 회담과 우리측이 제의한 바 있는 양측 당국자 회담을 적당히 분식·가장한 듯한 인상을 준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대화의 주체가 우리 국회와 그들의 최고인민회의라는 점인데 그 성격은 해방 이래 그들이 계속 주장해 온 정치협상회의의 맥락으로밖에 이해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소위 그들의 「통일전선전략」에 의한 발상으로서 지난 1948년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 정치 협상 이후 5차례에 걸쳐 제의한 바 있던 것과 같은 유형의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가지 명심해야 할 일은 이번 제의가 반미·반정부 통일 전선 전략」에 입각한 것으로서 그 제의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국내정치·사회적 혼란을 야기시켜 「남조선 혁명정세」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6·25동란 당시 한쪽으로는 정치 협상 제의를 해놓고 불과 며칠 사이에 무력남침을 자행했던 역사적인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이번 제의는 시기적 상황을 고려한 여러 가지 측면의 정치적 획책을 노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오늘의 우리 정치 상황을 이용하여 여야간의 논쟁을 유발하고 국론분열을 통해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켜 보려는 속셈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남북간에 불가침을 선언하거나 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당국간에 해결해야 할 성질의 것이며 북한측이 이를 국회 차원에서 협의하자고 주장한 것은 정치 선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2·12 총선 이후 우리 정국이 아직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12대 국회도 원의 구성을 서둘러야 할 입장에 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북한측의 제의를 선의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국회가 원의 구성을 마치고 정국이 안정을 되찾아야만 그 제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 국회도 하루속히 원을 구성하여 그와같은 제의에 대한 초당적인 대응체제를 갖추고 관계당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도 북한측의 엉뚱한 제의에 현혹되어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줄 안다.

우리는 이미 예정된 남북경제 회담과 적십자 회담이 이번의 북한측의 엉뚱한 제의로 인해 또 다시 좌절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두 개의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남북간에는 체육회담·문화회담 등 얼마든지 다른 차원의 발전적인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 「국회회담」 제의와 대응

- 원내에 초당적 평화통일 추진기구 상설토록 -

조선일보 (1985. 4. 12)

북한측이 9일 남북 「국회회담」이란 것을 제의해 왔다. 장황한 사설의 편지를 통해 밝힌 제의 내용을 요약하면 ① 남북 「국회회담」을 열어 우리 국회와 평양의 이른바 최고인민회의가 공동으로 「불가침선언」을 하자 했고, ② 예비회담을 5월 초순에 갖자고 했다.

얼른 보기에 남북간에 긴장을 완화하고, 통일의 길을 마련하는 데 있어 평양측으로서의 꽤 적극적인 제의라는 인상을 줄 법도 하다. 그러나 남북 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가져 온 우리로서는, 근본적 관점에서 몇 가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아닌 밤에 홍두깨 격으로 불쑥 내놓은 회담(예비) 시기를 하필이면 왜 5월 상순으로 못박았느냐 하는 점이다. 그 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던 2차 경제회담이 5월 17일, 서울서의 8차 적십자

회담이 5월 28일 열리게 돼있는 마당에, 중단된 체육회담 재개 제의 같은 것이라면 또 모르되, 이러한 정치적 「중대」 회담안을 불쑥 내놓고 그렇게 서둘러 열자고 하는 저의가 무엇일까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평양이 보낸 문면에, 경제회담이나 적십자회담으로는 남북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다는 투의 표현이 있음에 우리는 유의하게 된다. 모처럼 10여 년만에 재개되는 적십자회담이며, 경의선 철도 연결 등에까지 의견일치를 보이기도 한 경제회담에 거는 우리의 국민적 기대와는 아주 동떨어진, 박두한 남북 대화 평가에 우리는 지레 실망을 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남북간에는 극단적인 불신과 적대감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위해 대화와 교류를 하자고 우리측이 선창했고, 북이 호응하여 1970년대 남북 대화가 실현됐다. 그러나 북은 적십자회담을 통해 선결조건으로 우리측의 체제무장해제를 고집했고, 조절위를 통해서도 미군철수 등 군사문제 우선 해결을 강변하다가, 불여의하자 회담을 깨버렸다.

이른바 「3자 회담」 여건 조성과 미군철수 문제를 내포한 것이 명백한 「불가침 선언-국회회담」을 느닷없이 내놓으면서, 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 경시대도를 밝힌 평양측의 제의 저의는, 근본적으로 1970년대 대화전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 함을 우리로서는 간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 11대 국회 임기 하루 전이요 아직 12대 국회 구성이 안된 시기에,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방미일정 발표 직후에 이 제의를 들고 나왔다는 시점선택에 주목을 하게도 된다. 분명히 우리 내부를 향해, 또 밖을 향해 전략적으로 노리는 복선이 있음직한 것이다. 이에 앞으로의 국회와 정국을 이끌어 나갈 3당대표가 모임을 갖고 초당적으로 긴밀하게 협의대처하며, 국회와 정당이 함께 논의하여 성의 있는 회담을 통보하기로 하고, 국회와 정당은 통일문제 관계당국의 방침에 호응, 긴밀히 협조하기로 합의했음을 국민 앞에 밝혔다. 각당 대표의 기민한 보조일치의 대응태세 갖추에, 우리는 경의와 진폭적 지지를 보낸다.

우리는 북측의 「국회회담」 제의에 나름의 견해를 피력하였지만 지피지기의 형안을 갖춰야 할 국회와 정계가, 통일문제 관계당국의 방침에 호응, 협조태도 견지로 일관한다면, 국민적 논의에 부질없는 이견노출의 여지는 없어질 것으로 크게 마음 든든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국민적 협조와 합의기반의 생산강화를 위해, 12대 국회에 초당적 평화통일정책 추진기구를 상설토록 할 것을 이 기회에 제안한다.

####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전략이나 책략 넘어 통일노력 기울기기를-

동아일보(1985. 6. 1)

우리 국회는 판문점에서 쌍방 국회의원 각 5명이 참가하는 예비접촉을 7월 중에 갖자고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1일 제의하였다. 우리측 제안대로 남북 국회의원 접촉이 내달중에 이루어진다면 1948년 두 지역에서 국회가 각기 구성된지 37년만의 공식 접촉이다.

제도상으로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4월 남북국회 예비회담을 판문점서 5월에 열자고 제의한 바 있다. 우리 국회가 일단 이에 응하기로 한 것은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평가하고자 한다.

우선 북한측이 국회회담을 통해 남북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 문제를 협의하자고한데 반해 우리 국회가 통일헌법 제정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한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국회의 고유기능이 법을 제정하는데 있다는 것을 모를 사람은 없다.

우리 국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도 1948년 9월 북한헌법을 제정, 공포하였으

며 그 후 개정이 필요할 때마다 최고인민회의 이름으로 단행돼 왔다.

이처럼 국회의 주요기능이 입법활동에 있다고 할 때 남북통일을 위해 양측 국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통일헌법 제정에 있다. 우리 국가가 관문점 예비접촉에서 통일헌법 제정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 국회는 남북국회회담을 통해 양측 국가가 기여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아낸 것이다. 더우기한국정부는 82년 1월 통일헌법을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으므로 남북국회가 할 일은 마련돼 있다고 하겠다.

대한민국 국가가 이처럼 관문점 예비접촉에서 통일헌법 제정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하고 나서으로써 남북 국회회담은 의제문제를 놓고 의견을 달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기능으로 보아 남북 국회회담은 당연히 통일헌법 제정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북측이 들고 나온 불가침선언에 관한 것은 불가침 보장의 실질적 책임 당사자인 양측의 책임당국에 맡겨야 한다. 불가침 선언 문제 협의를 위해 우리는 남북 최고당국자회담이 하루바삐 열려야함을 차제에 거듭 밝혀둔다.

그리고 남북 국회회담은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전략 완수를 위해 악용돼서도 안되고 정당 정파간의 당리당락을 위해 이용되어서도 안된다. 오직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모두는 정성을 모아야 할 것이다.

#### 남북 국회회담의 순리

-우리측 통일헌법기구 제의에 붙여-

한국일보(1985. 6. 2)

1일 국회 본회의는 충실한 초당적협의의 성과를 담은 대북서신을 만장일치로 의결 채택하였다. 오는 3일 이재영 국회의장 명의로 된 그 서신은 우리 시대의 민족사적 최대 과제인 평화통일 실현에 입법부로서 이바지할 성의있는 접근자세를 밝힌 것이다. 이 회신이 7월중 쌍방 국회의원 5명씩의 예비접촉을 제의한 것과 아울러, 북측의 긍정적 반응을 기대한다.

앞서 북측은 지난 4월 9일자로 우리측 국회에 보낸 서한에서 불가침 공동선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했었다. 그 후 북측은 고위급 당국자의 발언을 통해 마치 국회회담은 3자회담 촉진용인 것처럼 발상동기를 털어놓은 바 있다.

이에 관하여 이번 대북서신은 우선 입법기관의 고유기능은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당국이 체결한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토의하는 일 이라고 상기시켰으며, 불가침 선언문제는 남북한 정부당국회담을 통해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도 지적하였다. 이로 정연한 순리를 말한 것이다.

사실 북측이 현행 헌법을 보더라도 그 76조가 규정한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의 제1항은 헌법 및 법령을 채택 또는 수정 하는 일도 돼 있으며, 11항에 가서야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불가침 선언을 국회회담의 최우선 과제처럼 주장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다. 하나 우리측은 북측 주장도 아울러 다룰 수 있다는 유연한 수렴의 용의를 대북서신에 포함시켰다.

이 경우 우리 생각은, 쌍방의 국민대표 기구가 처음으로 획기적인 회담을 갖는 마당에 평화통일 문제 보다는 불가침선언이나 논의하며 그것마저 외국대표가 끼인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3자회담 접근용이라는 것은 거래의 염원과 민족의 자주의식에 비추어 명분이 설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모처럼 햇볕보게 될 남북한 정치인의 대화라는 데서 북측의 온갖 문제 제기는 상응한 경청의 대상으로서 위치부여는 할 수는 있다.

생각컨대 참다운 평화통일은 동일한 민족의식에 입각한 화합으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한편의 일방적 요구 관찰 방도라면 애당초 평화적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완전한 남북통일 실현이 현실적 일정에 오르게 된다면 당연히 헌일헌법 초안을 마련하고, 이것이 모든 민족성원이 참가하는 투표를 거쳐 채택된 연후에 자유로운 총선거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때마침 오늘의 남북관계에서는 적십자회담의 긍정적 진전과 경제회담의 지속으로 하여 두개의 대화 통화가 트여 있다. 앞으로 체육회담의 재개와 여타의 다방면적인 대화, 교류확대가 시대의 대세로서 필연시된다. 이같은 분위기 호전은 마침내 보다 높은 단계로 이행하게 마련일 것이다.

우리는 남북 국회회담의 실현을 낙관한다. 동시에 그것이 광복 40주년에 어울리는 우리 민족의 성숙된 자치능력을 감명케 할 좋은 계기가 되도록 희망해 마지 않는다.

# 남북대화 제39호

(1985. 8 ~ 1985. 11)

# < 목 차 >

|  |    |
|--|----|
| 제1부 평화통일에의 일관된 의지 재천명 .....              | 3  |
| 1. 전두환대통령 광복 제40주년 경축사 .....             | 3  |
| 2. 국내 주요 반응 .....                        | 8  |
| 제2부 남북대화의 진행 .....                       | 10 |
| 1. 제9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                   | 10 |
| 2. 제4차 남북경제회담 .....                      | 24 |
| 3.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                     | 36 |
| 제3부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 실현 ..... | 47 |
| 1. 성립배경 .....                            | 47 |
| 2. 교환방문 실현 .....                         | 54 |
| 3.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 .....            | 56 |
| 4. 국내외 주요 반응 .....                       | 58 |

## 제1부 평화통일에의 일관된 의지 재천명

### 1. 전두환대통령 광복 제40주년 경축사

#### -합의사항의 존중과 실천의지 강조-

전두환대통령은 1985년 8월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광복 40주년 기념행사의 치사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확고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합의사항에 대한 존중과 실천의지가 긴요함을 역설하고, 북한측에 대해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비롯한 관계 정상화 조치에 즉각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다.

전대통령은 동 치사에서 「광복후 강산이 네 번이나 변할 기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은 남북분단이라는 슬픈 현실」임을 지적, 「남북분단이야말로 민족의 역량을 낭비하고 민족의 안녕을 위협하는 온갖 시련과 고통의 근원이 되고 있음」을 개탄하면서 「하루속히 이 민족분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신뢰와 화합의 신기원을 열어 평화와 통일을 성취」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시금 천명했다.

전대통령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한 관계의 확고한 기초는 하루라도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남북한의 두 당국간에 상호불가침문제를 비롯해서 남북한의 정상적인 관계를 여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하루라도 빨리 토의하여 해결하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임을 밝혔다.

또한 전대통령은 근자에 북한측이 불가침을 선언하기만 하면 남북간의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상호불가침의 명제는 6천만 우리 겨레 모두가 한 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지상의 과제」임을 지적하고, 그러나 오늘날의 남북관계 현실에서는 「합의문서를 채택하는 것, 그 자체도 필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이를 준수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여부에 달려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북한측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바란다면, 이를 위한 「어떤 협정이나 선언을 채택하는 것과 함께 누가 보더라도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이행 할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노력과 조치」를 수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대통령은 1981년에 제의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에 북한측이 호응해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광복 40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남북관계의 새로운 차원을 펼침으로써 「분단과 분열의 금세기를 청산하고 통일과 화합의 새 세기를 건설하는 굳건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했다.

전두환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전문은 다음과 같다.

친애하는 국내외 6천만동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국통일의 신기원을 창조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드높은 열정과 힘찬 헌신 속에서 뜻깊은 광복4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40년전 오늘 우리 온 겨레가 감격과 환희에 겨워 한마음으로 확인하고 다짐했던 광복의 진정한 뜻은, 이 강토 위에 통일과 번영과 자주와 독립의 새 조국을 건설하여, 반만년동안 면면히 이어온 민족사의 정통성을 튼튼하게 발전시키고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대의에 적극 공헌하는 한민족의 영광스러운 소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광복의 참뜻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토분단이라는 멍에 속에서도 그날의 감격과 정열을 바쳐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건설의 줄기찬 노력을 기울여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북한공산집단의 무력남침이 가져온 폐허 위에 오늘 우리 모두가 보는 바와 같이 자유와 민주와 번영의 확고한 터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제5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저력은 더욱 힘차게 발양 되어 굳건한 안정과 성장속에서 선진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남북대화를 주도함은 물론 인류최대의 제전인 88올림픽을 개최하게 됨으로써 세계의 진운에 공헌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운과 국력이 힘차게 약동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 모습은 자주와 독립, 그리고 통일과 번영이라는 광복의 소명이 바야흐로 그 탐스러운 꽃망울을 맺는 대망의 시대를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 동안 온갖 시련과 도전을 불굴의 의지와 용기로서 극복하고 보람과 성과를 이룩해온 국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무한한 경의를 보내면서, 동포 여러분과 더불어 한민족의 세기를 향한 위대한 전진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동포 여러분

광복 후 강산이 네 번이나 변할 기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은 남북분단이라는 슬픈 현실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공산집단의 남침으로 우리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으며, 한 강토와 한 나라에서 같은 민족으로 살아야 할 우리는 이 순간에도 군사적 대치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북분단이야말로 민족의 역량을 낭비하고 민족의 안녕을 위협하는 온갖 시련과 고통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스스로의 생존과 번영을 확고히 보장하고 세계사의 진운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이 민족분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신뢰와 화합의 신기원을 열어 평화와 통일을 성취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우리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지금 남북한간에는 이산가족문제와 경제분야에 관하여 그리고 양측 국회간에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대화가 남북한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여는 뜻깊은 시발이 되도록 내실있게 이를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한관계의 확고한 기초는 하루라도 빨리 마련되어야 하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약속하고 그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교류와 협력의 원칙을 합의함으로써 튼튼하게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상호불가침의 명제는 6천만 우리겨레 모두가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지상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관해서 그것을 추구해 왔으며, 우리의 결의와 실천노력은 오랜 세월에 걸친 행동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헌법은 평화적 통일을 그 전문에 명시하고 모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함으로써 불가침을 국가최고의사로 민족과 세계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특히 지난 1982년에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의 실천조치로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고, 그 내용으로서 모든 형태의 무력 및 폭력사용 금지와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과 상대방의 내부분제 불간섭을 포함한 7개항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북한의 두 당국간에 상호불가침 문제를 비롯해서 남북한의 정상적인 관계를 여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하루라도 빨리 토의하여 해결하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인 것입니다.

북한측은 근자에 남북간에 불가침을 선언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남북간은 물론, 어떤 당사자 사이에도 합의문서를 채택하는 것, 그 자체도 필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이를 준수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있는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지난 40년간 줄기차게 추구해온 적화혁명전략을 포기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대남적화통일이라는 기본노선을 계속 고수할 경우, 그들이 말하는 불가침선언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위장구호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계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소 불가침조약을 비롯한 수많은 불가침조약이 그 일방의 과기로 휴지화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2년동안 북한측이 휴전협정을 얼마나 난폭하게 위반했으며, 그로 인해 북한측에 대한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불신이 얼마나 고조되었는가 하는 점이야말로 실천의지와 이행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북한측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바란다면, 이를 위한 어떤 협정이나 선언을 채택하는 것과 함께 누가 보더라도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이행 할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노력과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불필요한 외교적인 경쟁과 대결을 지양하고 국제무대에서 상호협력할 것을 밝히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도 상호불가침의 실천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아울러 남북당사자간의 합의가 실효성있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이해관계가 밀접한 주변 국가들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통의 관심과 이해를 개발시킴으로써 그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건설적으로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여기에서 본인은 북한측이 이러한 남북한관계의 기본적인 방향에 관해서 성실한 자세를 보이고, 현재 진행중인 남북회담의 내실을 거두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협력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본인이 81년에 제의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에도 긍정적인 자세로 나오게 되기를 본인은 지금도 소망하고 있으며, 이것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광복 40년이 되는 이 뜻깊은 해에 남북 관계의 새로운 차원을 펼침으로써 분단과 분열의 금세기를 청산하고 통일과 화합의 새 세기를 건설하는 굳건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온 겨레와 더불어 소망하는 바입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는 광복 40년과 더불어 민주정부수립 서른일곱돌을 맞이하는 지금, 진정한 민주주의 도착화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 국정주도세대가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진운에 순응하고 우리 세대의 의지에 순응하여 그 동안 방황과 혼란의 민주역정에 종지부를 찍고 37년동안의 숙원이던 민주주의 정착의 시대를 꽃피우는 「민주전진」에 매진함으로써, 우리의 정통성을 더욱 튼튼하게 살찌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의 민주에 대한 부질없는 논란을 할 때가 아니라 그 실천에 정진할 때입니다.

불안과 혼란의 악순환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후퇴를 가져올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터전 자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민주전진의 토대가 굳건한 안정과 화합을 더욱 강화하는데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기울여온 노력의 결실이 보이는 이 고비에서 모두가 참된 용기와 굳은 신념을 발휘하여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기필코 열어나갈 것을 다짐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민주와 번영의 통일국가를 이룩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애국선열에 대한 보답이며 후대에 대한 우리 세대의 영광인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하더라도 30여년의 어두웠던 지난날을 극복해낸 광복의 기백과 정신으로 뭉친다면, 우리는 금세기안에 선진과 통일의 새 역사를 반드시 창조해내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광복 40주년이야말로 그러한 전진을 향한 우리 모두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85년 8월 15일

대통령 전두환

광복 40주년에 즈음한 전두환 대통령의 치사에 담긴 주요 내용은 ◎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 재천명, ◎ 남북쌍방 합의사항에 대한 존중과 실천의지의 중요성 역설, ◎ 북한의 대남 적화혁명노선의 포기를 촉구한 것 등이다.

●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 재천명

우리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북간의 불가침을 비롯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 쌍방의 책임있는 당국간에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당면과제임을 강조하고 북한측이 이를 받아들여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1974년 1월 18일, 「남북한 상호불가침협정」 체결을 북한측에 제의하였는 바, 동 제의는

- 통일의 수단으로서 무력이나 폭력의 상호포기,
- 상호 내정불간섭,
- 현재 휴전협정의 효력 준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리고 1982년 1월 22일 천명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속에서 긴장 완화와 민족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서 제시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 체결 제의에서도

- 분쟁문제 해결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무력 및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을 완전히 지양하고 모든 문제를 상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제2항)하며
- 긴장완화와 전쟁방지를 위해 현존 휴전체제를 유지하면서 군비경쟁의 지양과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조치를 협의(제4항)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83년 1월 18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토의·해결할 4개 당면과제의 하나로서 「남북한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문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남북불가침, 무력불행사 등 전쟁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려는 우리측의 노력에 호응하기를 거부해 왔다.

금번 치사에서도 전두환대통령이 6.25와 같은 비극적 사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상호불가침의 명제는 6천만 우리 겨레가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지상의 과

제」임을 역설한 것은 불가침에 관한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남북 쌍방 합의사항에 대한 존중과 실천의지의 중요성 역설

전두환대통령이 남북간에 「합의문서를 채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이를 준수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국가간의 여하한 합의사항도 어느 일방의 실천의지가 결여되었을 때는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역사의 교훈을 일깨워줌과 동시에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백마디의 말이나 문서보다도 성실한 실천을 통해서 이를 입증할 것을 촉구한 것이라 하겠다.

「로카르노조약」(1925. 10 체결), 「독·소 불가침조약」(1939. 8 체결), 그리고 「월남 휴전협정」(1973. 1 체결) 등은 모두 계약 당사국간의 무력사용금지과 국경선의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어느 일방의 협정위반으로 파기되고만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북한측은 남북한이 불가침을 선언하면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1953년 휴전협정 체결이래 북한측이 자행한 휴전협정 위반건수가 총81,705건(1985.9 현재)에 달한다는 사실에서도 그들 주장의 허구성을 발견할 수 있다.

● 북한의 대남적화 혁명노선의 포기 촉구

북한측은 그동안 대남적화 혁명노선을 변함없이 추구해 왔으며, 이같은 기본노선은 1980년 10월 13일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채택한 당 규약 전문에서 그들의 당면 또는 최종목적을 한반도에서의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의 완수」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한테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북한의 「대남적화 혁명노선」은 민족화합과 한반도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화근이 되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진실로 불가침을 비롯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바란다면, 먼저 우리 사회를 공산화하겠다는 이른바 「대남적화 혁명노선」을 포기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2. 국내 주요 반응

전두환대통령이 광복 제40주년 경축사에서 평화통일로의 일관된 의지를 재천명하고 남북 쌍방간의 합의사항에 대한 존중과 이에 대한 실천의지의 중요성을 역설한데 대해 국내 언론계에서는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남북한관계 정상화와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모두가 통일에 대한 집념을 한시도 버리지 말고 민족화합과 민주통일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마땅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또한 남북의 대립은 「우리에게 계속 엄청난 국력의 소모를 강요」하며 「우리 앞날을 가로 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제거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전두환대통령의 광복 제40주년 경축사에 대해 국내 주요 신문들이 게재한 사설은 다음과 같다.

밝고 힘찬 역사전개를 위하여  
-해방 40년, 분단 40년을 생각한다-

경향신문(1985. 6. 5)

통일요원은 부끄러운 일

해방 40주년과 관련하여 우리가 필연적으로 치러야 할 과제는 무엇보다도 민족통일의 문제요 민주주의 실현의 문제이다.

해방 40년이 지나도록 통일분위기를 조성하기는 커녕 남북간에 점차 무너뜨리기 어려운 분단의 벽만 쌓아올리고 있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비록 남북분단이 외세에 의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상호간의 이질화를 극복하고 통일분위기를 성숙시키는데 있어서는 민족내부의 자주적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현재 몇 가닥으로 나뉘어 진행중인 남북접촉을 통해서도 남북간 긴장완화와 통일분위기 조성은 가능하다고 본다.

비록 당장 통일실현이 어렵다 하더라도 동·서독의 경우와 같이 서로간의 군사적 긴장을 풀고 제한된 교류를 확대해가며 공존의 분위기를 조성해간다면 대외적으로 얼마나 떳떳한 민족이 되겠는가. 통일에 대한 집념은 한시도 버리지 말고 민족화합과 민주통일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남북한 국민이 모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후략)

새로운 40년을 향하여  
- 광복 40년의 의미 -

중앙일보(1985. 8. 15)

4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다. 긴 역사의 눈금으로 재면 잠깐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광복 40년을 돌아보면 웬지 마음이 답답하고 아득한 느낌을 갖게 된다.

남다른 영욕의 교차와 파란의 기복으로 점철된 시간들이 사뭇 오랜 역사의 파노라마라도 보는 것 같다.

「해방」과 「광복」이라지만 우리가 사는 땅은 명암으로 양분되었고, 동포들은 그 사이에 높은 벽을 쌓고 살고 있다.

분단은 분단으로만 그치지 않고 3년여의 전쟁을 치르며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지금은 비록 총성은 멎었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다. 대치와 긴장의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 분단의 논리는 이 순간까지도 우리의 사고와 행동, 판단, 그리고 제도에까지 속속들이 영향을 미치며 한계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다. (후략)

광복 40년, 오늘의 과제  
- 영광과 고난의 역사 위에 서서 -

서울신문(1985. 8. 16)

광복 40년은 바로 국토분단의 40년이였다. 이 40년 동안 우리는 국가건설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였고 괄목할만한 발전도 이루었으나, 반면 국토분단으로 고난도 많이 겪었고 비애도 적지 않게 경험했다.

우리는 그 동안에 이룬 성취를 통하여 우리도 하면 된다는 자신을 얻게 되었으며 우리 민족의 잠재적 능력에 긍지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자신과 긍지는 우리 미래상을 낙관해도 좋을 중요한 요인들이다. 그러나 한편 남북의 대립은 우리에게 계속 엄청난 국력의 소모를 강요하며 우리 앞날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후략)

## 제2부 남북대화의 진행

### 1. 제9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 가. 경과

##### ㉠ 제1일 회의

제9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제1일 회의가 1985년 8월 27일 오전 10시 쌍방 각기 14명 대표단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인민문화궁전」 회의실에서 개막되어 2시간 동안 공개리에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는 북한적십자회측 이종률 단장의 개회선언과 인사로 시작, 대한적십자사 이영덕 수석대표의 인사, 한적 조덕송 자문위원의 축하 인사 및 북적 자문위원 강석송의 인사말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어 쌍방은 수석대표의 기초연설에 들어가기 앞서 1985년 8월 22일의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의 제3차 실무접촉에서 합의한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에 관한 합의서 문안을 한적 대표단 대변인 송영대 대표와 북적 대표단 대변인 박영수 대표가 각기 낭독하고 쌍방 수석대표가 이를 확인하였다.

한적 이영덕 수석대표는 기초발언을 통해, 먼저 지난 8차 회담에서 남북 쌍방은 5개항의 의제를 일괄토의하기로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5개항 의제에 설정되어 있는 사업들을 실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이산가족·친척들 간에 자유왕래를 실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어 이영덕 수석대표는 지난 15년간 끝어온 남북적십자회담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조국해방 40돐이 되는 올해를 기해서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이 직접 고향을 찾고 혈육을 만나는 사업을 실천에 옮길 것을 호소하면서, 모든 사업을 일괄적으로 토의·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합의서(안)를 제시하였다.

즉, 우리측은 지난 제8차 회담에서 쌍방이 의제 5개항을 일괄토의할 것과 자유왕래 원칙에 합의한 사실에 기초하여 제9차 본회담을 성과있게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남북적십자 본회담 의제 5개항의 사업실시에 관한 합의서(안)」과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자유왕래 절차에 관한 합의서(안)」을 비롯하여 본 회담에서 위임된 제반사업을 이행하고 보장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 및 남북적십자 관문점 공동사업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서(안)」 등 3개의 합의서(안)를 제시하였다.

이밖에도 우리측은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을 위한 적십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쌍방 적십자간의 긴밀한 협조를 도모하는 한편 상대측 지역에 체류하는 자기측 인원에 대한 협조와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에 「적십자 대표부」를 설치할 것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제1일 회의에서 우리측이 제시한 3개 합의서(안)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남북적십자 본회담 의제 5개항의 사업실시에 관한 합의서(안)

제9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에서 대한민국 대한적십자사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쌍방은 인도주의정신에 따라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조속히 재회의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첫째, 쌍방은 쌍방 적십자의 주관과 협조하에 의제 5개항 사업들을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사업은 당사자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 이산가족찾기 의뢰서와 회보서를 주고 받음으로써 실시하는 방법과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과정에서 알아내는 방법으로 병행하여 실시한다.  
이산가족찾기 의뢰서와 회보서의 교환에 따른 절차와 서식 등 구체적 방법은 제3차 본회담에서 대한적십자사가 제의한 방식대로 한다.
2.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방문과 상봉을 실현하는 사업은 자유로운 왕래를 통해 실시한다.  
상봉의 경우 당사자들의 희망에 따라 판문점이나 기타 장소에 면회소를 설치하여 상봉할 수 있도록 한다.  
판문점 면회소의 설치 및 운영은 「남북적십자 판문점 공동사업소」가 담당한다.
3.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서신거래는 봉합편지, 엽서 등 당사자들이 편리한대로 하며 전화·전보 등의 통신수단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남북의 서신거래 업무는 「남북적십자 판문점 공동사업소」가 담당하도록 한다.
4.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재결합은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다.  
재결합을 실천하기 위한 실무적 사항은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한다.
5.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사업은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에 제기하여 협의·결정하도록 한다.

둘째, 이상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당사자들의 자유왕래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셋째, 쌍방은 남북적십자회담의 합의사항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4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에서 합의한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와 「남북적십자 판문점 공동사업소」를 조속히 발족시킨다.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와 「남북적십자 판문점 공동사업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별도로 정한다.

넷째,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을 위한 적십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쌍방 적십자간의 긴밀한 협조를 도모하는 한편 상대측 지역에 체류하는 자기측 인원에 대한 협조와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에 각각 적십자대표부를 설치·운영한다.

다섯째, 본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상호 합의에 의해 폐기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

1985년 월 일

대한민국 대한적십자사를 대표하여  
대한적십자사 대표단  
수석대표 이영덕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를 대표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 대표단  
단 장 이종률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 및 「남북적십자 판문점 공동사업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서(안)

1. 설치목적

쌍방은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합의한 제반사업을 성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와 남북적십자 판문점 공동사업소(이하 '공동사업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2. 공동위원회

가. 기능

- (1)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쌍방이 합의한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하며,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조정·해결한다.
- (2)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재회사업과 관련하여 새로이 제기되는 모든 인도적 문제를 협의·결정한다.

나. 구성

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부총재(부위원장)급으로 한다.

다. 운영

- (1)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판문점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에 따라 서울 또는 평양에서 개최할 수 있다.
- (2) 공동위원회는 매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가지며, 어느 일방이 요청하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3)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 있다.
- (4) 공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은 공동사업소에 위임하여 실행하도록 한다.

3. 공동사업소

가. 기능

- (1)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기 위한 이산가족찾기 의뢰서와 회보서를 교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2)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서신 거래업무를 수행한다.
- (3) 판문점에서 상봉하기를 희망하는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을 위하여 판문점 내에서의

면회업무를 수행한다.

- (4)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관문점 통과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 (5) 공동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일반사무를 담당하며, 공동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위임되는 인도 주의 사업을 수행한다.

나. 구 성

공동사업소는 쌍방에서 각기 적십자 중앙기관의 부장급 소장 1명과 필요한 사무인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사업소의 부서와 그 사무인원의 수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다. 운 영

- (1) 쌍방은 판문점에 공동사업소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사용한다. 단 공동사업소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대한민국 대한적십자사는 「평화의 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는 「관문각」에 각기 공동사업소를 설치·운영한다.
- (2) 쌍방 공동사업소의 소장은 매주 1회씩 정기적으로 비공개회의를 갖는다. 일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가질 수 있다.
- (3) 쌍방은 본 합의서 서명·교환 후 1개월 이내에 공동사업소를 동시에 설치·운영한다.
- (4) 공동사업소의 건축문제와 공동사업소에 관한 운영세칙은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4. 본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상호 합의에 의해 폐기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

1985년 월 일

|                   |                         |
|-------------------|-------------------------|
| 대한민국 대한적십자사를 대표하여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를 대표하여 |
| 대한적십자사 대표단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 대표단   |
| 수석대표 이영덕          | 단 장 이종률                 |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자유왕래 절차에 관한 합의서(안)

- 1. 남북으로 왕래하는 가족의 범위는 헤어질 당시의 가족과 그후 출생한 자녀로 하며, 친척의 범위는 방계에서 8촌, 처가 및 외가로는 4촌으로 한다.
- 2. 남북으로 왕래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의 왕래 목적은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생사와 주소확인, 방문 및 상봉 등으로 하며, 기타의 목적으로 당사자들이 자유왕래를 희망할 경우에는 남북 적십자 공동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한다.
- 3. 남북으로 왕래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은 자기측 적십자가 발급한 남북왕래증명서를 지참한다. 동 증명서에는 왕래의 목적, 행선지, 체재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 4. 남북으로 왕래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에 대하여 해당 적십자는 출발 1개월 전에 왕래자들과 그들의 행선지를 상대측 적십자에 통지한다.
- 5. 남북으로 왕래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의 행선지는 그들의 고향 또는 헤어질 당시 그들이 살던

곳과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상대측 적십자의 협조하에 변경할 수 있다.

6. 남북으로 왕래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의 상대측 지역 체류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필요에 따라 상대측 적십자의 협조하에 연장할 수 있다.
7. 남북으로 왕래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의 군사분계선 통과지점은 관문점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 하여 더 늘릴 수 있다.
8. 남북으로 왕래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에 대한 숙식, 교통, 통신 등 제반편의는 상대측 적십자가 책임지고 보장한다.
9. 남북으로 왕래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긴급 구제와 의료상 보호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상대측 적십자가 무상으로 봉사한다.
10. 남북으로 왕래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에 대한 안전보장문제는 왕래자 전원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쌍방 적십자의 중개하에 쌍방당국이 책임지고 이를 보장하도록 한다.
11. 본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상호 합의에 의해 폐기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

1985년      월      일

대한민국 대한적십자사를 대표하여  
대한적십자사 대표단  
수석 대표 이 영 덕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를 대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대표단  
단 장 이 종 료

이상 우리측이 제시한 3개 합의서(안)에는 5개항 의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사업 실천방안들을 망라하고 있으며, 또한 제8차 회담에서의 북한측 제의·주장까지도 충분히 수용한 것이었다.

한편 북적측은 첫 발언을 통해 제8차 본 회담에서 「5개항 의제를 일괄 토의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인 방도로서 자유왕래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합의서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였다.

북적측은 동 제안에서 먼저 자유왕래 문제에 대한 합의서를 채택한 연후에 사업의 추진방도와 절차를 토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즉, 1단계로 「자유왕래문제」에 합의서를 채택하고

2단계로 자유왕래 이외의 기타 방도를 토의 해결하며

3단계로 의제의 구체적인 실현과 관련된 절차를 토의할 것을 제시하는 등 제8차 회담에서 쌍방이 합의한 「일괄토의·해결」 원칙과 배치되게 이산가족문제의 단계적 해결을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들과 친척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의제의 구체적인 실현과 관련된 절차 토의 시한을 1986년 9월까지로 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동 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이날 제1일 회의는 이같은 상반된 서로의 입장만을 피력한 채 실질토의없이 제2일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하고 끝났다.

## ② 제2일 회의

제9차 남북적십자 본 회담 제2일 회의가 제1일 회의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8월 28일 오전 10시에 속개되었다.

당초 이날회의는 첫날 회의에서 쌍방이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질토의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북한측이 8월 27일에 있었던 「모란봉경기장」 사건을 집중 거론하고 회의를 기피함으로써 본질문제의 토의에는 들어가지도 못한 채, 1시간 55분만에 끝나고 말았다.

제1일 회의가 끝난 8월 27일 오후, 우리 대표단 일행은 평양 시내 「학생소년궁전」에서 「청소년체조」를 관람키로 했으나, 북한측이 당초 약속과 달리 예정에도 없는 「모란봉경기장」으로 안내하여 북한정권의 선전을 목적으로 한 「카드섹션」과 대규모 전쟁 「매스게임」을 연출함에 따라 도중에 우리측 대표단은 매우 불쾌한 심정으로 관람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측이 「모란봉경기장」에서 5만명의 청소년과 10만명의 관중을 동원, 그들의 체제와 관련된 정치성있는 군사 「매스게임」을 연출한 것은 누가 보아도 그 진의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측이 「모란봉경기장」 참관과 관련, 그 내용·장소·시간 등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사전에 그 정확한 내용을 한적대표단에게 알려주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는 그들이 적십자회담을 계획적으로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또 이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정치적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한 쌍방 합의사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격으로 북한측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이날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한 1일 회의의 합의를 무시한 채 공개리에 「모란봉경기장」 사건을 새삼 거론·시비하면서 우리측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우리측 이영덕 수석대표는 북측의 이러한 상식이하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 회담을 순조롭게 진행시켜 의제토의에 들어가려는 입장에서 끝까지 자제하면서 북한측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본질문제 토의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측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모란봉경기장」 사건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계속 고집, 끝내 우리측의 제의에 불응함으로써 제2일 회의는 공전되고 말았다.

따라서 북한측의 이러한 태도야말로 회담분위기를 고의적으로 흐리게 하고 회담의 진전에 난관을 조성하는 불성실한 자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 회의는 본질문제 토의에는 들어가지도 못한 채, 제10차 회담을 1985년 11월 26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끝났다.

## 나. 국내외 주요 반응

중단 12년만에 서울에서 재개된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에 이어 평양에서 개최되는 이번 제9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에 즈음하여 도하 각 신문들은 이번에는 『본회담 의제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어 돌아오기를 온 겨레와 함께 회구한다』는 논지의 사설을 실었다.

더우기 9월 하순으로 예정된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상호교류를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회담이어서 『이번 평양회담에서는 9월 하순에 실시될 고향방문단의 교환을 한번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확대·실시하는 문제를 꼭 합의』하길 바란다고 하면서, 『제8차 회담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던 본회담 의제의 실현과 관련된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985년 8월 27일 첫날 회의에서 한적측이 그 동안 양측 합의사항을 토대로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정리된 3개 합의서(안)을 제시하고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서울과 평양에 각각 「적십자대표부」를 설치·운영하자고 제의한데 반해, 북한측이 「자유왕래문제」에 대한 합의서(안)만을 제시하고, 이를 채택한 후 사업추진방도와 절차를 토의해 나갈 것을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놓지 않은데 대해, 『이제는 5개항의 의제의 실천사업에 들어가야 할 단계』라고 논평하고 특히, 『적십자대표부의 설치·운영은 남북관계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제안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촉구하였다.

또한 제2일 회의에서 북한측이 「모란봉경기장」 사건을 집중·거론하고 시종 우리측에 사과를 요구하는 등 적반하장의 자세를 보이면서 회의를 기피함으로써 실질토의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끝난 데 대해 『전쟁놀이로 더욱 멀어진 남과 북』, 『북의 정치적 책동』, 『북한의 총검술 선전』이라는 등의 혹평을 하면서 북한측이 『실질적인 의제토의를 기피한 채 회담분위기를 손상시키려는 저의를 나타낸 것』이라며 『회담을 정치선전 무대화하고 대외선전의 수단』으로 삼는 북측의 무성의를 공박하였다.

또 북한측의 이러한 자세에 대해서 『대외적으로는 민족적 수치이며, 대내적으로는 회담을 방해하는 반민족적 비신사적 행위』라고 논박하면서 『남북적십자회담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선전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대외선전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된다』면서 북한측 태도의 명성을 촉구하였다.

그러면서도 『한적의 인내성 있는 노력으로 적십자회담이 결렬되거나 고향·예술단의 교환계획이 백지화되지 않고 10차 회담의 일자를 정할 수 있었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 주요언론들도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한적측이 제의한 3개 합의서(안)은 『그간의 협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켰으며, 북측 제안까지도 포괄적으로 반영한 것이어서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논평하였다.

특히 서울과 평양에 「적십자 연락대표부」를 설치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실현된다면 남북교섭의 다방면에 걸쳐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 반면, 북한측이 본회담 의제의 구체적 실현과 관련된 절차토의 시한을 1986년 9월까지로 제의한데 대해서는 『진진을 바라는 이산가족들에게 큰 실망을 준 것』이라고 논평했다.

또한 「모란봉경기장」 사건으로 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데 대해서는 『북한측이 정치선전을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이렇다할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분단 40년 동안 쌓인 쌓방의 불신감이 강해 남북대화는 좀처럼 잘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상을 더욱 짙게 했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북한측 자세에 대해 『손님을 연회석에 초대해 놓고 식탁에 침을 뱉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고, 『금후 회담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나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교환의 실현 여부가 앞으로의 남북대화와 교류의 행방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9차 남북적십자본회담을 전후로 국내외 주요 언론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 《국내 반응》

서울·평양 왕복회담

중앙일보(1985. 8. 26)

27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을 위한 우리측 대표단·수행원·보도진 등 84명이 26일 판문점을 통해 북녘 땅에 들어섰다.

우리측의 입북은 73년 7월 14일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 대표단이 3박 4일간의 북한체류를 마치고 철

수한 이후 12년 1개월여만의 일이다.

대표단을 평양으로 보내면서 우리는 이번 회담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어 돌아오기를 온 거래와 함께 회구한다.

지난 5월 하순 서울에서 열린 제8차 회담에서는 본의제 토의에선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그러나 남북적 회담이 결렬된지 12년만에 재개되어 북한측 요원 84명이 다시 서울에 왔다는 사실 자체와 의제에 없던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상호 방문에 합의한 것은 큰 성과였다.

이번 9차 회담에서는 본의제의 실질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본의제는 이미 72년의 예비회담에서 ① 주소·생사의 확인, ② 자유방문 및 상봉, ③ 서신거래, ④ 재결합, ⑤ 기타 인도적인 문제 등 5개항을 확정지었다.

이같은 의제는 본회담에서 순차적인 토의가 시작됐었으나 73년 8월의 회담결렬로 중단되고 말았다.

지난 서울회담(8차)에서 한적측은 다시 5개 의제의 순차적 토의를 제의했다. 그러나 북측은 전체 의제의 일괄토의를 주장하고 그 중에서도 자유왕래가 가장 급선무라고 강조, 그것을 중점적으로 토의하자고 나왔다.

한적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배제된다면 그 같은 토의방식에 응하겠다고 양보했으나 본의제의 실질적인 진전은 전혀 없었다.

이번 9차 회담에서는 북한측의 주장대로 자유왕래 문제가 먼저 토의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의 반공관계 법률의 폐지, 간첩을 포함한 정치범의 석방 등 내정간섭적이고 비적십자적인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적십자회담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루라도 빨리 이산인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이 말해주듯 회담이 그렇게 속도있게 진전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상황 아래서는 고향방문단의 상호 교류사업을 지속적·주기적으로 떠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번 평양회담에서는 9월 하순으로 예정된 고향방문단의 교환을 한번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실시하는 문제에 꼭 합의하기를 기대한다.

이것은 적십자정신으로 보나 민족의 동질성 회복의 측면에서 시급하고도 절실한 당위적 과제다.

회담성과와는 별도로 서울·평양 왕복회담 자체가 갖는 의미도 결코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남과 북은 지난 10년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양측 요원이 서로를 살펴보고 접촉을 확대, 반복해 나갈 때 민족동질성의 회복과 남북화해도 한층 진전될 것이다.

#### 남북적대표부 설치의 필요성

#### - 「5개항」의 실천사업에 들어가야 할 단계-

경향신문(1985. 8. 27)

9월에 있을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교류를 앞두고 지금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적본회담은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왜냐하면 이번 회담에서는 서울회담에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던 본회담 의제의 실현과 관련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회담의 결과만을 놓고 볼 때 72년의 예비회담에서 확정지은 바 있는 이산가족들의 ① 주소·생사확인, ② 자유방문 및 상봉, ③ 서신거래, ④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⑤ 기타 인도적인 문제라는 5개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함으로써 본회담은 다시 정돈상태에 빠지지 않

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행히 부수적인 성과로서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상호방문 문제가 제기되어 지난 주의 3차 실무접촉을 통해 최종합의를 보게 된 것이다. 이번 본회담의 앞날에 어느 정도 서광을 비치게 해 준 것이다.

지난 5월의 서울회담에서는 이미 합의된 5개항의 의제에 대한 순차토의와 일괄토의로 양측의 의견이 엇갈려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전제조건없는 일괄토의에 응하겠다는 한적측의 양보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끝나버렸다. 그와 같은 결과는 12년만의 회동에 기대를 걸었던 우리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미 합의된 의제에 관한 토의방법이나 형식론을 가지고 더 이상 승강이를 되풀이할 단계는 지났다고 본다.

물론 중간에 긴 공백기간이 있었지만 남북적십자회담이 시작된지 14년이 된 마당에 아직도 구체적인 진전없이 의제에 대한 토의방법을 싸고 시간을 허송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측의 제안대로 이제는 5개항에 대한 실천사업에 들어가야 할 단계이며 적어도 이번 회담에서는 실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합의서안을 교환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합의서안이 일단 교환된다면 목적사업실시를 위한 기구도 자연히 필요하게 될 것이다.

지난번 서울회담에서 양측은 각각 그러한 기구로서 적십자공동위원회와 판문점공동사업소를 제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는 이러한 양측의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명칭이야 어떻게 되었든 5개항의 목적사업실시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를 일단락 지어주기 바란다. 그리고 공동위원회와 사업소설치문제와 함께 서울과 평양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토의와 진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번 9차 본회담을 통해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하게 된다면 현재 진행중인 경제회담, 국회회담과 IOC 중재로 열리게 될 체육회담 등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 믿는다. 순수한 인도주의에 입각한 사업을 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적십자회담이야말로 모든 대화의 원천이요 기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양측대표는 각종 남북대화의 성과를 좌우하게 될 이번 회담의 비중을 재인식하고 사소한 형식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대국적인 진전을 이루어주기를 거듭 촉구한다.

#### 서울·평양에 대표부 설치하자

서울신문(1985. 8. 28)

어제 평양에서 열린 남북적십자 제9차 본회담에서 한적측의 이영덕 수석대표는 기초연설을 통해 그 동안의 양측 합의사항을 토대로 가장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정리된 제안을 제시했다. 이수석대표의 제안을 검토해 보면 실천방안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어, 이제 적십자회담은 실천방안을 위한 토론보다 실천의지가 더 중요한 고비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이수석대표는 첫째로 남북적십자 본회담 의제 5개항의 사업실시에 관한 합의서안을 내놓았다. 본회담 의제 5개항은 이미 70년대 초에 합의한 것으로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제8차 본회담에서 한적측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수석대표는 이를 정식으로 문서화하여 이번에 제시했다.

둘째로 한적의 이수석대표는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와 판문점 공동사업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을 내놓았다. 공동위원회와 공동사업소도 이미 지난 72년 제4차 서울본회담 때 설치원칙이 합의되었던 것으로 지난 제8차 서울회담에서도 양측은 다같이 조속한 설치를 주장한 바 있다.

세째로 이수석대표는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자유왕래절차에 관한 합의서 안을 제시했다. 자유왕래 문제는 지난 제8차 서울회담 때 북측측이 무엇보다 선결문제라고 주장하던 것으로 당시 북측측은 그 중요성만을 강조했을 뿐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내놓지 않았었다. 한적측은 이에 관해 그들 대신 구체적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회담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한적측이 적십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긴밀한 협조와 업무수행을 위해 서울과 평양에 각각 적십자대표부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한 점이다. 적십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회담의 목적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어떤 형태든 연락대표부를 서울과 평양에 두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지난 82년 초 국정연설을 통해 각료급 전권대표를 임명하여 각기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를 설치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이같은 정치적 성격을 띤 대표부의 설치가 시기상조라면 우선 적십자대표부만이라도 설치 운영해 보는 것은 남북한관계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적십자회담이 재개된 이후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을 교환방문키로 합의한 것은 커다란 성과의 하나이다. 분단 40년만에 규모는 작지만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미흡하다. 이산가족들이 서로 소식을 알리고 만나보고 재결합까지 할 수 있게 하는 일은 시범사업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하루빨리 실천방안에 합의하여 모든 이산가족에게 기쁨을 안겨줄 수 있도록 회담이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 북의 정치적 책동

-우리측을 선동 집회에 얹힌 무례-

조선일보(1985. 8. 29)

북측측이 한적 대표단의 매스게임 관람 중단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것은 적반하장행위이며, 회담 진척을 기피하려는 의도적인 술책이다.

우리측이 매스게임 관람을 중단한 것은 그 내용이 남·북간에 사전에 약속되었던 비정치성의 원칙에 위배되었기 때문이다.

북측이 보인 매스게임 행사는 단순한 체조대회나 운동대회가 아니라 완전한 정치성 집회였다.

카드 섹션이 드러낸 김일성 개인숭배와 각종 혁명구호, 깃발의 이데올로기적 선전선동성, 군중들의 목선 정치구호제창, 거기다 어린 학생들의 살벌한 총검술과 집회전체의 정치적인 주제 등이, 우리측 대표단을 결과적으로 북측 정치집회에 얹혀 놓은 형국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것은 우리측 공식대표단에 대한 손님접대도 아니며 의전에도 어긋날 뿐더러, 예의를 몰각한 무례한 도발이 아닐 수 없다.

우리측 대표단이 평양에 간 것은 오로지 이산가족들의 문제를 풀기 위한 인도주의적인 과제를 차분한 실무적 차원에서 다루려 한 것뿐이다. 우리측으로서는 그 밖의 다른 일, 특히 북의 정치성 집회에 끼워 얹힌 채 그들의 김일성 왕조 예찬과 혁명욕 발산의 호전적 분위기에 동석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 것이다.

애초부터 우리측은 북이 이럴 가능성에 대비하여 일체의 정치적 일탈을 하지 말자는 사전 약속까지 미리 해두었다.

그러나 북측은 끝내 지금까지의 속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일종의 속임수를 써서 우리측 대표단을 저들의 살벌한 정치집회장에 동석시키고야 말았다.

이에 우리측 대표단은 합당한 절차에 따라 항의를 제기했으며, 북측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써, 우리측으로서는 상대방의 무례에 대한 정당한 자구행위로서 관람을 중단하기로 했던 것이

다.

한 마디로 이번 사태는 회담진척을 기피하기 위한 북측 강경노선의 고의적인 도발책동이었으며, 아울러 그 책임마저 우리측에 전가하려는 계략의 일환이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우리측에 뻔뻔스럽게도 사과할 것을 강변해 왔다. 마치 6·25남침을 자행해 놓고서도 그것이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생떼를 쓰는 것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파렴치한 작태였다.

이번 사태를 놓고 생각할 때 북측은 역시 이산가족 찾기같은 인도적인 과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새삼 재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그들은 여전히 이러한 사업을 통한 북한사회의 약간의 개방이나 외부로의 노출을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간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에게 우리의 원칙까지를 녹녹히 양보하면서까지 나아가려 할 필요성은 추호도 느끼지 않지만, 1천만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숭고한 민족적 소명을 위해 끝까지 원칙 속의 인내를 자기하면서 저들의 개심을 촉구할 따름이다.

북측은 이 사업에 정치성을 개입시키려는 의도를 즉각 불식하고, 회담을 교착시키려는 고의적인 술책을 지양해야 하며, 그 술책으로 우리 대표단을 자기들의 정치집회의 동석자로 만들려했던 실례와 무례에 대해 정중히 사과해야 마땅하다.

북한의 총검술선전  
-남북적 평양회담의 시말-

중앙일보(1985. 8. 29)

남북적 제9차 회담(27~28일·평양)이 아무런 진전없이 끝났다. 이것은 북한이 정치선전을 앞세우고 회의진행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단순한 학생들의 무용체조」라 하여 우리측에 보여준 것은 김일성우상화와 정치적 훈련을 받고 동원된 대중들의 광적인 합성, 그리고 청소년들의 총검술이었다.

나이 어린 학생들을 시켜 휘두른 총검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가를 생각하면 실로 한심스럽고 통탄할 일이다.

우리 대표단이 차마 볼 수가 없어 30분만에 퇴장하자 북한은 매스컴을 총동원하여 『오만무례한 행위』이며 『참을 수 없는 모욕』이고 『회담분위기를 흐리려는 고의적인 방해행위』라고 비난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북적대표단은 28일의 제2일째 회의를 정상대로 개최, 비공개로 열기로한 약속을 깨고 공개리에 우리 대표단의 퇴장을 비난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공식사과를 강박하고 실질문제 토의에도 응하지 않았다.

우리측이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실질문제 토의에 들어가자고 요구했으나 북적의 이종률단장은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교류를 재고치 않을 수 없고 더 이상의 대화도 필요없다』는 등 폭언을 서슴치 않았다. 그들이 과연 대화를 하려는 것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한적의 인내심있는 노력으로 적십자회담이 결렬되거나 고향·예술 교환계획이 백지화되지 않고 10차 회담일자를 정할 수 있었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북한은 이번 회의를 주관하면서 결코 실수라고 볼 수 없는 몇 가지 위약을 저질렀다.

보도진들에게 통신 편의를 제대로 제공치 않았다. 이것은 8차회담 때 우리측이 배푼 것과 비교할 때 명백한 상호주의 원칙위반이다.

문제된 27일 하오의 학생체조도 원래는 그 장소가 옥내로 결정됐었으나 몇차례의 변경을 거쳐 옥외로 바뀌면서 내용이 총검술로 둔갑됐다.

9차 회담과정에서 나타난 북한의 행동에서 우리는 몇가지 분석적 결론을 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북한은 회담을 치러나가는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감당키 어려운 것 같다. 84명의 손님을 맞아들이고 회의를 치르는 비용도 결코 만만치는 않다. 더구나 북한은 스스로 지상낙원이라 선전해 왔다. 거기에 걸맞는 환경정리 비용도 지금의 북한 경제력으로는 힘겨운 일이다.

이런 단계에서 우리 회담대표단이나 민간방문단을 맞아들일 자신과 용기가 북한에는 없을 것이다.

평양에는 남북대화를 반대하는 강경파가 아직도 강력한 것 같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저지른 일련의 약속위반은 그들 보수파의 작용으로 보아야 한다.

더구나 회담을 빨리 끝내고 실천사업으로 들어가자고 촉구하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한 9차 회의에서의 한적의 의욕적인 도전은 평양의 강경파를 자극하고 온건파를 궁지에 몰리게 했을 가능성도 예상된다.

어쨌든 이번에 북한이 보여준 무법자적 작태는 대외적으로는 민족의 수치이며 대내적으로는 회담을 방해하는 반민족적·비신사적 행위였다. 세삼 우리는 북한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섬뜩한 체험을 한 셈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헤어질 수 없는 숙명적인 동족관계에 있다. 북한이 좀더 성숙되고 자각된 모습으로 나와서 다가오는 추석방문단 교류와 제10차 서울회담이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평양회담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전쟁놀이」로 더욱 멀어진 남과 북-

경향신문(1985. 8. 29)

평양에서 열린 제9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은 「모란봉경기장사건」을 이유로 해서 아무런 진전도 없이 막을 내렸다. 그와같은 결과는 한가닥 희망을 걸고 초조하게 회담결과를 지켜보던 6천만 겨레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동시에 한없는 실망을 안겨 주었다.

모란봉경기장에서 벌어졌던 북한의 해괴한 정치쇼와 한적대표단의 퇴장사태를 놓고 여기서 다시 시비를 가려 보고 싶지는 않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1천만 이산가족들에게 재회의 길을 열어주자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어느쪽을 비방하거나 비호하는 일은 결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사진보도를 통해 나타난 북한청소년들의 총검술 장면 이외에 우리를 한층 당혹스럽게 한 것은 북적 이종률 단장의 이성을 잃은듯한 폭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이면 고향방문이고 뭐고』 운운한 생트집같은 그 언동에서 그들의 속셈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았다.

한적대표단이 『단순한 학생무용체조』라는 말만을 믿고 모란봉경기장에 따라갔다는 사실은 이영덕 수석대표의 말대로 『쌍방실무대표간의 의사소통의 잘못』으로 빚어진 결과임이 명백하다.

이대표는 그것을 『분단 40년간 첨예하게 대립되어온 남북관계에서 빚어진 의식과 시각의 차이에서 온 가슴아픈 현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설명, 사건의 현실적인 이해를 촉구한 점은 대화를 진지하게 유도하려는 끈질긴 노력의 표현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의제토의를 기피한채 「손님」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한 북적대표단의 태도는 분명히 회담분위기를 손상시키려는 저의를 나타낸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

더우기 북한측이 모란봉경기장사건을 핑계삼아 『9월 20일의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

도 재고하겠다』는 고압적인 태도로 나온 것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깨뜨릴 수 있다』는 그들의 상투적 수법을 재연하는 것처럼 보였다. 8차 실무회담에서의 합의와 3차례의 실무접촉을 통해 얻어진 결과마저 번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국제관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전혀 무의미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우선 호전적인 그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 대표단이 모란봉운동장의 15만 관중앞에서 김일성 찬양일색의 마스크 입 관람을 거부하고 퇴장함으로써 그들에게 준 충격은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쌍방이 상호 구체적인 의제를 들고나가 절충을 시도했었다는 기록만으로서도 「작은 진전」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 다음 회담 일정을 결정하고 넘어간 것도 다행한 일이었다.

아직은 성급한 기대나 좌절은 있을 수 없다. 오직 정의와 인내로써만 앞으로 수없이 닦쳐올 난관을 극복하고 분단의 장벽을 허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앞으로의 회담에서는 이번과 같이 의제 외의 문제로 위기를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이미 합의된 본의제의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단계로 들어서야겠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 《해외반응》

##### [미 국]

뉴욕타임즈(1985. 8. 25)

- 지금의 한반도는 40년전 분단되었을 당시와 같지 않다. 약 천만에 달하는 이산가족들에게는 재회의 새 희망이 있는 듯하다.

워싱턴타임즈(1985. 8. 29)

- 북한의 무술훈련과 군사적 자세는 전적으로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데 의견들이 일치되고 있다.
- 한때 북한측은 민간인 교환방문 계획마저 취소할듯한 기색이었으나 회담이 끝나기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 [일 본]

아사히신문(1985. 8. 28)

- 한국측의 적십자 대표부 설치제안은 본회담에서는 첫 제안이었으며, 이것이 실현된다면 남북 교섭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회담에서 한국측이 이산가족의 자유왕래 문제에 있어 북한 주장을 크게 수용하는 실무적인 새 제안을 해 어떤 합의가 기대되고 있었던 만큼 더욱 실망의 소지가 강하다.

상계이신문(1985. 8. 28)

- 북한측이 1년간의 기한을 제시함으로써 급진전을 바라던 이산가족을 중심으로 실망감이 일고 있다.
- 한국은 적십자회담과 같은 인도적 테마를 실마리로 관계개선을 지향하고 있으나 북한은 정치적 회담에 중점을 두고 적십자회담과 같은 관계개선에는 냉담함이 금번 회담으로 드러났다.

요미우리신문(1985. 8. 29)

- 군사 매스게임 사건은 다시한번 남북 대화가 순조롭게 진척되지는 않을 것을 증명한 것이다.

도쿄신문(1985. 8. 29)

- 금번 사건은 분단 40년동안 쌓인 쌍방의 불신감이 강해 남북 대화는 좀처럼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상을 더욱 짙게 했다.
- 한국측의 양보로 이산가족찾기 협의는 한국측 주도로 진전되고 있는 것이 확실하며, 북한측이 이에 찬물을 끼얹어 자신들의 주도로 되돌리고자하는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쾌이신문(1985. 8. 30)

- 남북회담이 결렬된 원인은 매스게임 때문이며 한국대표단이 이를 정치선전이라고 주장, 일제히 퇴장해 버린 것은 당연하다.
- 북측은 한국대표단에 무례하다고 화를 냈으나, 한국대표단을 맞으면서 그같은 매스게임을 연출한 북측이 무례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손님을 연회석에 초대해 놓고 식탁의 음식에 침을 뱉는 것과 같다.

[기 타]

스웨덴 Svenska Dagbladet (1985. 8. 29)

- 군사 매스게임 사건이 일어났으나 한국측이 대화의 계속을 희망한데 반해 북측은 계속 사과를 요구하며 대화의 계속을 거부하는 자세였다.

나이지리아 Daily Times (1985. 8. 29)

- 평양에서의 남북적십자회담은 북한측의 김일성 찬양 정치쇼때문에 결렬되었다.
- 북한측은 한국측에게 10만명의 군중을 동원, 혁명구호를 외치게 하고 군사 매스게임을 보여주어 한국측 대표단을 도저히 참을 수 없게 했다.

## 2. 제4차 남북경제회담

### 가. 경과

제4차 남북경제회담은 쌍방 각기 7명의 대표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1985년 9월 18일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려 1시간 55분간 비공개리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도 남북 쌍방은, 제3차 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각기 「남북간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 추진과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측이 쌍방 제안에 대한 대체토의를 회피함으로써 서로의 입장을 개진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우리측 김기항 수석대표는 첫 발언을 통해 지난 제3차 회담에서 남북 쌍방이 「남북간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 추진과 부총리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이를 토대로 작성한 우리측의 합의서(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대표단은 본 회담에서 쌍방이 제시한 합의서(안)에 대한 대체적인 토의를 거쳐 주요 문제들에 대한 상호 이견을 좁힌 다음,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토의와 문안조정을 위해 쌍방 경제회담 대표 각 3명과 해당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각기 7명 이내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1개월 이내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합의서에 대한 내외의 신뢰와 기대를 더욱 북돋우고, 이에 대한 쌍방의 실천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분단 40년이 되는 금년안에 우리측이 제의한 무연탄 30만톤을 구입하는 문제와 쌍방간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경의선 철도 연결사업의 연내착수를 희망하고 이에 대한 북한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거듭 촉구하였다.

이날 회담에서 우리측이 제시한 검토의견과 합의서(안)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자교류에 관한 사항.

#### (1) 교류품목 :

교류대상 품목을 선정하는 것은 물자교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순서입니다.

쌍방은 이미 판매희망품목과 구입희망품목을 각기 제시해 놓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는 쌍방의 의견이 일치되는 여러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쌍방의 의견이 일치되는 품목들을 합의서에 명시하고 쌍방 합의에 따라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2) 교류량과 통관 및 검사

교류량과 통관 및 검사에 대해서는 다소의 견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서로 의견을 조정하면 기본적인 합의를 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 (3) 거래방식과 결제업무 취급은행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측은 귀측의 주장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여 거래방식은 청산거래방식으로 하고 결제업무의 취급은행은 남과 북의 은행이 직접 담당하는 방식으로 하되,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을 조속히 착수·실천하기 위하여 청산약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쌍방이 공통

으로 거래하고 있는 제3국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의해 거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교류당사자, 가격결정방법, 결제통화, 수송방법, 관세문제

이들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으므로 실무회의에서 협의하여 문안을 조정토록 하면 될 것입니다.

둘째,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

(1) 사업대상

경제협력 사업대상에 있어서는 제1, 2차 회담과정에서 쌍방간에 의견이 일치된 분야 즉,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지하자원공동개발 등을 합의서에 명시하고 쌍방 합의에 따라 다른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2) 사업규모, 방법 및 형태

이 문제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경제협력사업의 당사자간에 협의·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조세와 관련한 특혜 부여문제

쌍방의 체제에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으나, 쌍방간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및 기타 조세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4) 토지 및 자원 등 이용료문제

이 문제는 우리측 개념으로 보면 개인의 소유권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셋째,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설치사항.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간의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쌍방의 부총리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므로 기본적인 견해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위원회의 기능과 운영문제는 쌍방의 제안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으므로 원만히 타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기능과 관련하여 앞으로 설치될 공동위원회는 채택될 합의서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특히 강조되어야 하겠습니다.

공동위원회의 분과위원회는 우리측이 제안한 물자교류 분과위원회와 경제협력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시 별도의 특별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여 적절히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측은 공동위원회의 산하에 실무문제를 관장하는 공동사무국을 둘 것을 제안하고 있고 귀측은 사무장을 둘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북간의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이 확대·발전될 것에 대비하여 상설적인 실무기구가 필요할 것이라는 우리측 입장에 대해서는 귀측도 이견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나는 이상과 같은 우리측의 의견을 밝히면서 지난 3차 회담 때에 쌍방이 제시한 합의서(안)을

토대로 하여 우리측이 새로이 검토·수정한 안을 다음과 같이 제의하는 바입니다.

남북간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 추진과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합의서

쌍방은 호혜와 평등 및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간에 직접적인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을 희망하고,

쌍방간의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사업의 추진이 우리 민족의 번영과 복지의 증진과 경제적 유대 회복 및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며,

신의와 성실로 상호간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할 것을 다짐하면서,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 설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상호간의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지원조치를 취한다.
2. 물자교류 또는 경제협력사업의 당사자는 품목별 또는 사업별로 쌍방이 각각 지정하는 해당 기관으로 한다.
3. 쌍방간의 물자교류는 쌍방이 따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되 다음과 같은 방침에 따라 실시한다.
  - 가. 교류대상품목은 우선 다음 품목으로 시작하며, 상호 보완의 원칙에 따라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수 있다.
    - 남측이 판매할 품목 : 철강재, 섬유, 소금, 감귤, 남해수산물(김, 미역, 굴, 멸치 등)
    - 북측이 판매할 품목 : 무연탄, 철광석, 마그네샤크링카, 명태, 옥수수.
  - 나. 교류량은 공동위원회에서 쌍방의 수급사정을 감안하여 연간 교류규모를 조정한 후 품목별로 교류당사자간 상담을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 다.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교류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라. 거래방식은 청산결제방식으로 하되 쌍방 은행간에 청산약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제3국 은행발행 신용장에 의해 거래한다.
  - 마. 결제업무는 쌍방이 지정하는 남과 북의 은행이 직접 담당하도록 하되 쌍방 은행간에 청산약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쌍방이 공통으로 거래하고 있는 제3국 은행이 담당하도록 한다.
  - 바. 결제통화는 스위스 프랑화로 한다.
- 사. 쌍방은 상호간의 물자교류에 대하여 물자의 대외거래시 부각되는 관세와 이와 유사한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아. 쌍방은 타방으로부터 구매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 검사, 사고처리 등에 있어 일방이 대외거래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4. 쌍방간의 교류물자의 수송방법은 교류물자의 특성·중량·운송비 등을 감안하여 교류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철도, 배, 자동차를 합리적으로 이용한다. 다만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쌍방은 교류물자를 수송하는 선박의 입항, 정박, 하역 및 출항 등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며 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보장한다.
  5. 쌍방간의 경제협력사업은 쌍방 주민의 공동번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우선 다음사업으로 시작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다.
    - 가. 공동어로구역 설정사업
    - 나. 지하자원 공동개발 사업
  6. 경제협력사업의 규모, 실시방법 및 조건, 실시시기 등에 관하여는 경제협력사업의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7. 쌍방은 타방의 경제협력사업의 당사자가 자기 지역 내에서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쌍방이 합의할 경우에는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관세 및 기타 조세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
  8. 쌍방은 타방의 경제협력사업의 당사자가 자기 지역 내에서 경제협력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재, 설비와 운영물자 등을 자기 지역에 반입할 경우에 당해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재등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속하게 반입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
  9. 쌍방은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 사업에 따른 물자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의선 철도를 연결하기로 한다.
  10. 쌍방은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 사업에 따른 해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남측은 인천항과 포항항, 북측은 남포항과 원산항을 각각 개방하고,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사업이 진전됨에 따라 다른 무역항도 개방하도록 한다.
  11. 쌍방은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사업에 필요한 통신시설을 신설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이를 확장한다.
  12. 쌍방은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 사업의 타방 당사자가 구매예정물자의 검사 또는 경제협력 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위하여 자기 지역 또는 해역을 방문하여 검사 또는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3. 쌍방은 타방의 물자교류 또는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인사의 왕래 및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교통·통신·숙식·의료 등에 관하여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14. 쌍방은 타방의 물자교류 또는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된 인사가 자기지역 또는 해역에서 입은

신체상의 위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타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15. 쌍방은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을 실현하여 남북간 경제적 유대를 회복하고 이상과 같은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공동의 협상 및 이행기구로서 이 합의서 서명후 30일 이내에 쌍방의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6.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부총리급 공동위원장 1명, 장관(부장)급 부위원장 1명, 당국 및 경제계 인사로 구성되는 장·차관(부장·부부장)급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나. 공동위원회 안에 물자교류 분과위원회와 경제협력 분과위원회를 두고 필요시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특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공동위원회 또는 각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쌍방 각각 5명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쌍방 공동위원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하고 위원은 국장급으로 한다.

라. 공동위원회 산하에 실무문제를 관장하는 공동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장은 공동위원장이 공동위원회 위원중에서 각각 지명하며 사무국에는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사무원을 두고 동 사무국의 위치는 판문점으로 한다.

17.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가. 남북간의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사업에 관한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나. 남북간의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의 기본방향과 방법을 협의·결정한다.

다. 남북간의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의 대상과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협의·결정한다.

라. 남북경제 거래기관들 사이에 제기되는 분쟁문제를 협의·조절한다.

마. 남북간의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을 조화있게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제기되는 기타 문제들을 협의·결정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며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다.

18.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가. 공동위원회에서 토의·결정 또는 위임된 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협의·결정하고, 그 이행을 보장한다.

나. 소관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 및 필요한 약정안을 공동위원회에 제출한다.

19. 공동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가.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소집, 회의장소와 안건준비, 회의진행, 기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 나.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건본, 자료 및 서신의 교환을 위하여 공동물품교환소를 설치·운영한다.
- 다. 기타 쌍방간 교류물자수송, 인적왕래에 관련하여 필요한 연락업무의 수행과 행정적 지원을 한다.
- 라.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를 협의·처리하기 위해 쌍방 사무국장 회의를 수시로 갖도록 한다.

20.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가. 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에서 가지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서울과 평양에서도 가질 수 있다.
- 나. 분과위원회 회의는 판문점에서 가지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서울과 평양에서도 가질 수 있다.
- 다. 공동위원회는 분기에 한번씩 회의를 가지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시로 가질 수 있다.
- 라. 분과위원회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가진다.
- 마.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며 필요시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공개로 할 수 있다.
- 바.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쌍방의 물자교류 당사자, 경제협력 사업당사자 및 공동사무국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 사.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합의는 쌍방 해당위원장의 서명에 의하여 확인한다.
- 아. 공동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따로 협의하여 정한다.

21. 공동사무국의 설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공동사무국은 이 합의서 서명후 30일 이내에 설치한다.
- 나. 공동사무국은 공동사무국 전용건물을 판문점내에 건설할 때까지 평화의 집과 판문각을 각각 임시사무실로 사용한다.
- 다. 공동사무국 전용사무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한다.

22.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23. 이 합의서는 발효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일방이 타방에 대해 이 합의서의 폐기의사를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1년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5년간 그 효력이 연장된다.
24. 이 합의서는 쌍방의 남북경제회담 수석대표가 각자의 최고당국자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서명하여 그 원본을 교환한 때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1985년 월 일 판문점에서 동등히 정본인 원본 2부를 작성·교환하였다.

|      |    |    |     |             |    |    |     |   |
|------|----|----|-----|-------------|----|----|-----|---|
| 대    | 한  | 민  | 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    |     |   |
| 남북   | 경제 | 회담 | 대표단 | 남북          | 경제 | 회담 | 대표단 |   |
| 수석대표 | 김  | 기  | 환   | 단           | 장  | 리  | 성   | 록 |

한편 북한측은 지난 제3차 회담에서 각각 분리 제시한 방안, 즉 남북경제협조 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한 경제 합작과 교류를 위한 16개 방안, 남북상품교류 위원회 구성안을 종합 정리하여 하나의 합의서(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쌍방제안중 거래 및 결제방식, 공동위원회 분과 위원회수 등을 비롯하여 아직도의견조정이 필요한 주요한 문제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회의에서 토의하기를 회피하면서 쌍방이 제시한 합의서(안)을 바로 실무대표 접촉회의로 넘길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기본적인 사항을 토의하고 넘겨주어야 실무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 것임을 지적하고, 이날 회담에서 쌍방합의서안의 주요 문제를 중심으로 대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우리측의 거듭된 촉구에도 북한측은 계속 대체토의를 회피하였으며, 쌍방간의 견해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차기회담에서 의견을 제시하자고 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우리측이 촉구한 무연탄 구입문제와 경의선 철도년내 연결작업 착수제외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합의서를 채택하여 남북공동위원회가 구성되면 동 위원회에서 토의하자는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함으로써 경제회담에서는 이 문제를 더이상 토의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제5차 회담은 1985년 11월 20일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합의서(안)비교(차이점)

| 구분              | 남   | 북   |
|-----------------|---|---|
| 원칙표기문제          | 순수 경제원칙에 국한   | 조국통일 3원칙삽입  |
| 교류품목            | 1,2차회담시 합의품목을 합의서에 명기하고 합의품목부터 교류시작<br>- 우리측 판매가능품목 : 철강재, 섬유, 소금, 감귤, 남해수산물(김, 미역, 굴, 멸치등)<br>- 북측 판매가능품목 : 무연탄, 철강석, 마그네샤크링카, 명태, 옥수수 | 1차회담시 쌍방 제안품목을 고려하여 공동위원회에서 협의·결정                 |
| 거래방식            |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잠정적으로 제3국은행 신용장방식 적용  | 청산결제방식  |
| 결제업무취급은행        | 쌍방이 지정하는 남북한 은행으로 하되 잠정적으로 제3국은행 이용   | 쌍방이 지정하는 남북한의 은행                                  |
| 협력사업규모, 방법, 시기등 | 사업당사자가 결정   | 공동위원회에서 협의·결정                                     |
| 분과위원회수          | 2개분과(물자교류, 경제협력)<br>* 필요시 특별분과, 소위원회설치  | 6개분과(자원개발, 공업 및 기술, 농업 및 수산, 상품교환, 운송 및 체신, 금융재정) |

#### 나. 국내의 주요 반응

제4차 남북경제회담에 대해 국내 주요 신문들은 쌍방간에 「근본적인 의견대립이 없으면서도 사소한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회담이 아무런 결실 없이 끝나버린 것은 지극히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측의 진의에 대해 「판은 오래 벌이되 실질진전은 없게 하려는데 있다」고 지적하면서, 「웃음뒤의 실체」를 제대로 보고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일회일비보다는 인내로, 낭만이 아닌 힘의 유지로 일관성 있게 남북대화를 추진해가야 한다」고 논평했다.

그리고 남북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리측이 제의한 무연탄 구입과 경의선 연결사업같은 시범사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사전접촉을 통한 의견조정으로 5차 회담에서는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를 당부했다.

한편 해외의 주요 언론들은 제4차 경제회담에서 쌍방이 제안한 합의서 초안에 많은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서 채택에 실패한 것은 북한측이 「구체적 진전에 발뺌」을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북측의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내외 주요 언론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 《국내 반응》

##### 녹장 남북 경제회담

서울신문(1985. 9. 19)

남북경제회담이 막상 중요한 고비에 접어들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 어제 열린 제4차 남북경제회담이 쌍방간에 근본적인 의견 대립이 없으면서도 아무런 진전 없이 끝나버린 것이다.

지난 6월 20일 열린 제3차 회담에서 양측은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

회 설치에 대한 합의서를 채택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었다. 따라서 어제 열린 제4차 회담에서는 합의서 채택문제에 대해 무엇인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했다.

제4차 회담에서 양측은 지난번 회담때 내놓았던 합의서안을 조금씩 고쳐 각각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했다. 우리측은 양측의 수정안 중에서 최종 합의서에 포함시킬 주요 사항은 본 회담에서 대체 토론을 하고 세부사항은 실무회의에 맡기자고 했으나 북한측은 모두 실무회의에 넘기자는 입장을 취했다. 토의방식에 관한 의견차이는 본질적인 의견대립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같은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회담이 아무런 결실 없이 끝나버린 것은 지극히 실망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적십자회담의 경우에도 그 동안 난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래도 양측대표단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고 내일은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 일행이 서울과 평양을 교환 방문할 예정으로 있다. 적십자회담의 이같은 진전에 비해 경제회담은 상대적으로 뒤지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몇 갈래의 회담들이 균형있게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 그리고 국회회담은 각기 고유한 회담목적이 있으나 각기 그 회담의 진전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 한 회담의 진전은 그만큼 남북한 관계에 신뢰의 토대를 이루어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 다른 회담의 진전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측은 그렇게 근본적인 의견차이가 없으면서 사소한 절차상의 문제로 경제회담을 질질 끌게 아니라 연말까지는 무엇인가 구체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측의 김기환 수석대표는 『이제는 일괄적이며 종합적인 합의서를 채택하고 구체적인 사업도 착수함으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릴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무연탄 30만 톤을 우리가 구입하는 문제와 양측의 의견이 이미 일치하고 있는 경의선철도의 연결문제를 우선적으로 타결, 금년안에 실제로 남북간에 물자교류가 이뤄지도록 하자고 역설했다.

경제회담은 다른 회담과는 달리 회담에 성과가 있을 때 그것이 나타나는 결과는 구체적인 일상생활과 연결되어 그 심리적 영향은 엄청날 것이다. 물자교역을 통해 부분적이거나 서로 상대방이 보내주는 물품을 쓰게 될 때 우리는 깊은 유대 속에 있음을 서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 웃음 뒤의 실체

-이성 인내 힘만이 남북대화를 결실한다-

동아일보(1985. 9. 19)

제4차 남북경제회담이 또다시 진전 없이 끝났다. 오직 오는 11월 20일 5차 회담을 다시 판문점에서 갖는데 합의했을 뿐이다. 작년 10월에 제의가 오가고 11월 15일 제1차 경제회담이 개최된 이래 1년이 가까와 오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아무 진전이 없는 것이다. 그간 4차까지의 경위만 보아도 북측은 물자교류보다 합작을 우선하자고 덤볐다. 다시 물자교류도 합의하는 체 하더니 부총리급 회의로의 격상을 요구하고 나섰다간 이번에는 또 실무회의로 넘겨 토의하자고 나오고 있다. 그러는 일방 「유럽」 일본 등엔 경제교류의 신호를 열심히 보내고 있다. 일본의 크지 않은 전철회사 사장까지 김일성이 직접 만나 경제교류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회담 10개월의 경과만 보아도 북측의 진의가 판은 오래 벌이되, 또 안팎으로 남북간 대화의 웃음의 효과는 극대화하되 실질진전은 없게 하거나 지체시키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물자교류는 사상도 사람도 오가는 것이 아니며 가장 중립적인 거래로서 적대국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물며 무연탄 철광석 등 품목과 경의선연결 등 양측이 합의한 교류와 사업까지 때로는 회담형식을 이유로 이번에는 경제를 제쳐놓고 「통일3원칙」을 내걸고 지체시키고 있다.

20일엔 남북적십자의 주선으로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이 3박 4일의 예정으로 서울과 평양을 오간다. 25일엔 남북국회회담이 열리고 10월 8일에는 「로잔」에서 체육회담이 열린다. 판은 분주히 벌이고 웃음은 사방에서 들리는 듯 싶지만 북측의 정치·경제·군사·사회문화구조가 개방할 태세가 되어 있지 못한 여러 사실증거로 볼 때 실질적 평화·인도주의·경제협력·스포츠맨십 어 느 것 하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남북대화가 한반도의 주변정세 변화와 북측의 정권이양과정에서 미소외교가 필요한 저들의 전술적 대응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야겠다. 특히 「휴즈」 헬리콥터와 한국군복의 다량구입 등은 웃음 뒤의 실체, 대화 뒤의 흉계, 즉 한반도적화통일전략을 수정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남쪽의 모든 사태를 악용하려는 저들의 전략 전술적 계략은 늘 경계해야겠다.

일진일퇴는 있으나 국제정세는 남북이 전쟁보다는 대화지속의 환경으로 가고 있으며, 우리에게 민족정통성의 우위가 있다. 우리는 북측이 개방하고 민족통일과업에 귀순할 수 있도록 이성과 인내와 힘을 유지하여야겠다. 완강한 사상으로 인도를 거역하고 민족통일이라는 엄숙한 과업마저 부자세습의 일인권력 영광을 위해 횡령하는 반민족성을 우리의 이성과 인내 그리고 이질성 극복의 도덕력 정치력을 발휘하여 평화정착의 순리로 인도하여야 한다.

남북대화는 그간의 분단이 길고 빠져질수록 감성보다는 이성으로 일회일비보다는 인내로, 낭만이 아닌 도덕력 정치력 군사력을 합친 힘의 유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만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

웃음 뒤의 실체를 제대로 보고 눈물의 깊이를 개인의 차원 아닌 국가적 민족적 사실적 차원에서 탁마해야 할 때다.

#### 시범사업부터 예행을

-남북 경제회담-

중앙일보(1985. 9. 19)

석달만에 18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4차 남북경제회담이 아무런 진전 없이 끝난 것은 전혀 예상 밖의 일이다.

회담이 지체되는 지난 6월 20일 제3차 회담에서 양측이 제시한 합의문안을 토대로 협의한다는 당초의 약속을 북한이 어기고 의제외문제를 들고나온데 있다.

평양은 이번 회담에서 공동합의문토의를 실무회담으로 돌리자고 주장하면서 조국통일 3대원칙이라는 비경제분야인 정치문제를 들고 나왔다.

3차 회담에서 쌍방이 제출한 합의문안에 일치된 부분이 많고 이를 토대로 4차 회담을 계속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그후 남북적 회담의 호전 등 주변 여건도 좋아졌다. 그때문에 우리는 이번 경제회담이 상당히 진척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양측 제안중 공통되는 문제를 추려 합의문을 작성하고 연내에 철도를 연결시키며 북한산 무연탄 30만 톤을 수입하겠다는 우리제의를 외면해버림으로써 회담은 다시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

경제회담은 어디까지나 경제문제만을 다뤄야 하는 전문가회의다. 이 회담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루라도 빨리 남북간의 실질적인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있다. 따라서 정치문제 등 경제외적 문제는 과감히 제외시켜 실질문제 위주로 능률적인 회의를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실무회담도 언젠가는 반드시 열어야 할 과정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아직은 기본문제에 관한 합의가 미진하기 때문에 실무회담은 시기상조다.

만약 이미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을 떼어서 실무회담으로 넘겨 본

회담과 실무회담을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서울측이 제안한 경의선의 연내 연결은 다각적인 의미에서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본다.

그것은 남북의 물리적인 연결이라는 명분상의 의미 말고도 앞으로 예상되는 이산가족과 적십자 회담 대표진을 포함한 인적교류의 수송수단으로도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회담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지금 적십자회담에서 실험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사전실시가 선행돼야 한다.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교류는 그 자체의 교류의미 외에도 앞으로 논의될 이산가족들의 상호방문에 따르는 복잡한 절차문제를 현실적으로 부각시켜 문제점을 해결·보완할 수 있는 좋은 예행연습이 된다.

이런 방식은 문제가 훨씬 복잡한 경제교류에도 반드시 도입돼야 할 것으로 본다. 그 첫번째 사업은 우리의 북한산 무연탄 도입이며, 그 전제로라도 남북철도는 반드시 연결돼야 한다.

무연탄을 해로로도 수송할 수는 있지만 산지에서 소비지로 직접 수송한다면 그만큼 간소해지고 시간과 비용도 절약될 것이다.

이같은 시범사업의 예행은 앞으로 있게 될 남북간의 경제교류·협력의 구체적인 절차문제 토의·결정을 그만큼 쉽고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음을 확신한다.

회담터울 2개월도 너무 길다. 11월에 5차회담이 열리기전에 어떤 형태로든 접촉을 벌여 사전 조정을 통해 다음 회담에서는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경의선부터 접속하라

-남북 경제회담에의 당부-

조선일보(1985. 9. 19)

오고가기 위해서는 먼저 길이 있어야 한다. 산속에 사는 호랑이나 곰이나 송냥이나 들쥐마저도 제길을 닦아놓고 제길을 다닌다. 하물며 사람이 오가고 물건이 오가는데야 두말할 나위없다. 이미 이전에 있었던 남북경제회담에서 남북을 잇는 경의선을 접속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면 길부터 내는 일에 회담 비중이 치중되었어야 하고 또 회담을 바라보는 민족의 여망도 그에 치중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실 무연탄이며 명태, 철강이며 멸치를 받고 보내고 하는 문제보다 또 제삼국의 신용장에 의해 주고 받는다는 거래방법보다 그것이 오갈길을 잇는 일이 선행되는 것이 순리요, 그래서 어제 있었던 제4차 남북경제회담에서 경의선접속작업을 올만에 착수하자자는 제의는 민족의 여망에서나 또 회담의 선후로 보아서 적절하다고 본다. 어제가 우리 한반도에 처음으로 철도가 놓인 「철도의 날」 인지라 이 제의가 더욱 절실하기만 하다. 경의선 접속은 비단 경제물자만 실어내는 효용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데서 더욱 그렇다. 몇밤만 자면 분단 40년만의 숙원인 남북고향방문단이 북으로 가고 또 남으로 올판이다. 똑같은 조국의 땅을 오가는데 왜 잘려진 잔등을 징검다리로서 건너가고 건너와야 하는가 말이다. 이미 뗏뗏한 길이 이어져 있어야 했고 그길로 뗏뗏이 오고가야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곧 적십자회담이건 국회회담이건 경제회담이건 모든 교류에 선행돼야 하는 것이 바로 경의선 접속이어야 했다.

이 남북철도 접속은 실리적인 효용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것이 접속됨으로써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아픈 역사의 분단, 민족의 분단, 국토의 분단이 민족감정속에서만이라도 또 애오라지나마라도 아물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척추에서 빠져나간 척골하나가 다시 끼워지는 것같은 상징적 의미를 그에서 얻을 수 있고 또 그것이 접속되었을 때 남북교류가 어떤 정치적 저의나 국제적 입김에 의한 방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족여망에 의해 진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내외 만방에 주는-, 그 또한 상징적 의미가 내포

되어 있는 것이다.

분단의 아픔과 슬픔을 시각적으로 어필시키려 할 때 그 뿔보다도 경의선이나 경원선의 철길이 끊긴 종점이나 잠초속에 녹슬어 덩군 기관차를 사진으로 찍어 내보이지 않던가.

길이 있어야 자주 오가고 또 물동량도 많아지고, 오감이 맞으면 피와 마음이 통하고 그것이 통했을 때 통일이 이룩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 뿔보다 경의선 철도접속을 선결·선행문제로 남북경제회담에 당부하는 뜻이 이에 있는 것이다. 내년에 오갈 남북고향방문단이 그 철도위의 기차를 타고 오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쌍방이 노력해 주길 심심 당부하는 바이다.

#### 《해외 반응》

4대 통신(1985.9.18. 판문점)

- 남북한은 18일 제4차 경제회담을 열고 한 협정에 서명하려고 노력했으나 철차상의 의견 대립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양측은 수정합의 초안을 검토, 11월 20일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
- 김기환 대표는 북한이 경제와는 관련이 없는 문제들을 경제회담에 끌어 들였다고 비난하고 경제회담은 정치나 이데올로기와는 관계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The Times (1985.9.19. 영국)

- 남북한 경제회담은 지난 12개월간 상당히 진척되기는 했으나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쌍방은 새로운 합의문서 초안을 제시했는데 많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구체적 진전에는 발뺌하는 것 같았으며 그들의 성의를 의심케 하였다.

Financial Times (1985.9.19. 영국)

- 제4차 경제회담에서 쌍방은 내용이 비슷해진 합의서 초안을 제시했으나 접근상의 근본 차이를 해소하지는 못했다.
- 한국측은 북한이 실질적 경제교류는 하지 않은채 이 위원회를 선전목적에 이용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아사히신문(1985.9.18. 일본)

- 금번 경제회담에서 쌍방의 합의서안은 상이점이 없으나 구체적인 경제교류를 서두르는 한국측과 우선 협력조직체를 구성하려 하는 북한측과의 사이에 격차가 있어 다음 회담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큰 문제가 될 것이다.

### 3.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 가. 성립

1985년 6월 3일 이재영 국회의장은, 남북 국회회담을 열어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문제」를 협의할 것을 주장한 북한측의 제의와 관련하여, 북한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 앞으로 서한을 보내고 남북국회회담을 열어 통일헌법제정을 위한 남북간의 협의기구 구성 문제와 이에 따른 통일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토의할 것을 촉구하는 우리 국회의 6월 1일자 대북 서한문을 전달하였다.

제125회 임시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동 서한에서 우리측은 그간 우리 정부가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 쌍방의 책임있는 당국간의 협이에 의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당면 과제』임을 강조하고 『북측이 이를 받아들여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음』을 상기시키면서, 『불가침 선언 문제도 그것을 실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남북한 정부 당국의 회담을 통해서 협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우리측은 『입법기관의 고유기능은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당국이 체결한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를 동의』하는 것이라고 전제, 『현 시점에서 남북의 입법기관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민족적 과업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통일헌법의 제정문제를 협의하는 일』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우리측은 『남북의 국회는 이러한 민족적 과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국회회담개최에 필요한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쌍방 국회의원 각 5명이 참가하는 예비접촉을 7월중 판문점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이러한 우리측의 제의에 7월 5일 북한측이 최종적으로 동의해 옴으로써 남북국회회담 개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1차 예비접촉이 1985년 7월 23일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게 되었다.

직통 진화를 통해 각기 통보한 쌍방 대표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

수석 대표 : 권정달(민주정의당)  
대 표 : 정시채(민주정의당)  
대 표 : 신순범(신한민주당)  
대 표 : 박관용(신한민주당)  
대 표 : 강경식(한국국민당)

#### 북한 최고 인민회의 대표단

단 장 : 전금철(조선노동당)  
부 단 장 : 주창준(조선노동당)  
대 표 : 최장룡(조선노동당)  
대 표 : 럽국렬(조선사회민주당)  
대 표 : 우달호(천도교청우당)

#### 나. 경과

## Ⅰ 제1차 접촉

남북국회회담 개최에 따른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1차 예비접촉이 쌍방에서 각기 5명의 대표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1985년 7월 23일 오전 10시부터 12시 12분까지 관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공개리에 진행되었다.

이날 접촉에서 남북 쌍방대표단은 대부분의 질차문제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본회담 개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의제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우리측 권정달 수석대표는 첫 발언을 통해, 국회회담을 열어 불가침 선언문제를 협의·해결해야 한다는 북한측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통일헌법 제정과 이를 위한 협의기구 구성문제가 남북 국회회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정달 수석대표는 먼저 북한측이 주장하는 불가침선언 문제와 관련하여,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쌍방의 책임있는 정부당국간에 협의·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또한 우리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열어 긴장완화와 전쟁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과 무력사용금지, 상호 내정불간섭, 군비경쟁지양 및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 등을 포함하는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 협정」을 체결할 것을 북한측에 촉구해 온 사실을 상기시켰다.

따라서 우리측은 북한측이 진실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불가침 문제를 논의할 의향이라면 북한당국이 우리측 제의에 호응해 나오도록 촉구해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리 대표단은 분단 40년이 지나도록 평화통일노력을 결집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나 장전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남북간의 현실을 지적하고, 통일헌법 제정을 통해 통일조국의 청사진을 밝히고 아울러 통일조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민족의 진로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우리 대표단은 이러한 사업은 남북한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남북국회회담을 열어 쌍방주민의 대표로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여기서 통일헌법 제정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상과 같은 입장에 따라 우리 대표단은 남북국회회담 개최와 관련한 우리측의 제안을 다음과 같이 북한측에 제시하였다.

첫째, 쌍방은 온 겨레의 통일염원에 부응하여 남북국회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개최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일시는 이 예비접촉의 마지막 단계에서 협의·결정한다.

둘째, 쌍방은 남북국회회담을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개최한다.

셋째, 남북국회회담에 참가하는 쌍방의 대표단은 각각 11명으로 구성하며, 쌍방 수석대표는 국회 의장이 지명한다.

넷째, 남북국회회담의 의제는 「통일헌법을 기초하기 위한 민족통일협의회의 기구를 구성하는 문제와 이에 따른 통일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다섯째, 남북국회회담 추진에 따른 제반업무 연락을 위하여 쌍방간에 국회회담용 직통 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여섯째, 기타 남북국회회담 진행에 필요한 절차는 쌍방의 협의하에 정한다.

한편 북한측은 회담의제로 그들이 지난 4월 9일 남북국회회담을 제의하면서 주장했던 이른바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문제」를 우선적으로 토의할 것을 주장하면서 남북국회회담 개최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제시하여 왔다.

의제문제 토의에 있어 남북쌍방은, 우리측이 「통일헌법을 기초하기 위한 민족통일협회의의 기구를 구성하는 문제와 이에 따른 통일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할 것을 주장한데 대해, 북한측은 「통일헌법 제정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문제」를 계속 우선적 협의·해결해야 할 의제로 고집함으로써 의견의 접근을 보지 못했다.

특히 북한측은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문제를 국회 회담에서 우선적으로 토의할 것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국회회담에서는 「쌍방이 불가침의 필요성과 의의를 인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무를 지니는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문제」는 쌍방당국에 일임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굳이 국회회담을 열어 불가침선언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그들의 진의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의심케 하였다.

그러나 절차문제에 있어서는 쌍방 제안내용이 대체로 비슷하였으며, 따라서 본회담 수석대표의 급문제와 제1차 회담 개최장소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날 제1차 접촉에서 쌍방이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회담 형식

쌍방 국회의 대표회담으로 한다.

○ 대표단 규모

각각 11명으로 구성한다.

○ 회담 장소

서울·평양을 번갈아 가면서 한다.

○ 일 시

예비 회담이 끝나고, 1개월내 첫 회담을 개최한다.

○ 보도·기록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 대표단의 왕래절차·편의보장

종래 남북대화의 관례에 따른다.

쌍방은 제2차 접촉을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갖기로 하였으며 장소문제는 1차접촉과 같이 판문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제안대로 서울과 평양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전화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날 접촉에서의 북한측 제안요지는 다음과 같다.

- 회담 형식  
국회연석회의 또는 국회대표회담
  
- 대표단 구성  
연석회의 : 100명 정도가 상대측 국회 본회의에 참가  
대표회담 : 9-11명으로 구성  
단 장 :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
  
- 회담 장소 : 서울과 평양
  
- 회담 의제
  -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데 대하여
  - 통일헌법 제정문제를 토의할데 대하여
  
- 회담일시 : 예비접촉이 끝나는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
  
- 직통전화 : 국회회담 전용 직통전화를 서울·평양간에 연결

## ② 제2차 접촉

우리측 권정달 수석대표는 9월 10일, 제1차 접촉에서 제2차 접촉의 장소는 직통 전화로 협의·결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북한측에 전화 통지문을 보내고 제2차 예비접촉도 제1차 접촉때와 같이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이러한 우리측의 제의에 9월 21일 북한측이 동의해음으로써 제2차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은 1985년 9월 25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게 되었다.

제2차 접촉은 쌍방 5명의 대표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2분간 비공개리에 진행되었으나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한채 제1차 접촉에서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우리측 권정달 수석대표는 이날 회의의 첫 발언을 통해, 먼저 1차 접촉에서 쌍방간에 의견의 일치를 본 본회담형식, 대표단 구성, 장소, 보도문제 등 제반절차 문제를 다시한번 정리·확인하고,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접촉에서 쌍방간에 합의를 보지 못한 의제문제, 수석대표의 급문제 및 제1차 본회담 장소문제 등을 협의·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먼저 의제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통일헌법을 기초하기 위한 민족통일 협의회의 기구를 구성하는 문제와 이에 따른 통일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의제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측이 주장하는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문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우리측은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는 그 실권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해당 정부당국이 관장하고 처리하는 것이 보편적 관례임을 지적하고, 북한측이 주장하는 「불가침문제」도 그 실효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쌍방 정부당국이 협의·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우리측은 이미 오래전부터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의 실현을 북한측에 제의하고, 긴장완화와 전쟁방지 등 남북간의 시급한 문제를 협의·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해 왔다는 사실도 상기시켰다.

따라서 북한측이 진실로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목적으로 우리측과 불가침 선언을 채택하고자 한다면 구태여 남북국회회담에 그 문제를 상정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당국이 요구하는 회담에 하루 빨리 동의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우리측은 남북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불가침문제를 포함한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신뢰조성 문제는 단순히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것과 같은 형식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남북 관계의 모든 분야에서 화해와 교류와 협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가 1982년 제의한 20개 시범실천사업에 북한측이 호응해 나옴으로써 남북간의 사회개방과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북한측은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문제의 우선적 토의를 거듭 주장하면서, 제1차 접촉에서 그들이 제의한 내용과 남북 쌍방간에 의견의 접근을 본 절차문제들을 묶어 합의서 초안형식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북한측은 「불가침문제」는 민족의 생사와 운명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므로 국회와 같은 권위있는 정치기관에서 다루어야 하며, 이는 국회의 기능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강변하였다.

우리측은 국회회담에서 불가침선언을 한다고 해도 그 자체로서는 선언적 의미밖에 없으므로 실천력을 가진 정부당국에서 직접 다루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불가침 문제」를 의제로 하자는 북측 주장의 부당성을 거듭 지적하였다.

이에 북한측은 더 이상 「불가침문제」를 의제로 거론할 수 없게 되자, 국회회담의 의제를 「남과 북 사이에 긴장을 완화하며, 조국 통일을 촉진시킬 데 대하여」로 수정제의하고 다시금 우리측의 호응을 촉구해 왔다.

우리측 권정달 수석대표는 북한측이 수정 제의한 의제는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무의제나 다름없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의제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더 연구·검토할 것을 제의함으로써 이날 회의에서도 의견의 접근을 보지 못했다.

이밖에도, 우리측은 1차 접촉에서 쌍방간에 이견을 보인 수석대표의 급에 대해서는 좀 여유있게 정해두자는 취지에서 쌍방국회의장이 임명하는 상임위원장급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하자고 제의하고 제1차 본회담의 장소는 서울로 할 것을 제의한데 반해, 북한측은 1차 국회본회담 장소는 「평양」으로, 수석 대표 급은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할 것을 계속 주장함으로써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편 쌍방은 제3차 접촉의 장소를 1·2차 접촉때와 같이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측이 제의한대로 「통일각」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와 일자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직통 전화로 협의·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 다. 국내 주요 반응

국내 주요 신문들은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이 열리게 되는데 대해 「남북한간의 대화는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을 계기로 정치적 성격을 띤 차원으로 한 단계 높아졌다」고 논평하고, 「쌍방 주민대표 수준의 첫 정치회담의 준비가 햇볕보게 되었다는 사실은 정치사에 특기될 일」이라고 그

의의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예비접촉에서 보인 북한측의 태도를 감안할때 「국회회담이 남북관계에 반드시 어떤 전환점을 마련하리라는 기대는 아직 금물」이라는 조심스러운 우려를 표시하였다.

또한 남북불가침 협정의 체결과 집행은 정부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이에 대해 비준 동의하는 것이 국회의 권한이자 직분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북한측이 「직분의 한계를 혼동하거나 고의적으로 왜곡하려 든다면 모처럼의 정치회담도 그 앞날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그 전망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과 관련한 주요 신문들의 사실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내 반응》

대좌는 계속되어야 한다

-남북한의 첫 국회예비접촉을 보고-

경향신문(1985.7.24)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첫 예비접촉이 23일 판문점에서 이루어졌다. 그것은 민족분단 40년만에 처음 열린 남북정치회담이라는 점에서 1980년대 남북관계사의 새로운 획을 긋는 서막으로 그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그동안 남북간에 정치적 접촉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1972년 7·4 공동성명을 토대로 서울·평양을 내왕했던 남북조절위원회는 정치색 짙은 양측의 대면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정치회담으로서 미처 자리도 잡히기 전에 북한의 일방적인 외면으로 깨져버리고 말았다.

과거의 이와 같은 불미한 경험에 비추어 이번 국회회담이 남북관계에 반드시 어떤 전환점을 마련하리라는 기대는 아직 금물이다. 더구나 북한이 현재 대내외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으로 보아 국회회담을 서둘러 있는 그들의 저의를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들의 목적은 남한 내부에서의 국론분열과 대외적으로 삼자회담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자는데 있다. 그와 같은 저의는 그들이 최근 이른바 「남조선 통일전선전략」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증명이 되며 또 최근에 있었던 남북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에서 드러난 그들의 무성의한 태도로써 한층 역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회회담에 선뜻 나선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신념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극히 객관적이며 현실적인 제안을 갖고 이번 예비접촉에 임했던 것이다. 이번 접촉을 통해 남북 양측은 다음 접촉의 시기와 장소 등 본 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 절차에 대체적으로 합의하는 등 적지 않은 진전을 보았다.

다만 쌍방의 기본입장이라 할 수 있는 의제에서만은 별로 거리를 좁히지 못한 채 회담의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 즉 통일헌법기초를 위한 「민족통일협의회」의 구성문제와 이에 따른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다루자는 것이 우리의 제안인데 반해 북한측은 「불가침선언」을 최우선적으로 채택하자는 입장으로 맞선 것이다. 다만 북한이 「통일헌법」문제토의에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제의내용의 타당성이나 현실성으로 보아 불가피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제의한 「불가침선언」에 있다. 그것은 성격상 우리 정부에서는 전적으로 행정부의 소관사항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들은 결국 국회회담을 통해 「선언」만이라도 하고 그 「채택」은 행정당국에 넘기자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나 이는 북한정치선전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현재 여러 갈래로 진행중인 각종 회담을 통해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가 이미 제의한 남북최고당국자회담에 임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바른 길임을 거듭 밝혀 둔다.

#### 남북 국회회담 시발

-북의 정치인들의 직분의 한계 혼동말기를-

동아일보(1985.7.24)

남북국회회담의 실현을 위한 첫 예비접촉을 지켜본 우리의 솔직한 느낌은 이 대화의 순조로운 진전이나 조속한 성과는 현재로 기대난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분단 40년만에 남과 북의 의회인들의 첫번째 만남이라는 점에서, 또 어쩌면 지금까지의 남북대화 양상에 어떤 새로운 장을 여는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안팎의 관심을 모았던 첫 접촉은 본 회담의 형식과 대표단 구성 등 몇 가지 절차문제에 쉽게 합의하고 두 달 뒤에 재접촉을 갖기로 함으로써 일단 대화의 계속성을 확보하는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가장 핵심사항으로 이번 접촉의 성패를 판가름하게 될 의제문제는 처음부터 이견이 맞서 과연 본 회담이 성사될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또 설혹 본 회담까지는 이른다 하더라도 그 대화의 실효성은 여전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23일의 대좌에서 우리측은 「통일헌법 기초를 위한 민족통일협회의의 구성과 이에 따른 통일기반조성」 문제를 본회담 제의로 제시한데 반해 북한측에서는 예상한대로 「불가침 공동선언」을 최우선 의제로 하자고 들고 나와 평행선을 달렸다. 물론 쌍방에 전혀 신축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치인들의 모임답게 서로가 경청과 유연성을 보인 것은 어느 남북대좌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으로 어떤 기대감마저 낳게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북한측이 우리측 제의의 「통일헌법」 문제를 토의하는데 반대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도 눈길을 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이번 대화가 순조로울 것이라고 짐치기는 어렵다. 말할 것도 없이 이같은 북의 몸짓은 어느 대화보다 이번 국회회담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그들로서 「불가침…」 관철을 위한 전략적이고도 위장된 양동작전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웃으면서 함정을 파려는 속셈임에 틀림없다.

남북의 정치인들은 진실로 이번 대화의 성사를 염두에 둔다면 먼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부터 분명히 인식하고 대좌에 임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 고유기능이 입법활동에 있다고 할 때 민족의 장래를 내다보며 통일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만나는 남북의회인들이 무엇보다 해야할지는 자명하다. 통일국가와 기본법이 될 통일헌법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다면 무슨 주장을 내세워도 설득력이 없다.

협정의 체결권과 집행권은 정부권한에 속하고 이에 대한 비준이 국회의 권한이자 직분이라는 사실을 북쪽 사람들이라고 모를 까닭이 없을 것이다.

이처럼 분명한 직분의 한계를 혼동하거나 고의적으로 왜곡하려 든다면 모처럼의 정치회담도 그 앞날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

북한이 진정으로 평화통일을 원하고 그 전제로 불가침 공동선언에 관심이 있다면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그 일에 대한 실권과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당국끼리 협의토록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미 1982년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 체결을 제의해 놓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이 이 문제를 국회회담의 의제로 고집한다면 회담제외의 궁극적 목표와 속셈이 주한미군철수 등을 겨냥한 삼자회담 추진용이나 정치선전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번에도 입씨름이나 하다가 또다시 서로 등을 돌리고 만다면 남북간에 불신만 하나 더 추가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 남북의원의 첫 대면

중앙일보(1985.7.23)

남북의회의 첫 접촉이 13일 판문점에서 이루어졌다. 지난 4월 북한이 남북국회회담을 제의했고 이를 우리가 받아들여 실현된 예비회담이다.

접촉의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 같다. 회담에 임하는 양측의 기본입장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남북불가침선언을 상호 약속하자는데 회담의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는 불가침선언을 포함한 평화보장 문제는 행정부소관이기 때문에 의회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의회기능의 범위 안에서 통일헌법 제정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문제를 비롯하여 통일기반 조성에 필요한 제반문제를 협의하자는 것이 우리 국회의 입장이다.

본질문제 토의의 진전은 비관적이라 해도 의회회담이 남북관계 발전에 유익할 것은 틀림없다.

통일문제 접근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상호불신이며 이것은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의 부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통일의 접근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평화보장과 통일성취가 그것이다.

한국은 선평화·후통일의 자세로 임해왔으나 북한은 이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입장이다.

한국이 민족자결의 원칙 위에서 남북 직접대화해 해결하려는데 대해 북한은 통일문제는 한국과 협의하되 평화문제는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달성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한국을 배제한 미국·북한 양자회담 방식이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반대에 부닥치자 북한은 최근에 와서 평화문제를 불가침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나누어 진자는 한국과, 후자는 미국과 하겠다고 나섰다.

남북국회회담은 이런 맥락과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한국측이 불가침선언은 행정부 소관이라고 밝히자, 북한은 그 선언은 의회회담에서 하고 선언 채택은 당국간에 하자는 입장인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남북한은 이미 1972년의 「7·4공동성명」에서 『무력도발과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제2항)에 합의했다.

이 공동성명은 의회가 아니라 당국차원의 합의였다.

또 1982년 1월 우리는 무력행사의 포기문제를 포함한 남북한 기본관계협정(잠정)체결을 위한 당국간 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

무력불사용이나 불가침선언문제는 그 성격상 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관기구 사이에 협의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의 경우도 1970년 3월의 동서독 수상회담을 계기로 분단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북한은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의회는 두말할 것 없이 민의를 가장 넓고 올바르게 반영하는 기구다.

남북국회회담은 남북한 동포의 통일의지를 존중하여 하루라도 빨리 평화가 정착되고 교류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남북 정치대화

-북은 우리측 신축성에 대응해야-

한국일보(1985.7.24)

나라 안팎에 걸친 거래들의 부푼 기대와 폭넓은 국제적 관심을 모은 가운데 23일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이 판문점에서 열렸다. 조국해방 40주년의 해에 모처럼 쌍방 주민대표 수준의 첫 정치회담의 준비가 햇볕보게 되었다는 사실은 정치사에 특기될 일이다.

하기야 속담에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했다. 우선 우리측 국회의원과 북한측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서로 만나 정치인들의 모임다운 좋은 분위기 속에 쌍방의 기본입장을 밝히게 되었다는 점을 평가하게 된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했듯이 앞으로 상호간에 상대방의 견해를 성실하게 경청하며 진지하게 연구 검토해 나간다면 남북국회회담의 본격적인 개최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 보인다.

여기에서 우리는 남과 북의 정치인들이 한결같이 다짐할 기본자세가 있음을 생각한다. 곧 국제적 환시 속에 우리 거래의 민족적 자치능력을 과시해야 한다는 당위성이다.

회고하면 40년전 8·15 직후의 상황에서 주변 외국인들은 우리 민족의 자치능력에 대하여 적지 않은 의문을 표시하면서 이른바 「신탁통치」니 뭐니 운운한 바 있었다. 이제 우리 민족은 비록 국토양단의 모진 시련을 겪어오기는 했으나 세계 앞에 떳떳한 독립국민의 자질과 국력신장의 뚜렷한 성과를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는 그 탁월한 자치능력이 남북관계의 긴장완화와 중국적 평화통일의 달성에 찬란하게 이어지기 바란다. 그러자면 구차스러운 교조나 선입견에 구애되지 않는 민족의 대의아래 상호 접근의 구심작용을 보여야 할 것으로 믿는다. 거래의 의지보다도 외국의 입김을 더 많이 의식하는 따위의 발상은 당연히 반성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남북국회회담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세칭 3자회담 등의 교량적 방편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남북국회회담의 의제에 관해서는 우리측 실무대표가 「통일헌법을 기초하기 위한 민족통일협회의 기구를 구성하는 문제」와 더불어 「이에 따른 통일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였다. 이는 유일입법기구로서 평화통일에 이바지하는 정도를 밝히는 동시에, 북한측이 제안한 「불가침」선언에 관해서도 그 조건형성 문제를 정치적 차원에서 토론할 수 있다는 포괄적이고 신축성있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긍정된다.

이 원칙에 합의한다면, 여타 절차문제의 협의는 그다지 어려울 것 없다고 본다.

우리는 조국광복 40주년에 해당하는 올해 안에 남북국회회담이 반드시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민족적 대의부터 우선시키는 상호경청의 정치인다운 금도로 대화를 이어나가기 바란다.

#### 진전없는 남북국회 예비접촉

서울신문(1985.9.26)

어제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국회회담 제2차 예비접촉은 아무런 진전없이 끝나버렸다.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이 담보상태에서 맴돌고 있는 것은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등 적십자회담이 보이고 있는 성과에 비해 의외의 느낌이다.

지난 7월 23일 열린 제1차 예비접촉에서 양측은 회담의 의제, 제1차 회담의 장소, 대표단 단장의 직위 등에 이견을 보였었다. 어제 열린 제2차 예비접촉에서도 이들 세 가지 문제에 관해 팽팽히 의견이 맞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양측이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세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회담의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 대표는 통일헌법을 기초하기 위한 민족통일협회의 기구를 구성하는 문제

와 이에 따른 통일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의제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북한측은 우리측이 제의한 의제의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문제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우리측 대표도 적절히 지적했듯이 사실 남북간의 불가침문제는 남북국회회담에서 다룰 문제라기보다 쌍방 정부당국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불가침의 문제는 공동선언 하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제반조치가 뒤따르는 실효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실제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당국끼리 협의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따라서 북한측은 불가침문제를 우리측과 협의하기를 원한다면 이미 지난 1981년 6월 5일 전두환대통령이 제의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에 응해야 할 것이다.

현재 남북간에 존재하는 긴장과 불신이 하루빨리 제거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다만 그 방법이 문제일 뿐이다. 현재의 전쟁 위협과 상호 불신은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의 발표 하나로 해소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보다도 오히려 그러한 다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천적 행동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측은 우리측 대표가 지난 1982년 2월 1일 제의한 20개 시범실천사업에 관해 다시 그 수락을 촉구한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 때 우리는 서울-평양간의 도로연결, 쌍방 정규방송의 자유로운 청취, 남북이산가족들의 우편교류와 상봉실현, 민족사의 공동연구, 자연자원의 공동개발과 공동이용, 비무장지대내의 공동경기장 설치 등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해갈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을 내놓았었다.

남북회담은 각기 그 회담의 수준에 알맞는 의제에 충실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경제회담에서 정치적 문제를 거론할 때 실효를 거둘 수 없음은 뻔한 일이다. 그러한 원칙은 국회회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공전 남북 국회회담

한국일보(1985.9.26)

남북고향방문단의 감회가 채 가지지 않은 25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국회 제2차 예비회담은 「다시 만나자」는 기약만 남기고 끝났다.

이날 논의 초점은 요컨대 ▲우리측이 제안한 통일헌법 기초를 위한 「민통협」 구성안과 북측이 제안한 불가침 선언안 등의 의제 ▲본회담대표의 격을 상위장급으로 하자는 우리측 제안과 의장 부의장 급으로 하자는 북측 제안의 조정 ▲첫 본회담을 서울과 평양 어디에서 열 것이냐 등이었다. 그러나 회담은 양측이 서로 기본입장만 밝혔을 뿐 공전이 된 것이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불가침선언안을 「긴장상태를 완화하여 통일을 촉진시키는 문제」로 수정제의한 것이 달라졌다면 달라진 점이다. 언뜻 보기에 유연한 듯 하지만, 그 실상은 우리측 권정달 대표가 지적한대로 국회회담을 「무의제화」 하자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 수정제의가 나오기까지의 2차례 남북국회 예비회담을 보아 뚜렷한 것은 북측이 포괄적이거나 애매한 제안을, 우리측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안을 내고 있다는 도식이다. 이 특징은 적십자와 경제회담 등 모든 채널의 남북대화에 공통된다. 대화의 실질적인 성과를 차근차근 쌓아 올리자는 우리측의 태도와는 달리, 북측은 대화의 성공보다 대화외적인 효과를 노려 막연히 대화를 계속하려는 것 같은 인상이다.

이점은 지난번 적십자 평양회담에서, 북측이 이산가족 문제의 토의를 1986년 9월까지 종결짓자고 언저시 제안했던 사실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것이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대화를 통한 긴장완화라는 명제가 소중한 만큼, 유연한 자세로 성의를 가지

고 대화에 임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 남북고향방문단의 감격이 오히려 장기대화의 인내를 일깨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합축을 이번 국회회담에서 다시 읽는다.

북의 어리석은 속임수  
-대미·일 추파용 「국회회담」 장난-

조선일보(1985.9.27)

25일의 남·북국회 2번째 예비접촉은 만나나 마나의 꼴로 끝났다. 북은 본질적으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강변을 늘어놓았다. 남·북간의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접촉이 앞선다는 것부터가 사실은 좀 어색한 일이었다. 성과는 못 보았으나 1970년대에 이미 남북정치문제협의를 위한 쌍방 당국간 회담의 선례와 경험이 있다. 이것이 온당하고 합리적인 길이고 순서의 선택인 것이다.

당시 당국간 회담인 조절위는 북의 중단으로 깨어지고 말았으나, 실질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그 권한과 책임을 지닌 남·북 당국간 정치회담이라야 결과에 대한 확고한 보장도 기대할 수 있다는 데서 정도이다. 국회는 그 다음에 절차상 필요여부에 따라 개입할 기능인 것이다. 특히 전쟁이나 평화나의 극히 민감한 중대하고도 현실적인 문제를 다른 외교전례가 모름지기 그러하고, 동·서 독관계 또한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른바 「불가침선언」 공동발표를 주장하면서 북이 국회회담을 거론하고 나왔을 때부터 그 전도에 몹시 회의적이었다. 우리측은 그것은 마땅히 남·북 책임당국 간에 협의 실현해야 할 사안임을 강조하고 국회회담에서는 그 기능에 합당하게 통일헌법을 기초하기 위한 기구(민족통일협의회)를 설치하는 문제를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와 같은 1차 예비접촉 때의 쌍방 입장과 주장이 25일의 2차 접촉에서도 되풀이됐다. 비록 북이 1차 접촉 때의 「긴장해소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불가침 공동선언」 의제 채택 주장을, 수사를 바꾸어 「긴장상태를 완화하여 통일을 촉진시키는 문제」로 수정 제의하는 형식을 취했다 해도, 내용의 본질이 달라진 것이 없음은 명백하다.

공산주의자와의 협상에서 애매모호한 이른바 포괄적 원칙에 합의해서는 안된다는 경구가 있지만, 우리는 아주 구체적 의제에 합의를 보고도 북의 태도 표변, 또는 상식 밖 강변으로 대화가 순조롭지 못하거나 파탄된 전례를 많이 목격해 왔다. 1970년대 적십자회담이 그러했고, 7·4공동성명에 바탕한 조절위위원회가 그러했다.

「긴장상태를 완화하여 통일을 촉진시키는 문제」라는 애매모호한 포괄적 수사를 받아들여 의제로 채택했을 때, 북이 국회 본회담에 가서 「긴장상태 완화를 위해서는 남·북국회간 「불가침선언」이 필수적이라고, 우기고 나올 것임은 불을 보듯 환한 것이다. 저들의 기본노선만을 관철키 위한 아집과 책략으로 무수히 대화를 파탄시켜온 저들과의 1970년대 이후 대화경험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얄은 말장난에 넘어가기에는 교훈이 너무 풍부하다.

북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처럼 남·북 인적교류가 실현된 마당이지만,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저들의 「평화공세」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미군철수를 노리는 이른바 환경조성에 있다는 근본 인식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민족간 경제협력 운운하면서 그 실현을 고의로 회피하는 일방의 북이, 최근 일본 실업인을 불러들여 컬러TV공장 건설이다 뭐다 하여 소위 합작투자를 중용·애걸하고 있는 것도, 저의는 우리의 국제환경 악화조성에 오로지 있다는 판단쯤도 이제는 상식으로 돼 있다. 곧잘 값싸게 「민족」을 들먹이고 팔아대는 북쪽공산집단의 본질과 최후목적이 무엇인가를 익히 안 위에, 우리는 우리의 민족적 지표에 서서 그래도 저들과의 접촉을 꾸준히 추구하고 있음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 제3부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 실현

### 1. 성립배경

#### 가. 제1차 실무대표 접촉

남북적십자회담 쌍방 실무대표들은 1985년 7월 15일 상오 10시부터 12시 22분까지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비공개리에 제1차 접촉을 갖고,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에서 합의한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방법과 절차문제를 협의하였다.

이날 접촉에는 쌍방에서 각기 3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는바, 한적측에서는 송영대 대표를 비롯하여 이준희 대표와 이병웅 대표가 참석하였고, 북적측에서는 박영수, 김완수, 박동춘 등 3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한적측 송영대 대표는 이날 회의의 첫 발언을 통해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이 빠른 시일 안에 실현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 1. 방문단의 명칭

방문단의 명칭은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으로 한다.

#### 2. 방문단의 구성 및 규모

가. 방문단은 쌍방 적십자사 중앙기관 책임자(대한적십자사 총재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를 단장으로 하여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예술공연단, 취재기자 그리고 인솔 및 지원인원으로 구성한다.

나. 고향방문단의 규모는 300명으로 하며 예술공연단은 제작진과 출연진(합창, 무용, 연기, 연주 등)을 포함하여 100명으로 한다.

다. 취재기자의 수는 100명 규모로 한다.

라. 인솔 및 지원인원은 인솔단장을 포함하여 50—60명으로 한다.

#### 3. 방문단 교환방법

방문은 동시 교환방문 방식으로 한다.

#### 4. 방문시기

교환방문 시기는 1985년 9월 20일—9월 26일 (6박 7일)로 한다.

#### 5. 방문지 및 방문방법

고향방문 인원은 방문지에 따라 특별시·직할시 및 각 도별로 방문단을 편성하고 특별시·직할시 및 각 도청소재지에서 적정수의 방문조로 나누어 자기 고향을 직접 방문토록 하며, 수행기자도 동행, 취재케 한다.

#### 6. 상봉의 범위

직계 존·비속은 헤어질 당시의 가족과 그 이후에 출생한 가족을 포함하고, 친척의 경우 방계는 8촌, 처·외가는 4촌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생사·소재가 확인된 친척도 포함한다.

#### 7. 예술공연단의 공연장소 및 공연회수

가. 공연장소는 상호 편리한 장소를 제공하도록 한다.

나. 공연회수는 1일 1회로 하며, 총 2—3회로 한다.

#### 8. 공연내용

가. 이념 및 정치성향적 요소를 배제하고 민족전통 중심의 예술을 내용으로 한다.

나. 특정인의 찬양, 정치선전, 대중선동의 성향이 있는 장치, 소품, 도구, 음악 등은 배제한다.

다. 공연시 사회자의 설명은 하지 않기로 한다.

#### 9. 공연대본 교환 및 공연장 사전 점검

가. 공연대본은 방문 8일전에 교환하도록 한다.

나. 연출상의 구성문제, 장치전환문제, 음향·조명·효과문제 등 공연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연출가, 무대감독, 무대장치·조명·음향 기술자 등 공연기술 인원이 공연장을 사전 답사토록 한다.

#### 10. 공연시간

국제관례에 따라 120분 정도로 한다.

한적측은 이상과 같은 기본문제와 관련된 사항이외에도 신변안전보장, 수송 및 통신, 기자의 취재활동, 통과절차 등 기타 행정 및 절차문제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북적측은 제8차회담의 합의사항과 직접 고향을 방문하기를 희망하는 이산가족들의 염원과 배치되게, 방문지를 서울과 평양으로만 국한시킬 것을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 예술공연단의 규모를 고향방문단과 동수로 해야한다고 하면서 예술단 규모를 100명으로 하자고 제안했던 제8차 본회담시의 주장과는 달리 이를 300명으로 늘릴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예술공연단의 공연문제와 관련하여 북적측은, 한적측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특정인을 찬양하는 정치적 요소를 배제할 것을 주장한데 반해, 공연내용을 통제하지 말것과 실황중계, 선전게시물 및 포스터의 설치 등을 주장함으로써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을 강조해 온 그들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다만 방문단 교환시기와 관련하여 남북 쌍방은 예술공연을 위한 사전답사의 필요성을 인정함으로써 8월중에 방문단을 교환하자던 종래의 입장에서 9월중에 실시하기로 원칙적인 의견의 일치로 보았다.

이날 접촉에서 가장 큰 견해차이를 보인 방문지 및 방문단규모와 관련하여 남북쌍방은, 방문지 문제는 북한측이 연구·검토하기로 하였으며, 방문단규모에 대해서는 한적측이 검토하여 제2차 접촉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2차 실무대표접촉은 1985년 7월 19일에 갖기로 쌍방이 합의하였다.

한편, 이날 접촉에서의 북한측 제안요지는 다음과 같다.

- 명 칭 : 적십자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 방문방법: 서로 엇바꾸어 방문
- 방문단규모 : 총 700명  
— 고향방문단 300명, 예술단 300명, 기자 50명 및 실무일꾼 50명
- 방문지 및 방문방법 : 서울과 평양에서 가족 상봉
- 공연내용 : 각기 편리한 내용으로 함
- 공연내용소개 : 실황중계하며, 공연소개 포스터 부착

#### 나. 제2차 실무대표 접촉

제2차 실무대표접촉은 1985년 7월 19일 상오 10시부터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려 1시간 37분간 진행되었다.

북한측 대표단은 이날 회의의 첫발언을 통해, 제1차 접촉에서 그들이 밝힌 제안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반면 우리측 안은 공정성을 결여한 제안이라고 강변하면서 방문지를 제1차 접촉에서 그들이 주장했던대로 서울과 평양으로 국한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제1차 접촉에서, 방문지문제는 북측에서 검토하고 방문단의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검토하기로 했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고향방문단이 직접 고향을 방문할 수 있다면 고향 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규모는 별 문제없이 타결될 수 있다는 신축성있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방문지를 서울과 평양으로 하기로 한 것은 제8차 본회담에서 쌍방간에 이미 합의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때를 쓰는 한편 우리측의 직접 고향방문 주장은 실무접촉에 난관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는 등 억지주장을 늘어놓으면서 고향방문단의 방문지를 서울과 평양으로 국한시켜야 한다고 계속 고집하였다.

우리측은 방문지를 서울과 평양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제8차 본회담에서 합의한 「고향방문단」이라는 말속에는 직접 고향을 가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방문지문제를 비롯한 제반문제를 하나하나 토의·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으나 북한측은 이를 외면하고 그들의 주장에 우리측이 동의해야 한다는 일방적 주장만을 되풀이 하였다.

한편 우리측은 쌍방간의 타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접촉이 끝난 30분 후에 쌍방 대표 1명씩 이 별도로 만나 좀더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측은 개별접촉을 하더라도 별 의의가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측이 서로 상대방의 제안을 좀더 연구하여 타결점을 찾도록 노력하자고 하면서 제3차 접촉을 7월 25일에 가질 것을 제의한데 대해서도, 북한측은 현재와 같이 쌍방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른 상태에서는 더 만나 보아야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등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차기 접촉일자의 합의마저 거부하였다.

그러면서 북한측은 자기측 제안에 우리측이 동의할 경우에 한해서 직통 전화로 연락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제2차 접촉은 북한측이 그들의 주장에 우리가 무조건 동의해야만 고향방문단 교환방문사

업을 추진하겠다는 강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제3차 접촉일자에 대한 합의마저 거부함으로써 아무런 진전없이 끝나고 말았다.

#### 다. 제3차 실무대표 접촉

제3차 실무대표접촉은 1985년 8월 22일 상오 10시부터 16시 36분까지 관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려 비공개리에 진행되었다.

이같은 합의는 8월 19일 관문점에서 쌍방적십자 실무자간에 비공식 접촉을 갖고 방문단규모, 방문지 등 방문단교환에 따른 방법과 제반 절차를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는 비공식접촉에서 쌍방간에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쌍방이 각기 미리 작성해 온 합의서(안)들을 놓고 문안조정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2차례의 휴회를 갖는 등 무려 6시간 36분간에 걸쳐 마라톤회담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접촉에서 남북 쌍방 적십자사는 큰 쟁점없이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에 따른 구체적 실천방법과 절차문제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보았다.

쌍방은 동 사업을 1985년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간에 걸쳐 동시 교환방문 형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규모는 적십자 중앙기관 책임자를 단장으로 하여 고향방문단 50명, 예술공연단 50명, 취재기자 30명 및 지원인원 20명 등 총 151명으로 하고, 방문지는 서울과 평양으로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에 관한 합의서

1985년 8월 22일 개최된 제8차 남북적십자본회담의 제3차 실무접촉에서 쌍방은 조국광복 40주년을 계기로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 1. 방문단의 명칭

방문단의 명칭은 각기 편리한대로 부르되, 대한적십자사측은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으로 한다.

##### 2. 방문단의 구성 및 규모

가. 방문단은 쌍방 적십자사 중앙기관 책임자(대한민국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를 단장으로 하여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예술 공연단, 취재기자 그리고 지원인원으로 구성한다.

나. 방문단의 규모는 적십자사 중앙기관 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각기 총 151명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은 서울과 평양을 고향으로 한 인원을 위주로 하여 50명으로 한다.
- (2) 예술공연단(제작진과 출연진)은 50명으로 한다.
- (3) 취재기자는 30명으로 한다.
- (4) 지원인원은 20명으로 한다.

3. 방문단 교환방법

방문은 동시 교환방문 방식으로 한다.

4. 방문시기

교환방문시기는 9월 20일~9월 23일 (3박 4일)로 한다.

5. 방문지

서울과 평양으로 한다.

6. 상봉의 주선과 범위

가. 쌍방은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인원들에 대해 적십자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그들의 가족과 친척을 찾아서 상봉을 시켜주는 편의를 제공한다.

나. 상봉의 범위에 있어, 직계 존·비속은 헤어질 당시의 가족과 그 이후에 출생한 가족을 포함하고, 친척의 경우 방계는 8촌, 처·외가는 4촌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생사·소재가 확인된 친척도 포함한다.

7. 예술공연단의 공연장소 및 공연회수

가. 공연장소는 초청측이 성의를 가지고 제공하는 시설이 완비된 극장으로 한다.

나. 공연회수는 총 2회로 한다.

8. 공연내용

가. 공연은 민족전통 가무를 중심으로 하며, 상대방을 비방·증상, 자극하지 않는 내용으로 한다.

나. 공연시 사회자는 정치성을 배제하고 상대측을 비방·자극하지 않는 원칙하에 공연 종목만을 소개할 수 있다.

9. 공연 프로그램교환 및 공연장 사전 답사

가. 공연프로그램은 방문 3일전에 상대측에 통보하도록 한다.

나. 연출상의 구성문제, 장치전환문제, 음향·조명·효과문제 등 공연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적십자 인원 2명과 공연기술 인원 3명이 1985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공연장을 사전 답사토록 한다.

10. 공연시간

120분 정도로 한다.

11. 신변안전보장

방문 7일전에 관계당국의 신변안전보장 성명을 발표하고 그 문본을 상대측에 수교한다.

12. 수송 및 통신

가. 판문점을 넘어 자기측에 들어오는 방문단의 인원, 장비 및 기타 필요한 물품의 수송에 대해서는 초청측의 차량을 이용하도록 한다.

나. 방문기간 중 서울·평양간 행낭을 1일 2회 운용한다.

다. 방문기간 중 업무연락 및 취재기자 송고용으로 현재 가설되어 있는 남북직통전화 20회선을 이용하며, 필요할 경우 쌍방 합의에 따라 증설한다.

### 13. 기자의 취재활동

초청측은 방문측 기자들의 이산가족 상봉 현장에 대한 취재활동을 보장하고 취재에 필요한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

### 14. 통과장소와 통과절차

통과지점은 판문점으로 하고 통과절차는 남북적십자회담의 관례에 따른다.

### 15. 방문자 명단통보시기

가. 고향방문단의 명단은 방문 10일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나. 예술공연단, 취재기자 및 지원인원의 명단은 방문 3일 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 16. 고향방문자 명단 작성 양식

가. 고향방문단 명단의 방문자란에는 방문자의 성명, 성별, 연령, 고향, 방문대상자와의 관계를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

나. 고향방문자 명단의 방문대상자란에는 방문 대상자의 성명, 성별, 연령, 고향, 헤어진 때를 기재하고 기타 가족찾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첨부한다.

### 17. 예술공연단, 취재기자단, 지원인원 명단작성 양식

고향방문자 이외의 방문단 구성인원 명단에는 성명, 성별, 직위, 참가구분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

### 18. 방문자의 표식 및 증명서 소지

가. 고향방문단, 예술공연단, 지원인원은 적십자회장에 자기측을 표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한다.

나. 기자는 방문단 표식외에 기자완장을 착용하며, 기타 사항은 남북적십자회담의 관례를 준용한다.

다. 방문자는 자기측 적십자사 총재(위원장)가 발행하는 신분확인 증명서를 소지한다.

### 19. 체류일정

방문 7일전에 체류일정표를 상대측에 수교하고 일정을 협의·결정한다.

### 20. 기 타

가. 방문단이 상대측 지역을 방문중에는 상대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르도록 한다.

나. 숙식, 통신 등 방문단 인원들에 대한 편의는 초청측에서 제공한다.

다. 초청측은 공연개막전 방문측이 공연무대에서 사전 연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라. 공연무대장치의 보조인원 및 일반조명기구 제공 등 기타 공연에 관련되는 문제는 초청측에서

편의를 제공한다.

마. 공연프로그램은 공연하는 측이 제작 휴대하여 배포하도록 한다.

라. 실무접촉 이후의 경과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이 1985년 9월 20일부터 23일까지로 확정되자, 쌍방적십자사는 4차례(9월 8일, 9월 10일, 9월 17일 및 9월 19일)에 걸쳐 사전연락관 접촉을 갖고 교환방문 추진에 따른 제반실무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각기 151명의 방문단 명단과 고향방문단이 상봉을 희망하는 가족·친척들의 명단을 함께 교환하였다.

이와함께 쌍방 정부당국은 각기 상대측 방문단 151명이 남북을 왕래하고 자기측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신변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9월 13일 그 성명문본을 상호 교환하였다.

한편 예술공연단 교환공연과 관련해서도, 쌍방은 실무접촉에서의 합의에 따라 5명의 사전답사반을 각각 상대방 지역에 파견하여 공연장을 사전 답사하는 등 세심한 사전준비를 병행하였다.

이러한 사전접촉과 협의를 거쳐 남북간에는 분단 40년만에 처음으로 이산가족의 고향방문과 이에 따른 가족·친척 상봉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 2. 교환방문 실현

1985년 9월 20일 상오 9시 30분을 기해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동시 교환방문이 실현됨으로써, 남북간에는 분단 40년만에 처음으로 이산가족들이 고향을 방문하여 직접 가족·친척들과 상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쌍방적십자사 총재 인솔하에 관문점을 경유, 서울과 평양에 도착한 이들 일행 151명은 곧바로 3박 4일간의 방문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교환방문을 통해 서울과 평양에서는 분단 40년이라는 오랜 세월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총 100명의 방문단중 65명이 92명의 가족·친척들과 극적으로 상봉, 재회의 감격을 나누었다.

이틀간에 걸쳐 이루어진 상봉에서, 평양을 방문한 우리측 방문단 중에서는 35명이 41명의 가족·친척들과 상봉하였으며, 북한측은 30명이 51명과 상봉하였다.

한편 예술공연단도 9월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서울예술단은 평양대극장에서, 그리고 평양예술단은 국립극장에서 각기 2회의 공연을 가졌다.

오랜 단절과 불신 속에서 어렵게 이루어진 교환공연이란 점을 고려하면, 한두차례의 공연으로 남북의 전체예술을 비교·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나 우리측의 공연내용중 민속무용부분은 북측관중으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평양예술단의 국립극장 공연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군대식 집단체조를 연상케하며 중공과 소련풍을 많이 모방하고 있어 민족 고유예술과는 거리감을 느꼈다는 것이 이를 관람한 많은 관중들의 반응이었다.

대한적십자사가 광복 40주년을 맞아 이산가족찾기 사업의 촉진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제의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사업은 1985년 9월 23일 정오 쌍방대표단 각 151명이 관문점을 통해 자기측 지역에 전원 무사히 귀환함으로써 3박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끝마쳤다.

금번 이산가족 고향방문사업은 그 규모나 성격이 제한되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기는 하나 그 나름대로 동 사업이 지니는 의의는 크다고 하겠다.

### ● 분단 40년 이래 이산가족의 첫 상봉 실현

분단으로 야기된 이산가족의 이산 40년의 아픔은 쌍방간의 정치체제나 사회제도의 차이와 단절로 인해 겪어야 하는 어떠한 고통이나 불이익보다도 가혹한 것이다.

따라서 금번 남북이산가족의 고향방문 실현은 비록 방문지역과 규모에 있어 제한되어 있어 아쉬운 점이 있으나 이산가족이 남북을 왕래하면서 가족·친척들과 만날 수 있는 선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과거 남북간에는 수차에 걸쳐 인적왕래가 있었기는 하나 이산가족이 직접 남북을 왕래하면서 가족들과 친척들을 상봉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 이산가족 재회사업 촉진분위기 조성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 실현은 남북관계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이산가족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하게 될 것이며, 남북간에 진행중인 적십자회담 추진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 ● 남북대화 진전에 긍정적 기여

금번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의 실현은 1970년대부터 남북간에 각종 회담

이 열린 이래 대화로 이룩된 최초의 결실이다.

따라서 이번 남북간의 합의는 앞으로 진행되는 다른 분야에서의 남북대화에도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여 회담의 실질적 진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3.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

우리는 그간 남북으로 흩어진 1,000만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남북관계 개선의 제1의적 과제로 삼고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대한적십자사는 물론 언론기관을 비롯한 사회 각계, 이산가족 당사자들끼리도 이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그들의 재결합을 주선하기 위한 회담을 북한적십자측에 제의함으로써 남북한간에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대화의 장을 열어 놓았으나, 북한측이 정치적 문제의 우선 해결을 주장하고 인도적 문제해결을 기피함으로써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우리는 정돈상태에 빠진 적십자회담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추석성묘단 상호교류」(제7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제13차 실무회의), 「노부모 생사확인 및 재회사업」(제1, 6, 7, 8차 실무회의) 등의 시범사업을 수차례 걸쳐 제의하였으며, 또한 기회있을 때마다 이산가족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상기시키고, 북한측이 적십자회담의 재개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해 왔다.

특히 제5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우리는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모색해 왔다.

전두환대통령은 1982년 1월 22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의 실천조치로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의 체결을 북한측에 제의하면서 「이산가족의 인도적 재회문제」가 남북간에 해결되어야 할 우선적 과제임을 지적하였다.

같은 해 2월 1일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이 북한측에 제의한 「20개 시범실천사업」에서도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사회개방을 위한 제반 조치들과 함께 「남북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우선 그들간에 우편교류와 상봉을 실현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전두환대통령은 1982년 8월 15일 광복절 제37주년 경축사에서 남북한간 사회개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권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에게 우리 사회부터 먼저 개방할 것을 선언」하고 「우리의 형제 동포들은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대한민국을 내왕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그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할 것」임을 천명하는 등 이산가족문제의 심각성과 시급한 해결을 간단없이 북한측에 촉구해 왔다.

특히 지난해 우리는 북한측의 수재물자 제공제의를 수락하고, 이를 계기로 북한측에 「남북이산가족 찾기 회담」을 제의함으로써 12년간이나 중단되었던 남북적십자회담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지난 5월 27일 ~ 30일(3박 4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본회담에 포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함으로써 금번 이산가족의 고향방문과 예술공연단의 상호 교류에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

우리 정부와 대한적십자사의 이러한 노력과 병행하여 언론기관에서도 자발적으로 「10만 부모 찾아주기 운동」, 「1천만 이산가족 찾기 캠페인」 등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왔다.

특히 1983년 6월 30일 KBS-TV의 「이산가족찾기」 방송은 이산가족 문제의 비극과 심각성을 생생히 보여줌으로써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또한 이산가족 당사자들도 자신들의 불행한 처지를 한탄하면서 혈육을 만날 날을 막연히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혈육상봉의 길을 개척하려는 운동을 펴기 시작했다.

1983년 2월 9일 발족한 「1천만 이산가족 재회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남북이산가족 재회

문제에 대한 대정부건의, 이산가족문제와 관련된 연구조사 및 국제기구와 협조 등 국내외에서의 환경조성과 재회촉진활동 등을 적극 전개해 왔으며, 매년 8월 12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여 남북이산가족 재회의지를 다지고, KBS방송국 옆에 「만남의 광장」을 마련, 공동운영하는 등 이산가족 재회의 날을 기다리며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 4. 국내의 주요 반응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상호교환 방문 실현에 즈음하여 도하 각 신문들은 한결같이 긴 세월을 참고 견뎌 온 이산가족 재회는 민족 분단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민족사에 새로운 일장을 열었을 뿐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는 세계인에 대해 우리의 강력한 민족적 동일성, 통일과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 겨레의 강인한 의지를 유감없이 과시한 일순』이었다는 논지의 사실을 실었다.

또한 『사상이라는 이름의 철벽을 인도주의로 녹인 우리의 참을성이 대견』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이같은 재회는 『단발행사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하고 『사업내용도 일정 장소, 짧은 기간으로 그치지 말고 기간을 늘려 함께 즐기도록 허용하며 전화와 서신으로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교류를 통해서 가슴 아픈 것은 『남북의 장벽이 너무나 높고 두텁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산가족 재회의 감격도 중요하지만 그 감격에만 안주해 냉엄한 현실을 보지 못하거나 『필요이상의 감상에 젖어들거나 지나친 기대를 가짐으로써 나중에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또한 지금부터는 『우리 겨레가 감루를 닦고 현실인식을 정리하여 앞으로 무엇을 이바지할 것인가에 관한 과제 의식을 가다듬을 차례』라고 지적하면서 『인내를 갖고 조그맣게 뚫린 구멍을 넓혀가면서 잦은 대화와 접촉을 통해 이질감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주요언론들도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상호교환 방문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놀랄만한 진전이며, 획기적인 것』으로 남북간 『해방노력의 구체적이고 극적인 결실』이라고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상호방문이 『1회에 그치지 말고 교류가 확대되고 기타 분야까지 확산』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이번 교류를 통해서 『40년이라는 세월과 두터운 체제의 벽』도 실감했다고 지적하고, 금후 『남북관계 진전은 낙관할 수 없으며 신중과 인내를 가지고 관망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상호교환 방문을 전후로 한 국내외 주요언론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 《국내 반응》

보내는 마음, 맞이하는 마음  
-남북고향방문단과 예술단의 교환을 보고-

경향신문(1985.9.20)

남북으로 갈렸던 이산가족이 40년 동안이나 막혔던 분단의 장벽을 넘어 드디어 고향 땅을 밟았다. 남북 각 1백 51명씩으로 구성된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은 20일 상오 관문점을 동시에 통과해 3박 4일 동안 서울과 평양에 머물면서 가족 친지들과 재회의 회포를 풀게 된다.

비록 제한된 규모, 제한된 지역의 방문이긴 하지만 긴 세월을 참고 견뎌 온 이산가족의 재회는 민족분단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번의 만남은 남북적십자회담이 맺어준 인도적 차원의 보람있는 결실이었지만 장차는 민족통일로 향하는 첫걸음의 이정표로 기록될 만하다. 더우기 추석 전에 이루고야 말겠다던 한적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 극히 일부나마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준 그 감회는 한층 깊은 듯하다.

분단 40년만에 처음 이루어진 이번 고향방문단의 교류에서 그 자체가 갖는 역사적인 뜻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선 같은 민족이지만 체제와 사상이 다른 상대가 모여 술한 우여곡절 끝에 명백한 결론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번 적십자회담을 통해 얻은 값진 교훈이다. 때로는 생떼같은 억지가 대화를 가로막기도 했지만 끈질긴 설득과 양보로써 상호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이다.

사회의 모든 현상이 인적 접촉을 통해 형성되듯, 이산가족의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분야의 교환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호신뢰의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길도 바로 이와 같은 교류를 통해서만 추구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번 방문단의 교류는 어디까지나 시작에 불과하다. 첫술에 배를 불릴 수 없듯이 단번에 많은 욕심을 채울 수는 없는 것이다. 비록 방문단의 규모가 50명에 지나지 않으며 또 방문지가 서울·평양에 국한됐다고 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그 이상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만한 준비태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을 때는 도리없이 한쪽이 양보를 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우리는 무리한 요구를 해서 예기치 못했던 부작용을 겪느니보다는 차라리 소규모가 될지라도 단계적인 절차에 따라 교류를 지속시켜 나가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한가지 우리는 단단히 경계해야 할 일은 지나치게 감상에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 친지의 재회로 끊어졌던 핏줄이 당장 이어지고 통일이라도 보게 될 것처럼 흥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번 방문단의 교류는 어디까지나 신뢰를 쌓아 올리는 첫 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뜻에서 쌍방은 서로가 성의를 다해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그것이 정치적 목적이거나 다른 속셈에 의해서 이용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불신의 뿌리를 더욱 깊이 심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겠다.

이제 달걀 한개를 부화시키는 기분으로 조심스럽게 사업을 전개하여 경제회담, 국회회담, 체육회담, 그리고 최고책임자회담을 성사시키는 데까지 이르도록 양측이 모두 끈기있는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한날 한시에 서울·평양

-21일 오전 10 ~ 12시 사이의 감동-

조선일보(1985.9.22)

남과 북, 2백 32km 떨어진 서울과 평양은 철벽같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더욱 멀지만, 한날 한시에 울려오는 그 순간의 소리는 같았다. 몸부림도 감격도 같았다. 참으로 분단 40년만의 일이었다. 천륜처럼 혈육의 정은 그런 것이었다.

『누님, 이게 꿈입니까, 정말 살아계셨군요...』 『성엽아, 진짜 성엽이구나...』 『형님, 항석이 형님...』 『창석아, 이게 얼마만이나?』 21일 오전 10시 20분 평양에서는 이런 소리들이 터졌고, 서울로 전해 내려왔다.

『어머니...』 『형석아...』 서울에서 만난 83세의 늙은 남쪽 어머니와 54세의 북쪽 큰아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오고 간 것으로 한 신문은 사진 설명의 제목을 뽑았다. 83세의 어머니는 한번이라도 잃어버린 큰아들의 모습을 보려고 오늘까지 더욱 버티고 살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노모는 어느새 귀가 어두워져 있었다. 말이 들리지 않았고 북에서 온 맏아들을 얼른 알아보지도 못했다. 상면 첫 순간, 우는 것조차 잊었는지 돌부처처럼 멍하니 앉아있었고 맏아들은 흐느껴 울었다.

그 모자의 만남을 찍은 생생한 한 장의 사진은 한반도 분단 40년의 슬픔과 길고 긴 한이, 만나

는 한순간의 걱정으로 응결된 듯한 현장을 증언한다. 그것은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하나의 궁극적인 표정이라고 할 만한 것이다.

그런 걱정, 그런 외침, 그런 표정이 한낱 한시에 서울과 평양에서, 그 순간에 한결같았던 것이다. 각각 50명의 방문단원 중 서울에 온 15명이 그렇게 떨어졌던 혈육을 만났고 평양에 간 10명이 똑같은 감동으로 그들의 혈육을 만났다.

『분단 40년 만에 겨우 뚫어 놓은 좁은 길』(김상협 한적총재의 말)을 통해 서울과 평양에서 것처럼 똑같은 감동의 순간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날 그 시각에 서울과 평양의 모든 감격이 같았던 것은 아니다. 평양에서 만난 남과 북의 아우와 형의 감동은 같았지만, 그들의 말 중에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것이 있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과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하고 TV카메라 마이크를 잡은 남의 동생은 인사말을 했다. 북의 형은 『모든 것이 김일성수령님의 덕분이지요』 하고 말해 분위기가 갑자기 굳어졌다고 한다.

남북간 한 시민의 인사말이 보인 이 차이는 분단 40년, 오늘에 이르는 남북의 차이를 상징적으로 집약해낸다.

1985년 9월 21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 그 순간에 상봉한 이산가족들의 감동은 핏줄의 일체감처럼 같았지만 남북간에는 아직 건너지 못할 장벽이 너무나 완강하고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서도, 그 순간의 걱정어린 외침, 북의 아들이나, 남의 노모의 형언하기 어려운 표정은 군사분계선도, 정치이념까지도 초월한 뜨거운 인간의 맥박으로써 만인의 가슴에 다가온다. 한결같은 그런 맥박은 완강한 장벽 사이로 「분단 40년만에 겨우 뚫어놓은 좁은 길을 더욱 넓혀가는」 민족적인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간에 모두 냉정하고 침착하게, 더욱 값지게 그 원천을 주시해야 한다.

한번만으로 끝날 일 아니다  
-고향방문단의 정치이용엔 실망-

경향신문(1985.9.23)

연 이틀 동안 서울과 평양에서 펼쳐졌던 혈육상봉극은 창자를 끊는 고통 속에 막을 내렸다. 나흘 전에 서울에 왔던 북한방문단원들이 돌아가고 우리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도 모두 돌아왔다. 이산가족들에게 지난 「3박 4일」은 실로 꿈같은 나날이었다. 40년을 참고 기다려 온 거래의 한을 풀어주기에는 터무니없이 짧은 일정이었지만 그 보람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소망이다.

우리는 이제서야 40년 동안이나 쌓아온 높은 장벽에 구멍 한 개를 뚫어놓은 셈이다. 그것은 한적측의 끈질긴 인내와 노력으로 대화를 유지해 온 14년 동안에 걸친 결실이라는 점에서 일단 그 의미를 평가하고자 한다. 우리는 그 3박 4일 동안에 진정한 혈육의 정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다.

40년만에 북에서 돌아온 아들은 8순이 넘은 노모에게 자신의 눈가에 찍힌 흉터를 확인시키며 통곡을 했다. 또 『지난 세월의 불효를 용서해 달라』며 아버지에게 술잔을 올리는 아들의 모습은 이념과 체제 위에 인륜이 살아있음을 실증해 주었다.

그처럼 질긴 핏줄을 끊고 또 다시 남과 북으로 헤어져야만 하는 그런 비극의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 하는가. 생각할수록 지난 세월이 억울하게 느껴진다. 어머니와 아들이, 또는 아버지와 딸이 멀쩡한 생이별을 하고 떨어져야만 하다니 그것이 어느 하늘 아래 있는 법칙이란 말인가.

분단의 비극을 보는 우리의 감상은 그것 뿐이 아니다. 가족상봉 과정에서도 시비와 곡절이 있었

지만 인륜을 거역하는 독단은 이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일단 고향방문단을 교환해 놓은 마당에 지척에 둔 혈육들의 상봉을 제한하는 처사가 누가 보아도 납득이 가질 않는다.

더구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감시원의 눈초리를 의식해야만 하는 북한 이산가족들의 처지는 한층 우리의 가슴을 메게 했다. 혈육이 뒤엉켜 눈물바다를 이룬 가운데에서도 『김일성수령동지의 은덕』을 앵무새처럼 되씹어야만 하는 것이 그들의 어쩔 수 없는 운명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TV카메라 앞에 나선 철없는 국민학생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엄청난 사고와 행동의 벽을 느꼈다. 의식의 세계가 전개되면서부터 치밀하게 주입된 사상교육은 김일성왕조의 완벽한 신앙이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실망하지 않고 대화와 교류증진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꼈다. 대화와 교류가 계속되다 보면 40년간의 높고 두꺼운 장벽도 무너질 날이 오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다만 북한측에서는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적십자 정신에 입각한 대화와 교류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며 또 1970년대 초반의 경우와 같이 엉뚱한 이유를 붙여 어느날 갑자기 대화의 문을 일방적으로 닫아버림으로써 이산가족의 한을 더 심화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줄 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교류를 지켜보면서 필요이상의 감상에 젖어들거나 지나친 기대를 꺾으로써 나중에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이번의 첫번째 고향방문단과 예술단의 교환방문을 계기로 남아 있는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고 서신을 교환하며 종국적으로는 자유로운 왕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점진적인 발전 방안이 강구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40년 한맺힌 재회 눈물

- 고향방문단 교환이 갖는 뜻을 새기자 -

동아일보(1985. 9. 23)

분단 40년만에 꿈에 그리던 혈육을 만난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은 서로 얼싸안고 영영 울었다. 백발이 성성한 어머니도 주름진 얼굴의 아들도 오빠와 누이도 함께 오열했다.

그들만 운 것이 아니고 신문이나 TV 등을 통해 감격적인 상봉장면을 지켜본 온 겨레도 함께 울었다. 비록 지정된 장소, 제한된 시간이었지만 이 만남보다 더 눈물겹고 가슴아픈 재회가 어디에 또 있겠는가.

어느 8순 노모는 북의 아들과 처음 만났을 때 잘 몰라보다가 눈 가장자리의 흉터를 보여주자 울음을 터뜨렸다. 여기저기서 『형님 살아계셨군요』 『누님! 오빠!』 하고 단장의 외침이 터져나왔다.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겨레의 심금을 울린 외마디 소리가 터져나올 때마다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고 동족은 동족이구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이번 고향방문단의 교환을 통해 가족이나 연고자를 만난 이산가족은 우리측이 35명 북한측의 고향방문자 30명 등 모두 65명이다. 1천만 이산가족의 비원을 생각하면 미미한 숫자에 불과하지만 이번 만남이 분단 40년만의 처음 일이고 끈질긴 적십자회담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것이다.

그러나 감격적인 만남 뒤에는 40년 분단의 벽을 실감케 하는 씁쓸한 일들도 많았다. 주교가 된 오빠를 보고 북의 누이는 『우리는 살아서 천당가는데 오빠는 죽어서 천당가겠다니 돌았다』 고 말했다. 남의 동생이 『우리 가족을 만나게 해준 하느님께 감사한다』 고 말하자 북의 형은 『모든 것이 김일성 수령 덕분』 이라고 했다.

참으로 엄청난 거리가 아닐 수 없다. 무엇이 남과 북을 이렇게 멀게 만들어 놓았는가. 40년동안 분단의 내면화가 꾸준히 진전되어 왔음을 실감하면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는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릴 것인지를 생각해 한다.

더욱이 남과 북의 거리를 실감케 한 것은 이번에 고향방문단과 함께 온 예술공연단의 활동에서다. 말투가 달라진 사회자의 진행솜씨와 단원들의 의상, 공연내용 등에서 역시 깊고 깊은 이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국악 민속춤 등 민족의 전통예술이 크게 변형돼 있을 뿐 아니라 중국 소련 등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많다고 우리측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공개사회와 폐쇄사회의 차이를 지닌 채 40년 동안 이질화과정의 축진되어 왔으니 말이다.

북의 말투와 일상용어가 많이 달라져 우리 기자들의 질문을 얼른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된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북의 국민학생이 우리 어린이는 배우지도 먹지도 못하는 것으로 믿고 있는 끊임없는 세뇌교육의 결과를 확인했을 때다.

통일을 향한 길이 얼마나 멀고 어려운 것인지를 알지만 그 일을 결코 중단할 수는 없다. 인내를 갖고 조그맣게 뚫린 구멍을 넓혀가면서 잦은 대화와 접촉을 통해 이질감을 해소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제 분단 40년만에 초유의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이 무사히 끝났다. 분단사에 길이 남을 이번의 획기적인 진전을 헛되게 하지 않고 하나의 이정표로 다음 단계의 남북한 관계발전에 기여하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향후의 이산가족 문제

중앙일보(1985. 9. 23)

타율적으로 헤어져야 했던 이산가족들이 지난 주말 40년만에 다시 만났다.

이테올로기나 제도의 차이도 혈육의 정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백일하에 드러낸 극적인 순간이었다.

이번의 이산가족 재회는 우리 민족사에 새로운 일장을 열었을 뿐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는 세계인에 대해 우리의 강력한 민족적 동일성, 통일과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 겨레의 강인한 의지를 유감없이 과시한 일순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상봉이 허용된 사람은 1천만 이산가족중 남북을 합해 2백명 미만에 불과하다. 5만분의 1의 「행운의 소수」다.

또 가족을 만나기 위해 서울과 평양에 도착한 상당수의 이산인들이 상봉을 못한 채 되돌아 왔다.

우리는 혈육재회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더욱 아프게 느낀다.

이제 우리는 눈물을 거두고 차분한 마음을 되찾아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다.

이번의 가족 재회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채 한낱 시범행사로 계획되고 실행됐다. 그 때문에 인원이 한정되고 방문지역도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이같은 재회는 단발행사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돼 나가야 한다.

참가인원도 늘리고 방문지역은 삼천리강토 전역으로 확대돼야 한다.

사업내용도 일정 장소, 짧은 기간으로 그치지 말고 기간을 늘려 함께 즐기도록 허용하며 전화와 서신으로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가족이 없더라도 고향을 갈 수 있고 친구와 친척도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적십자회담은 더 이상 시간을 끌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다. 이산가족 문제는 노력만

한다면 당장이라도 해결될 수 있다.

이번의 실험을 바탕으로 방문단과 공연단을 계속 교류하면서 미결문제를 조속히 종결시켜야 한다.

이번 교류기간을 통해서 또 하나 가슴아픈 것은 남북의 장벽이 너무나 높고 두텁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점이다.

북한 동포들과의 기자인터뷰는 언어 소통이 제대로 안돼 비능률을 면할 수 없었다. TV들은 그들의 발언 내용을 자막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다수의 북한 청년과 어린이들이 아직도 우리가 험벗고 굶주리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엔 아연치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갈라 놓은 허구에서 벗어나 민족사의 정도를 찾아 걸어가야 한다.

이번 가족상봉을 통해 표출된 우리 민족의 강력한 염원과 의지가 앞으로의 남북대화의 교류에 반영되어 결실되기를 기대한다.

#### 북한의 춤과 노래

-민족문화의 맥은 살아 있는가-

중앙일보(1985. 9. 23)

우리 나라 전통무용의 춤사위는 크게 발과 손, 그리고 몸짓의 세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발 뒤꿈치를 지그시 누르며 앞발을 살며시 드는 동작, 팔의 선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펴는 동작, 정과동이 적절하게 혼합된 유연한 몸짓, 이러한 모든 동작이 한데 어우러져 온 몸으로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관객과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고유한 춤이 갖는 멋이요, 혼이다.

민요도 마찬가지다. 몸 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온 자연스런 발성이 우리 가락의 기본이며 정취다. 그러나 분단 40년만에 처음 대한 북한의 예술공연을 본 우리의 느낌은 한 마디로 「전통의 단절」을 실감케 했다.

남녀 50명으로 구성된 북한 공연단은 이번 서울 공연에서 칼춤과 부채춤·민요 등을 중심으로 선을 보여 그들의 선진성 높은 레퍼토리를 피한 듯한 인상은 주었지만 전통무용의 춤사위나 민요의 가락들에서는 민족고유의 감정과 정서가 많이 변질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전문가들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칼춤 등 전통무의 율동이 상하로 빠르게 움직인다든가 동작이 갑자기 정지상태를 유지한다든가, 또는 손놀림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지나치게 작위적인 것 등은 우리의 고유한 춤사위에서는 별로 찾아 볼 수 없는 동작이었다.

이날 무대를 지켜본 전문가들은 여성무용수들의 손놀림·발놀림과 하체의 재빠른 움직임은 인도 등 남방춤의 영향을 받았으며, 남성 무용수들의 기계체조 같은 동작은 전래적으로 소연방 코사크 지방의 민속춤을 본받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 뿐 아니라 남녀 중창으로 소개된 민요들도 너무 기교에만 치우쳐 정서적인 안정감을 잃은 느낌이었다.

북한에서는 성악의 모든 창법에서 「밝고 맑은 소리」만을 내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는 전통가락인 「관소리」와 남도창에서도 탁음을 없애고 청음만을 사용하게 한 것으로 봐도 그 변질의 폭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악연주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북한은 이른바 5음계 국악기를 서양음악의 12울반음계 악기로 개량, 전통적인 가야금의 12현을 19현으로, 해금은 2현에서 4현으로 대폭 개조했다. 국악기에 양악기를 「배합복중」시킨다는 그들 나름대로의 악기편성 체계를 세웠다.

그러나 「현대화」라는 이름아래 이뤄진 이같은 악기의 개조와 배합은 결과적으로 전통국악 양

식의 일탈만을 가져와 오늘과 같은 이질적 민족음악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번 북한예술단의 서울 공연에서 대부분의 청중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생소함은 바로 이런데서 연유한다.

비단 음악·무용 뿐만 아니라 북한의 모든 문화예술은 예술의 궁극적 가치인 미와 진실의 추구보다는 사상교양과 정치선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역점을 두는 부문은 이른바 「무대종합예술」이라는 가극형식의 대형무대다. 무대장치가 크고 화려하며 음향과 조명 등을 기교화하여 같은 작품을 장기간 계속 되풀이 공연한다.

이런 모든 「예술작품」이 특정인물을 우상화하거나 특정목적에 위한 도구로 쓰여지는데 문제가 있다. 「우상」은 있으나 「인간」이 없는게 북한 문화예술의 한계며 비극이다.

### 이산 40년의 벽은 두터웠다

서울신문(1985. 9. 24)

남과 북의 혈육이 얼싸안고 몸부림치며 울었다. 취재하던 외국 기자까지도 눈물을 가누지 못하게 한,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만남이 끝나고 혈육은 다시 남과 북으로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렸다. 『생전에 만나볼 수 있으면 한이 없겠다』던 소망은 우리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기적처럼 이루어졌으나 언제 또다시 만나보게 될 지 기약할 수 없는 현실이 새로운 한으로 쌓이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3박 4일에 걸친 남북 고향방문단과 예술단의 교환방문 일정이 끝나고, 이제 우리는 분단 40년만의 역사적인 이 상봉의 뜻을 차분히 생각해 본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이 사업에서 남북은 한 핏줄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적어도 혈육이 한에 맺혔던 그리움을 푸는 그 순간만은 이념의 차이도 체제의 차이도 없었다. 거기엔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의 갈라 놓을 수 없는 인륜만이 있었다.

통곡의 현장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리는 한편 우리는 우리와는 너무나 다르게 변한 북의 실정을 볼 수 있었다. 원래는 통해야 할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을 보았고 달라진 풍속을 보았다. 통제받는 생활과 획일적인 행동을 보았다. 그것은 남과 북을 갈라놓은 40년의 긴 세월과 함께 분단의 벽이 얼마나 두터운가를 실감케 해주는 것이었다.

더욱이 청소년들의 틀에 박힌 생각과 말은 우리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했다. 오랜 세월이 남북의 생활풍습을 변하게 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북의 철모르는 어린이들의 말이 우리에게서 섬뜩하고 소름끼치기까지 했다. 우리는 역사의 진실과 현실과는 너무나 왜곡되고 굴절된 교육 속에 자라는 북의 청소년들을 보며 한 민족이 이질화되어 간다는 것을 실감해야 했다.

서울을 찾아온 예술단공연에서도 남과 북이 달라져가는 현상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들은 분명히 우리 동포이며 그들의 예술이었는데도 우리는 이질감을 느껴야 했다. 사회자의 모습에서 생소함을 느껴야 했고 춤사위에서 이국의 춤을 연상해야 했다.

이번에 서울과 평양을 오간 방문단이 보여준 이질화 현상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둡고 안타깝게 해주는 것이었다. 혈육이 만나고 예술단이 오고 갔으나 통일의 길은 멀고도 어렵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되새기게 된다. 첫 남북한 방문을 지켜본 우리의 마음이 결코 밝지만은 않았으나 그래도 서로가 남과 북을 그만큼 잘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단의 성과는 그런 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남북의 교류가 잦을수록 이질화 현상을 해소시키는데 공헌할 것이다.

멀고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통일에의 노력을 멈출 수는 없다.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이질화 현상을 생각한다면 통일의 보다 빠른 실현이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소원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일보(1985. 9. 24)

조국분단 40년의 한 맺힌 장벽에 우선 작은 구멍이라도 가까스로 뚫듯이 교환됐던 남과 북의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각각 151명 일행이 어제 다시 돌아왔거나 넘어갔다.

그 고향방문에서 우리측의 50명중 35명이 평양에서 그리고 북측은 30명이 서울에서 감격의 눈물로 얼룩진 혈육상봉을 이루었다. 한편 두 차례의 예술 공연이 선보여졌고, 보도진의 취재활동도 착잡한 감회를 남겼다.

남북으로 흩어졌던 이산가족들이 재봉의 순간에 서로 부둥켜 안고 목메여 흐느낀 그 역사적 열의 장면은 민족의 비극을 되새기며 지켜보던 모든 겨레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하나 지금부터는 우리 겨레가 감루를 닦고 현실인식을 정리하여 앞으로 무엇을 이바지할 것인가에 관한 과제 의식을 가다듬을 차례라고 믿는다.

이번에도 북한 폐쇄사회의 통제된 언론매체들은 그 역사적 사건의 보도에 매우 인색했으며 심지어 3, 4단 정도로 작게 취급했다고 한다. 아마도 그들은 인간성과 자유의 바람이 확산될까 두려워했으며 내적 충격을 극소화하려고 애쓴 모양이다. 그럴수록 우리는 개방사회의 거시적 강점을 살려나갈 필요가 있겠다. 우리 국민은 북측의 진상 왜곡 교육과는 전혀 판판으로 교육문화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다양한 정보를 거뜬히 주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다.

이번 경험도 말해주듯이 이산가족찾기와 남북교류의 다방면적 진전, 그리고 중국적인 평화통일 접근의 앞날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험난한 고개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 전진은 민족사적 소명이고 세계사적 당위이기에 결코 포기될 수 없다. 다만 지금 당면한 현실인식에 입각하여 차근차근하고 인내성있는 노력을 견지할 따름이라고 하겠다.

남북적십자회담의 경우에도 이번에 각각 50명 고향방문중 약 4할이 가족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북측이 주장하는 「자유왕래」 이전의 우리측의 원래 제의대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생사와 주소부터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의 해결을 선행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런대로 이번 역사적 성사는 한적측의 성의와 인내, 때로는 지나칠 정도였던 양보의 아량으로 햇볕을 볼 수 있었다. 또 그 방문단 교환은 세계가 두루 보는 가운데 비록 이산가족들의 폭넓은 재봉과 재결합에는 미흡했으나, 남북간의 상호이해와 긴장완화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 것이다.

구차스러운 좌고우면의 타산 등은 북측에 맡기더라도 그들의 고집은 영속될 수 없으며 어차피 시대의 진운에 따라 닳아오게 마련이다. 우리는 민족사적 과제 의식에 입각, 개방사회의 장점을 살리면서 포용력과 소화력을 계속 다짐해 나가야 할 것으로 믿는다.

#### 《해의 반응》

[미 국]

뉴욕타임즈(1985. 9. 22)

- 데탕트의 가장 구체적이고 극적인 결실이다.

워싱턴타임즈(1985. 9. 23)

- 교환방문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놀랄만한 진전이다.
- 남북한이 사상이나 정치적 장벽을 제치고 서로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일 본]

닛케이신문(1985. 9. 19)

- 금번 민간교류는 그 규모는 크지 않으나 남북관계에서 획기적인 일이다.

요미우리 신문(1985.9.21)

- 40년간의 우여곡절 후 최초의 민간인 교류가 실현되었다. 이 상호방문을 원만히 추진하여 1회에 그치지 않고 교류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

아사히신문(1985. 9. 20)

- 남북이산가족 왕래는 남북관계 전체에 큰 영향을 주어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크게 공헌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이는 남북이 가깝고도 먼 관계로부터 단번에 참으로 가까운 관계로 될 제일보를 내디뎠다.

상계이신문(1985. 9. 26)

- 북한은 정치선전이나 감시는 제외하고 인도적 견지에서 이산가족 재회를 추진해야 한다.
- 40년간 이질화된 북의 체제는 육친의 정조차 없는 침울한 것이었다.
- 북한의 문화예술은 정치선전의 일환에 불과했으며, 그 저질성은 한국 시민에게 명백히 인식되었다.

[기 타]

Hamburger Abendblatt(1985. 9. 23. 서독)

- 남북간 관계발전에 결정적인 결실이다.

Aftenposten(1985. 9. 23. 노르웨이)

- 한국 동란 이래 최초로 남북한간 인간적 고려가 죽의 장막을 열기 시작했다.

인민일보(1985. 9. 23. 중공)

- 40년만에 처음있는 경사스러운 획기적인 사건이다.

Le Monde(1985. 9. 26. 프랑스)

- 남북관계 진전은 낙관할 수 없으며 신중과 인내를 가지고 관망해야 할 것이다.

AFP(1985. 9. 24. 프랑스)

- 12년 적십자회담이 이룩한 커다란 돌파구이다.
- 남북한 모두 가족상봉은 감동적이고 역사적이었다.

The Time(1985. 9. 23. 영국)

- 보다 나은 관계를 향한 확고한 걸음이다.
- 북한측 연주는 전통적인 한국문화보다는 분명히 중공의 흐름을 흉내내고 있었다.

# 남북대화 제40호

(1985. 11. ~ 1986. 3)

# < 목 차 >

|  |    |
|--|----|
| 제1부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일관된 노력 .....  | 3  |
| 1. 전두환 대통령 1986년도 국정연설 .....           | 3  |
| 2. 박동진 국토통일원장관, 북한측의 성실한 대화자세 촉구 ..... | 5  |
| 제2부 남북대화의 진행 .....                     | 8  |
| 1. 남북대화의 경과 .....                      | 8  |
| 가. 제5차 남북경제회담 .....                    | 8  |
| 나. 제10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                | 14 |
| 2. 남북대화의 중단 .....                      | 32 |
| 가. 대화중단의 배경 .....                      | 32 |
| 나. 북한측 태도의 부당성 .....                   | 34 |
| 다. 국내외 주요반응 .....                      | 37 |
| 제3부 IOC 주재하의 남북체육회담 .....              | 44 |
| 1. 성립배경 .....                          | 44 |
| 2. 경 과 .....                           | 46 |
| 가. 제1차 회담 .....                        | 46 |
| 나. 제2차 회담 .....                        | 50 |
| 3. 국내외 주요 반응 .....                     | 54 |
| 부록 : 남북대화 일지(1981. 1~1986.1) .....     | 60 |

## 제1부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일관된 노력

### 1. 전두환 대통령 1986년도 국정연설

-전쟁공포의 제거를 강조-

전두환대통령은 1986년 1월 16일 오전 대국민 방송을 통해 행한 국정연설에서 1980년대 후반을 『우리 세대의 공과와 우리 민족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참으로 중대한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지적, 우리 민족사의 일대 전환기로 규정하고 당면한 국가적 과제와 국가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전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특히 앞으로 3년 동안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단임제를 실시하는 일, 1986, 1988 양대계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일, 그리고 남북한관계에 있어서 전쟁의 공포를 제거하는 일 등 3가지 국가적 과제의 성공적 수행여부가 우리 민족사의 성패를 가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신념에 입각하여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는 「민족의 화합과 민주통일」의 대원칙을 우리는 국가의지로서 관철하는데 헌신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조국의 평화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일관된 집념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전대통령은 남북한 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해, △ 남북한간 기존 대화 지속, △ 상호폭력 및 무력사용 금지, △ 남북 상호 문호개방을 북한측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대통령의 이러한 대북촉구는 「우리세대에 분단이 이루어진 만큼 통일도 우리 세대에서 이룩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일관된 역사 의식과 통일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다.

최근 북한측의 불성실한 대화자세로 남북간에 획기적인 관계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하나, 대통령의 평화통일에 대한 줄기찬 집념과 일관된 대북촉구는 안으로는 국민적 단합을 한층 공고히 다져주는 한편, 밖으로는 우리의 굳건한 평화통일 의지를 크게 선양해 줄 것임에 틀림없다.

전두환대통령의 1986년도 국정연설중 통일 및 남북대화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작년 9월 국토분단 40년만에 처음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선 이산가족들이 서울과 평양 6백리 길을 오가면서 서로 열싸안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생각할 때, 이것은 국토와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본인은 지난 5년 사이에 남북한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가는데 바쳐진 우리 국민 모두의 노고와 인내를 생각하면서, 민족의 화합과 민주통일의 대원칙을 대한민국의 변할 수 없는 국가의지로서 관철되도록 하는데, 본인에게 부하된 모든 권한과 권능을 다할 것을 엄숙하게 다짐하고자 합니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상황아래 합의점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세대에 분단이 이루어진 만큼 통일도 우리 세대에서 이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러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존의 대화를 지속해 나감은 물론, 북한측의 진실한 자세가 보장되는 한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대화의 장을 기꺼이 열어 나갈 것입니다.

대화와 더불어 본인은 상호 폭력과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남북이 서로에게 문호를 활짝 열어가자는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전쟁과 폭력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교훈을 체험하였습니다.

같은 민족간에 이제 더 이상 파멸의 불행이 없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강산이 두 번씩이나 피로 물들고, 우리가 피땀으로 이룩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며, 천진스럽게 뛰어 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헐벗고 굶주리면서 전쟁의 폐허를 헤매이게 되는 일만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억지력이 미흡하고 자위역량이 허술하면 우리는 평화열망은 상대에게 이용되는 약점이 되고 조국통일의 대의는 적화통일의 구실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실한 대화와 아울러 자위역량의 극대화가 요구되는 이유도 실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 2. 박동진 국토통일원장관, 북한측의 성실한 대화자세 촉구

-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발표 4주년 기념 학술회의 치사-

박동진 국토통일원장관은 1986년 1월 30일 전두환대통령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발표(1982. 1. 22) 4주년을 기념하고 남북대화 제2기를 중간평가하기 위해 국토통일원이 마련한 학술회의의 치사를 통해, 북한측의 성실한 대화자세를 촉구하였다.

동 치사에서 박장관은 「팀 스피리트 1986」 훈련을 구실로 남북대화를 중단시킨 북한측의 태도에 대해 『그들이 진정으로 우리측과 대화를 통해서 남북간의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갈 의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문을 제기』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북한측의 진실한 자세가 보장되는 한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대화의 장을 기꺼이 열어 나갈 것』 이라고 하여 우리 정부의 일관된 대화추진 입장을 거듭 천명하였다.

이어 박장관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냉철히 바라본다면, 대규모 군사훈련을 비롯하여 쌍방간의 현안문제들은 그 자체가 모두 협상의 대상이 될지언정 대화의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된다』 고 강조하고, 『남북한간에 어떤 문제나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일방적인 결정으로 회담을 중단하는 자세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성의가 없는 것을 대변하는 처사』 라고 공박했다.

또한 박장관은 남북간에 현존하는 긴장과 상호불신은 군사연습에 그 원인이 있다기 보다는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과 도발적인 군사노선』 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따라서 남북대화를 통해 『방어목적의 군사연습을 불가피하게 만든 근본원인과 그와 연관된 문제들을 해소』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진 국토통일원장관의 치사 전문은 다음과 같다.

오늘의 학술회의 주제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귀빈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왕림하여 주신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두환대통령께서 1982년 1월 22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을 천명하신 이후 당원에서는 이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동시에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통일문제의 정책토론을 활성화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이미 두 번에 걸쳐 훌륭한 학술세미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오늘의 이 세 번째 모임이 시기적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이 바야흐로 국토분단 40년을 보내고 새로운 남북대화시대를 맞이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도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합작하여 1848년에 그 유명한 코미니스트 매니페스트를 창간하여 공산주의 사상이 발달하는 기초를 마련한 다음 다양한 이념투쟁이 국제적인 규모로 전개되어 왔지만, 마르크스의 예언과는 달리 지금 세계 도처에서 공산주의의 쇠퇴를 목격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우리 나라의 국력이 계속 신장되면서, 앞으로 2년후에는 서울올림픽대회를 주최하게 될 우리 민족은 그 어느 때보다 성숙된 위치에서 그리고 보다 희망적인 관점에서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국제환경과 주변국가들의 동향에서도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고무하고, 유도하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적지않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감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외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해에 이룩한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의 상호교류 등 대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남북대화에서 보다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측의 태도를 보면, 그들이 진정으로 우리측과 대화를 통해서 남북간의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갈 의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북한측은 지난 해처럼 올해에도 공연히 우리측의 연례적인 군사훈련을 문제삼고, 이미 쌍방간에 합의한 날짜에 회담을 열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고를 해옴으로써, 다시 한번 내외를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측이 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 그리고 국회회담 예비접촉 등 제반 회담일정에 합의한 다음 영똥하게도 우리측의 관례적인 군사훈련이 마치 대화앞에 고의적으로 긴장과 불신을 조성하는 것처럼 중상·비방하면서 회담개최를 거부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당한 것입니다.

남북간에 존재하는 긴장과 불신은 40년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고질적인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전적으로 북한측이 공공연히 추구해 온 대남혁명노선과 군사노선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북한측이 군사훈련을 비밀리에 실시하고, 중무장 군대를 비무장지대 일대에 전방 배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측을 위협하는 북으로 부터의 적대노선이 그대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가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조건에서 우리측이 만일의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고, 우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는 한편, 적절한 자위태세를 강구해 나가는 것은 당연하며, 그 누구도 이를 나무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한이 서로 신뢰함으로써 쌍방의 군사훈련이 종국적으로 무의미하게 될 정도의 참다운 평화정착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전두환대통령께서 지난 1월 16일 행하신 금년도 국정연설에서 남북관계에 관해 언급하시고 『기존의 대화를 지속해 나감은 물론 북한측의 진실한 자세가 보장되는 한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대화의 장을 기꺼히 열어 나갈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냉철히 바라본다면, 대규모 군사훈련을 비롯하여 쌍방간의 현안문제들은 그 자체가 모두 협상의 대상이 될지언정 대화의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현존하는 남북간의 긴장과 상호불신관계는 군사연습이 원인이 되어 조성된 것이기 보다는 다른 원인, 즉 북한의 적화통일노선과 도발적인 군사노선 등등 때문에 우리측으로서는 결과적으로 그에 대비하는 군사연습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사리를 가린다면 이러한 방어목적의 대규모 군사연습을 불가피하게 만든 그 근본 원인과 그에 연관된 문제들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남북회담은 바로 이러한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평화적인 수단으로 십분 활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작금의 북한측 태도는 모처럼 무르익어가는 대화의 분위기를 고의로 흐트리게 하며, 새로운 긴장과 불신을 조장하는 처사로서 심히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1983년도의 그 엄청난 량군사건에도 불구하고 평화에 대한 온 겨레의 간절한 염원을 받들어 새로운 남북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우리측의 아량과 성의있는 노력에 대하여 북한측은 한번쯤 가슴속 깊이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드디어 서명된 한국 휴전협정의 협상과정을 보아도 공산측이 휴전교섭을 제의한 이후 대소 500여회의 회의가 개최된 바 있고, 휴전협정이 서명되는 수일전까지도

전선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던 사실을 성찰할 때, 남북한간에 어떤 문제나 의견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미 합의된 결과를 외면하고, 일방적인 결정으로 회담을 중단한다는 자세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성의가 없다는 것을 대변하는 처사이며, 금년 봄에 예정된 경제회담, 적십자회담, 그리고 국회회담 예비접촉 중단에서 금번 나타난 북한의 대담자세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 기회에 북한측이 지난 1970년대처럼 우리의 대화 앞에 불필요한 장애를 조성하려는 행동을 더 이상 되풀이 하지 말고, 합의된 날짜에 회담장에 나와, 보다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인은 오늘의 이 모임이 최근에 조성된 주·객관적 정세를 정확히 평가한 기초 위에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의 현실적 좌표를 제시함으로써, 당원의 정책연구와 바람직한 국론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2부 남북대화의 진행

### 1. 남북대화의 경과

#### 가. 제5차 남북경제회담

##### 1) 경 과

제5차 남북경제회담은 쌍방 각기 7명의 대표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1985년 11월 20일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려 2시간 45분간 비공개리에 진행되었다.

이날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간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추진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합의서」 채택과 관련, 제4차 회담에서 쌍방이 각기 제시한 합의서 내용 중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는 9가지 문제 가운데 합의서 명칭문제, 사업추진의 원칙문제, 이미 쌍방간에 의견이 일치되고 있는 교류품목의 명시문제 등 3가지 문제를 집중 토의하였다. 그러나 이날 회담은 쌍방의 입장 대립으로 아무런 진전없이 끝나고 말았다.

제4차 회담에서 남북쌍방은 회담을 보다 능률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쌍방이 이미 제시한 합의서초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며, 주요문제에 합의를 본 다음 문안조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갖자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우리 대표단은 쌍방 합의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우리측 김기환 수석대표는 이날 회의의 첫 발언을 통해 제4차 회담에서 쌍방이 제시한 합의서초안에는 공통점과 유사점이 많으며, 차이가 나는 몇가지 문제는 서로 노력한다면 쉽게 타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합의서 명칭문제」, 「사업추진의 원칙문제」, 「교류대상품목 명시여부」, 「거래방식 및 결제은행」, 「경제협력대상사업 명시여부」, 「공동위원회 기능」 및 「분과위원회 수」 등 7개항의 검토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우리측은 남북간에 물자교류사업을 시급히 추진할 것과 무연탄, 철강재 등 쌍방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서로 사고 팔자는 데에 대해서는 벌써 1년전에 사실상 합의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동안 우리측이 수차례에 걸쳐 제의한 무연탄 30만톤 구입문제와 관련, 남북경제회담에 대한 내외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금년안에 쌍방간에 등가방식에 의한 물물교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날 회담에서 우리측이 밝힌 쌍방 합의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합의서의 명칭문제에서 쌍방간에는 표현상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제3차 회담에서의 쌍방 합의를 존중하여 「남북간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추진과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합의서」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둘째, 사업추진의 원칙조항을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쌍방 합의서의 전문에서 약간의 표현상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남북한의 경제적 유대회복, 민족의 번영 그리고 평화통일 등 남북 경제회담이 지향하는 공통된 기본정신과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중복되는 조항을 추가로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째, 물자교류 문제에 있어서 우리측은 제 1, 2차 회담에서 쌍방이 제시한 품목중 의견이 일치된 품목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서 귀측의 합의서 초안에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측은 1년 이상 지속된 남북경제회담의 결과를 총망라하고 합의된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쌍방간에 의견의 일치를 본 교류품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째, 거래방식과 결제은행문제에서 쌍방간에는 다소의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것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측의 의견으로는 원칙적으로 청산결제방식과 남·북은행의 직접결제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쌍방은행간에 청산약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제3국 은행 발행신용장에 의해서 거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우리측은 장차 공동위원회가 새로운 사업대상을 협의하더라도 이미 제1, 2차 회담과정에서 쌍방간에 의견의 일치를 본 공동어로구역설정문제, 지하자원 공동개발 문제 등 경제협력 사업대상을 이번 합의서에 명시할 것을 주장합니다.

경제협력사업의 구체적인 규모, 방법, 조건, 실시시기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측은 사업당사자가 이를 결정하자고 하였으며 귀측은 이 문제를 공동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귀측이 주장한 대로 공동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협의·결정되었다고 해도 결국에는 사업을 집행하는 당사자간에 보다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귀측이 우리측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공동위원회의 기능문제입니다. 우리측은 지난 제1, 2차 회담에서 이룩한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사업에 관한 기 합의사항의 이행문제를 공동위원회 기능속에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이미 지난번 회담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매우 합리적이며 귀측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일곱째, 공동위원회내에 분과위원회의 수에 있어서 쌍방간에는 아직도 의견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과위원회 문제는 우선 물자교류분과위원회와 경제협력분과위원회를 먼저 발족시키고 사업의 확대에 따라 필요한 특별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설치문제를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측의 입장입니다.

한편 북한측은 이상 우리측이 제기한 7개항과 중복되는 「합의서 명칭문제」, 「사업추진 원칙 명시문제」 및 「공동위원회 수」 이외에도 서명자의 「최고책임자로부터 권한위임 명시문제」와 서명란에 「국호 사용문제」를 추가로 제시해 왔으며, 이에 따라 남북쌍방은 쌍방이 제기한 이들 9개항을 순서별로 토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합의서 명칭에 대해서 우리측은 제3차 회담에서 「남북간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추진과 부총리

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합의서」로 하기로 쌍방이 사실상 합의 했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과거의 합의사항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북한측이 이를 수락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남과 북 사이의 경제협력 및 상품교류의 실현과 부총리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조 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서」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우리측이 북측 주장을 일부 수용, 「물자교류」를 「상품교류」로 표기해도 좋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교류」와 「경제협력」의 순서와 공동기구 명칭에 대한 그들의 주장만을 계속 고집하고 토의를 보류시킴으로써 제3차 회담에서 쌍방이 사실상 합의한 사항을 반복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사업추진의 원칙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측은 쌍방의 합의서 전문에 약간의 표현상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남북한의 경제적 유대회복, 민족번영 그리고 평화통일 등 남북경제회담이 지향하는 공통된 기본정신과 목적이 명시되어 있으며, 북한측이 주장하는 통일 3원칙을 전문에 넣을 수 있다고 밝히고, 다만 중복되는 원칙조항을 추가로 둘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측은 원칙문제를 반드시 별도의 독립조항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계속 고집함으로써 이 문제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제 1, 2차 회담에서 쌍방간의 의견이 합치된 교류품목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측은 1년 이상 지속된 남북경제회담을 성과적으로 마무리짓고 이미 합의된 사업을 성실하게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이 문제를 합의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측은 교류품목을 합의서에 명기하는 것은 교류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 이마저 거부함으로써, 이날 회담에서 쌍방은 전혀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

또한 북한측은 우리측이 제시한 무연탄 30만톤과 철강재 등을 등가교환방식으로 물물교환하자고 제의한데 대해서도 답변을 회피하였다. 쌍방은 의견조정을 위한 회담이 더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제6차 회담을 1986년 1월 22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2) 국내 주요 반응

제5차 남북경제회담이 실질적인 진전이 없이 끝나자, 국내언론들은 한결같이 「물자교류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지 1년이 되도록 한가지도 실현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극히 실망스런 일」이라고 논평하고, 「5차례의 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서로의 입장을 타진한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합의를 향해 접근해야 할 시기」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적십자회담에서의 고향방문단 교환방문사업을 선례로 삼아 경제회담에서도 조속히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1985년 한햇동안의 남북대화를 회고하면서, 북한측의 「일관된 회담지연전술」과 불성실성을 공박하고 북한측이 남북대화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남북간 신뢰구축에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국내 주요 신문들의 제5차 경제회담에 대한 반응은 다음과 같다.

남북경제회담의 「무진전」

-형식적 대화보다 「실질진전」이룩할 때다-

동아일보(1985. 11. 21)

근래에 와서 남북대화는 실질적인 진전이나 성과를 거두기보다는 양쪽 대표가 서로 얼굴을 맞대

는 사진이나 몇커트 찍고 형식적인 대화를 주고 받다가 헤어지는 회담처럼 되어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남북경제 회담이다. 20일 오전 판문점에서 열린 제5차 경제회담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측이 남북한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으나 북한측은 △합의서의 명칭, △통일3원칙의 삼입 △교류품목의 명시 문제 등에 이견을 제기,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했다.

다만 다음 회담날짜를 내년 1월 22일로 정한 것이 성과의 전부였다. 어느쪽도 회담을 깰 생각은 없다는 것만을 분명히 한 셈이다.

북한측이 이견을 보인 합의서 명칭등 3개항은 회담진전의 발목을 비끄러맬만큼 중요한 문제로는 보이지 않는다. 경제회담은 정치성을 띤 어떤 남북대화보다도 양쪽의 이해가 맞아 떨어질 법한데도 이렇게 담보를 거둬보는걸 지켜보자니 그저 답답할 뿐이다.

물론 남북대화란 하루이틀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기대되는 그런 회담은 아니다. 끈기를 가지고 벽돌쌓아가듯 하나하나 가능한 것부터 풀어가야 한다.

그러나 경제회담도 이번으로 다섯 번에 걸친 대면이 있었고 회담기간이 1년이나 걸렸으니 어느 대표의 말마따나 추수의 기쁨을 맛볼때도 되지 않았는가 싶다. 특히 물자교류라는 쉽고도 필요한 일을 북측이 회피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실 10년이상 남북대화가 끊겼다가 작년부턴 다시 대화의 끈이 이어졌을 때 거래의 가슴은 어느 때보다도 부풀었다. 그 당시에는 그저 회담자체가 깨어지지만 않고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한량없이 흐뭇하고 대견했다.

하나 지금은 그동안 빈번한 예비적인 접촉을 통해 어느 정도 서로의 입장을 타진한만큼 가능한 일부터 하나씩 실질적인 합의를 향해 접근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5차경제회담을 지켜본 느낌으로는 북한측은 경제적 실질문제보다는 남북국회회담이니 이른바 통일3원칙 등 정치성을 띤 고위접촉에 더욱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도 남북최고책임자 회담을 촉구하는 입장이다.

무슨 일이든 작은 것부터 잘 풀어나가야 큰 일도 잘 되는 법이다. 큰일만 잘 되면 작은 일은 저절로 풀린다는 생각은 잘못된 발상이다.

적십자·경제·체육 등 분야별로 진행되는 남북대화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하고 그것을 토대로 돌을 쌓아가듯 남북교류의 폭을 넓혀갈 때 남북통일이라는 큰 일의 매듭도 풀려나가기라고 본다.

40년 동안 쌓인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있겠는가. 그 방법이 어떤 극적인 효과를 노린 것이라면 모르되 문제해결의 실질적인 접근방법일 수는 없다.

그동안 각 분야별로 재개되었던 남북대화가 차분하고 실질적인 단계로 접어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북한은 무엇을 주저하는가  
-진전없는 남북경제회담-

중앙일보(1985. 11. 21)

2개월여만에 20일 판문점에서 재개된 제5차 남북경제회담이 또다시 공전됐다.

양측은 아무런 본질적인 토의나 합의없이 회의를 끝내면서 내년 1월 22일에 재회기로 함으로써 경제회담은 실질적인 성과없이 두 번째 해를 넘기게 됐다.

한국측은 여러 지엽적인 문제에 양보를 거듭하면서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에 도달하려고 노력해 온 반면 북한은 합의서의 명칭 등 하찮은 문제와 통일원칙등 의제밖의 정치적인 문제를 들고나와

회의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같은 난항을 타개키 위해 소규모의 실질적인 물자교류 시범사업을 연내에 실시하고 그 절차 문제를 협의할 실무회의를 조속한 시일내에 열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적십자회담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도 지난 추석때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상호방문을 실현시킨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경제회담에서도 그같은 시범적인 관례와 경험을 쌓아놓은 것이 여러모로 유익할 것임을 확신한다.

그것은 남북경제교류의 가능성을 시험·입증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른 절차와 방식, 그리고 거기서 제기되는 문제점 등은 앞으로의 회담진행과 실제적인 경제교류에 직접적인 지침과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우리측이 제의한 북한산 무연탄 30만톤의 수입은 그같은 예행적인 시범사업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북한측이 이에 상응하여 한국산물자를 수입하면 더욱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측의 사정에 맡길 일이다.

무연탄 30만톤 수입은 이미 남북간에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고 북한은 수출할만한 여분과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를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시범사업방식은 두 개의 유익한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

하나는 원칙적으로 합의된 문제를 토의하는 실무회의 기구를 갖게 됨으로써 회담을 한층 능률적으로 진행시켜 나가게 된다는 점이다.

또하나는 수송수단으로서의 남북간 철도 및 항로의 연결·개통이다. 특히 철도의 연결은 작업이 간단할 뿐 아니라 그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앞으로 적십자 회담에서의 인적교류를 위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실용성도 막대하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된다.

경제회담에는 실질적인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을 하루라도 앞당겨 달성하는 것외에 다른 의도나 목적이 개입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평양은 그들대로의 「사회주의 건설」을 스스로 자랑해왔고 우리도 눈부신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달성,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아온 것을 긍지로 삼아왔다.

이제는 우리의 남과 북이 어려운 분단의 여건하에서나마 각자 땀흘려 건설해놓은 성과들을 서로 나누고 협력함으로써 민족전체의 역량과 복지를 보장해 나갈 시기임을 평양측은 이해해야 한다.

대화, 할 의향인가

-5차 남북경제회담과 85년 대화 자취-

조선일보(1985. 11. 21)

지난해 9월 남·북한간 수재물자 전달로 대화재개 기대가 높았을 때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라고 외부의 눈이 평했다. 그후 1년 남짓, 얼어붙은 분단의 땅에 제비가 몇 마리나 더 날아왔다고 해야 할까.

20일의 제5차 남·북경제회담으로 80년대 재개대화 1년을 맞았다. 84년에 싹튼 남북대화가 85년에 갖가지 궤적을 그리면서 이어졌다. 적십자회담이 서울(8차)과 평양(9차)에서 열렸고, 12월 3일 서울에서 다시 10차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적십자회담 결과로 분단후 처음으로 남과 북 사이에 고향방문단과 예술단이 가고 오기도 했다.

국회회담 성립을 위한 예비접촉도 2번 있었고, 남북간 정치회담을 지향하고 있는 이 예비접촉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그리고 20일로 5차례의 남북경제회담을 기록했고, 해외에서이지만 남북체

육회담도 있었다. 우리측은 남북최고책임자회담도 촉구하고 있다.

남북대화는 왜 하는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이지만 통일의 길이 쉽지는 않다. 하나하나 발판을 만들어가야 한다. 발판의 절대적인 기초는 신뢰이고 신뢰를 쌓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대화이다. 따라서 대화에서는 상호 성실성으로 임해야 공동의 목표로 접근해갈 수 있다. 대화와 성실성은 통일의 시작이자 마무리를 지을 때까지의 전부이다.

남과 북은 상호 얼마만큼의 성실성으로 대화에 임하고 있는가. 80년대 대화도 우여곡절을 더듬으면서 진행돼 왔다. 명백한 것은 우리측으로서 사리에 어긋나는 자세를 취한바란 결코 없었다는 사실이다. 문제성과 말썽은 항상 북쪽에서 버르집어 왔다.

북쪽은 우리로서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소련인 관문점 망명사건을 트집잡아 재개대화 첫 단계에서부터 약속을 깬다. 이어 연례행사인 팀 스피리트훈련을 걸어 합의된 회담 날짜를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렸다. 최근에는 3달전에 약속한 적십자회담 날짜를 회담 열흘전에 돌연 연기할 것을 통고해왔다.

이와 같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태도를 성실하다고는 할 수 없다. 회담외적인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북은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85년중, 2번씩이나 공해상 어선을 납치했다. 심하게는 간첩선을 침투시키기도 했다. 신뢰를 쌓기 위한 대화를 벌이는 일방으로 이와같은 적대행위를 빚는 것을 성실한 자세라고는 할 수 없다.

북쪽의 대화에 임하는 이러한 불성실성은 제5차 경제회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보도된 바와 같이 회담 성과는 북쪽의 일관된 회피전술로 시간 낭비로 그쳤다. 그리하여 1차회담 때부터 내놓은 우리측의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남북교역안과 경제협력 방안 등은 빛을 보지 못한채 한해를 넘기게 됐다.

남북대화가 아직은 끈기의 내기 단계인줄 잘 알면서도, 북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고치기에는 많은 거리와 시간을 더 경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85년 대화의 결산이 될 것 같다.

#### 남북 경제회담 제자리걸음

서울신문(1985. 11. 21)

작년 11월 15일 제1차 남북경제회담이 관문점에서 처음으로 열렸을 때 그것이 준 심리적 파문은 대단했다. 양측은 남북 분단 이후 끊긴 경의선 철도의 연결을 제의하고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교역품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중에서도 경의선 철도를 연결하자는 양측의 제의는 극적이었던느낌이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경의선이 갖는 상징성 때문이었다.

경제회담은 12년동안 중단되었던 남북대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선도적 구실을 했다. 끝이 어 재개된 적십자회담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추석명절을 기해서는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을 교환하는 단계로까지 진전을 가져왔다. 고향방문단 상호교환은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아픔이 얼마나 통절한 것인가를 확인시켜 주었다.

경제회담이 시작된지 이제 만 1년이 되었다. 그동안 어제 열린 제5차까지 5번 열렸으나 아직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흥분에 가까웠던 첫회담의 감격에 비해 실망스런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경제회담의 부진을 가져오고 있는 장애들은 양측 사이의 본질적인 의견대립이라기 보다 지엽적인 문제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 합의서의 명칭문제, 이른바 통일3원칙 반영문제, 교류품목의 명시문제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어제 있는 회담에서도 이들 문제에 관해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통일3원칙의 반영문제는 사실 경제회담에서 다룰 문제가 아

니다. 정치적 성격의 문제들을 경제회담에서 다루는 것은 회담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어제 회담에서 합의서의 전문에 넣는데까지 우리측이 양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것은 하루빨리 회담의 성과를 거두려는 우리측의 열의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회담의 진전이 절차문제에 걸려 답보상태에 있을 때에는 전면적인 타결에 앞서 시범사업을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적십자 회담에서 고향방문단 교환을 시범적으로 해 본 것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시범사업의 시행은 회담의 본질적 진전을 촉진시키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어제 우리측 김기환수석대표가 금년안에 등가방식에 의한 물물교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의한 것은 좋은 착상이라 본다. 김수석 대표는 북한의 무연탄 30만톤을 우리가 구입하는 대신 1·2차 회담에서 의견이 일치된 품목중 그에 상당하는 가격의 우리측 철강재 또는 북측이 희망하는 다른 품목을 교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자교류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지 1년이 되도록 한가지도 실현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극히 실망스런 일이다. 북한은 우리측 제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나. 제10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 □ 경 과

#### 제1일회의

제10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제1일회의가 1985년 12월 3일 오전 10시 쌍방 각기 14명 대표단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쉐라톤」 호텔 「컨벤션」 센타 1층 무궁화홀 회의실에서 개막되어 1시간 40분간 비공개리에 진행되었다.

제10차 회담은 당초 1985년 11월 27일부터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북한측이 대표단 사정을 이유로 1주일 연기를 요청해옴에 따라 12월 3일부터 열리게 된 것이다.

이날 회의는 대한적십자사 이영덕 수석대표의 개회선언 및 인사로 시작, 기초발언에 이어 북한 적십자회측 이종률단장의 기초발언 순서로 진행되었다.

한적 이영덕대표는 기초발언을 통해, 먼저 지난 9차회담에서 우리측이 이미 제안한 「남북적십자 본회담 의제 5개항의 사업실시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자유왕래 절차에 관한 합의서」 그리고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 및 남북적십자 판문점 공동사업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으로 된 종합적인 합의서안의 취지와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이를 일괄 토의·종합적인 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적십자회담을 하루속히 마무리짓고 사업실천단계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이영덕 수석대표는 제9차회담에서의 쌍방제안에는 이산가족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의제 5개항을 조속히 토의, 그 성과를 합의서로 채택하자는 점등 많은 공통점이 있는 반면 의제 토의방식과 합의서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한적측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의제토의방식에서 우리측은 의제 5개항을 순차성에 구애받지 않고 일괄적으로 토의·해결한다는 데 쌍방이 이미 합의한 만큼, 마땅히 5개항 의제의 항목별 실천방안을 다함께 제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토의·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귀측은 의제 5개항을 일괄토의할 것을 주장하면서도 자유왕래문제를 먼저 합의하고 자유

왕래 이외에 제기되는 기타 방도와 의제의 구체적 실현과 관련된 절차문제 등은 자유왕래 문제에 대한 합의를 채택한 다음 토의·확정하자고 함으로써 의제 5개항의 일괄해결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습니다.

의제 5개항의 일괄토의는 제8차회담에서 쌍방간의 합의사항이며 의제토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방식인 만큼 마땅히 이를 존중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합의서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측은 5개항 사업실시를 비롯하여 자유왕래절차, 그리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기구의 구성·운영들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종합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서 귀측의 제안에는 그러한 종합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더우기 귀측은 자유왕래 이외에 제기되는 기타 방도와 의제의 구체적 실현과 관련된 절차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토의한다고만 했을뿐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14년간 지속된 남북적십자회담을 하루속히 마무리짓고 합의된 사업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쌍방이 함께 올려놓고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첩경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비록 쌍방간에 다소간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산가족문제해결에 뜻을 같이하고 있고 서로 이해와 호양의 정신을 충분히 발휘해 나간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본회담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오늘 회담에서 귀측이 우리측의 안에 상응하는 종합적인 안을 제시하고 쌍방안을 놓고 토의를 전진시켜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측이 제시한 종합적인 합의서 안이 그동안 귀측이 주장한 내용들까지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우리측 안을 토대로 토의를 진행시켜 나간다면 쉽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이영덕 수석대표는 사업실천 단계에 들어가기 이전에라도 이산가족 교향방문단 사업의 좋은 성과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민족전통의 명절인 1986년 구정을 기하여 이산가족 교향방문단 교환사업을 거듭 실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하였다.

또한 지난번 서울과 평양에서 상봉하고 다시 헤어진 가족들 간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상호 서신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아울러 제의하면서, 북측이 이 두가지 문제에 동의한다면 그 구체적인 실천방법과 절차문제를 협의할 실무대표회의를 별도로 가질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이 제시한 3개 합의서(안)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남북적십자 본회담 의제 5개항의 사업실시에 관한 합의서(안)

대한민국 대한적십자사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쌍방은 인도주의정신에 따라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조속히 재회의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첫째, 쌍방은 쌍방적십자의 주관과 협조하에 의제 5개항 사업들을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사업은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산가족찾기 의뢰서와 회보서를 주고 받음으로써 실시하는 방법과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과정에서 알아내는 방법으로 병행하여 실시한다.

이산가족찾기 의뢰서와 회보서의 교환에 따른 절차와 서식 등 구체적 방법은 제3차 본회담에서 대한적십자사가 제의한 방식대로 한다.

2.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방문과 상봉을 실현하는 사업은 자유로운 왕래를 통해 실시한다.  
상봉의 경우 당사자들의 희망에 따라 관문점이나 기타 장소에 면회소를 설치하여 상봉할 수 있도록 한다.  
관문점 면회소의 설치 및 운영은 「남북적십자 관문점 공동사업소」가 담당한다.
3.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서신거래는 봉합편지, 엽서등 당사자들이 편리한 대로 하며, 전화·전보 등의 통신수단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남북의 서신거래업무는 「남북적십자 관문점 공동사업소」가 담당하도록 한다.
4.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재결합은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줌으로써 실현한다.  
재결합을 위한 실무적 사항은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한다.
5.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사업은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에 제기하여 협의·결정하도록 한다.

둘째, 이상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당사자들의 자유왕래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세째, 쌍방은 남북적십자회담의 합의사항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4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에서 합의한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와 「남북적십자 관문점 공동사업소」를 조속히 발족시킨다.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와 「남북적십자 관문점 공동사업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별도로 정한다.

네째,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을 위한 적십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쌍방적십자간의 긴밀한 협조를 도모하는 한편 상대측 지역에 체류하는 자기측 인원에 대한 협조와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에 각각 적십자대표부를 설치·운영한다.

다섯째, 본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상호 합의에 의해 폐기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

1985년 월 일

대한민국  
대한적십자사를 대표하여  
대한적십자사 대표단  
수석대표 이영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를 대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대표단  
단장 이종률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자유왕래 절차에 관한 합의서(안)

남북적십자 본회담 의제 5개항의 사업실시에 관한 합의서에 의한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

척들의 자유왕래 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남북으로 왕래하는 가족의 범위는 헤어질 당시의 가족과 그후 출생한 자손으로 하며, 친척의 범위는 방계에서 8촌, 처가 및 외가로는 4촌으로 한다.
2. 남북으로 왕래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의 왕래목적은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생사와 주소확인, 방문 및 상봉 등으로 하며, 기타의 목적으로 당사자들이 자유왕래를 희망할 경우에는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다.
3. 남북으로 왕래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은 자기측 적십자가 발급한 남북왕래 증명서를 지참한다. 동 증명서에는 왕래의 목적, 행선지, 체류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4. 남북으로 왕래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에 대하여 해당 적십자는 출발 1개월 전에 왕래자들의 명단과 그들의 왕래목적, 행선지, 체류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대측 적십자에 통지한다.
5. 남북으로 왕래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의 행선지는 그들의 고향 또는 헤어질 당시 그들이 살던 곳과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상대측 적십자의 협조하에 변경할 수 있다.
6. 남북으로 왕래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의 상대측 지역 체류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상대측 적십자의 협조하에 연장할 수 있다.
7. 남북으로 왕래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의 군사분계선 통과지점은 판문점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더 늘릴 수 있다.
8. 남북으로 왕래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에 대한 숙식, 교통, 통신 등 제반편의는 상대측 적십자가 책임지고 보장한다.
9. 남북으로 왕래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긴급 구제와 의료상 보호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상대측 적십자가 무상으로 봉사한다.
10. 남북으로 왕래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에 대한 신변안전문제는 왕래자 전원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쌍방 적십자의 중개하에 쌍방 당국이 책임지고 이를 보장하도록 한다.
11. 본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상호 합의에 의해 폐기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

1985년    월    일

대    한    민    국  
대한적십자사를 대표하여  
대한적십자사    대    표    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    십    자    회    를    대    표    하    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    십    자    회    대    표    단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 및 「남북적십자 관문점 공동사업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서(안)

남북적십자 본회담의제 5개항의 사업실시에 관한 합의서에 의한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 및 남북적십자 관문점 공동사업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설치목적

쌍방은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합의한 제반사업을 성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와 남북적십자 관문점 공동사업소(이하 「공동사업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2. 공동위원회

가. 기 능

- (1)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쌍방이 합의한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하며,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조정·해결한다.
- (2)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재회사업과 관련하여 새로이 제기되는 모든 인도적 문제를 협의·결정한다.

나. 구 성

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부총재(부위원장)급으로 한다.

다. 운 영

- (1)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관문점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합의에 따라 서울 또는 평양에서 개최할 수 있다.
- (2) 공동위원회는 매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가지며, 어느 일방이 요청하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3)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 있다.
- (4) 공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은 공동사업소에 위임하여 실행하도록 한다.

3. 공동사업소.

가. 기 능

- (1)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기 위한 이산가족찾기 의뢰서와 회보서를 교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2)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서신거래 업무를 수행한다.
- (3) 관문점에서 상봉하기를 희망하는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을 위하여 관문점내에서의 면회업무를 수행한다.

- (4)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판문점 통과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 (5) 공동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일반사무를 담당하며, 공동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위임되는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한다.

나. 구 성

공동사업소는 쌍방에서 각기 적십자 중앙기관의 부장급 소장 1명과 필요한 사무인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사업소의 부서와 그 사무인원의 수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다. 운 영

- (1) 쌍방은 판문점에 공동사업소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사용한다. 단 공동사업소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대한민국 대한적십자사는 「평화의 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는 「판문각」에 각기 공동사업소를 설치·운영한다.
- (2) 쌍방 공동사업소의 소장은 매주 1회씩 정기적으로 비공개 회의를 갖는다. 일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가질 수 있다.
- (3) 쌍방은 본 합의서 서명, 교환후 1개월 이내에 공동사업소를 동시에 설치·운영한다.
- (4) 공동사업소의 건축문제와 공동사업소에 관한 운영세칙은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4. 본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상호합의에 의해 폐기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

|              |                 |
|--------------|-----------------|
|              | 1985년    월    일 |
| 대한민국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
| 대한적십자사를 대표하여 | 적십자회를 대표하여      |
| 대한적십자사 대표단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
|              | 적십자회 대표단        |
| 수석대표 이영덕     | 단장 이종률          |

한편 북측측은, 제8차 회담에서 남북쌍방은 의제 5개항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핵적이며 포괄적인 방도를 자유왕래로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 제9차 본회담에서 제시했던 자유왕래에 관한 그들의 제안을 일부 보완, 합의서형식으로 제시하고 이를 우선 채택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함께 북측측은 우리측의 종합적인 합의서에는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왕래 이외의 다른 방도와 사업추진기구에 관한 합의서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식하여 이산가족·친척들 가운데서 연령상, 신체상, 기타 사정으로 자유왕래를 할 수 없는 대상들에 한해 적용할 이른바 「자유왕래 이외의 기타방도에 관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측의 제안요지는 다음과 같다.

자유왕래 방도

(1) 자유왕래 원칙

- 당사자인 이산가족·친척들의 인격 최대한 존중
- 왕래자의 인도적 활동을 장애하는 일체의 간섭·통제를 금함

- 왕래자의 신변을 구속하는 일을 금지
- (2) 자유왕래 범위
- 가족은 흩어질 당시의 가족과 출생 자녀
  - 친척은 방계에서 8촌, 처·외가는 4촌까지
  - 그밖에 요구하는 친척도 포함
- (3) 자유왕래 절차
- 왕래가족·친척들은 자기측 적십자 단체에 신청
  - 왕래자는 출발 1개월전 대상자와 행선지 통지
  - 왕래자의 행선지는 헤어질 당시 가족·친척들이 살던 곳, 직장소재지, 상봉할 곳 등
  - 왕래자의 체류 기간은 1개월 정도로 함
- (4) 왕래자들의 왕래수단과 통과지점
- 왕래자의 교통수단은 희망에 따라 자동차, 기차, 배, 비행기로 함
  - 왕래자의 통과지점은 육로는 판문점과 철원, 해상으로는 원산항과 부산항, 남포항과 인천항, 항로로는 순안비행장과 김포비행장으로 함
- (5) 왕래자의 편의보장
- 숙식, 교통, 통신 등 편의는 상대측 적십자 단체가 보장
  - 긴급구제, 의료상 방조 필요시는 상대측 적십자 단체가 무상봉사
  - 구체적 문제는 별도 토의
- (6) 왕래자의 신변안전 보장
- 신변안전보장은 적십자 단체의 중개하에 쌍방당국이 대책수립
  - 신변안전보장과 관련한 구체적 토의는 별도로 함

#### 자유왕래 이외의 기타방도

- (1) 자유왕래할 수 없는 가족·친척들의 주소와 생사 알아내며 알리는 방도
-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친척들은 자기측 적십자 단체에 의뢰
  -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친척들은 자기가 신뢰하는 대리인을 상대측 지역에 보내 주소와 생사확인
  -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친척들은 상대측 단체·개별 인사들에게 의뢰하여 주소와 생사확인
- (2) 자유왕래할 수 없는 가족·친척들의 상봉 실현방도
- 상봉은 판문점과 철원 그밖의 당사자들이 원하는 장소
  - 상봉 편의를 위해 판문점, 철원, 그밖의 상봉장소에 공동사업소 설치
- (3) 자유왕래 할 수 없는 가족·친척들의 서신거래 실현방도

- 편지, 엽서 등 우편물 교환
- 전화, 전보 등 통신수단 이용
- 우편물 교환절차, 전화, 전보 절차는 따로 토의

(4) 자유왕래 할 수 없는 가족·친척들의 재결합 실현방도

- 당사자의 편지거래 통해 재결합 실현
- 당사자는 자기의 친척과 신뢰하는 중개자를 내세워 재결합 실현
- 당사자들은 쌍방 적십자 단체에 의뢰, 재결합 실현

(5)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의 실현방도

- 당사자는 신뢰하는 대리인을 통해 유품 처리 및 유골 이전
- 당사자들은 쌍방 적십자 단체에 의뢰, 유품 처리 및 유골 이전
- 친우소식을 알아내고 알리며, 자유로운 방문과 상봉 및 서신거래의 실현방법은 흠어진 가족·친척들의 경우와 같이 함
- 이외 쌍방합의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는 더 토론할 수 있음

또한 북적측은 인도주의 회담에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주장하면서 회담본질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쌍방 대표단의 서울·평양간 비행기 이용문제도 아울러 제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도 한적측은 「5개항 의제의 일괄토의·해결」이라는 제8차 회담에서의 합의사항과 부합되게 3개의 합의서(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반면, 북적측은 제8·9차 회담에서의 그들 제안을 일부 보완, 자유왕래에 관한 합의서(안)만을 제시하고 이의 우선 채택을 고집함으로써 이산가족문제의 단계적 해결을 주장해온 제9차 회담에서의 입장을 되풀이하였다.

특히 북적측이 의제 1항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자유왕래를 할 수 없는 일부 당사자에 한하여 이산가족·친척들의 생사와 주소의 확인과 서신거래를 쌍방 적십자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실시한다고 한 것은,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족·친척들의 생사와 주소를 문서교환방식(의뢰서 및 회보서)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직접 왕래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측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또한 북한측은 「친우의 소식을 알아내고 알리며 그들 사이의 자유로운 방문, 상봉, 서신거래를 실시하는 방법은 흠어진 가족·친척들의 경우와 같이 한다」고 하여 「친우」문제를 적십자 사업대상에 새로이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미 70년대초 예비회담때 북적측이 주장했다가 철회함으로써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제1일회의는 이같은 서로의 상반된 입장만을 피력한 채 실질 토의없이 종료되었다.

제2일 회의

제10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제2일회의가 제1일회의에 이어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12시 50분까지 같은 장소에서 속개되었다.

이날 회의는 한적측 이영덕 수석대표의 개회선언에 이어 첫날회의에서 우리측이 제의한 세가지 종합적인 합의서 초안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재강조하고 제1일회의에서의 북적측 제안에 대해 간략한 논평을 가한후, 실질토의에 들어갔으나 별다른 진전없이 끝나고 말았다.

이영덕 수석대표는 첫발언을 통해 쌍방이 제8차 본회담에서 합의한 「의제의 일괄토의」 및 「자유왕래」 원칙을 준수하고 의제 5개항을 조속히 타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측에서도 우리측과 마찬가지로 자유왕래 문제뿐 아니라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 및 관문점공동사업소의 구성, 운영문제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합의서안을 내놓을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그리고 우리측은 의제 5개항의 사업실시에 관한 기본합의서와 함께 자유왕래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우리측이 제시한데 비하여, 북측은 자유왕래에 관한 합의서만을 제시하고, 그밖의 다른 사업실시방법 문제는 합의서 초안에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기타 사업방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는 제안을 별도로 내놓은 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불합리성을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논박하였다.

나는 귀측의 제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몇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귀측의 이 세 제안은 귀측이 말하고 있는 자유왕래자들과 자유왕래를 할 수 없는 일부 대상자들에 한하여 적용하는 의제 5개항의 사업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과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귀측의 자유왕래에 관한 합의서 초안에서는 의제 제3항을 푸는 방법에서 자유왕래자들을 통하여 상대측 지역에 있는 자기의 가족·친척들에게 구두 혹은 서면으로 소식을 전한다고 하고 있는데 반하여 소위 기타방도들에 대한 제안에서는 자유왕래를 할 수 없는 일부 대상자들에 한하여서만 편지·엽서 등의 우편물 교환과 전화, 전보 등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자유왕래를 할 수 없는 일부 대상자들에게만 남북간의 우편물교환과 통신수단 이용이 허용되고 자유왕래자들에게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 같은 오해를 사게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귀측 제안을 글자 그대로 읽어 본다면, 자유왕래자들에게는 서신거래가 허용되지 않고 자유왕래를 할 수 없는 일부 대상자들에게만 그것이 허용되는 것 같은 오해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와 혼란은 남북이산가족찾기 사업의 대상자를 귀측이 굳이 자유왕래자들과 자유왕래를 할 수 없는 일부 대상자들로 구차스럽게 구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해의 소지는 미리 예방하고 빨리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산가족들의 종류를 구대여 자유왕래자 또는 비자유왕래자와 같은 형태로 구별할 것이 아니라, 구별해야 하는 것은 자유왕래 또는 문서교환과 같은 사업방법이며, 이산가족들은 누구든간에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기마음대로 이 사업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과 정신에 따라 내놓은 것이 바로 의제 5개항의 해결을 기본합의서로 하는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의 제안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귀측의 자유왕래에 관한 합의서 초안과 기타방도들에 대한 제안에는 의제 5개항에 대한 해결방안들이 각각 평행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왕래에 관한 의제 5개항의 해결방안이 따로 있는가하면 기타방도에 대한 의제 5개항의 해결방안이 또 따로 있어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측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남북적십자 본회담이 해결해야 할 기본사명은 어디까지나 의제 5개항의 해결에 있으며, 따라서 의제 5개항의 해결이 합의서의 주가 되어야 하고 그 방도나 절차는 마땅히 종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옳은 순서인 것입니다.

예를들면 의제 제1항문제의 해결에 있어 귀측은 자유왕래자는 직접 상대측 지역에 가지 않으면 주소와 생사를 알아낼 수가 없고 적십자단체들에 의뢰하는 방법은 비자유왕래자가 아니면 이용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제 제2항 상봉문제에 있어서도 비자유왕래자에 대해서는 관문점이나 철원같은 일정장소에서 상봉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자유왕래자에 대해서는 임의의 지역에서 상봉하는 것으로 하여 차별을 두고 있고 또 사실상 방문문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모순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 서신거래 문제에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자유왕래자와 비자유왕래자에게 본인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차별을 두고 있고 제4항 재결합문제에서도 자유왕래자들이 적십자기관을 이용하거나 서신거래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하여 「직접 상대측 지역」에 가지 않는한 재결합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귀측 제안은 또한 유골이나 유품을 처리하는 제5항 기타 인도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자유왕래자들이 직접 상대측 지역에 가지 않는한 적십자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측이 자유왕래에만 편중된 나머지 기타 방도들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동시에 의제 5개항의 해결을 중으로 본 본말전도의 생각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남북적십자 본회담의 기본사명은 어디까지나 의제5개항을 해결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기본 사명을 명확히 인식한다면 자유왕래나 다른 방도들은 마땅히 의제 5개항을 해결하는 각각의 방법들로 그 밑에 종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측은 기타 방도에 관한 제안 가운데서 「방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친우」라는 새 사업대상을 갑자기 제기했습니다.

「친우」문제는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며 귀측도 기억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은 1970년대 예비회담 과정에서 귀측에 의해 제기되었다가 이미 의제토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귀측이 제안내용에도 걸맞지 않고 또 쌍방 합의하에 토의대상에서 이미 제외키로 한 「친우」문제를 새삼스럽게 다시 제기한데 대해서 그 진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영덕 수석대표는 이밖에도 우리측이 제의한 쌍방 적십자사대표부 설치문제에 대한 북한측의 의견제시를 촉구하는 한편, 1986년 구정을 기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의 교환사업실시와 지난번 상봉을 했던 이산가족들간의 서신교환 제안에 대한 북한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거듭 촉구하였다.

한편 북측측은 제1일 회의에서 그들이 제시한 「자유왕래」 및 「자유왕래 이외의 기타방도」들에 대한 그들 제안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주장으로 일관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우리측이 1986년 구정을 기해 제2의 고향방문단을 교환할 것과 1985년 9월에 상봉한 이산가족들간의 서신교환을 제의한데 대해서도, 모두 거부하였다.

고향방문단 사업이 「통일을 열망하는 겨레에게 기쁨을 주었으며, 이를 계기로 해내외 모든 동포들 속에서 조국통일 기운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하여 그 의의와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 북한측이, 동 사업을 더 진전시키는데 대해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하겠으며, 일천만 이산가족의 비원을 외면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결국 제2일회의도 의제 5개항을 기본합의서로 하고, 자유왕래 절차문제 및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 등의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합의서를 채택하자는 우리측의 입장과 오직 자유왕래를 기본으로 하는 의제 5개항의 사업실시에 관한 합의서를 우선 채택하자는 북한측의 입장이 대립됨으로써 토의의 진전없이 2일간의 회담을 모두 끝마쳤다.

쌍방은 제11차 본회담을 1986년 2월 26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② 국내외 주요 반응

남북분단이후 최초로 실시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에 이어 서울에서 진행된 제10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에 즈음, 국내외주요 언론들은 이미 의제로 확정된 5개항에 대한 실질적인 토의가 진행되어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우리측의 구체적 방안에 북한측이 「어떠한 생산적 태도로 접근」해 올 것인지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향방문단 교환방문사업의 경험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회담의 내실을 다지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지적, 동 사업이 계속 추진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양일간의 회담에서 북한측이 한적측의 종합적인 합의서채택제의를 외면하고 종래의 자유왕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이산가족에 「친우」를 포함시킬 것과 회담 때 비행기 이용문제 등을 제기한데 대해 적십자회담 본래의 「인도적 성격을 변질시키려는 시도」로 평가했다. 특히 한적측의 구정을 즈음한 제2차 고향방문단의 교환과 지난 9월에 상봉한 가족 및 친척들 간의 서신교환제의를 북한측이 거부한데 대해서는 「사업실천의지를 근본적으로 의심」케 하며, 「회담은 계속하되 더이상 실질적인 진전을 원치않는 처사」라고 혹평하면서 북측의 무성의를 공박하였다.

제10차 남북적십자본회담을 전후한 국내외 주요 언론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 《국내반응》

#### 진전없는 남북적회담

-북측은 회담만 하고 인도주의를 막으려는가-

동아일보(1985. 12. 5)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남북적십자 회담이 아무런 진전없이 끝났다. 굳이 성과가 있다면 다음 회담을 내년 2월 26, 27일 이틀동안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한 것이 고작이다. 그동안 하도 중단과 속개를 되풀이 해온지라 회담이 아주 깨지지 않고 계속성의 끈이 끊어지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다.

그러나 지난 9월 분단 40년만에 처음으로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공연으로 한껏 부풀었던 온 겨레의 기대를 생각하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우리측이 지난번의 성과를 토대로 내년 구정에도 남북이산가족의 재회를 위한 고향방문단의 교환을 제의했을 때 두번째의 결실을 안타깝게 기대했던게 사실이다.

하나 북적측은 우리측의 구정 교환방문제의를 거부했다. 거부의 이유인즉 첫번째 교환방문의 계기가 된 해방 40주년에 비하면 구정은 의미가 약하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측은 지난번 1차 방문때 상봉한 가족들간의 서신 교환을 통해 지속적인 유대를 갖게 하자는 우리측 제의에 대해서도 그들이 주장해 온 「자유왕래」만 실현되면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역시 거부했다.

결국 북한측의 태도는 회담은 계속하되 더 이상 실질적인 진전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종률 북적단장은 4일 만찬답사에서 『지난 9월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볼 때 앞으로의 남북대화 과정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본다』면서 쌍방은 우선 오해와 불신을 씻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미루어 짐작컨대 북한측은 지난번 고향방문단교환이 그들의 정치목적에는 실패했다고 판단한 것 같으며 따라서 회담은 계속해 나가되 더이상 앞으로 나갈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영덕 수석대표는 『남북을 가로막는 분단의 장벽이 아무리 높고 서로의 체제와 이

넘이 아무리 다르더라도 동포들의 끊어진 혈맥을 잇고자 하는 숭고한 인도적 과업은 기필코 성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측의 비판론과는 대조적으로 거래의 소망을 대신하고 적십자 정신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말이라고 하겠다.

회담이 담보하거나 암초에 부딪칠 때는 출발점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남북적십자회담도 아무리 난관이 많고 이견의 폭이 크다고 하더라도 인도주의와 민족적 소명으로 시작한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간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동안 10차의 회담을 거듭하는 동안 남북적십자인들은 서로의 입장과 주장을 충분히 교환했다고 본다. 내년 이른 봄 평양에서 만날 때는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아내어 지난번 고향방문단과 같은 획기적인 성과를 기록하기 바란다.

그래도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

-북측의 구정교환방문 거부에 실망하면서-

경향신문(1985. 12. 5)

모처럼 열렸던 남북적대화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났다. 북적대표단이 예상했던대로 엉뚱한 고집만을 되풀이함으로써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만 것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적사이에 단 한가지 의견을 모은 것은 다음 제11차 회담을 내년 2월 26~27일 평양에서 개최한다는 것 뿐이다. 여기에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영덕 한적수석대표의 말대로 『대화를 계속하고자하는 쌍방의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 하겠다. 그것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막연하나마 또한번 기대를 걸게해 준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저들의 엉뚱한 저의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다시말해서 그들은 진정으로 인도주의에 입각한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방편으로서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특히 북한측이 공허한 내용을 가지고 국회회담개최를 재촉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정치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가하면 실질 문제를 토론해야 할 경제회담이나 적십자회담에서는 그들이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이른바 「의사대화」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도 우리측은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것은 제9차 본회담에서 제의된 내용으로 ▲남북적 본회담의제 5개항을 비롯▲이산가족 친척들의 자유왕래에 관한 합의서▲남북적공동위원회 및 관문점공동사업소 운영에 관한 합의서안 등이다. 하나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우선 완벽한 설계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초공사로부터 골재와 내장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기자재가 준비돼야 한다. 한적이 내놓은 세가지 합의서안은 건축설계도에 해당되는 것이다. 여기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일괄토의를 거쳐 수정을 하고, 일괄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산가족 결합사업은 바로 착수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비해 북측이 제시한 「자유왕래 및 그 이외의 기타 방안들」에 관한 합의서안은 집을 짓는데 있어서 기둥 몇개에 지나지 않는 내용이다. 그들은 「자유왕래」가 의제 5개항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핵적인 문제라고 우겨대고 있으나 그것은 1970년대에 그들이 주장하던 「조건환경론」의 변형된 모습일 따름이다. 그들의 본심은 그것으로 남한의 보안질서를 파괴하자는 흉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의 교류를 「40년분단사에서 처음있는 민족적인 경사」라고 평가

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우리측의 「구정고향방문단」과 「상봉가족들의 서신교류」에 관한 제의를 거부한 것은 스스로의 허구성을 노출한 자가당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의미있고 실천가능한 사업을 끝내 거부하는 속셈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더구나 대표단 왕래에 있어서 『비행편을 이용하자』는 그들의 제의는 한층 불순한 저의를 담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하면 한사람이라도 빨리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느냐 하는 문제로 고심을 하는 마당에 오히려 그것은 뒷전으로 돌려놓은 채 「대표단이 자동차를 타느냐 비행기를 타느냐」하는 문제를 거론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번 회담의 성과가 미흡했다고 해서 실망할 일은 아니다. 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계속되는 대화속에서도 그들의 속셈을 알아차리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와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 공전하는 남북회담

중앙일보(1985. 12. 5)

새로운 기대를 걸고 제10차 남북적분회담(12월 3일~4일)을 지켜본 우리는 또 한번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가 특히 기대한 것은 의제토의의 실질적인 진전과 함께 고향방문사업의 계속이었다.

이번 회담에서는 그중 어느것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다. 한적은 오는 구정에 지난 추석때처럼 고향방문단을 교환하자고 제의했으나 북적이 이를 거부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해방 40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지난번의 고향방문단교류보다 그 의미가 작다고 하는 것이 평양측의 거부이유다.

해방 40년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는 계기는 당분간 찾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고향방문단 교류가 가까운 시일내에 속개되기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구정은 분명히 우리 거래의 전통적인 명절이긴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미 없어진지 오래다. 추석조차 모르는 그들이 구정방문 교류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경은 분명히 북한에서도 경축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한적의 구정고향방문 교류를 신경방문교류로 수정해서라도 고향방문 사업만은 꼭 지속시켰어야 했다.

지난 5월 남북적회담이 재개된 이후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교류를 실현한 것은 남북관계발전에서 하나의 괄목할만한 진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다. 적십자회담은 그 후 두차례 열렸지만 속개일자합의에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문제는 적십자회담 뿐만이 아니다. 국회회담과 경제회담도 공전만 거듭해왔다.

남북간의 체육교류와 1984년도 LA올림픽에의 단일팀 출전을 목표로 개시된 체육회담도 결핍된 지 2년여만에 IOC추천으로 로잔에서 재개했으나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

아웅산사건 이후 다시 활발해진 여러 갈래의 남북대화가 이처럼 정체상태를 헤어나지 못해 「회담을 위한 행사」에 머물러 있다.

이를 타개키 위한 몇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가 남북 최고당국자 회담의 개최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지난 5년간 여러차례 제의해왔으나 평양으로부터 아직 호응을 못얻고 있다.

둘째는 남북조절위의 부활이다. 1970년대초 적십자회담이 난항에 봉착했을때 조절위의 개입으로 해결됐던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죽어가는 상태의 남북조절위를 개편, 부활시켜 활성화하여 각 분야의 남북대화를 주도하고 조절하는 중심기구로 살아야 한다.

세제는 각 회담의 수석대표를 전권대사급으로 조절하여 실세화하는 문제는 회담진행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그래도 안되면 전권대표만의 단독비밀 회담을 열어 실질문제에서의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이제 단순행사로만 반복되는 형태의 남북대화는 지양돼야 한다. 그것은 민족에너지의 낭비일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민족적 수치다.

그것은 민족의 동질화회복과 조국통일에 대한 겨레의 의지를 지속·강화시켜나가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 점에서 북한측은 좀더 성의를 갖고 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 남북대화 또 해를 넘긴다 -적십자회담 결실없는 결말을 보고-

한국일보(1985. 12. 6)

올해 마지막 남북대화에 해당되는 제10차 남북적십자회담이 이산가족 찾기운동에 아무런 실질적 합의도 보지 못한 채 어설피게 폐막되었다. 유일한 합의가 있다면 내년 2월 26,27 양일간 평양에서 제11차 본 회담을 열자는 것 뿐이다. 그런대로 회담의 지속에 관한 「의지」 또는 수요가 확인된 셈이다.

이번 서울 본회담에서는 의제 5개항 즉 ①주소와 생사의 확인, ②자유방문과 상봉, ③서신거래, ④재결합, ⑤기타 인도적 문제를 놓고 한적이 「일괄 토의」에 입각한 합의서 작성을 제의한데 대해 북측측은 「자유 왕래」로 국한시킬 것을 요구하며, 그것이 「선결적」이고 「중핵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리고 한적측은 오는 구정(내년 2월 9일)을 기해 제2차 고향방문단을 교환할 것과 지난 9월 1차 때 상봉했던 가족 및 친척들 간의 서신 교환을 제의했으나 북측측에 의하여 외면당했다는 소식이다. 그대신 북측측은 사업대상에 친우까지 포함시키자고 했으며, 또 비행기로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회담을 열자고 했다는데, 이는 전시용의 신기성을 노리는 동시에 모종의 전략적 저의까지 의심케 했다.

북측의 적십자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인도적 차원보다도 정치적·전략적 저의로 분석된다는 사실 자체가 오늘의 민족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서 북한측은 적십자회담도 「분위기 조성」용으로 위치부여 하면서 결국은 주한미군철수를 촉구하는 3자회담과 정치회담(국회회담)의 진척에 역점을 설정한 것으로 관측케 한다.

그렇다면 적십자회담은 이산가족 찾기운동의 본래 취지와는 동떨어진 일종의 전시적 낭비에 불과한 것이기다. 이 문제는 기왕의 성과의 측정, 그리고 우리의 줄기차고 거시적인 대의로부터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그 동안의 대화·교류는 한정된 것이기는 했으나 분단의 벽을 넘나드는 상호이해의 증진에는 이바지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된다. 그 과정에서 북한 폐쇄사회에는 꺾야 못한 변화의 조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비록 형식적인 것이라해도 긴 눈으로 보면 내용에의 투영작용에도 상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분단 40년만에 부분적인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이 이루어진 것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의 시대적인 흐름을 관찰케 한다. 그런대로 성과임에 틀림이 없다.

어차피 저물어가는 이 1985년은 남북대화 및 교류가 활기를 띤 한해였다. 올들어 세차례의 적십자본회담, 네차례의 경제회담, 두차례의 국회회담 예비접촉 그리고 스위스의 로잔에서 열리기는 했으나 한차례의 체육회담등을 셈할 수 있다. 하기가 어느 경우건 문제의 제기가 있었을 따름이지 그 해결은 지금껏 없다. 오랜 단절을 거친 대화이므로 아직은 상대방의 실정과 저의에 관한

「진단」의 단계인지 모르나 자료수집과 경험축적도 어느 지보에 이르면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을 의면할 수 없게 된다.

바로 새해에 접어들면 이월된 문제를 풀어나갈 객관적 요청이 현실적 일정에 오르게 될 것이다. 예컨대 1월초 로잔에서 열리는 제2차 체육회담은 88서울올림픽과 연내에 개최되는 86아시안 게임에 관하여 어떤 결론을 내려할 참이다. 남북대화는 지속되어야 하며, 또 새해에는 문제 해결을 무작정 천연시킬 수 없는 실천의 촉구될 것으로 내다 보인다.

#### 기대에 어긋난 남북적회담

서울신문(1985. 12. 6)

이번에야말로 이산가족 재회사업의 큰 진전이 있으리라는 기대를 모았던 지난 3일과 4일의 제10차 남북적십자 서울회담이 쌍방의 이견을 좁하지 못함으로써 끝내 공전되고 말았다.

시종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는 쌍방이 어느 때 보다도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 또 지난 8월의 제9차 평양회담은 이른바 「모란봉 경기장」 사건으로 인해 실질토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끝났으나 이번 회담은 제8차 서울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지난 9월 극적으로 이루어진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의 서울·평양간 교환방문이 있는데 뒤이어 열렸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크게 기대됐었다.

이러한 좋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이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한 채 곁돌았다는 것은 매우 유감된 일이며, 애절한 비원속에 지켜보던 1천만 남북이산가족들에게 안겨준 실망 또한 한없이 클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은 의제 5개항을 기본 합의서로 하고 자유왕래절차 및 남북적공동위원회의 구성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합의서를 채택하자고 제의한데 대해 북측측은 오직 「자유왕래」를 기본으로 하는 합의서를 우선 채택하자는 주장만 되풀이함으로써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의견대립을 가져온 근본요인이 전적으로 북측측의 무성의한 협상태도에 있다고 본다. 무릇 협상이란 공동의 문제를 교섭함에 있어 서로 「주고, 받음」으로써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일반적인 통념으로 한다.

우리측은 이를 성실히 지켜 이제까지 북측측이 제기해온 「의제 5개항 일괄토의」와 「자유왕래」 및 「공연단교환」 등 세가지 문제를 모두 수용하는 신축성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북측측이 종래의 입장을 크게 바꾸어 유독 「자유왕래」만을 고집한 것은 성실치 못한 협상태도이며 더우기 이산가족에 「친우」를 포함시키자, 회담때 공로를 이용하자는 주장을 들고나온 것은 적십자회담 본래의 인도적 성격을 변질시키려는 시도가 아닌가고 보아진다.

그뿐 아니라 구정을 기한 제2차 고향방문단의 교환 및 쌍방 적십자대표부의 조속한 설치 등 우리측 제의에 대한 토의마저 거부한 것은 북측측의 사업실천의지를 근본적으로 의심케 하는 처사이다.

다만 우리는 제11차 본회담을 내년 2월에 평양에서 개최키로 양측이 합의를 본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회담의 계속성이 유지된다는 사실 자체만도 이산가족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되찾게 해주는 성과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미흡하나마 이러한 성과를 거둠에 있어 인내와 성의를 다한 우리측 대표단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 아울러 앞으로의 회담에서 북측측은 일체의 정치성을 떠나 적십자 본연의 성실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 마지 않는다.

희망은 버릴 수 없다  
-어렵게 재개된 남북대화 1년-

조선일보(1985. 12. 6)

참으로 어렵게, 오랜만에 재개됐던 남북대화도 4일 끝난 제10차 적십자 회담을 마지막으로 금년으로선 일단 막을 내린 셈이다. 작년에 우리가 이북측의 수해물자를 받아들임으로써 실로 중단 12년만에 재개된 남북대화였다. 그동안 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 두차례, 경제회담 5번, 그리고 서울에서 두번, 평양에서 한번씩의 적십자회담을 열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우리의 가슴을 가장 부풀게 한 것은 「남·북 이산가족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상호교환이었다. 매우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서 한정된 수의 이산가족들만의 만남이었지만, 민족분단의 아픔이 얼마나 크고 깊었던가를 재확인해 주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의미는 남·북한을 막론하고 공유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러우면서도 감출 수 없는 통일에의 민족적 염원을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하면서 남북대화의 추이를 예의주시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고장은 불명」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되짚으면서 또다른 실망과 좌절감으로 적십자 깃발을 날리며 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

그들은 기껏, 「해방 40주년보다 의미가 작다」는 웅색한 핑계로 명절인 구정에 지난 추석때처럼 남북의 고향을 서로 방문하자는 우리의 순수한 제의를 거절했어야 했는가. 그들은 왜 한뼘의 후퇴나 양보도 없이 덮어놓고 「자유왕래」에만 고집해야 하는가. 그들은 무엇 때문에 남북간의 왕래를 판문점으로 만족치 않고 부산~원산, 진포~순안 등 해공로까지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또한 실제로 왕래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사업기구, 즉 쌍방 대표부의 설치에는 왜 쓰다달다 말이 없는가.

이북대표들이 둘러댄 것처럼 「의미가 큰」 날에만 남북고향방문을 해야 한다면, 한시가 급하게 안타까이 기다리는 1천만 이산가족의 염원은 영영 풀릴 길이 없다는 것인가. 통일을 위한 제일 보도 「의미가 작다」는 말인가. 지금 당장 정치도, 생사확인도 없이 「자유왕래」를 하자는건 김일성이 말하는 「현 휴전선의 철폐」와 일맥상통하는 주장이다. 그것은 「공화국 북반부를 혁명기지로 한 남조선민족해방」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 뿐이다. 그러기 위해 그들은 판문점외에 철원을 거친 또다른 육로로도 가보고, 원산에서 부산까지 해상으로, 순안에서 김포까지 공중으로도 가보자는 것 아닌가. 그것은 이미 전쟁의 길이지, 대화를 하자는 자세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인자중하며, 대화에 임해야 한다. 우리는 물론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이라는 궁극적 정치목적 달성을 위해 합법, 반합법, 비합법, 불법, 나아가서는 공갈·협박과 폭력적 방법에까지 의존하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비리와 억지를 세워 일을 뒤틀리게 해도, 우리는 순리대로 얽힌 일을 풀려는 자세를 흐트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만약 그러한 자세를 견지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공갈·협박보다, 폭력보다 강인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한 다짐으로 우리는 새해 1월 20일로 정해진 남북경제회담과 2월 26일의 제11차 적십자회담에 희망과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상대방은 한꺼번에 그들 마음대로 우리를 굴복시키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자유왕래」와 육해공로의 동시 통행을 고집할 것이다. 정치목적 우선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일의 순서는 안중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원칙과 순서를 버릴 수 없다. 그리고 희망은 아직 버릴 수 없다. 모든 것을 일단 새 해로 넘기자.

《해의 반응》

[미국]

A.P 통신(1985. 12. 3)

- 한국측은 구정을 전후하여 한차례 이산가족방문을 교환하자고 제의했으며 지난 9월 제1차 상봉에 참가했던 가족들간의 자유로운 서신교류도 시키자고 제의했음.
- 이에 북측은 적십자 대표단의 항공기 이용과 육로, 해로, 항공기편을 이용, 어디서나 자유로이 다니면서 가족을 찾거나 조상의 묘소를 방문할 것을 허용하자고 제안했음.

A.P 통신(1985. 12. 4)

- 남북한은 제10차 적십자회담을 이틀간 열었으나 진전없이 끝났음. 북한은 친족의 주소를 알아내고 이들과 만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이산가족들의 자유로운 남북왕래를 주장한데 반해 한국은 서신이나 양측 적십자사의 주선과 같은 기타 방법들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점이 양측간의 주요 견해차이였음(4대통신)

Washington Times(1985. 12. 5)

- 이번 적십자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석가들의 기대는 어긋났음. 이들은 지난 9월의 첫 교환방문으로 어떤 정기적인 교환방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며 이번 회담이 비공개로 시작되었을 때 좋은 징조라고 모두가 여기고 있었음.

[영국]

The Times(1985. 12. 5)

- 지난 9월의 교환방문으로 부풀은 희망은 12월 5일 남북회담이 아무런 성과없이 끝남으로써 시들어 버렸음.

[일본]

아사히신문(1985. 12. 3)

- 이번 회담은 비공개로 열 것을 쌍방이 합의하여 종전의 선전적인 냄새가 짙은 언쟁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토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높음.
- 한국측은 이산가족 고향방문의 상호교환을 계속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며 북측의 태도 여하로는 합의될 가능성도 있음.

상쾌이신문(1985. 12. 2)

- 금번 적십자회담은 한국측 제의에 의해 처음으로 비공개로 열리게 됨. 이는 종전과 같은 축제 무드를 피하고 내용있는 회담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마이니찌신문(1985. 12.5)

- 한국측은 구체적인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려는 태도를 취한데 대해 북한측은 상대측 지역으로 자유로이 왕래함으로써 즉시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름길이라는 태도를 취해 평행선이 계속된 것임.

동경신문(1985. 12. 6)

- 남북적십자회담은 또다시 공전되었고 다른 남북대화도 정체상태임. 세계는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바라고 있으며 남북한의 단호한 대화진전의 결단을 희망하고 있음.
- 금번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되어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걸려 있었으나 또다시 성과없이 끝난 것은 유감스러움.
- 이산가족 문제만은 인도적 견지에서 일괄해결이 불가능하다면 한국측 제안과 같이 제2차 고향방문단의 구정교환이라도 실현되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2. 남북대화의 중단

### 가. 대화중단의 배경

1986년 1월 22일로 예정된 제6차 남북경제회담을 불과 이틀 앞둔 1월 20일, 북한측은 2월 10일부터 실시될 우리측의 「팀·스피리트 1986」 군사훈련 실시계획을 구실로 진행중인 남북대화의 연기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경제·적십자 및 국회회담 예비접촉 등 이른바 남북회담 북측대표단 「공동성명」 형식으로 된 발표문에서 북한측은, 「팀·스피리트」 훈련을 「북침공격을 위한 핵전쟁연습」이라고 규정, 동 훈련기간 중에는 대화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화중단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였다.

이러한 북한측의 태도에 대해 우리측은 같은 날 하오 권정달 국회회담 예비접촉 수석대표, 김기환 경제회담 수석대표 및 이영덕 적십자회담 수석대표 명의로 합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측의 부당한 대화중단 처사에 대해 실망을 표시하고, 이미 쌍방이 합의한 모든 회담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북한측에 촉구하였다.

동 합동성명에서 우리측은 「북한측이 관례적인 군사훈련에 대해 시비하면서 예정된 회담을 거부하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대화 앞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측이 진정으로 긴장완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대화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호응해 나옴으로써 남북간의 신뢰구축에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우리측 회담대표단 수석대표 합동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남북회담 대표단 수석대표 합동성명

지금 남북의 온 거래는 작년 한해 동안 진행되어 온 여러 갈래의 남북대화가 새해에는 더욱 잘 진전되어 훌륭한 열매를 거두고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한 관계의 개선에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고대하고 있다.

특히 작년 9월에 있었던 역사적인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사업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남북이산가족들과 온 거래는 올해에도 회담이 잘 진전되어 커다란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남북경제회담에서도 지난 한해 동안 상호 진지한 토의를 진행해 온 남북간의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 사업추진과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서가 하루속히 채택되어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측은 1월 20일 남북회담 대표단 명의로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방송을 통해 발표하고 우리측의 관례적인 군사훈련을 핑계삼아 1월 22일 개최하기로 합의한 제6차 남북경제회담을 비롯하여 2월 18일로 예정된 남북국회회담 제3차 예비접촉과 2월 26일로 예정된 제11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북한측의 이와 같은 부당한 대화중단 처사에 대하여 온 거래와 함께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측의 「팀·스피리트」 훈련은 방어를 목적으로 한 평화유지 훈련이며, 과거 10년 동안에 걸쳐 계속 실시되어 온 연례적인 것으로서, 올해에도 있을 것이임이 세 갈래의 남북회담에 대한 쌍방간의 일자합의가 이루어질 때에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다.

군사훈련으로 말하면 이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면 세계 어느 나라이건 간에 당연히 실시하는 것이 상식이며,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비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러한 군사훈련을 비밀리에 하는가 공개적으로 하는가, 공격적인가 방어적인가에 있으며, 이에 따라 정세를 긴장시키는가 또는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인가에 있는 것이다.

우리측의 이 군사훈련이 북한측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측이 북한측에게 그 실시 내용과 훈련기간을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정식으로 사전 통보해 왔으며 또한 참관까지도 초청해 왔다는 사실에서 입증되고 있다.

북한측은 지난 해만 해도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연대급 및 사단급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북한 전 지역에 걸친 대규모의 각 병과 군대가 참가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거나 우리측에 통보해 온 사실이 없다.

북한측의 군사훈련이 이처럼 비밀리에 실시되고 있는 점과 비무장지대 일대에 공격적인 무력을 증강하고 있는 바로 그 점이 우리측으로 하여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방어적 군사훈련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북한측이 관례적인 군사훈련에 대해 시비하면서 예정된 회담을 거부하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대화 앞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밖에 보지 않을 수 없다.

남북은 과거 쌍방의 군사훈련이 실시되는 기간 중에도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 등 여러 차례의 회담을 가진 바 있으며, 가까운 예로는 「팀·스피리트」 훈련이 진행중인 1984년 4월초 남북체육회담을 시작할 때에는 북한측은 이를 회담과 관련시켜 시비하지 않았다.

북한측이 진정으로 남북대화를 성의있게 진행할 의사를 갖고 있다면 이치에 맞지 않는 구실을 핑계삼아 회담개최에 불응할 것이 아니라 쌍방간에 합의된 사항부터 먼저 잘 준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측의 일방적인 회담연기와 합의사항 위반행위는 결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과거에도 여러 번 되풀이 해 온 상투적인 수법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측은 제작년 11월 23일 판문점 총격사건을 도발하고서도 그 책임이 먼저 우리 측에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면서 예정된 남북경제회담을 유산시켰을 뿐 아니라 작년초에는 우리측의 연례적인 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이미 날짜까지 합의된 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의 개최를 거부한 바 있다.

남북간의 긴장상태는 북한측의 주장처럼 우리 측의 군사훈련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40년간의 분단 상태에서 누적된 상호 불신과 적대관계의 결과이다.

남북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간에 신의를 지키고 신뢰를 축적하는 일이며 그것은 쌍방간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는 대화자세를 갖는 데서부터 구현되어야 한다.

북한측이 진정으로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팀 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대화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호응해 나오으로써 남북간의 신뢰구축에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이미 쌍방이 합의하고 온 거래 앞에 엄숙히 약속한 모든 회담을 예정대로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1986년 1월 20일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수석대표 권정달

남 북 경 제 회 담 수석대표 김기환

남 북 적 십 자 회 담 수석대표 이영덕

대화진전을 위한 우리 측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1월 21일 이성록 남북경제회담 북측 대표단장 명의로 제6차 회담의 연기를 재차 공식통보하고, 우리측의 거듭된 촉구마저 외면함으로써 남북경제회담은 또 다시 중단되고 말았다.

이어 제6차 남북경제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던 1986년 1월 22일 우리측 김기환 수석대표는 회담이 유산된데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북한측이 조속히 제6차 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 제6차 남북경제회담 유산관련, 김기환 수석대표 논평

본인은 오늘 판문점에서 열기로 쌍방이 합의한 제6차 남북경제회담이 북한측의 일방적인 중단 통보로 인해 유산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측은 우리측의 군사훈련을 구실로 지난 1월 20일 온 민족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한다는 남북회담 대표단 공동성명을 방송을 통해 발표하고 이어 1월 21일에는 오늘 10시로 예정된 제6차 남북경제회담에 나오지 않겠다는 전화통지문을 우리측에 보내어 왔습니다.

우리측은 1월 20일 수석대표 합동성명을 통해 북한측의 회담중단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으며 1월 21일에는 대북전화통지문을 통해 쌍방간의 합의사항이 존중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빠른 시일안에 제6차 남북경제회담이 개최되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 온 겨레는 남북경제회담이 하루빨리 진전되어 남북간의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이 실현되어 화합과 신뢰의 터전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겨레의 염원을 받들어 북한측은 겸허한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하루 빨리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적십자회담 및 국회회담 예비접촉에 대해서도, 북한측은 1월 22일 회담 대표단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제11차 남북적십자 본회담(1986. 2. 25-2. 28: 평양)과 남북국회회담 제3차 예비접촉(1986. 2. 18)의 중단을 각각 우리측에 통보해 왔다.

#### 나. 북한측 태도의 부당성

##### ● 합의된 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시킨 전철을 반복

북한측의 일방적인 회담연기와 합의사항 위반사례는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며, 과거에도 수차 되풀이해 온 상투적인 수법이다.

북한측은 1984년 11월 23일 판문점 총격사건을 도발하고서도 그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면서 예정된 남북경제회담을 유산시켰으며, 지난 해에는 우리측의 「팀·스피리트」 훈련을 시비하면서 경제(1985. 1. 17), 적십자(1985. 1. 22-1. 25) 등 합의된 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시켜 4개월 간이나 남북대화를 중단시킨 바 있다.

따라서 관례적 군사훈련을 구실로 북한측이 또다시 남북쌍방간에 이미 합의한 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시킨 처사는 그들이 진실로 남북대화의 진전을 원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 관례적 군사훈련을 시비하는 것은 부당

「팀·스피리트」훈련을 구실로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연기시킨 북한측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고 하겠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자국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더우기 「팀·스피리트」훈련은 한·미 양국이 방위를 목적으로 1976년 이래 연례적으로, 공개리에 실시해온 평화유지훈련이며, 우리측은 이를 입증시키고 긴장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동훈련계획을 내외에 공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측 군사요원이 이 훈련에 참관하도록 초청까지 하고 있다.

북한측은 매년 방대한 규모의 병력을 동원, 남침을 가상한 공격훈련을 비밀리에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팀·스피리트 1985」훈련을 구실로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지난해만 해도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연대급 및 사단급 군사연습과 북한 전역에 걸쳐 각 병과 군대가 참가하는 군사연습을 비밀리에 실시하는 등 대소규모의 공격훈련만도 3, 000여회나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측은 남북대화의 진행과 관련하여 북한측의 이러한 군사연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전혀 없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자신의 군사연습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없이 우리측의 군사연습이 마치 한반도긴장의 근원인양 내외에 선전하고 있으나 정작 한반도 정세에 불확실성을 조성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군사연습 그 자체가 아니라, 북한측이 실시하고 있는 군사연습의 비밀적인 성격과 군사력 증강 및 적대적인 의도에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적반하장격으로 우리의 방어훈련에 대해 시비하는 것은 대화를 파탄시키려는 구실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 남북대화의 진행과 군사연습과는 무관

남북간의 긴장상태는 북한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측의 군사연습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40년간의 분단상태에서 누적된 상호 불신과 적대관계의 결과라고 하겠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길은 쌍방간에 합의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대화를 성실히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다.

북한측이 진정으로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팀·스피리트」훈련의 중지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보다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호응해 나옴으로써 남북간의 신뢰 구축에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경우 각기 연례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군사훈련과는 관계없이 동·서 양진영 간에는 군비축소를 위한 회담이 병행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남북한 간에도 과거에는 「팀·스피리트」훈련과 무관하게 대화를 진행시켜 왔으며, 특히 1984년에는 「팀·스피리트」훈련기간중인 4월초에 북한측이 남북체육회담에 호응해 옴으로써 쌍방간에 회담이 개최된 바 있다.

[「팀·스피리트」훈련기간중 남북대화 개최사례]

| 훈련시기          | 남북대화개최사례   |
|---------------|--|
| 1979.3.1-3.27 | ○ 남북탁구회담<br>- 제2차 회담(1979.3.5)<br>- 제3차 회담(1979.3.9)<br>- 제4차 회담(1979.3.12)<br>○ 남북조절위 서울측 대표와 북한측[조국전선]대표간의 접촉<br>-제2차 접촉(1979.3.7)<br>-제3차 접촉(1979.3.14) |
| 1980.3.1-4.20 | ○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실무 대표 접촉<br>-제3차 접촉(1980.3.4)<br>-제4차 접촉(1980.3.18)<br>-제5차 접촉(1980.4.1)<br>-제6차 접촉(1980.4.18)  |
| 1984.2.1-4월중순 | ○ 제1차 남북 체육 회담 개최(1984.4.9)  |

더우기 제6차 경제회담을 비롯한 일련의 회담개최일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당시 이미 「팀·스피리트」 훈련실시가 예견되었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회담을 목전에 둔 시점에 와서 동 훈련실시를 구실로 회담연기를 통보해 온 북한측의 태도는 지극히 부당하다고 하겠다.

● 북한의 군사력 증강으로 한·미 안보협력의 필요성 증대

현재 북한은 80여만의 병력과 70여개의 전투사단 및 여단 등 방대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어 군사적 규모와 장비면 (병력 1.3배, 장비 2~3배)에서 우리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82년 이후에 들어와 북한측은 전략기동부대의 증편 및 전방추진 등 공격형 배비를 계속하여 5개의 기계화군단을 창설, 이중 3개 군단을 전선에 배치하는 한편 DMZ 북방 8km 이내에 4-5 사단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갱도 170여개를 구축하는 등 남침 기습공격능력을 대폭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소련으로부터 미그 23기 및 SA-3기 등 각종 공격용 신예무기를 다수 도입함과 아울러 군사정보분야에서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측에 대한 군사 위협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이러한 공격적인 무력증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팀·스피리트」 훈련을 포함한 한·미간의 군사·안보협력은 그 어느때 보다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한반도 긴장조성의 책임전가 등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겨냥

북한측이 입으로는 대화와 평화통일을 운위하면서도 쌍방간의 초보적인 합의사항조차 무시하는 등 대화의 실질적 진전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군사력 증강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진의가 대화를 통해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있다기 보다 대화를 빙자하여 다른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려는 데 있다고 하겠다.

북한측의 이러한 태도는 주한미군과 「팀·스피리트」 훈련을 한반도 긴장의 주요원인으로 내외에 부각시킴으로써,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미군철수를 목적으로 한 이른바 「3자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간의 군사력 균형을 파괴시킴으로써 대남 적화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는데 그 저의가 있다고 하겠다.

북한측은 그들 자신이 신년사에서 「대화를 성과적으로 진행시키려면 올바른 대화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듯이 남북대화와 직접 관련이 없는 「팀·스피리트」 훈련에 대해 더이상 시비하지 말고 쌍방간의 합의사항을 존중하는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 다. 국내의 주요반응

북한측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남북대화의 일방적 연기를 통보해오자, 국내언론들은 북한측 태도의 부당성을 비난하는 요지의 사실을 일제히 게재하였다.

특히 「팀·스피리트」 훈련은 어떤 돌발사태가 아니며 쌍방이 회담일자를 합의할 당시 이미 예견되었던 공개적·방어적인 훈련으로써 남북대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강조하고, 이를 구실로 합의된 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려는 북한측의 태도는 『대화를 다른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데서 나온 생트집』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 저의를 규탄하였다.

또한 대화에는 신의가 필요하며, 그 신의는 우선 『쌍방간 합의사항의 이행』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북한측이 주장하는 이른바 「좋은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측이 합의된 회담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해외 주요 언론들도 북한측의 일방적인 대화연기 통보를 주한 미군의 철수를 겨냥한 『일관된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긴장 완화에 역행하는 북한측의 태도를 비난했다.

북한측의 일방적인 회담연기 통보와 관련한 주요 반응은 다음과 같다.

#### 《국내 반응》

##### 남북대화와 팀 스피리트

- 「방어」 훈련이 대화에 장애일 수는 없다-

동아일보 (1986. 1. 20)

한미 군사당국은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오는 2월 10일부터 4월 중순까지 한반도에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 1986」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18일 서울과 「워싱턴」에서 동시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약 20만명의 양국군 병력이 참가하는 이 훈련은 해외 증원군의 수송 집결 인수 철수 등을 통한 연합합동 작전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주한 「유엔」군 사령부와 한국정부는 판문점 군사정전 위원회를 통해 북한측에 이 훈련을 참관하도록 초청했으며, 이같은 조치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임을 분명히 했다.

「팀 스피리트」 훈련은 지난 76년이래 이른 봄철부터 실시되는 연례적인 군사연습의 하나다. 그런데 이 통상적인 훈련이 올해와서 유난히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남북대화와 관련해서 하나의 중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여러 갈래의 남북대화가 2년째로 접어드는 해다. 그러한 해에 연초부터 김일성의 신년사를 필두로 남북적십자 회담과 경제회담 국회회담 등의 북한측 대표들이 일제히 담화를 발표, 「팀 스피리트」 훈련의 중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어 북한은 11일자 외교부 성명을 통해 2월 1일부터 그들도 모든 군사훈련을 중단할테니 우리측도 「팀 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마치 남북대화의 목적이 한미군사훈련의 중지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그들의 선전공세는 치열했다.

북한이 이처럼 여러 갈래의 대화창구를 총동원하여 남북대화과 관련, 「팀 스피리트」 훈련을 결코 넘어서는 것은 혹시 대화중단의 어떤 구실을 찾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도 한다. 하나 남북대화과 「팀 스피리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팀 스피리트」 훈련은 지난 76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를 11번째 실시되는 군사훈련으로 남북대화과 재개된 지난 85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계속돼왔기 때문이다.

만일 남북대화과 잘 진전되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었다면 한미양국의 합동군사훈련은 이미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현재 진행중인 남북대화과 진도로 볼 때 아직 군사훈련을 중단할만큼 성숙한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본다.

물론 남북대화과 현재와 같은 초보적인 단계를 넘어 한반도에서 전쟁재발방지를 위한 확고한 제도적 보장이 마련된다면 군사훈련은 자연히 중지될 것이다.

또하나 유의해야 할 대목은 「팀 스피리트」 훈련은 어디까지나 공격을 받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는 점이다. 한반도에 어떤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미태평양 사령부 산하 부대와 본토의 병력이 신속히 이동배치되어 한미합동작전에 참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훈련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한미 양국은 북한의 참관을 제외한 것이 아닌가.

북한은 남북대화 도중에도 꾸준히 군사력을 강화, 이미 기갑부대 등의 전진배치와 소련의 「미그」 23기 등 신예무기를 도입해 놓고 있다.

그들이 실질적인 군사대결 가능성을 완화하지 않은채 군사훈련만 중단하겠다는 것은 선전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본다.

올해는 오는 22일 남북경제회담, 2월 18일 국회회담 예비접촉, 2월 26, 27일의 적십자대표단 평양방문 등 화려한 남북회담의 일정이 앞에 놓여 있다. 이처럼 온 겨레의 여망이 걸린 남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을 구실삼아 대화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다.

#### 「팀 스피리트 86」의 상황적 의미

-북의 과민반응이 의심스럽다-

경향신문(1986.1.20)

한반도에서의 돌발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팀 스피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올해도 예외없이 같은 기간에 실시된다.

한·미 양국은 「팀 스피리트 86」을 2월 10일부터 4월중순까지 한반도에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로 11번째가 되는 「팀 스피리트」 훈련의 목적은 새삼스러운 설명이 필요없이 유사시 한국 방위에 투입될 미군과 한국군간의 합동작전 능력을 높이자는데 있다. 북한은 「팀 스피리트」가 실시될 때마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특히 올해는 지난 11일 소위 외교부 성명을 통해 2월 1일부터 북한내에서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중지하기로 했으니 한국과 미국도 같은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측의 돌연한 자체훈련 중단선언은 이행여부가 매우 의심스럽지만 그 시기가 하필 「2월 1일부터」라고 못박았다는 점에서 우리쪽 「팀 스피리트」의 명분약화를 겨냥했음이 틀림없다. 이처럼 「팀 스피리트」 훈련은 북한측 입장에서 보면 「눈에 가시」같은 존재다.

그들은 「팀 스피리트」를 비방·매도할 때마다 「북침연습」 운운하며 뒤집어 씌웠다. 그러나 「팀 스피리트」가 순전히 방어목적의 훈련이라는 것은 두번다시 설명할 여지가 없다.

이 훈련의 시나리오에는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한국이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공수된 미군과 함께

대반격전을 펼쳐 전쟁의 승리로 이끈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80년대에 접어들어 이례적으로 북한측에 훈련참관을 요청해온 것도 북한측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유엔군사령부와 한국정부의 공동명의로 된 정중한 훈련참관 초청을 보낸 사실만으로도 북한은 「팀 스피리트」가 어디까지나 공개적이고도 방어적인 훈련임을 인정해야 할 줄 안다. 따라서 한·미 연합사 하일대변인의 말처럼 「이 훈련은 남북대화와는 전혀 무관」한 연례기동 훈련인 것이다.

우리는 오히려 북한정권이 왜 매년 실시되는 「팀 스피리트」 훈련에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곤두세우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팀 스피리트」를 포함한 남한내에서의 각종 군사훈련은 결국 북한공산주의의 재침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입으로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떠벌리면서도 끊임없이 전쟁준비에 광분, 80년대에 접어들어 병력수를 88만명 선으로 늘리고 그 60%를 휴전선 가까이로 남진배치하는 한편 미그 23전투기와 스킨미사일 등을 대량으로 소련으로부터 들여왔다. 이처럼 만반의 전쟁준비를 완료해 놓고 『우리는 군사훈련을 중지할테니 너희도 하지마라』는 식의 강요는 도대체 씨가 안 먹히는 소리가 아닌가.

만일 우리가 북한측의 주장대로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모든 군사연습을 중단한다면 그날이야말로 적화통일을 자초하는 날이 될게 뻔하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왜 하겠는가. 6·25이후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불안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국군의 자주국방능력향상과 주한미군의 보완적 역할 덕이다. 그렇다면 「팀 스피리트」 한·미합동 군사훈련이야말로 호전적인 북한의 전쟁모험에 미리 췌기를 막는 훌륭한 억지력의 구실을 한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도 남을 것이다.

#### 북한의 남북회담 거부

중앙일보 (1986.1.21)

북한은 남북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했다. 2월 10일부터 4월 중순까지 실시될 한미합동 「팀 스피리트 86」 훈련을 트집잡았다.

그때문에 1월 22일로 예정된 제6차 경제회담과 2월 18일의 제3차 국회회담 예비접촉, 2월하순의 제11차 적십자회담(평양)이 무기한 지연되게 됐다.

북한은 지난 해에도 같은 이유로 회담을 중단시켜 4개월간이나 대화의 공백기를 맞아야 했다. 「팀 스피리트」는 76년이래 매년 실시되는 한미간의 정례적이고 평화유지적이며 공개적인 훈련이다.

더구나 우리측은 이 훈련에 대한 우려와 오해를 해소하고 그 방어적 평화적 성격을 강조키 위해 매년 북한과 중공의 장교단에 참관토록 초청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번도 참관치 않은채 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번번히 대화를 위협해 왔다.

부대가 있는 곳엔 항상 군사훈련이 따르게 마련이다. 군이란 전쟁에 활용키 위한 집단이다. 평시에 부단한 훈련을 통해 전지와 전술을 연마해 두어야만 그 존재목적을 제대로 성취할 수가 있다.

그 때문에 북한도 매년 겨울이면 대규모의 동계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매년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실시되는 「팀 스피리트」를 남북대화와 연동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79년의 「팀 스피리트」기간에 북한은 3차례의 남북 탁구회담과 2차례의 조절위 연락대표

접촉에 응한 바 있고 80년에는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4차례의 예비접촉, 84년에는 1차례의 체육회담을 역시 「팀 스피리트」가 진행중일 때 가진 전례가 있다.

그 접촉들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 원인은 「팀 스피리트」와는 아무 관계없는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사정때문이었다.

원래 평화를 위한 대화는 포성을 들어가며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역사상의 모든 휴전회담이 그러했고, 미국과 소련은 매년 각기 상대방을 가상적으로 하는 대규모의 각종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도 정상들이 오가고 각급 회담을 열어왔다. 「팀 스피리트」는 한미방위조약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두가지 보완조치 중의 하나다.

미국은 일본이나 서유럽의 나토국가들과는 유사시 즉각 자동개입하도록 돼있으나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내절차를 거쳐 개입 여부를 결정키로 돼있다.

따라서 조약문으로만 볼 때 미국은 일본이나 서구와는 군사적인 동맹관계에 있지만 한국과는 협상관계에 있다.

북한의 경우는 중·소와 각기 군사조약을 맺고 있고, 그 성격은 유사시 즉각적인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동맹관계다.

미국은 이같은 한국의 양면에 걸친 불균형 관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유지하면서 매년 「팀 스피리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더구나 주한미군이니 이 합동훈련은 북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6·25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키 위한 것이다.

즉 북한이 저지른 전쟁에서 발단된 군사적 대비체제다.

그런데도 북한은 다시 재침하지 않겠다는 보장은 커녕 매년 새로이 군비를 강화하면서 「팀 스피리트」의 중지를 요구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한 억지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북한은 대화는 지속하되 실질적인 합의를 기피, 대화를 다른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다는 인상을 질게 풍겨왔다.

이번의 회담 무기연기는 그런 증거 하나를 더 추가한 것일 뿐이다.

북한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군비증강을 중단하고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여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솔선하는 일이다.

그러면 「팀 스피리트」는 물론 주한미군도 필요없게 될 것이다.

뻔히 알고 빠지는 함정  
-북한측 선전 심리전의 허구성-

조선일보(1986.1.21)

뻔히 알고도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에 빠지고만 느낌이다. 금년으로 11번째 실시되는 연례적인 한·미합동군사훈련, 「팀 스피리트 86」을 북한 당국자들이 걸고 넘어간 것이 그렇다. 어쨌든 신년 벽두부터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당국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팀 스피리트」 훈련의 중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 이상하긴 했다. 그리고는 20일 「공동성명」이라는 형식의 남북회담 거부반응을 보이고 말았다.

그러나 문제를 복잡하게 볼 필요는 없다. 북한당국자들은 벌써 1976년 봄부터 해마다 실시해 오던 한·미양국의 합동군사훈련이 금년에는 실시될 줄 미처 몰랐다가 신년초에 뒤늦게 생각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들은 다알고 있었던 것이다.

한·미양국이 올봄으로 예정된 「팀 스피리트 86」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 군사연습을 실시하는 상황 하에서는 「평화적」인 남북대화를 할 수 없다는 선전효과, 그 움직일 수 없는 사

실(팀 스피리트 86)을 잘 알면서도 그 무렵에 세 갈래의 남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는 사실, 예정된 회담일이 임박했을 때 「훈련중단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대화를 중단시키고 그 책임을 서울측으로 전가할 수 있다는 선전효과 등등… 북한당국자들은 그 모든 것을 계산에 넣고 신년 벽두부터 김일성의 신년사와 남북적십자회담, 경제회담, 국회회담 등 대표들의 담화를 통해 「팀 스피리트」의 중지를 요구해온 것이다.

더욱 웃지 못할 난센스는 북한측이 「북·남회담대표단 공동성명」에서 말하는 회담분위기이다. 그들은 「회담분위기가 좋게 마련되는 때에 가서」 회담을 계속할 입장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회담분위기로 말하자면 작년 8월 평양에서의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당시 우리 대표들에게 10만 명의 동원된 군중으로 하여금 김일성수배 카드섹션과 어린이들의 집체군사훈련을 보여준 것 이상의 공포분위기가 또 있겠는가. 그에 비해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군사훈련, 그것도 상대방에게 일시와 내용을 통고했을 뿐 아니라 참관까지 권유한 훈련이 남북회담 분위기에 지장을 줄 이유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것은 명실공히 방어목적의 훈련이기 때문에 적대하는 상대방에게도 보이겠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늘 비밀리에 파괴와 기습공격을 훈련시키는 것이야말로 상대방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긴장요인이 아닐 수 없다. 김일성 자신도 1972년 여름 극비리에 그를 찾아간 우리측 요인에게 시인한 바 있듯, 주한미군은 6·25 남침이 불러들인거나 다름없다.

북한당국은 시종일관 주한미군 철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미군사훈련의 중단요청도 따지고 보면 그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하나의 단계로 보여진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좋은 회담분위기」란 주한미군 부재의 분위기를 뜻함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정말 좋은 분위기는 휴전선에 집결된 그들의 증강된 병력을 줄이는 것이며, 기갑군단, 포병군단 등을 증설하지 않는 것이며, 소련으로부터 미그 23전투기를 들여오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원인들이 엄존하고 있기에 우리는 6·25 남침을 효과적으로 저지해준 우방미국과 함께 해마다 그 재발을 억지하기 위한 훈련을 거듭하고 있을 따름이다. 만약 내일이라도 당장 휴전선 밑의 땅굴을 모조리 폭파해 없애고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기갑군단, 포병군단들을 후퇴시키는 등의 성의를 북한측이 보인다면 그들이 말하는 「좋은 회담분위기」는 스스로 조성될 것이다.

#### 대화중단의 구실될 수 없다

서울신문(1986.1.21)

북한측이 또 한미합동 군사훈련 「팀 스피리트 86」을 트집잡아, 남북대화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그들은 어제상오 평양방송으로 보도된 남북경제회담, 적십자회담, 국회회담 예비접촉 대표단 공동성명을 통해 그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북한측이 「팀 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남북 대화를 중단시킨 것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무슨 핑계만 있으면 남북대화를 깨려는 그들의 저의를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북한측이 「팀 스피리트」 훈련을 문제삼아 남북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정말 생트집에 지나지 않는다. 「팀 스피리트」 훈련은 이미 지난 76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관례적인 행사이기 때문이다. 과거 이 훈련기간에 남북한간의 접촉이 전혀 없었다면 몰라도 79년 3차례의 남북탁구 회담을 비롯하여 80년 남북총리 회담을 위한 4차례의 실무대표 접촉이 있었고 84년에는 제1차 남북체육회담이 이 기간에 열렸었다.

더우기 「팀 스피리트」 훈련을 비난하는 북한측이 자신들은 군사훈련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래도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팀 스피리트」 훈련이 공개적이고 방위목적의 것인데 비하여 북한측의 훈련은 언제나 비밀리에 그것도 남침을 가상한 공격훈련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측

은 지난 한해만 해도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연대급 사단급 군사연습과 전국적 규모의 비밀 군사연습을 대소 규모 3천여회나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에서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각기 연례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 훈련과는 관계없이 군비축소를 위한 동서 양진영간의 회담은 얼마든지 진행되고 있다. 북한과 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유럽에서는 긴장완화를 위한 어떠한 회담도 불가능할 것이다.

북한측이 「팀 스피리트」 훈련에 대해 시비를 걸고 나오는 목적은 불을 보듯 훤히다. 그들은 주한미군이 한번도 긴장의 주요 원인이라는 인상을 세계에 줌으로써 주한미군은 철수되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이른바 미국과의 3자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측의 이런 갑작스런 태도변화에 대해 우리측은 3개회담 대표단 수석 대표명의로의 합동성명을 발표, 모든 회담을 예정대로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측 합동성명에서 지적했다시피 현재 남북간의 긴장상태는 북한측의 주장처럼 우리측의 군사훈련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40년간의 분단상태에서 누적된 불신과 적대관계의 결과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측은 쓸데없는 구실을 붙여 남북회담을 중단시킬 것이 아니라 회담을 성공시켜 상호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남북한의 신뢰구축 없이는 어떠한 평화적인 해결책도 나올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한다.

#### 북한은 생트집 말라

한국일보(1986.1.21)

20일 북한측은 우리측의 관례적인 팀스피리트 86훈련(19일자 본란)을 트집잡아 우선 세갈래의 통로에 걸친 남북대화를 「일제히 중단」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이로써 모처럼 쌍방간에 합의되었던 제6차 남북경제회담(1·22예정), 제3차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2·18 예정), 제11차 남북적십자본회담(2·25~28) 등이 모두 어설픈 연기 속에 평양당국자들로부터 외면당한 꼴로 되었다.

그 경우에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할 것은 북한측의 명백한 합의사항위반이다. 그나마 우리측의 팀스피리트 훈련 계획 발표는 어떤 돌발사태가 아니며 쌍방이 합의할 당시 이미 예견되었던 연례행사였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측은 작년에도 팀스피리트 훈련에 시비를 걸면서 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을 4개월간이나 중단시킨바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북한측의 올해 중단통보는 지난해의 것과 비교할적에 몇가지 상이점을 관측케한다. 작년에는 정무원부총리와 적십자중앙위위원의 명의로 전화통지문을 보내면서 부총리회담을 제의했었다. 올해에는 세갈래 대화창구의 대표단에 의한 「공동성명」을 발송했으며, 덧붙여 「연습이 끝난 후 회담분위기가 마련」될 때 계속할 것이라는 시사를 달고 있다.

요컨대 북한측이라해도 점고하는 내외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데다가 다른 포석도 있어 대화는 계속하되 그동안 진행되어온 대화형태에는 별로 흥미가 없고 성의도 없다는 내막을 토로한 꼴이다. 정녕 그들의 전략적 저의라고 관측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요구와 3자회담 추진을 위한 남북대화의 형식적 이용과 그 격하 시도이다.

우리측 남북회담 수석대표들이 발표한 합동성명에 보듯이 북한측의 타의있는 주장은 사태의 진실을 왜곡하는 역지에 지나지 않는다. 군사력이 존재하는 이상 군사훈련은 있게 마련인데다가 북한측의 훈련이 음성적이고 상례화되었으며 공격형의 것이라면 팀스피리트 훈련은, 그제 본란이 지적한 대로, 공개적, 연례적, 방어형이라는 대조가 뚜렷한 것이다. 애당초 훈련과 대화는 별개의 것이고, 그래서 84년 4월 팀스피리트가 진행될 때에도 북한측은 남북체육회담에 호응하지 않았던

가 말이다.

대화에는 신의가 필요하고, 그 신의는 우선 쌍방간 합의사항의 이행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북한측은 뒤늦지 않게 뉘우쳐 알아 마땅하다.

북한측이 정치우선의 교조적 사고를 버리고, 거래의 여망을 존중하는 현실개안을 이루어 남북 대화에 성의있는 호응을 보이도록 거듭 촉구한다.

#### 《해외 반응》

동경신문(1986.1.21 일본)

- 연례적인 군사연습을 이유로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남북대화를 중단시킨 것은 유감이다.
- 북한측이 신년초 「남북대화 기간 중 모든 군사연습을 중지하겠다」라는 성명을 내면서 한·미측에 동일한 내용을 요구한 배경에는 주한미군의 철수 촉구를 노리는 북한측의 일관된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음을 놓칠 수 없다.
- 북한이 참으로 군사연습의 중지를 원한다면 우선 불신감 제거에 각별한 노력을 하고 대화를 중단시키는 것과 같은 긴장완화에 역행하는 태도는 삼가해야 할 것이다.

The Times(1986.1.21. 영국)

- 북한측의 군사연습 취소 제의에 대해 한·미 양국이 응하지 않을 것이란 것은 북한측도 충분히 알고 있는 일이다.

마이니찌신문(1986.1.22. 일본)

- 「탐스피리트」 군사연습은 방어적 성격의 것으로서 북한에 위협을 주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북한측에 대해 연습의 참관을 촉구하고 있다.

### 제3부 IOC 주재하의 남북체육회담

#### 1. 성립배경

1981년 9월 「바덴바덴」 제84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제24회 올림픽대회 개최지가 서울로 결정된 이래 북한측은 동 대회 저지를 위해 온갖 술책과 음모를 동원, 방해책동으로 일관해 왔다.

북한측은 한반도에 긴장이 상존하고 있음을 부각, 서울이 대회개최지로서 부적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올림픽 경기의 서울개최는 한반도의 분단고정화를 초래하고, 이는 올림픽의 기본이념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마란치」 IOC 위원장은 IOC 주재하의 남북한체육회담 개최문제를 제기하고, 1985년 2월 1일에는 IOC 집행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이를 남북한 올림픽위원회(NOC)에 제의해 왔다.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 앞으로 보내온 서한에서 IOC측은

- IOC 위원장 주재하에 남북한 올림픽위원회 대표들간의 회의를 「로잔느」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고,
- 대표단 구성은 IOC측대표 6명과 남북한 올림픽위원회 대표 각 6명으로 하며,
- 의제는, 쌍방에게 정치적 발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1)양NOC간(남북한 올림픽위원회)의 스포츠 관계, (2)1988년 제24회 올림픽대회 등으로 할 것을 알려왔다.

이같은 IOC측의 제의에 대해 대한올림픽위원회(KOC)측은 1985년 3월 31일, 서울올림픽에 대한 IOC총회의 결정사항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IOC주재하의 남북체육회담을 수락하였다.

한편 북한측은 제24회 올림픽 개최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동 제의를 계속 외면해오다 1985년 7월 6일 돌연 태도를 바꾸어 동 회담에 참석할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IOC측은 7월 24일 IOC주재하의 남북체육회담이 「로잔느」에서 개최될 것임을 공식 발표하고, 8월 1일 제1차 회담일자(1985. 10. 8- 10. 9)를 남북한에 각기 통보함으로써 1984년 5월로 중단된 남북체육인간의 접촉이 IOC주재하에 일년반만에 「로잔느」에서 다시 이루어지게 되었다.

IOC 및 남북한 올림픽 위원회 대표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국제올림픽 위원회(IOC)대표단

사 마 란 치 (IOC 위원장, 스페인)  
시 베 르 코 (IOC 제1부위원장, 루마니아)  
쿠 마 르 (IOC 제2부위원장, 인도)  
바 이 츠 (IOC 제3부위원장, 서독)  
가 프 너 (IOC 사무총장대리, 스위스)  
셰이크파페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회장, 쿠웨이트)

#### 대한 올림픽 위원회 대표단

수석 대표 : 김종하 (대한올림픽 위원회 위원장)

차석 대표 : 장충식 (대한올림픽 위원회 부위원장)  
대 표 : 최만립 (대한올림픽 위원회 부위원장)  
대 표 : 이종하 (대한올림픽 위원회 상임위원)  
대 표 : 임태순 (대한올림픽 위원회 위원)  
대 표 : 남연문 (대한올림픽 위원회 위원)

북한 올림픽 위원회 대표단

단 장 : 김유순 (북한올림픽 위원회 위원장)  
부 단 장 : 진충국 (북한올림픽 위원회 부위원장)  
대 표 : 한장은 (북한올림픽 위원회 위원)  
대 표 : 안복만 (북한올림픽 위원회 위원)  
대 표 : 조명황 (북한올림픽 위원회 위원)  
대 표 : 장웅 (북한올림픽 위원회 사무차장)

## 2. 경 과

### 가. 제1차 회담

IOC주재하의 제1차 남북체육회담이 1985. 10. 8- 9까지 2일간 IOC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느」에서 비공개리에 개최되었다.

「사마란치」 IOC위원장이 주재한 동 회담은 IOC측과 남북한올림픽위원회 대표간의 3자합동회의가 2회, IOC측과 대한 올림픽위원회(KOC)간 개별회의 2회 그리고 IOC측과 북한올림픽 위원회간 개별회의 2회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북한측이 제24회 올림픽의 남북한 공동주최안을 제시하고 이를 고집함으로써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 1] 제1일 회의

1985년 10월 8일에 개최된 제1일 회의는 오전에 IOC측과 남북한 올림픽위원회가 합동회의(10:00- 10:40)를 가진데 이어, 오후에는 IOC측과 KOC, IOC측과 북한측간에 개별회의를 각1시간씩 갖고 IOC측이 중재자로서 남북한 쌍방의 입장을 파악·조정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오전 합동회의는 사마란치 IOC위원장의 사회로 남북한 쌍방 수석대표의 기조연설만 듣고 끝났다.

우리측 김종하 수석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의 개최권은 대한 올림픽위원회와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위임되었는바, 이는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기정사실이라고 지적하고, 대한올림픽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부여한 특권에 따라 그 책임을 다 할 것임을 먼저 분명히 하였다.

이어 김종하 수석대표는 서울올림픽대회에는 북한의 체육인들도 올림픽현장에 따라 모든 나라의 선수단과 똑같이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도록 문호가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 인류의 대제전이자 우리 민족의 영광인 서울올림픽대회에 북한측이 자유롭고 명예롭게 참가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측은, 이번 회담이 올림픽 현장과 우리의 올림픽 주최권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도 명백히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밝힌 우리측 기조연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림픽은 세계의 젊은이와 체육인들이 한자리에 정답게 모여, 건전한 체육경기를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며, 대화를 통하여 국제적인 신뢰와 우의를 두텁게 만들어 나가는 인류의 축제이며, 최대의 국제체육 제전입니다.

올림픽은 또한 정치적인 이념을 초월하고, 인종, 종교, 관습, 언어, 문화 등의 차이에 구애됨이 없이 세계평화와 국제친선을 추구하는 것을 그 근본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대회는 5대양 6대주에서 모든 나라 체육인들이 아무런 스스럼없이 자유롭고 평등한 마음이 집으로 당당하게 모여드는 것입니다.

1988년 제24회 올림픽경기대회를 서울에서 열기로 한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결정도 바로 이상과 같은 올림픽 운동의 이념과 정신에 따른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결정에 따라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현장 규정에 의거하여,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의 조직 권한을 대한올림픽위원회와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올림픽현장 규정에 따라서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 그리고 개최도시인 서울

시 대표간에는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개최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서에 공동으로 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측에 주어진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의 개최권과 대회조직에 관한 의무는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기정 사실입니다.

대한올림픽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부여한 특권에 따라 그 책임을 다할 것을 분명히 합니다.

1981년 서울이 제24회 올림픽 대회 개최지로 결정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4년간에 걸쳐 국제올림픽 위원회 인사들을 비롯하여 국제경기연맹 및 국가올림픽 위원회 대표들이 서울을 방문하여, 서울이 1988년 제24회 올림픽대회 개최지로서 가장 적합하며, 모든 올림픽준비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해 9월 서울올림픽대회 주경기장 개장식을 갖고 세계 80여 개국에서 온 많은 선수와 임원들이 참여하는 성대한 국제체육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9월과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각종 국제경기행사에 중국, 소련을 비롯하여 동독, 폴란드, 헝가리, 유고, 루마니아 등 회원국 선수들이 대거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멕시코에서 열린 국가 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 총회에 참가한 대표들이 만장일치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한 「멕시코 선언문」을 채택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즉 모든 국가올림픽 위원회는

- 올림픽현장과 이념을 존중하며
- 올림픽대회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1981년 「바덴바덴」에서 개최된 국제올림픽위원회 총 회의의 결의에 따라 1988년 서울과 「캘거리」에서 개최되는 하계 및 동계올림픽에 참가함으로써 양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할 것을 촉구하고,
- 선수는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권리를 보유하며, 각국 올림픽위원회는 이 권리를 보장할 기본적인 의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이곳 로잔느에서 열린 국제 올림픽위원회 제89차 총회에서도 모든 나라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참가하도록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 금년 6월 동베를린에서 개최된 제90차 국제올림픽위원회총회에서도 모든 대표들이 서울올림픽 준비현황보고를 듣고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는 이제 올림픽사상 가장 빛나는 대회로 개최될 전망이 확실합니다.

이 영광된 서울올림픽대회는 북한의 체육인들도 올림픽현장에 따라 모든 나라의 선수단과 똑같이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도록 문호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측이 마련한 오늘의 이 회담에서 1981년 「바덴바덴」의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결정과 올림픽현장에 따라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협조하여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에 북한측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협의를 가질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측이 마련한 오늘의 이 회담에서는 1981년 「바덴바덴」의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가 결정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북한측이 마땅히 참가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올림픽 현장과 우리의 올림픽 주최권을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북한측이 참가하는 문제가 협의되기를 희망합니다.

한편 북한측은 이날 회의의 첫 발언을 통해 IOC현장과 올림픽 기본정신에 배치되게 제24회 올림픽 경기대회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주최할 것을 주장하였다.

북한측 김유순 대표는 『제24차 올림픽 경기대회 장소문제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대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조선인민의 통일위업과 올림픽운동의 건전한 발전에 극히 위해로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변하면서 제24회 올림픽 대회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각각 절반씩 나누어 경기를 치루어야 한다는 이른바 「공동 주최안」을 제기하고, 이에 따른 세부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4회 올림픽경기 공동주최와 관련하여 북한측이 제시한 세부방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대회주최

남북한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이 경기에 「유일팀」으로 출전

○ 대회명칭

「조선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조선 평양-서울올림픽경기대회」로 함

○ 경기종목할당

평양과 서울에서 각각 절반씩 나누어 진행

○ 개·폐막식

할당된 종목에 따라 평양과 서울에서 각각 진행

○ 자유왕래 문제

-선수들과 역원들, 기자들과 관광객들이 육·해상 운송수단 및 항공편을 이용하여 평양과 서울 사이를 자유로이 왕래

-자유로운 왕래를 위하여 평양과 서울간의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며, 남포항과 인천항간에 여객항로를 개설

-왕래자들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도모하고 왕래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자들과 관광객들에게 사증을 따로 발급하지 않고 통과지점에서 통과증을 발급

○ 텔레비전 방영권과 이익금 배당

방영권은 계약되는 데에 따르며, 이익금은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배당

○ 공동주최를 위한 상설기구

-공동주최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북·남 공동상설기구를 조정

-기구명칭은 「조선올림픽경기대회 공동조직위원회」 또는 「조선 평양·서울올림픽경기대회 공동조직위원회」로 함

이날 오전에 개최된 합동회의에 이어, 오후회의는 IOC측이 KOC(15:00-16:00) 및 북한측(17:00-18:00)과의 개별회의를 가졌다.

KOC측과의 개별회의에서 「사마란치」 IOC위원장은 88올림픽 대회의 서울 개최를 결정한 1981년 「바덴바덴」 IOC총회결정을 존중하고 또 올림픽 현장 및 IOC와 한국측간의 계약내용도 준수할 것이라는 IOC의 기본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그는 KOC측에 대해 북한측이 서울올림픽대회에 보다 뜻있게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으면 이를 제시해주면 좋겠다는 희망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 김종하 수석대표는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제24회 서울올림픽의 경기진행, 장소, 일정 등의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큰 무리없이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현

드볼 등 2-3개 종목의 예선경기를 북한지역에 배정할 것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측은 예선경기시행에 따르는 문제로서 선수입원들의 왕래문제, 경기운영에 필요한 물품수송문제, 통신망 구성문제, 신변보장문제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우리측은 남자단체사이클 도로경기의 북한지역 통과문제에 대해 검토용의를 표명하고, 아울러 개·폐회식에 남북한이 동시 입장하는 문제와 올림픽기간 중에 실시될 문화행사에 북한측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IOC측과 북한측간의 개별회의에서 IOC측은 북한측이 주장하는 「공동주최」는 IOC헌장에 비추어 실제로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지적하고 일부종목 예선경기의 북한지역 개최문제에 대한 북한측의 견해를 문의하자 북한측은 이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제2일 회의에서 밝히겠다고 함으로써 새로운 제안이나 토론없이 제1차 회의를 끝마쳤다.

## ② 제2일 회의

10월 9일에 속개된 제2일 회의는 제1일 오후회의에 이어 오전 중에는 IOC측과 북한측, IOC측과 KOC간의 개별회의가 각각 40분간 진행되었으며, 오후에는 IOC측과 남북한 올림픽위원회 3자간의 합동회의가 30분간 개최되었다.

KOC측과 IOC간의 개별회의에서 「사마란치」 IOC위원장은 북한측이 제기하고 있는 올림픽 경기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출전하는 문제에 대한 KOC측의 입장과 북한지역에 대한 예선경기종목의 추가배정 방안을 문의해 왔다.

이에 대해 우리측 김종하 수석대표는 남북한이 국제경기대회에 단일팀을 구성·출전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쌍방의 체육회담이 그간 판문점에서 몇 차례 진행된 바 있으나 북한측이 L.A 올림픽 불참을 계기로 이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사실을 상기시키고, KOC측은 언제든지 『남북체육 교류 문제와 단일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한측과 판문점에서 회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에 개최된 합동회의에서도 우리측 김종하 수석대표는 『제24회 서울올림픽 주최자 입장에서 남·북 체육선수들이 다같이 동 대회에 참가해야 한다는 동포애적 충정과 올림픽 헌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기종목의 일부 예선경기를 북한지역 경기장에서 실시하는 문제를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와 같은 우리측의 합리적이고 성의 있는 자세에 북한측이 긍정적으로 호응해오는 것만이 우리들의 대화를 성공시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측의 포용적인 자세와 현실적인 제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종래의 실현성 없는 남북한 공동 개최안과 단일팀 참가만을 거듭 주장함으로써 IOC 및 남북한 올림픽위원회 3자간의 회동은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제2차 회담을 1986년 1월 8일 - 9일 양일간 「로잔느」에서 갖는다는 데만 합의하고 끝났다.

한편 「사마란치」 IOC위원장은 이들간의 회의가 끝난 10월 9일 하오 IOC측 및 남북한 대표가 배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회의결과를 발표하였다.

IOC위원장의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IOC의 제안에 따라 남·북한 NOC대표단은 1985년 10월 8일과 9일 스위스 로잔느 IOC 본부에서 IOC대표단과 만났다.

이 회담의 개최목적은 24회 서울올림픽에 모든 한국민이 참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방안을 모색하자는데 있었다.

회담은 「사마란치」 IOC위원장의 주재하에 우호적이고도 올림픽정신에 입각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양측 대표단은 그들의 입장을 밝히고 제안을 내놓았다.

IOC는 이것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양측이 IOC현장의 철저한 존중과 81년 84차 「바덴바덴」에서의 IOC 결정사항의 준수를 강조했다.

약간의 진전사항이 있기는 했으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후속회담이 필요하다고 IOC는 판단했다.

따라서 3자는 내년 1월 8일과 9일에 로잔느에서 다시 회담을 갖기로 동의했다.

#### 나. 제2차 회담

IOC주재하의 제2차 남북체육회담은 1986. 1. 8-9, 양일간에 걸쳐 「로잔느」의 IOC본부에서 비공개리에 진행되었다.

제1차 회담이후 만 3개월만에 열린 동 회담은 제24회 올림픽대회 조직권한을 서울시에 부여한 1981년 IOC총회의 결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더 이상 회담의제가 될 수 없음을 전제로 IOC가 채택한 6개항의 회담의제에 따라 진행되었다.

IOC집행위원회가 채택, 1985년 10월23일 남북쌍방에 통보해온 제2차 회담 관련 6개항의 회담의제는 다음과 같다.

- (1) IOC위원장 환영인사
- (2) 제24회 올림픽대회 개회식에서 남·북한 선수단의 공동입장문제 협의
- (3) 북한지역에서 개최될 수 있는 자유종목의 협의
- (4) 양측의 관할지역을 사용하여 개최될 수 있는 종목의 협의
- (5) 문화행사에 북측이 참가하는 문제 협의
- (6) 협상후속배치 및 IOC위원장 종결발언

그러나 IOC와 남북한 3자합동회의 2회, IOC측과 대한올림픽 위원회간의 개별회의 2회, 그리고 IOC측과 북한 올림픽위원회간에 개별회의 3회 등 마라톤 회의형식으로 진행된 제2차 회담에서도, 북한측이 경기종목을 남북이 반반씩 나누어 공동주최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는 다소 후퇴하는 태도의 변화를 보이기는 했지만 IOC측이 제시한 의제와 배치되게 제24회 올림픽대회의 공동주최 및 단일팀 출전문제를 여전히 주장함으로써 아무런 합의점도 찾지 못했다.

#### ㉠ 제1일 회의

1986년 1월 8일에 열린 제1일 회의는 오전에는 IOC측과 남북한 올림픽위원회간의 합동회의(10:00-11:00)와 IOC·북한간의 1차 개별회의를 가진데 이어, 오후에는 IOC측과 KOC, IOC측과 북한간의 개별회의를 각기 1시간씩 갖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오전에 진행된 합동회의에서는 「사마란치」 IOC위원장의 인사발언에 이어 남북한 수석대표의 기초발언이 있었다.

「사마란치」 IOC위원장은 그의 인사발언을 통해 제2차 회담의 일정과 이미 확정된 의제를 다시 확인하고, 제24회 올림픽대회의 개최장소가 이미 1981년 「바덴바덴」 IOC총회의 결정에 따라 서

올로 확정되었으며 그 동안 서울과 IOC간에 제반협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더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IOC측의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하였다.

또한 「사마란치」 위원장은 IOC로서는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 1984년 L.A.올림픽의 경험에 비추어 올림픽 운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것이며 특히 분단국가인 남북한의 현실을 고려하여 북한올림픽위원회가 제24회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수 있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이번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도 아울러 밝혔다.

우리측 김종하 수석대표는 기조발언을 통해, 우리측에 부여된 제24회 올림픽의 개최권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기정사실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올림픽대회 개최를 위한 모든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재확인하고 『이제 우리는 「88 서울올림픽대회」를 올림픽 역사상 그 어느 대회보다도 훌륭하게 치룰 수 있는 자신과 긍지를 갖고 서울에 부여된 올림픽 개최의 영광을 우리 온 겨레가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김종하 수석대표는 『올림픽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올림픽현장과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의 결정사항은 존중되어 왔고 앞으로도 반드시 존중』 되어야 하며, 따라서 『제24회 올림픽대회가 어디서 열리며, 누가 주최하느냐 하는 것은 이미 합법적으로 확정된 문제이며 여하한 경우에도 재론의 여지가 없는 문제』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북한측이 올림픽현장과 IOC총회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서울올림픽 대회에 참가할 것을 촉구하면서,

- 서울올림픽대회 개최식에 남북한 선수단이 함께 입장하는 문제
- 핸드볼 등 일부 남자단체 구기종목의 예선경기를 북한지역 경기장에 배정하는 문제
- 남북한 지역을 연결하는 싸이클 단체도로경기를 실시하는 문제
- 서울올림픽대회 기간 중 북한측이 문화행사에 참가하는 문제 등을 KOC가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거듭 밝히고 이번 회담에서는 이에 대한 진지한 협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하였다.

한편 북한측은 이미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남북한 올림픽위원회 사이에 협의를 거쳐 확정된 6개항의 의정에 대하여 의견이 유사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고 하면서, 의제에서 제외된 공동주최 주장을 다시 되풀이하고, 특히 의정 제2항 「올림픽경기대회 개최식에 남북한 선수단이 공동으로 입장하는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IOC 주재하에 남북한 단일팀 구성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 의제 외적 문제를 제기하였다.

김종하 수석대표는 북한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우리측은 오래전부터 모든 국제체육 경기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으로 참가하기를 희망해왔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한 체육회담을 제의하고, 남북한간의 체육교류문제와 국제경기 단일팀 구성문제를 협의하려고 노력』해 왔음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단일팀 구성문제는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만 국한시켜 협의할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번 회담의 의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토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지적, 『단일팀 구성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며 어디까지나 남북한 당사자들 사이에 직접회담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맡겨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전의 합동회의와 IOC·북한측간의 개별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IOC와 KOC 및 북한측간의 개

별회의가 진행되었다.

KOC와의 개별회의에서 IOC측은, 회담의제별로 IOC측의 입장을 개진하고 하나하나 KOC측의 입장을 타진하였다.

우리측은 합동회의에서 밝힌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측이 공동주최, 대회명칭, 경기의 반분개최 등 비현실적인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더 이상 대화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 ② 제2일 회의

1월 9일 속개된 제2일 회의는 제1차 회의 때와 같이 IOC와 남·북한과의 오전 개별접촉을 거쳐 오후에는 3차 합동회의의 형식으로 20분간 진행되었다.

「사마란치」 IOC위원장은 KOC측과의 개별접촉에서, 금번 회담결과가 만족스럽지는 못하나 북한측의 입장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3차 회담을 6월에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북한측이 의제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최 및 단일팀 구성 주장을 철회하고 IOC의 의제에 따라 진지하게 토의진행에 협조한다면 제3차 회담 제의에 호응하겠다고 밝혔다.

오후에 속개된 합동회의에서 IOC측은 이번 회담에서 「약간의 진전을 이룩」한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3차 회담이 마지막 회담이 되길 기대하면서 6. 10-11, 양일간에 「로잔느」에서 개최될 예정을 발표하였다.

우리측 김종하 수석대표는 먼저 KOC측은 이번 회담에서도 88 서울올림픽에 북한측이 참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 왔음을 상기시키고, IOC측이 채택한 의제에 기초하여 올림픽현장과 그 정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북한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 제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측은 올림픽현장과 IOC총회 결정을 존중하고 IOC가 정한 의제에 따라 토의를 진행한다면 북한이 제24회 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러한 입장에서 앞으로도 진지한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측도, 금번 회담에서 일부분제는 합의에 도달했으며, 나머지 문제도 더 연구·토론하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제3차 회담에서는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기를 희망했다.

이날 회담이 끝난 뒤 우리측 임태순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제2차 회담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대한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은 이번 제2차 회담에서 국제올림픽 위원회측이 제시한 의제에 따라 북한이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문제를 토의하는데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의 김종하 수석대표는 「북한측이 올림픽현장과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 결정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 국제올림픽 위원회측이 제시한 의제에 따라 진지한 토의를 진행하는데 협조한다면 북한측이 제24회 서울 올림픽대회에 보다 뜻있고 명예롭게 참가하는 문제가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다」는 신념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측은 국제올림픽위원회측이 정한 6개항의 의제에 없는 제24회 올림픽대회의 공동주최와 남북한 단일팀 구성 주장을 다시 제기하였습니다.

북한측이 공동주최나 단일팀 구성문제를 거론한 것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결정사항과 올림픽현장에 위배되는 발상이며 국제올림픽위원회측이 정한 의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서 우리측을 실망시켰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측도 이른바 공동주최와 단일팀 문제는 이번 회담과 무관한 것임을 지적, 북한측이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결정사항과 올림픽헌장을 존중해야 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제2차 회담도 우리측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로 끝난데 대하여 우리측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대한올림픽위원회는 북한측이 제24회 올림픽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한 1981년 「바덴바덴」 국제올림픽위원회 결정사항과 그 후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서울 시간에 체결된 협약을 존중하지 않는 한 회담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입장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여 오는 6월 10일과 11일 이곳 「로잔느」의 국제올림픽위원회 본부에서 제3차 회담을 갖자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국제올림픽위원회측의 정당한 의견을 존중하면서 북한측에게 88 서울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놓고 대화의 문호도 열어놓고 북한측의 태도를 주시할 것입니다.

### 3. 국내의 주요 반응

국내 주요 언론들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재한 남북체육회담에서 북한측이 이른바 제24회 올림픽대회의 남북공동주최안을 제기한데 대해 「북한측이 그 동안 획책해 온 서울 올림픽대회의 보이콧 전략이 설득력을 잃어가자 초조한 나머지 또 하나의 방해공작의 수단으로 제기한 것」으로 분석하고, 이는 『전 세계인의 조소를 받을 몰상식한 요구』라고 논평했다.

또한 동 회담에서 우리측이 서울올림픽을 우리 온 겨레가 화합하는 민족제전으로 가꾸기 위해 북한의 독자참가 또는 단일팀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사자간 체육회담을 촉구해 온 바탕에서, 몇 개 종목 예선경기의 평양개최 배정용의를 밝힌 데 대해서는 『인내와 아량』의 소산으로, 이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측이 주장한 공동주최안과 지난 수 년간 그들이 획책해 온 서울올림픽 방해책동 등을 감안, 『북한측이 건전한 상식을 회복하지 않는 한 앞으로의 회담에 큰 기대를 걸기란 무리』라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측이 제3차 회담에서는 『공동개최 주장을 철회하고 서울대회 참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남북한의 분단극복과 화해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해외의 주요 언론들도 북한측이 제기한 「공동주최안」에 대해 『북한이 스포츠에 정치를 끌어들이며 「보이콧」란 방아쇠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일제히 비난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측은 IOC의 지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올림픽현장을 준수한다는 입장에서 『IOC측도 올림픽을 분산 개최하지는 않을 것이며, 그렇게 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잔느」 남북체육회담에 대한 국내 주요 신문의 사실과 해외 반응은 다음과 같다.

#### 〈국내반응〉

##### 북한 억지가 지나치구나 -로잔의 남북 올림픽회담을 보고-

한국일보(1985. 10. 11)

로잔의 남북체육회담은 내년 1월 8일 재개합의만 남기고 끝났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중재하고 남북한 올림픽위원회 대표가 만난 이번 회의에서 우리는 인내와 아량의 제안을 내놓았다. 2~3개 종목의 예선경기를 북한에서 분산 개최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번 반해 북한측은 올림픽 공동개최라는 억지를 내세워 전연 실현 불가능한 9개항을 제안했다. 공동개최 자체도 부당한데 한술 더 떠서 대회명칭을 조선올림픽 경기대회 또는 조선 평양·서울 올림픽으로 하자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은 기가 막히고 가소롭기조차 하다.

게다가 개폐회식과 선수입장을 서울·평양에서 번갈아 하며 경비와 TV중계료를 반분 또는 균점하자는 생떼를 부리고 나섰다. 남이 공들여 차린 잔칫상에 재를 뿌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가로채겠다는 것인지, 그 심술이 고약하기 그지없다.

서울올림픽 유치단계부터 북한은 온갖 술책과 음모를 동원해 방해하여 왔다. 고통의 분단을 역이용해 간교한 위협을 가하고 참가저지를 위해 발버둥쳤다. 두 차례의 반쪽 올림픽이 12년만에 화합의 복원이 확실해지자, 이번엔 공동개최라는 함정을 파고 덤벼든 것이다.

우리는 서울올림픽의 문호개방을 천명하고 공산권을 비롯한 미수교국의 출전을 확실하게 약속 받았다. 북한의 참가를 위해 꾸준하고 간곡하게 설득을 벌여 왔다. 민족의 위대성을 세계에 선양

할 단일팀 구성도 제의해 놓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모든 일에 판전을 피우고 오로지 대회저지에만 골몰하고 있다. 서울올림픽을 깨려는 그들의 음흉한 속셈은 뻔히 들여다 보인다.

올림픽 공동개최는 방해공작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IOC현장에 따라 대한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부여된 개최권과 조직권한은 존중되어야 함이 너무 명백하고 당연하다. 사마란치 IOC위원장도 현장에 의거, 실현이 어렵다고 뚜렷이 밝혔다.

우리는 북한측이 더 이상 부질없는 책략을 포기할 것을 거듭 바란다. IOC현장마저 짓밟는 술수는 용인될 수가 없거니와 조소거리 밖에 안 된다. 이 점에 관한한 우리의 입장도 확고하게 밝혀 둘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일부 예선경기의 분산 개최도 신중하게 가능성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과연 북한에서 차질없이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능력도 능력이지만 무슨 복선을 깔고 있는지 철저하게 저들의 「의중」을 읽어야 할 것이다.

이제 남은 길은 단일팀 구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일이다. 거래의 간절한 숙원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꼭 멋지게 풀어갔으면 한다. 많은 장애가 예상되나 노력은 조금도 늦출 수가 없다.

#### 국제양식에의 배리

#### - 「로잔」 체육회담과 북의 억지 강변 -

조선일보(1985.10.11)

IOC(국제올림픽위원회)현장의 근본원칙은, 「세계의 경기자들을 4년에 한 번씩 위대한 스포츠 제전에 <집결> 시킨다」는 것으로 돼 있다. 이 <집결> 원칙에 따라 IOC는 올림픽 개최권을 국가 아닌 어느 특정도시에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4년마다 한 번씩의 올림픽대회 명칭에는 꼭 개최한, 또는 개최하게 될 도시 이름을 머리에 얹어 호칭한다.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대회였지 아메리카합중국 올림픽대회가 아니었으며, 모스크바올림픽대회였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연방올림픽대회가 아니었고 뮌헨올림픽대회였지 독일연방공화국 올림픽대회가 아니었으며, 동경올림픽대회였지 일본올림픽대회가 아니었던 까닭을 알 수 있다.

따라서 81년 IOC가 결정한 88년 올림픽 개최지는 분명히 대한민국이나 한반도가 아닌 「서울시」였으며, 당연히 「88 서울올림픽대회」라는 명칭이 세계 공통의 호칭으로 불려지고 있다.

이 원칙과 관례와 규정을 뒤엎어버리자는, 국제사회와 서울을 향해 양탈을 부리고 있는 것이 평양이고, 그들은 못 먹는 밥에 재라도 뿌려 판을 깨어버리자는 심보로밖엔 보이지 않는 책동을 일삼아왔다. 모스크바 반쪽 올림픽, 로스앤젤레스 반쪽 올림픽의 선례를 그들은 그들 책동의 고무근거로 삼으면서 서울올림픽에의 동구권 불참을 획책해온 정치적 책략의도를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이를 가라앉히고 중재한다는 입장에서 IOC가 주선하여 남·북한 및 IOC 3자 회담이 8~9양일 로잔에서 열렸지만, 우리는 평양의 억지와 강변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모든 경기를 절반씩(50 대 50)으로 나누어 서울과 평양에서 분산 개최하자고 했다. 명칭을 「조선올림픽대회」 또는 「조선 평양·서울올림픽대회」로 하자 했고, 개·폐회식 입장은 서울과 평양에 할당된 종목에 따라 각각 개최하자 했고, TV중계료를 절반씩 나누자고도 했다.

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어안이 병병해질 노릇이다. 아마 모스크바, 북경쪽의 지각있는 사람들 까지도 쓴 웃음을 견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IOC 당로자들의 심정과 곤혹스러움이 어떠할까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분단국 도시에서의 올림픽 개최 전례가 없지 않고, 72년 서독 뮌헨에서 제20회 올림픽대회가 열렸다. 당연히 「72 뮌헨올림픽대회」였고 동독은 독자팀으로 참가하여 대회를 원만히 치렀고, 애시당초 아무런 시끄러움이나 억지나 강변도 없었다.

이와 같은 평화적인 국제스포츠 규범을 평양은 정면으로 뒤엎어 보겠다는 것인가. 세계의 양식 앞에 그것이 통하리라고 혹시라도 계산하고 있는 것인가, 현지 신문도 명백히 IOC헌장상 평양이 고집하는 「공동개최」는 불가하다고 못을 박고 있다.

우리측은 모처럼 인류의 평화제전이 될 서울 올림픽을 겨레가 화합하는 민족제전으로 가꾸기 위해 북의 독자참가 또는 단일팀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사자간 체육회담을 촉구해 온 바탕에서 몇 개 종목예선의 평양개최 배정용의를 제기했다. 헌장 원칙을 준수해야 할 IOC 당국의 고충을 십분 이해하면서, 설득과 알선으로 세계 양식에 어긋나지 않은 서울 올림픽대회가 되도록 계속 진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로잔」 2차 남북체육회담  
- 「서울올림픽」이 만족화해의 계기되도록-

동아일보(1985. 1. 10)

88 서울올림픽에 북한도 참가시켜 원만한 올림픽 개최를 위한 제2차 「로잔」 남북 체육회담이 8, 9일 이틀간의 회의 끝에 3차 회담날짜를 6월 10, 11일로 정하고 폐막되었다.

작년 10월 제1차 회담에 이어 열린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은 없지만 쌍방이 서로의 주장과 견해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융통성을 보인 것은 조그만 하나의 진척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북한측은 첫날 회의에서 올림픽의 남북한 공동개최를 계속 고집하다 IOC측으로부터 의제 밖의 문제라는 핀잔을 듣고 둘째날에는 더 이상 내세우지 않았다고 한다. 그들은 또 남북한 단일팀 구성문제를 IOC주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가 이것 역시 의제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IOC와 한국측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공동개최는 81년 「바덴바덴」 총회가 24회 올림픽 개최권을 국가 아닌 도시인 서울에 주었고 올림픽 현장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북한측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이런 주장은 도저히 말이 안되며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남북한 단일팀 구성문제는 63년 64년 「홍콩」과 「로잔」에서 남북한간에 토의된 바 있었고 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앞두고도 논의된 바 있었으나 모두 실패했다.

동서독처럼 각종 왕래가 잦은 분단 국가에서도 단일팀 출전이 계속되지 못하고 있는 터에 우리 실정에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북한측의 단일팀 구성 제의는 남북한간에 직접 교섭할 문제며 「사마란치」위원장 말처럼 IOC가 개입할 문제는 아닌 것이다.

한국은 북한측이 공동개최 주장을 철회한다는 대전제 아래 88올림픽 개막식에 남북한이 공동입장하고 남자핸드볼 등 2~3개 종목 정도의 예선 경기를 북한에서 개최하며 남북한을 통과하는 도로단체사이클 경기를 하며, 올림픽 문화행사에 북한측도 참여토록 하는 등 4개항의 제의를 내놓았다.

이것은 북한측이 어디까지나 IOC 헌장 준수와 「바덴바덴」 총회 결정에 승복하고 서울대회 초청을 수락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측의 대폭적인 양보며, 융통성을 보여준 것이다.

북한은 한국의 이런 진지하고도 경의어린 제안을 받아들여 6월 회의에서는 공동개최 주장을 철회하고 서울대회 참가결정을 내림으로써 남북한의 분단극복과 화해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

북한측이 이번 회담 둘째날에 공동개최 주장을 더 이상 내세우지 않은 것은 그들 나름의 융통성을 보여준 것으로 잘 한 일이며 또 쌍방의 견해차를 3차 회담을 계속 열어 다시 절충기로 한 것은 얼마간 기대를 걸만한 일이다.

「사마란치」 IOC위원장도 이번 회담에서 남북한은 「몇 개 분야에 걸쳐 뜻깊고 건설적인 진전」이었다고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3차 회담이 6개월 후로 미뤄진 것은 1, 2차 회담기간에 비해 너무 멀다는 아쉬운 감도 있으나 남북한은 오히려 이런 긴 기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6월 회의에서는 반드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88 서울올림픽의 원만한 개최가 남북한간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훌륭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계속하나 진전없는  
-로잔에서 다시 본 남북대화 방식-

한국일보(1986. 1. 11)

새해 첫 남북대화에 해당되는 제2차 남북체육회담이 9일 로잔에서 씩쓰레하게 폐막되었다. 실질적 합의의 진전은 없으나 그런대로 회담 자체는 지속한다는 식이다.

이는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국회회담 예비접촉 등 여타 대화통로에도 공통적인 현단계의 남북대화 진행양식에 보는 「전형」을 되짚게 한다. 바로 그 전형을 낳게 한 정치적 함축의 분석없이 새해 남북대화의 신경지 개척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세이다.

회고하면 작년 10월 국제 올림픽위원회(IOC) 본부에서 열린 제1차 체육회담은 사마란치 위원장의 주선과 주제에 의한 것이었다. 당시 북한측은 올림픽의 분할개최를 주장하면서 한국측이 불응한다면 소련 등 공산권제국이 서울개최를 보이콧 하도록 촉구하겠다는 으름장을 일삼았다. 이번 2차 회담에서도 북한측은 이른바 「공동주최」를 고집함으로써 문제해결에의 접근을 가로막았다. 그런대로 오는 6월 10, 11 양일간 로잔에서 다시 만나기로 한 것은 사마란치 IOC 위원장의 일정과 장소에 관한 제의를 쌍방이 받아들인 결과라고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북한측의 무리한 요구와 고집이 결과적으로 이 민족의 자치능력에 관한 국제적 인식을 그르치게 하여 그만큼 어떤 형태건 외세의 조정이라는 비중을 높이게 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대화 통로에서도 북한측은 실질적 토의보다는 「다른 속셈」과 내외여론을 외면할 수 없는 데서 나오는 구차스러운 타산을 관측케 했었다.

이와 아울러 북한측의 남북대화에 즈음한 자세가 언제나 우리측의 권위와 권능을 손상 내지 격하시키려는 시도로 일관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남북간의 정통성 경쟁과 깊이 관련된 것인데, 그 경우 북한측이 역사 위조에 입각한 개인숭배 체제를 미화하고자 총체적인 민족자해 행위까지 서슴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되짚게 된다.

최근에 말썸된 북한독재층의 외지 회견에 보듯이 그들은 해방전후의 민족주의지도자를 헐뜯고자 우리 거래의 독립운동사에 먹칠하려는 언동마저 불사하는 형편이다.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찾는 각급 회담에서 명심하고 경계해야 할 작태라 할 것이다.

본시 대화의 진전은 화합에 미흡하더라도 최소한 공존의 기초위에서 문제해결에 접근할 때 비로서 밝은 기대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는 법이다. 북한측의 독선적, 확장주의적 고자세를 개탄하면서도, 민족사적 당위성에 비추어 남북대화를 통한 자치능력 선양을 위해 대국적인 인내와 성의를 거듭 다짐하게 된다.

「로잔」 체육회담 이후

동아일보(1985. 10. 11)

88서울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를 권유하기 위한 「로잔」 남북한체육회담은 북한측의 너무나 비현실적인 공동주최 제안내용 때문에 다음 회담날짜만 정하고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

내년 1월 회담에 이어 남북한 체육인들은 몇 차례의 회담을 거듭할지 모른다. 과거의 예로 보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북한측이 서울 올림픽에 말썽없이 참가만 한다면 앞으로 여러 차례의 남북한 체육회담이 지리하게 열린다 해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북한측이 제안한 9개항 공동개최 내용이나 지난 수년간 그들이 서울올림픽을 반대하고 보이코트를 유도하는 각종 선전태도로 보아 북한측이 건전한 상식을 회복하지 않는 한 앞으로의 회담에 큰 기대를 걸기란 무리가 아닐까 한다. 한편 북한측의 제안내용을 보고 우리는 그들의 의도를 미리부터 투명한 유리로 훤히 들여다보듯 똑바로 볼 수 있어서 다행이기도 하다.

북한측은 애당초 서울올림픽에 불참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어떻게 하면 서울올림픽 보이코트 국가들을 늘려가며 마지막에는 이를 전면 파괴할 수 있을까 하는데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이런 기본구상에서 올림픽경기의 남북한 반반씩 개최, 올림픽조직위의 분산조직, TV 방영권의 공동관리, 대회명칭의 「조선 평양-서울올림픽」 개칭 등 전세계인의 조소를 받을 몰상식한 요구가 거침없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마치 애써 벌어들여 맛있게 지어놓은 남의 밥그릇에 맨손으로 달려들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못 먹는 밥에 재나 듬뿍 뿌리고 끝내 밥상까지 뒤집어엎자는 발상이 아니고서는 이런 터무니없는 제안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88서울올림픽은 4년전인 84년 9월 30일 서독 「바덴바덴」에서 열린 IOC총회에서 전세계회원국들의 공명정대한 투표로 결정된 국제적 약속이다. 이 약속에 따라 한국은 지난 4년간 시설공사 등 착실한 대회준비를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

IOC 헌장 제34조는 올림픽경기는 국가가 아니라 선정된 도시(서울)에서 열려야 하며 필요에 따라 동일국가내의 타도시에서 분산 개최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측은 이번 회담에서 크게 양보한 셈이다.

이번 북한측의 공동주최 제안내용은 IOC헌장에 정면 위배될 뿐 아니라 거의 준비가 완료된 서울올림픽을 깨려는 심술을 담고 있다. 한국이 서울올림픽의 개최권을 따내고 또 그들의 보이코트 전략이 설득력을 잃어가자 매우 초조한 빛을 보이고 있다. 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한국의 국제적 위신이 올라감에 따라 반대로 자기들의 입장이 격하된다고 북한측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잘못 판단한 단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히려 북한당국도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의 자유와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국제적으로는 무력증강 등 호전적 이미지를 불식, 평화지향적 온건자세로 전환함으로써 한국과 정정당당한 경쟁을 하겠다는 것이 옳은 판단이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북한당국은 잘못된 생각을 고쳐먹고 건전한 상식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 《해외 반응》

Washington Post (1985. 10.8. 미국)

○ 남북공동개최로 대회개최 영광을 라이벌과 공유한다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한국에게는 북한이 당긴 방아쇠로 말미암아 한국의 이 철호의 기회가 소련권의 「보이코트」로 잡쳐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USA Today (1985. 10. 10. 미국)

○ 소련과 그 동맹국들은 북한의 올림픽 보이코트 위협에 지지를 표명하는 것을 삼가하고 있다.

Aften Posten (1985. 10. 10. 노르웨이)

- 88올림픽을 대비,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이 북한측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다.

The Times (1985. 10. 10. 영국)

- 북한의 올림픽 공동개최 주장은 IOC에 의해 완강히 거부되었으며, 중·소 등의 주요 공산국들의 정치적 뒷받침도 없이 이같은 극단적 요구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 북한이 정치적 음모 대신으로 스포츠면에서의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극히 의심스럽다.
- IOC의 지지를 얻고 있는 한국은 자신의 주장을 그대로 관철해 나갈 것이 확실하다.

Tribune De Geneve (1985. 10. 10. 스위스)

- IOC 목적은 올림픽 현장을 준수하여 최대한의 한국인을 서울올림픽에 참여토록 하는 것인바 IOC 는 올림픽을 둘로 분산시키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 북한이 어떻게 돌출구를 품위있게 뚫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한국도 통일을 위해 전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을 어디까지 끌어들이지는 두고 볼 일이다.

아사히신문 (1985. 10. 12. 일본)

- IOC 중재하에 남북한이 서로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대화를 전진시켰던 점은 남북회담 계속성을 향해 새로운 결실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부록 : 남북대화 일지(1981. 1~1986.1)

1981. 1. 12 전두환대통령,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제의
- 1. 14 국토통일원장관 대북성명 :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실현 절차 협의를 위한 접촉 제의
  - 1. 19 북한, 김일 명의 성명 발표 :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제의 거부
  - 6. 5 전두환대통령,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 제의
  - 6. 19 대한체육회장 성명 :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경기대회에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할 것과 남북체육인회담 제의
  - 7. 4 남북조절위 서울측 성명 : 북한측에 남북공동성명 합의사항 이행 촉구
  - 8. 12 한적총재, 「8. 12 제의」 10주년 성명 : 남북적십자회담 재개 촉구
  - 11.16 문공부장관 대북 제의 : 고고학 자료 및 유물교류 · 연구
1982. 1. 22 전두환대통령,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제의
- 1. 26 북한 김일 명의 성명 :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거부
  - 2. 1 국토통일원장관 대북성명 : 20개 시범실천사업 제의
  - 2. 10 북한, 「남북정치인 연합회의」 제의
  - 2. 25 국토통일원장관 대북성명 : 남북한고위대표회담 제의
  - 3. 26 국토통일원장관 대북성명 : 남북한고위대표회담 수락촉구
  - 7. 4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대리, 공동성명발표 10주년 성명 발표
  - 8. 6 한적총재, 남북 제5마산호 선박 및 선원의 송환 촉구
1982. 8. 12 한적총재, 「8.12제의」 11주년 성명 발표
- 8. 15 전두환대통령, 「북한을 포함한 공산권 거주동포 자유 왕래」 천명
1983. 1. 18 전두환대통령, 정상회담의 4개 당면과제 제시

1. 18 북한 「남북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제의
2. 1 국토통일원장관 대북성명 :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대표회의」 제의
3. 2 민족통일중앙협의회회장 대북성명 :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대표회의」 제의 수락 촉구
4. 1 국토통일원장관 대북성명 :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대표회의」 제의 수락 촉구
6. 1 전두환대통령, 서울 IPU 총회 북한대표 참석 제의
7. 4 남북조절위 서울측 공동위원장대리, 공동성명 발표 11주년 성명 발표
7. 6 한적총재, 남북적십자회담 재개 촉구
7. 24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남북적십자회담 재개제의 거부
8. 12 한적총재, 남북적십자회담 호응 촉구

1984. 1. 10 북한, 「3자회담」 제의

1. 11 국토통일원장관 성명 : 남북한 직접 대화 촉구
2. 10 국무총리 대북서한 : 남북간 직접대화 호응 촉구
3. 10 국무총리 대북성명 : 남북한 직접대화 호응 거듭 촉구
3. 30 북한, 남북체육회담 제의
4. 2 대한체육회장겸 대한올림픽위원장, 남북체육회담 수락  
제1차회담 : 4. 9. 10:00, 관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  
구 성 : 쌍방 각 5명의 대표단  
의 제 : 1984 로스앤젤레스올림픽 등 국제경기 단일팀 구성 및 남북체육교류 실시 문제

1984. 4. 6 북한, 남북체육회담 대표단 구성 및 개최일자 제의에 동의

4. 7 대한올림픽위원회, 남북체육회담 대표명단 발표  
수석대표 : 김종규(대한체육회 부회장겸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 대 표 : 김종하(대한핸드볼협회 회장겸 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
- 대 표 : 이종하(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위원)
- 대 표 : 임태순(대한축구협회 이사겸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 대 표 : 남정문(대한탁구협회 이사겸 대한체육회 이사)

4. 8 북한올림픽위원회, 남북체육회담 대표명단 발표

- 대표단장 : 김득준(북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 부 단 장 : 박무성(북한올림픽위원회 부서기장)
- 대 표 : 김세진(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겸 북한체육예술지도위원회 부위원장)
- 대 표 : 서명호(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
- 대 표 : 석태호(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

4. 9 제1차 남북체육회담

북한, 일방적으로 퇴장

4. 12 대한체육회장겸 대한올림픽위원장, 제2차 남북체육회담 개최(4.18) 제의

4. 14 북한, 제2차 남북체육회담 개최(4.18) 제의 거부

4. 20 북한, 제2차 남북체육회담 개최(4.26) 제의

4. 24 대한체육회장겸 대한올림픽위원장, 제2차 남북체육회담 개최일자 수정(4.30) 제의

4. 28 북한, 제2차 남북체육회담 일자 수정(4.30) 제의에 동의

4. 30 제2차 남북체육회담

1984. 5. 4 사마란치 IOC위원장, IOC중재하 「로잔느」 남북체육회담 개최 제기

5. 9 대한체육회장겸 대한올림픽위원장, 제3차 남북체육회담 개최(5.11-5.14일 중) 제의

5. 12 북한, 제3차 남북체육회담 개최제의 거부

5. 18 대한체육회장겸 대한올림픽위원장, 제3차 남북체육회담 개최(5.23) 촉구

5. 23 북한, 제3차 남북체육회담 일자 수정(5.25) 제의

5. 24 북한, 프라하 공산국가의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불참 공동성명 발표에 참여

5. 25 제3차 남북체육회담

- 북측이 우리측에 대해 LA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방해한 사실을 시인·사과하라고

고집함으로써 의제토의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유산

5. 29 대한체육회장겸 대한올림픽위원장, 제4차 남북체육회담 개최(6. 1) 촉구
  6. 1 북한, 제4차 남북체육회담 개최 거부
  6. 2 북한,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불참 발표
  6. 2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대회 선수명단 제출
  8. 17 대한체육회장겸 대한올림픽위원장, 제4차 남북체육회담 개최(8.30) 제의
  8. 20 전두환대통령, 남북간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제의, 대북 기술·물자무상제공 용의 표명
  8. 27 북한, 제4차 남북체육회담 개최 제의 거부
  9. 8 북한, 대남수재물자 제공 제의
  9. 14 한적총재, 수재물자제공 제의 수락 및 실무접촉 제의
1984. 9. 14 북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제의 수락
- 5명의 대표를 9.18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에 파견
- 9.15 한적총재,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대표명단 발표
- 수석대표 : 이영덕(한적 부총재)
  - 대 표 : 조철화(한적 사무총장)
  - 대 표 : 송영대(한적 재해구호협의회 위원)
  - 대 표 : 최은범(한적 구호봉사부장)
  - 대 표 : 이준희(한적 사회사업자문위원)
9. 17 북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대표명단 발표
- 대표단장 : 한응식(북적 중앙위 부위원장)
  - 대 표 : 최원석(북적 중앙위 상무위원)
  - 대 표 : 최기봉(북적 중앙위 부장)
  - 대 표 : 백영호(북적 중앙위 부서기장)
  - 대 표 : 리남인(북적 남포시위 부위원장)
9. 18 수재물자 인도·인수 관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 북한측이 수재물자를 수재민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고집하다가 일방적으로 퇴장함으로써 유산

- 9. 18 한적총재, 9월중 수재물자 완전 인도 촉구
- 9. 18 한적실무접촉 수석대표, 9월중 수재물자 제공의사가 있다면 72시간전에 물자운반 계획을 연락할 것을 촉구
- 9. 19 북한, 수재물자를 판문점, 인천항, 북평항을 통해 수송할 것임을 통보
- 9. 29 한적, 북적 수재물자 전달인원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각서 전달
- 9. 29~10. 4 판문점, 인천항, 북평항에서 북적 수재물자 인도·인수
  - 쌀 5만석, 천 50만m, 시멘트 10만톤, 의약품 14종 등
- 10. 4 한적총재,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 10. 4 대한체육회장겸 대한올림픽위원장, 제4차 남북체육회담 개최 촉구
- 1984. 10. 12 대한민국 부총리, 남북경제회담 제의
- 10. 13 경제 4단체장, 남북경제회담 수락 촉구
- 10. 16 북한 정무원부총리, 남북경제회담 개최제의 수락
  - 대표단 구성 : 정무원 부부장급을 단장으로 한 5명으로 구성
  - 일 시 : 11. 15
- 10. 29 북한, 남북적십자 본회담 재개를 위한 예비접촉 제의
  - 일시 및 장소 : 11. 20. 10:00,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
  - 대 표 : 3명
- 11. 2 대한민국 부총리, 경제회담 대표를 7명으로 구성하자고 제의
- 11. 10 북한 정무원부총리, 경제회담 대표를 7명으로 하는데 동의
- 11. 12 대한민국 부총리, 경제회담 대표 명단발표
  - 수석대표 : 김기환(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단장)
  - 대 표 : 차상필(상공부 제2차관보)
  - 대 표 : 구본태(국토통일원 연구부장)
  - 대 표 : 김인준(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
  - 대 표 : 신봉식(전국경제인 연합회 전무이사)
  - 대 표 : 노진식(대한무역협회 전무이사)
  - 대 표 : 임병석(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상임이사)

- 11. 13 북한, 경제회담 대표단 명단발표
  - 단 장 : 리성록(무역부 부부장)
  - 대 표 : 계형명(채취공업위원회 참사)
  - 대 표 : 백준혁(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상무위원)
  - 대 표 : 허항찬(조선대외경제협조총회사 부사장)
  - 대 표 : 리진식(금속공업부 국장)
  - 대 표 : 손중철(무역경제연구소 부소장)
  - 대 표 : 김해룡(조선광명연합회사 부사장)

- 1984. 11. 14 한적총재, 남북적십자 본회담 예비접촉 대표명단 발표
  - 수석대표 : 조철화(한적 사무총장)
  - 대 표 : 송영대(한적 재해구호협의회위원)
  - 대 표 : 최은범(한적 구호봉사부장)

11.15 제1차 남북경제회담

- 11. 16 북한, 남북적십자 본회담 예비접촉 대표명단 발표
  - 대표단장 : 서성철(북적 중앙위 상무위원)
  - 대 표 : 박영수(북적 중앙위 부부장)
  - 대 표 : 박동춘(북적 중앙위 과장)

11. 19 대한올림픽위원장, 제4차 남북체육회담(12월중) 재개 촉구

11. 20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예비접촉

11. 22 한적, 제8차 본회담 일정(85. 1. 22-25) 제의

11. 23 소련인 망명관련 판문점 총격사건 발생

11. 27 북한, 제2차 남북경제회담 연기

11. 28 남북경제회담 수석대표, 제2차 남북경제회담 일자 수정(85. 1. 17) 제의

12. 11 북한외교부장, 미국무장관에게 서한 : 북경에서 3자회담 개최 제의

12. 14 북한, 제2차 남북경제회담 일자 수정제의에 동의

12. 14 북한,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일정 제의에 동의

12. 21 남북경제회담 대표용 직통전화 시험통화 실시

1985. 1. 1 김일성, 고위급 정치회담 개최 가능성 시사

- 1. 7 한적,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체류 일정 관련 연락관 접촉 제의
  - 일시 및 장소 : 1. 10. 10:00,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
  - 연락관 2명 파견

1985. 1. 9 전두환대통령, 서울과 평양에 연락대표부 설치 제의

- 1. 9 북적중앙위원장, 「팀스피리트 1985」 훈련을 구실로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연기
- 1. 9 북한 부총리, 「팀스피리트 1985」 훈련을 구실로 제2차 남북경제회담의 연기를 통보하고 남북 부총리 접촉 제의
- 1. 10 대한민국 부총리, 합의된 날짜(1. 17)에 제2차 남북경제회담 개최 촉구
- 1. 10 한적총재, 합의된 날짜(1. 23)에 제8차 적십자 본회담 개최 촉구
- 1. 17 남북경제회담 수석대표, 제2차 남북경제회담 유산관련 논평
- 1. 23 한적총재, 북한측에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호응 촉구
- 2. 1 사마란치 IOC 위원장, 남북한 NOC에 IOC주재하 남북 NOC간 회담개최 (9.11-12, 「로잔느」)를 제의,
- 3. 13 대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의 「로잔느」 체육회담 제의에 동의
- 3. 25 남북경제회담 수석대표, 제2차 남북경제회담(4.18) 제의
- 3. 25 한적총재,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5. 14-17) 개최 제의
- 4. 4 북한, 제2차 남북경제회담 일자를 수정(5. 17) 제의
- 4. 4 북적,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일자 수정(5. 28) 제의
- 4. 4 남북경제회담 수석대표, 북측의 제2차 남북경제회담 수정제의에 동의
- 4. 4 한적총재, 북적의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일자 수정제의에 동의
- 4. 9 북한 최고인민회의, 남북국회회담 개최 제의

4. 9 북한 최고인민회의(제7기 4차), 「대한민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 채택  
남북국회회담 개최 제의를 국회의장 및 3당총재들에게 발송
1985. 4. 30 김봉주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사무장,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제의에 대한 긍정적인 회답을 촉구
5. 8 이진우 국회사무총장, 북한측의 국회회담 제의 관련, 국회가 개원되면 빠른 시일내에 회답을 보내겠다고 통보
5. 10 남북경제회담 차상필 대표를 임인택 상공부 제2차관보로 교체
5. 13 한적총재,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관련, 연락관접촉(5. 15. 14:00,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 제의
5. 14 북적, 연락관 접촉을 5. 20경 가질것과 구체적인 접촉시일 추후 연락통보
5. 16 북한, 남북경제회담 백준혁 대표를 한영읍(국제무역촉진위원회 상무위원)으로 교체
5. 17 제2차 남북경제회담
5. 18 내무부장관, 제8차 남북적십자본회담 참가 북측대표단의 신변안전보장 성명발표
5. 18 한적총재,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관련, 쌍방 연락관 접촉(5. 20) 제의
5. 18 한적,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대표명단 발표
  - 수석대표 : 이영덕(대한적십자사 부총재)
  - 대 표 : 조철화(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 대 표 : 송영대(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협의위 위원)
  - 대 표 : 이병호(대한적십자사 홍보자문위원)
  - 대 표 : 정용석(대한적십자사 청소년자문위원)
  - 대 표 : 이준희(대한적십자사 사회사업자문위원)
  - 대 표 : 이병웅(대한적십자사 총무부장)
5. 20 북적,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관련 실무대표 접촉(5. 20) 제의에 동의
5. 20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관련 연락관 접촉
- 1985.5.22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남북국회회담 제의에 대한 조속한 회답 촉구
- 5.24 북적,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북측 대표단 명단 발표
  - 단 장:이종률(북한적십자회 중앙위 부위원장)

- 부 단 장:서성철(북한적십자회 중앙위 상무위원)
- 대 표:한연수(북한적십자회 중앙위 상무위원)
- 대 표:박영수(북한적십자회 중앙위 동포사업부장)
- 대 표:김완수(북한적십자회 중앙위 문화선전부장)
- 대 표:박동춘(북한적십자회 중앙위 국제부 부부장)
- 대 표:김창현(북한적십자회 중앙위 조직계획부 부부장)

5.27-30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서울)

[합의사항]

- 차기회담:8.26-29(평양)
-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 실시

6.1 국회의장,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제의(7월중)

- 대표단 구성:쌍방 국회의원 각 5명

6.5 전두환대통령,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에 북한측의 참가를 희망

6.14 북한,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일자(7.9) 제의

6.20 제3차 남북경제회담

[합의사항]

- 「남북간에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 추진과 부총리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협조)기구 설치에 관한 합의서」 채택키로 합의
- 제4차 회담:9.18

6.28 국회의장, 제1차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일자 수정(7.23) 제의

7. 5 북한,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일자 수정제의(7.23)에 동의

1985.7. 6 북한, IOC주제하 「로잔느」 남북체육회담 수락

7.15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 관련 제1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 2차 접촉:7.19개최 합의

7.18 국회의장,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대표단 명단 발표

- 수석대표:권정달(민주정의당)
- 대 표:정시채(민주정의당)
- 대 표:신순범(신한민주당)
- 대 표:박관용(신한민주당)
- 대 표:강경식(한국국민당)

7.19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 관련 제2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제3차 회담일자 합의없이 종료

7.19 북한,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관련 북측대표단 명단 발표

- 단 장:전금철(조선노동당)
- 부 단 장:주창준(조선노동당)
- 대 표:최장룡(조선노동당)
- 대 표:렘국렬(조선사회민주당)
- 대 표:우달호(천도교청우당)

7.23 남북국회회담 제1차 예비접촉

[합의사항]

- 회담형식:대표회담
- 대표단 구성:남북 각각 11명
- 본회담장소:서울, 평양 교대로 개최
- 제1차 본회담 개최일자:예비접촉이 끝나는 때로부터 1개월이내
- 제2차 예비접촉:9.25

1985.7.24 국제올림픽위원회, 「로잔느」에서 남북체육회담 연내개최 발표

7.25 대한올림픽위원장, 남북간의 직접적인 체육회담에 북측의 호응 재촉구

7.30 북한 정무원 부총리, 88서울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주최 및 남북한 유일팀 출전 주장

7.31 국제올림픽위원회, 남북쌍방에 「로잔느」체육회담일자(85.10.8-9)를 통보

8. 2 체육부장관, 북한의 88올림픽 남북한 공동주최 제의에 대한 반박성명 발표

8.15 전두환대통령,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실천적 조치 촉구

8.22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 관련 제3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합의사항]

- 방문단규모:151명(단장, 고향방문단 50명, 예술공연단 50명, 취재기자 30명, 지원인원 20명)
- 이산가족 방문지역:서울, 평양
- 방문기간:9.20-9.23(3박4일)
- 교환방법:동시교환
- 공연회수:2회

8.26-29 제9차 남북적십자본회담(평양)

- 제10차 회담:11.26(서울) 개최 합의

9. 6 내무부장관, 북한측 예술공연단 사전답사 인원(5명)에 대해 신변 안전보장 성명 발표

9.10-12 남북공연장 사전답사반(적십자인원 2, 공연기술원 3), 상호상대측의 공연장을 사전답사

9.12 내무부장관, 북한측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151명)에 대해 신변안전 보장 성명 발표

1985.9.18 제4차 남북경제회담

○제5차 회담:11.20 개최 합의

9.20-23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서울·평양 동시교환 방문

○상봉가족:65가족 92명

9.25 남북국회회담 제2차 예비접촉

○제3차 예비접촉일자 및 장소:직통전화를 통해 협의하기로 합의

10.2 대한올림픽위원회, 「로잔느」 남북체육회담 대표단 발표

○수석대표:김중하(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차석대표:장충식(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대 표:최만립(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대 표:이중하(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

○대 표:임태순(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대 표:남정문(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10.6 국제육상연맹, 87년 서울에서 열릴 월드컵 마라톤대회 기간중 남북한을 관통하는 역전 경주대회 개최 제의

10.8-9 IOC주재 제1차 「로잔느」 남북체육회담

○대표단 구성:남북한 대표 각각 6명, IOC대표 6명

○제2차 회담 :86.1.8-9 개최 합의

10. 9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북측단장, 제3차 예비접촉(10.16.통일각) 제의

10.12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권정달 수석대표, 제3차 예비접촉 일자는 차후 적절한 시기에 연락하겠다고 통보

10.18 박성철 북한부주석, 「유엔에서 조선이 유엔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최소한 북남 연방 제라도 실현하고 단일국호 밑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

1985.10.25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북측단장, 제3차 예비접촉 일자(11.1) 제의

10.30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권정달 수석대표, 제3차 예비접촉 일자는 정기국회(9.20-12.18) 후에 연락하겠다고 통보

11. 5 북적위원장, 제10차 남북적십자본회담 대표단 일행의 교통수단으로 항공기 이용 제의

11. 7 한적총재, 북측의 회담대표단 항공기 이용 제의에 대해 관례대로 하자는 입장 전달

11.15 북적위원장, 제10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일자수정(12.3) 통보

11.16 한적총재, 북적의 제10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일자 수정 제의(12.3)에 동의

11.18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제3차 국회회담 예비접촉 개최 촉구

11.20 제5차 남북경제회담

○ 제6차 회담:86.1.22개최 합의

11.25 제10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관련 제1차 연락관 접촉

11.28 제10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관련 제2차 연락관 접촉

11.28 이재형 국회의장, 북한측의 제3차 국회회담 예비접촉 개최 촉구에 회신

12.2-5 제10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서울)

○ 제11차 회담:86.2.26(수) 평양에서 개최 합의

12.20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권정달 수석대표 제3차 국회회담 예비접촉 일자(86.2.18) 통보

12.24 북한, 제3차 국회회담 예비접촉일자(86.2.18)에 동의

1986.1. 1 김일성, 최고위급 정치회담 개최 시사

1. 2 남북경제회담 북측단장, 김일성 신년사 지지

○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중지 요구

1. 3 남북적십자회담 북적단장, 김일성 신년사 지지

○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중지요구

1. 4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북측단장, 김일성 신년사 지지

○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중지요구

- 1. 8-9 제2차 「로잔느」 남북체육회담
  - 제3차 회담:6.10-6.11 개최합의
- 1.11 북한외교부 성명:86.2.1부터 북한 전지역에서 군사훈련 중지용의 표명코, 한국측의 상응한 조치기대
- 1.18 한미연합사, 「팀스피리트86」 훈련계획(86.2.10-4월중순) 발표
- 1.20 북한측 회담대표단(경제·적십자·국회) 공동성명: 「팀스피리트86」 훈련을 이유로 모든 남북회담을 연기
- 1.20 남북회담 대표단(국회·경제·적십자) 수석대표 합동성명 : 예정된 남북회담 개최를 촉구
- 1.21 남북경제회담 북측 대표단장, 제6차 남북경제회담 연기통보
- 1.21 남북경제회담 수석대표, 제6차 남북경제회담 개최 촉구
- 1.22 남북경제회담 수석대표, 제6차 남북경제회담 유산과 관련 논평
  - 북한측의 성실한 대화자세 촉구
- 1.22 남북적십자회담 북적단장, 제11차 남북적십자 본회담(평양)연기 통보
- 1.22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북측단장, 제3차 예비접촉 연기통보
- 1.23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권정달 수석대표, 제3차 예비접촉 개최촉구
- 1.23 남북적십자회담 이영덕 수석대표, 제11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개최촉구